

2009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 요구자료(Ⅰ)

2009. 10

금 융 위 원 회

총 목 차

(가, 나, 다, 순)

(Ⅰ 권)

고 승 덕 의원	1
공 성 진 의원	81
권 택 기 의원	119
김 동 철 의원	313
김 영 선 의원	421
김 용 태 의원	541
박 상 돈 의원	717
박 선 숙 의원	783
신 건 의원	801
신 학 용 의원	1003

(Ⅱ 권)

유 원 일 의원	1
이 사 철 의원	415
이 석 현 의원	551
이 성 남 의원	709

(Ⅲ 권)

이 성 현 의원	1
이 진 복 의원	157
이 한 구 의원	247
조 경 태 의원	299
조 문 환 의원	631
조 윤 선 의원	963
허 태 열 의원	1029
현 경 병 의원	1075
홍 영 표 의원	1147

요 구 자 료 목 차

(가, 나, 다, 순)

의 원 명	요 구 자 료	페이지
고승덕 의원	1.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지원제도 현황 - 신용회복지원 실적, 소액금융지원 현황 - 상담건수, 신청건수, 대출건수, 대출금액	3
	2. 2008년 국정감사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4
	3. 휴면예금 현황 및 처리대책(활용 현황) - 최근 5년간 휴면예금의 사용처 및 운용현황 - 2007년 8월 이후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권리자에게 반환되는 금액의 현황	18
	4. 이명박 정부이후 시행된 서민정책 현황 및 추진 중인 계획	20
	5.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자료 및 감사원 감사에 따른 조치사항	61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내역(기관, 용역비용 명시)	62
	7. 최근 5년간 한국의 선진시장 편입과 관련하여 FTSE지수와 MSCI지수 편입에 따른 해당 기관들의 금융시장 개선요구 사항과 금융위원회가 이를 바탕으로 개선한 사항	66
	8. 펀드판매시장 선진화의 일환으로 판매 보수·수수료 체계합리화를 위한 개선방안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	67
	9. 2009년 한국증권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이후 금융위원회에서 거래소에 시정을 권고한 사항 또는 개선요구사항과 그에 따른 처리결과	68
	10. 국내 금융자격증 제도 현황 - 종류, 목적, 주관, 시험의 내용과 최근 3년간 응시자와 합격자 현황 - 2008년과 2009년 해당시험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모두 표시	69

의 원 명	요 구 자 료	페이지
고승덕 의원	11. 2008. 1. 1~2009. 8.31 징계 받은 소속 직원 현황	77
	12. 2008.9.1~2009.8.31 금융위원회에 문서로 접수된 민원 중 법령 등 제도개선 요망사항과 소속직원 업무처리 부적절 등 지적사항과 이들 민원에 대한 조치사항	78
	13. '08.9.1.~ '09.08.31. 금융위원회의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이 수의계약 일체	79
	14. 해외 근무 직원의 자녀 학비 보조 내용	79
	15. 귀 기관이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 한 예산 절감 계획과 실제 이행상황	80
공성진 의원	1. 최근 10년간 금융기관 부실경영으로 인해 금융위원회의 제재(처벌)을 받은 사례	83
	2. 중소기업금융 중 설비투자확대를 위한 최근 10년간의 연도별 정책 및 정책에 대한 세부 업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 등	87
	3. 2004년 이후 재경부 및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우리은행에 내려진 내·외부 주의 요청 및 경고 현황 및 내용	89
	4. 최근 5년간 금융자격증 신설 및 폐지 현황 및 근거, 향후계획	90
	5. 산은지주사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정책방향	109
	6. 정책금융공사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정책방향	110
	7. 보험회사에 대한 지급결제업무 허용과 관련한 회의 일시 및 회의참석자, 법적근거, 이에 따른 후속조치	111
	8. 휴면예금관리재단 및 미소금융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13
	9. 최근 5년간 퇴직자 및 이직자 재취업현황	117
	10. 최근 5년간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금융위의 진상 파악내역 및 고발 등 후속조치	118
권택기 의원	1~3.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 목적 및 운용계획안,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통해 매입한 채권 목록	121

의 원 명	요 구 자 료	페이지
권택기 의원	4.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금융위원회가 마이크로 크레딧(소액서민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계획안, 결과 포함)	150
	5. 대형저축은행을 지방은행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필요한 절차 및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190
	6. 금융위원회가 외국계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서민 대출을 독려하기 위해 지도·감독한 내용	191
	7. 동아일보 김재호 대표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불공정 거래혐의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문건	197
	8. 대부업 실태조사 자료	198
	9.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금융위 지원 현황	223
	10. 작년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금융위·금감원·소속기관 지원 현황 - 시기별, 기관별, 사업별, 총공급규모, 시기별 (설정)규모, 회수액, 잔액, 주요내용, 기대효과	252
	11. 위 10번과 관련하여 사업 시행 후 점검 결과 - 점검 시기별, 계획 대비 실적, 실적 평가, 향후 계획	252
	12. 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 외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기구, 가칭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에 대한 금융위의 의견	253
	13.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를 갖추고 있는 외국 사례(캐나다 사례 포함)	254
	14. 미국 오바마 정부가 CFPA 신설과 관련하여 의회에 제출한 법안의 번역본	256
	15. 저축은행업계에서 요구하는 ‘저축은행의 비과세 예금 허용’ 요구에 대한 금융 위원회의 의견	262
	16.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추진한 정책 및 향후 계획	263
	17. 저축은행이 ‘채무자 회생 지원을 위해 채무재조정을 실시하는 경우’ 채무감면액에 대한 세제혜택여부	264

의 원 명	요 구 자 료	페이지
권택기 의원	18. 저축은행의 영업구역내 의무대출비율을 규정한 이 유 및 저축은행업계의 제도 폐지요구에 대한 금융 위원회의 의견	265
	19. 저축은행의 서민대출 취급실적을 감독당국의 경영실 태 평가시 반영하는 문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의견	266
	20. 외감 대상 대부업체에 대해 은행연합회 등에 신용 정보를 집중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에 대한 금융위 원회의 입장	267
	21. 생계형이 아닌 낭비형 금융채무불이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268
	22. '08년 이후 분기별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한 부실채권 규모 및 PF부실채권의 비중	269
	23. 은행과 저축은행의 PF 대출심사 프로세스 비교	271
	24. 금융위에서 파악하고 있는 저축은행 PF 대출심사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 계획	272
	25. PF 사업성 평가를 위한 공적기관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의견	273
	26-1. 녹색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조성계획 및 운용계획	274
	26-2. 녹색금융상품이 고수익에 대한 보장이 없고 이 자가 시중금리보다 낮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의견	275
	26-3. 녹색금융상품에 개인 투자자 및 민간자본의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의견	276
	27. '08년 이후 대부업정책협의회 회의록	277
	28. 금융위원회가 파악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소송지원 제도의 문제점과 향후개선 계획	278
	29. 모기지신용보험(MCI) 연계 주택담보대출의 개요 및 현황	280
	30. 시중은행들이 모기지신용보험 연계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함에 따라 그 피해가 서민들에게 돌아갈 가능 성에 대한 견해	281

의 원 명	요 구 자 료	페이지
권택기 의원	31. 모기지신용보험(MCI) 연계 주택담보대출 중단에 따라 서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	282
	32.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인적구성 계획 및 향후 운영방안	283
	33. 민간 배드뱅크 설립에 따른 기대효과 및 문제점	284
	34. 자산70억원 이상 대부업체의 대출금리 및 대출잔액	290
	35. '07년 이후 금융위원회 및 산하기관들이 수행한 대국민 금융교육 실적현황	291
	36. 최근 5년간, 신용회복위원회에 접수된 소액대출 상담현황 및 실제 집행 현황	302
	37. 작년 9월 리먼 브러더스 파산 이후 금융위 지원현황 - 은행자본확충펀드	303
	38. 위 37번과 관련하여 사업시행 후 점검결과 - 점검 시기별, 계획대비 실적, 실적 평가, 향후 계획	305
김동철 의원	1. 자료요구 - 최근 5년간 자금세탁혐의 거래보고 접수현황(월별, 금융기관별) - '08.12.22 이후 카지노 사업자별 자금세탁혐의 거래보고 접수현황 - 최근 5년간 법집행기관별 자금세탁혐의 거래정보 제공 및 처리현황 - 최근 5년간 범죄수익의 자금세탁관련 사건처리 현황 및 몰수, 추징현황 - 최근 5년간 불법수익의 자금세탁관련 사건처리 현황 및 몰수, 추진현황 - 최근 5년간 법집행기관으로부터의 정보제공 요구현황(기관별) - FATF가 자금세탁 전제범죄 중 환경범죄의 정의, 구체적 사례, 외국의 입법례	315

의 원 명	요 구 자 료	페이지
김동철 의원	2. 일반 금융회사와 카지노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상 차이점	321
	3. 최근 3년간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지 적사항과 조치현황	323
	4. AML 업무지침 작성 가이드라인	330
	5. FATF - APG 합동 상호평가의 주요 권고 사항 및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	418
	6. 자금세탁과 관련한 외국의 처벌 형량	420
김영선 의원	1. 감사원 처분요구서 (최근 3년간)	423
	2.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 감사계획서 (최근 3년간)	423
	3.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455
	4.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최근 3년간)	482
	5. 각종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483
	6. 고유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484
	7. 임직원 퇴직, 이직, 징계현황	525
	8. 검찰 및 경찰의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통보서와 처 분결과통보서	526
	9.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 (최근 3년간)	526
	10. 소송현황	533
	11. 손비처리현황 또는 불납결손액	535
	12.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및 배상 및 보상현황	536
	13. 기관 예·결산 현황	536
김용태 의원	1. 최근 5년간 금융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서 사본	543
	2. 최근 5년간 금융공기업에서 제출한 성과급 신청내 용 서류 사본	544
	3. 최근 5년간 금융공기업 경영예산심의회 예산 승인 회의록, 성과급 예산 심의 자료	574
	4. 최근 5년간 금융공기업 성과급 관련 지침	623

의 원 명	요 구 자 료	페이지
김용태 의원	5. 최근 5년간 금융공기업 성과급 지급 관련 감사 관련 자료 일체	715
박상돈 의원	1. 채권시장안정펀드 운용 현황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 및 자체감사 결과 3. 비정규직 해고 현황 및 인력 감축계획, 현행 및 향후 인턴 채용현황 4. 대졸초임 삭감을 비롯한 임원 및 직급별 임금 삭감 현황 5. 금융위 임직원의 해외 출장 내역 6. 권익위원회의 「신용정보 관리체계 개선안」(연체 금액 보존대상에 대한 개정/연체 금액 상향 조정 및 보존기한 단축 등)에 대한 금융위의 처리 결과, 미결시 사유 7. 한국정책금융공사 출범에 따른 향후 운영계획 8. 기존 정책금융기관과 업무차별화 방안은? 9. 동산담보대출 제도 관련 금융위, 재정부, 법무부 등 정부 차원의 검토결과 및 진행 상황, 관련 자료(관련 법안 등) 10.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불발 사유 및 미흡사항에 대한 분석 및 대책 촉구 11. 공무원 휴직제도에 대한 개요 및 연도별 대상자 명단 12. 금융회사별 휴면예금, 휴면보험금 현황 13. 최근 3년간 적발된 증권거래법 위반건수와 이에 따른 과징금 부과내역	719 723 753 755 756 762 769 770 771 772 773 774 778
박선숙 의원	1. 외환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관련 자료 1-1. 론스타측 제출자료 : 반기별 외환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관련 자료로서 2006말 기준 1-2. 심사자료 : 반기별 외환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관련 자료로서 2006말 기준 2. 소액서민금융재단 관련	785 785 785 786

의 원 명	요 구 자 료	페이지
박선숙 의원	2-1. '08년, '09년 예산 현황	786
	2-2. '08년, '09년 인력 현황	788
	2-3. '08년, '09년 사업별 지원 현황	789
	2-4. 사업별 지원 기준	791
	2-5. 사업별 지원을 위한 복지사업자 선정 기준	793
	2-6. '08년, '09년 복지사업자 신청 내역	794
	2-7. '08년, '09년 복지사업자 선정 내역 및 탈락 복지사업자의 탈락 사유	796
	2-8. '08년, '09년 재단의 지원을 받은 복지사업자의 집행실적('09년은 6월말 기준)	798
	2-9. '08년, '09년 재단에 대한 일자별 기부 내역 - 기부기관별 기부 금액	800
신 건 의원	1. 2008, 2009 자체감사결과보고서	803
	2. 2008~현재 감사원처분요구서, 집행전말서	833
	3-1. 2010년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예산안 설명자료	834
	3-2. 금융위 출범 이후 발주한 연구용역 목록, 수주처, 발주금액	834
	4. 산하위원회 설치 현황 - 명칭, 설치이유, 법적근거, 주요활동사항, 구성원 인적사항 - '08~현재 회의개최 실적	837
	5-1. 최근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변동 현황	847
	5-2. 소송현황	849
	6. 2008 예산의 연도말 전용감 액수 관련 - 지출액, 전용감액(11월 - 12월) - 전용감 사유 명세	851
	7. 8. 2008년~현재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의 결안건 및 보고안건	854
	9-A. 2008~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채무액 월별 증감 추이	910

의 원 명	요 구 자 료	페이지
신 건 의원	9-B. 금융채무불이행자 관련 가장 최근의 관련대책 보고서 사본	911
	10. 현재 국내 금융관련 자격증 현황(각 자격별 자격증 소유자, 매년 취득인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12
	11-A. 저신용자(7~10급)금융지원 관련 대책회의, 대책보고서 사본	917
	11-B. 제도권 금융기관의 총대출 비중 중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비중 - '07년~현재 매년 반기별 통계	918
	11-C. 가장 최근의 사금융이용 실태조사서 결과 및 향후 조사계획	919
	12-A. 2008~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채무재조정 실적, 소액 금융지원, 취업지원, 신용관리교육실적	934
	12-B. 신용회복위원회의 2009년, 2010년 사업계획서	935
	12-C. 부실채권정리기금 잔여재산중 금융회사 잉여금의 법적성격, 발생경위, 금융회사 배분현황, 배분당시 잉여금 총액	948
	13-1. 생보사 상장위원회 위원 명세, 위원회 개최현황, 각 회의별 안건	951
	13-2. 생보사 상장과 관련한 주요 쟁점 정리	953
	13-3. 상장요건 충족한 생보사 현황, 충족하지 못한 생보사 현황 및 이유	955
	13-4. 현재 상장 추진중인 회사 및 진행 경과	957
	14. 금융소비자보호 전문 감독기관 설립 관련하여, 미국이 준비중인 '소비자금융보호감독청'과 유사한 독자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관 설립 필요성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958
	15-A. 재취업자 현황 : 성명, 퇴임당시 소속부서와 직위, 재취업 직장명·직책 명시	959

의 원 명	요 구 자 료	페이지
신 건 의원	15-B. 2006년 이후 금융위에 접수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 3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 사본, 첨부한 의견서 사본, 동조 2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통지서	960
	15-C. 2006년 이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금융위의 취업승인요청서 사본, 이에 첨부한 의견서 사본	961
	16. < K-IFRS 관련 >	962
	① 현재 채택중인 상장회사 수 및 비율	
	② 도입결정 경과	
	③ 도입결정시 참고한 영향분석 자료 및 관련 용역 등 참고자료	
	④ EU, 미국, 일본, 독일, 인도, 중국의 도입일정	
	⑤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점 분석	
	17-1. 실손형 보험 보장 한도 축소 결정 이전 논의 경과	965
	17-2. 보장축소 결정의 기초가 된 연구자료, 용역자료 일체	966
	17-3. 가장 최근 실시한 중복가입률 조사치 또는 추정치	967
	18, 19. 서민금융정책 추진 현황 및 추진 실적 (금융소외자 지원방안 및 대출·보증 등 추진 실적)	968
	20. 휴면예금 관련	971
	- 각 은행별 휴면예금 발생현황	
	- 각 은행별 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 현황	
	- 휴면예금관리재단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1(A) 금융위가 가장 최근 발표한 신용카드 수수료율 적정화 방안	989
	22. 공매도 관련	993
	A. 05년 이후 매월별 공매도 평균액수, 내외국인 거래비중	
	B. 08년 이후 주식대차거래 중개 및 공매도 주문수탁	

의 원 명	요 구 자 료	페이지
신 건 의원	<p>영업의 적정성 점검여부 및 점검결과 조치사항</p> <p>C. 공매도 채허용후 매월별 공매도 발생 상위 5종목</p> <p>23. 증권거래법 위반 과징금 현황</p> <p>- 2005년 과징금 부과 현황, 과징금 채납현황, 결손 처리한 채납과징금 현황</p>	995
	<p>24. 2007년 이후 과징금 부과현황</p> <p>- 년도별 부과건수, 부과총액, 채납건수, 채납총액</p> <p>- 부과일시, 당사자, 부과금액, 사건내용, 납부일시</p>	998
신학용 의원	1.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 내역	1005
	2. 최근 3년간 발주용역보고서 상세목록(기간, 제목, 용역비, 연구자 등), 정책반영 결과	1006
	3. 최근 3년간 타 부처 등 파견자 명단	1011
	4.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	1012
	5. 국내 금융 자격증 제도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1052
	6. 최근 3년간 금융기관별 휴면예금, 휴면보험금 현황	1058
	7. 최근 3년간 민원업무 처리 및 조치내용	1062
	8. 최근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변동 현황	1063
	9. 소송현황	1065
	10. 감사원, 자체감사결과보고서	1067
	11. 권익위로부터 지적받은 회의참석수당 등 세부내역 및 명단	1097

고 승 덕 의원

1.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지원제도 현황

- 신용회복지원 실적, 소액금융지원 현황
- 상담건수, 신청건수, 대출건수, 대출금액

◆ 신용회복위원회 활동실적(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 상담

(단위 : 명)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1-8월	합 계
내방상담	89,704	358,564	288,958	133,287	101,799	130,755	129,250	1,232,317
전화상담	127,962	368,938	331,185	152,126	127,380	292,909	284,655	1,685,155
인터넷상담	30,362	38,254	26,305	19,624	22,769	22,909	16,540	176,763
합 계	248,028	765,756	646,448	305,037	251,948	446,573	430,445	3,094,235

□ 신규 신청

(단위 : 명)

(단위 : 원)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1-8월*	합 계
신 청	일반	63,055	287,352	193,698	85,826	63,706	79,144	66,209	838,990
	프리	-	-	-	-	-	-	6,908	6,908
합계		63,055	287,352	193,698	85,826	63,706	79,144	73,117	845,898

* 사전채무조정(Pre-Workout) : 2009년 4월 13일 시행

□ 소액금융지원실적

(단위 : 명, 백만원)

(단위 : 명, 억원)

구 분		'06.11.13 ~ 12월	'07년	'08년	'09.1~8월	합 계
상담		1,620	12,713	11,638	10,058	36,029
접 수		38	1,507	5,131	9,073	15,749
대출	인원수	17	1,168	4,488	8,655	14,328
	금 액	54	3,469	13,751	26,271	43,544

(기준:2009.8.31)

종 류	실행건수	금액
생활안정자금	12,439	37,009,600
학 자 금	1,044	3,321,100
시설개선자금	87	368,900
운 영 자 금	355	1,501,800
고금리차환자금	360	1,245,800
대환대출	43	96,900
합계	14,328	43,544,100

2. 2008년 국정감사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 별도 제출

2008년도 국정감사시 지적 및 시정사항 처리결과

금 융 위 원 회

목 차

- (1) 금융위기 대책 관련
- (2) 은행에 대한 외화 유동성 공급 정책 관련
- (3) KIKO(키코) 피해 관련
- (4) 펀드 및 파생금융상품 관련
- (5) 대부업체에 대해 금융총괄부처인 금융위원회가 관리·감독을 강화
- (6) 대부업체 관리에 대한 권한 및 업무를 관계부서와 조정할 것
- (7) 직불카드·체크카드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 (8) 전자금융 보안 인프라에 대해 점검할 것
- (9)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권을 증권예탁결제원 정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10) KB금융지주의 김중희 상임이사 임명과 관련하여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위반여부에 대한 법제처의 법적
해석을 받을 것
- (11) 신용회복기금 관련
- (12) 금융공공기관들의 방만한 경영과 예산낭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13) 보험모집조직의 교육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 (14) 주택금융공사가 CP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
- (15) 외환 씨티 SC제일은행 은행장 및 임원들 급여에 대해
금융위원장이 받아서 제출 하겠다고 했으나, 시중은행이
거부하고 있다는 핑계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 바,
금융위원장이 답변한대로 조속하게 해당 자료를 각 은행에
받아 제출하기 바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금융위기 대책 관련	
(1)-1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로 전환되지 않도록 금융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	<input type="checkbox"/>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발표·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동성 신속 지원을 위한 Fast Track 프로그램 실시('08.10) ○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08.12) ○ 기업구조조정 추진 방향과 전략 마련 발표('09.2.19) ○ 20조원의 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 및 운영방안 발표('09.2.25) ○ 구조조정기금 설치 등 구조조정을 위한 추진방향과 전략마련('09.3.13) ○ 사전채무조정제도 시행('09.4.8) ○ 관계기관 합동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방안 마련('09.4.9) ○ 금융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금산법 개정 및 40조원의 구조조정기금 설치를 위한 자산관리공사법 개정('09.5.27) ○ 중소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발표('09.6.23)
(1)-2 최근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각종 대책이 단기대책 중심으로 되어 있는 바,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input type="checkbox"/> 금융위는 국제금융위기에 직면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위기관리대책을 추진 <input type="checkbox"/> 이와 함께 위기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금융안정기금(09.6.1) 및 구조조정기금(09.5.13)을 설치</p>
<p>(1)-3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정책당국간 조율되지 않은 정책이 일방적으로 발표됨으로써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관련 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이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함</p>	<p>□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는 경제금융대책회의 등을 통해 긴밀하게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책을 조율</p> <p>□ 향후에는 보다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시장 상황에 충실히 대응해 나가겠음</p>
<p>(1)-4 은행의 유동성 부족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자금을 회수할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각해 질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 자금난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p>	<p>□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특히 은행의 신용위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비율을 85%수준에서 95%로 확대하였음</p> <p>※ 금융위기 이후 주요 중소기업금융지원조치</p> <p>① 유동성 신속지원을 위한 Fast Track 프로그램 실시('08.10)</p> <p>* '09.8월말까지 KIKO손실기업 5.3조원 포함 총 20.4조원 지원</p> <p>② 매출액 감소 등을 반영하여 보증심사 기준 완화, 보증절차 개선 등 보증운영 비상조치 실시('09.1.8)</p> <p>③ 기존보증 전액 만기연장, 보증지원기준 완화, 핵심분야 보증비율·보증한도 특례 적용 등 신용보증 확대방안 발표(2.12)</p> <p>* '09.8월말까지 신규보증 28.6조원, 만기연장 20조원 등 총 48.6조원의 보증 지원</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④ 은행권 자율결의로 중기대출 전액 만기연장 시행 유도(2.19)</p> <p>⑤ 국책은행(산은·기은) 중기대출 확대*</p> <p>* ('08년 실적) 39.1조원 → ('09년 계획) 44조원</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경기회복, 기업 자금사정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적정 수준의 금융지원</p>
(1)-5 은행의 대출 거부 및 꺾기에 대해 검사해서 제재할 것	<p><input type="checkbox"/> '09.4.28 ~ 5.22 기간중 16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구속성 행위(일명 꺾기) 실태에 대한 현장 검사 실시</p> <p>○ 16개은행 687개 점포에서 총 2,231건 430억원의 불건전 구속성 행위 적발</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검사 결과 금감원에서 위규 행위자 805명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제재심의절차 등을 거쳐 위반정도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p>
(1)-6 펀드의 대량 환매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권사 및 자산운용회사의 유동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이 시급	<p><input type="checkbox"/> 자산운용사의 유동성 확보가 용이하도록 증권금융을 통해 한은 RP 지원('08.10)</p>
(1)-7 은행채가 편입된 펀드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	<p><input type="checkbox"/> 세제적격 장기회사채펀드 의무편입대상 자산의 범위에 은행채, 카드채를 추가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반영('09.2)</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8 은행에 대한 원화 유동성 공급 대책 수립이 필요	<input type="checkbox"/> 은행 원화유동성 비율제도 개선(08.10월말) (비율규제 적용대상 유동성 자산·부채를 '3개월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완화) <input type="checkbox"/> 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여 8개 금융기관이 발행한 4조원상당의 신종자본증권(3.5조원) 및 후순위채권(0.5조원) 매입(09.3월말)
(1)-9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input type="checkbox"/> '금융위, 재정부, 한은 등으로 구성된 「합동대책반」을 구성('08.9.16)하여 범정부적으로 대응 <input type="checkbox"/> '08.9.22~12.31간 증권선물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 수수료를 면제하여 증권사와 투자자의 거래비용 절감 <input type="checkbox"/> '08.10.1일부터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하여 공매도가 시장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조치 <input type="checkbox"/> 시장불안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처벌 <input type="checkbox"/> '08.10, 장기주식형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 <input type="checkbox"/> 증권유관기관(거래소,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공동으로 증시안정펀드(총 5150억원 규모)를 조성·운용 - '08.11월~'09.3월간 매월 1/5(1,030억원) 순차적으로 투입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 은행에 대한 외화 유동성 공급 정책 관련	
(2)-1 은행 스스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임금삭감 등을 비롯하여 강도높은 지구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당국은 MOU체결 등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input type="checkbox"/> '08.11월 은행별로 실물경제 지원과 경영 합리화 등의 내용으로 MOU를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U에 임직원의 연봉 및 스톡옵션 등 보수체계의 합리적 조정, 보상체계의 장기화, 증자 및 적정 배당수준 유지를 통한 자기자본 확충 등의 지구노력을 포함 <input type="checkbox"/> MOU 체결 이후, 정기적으로 MOU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결과를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고, 이행실적 부진은행에 대해서는 주의촉구 조치 등 시행
(2)-2 국가간 통화스왑계약 체결 규모를 증액시킬 필요가 있음	<input type="checkbox"/> '08.12.12 한-중, 한-일 통화스왑을 각각 300억불로 증액 <input type="checkbox"/> '09.2.4, 09.6.26, 한-미 통화스왑 만기를 2차례 연장('10.2월까지)
(2)-3 공공기관 평가시 중소기업은행에의 예치금 규모를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input type="checkbox"/>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 결과, 공공기관 평가시 기반영중인 중소기업 제품구매 실적을 포함하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노력을 종합적으로 경영 평가시 반영하는 방안 검토중
(3) KIKO(키코) 피해 관련 - 키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유동성 특별지원 프로그램 (Fast Track)을 통해 KIKO 피해기업에 대해 대출전환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 지속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장외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장외파생시장 감독 선진화 종합대책」을 수립·발표(08.12)</p> <p>※ 투자자 보호 관련 사항 등 법령 개정사항은 09.1월 법 개정 등을 통해 반영 완료</p>
<p>(4) 펀드 및 파생금융상품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완전판매에 대한 대책을 마련 - 파생금융상품의 위험도를 표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 	<p>□ 파생상품시장 감독체계 개선 방안 마련 (08.12.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모니터링 강화: 취합정보 세분화(거래상대방, 거래목적등), 파생거래정보 DB 구축 · 투자자 보호 강화: 일반투자자의 헤지거래기준·투자권유준칙 마련, 파생상품업무책임자 지정, 상장법인등 파생상품 투자시 일반투자자로 분류 등 · 금융사 내부통제강화·시스템리스크 방지: 장기성과등을 감안하도록 파생거래성과보수체계개선, 장내통화선물리모델링,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청산·결제 인프라·개선 추진 등 <p>□ 미스터리쇼핑, 판매인력 등급제 도입 등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강화('09.1)</p> <p>□ 특히 파생상품위험도 표시관련 고위험 장외파생상품에 대해 손실범위별로 경고제도 실시 (노란색→주황색→적색경고문)</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 대부업체에 대해 금융총괄부처인 금융위원회가 관리·감독을 강화	<p>□ 대부업의 관리·감독 및 대부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대부업법을 개정시행('09.4.22)하였음</p> <p>○ 대부중개업의 별도 등록, 대부업자들의 교육의무, 상호에 관한 규제, 채무관련 서류 열람제공 및 증명서 발급 의무, 변제 능력 증빙서류 징구 의무, 허위·과장 광고 규제 신설 등 대부업 이용자의 보호를 강화</p>
(6) 대부업체 관리에 대한 권한 및 업무를 관계부서와 조정할 것	<p>□ 현재 매분기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관계 행정기관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운영해 나가고 있음</p> <p>○ 09.1.21 대부업법 개정을 관계 행정기관간 필요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대부업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p> <p>* 대부업정책협의회는 06.12월부터 운영</p>
(7) 직불카드·체크카드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p>□ 신용카드의 부채상환 및 금융상품 결제 제한 관련</p> <p>○ 신용카드의 금전채무의 상환 및 금융상품 결제를 제한하는 여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중('09.4.20,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p> <p>* 동 개정안에서 체크·직불카드는 고객의 결제성예금 잔액 범위내에서 이용되어 과소비 우려 등이 없으므로 금전채무의 상환 및 금융상품 결제를 제한하지 않음</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체크·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 차별화 관련</p> <p>○ 최근 체크·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을 차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국회 기재위 논의과정에서 폐기</p> <p>* ('08) 체크·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 (20%→30%)하는 개정안을 김효석·이용섭 의원이 제출</p>
(8) 전자금융 보안 인프라에 대해 점검할 것	<p>□ '09년중 : 국민·신한은행 등 금융회사의 일회용비밀번호(OTP) 사용 등 전자금융 보안인프라 점검(은행(21)·금융투자(7)·보험(7)·카드(5)·기타(2))</p> <p>* 점검결과 : 금융회사가 OTP 등 현행 보안매체 뿐만 아니라 보다 안전한 새로운 보안매체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전자금융서비스의 안전성을 강화토록 지도</p>
(9)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권을 증권예탁결제원 정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p>□ 현재 증권예탁결제원의 관리·감독권은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동 법에 근거하여 예탁원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철저히 수행하겠음</p> <p>※ (참조) 현행 자본시장법은 예탁결제원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규정하고 있음</p> <p>* 제299조 : 정관 변경시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함</p> <p>* 제305조 : 예탁업무규정과 결제업무규정 제정·변경·폐지시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하여, 그 외 업무규정의 제정·변경·폐지시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함</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제306조 :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함</p> <p>* 제307조 : 금융위원회는 예탁원의 위법 행위 등에 대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계약의 인계명령, 위법행위의 시정 명령·중지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p>
<p>(10) KB금융지주의 김중희 상임이사 임명과 관련하여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위반여부에 대한 법제처의 법적 해석을 받을 것</p>	<p><input type="checkbox"/> '08.10.22 공직자윤리법 주무부처인 행안부를 거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p> <p>○ '08.12.12 법제처 유권해석을 행안부를 경유하여 접수</p> <p><input type="checkbox"/> 유권해석 요지 : 공직자윤리위의 승인 절차 등을 거칠 필요 없음</p> <p>(이유)</p> <p>○ 취업제한제도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엄격히 해석해야 함</p> <p>○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영리업체가 고시되어 있지 않으면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승인 절차 등을 거칠 필요 없음</p> <p>○ 신설 등의 이유로 고시에서 누락된 영리업체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함</p>
<p>(11) 신용회복기금 관련</p> <p>- 안정적 재원조달방안과 법적 근거를 확보할 것</p>	<p><input type="checkbox"/>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중 금융회사 배분금 4,995억원을 출자받음으로써 ('09.1월) 신용회복기금의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였고,</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금융기관 업무 협의회'의 성과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회사 법인세 이연 조치를 통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여 1,942억원 추가 재원 확보('09.5월) □ 자산관리공사가 신용회복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도 개정('08.12월) ○ 또한, 신용회복기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위해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이 제출 ('09.4월, 권택기 의원) □ 법적근거 마련 이전에도 신용회복기금의 투명성, 건전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시행중 □ '금융기관 업무협의회'를 통해 금융회사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기금을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체채권 매입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금융회사의 적극 참여를 유도 ('08.12월 1천만원 이하 → '09.4월 3천만원 이하 연체채권 매입으로 확대)
<p>(12) 금융공공기관들의 방만한 경영과 예산낭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원회는 '08.11월 「'09년도 금융공공기관 예산 지침」을 수립하고, ○ 산은·수은·기은·예보·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의 '09년도 예산 심의를 통해 임원 보수를 평균 10% 내외로 감액하고, 총인건비를 동결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향후 추진계획></p> <p>□ 금융공공기관들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을 적절히 집행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10년도 금융공공기관 예산지침」 수립 및 '10년도 예산 심의시 반영 추진</p>
<p>(13) 보험모집조직의 교육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p>	<p>□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 등이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모집에 관한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제85조의2)을 마련, 국회에 제출('08.12.18)</p> <p>□ 보험설계사에 대한 등록전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시험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조치(금감원, 08.12)</p>
<p>(14) 주택금융공사가 CP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p>	<p>□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CP발행이 불가능하였음</p> <p>○ 주택금융공사가 CP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포함하여 제출('09.2.10 제출, 정무위 계류중)</p>
<p>(15) 외환 씨티 SC제일은행 은행장 및 임원들 급여에 대해 금융위원장이 받아서 제출 하겠다고 했으나, 시중은행이 거부하고 있다는 핑계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 바, 금융위원장이 답변한 대로 조속하게 해당 자료를 각 은행에 받아 제출하기 바람</p>	<p>□ 외환, 씨티, SC제일은행의 경우 은행장 및 임원 급여에 대해 동결 또는 10% 자율적으로 삭감한 바 있으나, 급여 금액 수준의 공개여부의 경우, 이의 제출을 요구하기는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p>

3. 휴면예금 현황 및 처리대책(활용 현황)

- 최근 5년간 휴면예금의 사용처 및 운용현황

□ 사용처 및 운용현황

○ 재단사업비 : 711억원

- '08년도 사업비 : 271억원

- 창업 지원 분야 : 31억원
- 신용회복 지원 분야 : 180억원
- 사회적기업 지원 분야 : 20억원
- 전통시장 영세상인 지원 분야 : 10억원
- 소액보험사업 : 30억원

- '09년도 사업비 : 440억원

- 창업 지원 분야 : 80억원
- 신용회복 지원 분야 : 160억원
- 사회적기업 지원 분야 : 40억원
- 전통시장 영세상인 지원 분야 : 110억원
- 소액금융 예비사업비 : 10억원
- 소액보험사업 : 40억원

○ 운용현황

- 각 출연은행별로 정기예금에 예치

- 2007년 8월 이후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권리자에게 반환되는 금액의 현황

□ 휴면예금(보험금)의 원권리자에 대한 지급* : 205.2억원

* 2009년 9월 18일 현재

4. 이명박 정부이후 시행된 서민정책 현황 및 추진 중인 계획

1. 서민정책 현황

□ 신용회복기금을 통한 서민지원

- 금융소외자 지원을 위해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금융회사 잔여재산 분배금(7천억원)을 재원으로 신용회복기금을 설립('08.9월) 하여 '08.12월부터 채무재조정 및 전환대출(환승론) 시행중
- (채무재조정) 금융회사의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연체이자 감면, 최장 8년의 장기분할상환 등을 통해 재기를 지원 (금융채무불이행자 기록 삭제)
- (전환대출) 신용등급 7~10등급인 저신용층의 20%이상 금리 대출을 신용회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12%(평균) 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이자상환 부담을 완화
- 채무재조정 및 전환대출(환승론) 지원실적('08.12~'09.8)

구분	채무재조정	환승론
건수	54,777 건	15,401 건
채권액	2,217억원	1,518억원

□ 소액서민금융재단을 통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 휴면예금을 활용하여 저소득층의 취업·창업 지원 등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08.3월 소액서민금융재단 설립
- '08년, 빈곤아동 2천명·저신용자 4천명 등 1만여명과, 서울시 24개 전통시장 등 13개 단체에 총 271억원 지원
- '09년, 그 규모를 60%이상 확대하여 440억원 지원

< 소액서민금융재단 현황 >

	출 연	지 출
'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704억 원 - 은행 1,767억 원 - 보험 917억 원 - 저축은행 18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71억 원 - 소액대출 241억 원 - 소액보험 30억 원
'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29억 원 - 은행 894억 원 - 보험 232억 원 - 저축은행 3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40억 원 - 소액대출 400억 원 - 소액보험 40억 원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신용회복 지원 확대

- 장기연체자의 증가와 이에 따른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하를 예방하고자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사전채무조정을 실시

<최근 3년간(~'09.8)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프로그램 신청 현황>

(단위 : 명)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신청현황	
연 도	신청자
2006년	85,826
2007년	63,706
2008년	79,144
2009년6월말	55,921
합 계	254,597

-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1~3개월 미만 연체자에 대해서도 1년간 한시적으로 채무조정(개인프리카아웃)을 확대 시행 (이자 30%감면, 원금은 최장 8년 분할 상환 등)

* '09.4.13~8월말, 6,908명이 신청하여 채무조정 심사중

□ 사금융 이용자 보호 강화

① 불법 고금리사채 피해 축소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

- 불법 대부업자에 의한 서민의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대부업의 관리·감독 및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강화('09.4월 시행)
- (상호·영업) 대부업자 상호에 '대부' 사용, 대부업자의 교육
- (대부계약) 대부계약서 작성시 중요사항의 자필기재, 5백만원 이상 대부시 변제능력 증빙서류 징구 등
- (이자제한 위반 제재) 무등록 대부업자가 이자제한법상 이자 한도(30%)를 넘는 이자를 받는 경우 형사처벌

② 불법 채권추심 피해 방지를 위한 공정채권추심법 제정

- 불법대부업자의 과도한 채권추심행위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09.8월 시행)
- (불법 추심행위* 제재) 위반시 형사처벌(5년이하의 징역)
- * 폭행, 협박 또는 공포감 유발, 채무자 등에게 허위 사실 등 고지,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등
- (선의의 채무자 보호) 채무자 요구시 채권자의 부채증명서 발급 의무



2. 향후 계획

- ☐ 서민의 자활지원을 위한 미소금융(마이크로 크레딧)사업 대폭 확대

※ 별첨 1 : 미소금융확대 방안 보도자료

별첨 2 : 미소금융확대 세부시행 방안

별첨 3 : 미소금융사업 Q&A

 금융위원회	<h1>보도자료</h1>		 소액서민금융재단 Microfinance Foundation (휴먼에코관리재단)
	9. 17(목) 17:00부터 보도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기업금융과 소액서민금융재단 사무처		
책임자	금융위 배준수 과장(2156-9850) 소액서민금융재단 장훈기 처장(2084-7905) 문의전화 (국번없이)1600-5500	담당자	금융위 주흥만·서재홍사무관(2156-9851~2) 소액서민금융재단 양형엽 팀장(2084-7960)
배포일	2009. 9. 17(목)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총 8 매

제 목 : 서민의 자활지원을 위한 미소금융(마이크로 크레딧)사업 대폭 확대

- 향후 10년간 2조원 이상 지원(과거 10년간 지원 규모의 13배이상)
- 재정지원 없이 민간 기부 등을 중심으로 사업재원 조성·운영
- 「소액서민금융재단」을 「(가칭)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개편하여 미소금융사업을 총괄
- 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미소금융사업수행 법인을 전국 200~300여개로 확대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및 자원봉사자 위주 운영으로 『나눔과 봉사의 문화』 확산

□ 「제31차 비상경제대책회의」(9.17일)에서,
현재 소액서민금융재단을 중심으로 수행중인 '무담보·소액대출'(Microcredit)을 미소금융사업으로 대폭 확대하여,
서민의 원활한 자활을 지원할 수 있는 「미소(美少)금융* 확대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이를 금년 12월부터 시행기로 하였음

* 아름다운 소액대출(아름다울 美, 적을 少)로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

1. 추진 배경

□ 외환위기 이후 10여년간 양극화가 심화되어 중산층이 줄어들고 저소득층으로 전락한 서민층이 증가

○ 특히, 자활의지는 있으나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층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대출이 용이한 불법 사금융 등을 이용하게 되고 이에 따라 높은 이자부담과 불법 추심행위에 시달리는 사례가 많이 발생

* '09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등록대부업 대출 규모는 5.2조원

- 기존의 제도권 서민금융회사들도 2000년대 초반 소액신용대출 부실화 등으로 그 동안 PF대출 등 고위험·고수익위주의 영업에 치중한 결과 전통적 서민금융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그간 정부는 신용회복지원, 저금리 전환대출 등 다양한 서민금융대책*을 마련·시행해 왔으나, 경기침체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서민금융수요 충족에는 충분하지 못한 상황

* '09.8월 현재 서민금융 지원 현황

- 신용회복기금 : 채무재조정 50,327건, 전환대출(환승론) 14,561건

- 신용회복위원회 : 개인워크아웃('08년~) 120,410건, 개인프리워크아웃('09.4~) 4,561건

- 재래시장 및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2.0~3.5% → 2.0~2.2%)

□ 해외에서는 제도권 금융의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무담보 소액대출인 “마이크로 크레딧”이 민간에 의해 자생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국내에도 10여년전부터 도입되어 서민금융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나름대로 수행해 왔음

- 그간 일부 민간기부금과 재정을 재원으로 하는 “마이크로 크레딧”은 ‘08.3월 “마이크로 크레딧 뱅크(Microcredit Bank)” 역할을 하는 소액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을 계기로 그 규모가 확대**되는 등 새로운 轉機를 맞이하였음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08.3월)

** ‘00~’09년중 마이크로 크레딧 지원 규모(1,480억원)의 1/3이상(501억원)을 소액서민금융재단이 ‘08~’09년 2년간 공급

- 그러나, 정부와 민간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①규모 미흡*, ②전달체계의 비효율에 따른 중복 또는 과소 지원, ③적은 수의 수행기관 등에 따른 서민의 접근성 제약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08년 마이크로 크레딧 규모는 GDP의 0.005%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

- 이에 따라, 금번에 서민금융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면서 저소득층·저신용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대책을 강구하게 된 것임

2. 추진 내용

- ①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소액서민금융재단」을 (가칭)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개편하여 마이크로 크레딧의 중추적 기관으로 활용

- 미소금융중앙재단은 마이크로 크레딧 정책방향 결정, 사업의 가이드라인 설정, 미소금융 수행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컨설팅, 교육훈련, 지원정보의 통합관리 등 미소금융사업을 총괄하고,

- 동 재단은 지역별 미소금융수행 법인(미소금융 ○○지점) 및 동 법인의 지부 설립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200~300개의 전국적인 마이크로 크레딧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를 통해 미소금융사업을 수행
- 재계·금융권 등도 희망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미소금융재단을 설립·운영토록하고, 미소금융중앙재단에의 기부금을 동 재단에 배분
- 지역별 미소금융법인은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부터 대출재원 (초기에는 3~5억원) 및 일정수준의 운영비를 지원받아 직접 대출 및 회수, 자활컨설팅, 상담업무를 수행
- 동 법인은 지역내 사회공헌도가 높고 사회봉사 의지가 있는 대표자 1명, 직원 2~5명으로 구성
- 자원봉사 취지를 감안하여 대표자는 무보수·명예직, 경험 많은 금융회사 퇴직자 등 기간요원은 월100만원 이하, 청년 자원 봉사자는 최소한의 실비 지급
- 제 1단계로 전국에 20~30개 정도의 지역법인을 설립하고,
 - 제 2단계로 기 설립 지역법인의 지부 확대 및 신규법인 설립 등을 통해 200~300개 규모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확대
-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지역별 미소금융법인을 주기적으로 평가 하여 실적이 우수한 법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하고, 저조한 법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축소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유지

② 재정지원 없이 향후 10년간 총 2조원이상(금년중 약 3천억원)의
기금을 조성

* 지난 10년간('00~'09) 마이크로 크레딧 지원규모(1,480억원)의 13배 이상

- 재계(전경련 소속회원기업) 기부금 약 1조원과 휴면예금* 출연금
(7천억원)을 포함한 금융권 기부금 1조원 이상으로 조성

* '09.9월 현재, 기 출연액 약 2천억원 외에 향후 10년간 매년 500억원
가량 출연될 것으로 예상

③ 청년·금융회사 퇴직자 등 자원봉사자 위주로 운영인력을
채용하여 마이크로 크레딧의 저변을 확대

- 전국 200~300개의 지역법인에 법인당 2~5명 수준의 자원
봉사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일정기간 봉사한 청년에 대해서는
취업시 추천서 발급 등을 통해 우대하고

-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의 핵심인력인
자활컨설팅 전문인력(RM)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나아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지역법정도 신설할 수 있도록 지원

④ 지원내용

- 영세사업자 운영자금 : 2년이상 영업자에 대해 원재료 구입,
시설 개·보수 자금 등 운영자금 지원

- 전통시장 상인대출 :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영세상인 운영
자금 지원

- 프랜차이즈 창업자금* : 시장에서 검증을 받아 성공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업체와 연계하여 창업시 권리금 등 창업자금 지원

*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처음 시도

- **일반 창업자금** : 본인의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거나 기존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임차보증금 지원
 - **공동대출** : 자활추진단체에 대해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
 - **사회적기업 지원자금** : 사회적육성기업법에 의해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해 운영자금을 지원
- * 「사회적육성기업법」 상의 요건을 갖춰 취약계층에 일자리나 사회서비스(교육, 예술·관광·운동, 간병·가사지원 등)를 제공하는 회사(노동부장관 인증)
- 대출한도는 지원내용에 따라 500만원~1억원 이내
 - 금리는 시장금리 이하로 적용(현시점 5% 수준)
 - 상환기간은 지원내용에 따라 1~5년 분할 상환
(단, 기존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자의 대출내용과 달리 거치기간은 무이자로 운영)

⑤ 재계·금융권 등이 설립한 미소금융재단 운영

- 재계·금융권 등이 미소금융중앙재단에 지정기부한 자금을 배정받아 재계 및 금융권이 직접 자율성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
-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사업모델 개발, 표준운영방안 제시, 교육 훈련, 지원정보의 통합관리 등을 통해 재계·금융권 등이 설립한 미소금융재단의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 정부는 미소금융중앙재단을 세법상 특례기부단체로 지정하여 미소금융사업에 동참하는 재계·금융권 등에 대해 세제상 지원

3. 기대효과

- ① (저소득층의 자활지원) 자활의지가 있으나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층 및 영세사업자의 자활을 제도적으로 지원 가능
 - 지난 10년간 1,480억원(연평균 148억원)이 조성·공급되었으나, 향후 10년간 2조원 이상(연평균 2천억원 이상)이 조성·공급 되면 약 13배 이상 확대
 - 향후 10년간 약 20~25만 가구 이상의 저소득층들이 미소금융 사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
- ②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재계와 금융권이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자금을 기부하고, 직접 미소금융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이행
- ③ (나눔·봉사문화 확산) 미소금융지점 대표자, 금융회사 퇴직자·청년 자원봉사자 등이 미소금융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또한, 기부와 봉사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도 나눔과 봉사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 마련
- ④ (금융시스템의 보완·발전) 제도권 금융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고금리 사채 등 불법 사금융시장을 대체함으로써 서민·영세자영업자의 금융 이용기회를 부여하고 고금리 부담도 경감

4. 추진 일정

□ 사업 준비 ('09.9~11월)

- 소액서민금융재단을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개편(10월)
- 지역별 미소금융법인(미소금융지점) 설립준비 (9~11월)
-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 (10~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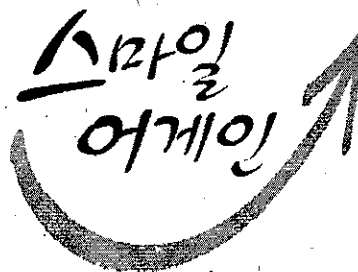
□ (1단계 사업) 지역별 미소금융법인 설립 ('09.12~'10.5)

- 20~30개 수준의 지역별 미소금융법인 설립 추진
- 재계·금융권 미소금융재단도 준비를 마치는대로 설립 추진

□ (2단계 사업) 지역별 네트워크를 단계적으로 200~300개로 확대 추진 ('10.6월~)

* 문의전화 : (국번없이) **1600-5500** (종합안내센터)


- ※ 별첨 : 1. 미소금융 확대방안
2. 미소금융사업 Q&A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별첨2〉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서민의 자활지원을 위한 미소금융 [美少金融 마이크로 크레딧] 확대방안

2009. 9. 17

금 융 위 원 회
소액서민금융재단

I. 마이크로 크레딧의 의의

II. 우리나라 마이크로 크레딧 현황 및 문제점

III. 추진 방안

IV. 기대효과

IV. 추진 일정

〈참고1〉 서민금융 지원현황

〈참고2〉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 현황

1. 마이크로 크레딧의 의의

1. 마이크로 크레딧(Micro-Credit) 발전과정

◇ 마이크로 크레딧은 일반적으로 제도권 금융회사와 거래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무담보 대출'을 의미

□ 70년대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등 제도금융권이 발달되지 않은 저개발국에서 민간주도로 빈민에 대한 소자본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출발

□ 80년대 들어 방글라데시 Grameen Bank*, 인도네시아 국영 은행(BRI), 남미 ACCION(Action) 등의 성공사례가 알려지면서 전세계적으로 마이크로 크레딧이 확산

* 방글라데시어로 "마을"을 뜻하는 그라민뱅크는 '76년 Yunus교수 주도로 창업 자금 지원. 5명 단위의 여성그룹에게 평균 100달러를 무담보 대출하고 자금 상황에 연대책임 부과(회수율 98%) → '83년 은행으로 전환

□ 90년대부터 NGO가 운영하는 일부 마이크로 크레딧 기관이 예금을 받아 대출 재원을 확대하고자 은행 또는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전환

* 은행 전환 사례: BancoSol(볼리비아), Compartamos (멕시코), Mibanco(페루) 등

□ UN · WB · ADB 등 국제기구의 차관 · 무상원조가 마이크로 크레딧 확대에 큰 역할

○ UN은 '97년 Microcredit Summit Declaration을 채택

○ 특히, 국제기구가 중심이 되어 구성한 CGAP (Consultative Group to Assist the Poor)는 '95년부터 마이크로크레딧 발전을 위한 주요전략과 원칙을 확립하는 제도확산에 기여

2. 해외의 마이크로크레딧 유형

가. NGO형 (방글라데시 Grameen Bank, 남미 ACCION)

- ☐ (연혁) NGO들이 빈곤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금융사업을 시작한 데서 유래
- ☐ (운영) 대출재원은 기업 기부, 정부·국제기구 등의 지원에 의존하며, 대출시 통상 담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이자율은 시장금리 이상의 높은 수준

나. 조합형 (남미 FINCA Village Bank)

- ☐ (연혁) 각국별로 지역별 유대에 따라 전통적으로 계승되던 협동체를 전국단위로 조직화하면서 발전(우리나라의 신협)

* FINCA Village Bank의 경우, 1984년 볼리비아에서 시작된 이후 현재 남미·아프리카·아시아 등 23개국으로 확산

- ☐ (운영) 대출재원은 조합원 출자금·예금, 금융차입, 기업 기부에 의존하며, 조합원에게 소액(FINCA Village Bank의 경우 50달러)을 대출

다. 은행형 (인도네시아 국영은행 Bank Rakyat Indonesia)

- ☐ (연혁) '84년 기존 국영 농업 개발은행에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부(BRI unit desa)를 신설하여 농촌지역에 여·수신 제공(우리나라 농수협의 상호금융)

- ☐ (운영) 대출재원은 일반은행처럼 예금(약 75%)에 의존하며, 상환 실적에 따라 대출한도를 인상하고, 이자율은 시장금리 이상이며, 지역주민을 고용하여 대출고객을 모니터링

Ⅱ. 우리나라 마이크로 크레딧 현황 및 문제점

1. 현 황

◇ 30여개의 민간단체가 재정, 지자체 예산, 소액서민금융재단 자금, 민간 기부금을 지원받아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수행

※ 정부, 지자체, 소액서민금융재단은 직접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민간단체에 자금만 지원

□ (사업수행기관) 2000년부터 (사)신나는조합 등 민간단체가 민간 기부금으로 창업자금 지원을 시작

○ '05년 재정(복지부), '08년 소액서민금융재단의 지원으로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 규모가 확대

□ (지원① : 재정) '05년부터 복지부는 예산으로 민간기관에 자금을 무이자로 대출('05~'08년 연 20억원, '09년 330억원)

* 지원대상 기관은 '05년에 사회연대은행 · 신나는 조합 등 2개 단체였으나 '09년 19개 단체로 확대

□ (지원② : 지자체) '09.5월, 서울시가 복지부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마이크로 크레딧 기관에 자금대출 개시(60억원)

□ (지원③ : 소액서민금융재단) '08.3월 금융회사 휴면예금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소액서민금융재단 설립 이후 대폭 확대

○ 기존의 마이크로 크레딧 수행기관 외에, 지자체(전통시장 지원), 신용회복위원회(금융채무불이행자 지원), 보험회사(소액서민보험)를 통한 지원도 실시

* '08년 271억원, '09년 440억원 지원

2. 문제점

① 수요에 비해 지원규모가 미흡 ⇨ 재원 확충 · 다양화

- 경기침체 영향으로 인한 저소득계층의 실업증가로 자활금융 수요는 커진데 비해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움
- 제도권 금융을 보완해 줄 마이크로 크레딧 지원규모는 크지 않음
 - 우리나라(총 인구 및 GDP 대비 수혜자 및 지원액, '08년)
 - 총 인구대비 0.014%(6,800여명), GDP대비 0.005%(470억원)

② 전달체계의 효율성이 낮고 추진기반이 취약 ⇨ 민간 참여 확대

- 전달체계가 서로 연계되지 않아 중복지원의 소지가 크고, 재원조달 등에서 민간의 자발적 기반도 취약
- * (예) 서울 거주 9등급 저신용 자영업자는 복지부 · 서울시 · 소액 서민금융재단 지원 민간단체 등에 중복 신청 가능

③ 서민들의 접근성이 제한 ⇨ 접근성 제고

- 일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마이크로 크레딧이 지원되고 있으나 수행기관이 적어 수요자들의 접근이 제한적

◇ 글로벌 경제위기로 자활의지는 있으나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 · 영세자영업자 등은 제도권 금융이용이 제한되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私금융에까지 의존

◇ 그동안 정부 재정지원(지역신보 보증)을 확대하여 왔으나 보다 근본적으로 저신용 서민 · 영세 자영업자 등의 자활 지원을 위해 마이크로 크레딧 자금의 공급을 확대하고 제도화하는 대책 필요

Ⅲ. 추진 방안

【 기본 방향 】

- ①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소액서민금융재단」을 마이크로 크레딧의 중추적 기관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 개편
 - 총괄기능 : 마이크로 크레딧 정책방향 결정, 사업의 가이드라인 설정, 컨설팅, 교육, 정보의 통합관리 등
 - 자체 네트워크 구성·지원 기능 : 지역별로 미소금융을 직접 수행하는 법인인 미소금융○○지점 등을 공모하여 200~300개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수행
 - 재원 배분 기능 : 미소금융 수행법인에 대출 및 운영자금을 배분·지원
- ② 민간 기부 활성화를 통해 향후 10년간 총 2조원 이상 (금년중 약 3천억원)의 기금을 조성
 - 재계(전경련소속 회원기업 기부금) : 1조원 이상 (금년중 1천억원)
 - 금융권(휴면예금 및 기부금) : 1조원 이상 (금년중 2천억원)
 - ※ 재계·금융권 등의 기부금은 재계·금융권 등이 직접 운영하는 미소금융재단에 배분
- ③ 청년 자원봉사자·금융회사 퇴직자 등을 운영인력으로 활용하여 민간 자원봉사 주도로 마이크로 크레딧의 저변을 확대
- ④ 미소금융중앙재단의 자체 네트워크를 통해 금년 12월부터 1단계 사업을 시작하고, 내년 6월부터 2단계 전국사업으로 확대
 - 재계·금융권의 미소금융사업은 준비후 내년 1월부터 추진

1. 소액서민금융재단을 미소금융의 중추적 기구로 확대·개편

- 기존의 소액서민금융재단을 마이크로 크레딧 전국 네트워크의 중추기구(미소금융중앙재단)로 확대·개편
 - 미소금융중앙재단은 마이크로 크레딧 정책방향 결정, 사업 가이드라인 설정, 컨설팅, 교육, 정보의 통합관리 등 총괄 기능 수행
 -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를 통해 재단의 자체적인 미소금융사업 수행을 확대
 - 재계·금융권의 기부금을 받아 이를 재계·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미소금융재단에 배분

2. 미소금융 수행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 구축

-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전국의 영세상인 및 서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 미소금융법인을 공개모집
 - 동 법인을 미소금융○○지점으로 설립하여 해당 지역의 미소금융사업을 수행
 - 지역내 사회공헌도가 높고 사회봉사 의지가 있는 대표자 1명과 금융회사 퇴직자·청년 등 자원봉사자 2~5명 등을 포함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
- 금년 12월부터 지역별로 미소금융의 업무를 시작하되, 2단계로 전국규모의 네트워크를 구성
 - (1단계: '09.12~'10.5) 20~30여개의 지역별 법인 설립을 추진
 - (2단계: '10.6~) 전국에 걸쳐 법인 설립 및 동 법인의 지부 확대 등을 통해 200~300개의 네트워크 구성

□ 미소금융지점은 자활자금지원 및 회수, 자활컨설팅 업무, 상담 등 마이크로 크레딧 업무를 수행

○ (대출) 서류심사, 현장실사 및 면접심사 등 체계적인 심사 절차를 거쳐 수요자 맞춤형 소액대출

- 대출재원은 초기 지점당 3~5억원에서 중장기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일정수준의 운영비를 지원

○ (자활 컨설팅) 소상공인진흥원 소속 전문가(RM) 등의 지원을 받아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 사업계획 및 입지선정, 마케팅, 재무 및 회계, 고객 서비스 등

○ (상담) ① 소액금융상담, 신용관리상담(부채클리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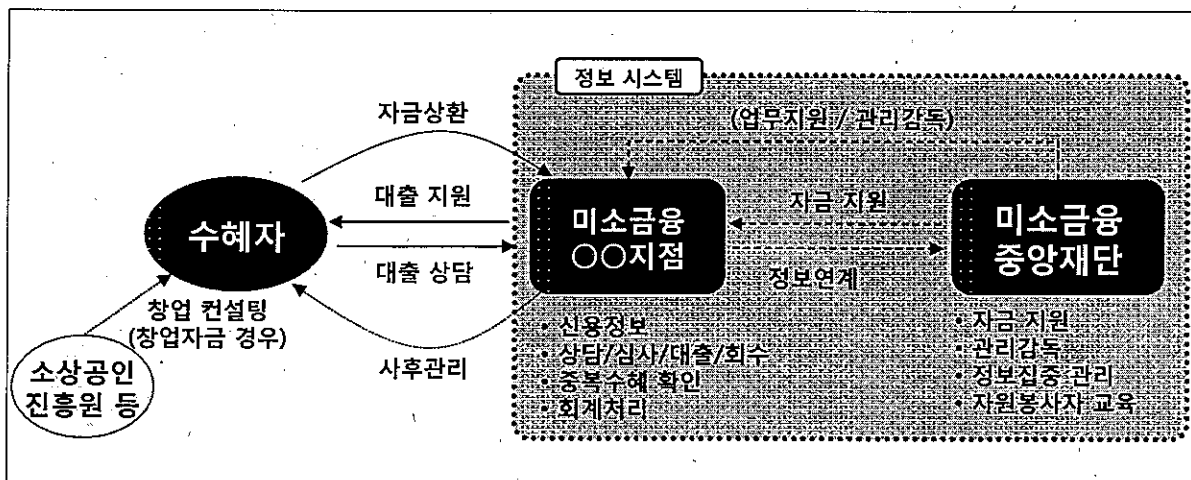
② 자활 컨설팅(소상공인진흥센터 연계)

③ 신복위(채무재조정), 신복기금(전환대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구직)로의 연결·알선

□ 미소금융지점의 사무실은 서민들의 접근성이 높고 임차 비용이 들지 않는 사무공간을 활용

* (예시) 전통시장 상가, 마을회관, 공공기관·민간단체의 여유허간 활용(고용지원센터 44개, 소상공인지원센터 57개, 지방상의 7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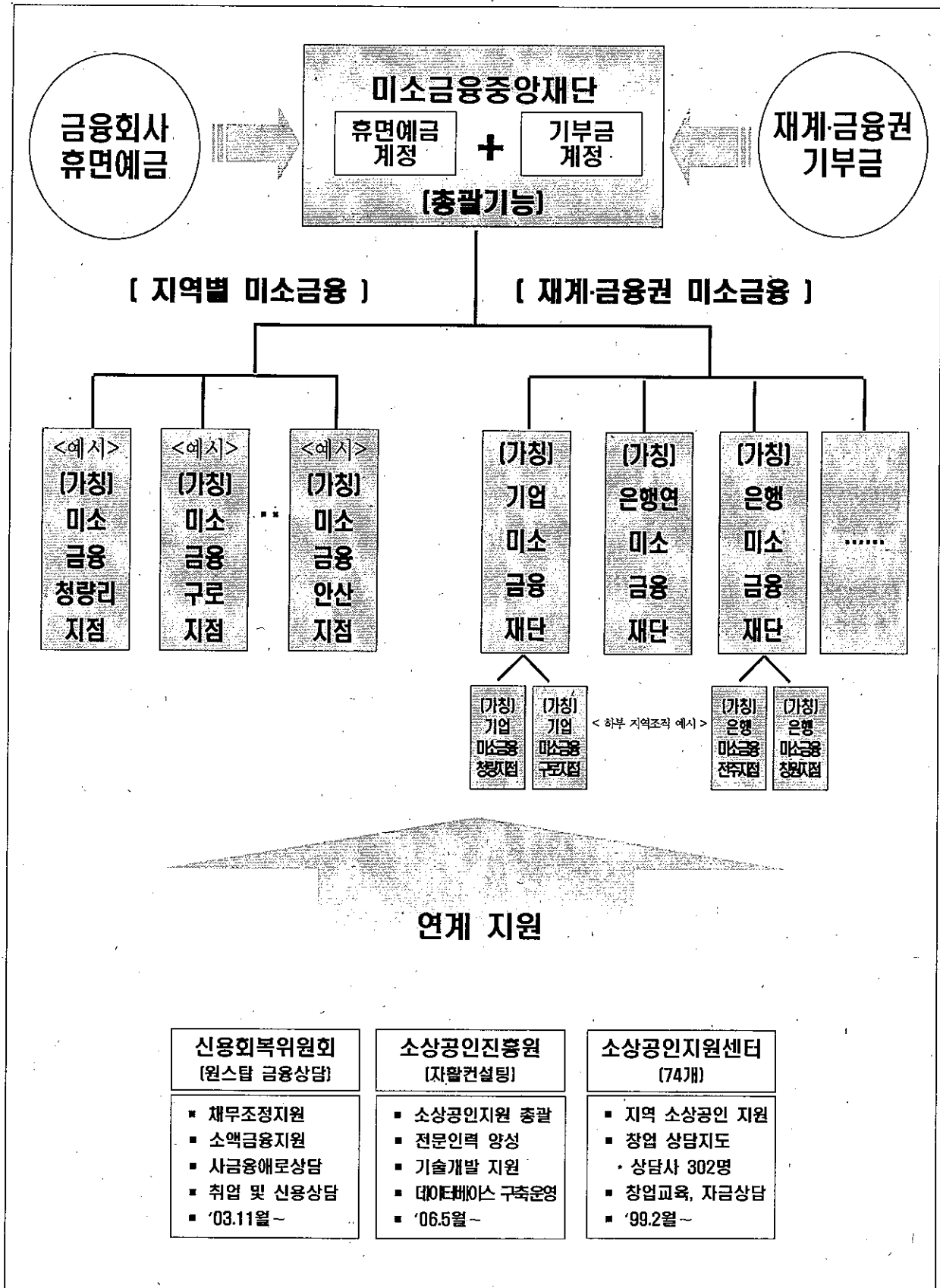
< 지역법인 업무절차 >



3. 재계·금융권의 자율적 미소금융사업 확산

- 재계·금융권 등이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이행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직접 설립·운영하는 재단을 미소금융중앙재단에 연계
 - 재계·금융권 등이 미소금융중앙재단에 지정기부한 자금은 재계·금융권 등이 설립한 개별 미소금융재단에 배분
 - 재계·금융권 등이 설립한 미소금융재단은 자율성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 운영
 -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사업모델 개발, 표준운영방안 제시, 정보제공, 교육훈련 등을 통해 개별 미소금융 사업을 지원하여 전체적인 미소금융사업간의 연계성을 강화
 - 재계·금융권 등 민간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미소금융중앙재단을 세법상 특례기부단체로 지정 추진

< 미소금융중앙재단 운영체계 >



4. 미소금융사업의 대상과 내용

가. 총괄

- ☐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중심이 되어 지원 대상·조건 및 지원 내용을 모델화하여 전체 미소금융사업 일관성을 제고
- ☐ 자활의지가 있으나 신용이 낮아, 제도권 금융회사 접근이 어려운 저신용층·영세자영업자·저소득층이 주요 지원 대상

< 지원내용(요약) >

	지원 내용	지원 조건
영세사업자 운영자금	영세사업자에 대해 원재료 구입, 시설 개·보수 자금 등 운영자금 지원	1천만원 이내 5년상환 시장금리 이하 (2~3% 낮은 금리)
전통시장 상인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영세상인 운영 자금 지원	상인당 5백만원 3년상환 시장금리 이하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검증을 받아 성공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업체를 연계하여 권리금 등 창업자금 지원	5천만원 이내 5년상환 시장금리이하
창업자금	창업을 하거나 기존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임차보증금 지원	5천만원 이내 5년상환 시장금리 이하
공동대출	자활추진단체에 대해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	1억원 이내 5년상환 시장금리 이하
사회적 기업	사회적육성기업법에 의해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에 대해 운영자금 등을 지원	1억원이내 5년상환 시장금리 이하

나. 사업별 세부지원내용

① 영세사업자 운영자금 : 영세사업자에 대한 원재료 구입·시설 개·보수 등 일시적으로 소요되는 운영자금을 지원

○ 지원조건 : 1천만원 이내, 5년분할상환, 시장금리보다 2~3% 낮은 금리(현시점 5%이하)

○ 소상공인진흥원 등의 경영진단 결과, 구조조정 및 취급 상품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필요자금을 지원

* 소상공인진흥원 :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혁신 교육, 컨설팅, 유망사업 안내 등의 지원서비스를 수행

② 전통시장 영세상인 대출 : 전통시장 상인회에 지원하여 상인회가 회원인 영세상인에게 운영자금 등을 대출

○ 지원조건 : 상인당 5백만원, 3년 분할상환, 시장금리보다 2~3% 낮은 금리

○ 현재 시행 또는 시행준비중인 서울시 및 6개 광역지자체를 포함하여 전국 16개 지자체로 확대

* (현재) 서울시 24개 시장(10억원) → (내년) 전국 약 200여개 시장(120억원)

③ 프랜차이즈 : 이미 시장에서 검증을 받아 성공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업체의 기술·브랜드 등을 창업희망자가 활용하여 창업시 권리금과 창업자금 등을 지원

○ 지원조건 : 일반적으로 소액(1천만원이내) 위주로 하되 최고 5천만원 이내, 5년분할상환(1년거치, 거치기간 무이자), 시장금리보다 2~3% 낮은 금리

○ 프랜차이즈 지원시 수혜자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되, 대출재원 보전을 위해 지역사업권 권리는 대출금 상환시까지 재단이 보유

④ 창업자금 : 본인의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고자 하거나 기존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증액이 필요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지원

- 지원조건 : 일반적으로 소액(1천만원이내) 위주로 하되 최고 5천만원 이내, 5년분할상환(1년거치, 거치기간 무이자), 시장금리보다 2~3% 낮은 금리

- 임차보증금 지원시 재단 명의로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대출금 회수 장치 마련

⑤ 공동대출 : 자활공동체 등 자활단체에 대해 수요 및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창업 및 운영자금을 지원

- 지원조건 : 1억원 이내, 5년 분할상환, 시장금리보다 2~3% 낮은 금리

- 대출재원 보전을 위해 지원단체 소속원 공동채무로 하거나 지원단체 대표가 연대보증

⑥ 사회적 기업 지원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인증된 사회적기업에 대해 운영자금 등을 지원

- 지원조건 : 1억원 이내, 5년 분할상환, 시장금리보다 2~3% 낮은 금리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을 지원

* 사회서비스 :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분야의 서비스로
①보육, ②예술·관광 및 운동 ③간병 및 가사지원 ④ 그밖에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인정하는 서비스

5. 자원봉사자의 적극 활용

□ 미소금융 지점별로 대표자가 주관하여 소요인력을 자체 모집

- 전국 300여개 지점의 소요인력(지점당 2~5명)을 선발시 금융회사 퇴직자, 청년 등 자원봉사자 위주로 모집

- 금융회사 퇴직자 등 경험많은 자원봉사자는 기간요원으로 하여 월 100만원이하의 보수를 지급

- 청년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실비 지급

- 대표자의 경우 무보수·명예직으로 하여 자원봉사 취지를 구현

□ 미소금융중앙재단이 기간요원 등 자원봉사자 교육 실시

- 금융관련 교육은 신용회복위원회, 자활지원 관련 교육은 소상공인진흥원과 연계하여 전문성 있는 위탁교육 실시

□ 일정기간 봉사한 청년에 대해서는 복지기관·금융회사 등 취업 희망시 우대

- 추천서 발급 : 복지기관, 금융회사 등 취업을 위한 서류 제출시 자원봉사 관련 추천서 발급

- 자활컨설팅 전문인력 교육지원 : 미소금융중앙재단의 전문 교육 이수를 거쳐 미소금융지점에 전문인력(RM)으로 파견

- 우수한 자원봉사자가 향후 지역단체 설립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

6. 재원 조달

□ 향후 10년간 총 2조원 이상의 기금 조성을 추진 (금년중 3천억원이상)

○ 재계(전경련소속 회원기업) 기부금 : 약 1조원 (금년중 약 1,000억원)

○ 금융권 기부금 : 약 1조원 이상 (금년중 2,000억원 이상)

· 금융회사 휴면예금 약 7천억원* (금년중 약 800억원) 출연

* '09년까지 누적출연 2,000억원 ('09년 800억원) + 향후 10년간 매년 약 500억원 규모 출연

· 은행 중심으로 2,500억원 이상 (금년중 700억원 이상) 출연

· 증권유관기관이 500억원(금년중 500억원) 출연

7. 자금 운용

□ 조달된 자금은 미소금융지점과 재계·금융권 재단의 미소금융 사업자금으로 활용

○ 휴면예금은 미소금융중앙재단 자체 지역사업에 사용

○ 재계·금융권의 기부금은 재계 및 금융권이 설립한 미소금융재단에게 다시 배분하여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에 자율적으로 직접 사용

□ 미소금융재단은 기존의 '휴면예금'과 '기부금'을 구분처리하여 재원운영의 투명성을 강화

IV. 기대 효과

①(저소득층의 자활지원) 자활의지가 있으나 신용이 낮아 제도권 금융회사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층·영세사업자·저신용층에 자활자금을 제도적으로 지원 가능

- 지난 10년간 1,480억원(연평균 148억원)이 조성·공급되었으나, 향후 10년간 2조원 이상(연평균 2천억원 이상)이 조성·공급되면 약 13배 이상 확대
- 향후 10년간 기존 제도금융권 밖 약 20만~25만가구* 이상의 저소득층이 미소금융사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

②(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 재계와 금융권이 저소득층의 자활 지원을 위한 자금을 기부하고, 재계 및 금융권이 직접 미소금융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이행

③(나눔·봉사문화 확산) 지점 대표자, 금융회사 퇴직자·청년 자원봉사자 등이 미소금융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또한, 기부와 봉사문화의 확산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도 나눔과 봉사에 대한 인식 전환 계기 마련

④(금융시스템의 보완·발전) 제도권 금융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고금리 사채 등 비제도권 금융시장을 대체함으로써 서민·영세자영업자의 금융 이용기회를 부여하고 부담도 경감

V. 추진 일정

☐ 사업 준비 ('09.9~11월)

- 소액서민금융재단을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개편(10월)
- 지역별 미소금융법인(미소금융지점) 설립준비 (9~11월)
-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 (10~11월)

☐ (1단계 사업) 미소금융 지점 설립 ('09.12~'10.5)

- 20~30개 수준의 미소금융지점 설립 추진
- 재계·금융권 미소금융재단도 준비를 마치는대로 설립 추진

☐ (2단계 사업) 지역별 네트워크를 200~300개로 확대 추진 ('10.6월~)

〈참고1〉 서민금융 지원현황

1. 개 요

-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저소득층 및 저신용층 등 서민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시행중

- ◆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
- ◆ 대부업체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면서,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적발·조치

2. 주요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비영리사단법인)의 신용회복 지원

- 금융회사 채무를 연체한 서민들에 대해 이자감면, 만기 연장 등 개인워크아웃 및 개인프리워크아웃을 지원

* '08년~, 개인워크아웃 120,410명, 개인프리워크아웃 4,561명 등 총 124,971명

- 신용회복기금(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 및 전환대출

- 신용회복기금을 설립('08.9월)하여 신용이 낮은 서민들에게 연체채무의 만기연장 등 채무재조정과, 대부업체 고금리(20%이상)를 은행권 금리(12%)로 전환해주는 전환대출(환승론) 시행

< 신용회복기금 지원실적 >

구분	채무재조정	환승론
건수	50,327 건	14,561 건
채권액	1,880 억원	1,430 억원

□ 소액서민금융재단(휴먼예금재단)의 마이크로크레딧

- 소액서민금융재단을 설립('08.3월)하여 저소득층 및 저신용층 서민에 대해 무보증 소액대출을 지원

- '08년, 빈곤아동 2천명 · 저신용자 4천명 등 1만여명과, 서울시 24개 전통시장 등에 총 271억원 지원

□ 제도금융권을 활용한 대출 지원

-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저신용 근로자 생계보증 대출 (5천억원 규모), 자영업자(무점포 포함) 특례보증(3.95조원 규모)

* '09.8월말 현재, 근로자 대출 167억원 / 자영업자 대출 2.8조원

- 14개 시중은행, 저신용자 전용대출 상품 판매(희망홀씨대출)

* '09.8월말 현재, 5,362억원 대출(10만여명)

- 재래시장 및 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2.0~3.5% → 2.0~2.2%)

□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 대책」(4.28 국무회의 보고) 시행

- 검·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 집중단속, 사금융 피해상당자에 원스탑서비스 제공(금감원) 및 소송지원(법률구조공단) 등

〈참고2〉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 현황

□ 재원별 조성 및 지원실적

(‘00년~’09.7월, 단위 : 억원)

재 원 출 처	조성금액	지원실적
민 간 기 부 금	512	343
재정(복지부,희망키움뱅크)	410	80
휴 면 예 금(소액서민금융재단)	501	337
지 자 체(서울시,희망드림뱅크)	60	12
합 계	1,483	772

* 민간단체의 전체 조성 및 지원금액중 재정(복지부), 지자체, 휴면예금으로부터의 지원금액을 제외한 순수 기부금(추정액)

□ 사업수행기관(민간단체) 현황

(단위 : 억원)

기 관	개시 연도	용도	재 원	지원액(누계)
신나는 조합	2000	창업 자금 사회적 기업 지원	100	45
사회연대은행	2002		250	208
아름다운세상기금	2003		50	12
함께일하는재단	2008		20	15.6
열매나눔재단	2003		30	15.5
창원지역 사회복지은행	2003		8	4
신나는 은행	2005		0.4	0.2
해피월드복지재단	2007		6	5.6
하나희망재단	2008		300	16
소상공인진흥원	2009		60	14.7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09		10	2.9
민생경제정책연구소	2009		10	1
민생포럼	2009		10	0.5
전통시장상인회	2008	생활 운영 자금	100	8.4
신용회복위원회	2006		373	362
한마음금융(자산관리공사)	2008		155.3	60.2
총 계	-	-	1,482.7	771.6

〈별첨3〉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미소금융사업 Q&A

2009. 9. 17

금 융 위 원 회

목 차

1. 미소금융사업의 내용은?
2. 미소금융사업의 추진 체계는?
3. 지역 미소금융법인 등의 설립시기 및 업무는?
4. 미소금융에서 취급하는 대출상품 내용은?
5. 자원봉사자는 어떻게 활용하나?
6. 미소금융사업의 기대효과는?

1. 미소금융사업의 내용은?

- ☐ 미소금융사업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곤란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Micro Credit)을 대폭 확대하여,
 - 금융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소외계층이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사업전반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 ☐ 그간 우리나라의 마이크로 크레딧 활동을 보면,
 - 2000년 이후 약 10년간 30여개의 민간단체가 재정, 지자체 예산, 소액서민금융재단자금, 민간 기부금을 재원으로 수행해 왔으나,
 - 전체 사업규모가 크지 않고 민간 추진기반이 취약하여 전달체계의 효율성이 낮으며, 사업자의 수도 적어 서민들의 접근성이 제한되는 등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 ☐ 이에 동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 200~300개의 미소금융법인을 설립하여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 재계·금융권 등의 기부금과 휴면예금 출연금을 재원으로 향후 10년간 총 2조원 이상의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 금융이용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자활의지가 있으나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층 및 영세사업자의 자활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미소금융사업의 추진 체계는?

□ 현재 금융회사가 출연한 휴면예금을 관리하는 소액서민금융재단을 (가칭)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개편하여,

* 소액서민금융재단은 「휴면예금관리재단법」에 의거 '08.3월 설립되었으며 휴면예금의 관리와 이를 통한 복지사업자 지원과 감독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임

○ 동 중앙재단이 앞으로 설립될 지역별 미소금융법인과 재계·금융권의 미소금융재단 등의 마이크로 크레딧 정책방향 및 사업 가이드라인 설정, 컨설팅, 교육, 정보의 통합관리 등 미소금융사업 전반에 걸쳐 총괄 기능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 지역별 미소금융법인은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전국의 영세상인 및 서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공개모집할 것이며,

○ 그 형태는 비영리사단법인(미소금융○○지점)으로 설립하여 중앙재단이 지원한 재원으로 해당 지역의 미소금융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 재계·금융권 등이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이행하기 위하여 직접 설립·운영하는 미소재단은 중앙재단으로부터 재원을 지원받아 자율성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 지역 미소금융법인 등의 설립시기 및 업무는?

- ☐ 지역 미소금융법인을 신설하는 작업은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 우선 '09.11월까지 지역 미소금융법인 모집 등 준비기간을 거쳐 '09.12부터 1단계로 20~30여개 정도의 지역별 법인을 설립하고,
 - 2단계로 '10.6월부터 전국에 걸쳐 지역 법인 설립 및 지부 확대 등을 통해 200~300개 수준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미소금융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 ☐ 지역별 미소금융지점의 주요업무는 자활자금지원 및 회수, 자활컨설팅 업무, 상담 등입니다.
 - 대출서류심사, 현장실사 및 면접심사 등 체계적인 심사절차를 거쳐 수요자 맞춤형 소액대출을 시행·관리하고,
 - 소상공인진흥원 소속 전문가(RM) 등의 지원을 받아 창업 및 경영컨설팅을 지원하며,
 - 소액금융상담, 신용관리상담 등의 상담업무와 채무재조정이 필요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연결시켜 주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 ☐ 참고로, 미소금융지점의 사무실은 서민들의 접근성이 높고 임차비용이 들지 않는 전통시장상가, 마을회관 등 여유사무공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4. 미소금융에서 취급하는 대출상품 내용은?

- ☐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지원 대상·조건 및 지원내용을 모델화하여 브랜드화한 대출상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 대출상품은 주로 자활의지가 있으나 신용이 낮아, 제도권 금융회사 접근이 어려운 저신용층·영세자영업자·저소득층을 위한 상품을 우선 제공할 예정입니다.

< 대출상품(요약) >

	지원 내용	지원 조건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검증을 받아 성공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업체를 연계하여 권리금 등 창업자금 지원	5천만원 이내 5년상환 시장금리 이하
창업자금	창업을 하거나 기존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임차보증금 지원	5천만원 이내 5년상환 시장금리 이하
운영자금	2년이상 영업자에 대해 원재료 구입, 시설 개보수 자금 등 운영자금 지원	1천만원 이내 5년상환 시장금리 이하
공동대출	자활추진단체에 대해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	3천만원~1억원 이내 3년상환 시장금리 이하
전통시장 상인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영세상인 운영 자금 지원	5백만원 1년상환 시장금리 이하
사회적 기업	사회적육성기업법에 의해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을 지원	6천만원~1억원이내 5년상환 시장금리 이하

5. 자원봉사자는 어떻게 활용하나?

- ☐ 미소금융 사업은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여 나눔·봉사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 ☐ 이를 위해 미소금융 지점별로 소요인력(지점당 2~5명) 선발시 금융회사 퇴직자, 청년 등 자원봉사자 위주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 대표자의 경우 무보수·명예직으로 하고, 금융회사 퇴직자 등 경험 많은 자원봉사자는 기간요원으로 양성하여 월 100만원이하의 보수를 지급하고, 청년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실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 ☐ 또한, 미소금융중앙재단은 기간요원 등 자원봉사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 금융관련 교육은 신용회복위원회, 자활지원 관련 교육은 소상공인진흥원과 연계하여 전문성 있는 위탁교육 실시할 예정입니다.
- ☐ 한편, 향후 일정기간 봉사한 청년에 대해서는 복지기관·금융회사 등 취업 희망시 우대하는 대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6. 미소금융사업의 기대효과는?

- ① (저소득층의 자활지원) 우선 자활의지가 있으나 신용이 낮아 제도권 금융회사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층·영세사업자·저신용층에 대해 자활자금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지원규모 면에서는 지난 10년간 1,480억원(연평균 148억원)이 공급되었으나, 향후 10년간 2조원 이상(연평균 2천억원 이상)이 공급되면 약 13배 이상 확대되는 효과가 있고,
 - 향후 10년간 기존 제도금융권 밖에 있는 약 20만~25만 가구* 이상의 저소득층이 미소금융사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②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 한편, 재계와 금융권이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자금을 기부하고, 직접 미소금융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이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③ (나눔·봉사문화 확산) 더불어 지점 대표자, 금융회사 퇴직자·청년 자원봉사자 등이 미소금융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 기부와 봉사문화의 확산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도 나눔과 봉사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자료 및 감사원 감사에 따른 조치사항

- 우리위원회 설립(08.3월) 이후 외부(감사원)감사결과는 '해당 사항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원이 09.5.28 ~ 7.17까지 금융위원회에 대해 실시한 감사결과는 감사원이 내부절차를 거쳐 처리중에 있음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내역(기관, 용역비용 명시)

□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내역 : 붙임 참조

<붙임>

정책연구용역 내역[2007~2009.현재]

□ 2007년 정책연구용역 목록

(단위 : 백만원)

과 제 명	용역기간	용역비	수행기관
기업 상장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07.7.24~07.10.8	22	한국증권연구원
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07.7.30~07.12.14	33.2	한국금융연구원
역외금융기관, 역외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 유형 및 대응방안	07.9.5~07.12.20	3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펀드판매 경로 개선 방안 연구	07.9.6~07.12.20	21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방안 연구	07.9.21~07.12.20	28.5	한국법제연구원
주요 선진국의 금융인프라 관련 제도 현황 조사	07.10.1~07.12.24	23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대응한 자금세탁방지 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07.10.5~07.12.20	28.5	삼정KPMG Advisory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07.10.5~07.12.20	3	한국기술교육대 산학협력단
홍콩사례를 중심으로 한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현황분석과 바람직한 해외진출 전략 모색	07.10.26~07.12.17	38	한국금융연구원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은행 지배구조 개선방안	07.10.05~07.12.31	30	한국금융연구원
우리나라 회계관련 제도의 평가와 향후 개선 방안	07.10.19~08.3.4	45	한국증권연구원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07.11.7~07.12.7	10	케이티지엘에스(주)
뉴욕, 런던시 등의 금융클러스터 조성 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연구	07.11.05~07.12.20	33	BHP코리아(주)
금융업 직무와 업무수행 역량분석	07.11.2~07.12.17	19	한국금융연구원
금융허브 육성을 위한 금융관련 행정의 국제화 방안	07.11.19~07.12.28	29	한국금융연구원
아시아 전자금융시장의 분석과 한국기업의 진출전략	07.12.18~08.2.17	30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어음제도 개선방안	07.2.1~07.4.30	14.3	한국금융연구원

□ 2008년 정책연구용역 목록

(단위 : 백만원)

과 제 명	용역기간	용역비	수행기관
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연구용역	08.7.4~08.10.3	30	한국금융연구원
외환시장 발전방향	08.7.11~08.8.29	19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미국 FinCEN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실태 연구	08.7.22~08.12.21	40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08.7.28~08.10.26	30	한국금융연구원
FTA, DDA 등 금융서비스분야 국제협상 법률적 검토 연구용역	08.8.1~08.12.24	40	법무법인(유) 태평양
단기금융시장 제도 개편에 따른 시장영향 분석	08.8월~08.9월 (2개월)	20	한국금융연구원
서브프라임사태이후 금융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개선 연구용역	08.8.6~08.11.4	46	(사)국제금융센터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 수준 제고를 위한 감독 검사 효율화 방안	08.8.13~08.12.12	40	언스트앤영어 드바이저리(주)
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08.7.28~08.11.20	22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개편	08.10.31~08.12.20	29.5	(주)사이버이메 지네이션
비명시적규제 개혁 외부평가	08.11.27~08.12.26	25.1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금융중심지 선정에 관한 금융전문가 의견 조사	08.12.12~08.12.29	19	한국개발연구원

□ 2009년 정책연구용역 목록

(단위 : 백만원)

과 제 명	용역기간	용역비	수행기관
금융상품 판매제도 도입에 따른 불완전 판매 방지방안	09.4.13~	30	자본시장연구원
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방안	09.3.16~12.15	45	한국금융연구원
국내 자본시장-외환시장 연계성 증가의 파급 효과 분석	09.6.1~8.31	20.5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위기 이후(Post-Crisis) 대비 금융감독체제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09.6.10~	40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수도권 광역금융벨트 조성 방안	09.5.13 ~	30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위탁보증 제도 개선방안 연구	09.6.1~8.3	28.8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 등 금융부문별 노동력 특성 분석 및 수급 전망	09.4.21~8.28	30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금융위기의 원인분석 및 시사점분석	09.7.16~10.15	35	한국금융연구원
금융투자산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09.8.5~12.2	32	자본시장연구원
테러자금조달 방지 체제의 선진화·국제화 방안 연구	09.8.28~12.31	35	아주대 산학협력단
금융위기이후 한국의 자본시장시스템 설계 방향	09.9.16~11.15	20	자본시장연구원

7. 최근 5년간 한국의 선진시장 편입과 관련하여
FTSE지수와 MSCI지수 편입에 따른 해당 기
관들의 금융시장 개선요구 사항과 금융위원회
가 이를 바탕으로 개선한 사항

□ FTSE · MSCI측 요구사항 및 개선사항

개선요구 사항	제도개선 사항
통합계좌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자집단 계좌제도 개선(0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인이 운영하는 외국인 투자자집단이 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대표투자자가 일괄하여 매매거래를 실행하고 사후에 자유롭게 매매결과를 배분할 수 있도록 허용
장외거래허용 사유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장외거래 허용사유 확대(05.4, 0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W 연계거래, 경쟁입찰, 외국법인 발행 교환사채의 교환 청구로 인한 증권의 취득, 법원의 인가 등에 의한 증권의 취득·처분 등의 경우 장외거래 허용 ○ 외국인 투자자집단내 공정가격으로 유가증권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장외거래 허용(07.12) ○ 실질적 소유자가 동일한 외국인간 증권 이전 허용(0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의 실질적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 투자등록된 외국인 명의의 다르더라도 이전을 허용
외국인투자등록 제도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관련 선물거래 투자등록 폐지(05.1) ○ 투자등록업무를 전산화하여 투자등록증 발급 소요기간을 단축(4일→4시간)(07.6)

8. 펀드판매시장 선진화의 일환으로 판매 보수·수수료 체계합리화를 위한 개선방안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

- 그간 금융위는 판매 보수·수수료*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장기투자할수록 보수가 체감하는 보수체계(CDSC** 프로그램)를 도입하는 등 판매보수 인하를 위해 지속 노력해왔습니다.

* 판매수수료 :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가입시 투자자가 부담(일회성)
판매보수 : 판매이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대가로 펀드에서 부담(계속)

** Contingent Deferred Sales Charge :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판매보수가 점점 인하하는 방식

- 펀드별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 비교·공시(자본시장법령)
- CDSC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표준약관 마련(협회규정)
- 보수·수수료에 대한 자필서명 및 펀드 판매이후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의무 신설(간투업감독규정)

- 그 결과 공모 주식형펀드의 평균 판매보수율*은 인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06말) 140bp → (07말) 123bp → (08말) 123bp → (09.5말) 125bp

** 08년 이후 신규 설정된 펀드의 NAV 가중 평균 판매보수율은 72.1bp

- 이에 정부는 투자자의 비용부담 완화 및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펀드투자 활성화를 위해,

-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 상한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09.9.29.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법제처 및 규제위 심사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

9. 2009년 한국증권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이후
금융위원회에서 거래소에 시정을 권고한 사항
또는 개선요구사항과 그에 따른 처리결과

- ☐ 거래소에 대한 시정권고 또는 개선요구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0. 국내 금융자격증 제도 현황

- 종류, 목적, 주관, 시험의 내용과 최근 3년간 응시자와 합격자 현황
- 2008년과 2009년 해당시험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모두 표시

A. 공정시장과

☐ 공인회계사와 관련하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증 명칭	주관 기관	취득 조건	시험 과목	제2차시험 응시자수	최종 합격자수	관련법
공인 회계사	금융위원회 (시험시행: 금융감독원)	일정 학점 이수*	· 1차: 회계학, 경영학, 경제 원론 상법 세법 개론, 영어 (토플 등으로 대체) · 2차: 재무 회계, 원가회계, 회계감사, 세법, 재무관리	· '09년: 3,173명 · '08년: 3,053명 · '07년: 2,706명	· '09년: 936명 · '08년: 1,040명 · '07년: 830명	공인 회계사법

*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 12학점, 경영학과목 : 9학점, 경제학과목 : 3학점

B. 금융정책과

□ 한국 FPSB 국가공인 민간자격 시행 현황

자격명	시행 시작 년도	실시 횟수	접수 인원	응시 인원	합격 인원	합격률	시험 응시 전형료	비고
AFPK (재무 설계사)	2007	9	108,510	84,880	23,931	28.2%	전과목응시 : 5만원 모듈1. 응시 : 3만원 모듈2. 응시 : 3만원	07년 6월 공 인 후 연 4회 시행중

C. 은행과

☐ 현재 공인 민간자격 시행 현황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공인 민간자격 시행 현황

한국금융연수원 공인 민간자격 시행 현황

(담당자 : 한국금융연수원 배유나 계장 3700-1645)

자격명	시행 시작년도	실시횟수	접수인원	응시인원	합격인원	합격률	시험응시전형료	비고
신용분석사	2002	14	6,933	4,653	991	21.3%	전과목응시 : 5만원 1부 응시: 2만원 2부 응시: 3만원	- 동일시험 2회 접수시 응시전형 료 30% 감면, 3 회 이상 접수시 응시전형료 50% 감면적용
여신심사역	2002	9	322	257	121	47.1%	전과목응시 : 5만원 1부 응시: 2만원 2부 응시: 3만원	
국제금융역	2002	7	940	560	141	25.2%	전과목응시 : 5만원 1부 응시: 2만원 2부 응시: 3만원	
신용위험분석사 (CRA)	1차	7	3,457	1,967	920	46.8%	6만원	
	2차	7	1,170	861	123	14.3%	7만원	
자산관리사 (FP)	2002	16	49,030	31,250	7,375	23.6%	전과목응시 : 4만원 1부 응시: 2만원 2부 응시: 2만원	
계		60	61,852	39,548	9,671	24.5%		

* 신용위험분석사(CRA)자격은 1차시험 합격후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2차시험 합격자가 최종합격자임.

신용정보협회 공인 민간자격 시행 현황

(담당자 : 신용정보협회 기경민 국장 3775-2761)

자격명	시행 시작년도	실시횟수	접수인원	응시인원	합격인원	합격률	시험응시전형료	비고
신용관리사	2006	6	27,675	15,899	4,556	28.7%	06년 30000원, 07년 35000원, 08년 40000원	06년 공인후 연2회 시행중

D. 자본시장과

□ 현행 금융투자협회 자격시험 종류 및 주요 업무

구분	자격명	주요 업무
투자 권유	증권펀드투자상담사	증권펀드 및 MMF에 대한 투자권유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파생상품펀드에 대한 투자권유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부동산펀드에 대한 투자권유
	증권투자상담사	증권 투자권유
	파생상품투자상담사	파생상품 투자권유
관리	투자상담관리사	금융투자회사 지점 등에서 투자상담사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운용	일임투자자산운용사	투자일임재산 운용(투자일임업)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집합투자재산, 신탁재산을 금융투자상품등에 운용(펀드매니저)
분석 평가	금융투자분석사	조사분석자료 작성 또는 심사승인(애널리스트)
	재무위험관리사	금융투자업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증권분석사	기업 가치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평가

※ 모두 금융투자협회 주관

□ 최근 3년간 응시자 및 합격자 현황

(단위 : 명)

연 도	자격증명칭	응시인원	합격인원	합격률
'07	증권투자상담사	24,087	6,663	27.7%
'08		51,886	15,344	29.6%
'09 ¹⁾		30,999	9,995	32.2%
'07	파생상품투자상담사	13,293	5,252	39.5%
'08		16,720	7,265	43.5%
'09		15,579	2,657	17.1%
'07	일임투자자산운용사	11,859	1,824	15.4%
'08		18,281	3,715	20.3%
'09		6,387	1,918	30.0%
'07	집합투자자산운용사	4,433	716	16.2%
'08		7,298	2,117	29.0%
'09		3,231	1,117	34.6%
'07	재무위험관리사	1,221	213	17.4%
'08		1,435	297	20.7%
'09		1,688	386	22.9%
'07	증권분석사(1차)	112	61	54.5%
'08		95	55	57.9%
'07	증권분석사(2차)	52	37	71.2%
'08		49	23	46.9%
'07	증권펀드투자상담사	10,311	6,253	60.6%
'08		84,961	42,771	50.3%
'09		57,951	20,519	35.4%
'09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97,748	70,265	71.9%
'09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88,204	59,457	67.4%
'09	투자상담관리사	34	23	67.6%
'09	금융투자분석사	638	63	9.9%

1) 09.1 ~ 9.17월까지

※ 자료제공 : 금융투자 협회

□ 시험명칭 변경 현황

통합후 자격 (09년)	통합전 자격 (05년~08년)	신설 사유
증권펀드투자상담사	간접투자증권 판매인력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자격신설)	펀드불완전판매예방 종합대책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자격신설)	펀드불완전판매예방 종합대책
증권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선물거래상담사	
투자상담관리사	(자격신설)	금융투자 전문인력 자격제도 개선방안
일임투자자산운용사	금융자산관리사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운용전문인력	
금융투자분석사	조사분석담당자(시험신설)	금융투자 전문인력 자격제도 개선방안
재무위험관리사	재무위험관리사	
증권분석사	증권분석사	

11. 2008. 1. 1~2009. 8.31 징계 받은 소속 직원 현황

1. 2008. 1. 1~2009. 8.31 징계 받은 소속 직원 현황

성명	직급	징계사유	처분결과	처분일시	비위적발경위
○○○	서기관	음주운전	견책	09.02.27	경찰 통보
○○○	서기관	청렴의무위반	감봉2월	09.03.23	감사원 통지
○○○	사무관	음주운전	견책	09.03.23	경찰 통보

12. 2008.9.1 ~ 2009.8.31 금융위원회에 문서로 접수된 민원 중 법령 등 제도개선 요망사항과 소속직원 업무처리 부적절 등 지적사항과 이들 민원에 대한 조치사항

□ 2008.9.1 ~ 2009.8.31 금융위원회에 문서로 접수된 민원 현황

- 금융위원회에 문서로 접수된 민원은 총 642건, 이 중 제도개선 요망사항은 54건, 소속직원 업무처리 부적절 지적사항은 0건

(2008.9.1 ~ 2009.8.31 접수기준)

	제도개선 요청	소속직원 업무처리 관련	합계
민원 건수	54건	0건	54건

□ 제도개선 요청민원에 대한 조치사항

(2008.9.1 ~ 2009.8.31 접수기준)

조치사항	민원 건수
이미 개선된 사항 또는 현행제도 안내	37건
제도 개선 진행 중	3건
제도개선 곤란 (정부 관여 불가, 개선 수용시 부작용 우려 등)	14건
합 계	54건

고승덕 의원(한나라당)

(행정인사과 사무관 김제동 2156-9562)

13. '08.9.1. - '09.08.31. 금융위원회의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이 수의계약 일체

14. 해외 근무 직원의 자녀 학비 보조 내용

☐ '08.9.1. ~ '09.08.31. 금융위원회의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이
수의계약 일체

- 해당사항 없음

☐ 해외 근무 직원의 자녀 학비 보조 내용

- 해당사항 없음

15. 귀 기관이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 한 예산절감 계획과 실제 이행상황

□ (구) 금감위 시절 기본경비 및 사업비 10% 절감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금융위(구 금감위+재정부 금정국 등) 예산기준으로 재수립

○ 금융위 출범 후 예산절감 계획 및 이행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8예산액	절감계획	실제절감액	절감계획 대비 실제계획(%)	비 고
계	150,060	2,305	3,247	140.9	
인건비	14,203	558	558	100%	
기본경비	4,396	440	441	100.2	
사업비	131,461	1,307	2,248	172.0	

※ 금융위 출범(08.3)이후, 기재부의 예산 10% 절감 추진지침(08.3.11)에 따라 수립한 절감계획과 이에 따른 이행결과임

공 성 진 의 원

1. 최근 10년간 금융기관 부실경영으로 인해 금융위원회의 제재(처벌)을 받은 사례

A. 은행과

□ '00.12월 이후 금융기관 부실경영으로 인해 금융(감독)위원회의 제재(처벌)를 받은 사례는 다음과 같음

번호	일시	사	사
1	'00.12.16	한빛은행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예금보험공사 앞 출자요청
2	'00.12.16	서울은행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예금보험공사 앞 출자요청
3	'00.12.16	평화은행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예금보험공사 앞 출자요청
4	'00.12.16	광주은행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예금보험공사 앞 출자요청
5	'00.12.16	제주은행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예금보험공사 앞 출자요청
6	'00.12.16	경남은행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예금보험공사 앞 출자요청
7	'00.12.16	한빛은행	자본금감소 명령
8	'00.12.16	서울은행	자본금감소 명령
9	'00.12.16	평화은행	자본금감소 명령
10	'00.12.16	광주은행	자본금감소 명령
11	'00.12.16	제주은행	자본금감소 명령
12	'00.12.16	경남은행	자본금감소 명령
13	'05.3.2	하나은행	영업 일부정지(보험 부당모집)
14	'05.7.28	도이치은행	임원 업무집행정지(파생상품거래업무 부당취급)
15	'05.11.15	국민은행	영업 일부정지(은행자금 횡령 등)
16	'05.11.15	조흥은행	영업 일부정지(은행자금 횡령 등)
17	'06.11.1	농협	영업 일부정지(고객예금 횡령 등)
18	'08.4.15	스테이트 스트리트	영업일부정지, 임원 업무집행정지(외국환포지션한도 위반 등)

B. 자산운용과

일자	회사명	조치구분	조치내용	조치사유
2009.7.29.	국제신탁(주)	적기시정조치 (경영개선명령)	가. 자본금의 증액 나. 영업용순자본감소행 위의 제한 다. 상기 조치를 반영하여 2009.10월말까지 영업 용순자본비율을 150%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개선 계획을 조치일로부터 1월 이내에 금융감독 원장에게 제출할 것	영업용순자본 비율(NCR) 기준 미달

C. 중소기업금융과

번호	회사명	조치일	종류
1	(서울)한중	'05.1.13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2	(부산)플러스	'05.1.27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3	(부산)인베스트	'05.7.21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4	(경기)좋은	'06.9.8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5	(전남)대운	'07.1.19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6	(전남)홍익	'07.3.16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7	(경북)경북	'07.5.25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8	(경기)분당	'08.2.21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9	(전북)현대	'08.3.24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10	(전북)전북	'08.12.26.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11	(제주)으뜸	'09.8.11.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 부실경영 관련 임직원 제재 현황은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할 예정임

□ '00.12월 이후 금융기관 부실경영으로 인해 금융(감독)위원회의 제재(처벌)을 받은 사례는 다음과 같음

번호	일시	기관명	사례
1	'01. 8.31	신협중앙회	신협중앙회 경영개선명령
2	'04. 3.26	신협중앙회	신협중앙회 경영개선명령
3	'06.11.10	신협중앙회	신협중앙회 경영개선명령
4	'08. 7.11	면곡신협	직무정지3월(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5	'08. 7.11	부산택시신협	직무정지3월(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6	'08. 7.11	경남자동차신협	해임권고(결산업무 부당처리)
7	'08. 7.25	설악신협	직무정지3월(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8	'09. 7.29	성산포신협	직무정지3월(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2. 중소기업금융 중 설비투자확대를 위한 최근 10년간의 연도별 정책 및 정책에 대한 세부 업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 등

□ 정부는 국책금융기관을 통한 중소기업의 시설투자를 꾸준히 지원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도모

① 국책은행

- (산은) '03년부터 전략적 육성 분야에 특별시설자금을 지원해 왔으며, '09년에는 녹색산업 육성, 성장동력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서비스산업 지원 등 6개 분야에 특별시설자금* 중점 지원

* 우대금리 적용 : 중소기업 0.5% 및 대기업 0.3% 감면

- (기은) 매년 부품·소재기업, 중소벤처기업,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09년의 경우 신성장동력산업*(녹색산업)의 시설자금 지원 강화

* 녹색성장기업 시설자금 대출시 금리 0.5% 감면

국책은행 연도별 중소기업 시설자금 지원 실적

(단위 : 억원)

구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8.8	'09.8
산은	10,818	10,638	14,805	15,156	14,882	15,301	17,607	26,754	36,622	23,397	18,783
기은	19,914	21,728	36,713	35,225	40,712	52,100	72,069	85,268	90,647	52,817	53,390
합산	30,732	32,366	51,518	50,381	55,594	67,401	89,676	112,022	127,269	76,214	72,173

주) 중소기업 원화+외화 기준

② 보증기관

- 신기보는 사업장 신축, 공정자동화 및 시설증설 등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특례보증을 도입('01.7)하여 지속적으로 지원중
- 일반보증보다 보증한도(30→100억) 및 보증비율(전액해지 조건일 경우 100% 전액보증 등)을 우대하여 지원

보증기관 연도별 중소기업 시설자금 지원 실적

(단위 : 억원)

구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8.8	'09.8
신보	6,265	7,115	13,114	19,031	24,820	22,589	28,718	29,997	23,901	15,702	13,606
기보	8,391	7,983	5,997	7,775	4,428	3,930	9,643	13,018	13,020	9,099	11,141
합산	14,656	15,098	19,111	26,806	29,248	26,519	38,361	43,015	36,921	24,801	24,747

- 최근에는 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책은행 중심의 특별 설비투자펀드*를 조성·운용 중이며

* 산은 1.4조원(정책금융공사 0.8조원 포함), 기은 0.6조원 등 2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 특히, 기은은 기술력이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투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

⇒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그간의 조치는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 및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판단

3. 2004년 이후 재경부 및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우리은행에 내려진 내·외부 주의 요청 및 경고 현황 및 내용

- 은행법령상 은행(기관)에 대한 제재조치*는 관련법령 위반수준에 따라 (i) 영업 인·허가 취소, (ii) 영업 일부정지, (iii) 영업점 영업 정지, (iv) 기관경고, (v) 기관주의 등이 있으며,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17①

- 이 중에서 기관경고 및 기관주의는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 관한규정(§17②)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
- 우리은행의 경우 최근 3년간 3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이 기관경고한 바 있음

* 기관경고 3회 내역 : (i) 2008.2월 “신용등급 상향조정 · 금융실명제 위반 · 타회사 주식 20% 초과 담보취득”, (ii) 2009.5월 “우리파워인컴펀드 부당 광고”, (iii) 2009.9월 “과도한 외형확대목표 설정 및 무분별한 고위험 구조화 상품(CDO · CDS) 투자, 사후관리 부당취급으로 거액 손실 초래”

- 한편, 은행법령상 개별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과징금 ·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으며, 2004년 이후 우리은행에 대해 아래 4건에 대해 과징금 등을 부과

일 시	위반사항	조치내용
'05.2.25	대출과 연계한 보험상품 부당판매	과태료(1,000만원)
'08.2.22	다른 회사 발행주식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 부당 취급	과징금(29.92억원)
'09.9.9	동일 금융지주회사 소속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 공여시 담보확보 의무 위반	과징금(594백만원)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시 이사회 결의 의무 등 위반	과태료(37.5백만원)

4. 최근 5년간 금융자격증 신설 및 폐지 현황 및 근거, 향후계획

< 신설 및 폐지 현황 >

☐ 최근 5년간 자격증 신설 현황

자격명칭	신설 일자	신설 근거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09.2.4	자본시장법 286조 금감원 펀드불완전판매예방 종합대책(08.11.25)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09.2.4	자본시장법 286조 금감원 펀드불완전판매예방 종합대책(08.11.25)
특별자산펀드투자상담사	'09.2.4	자본시장법 286조 금감원 펀드불완전판매예방 종합대책(08.11.25)
전문투자자상담사	'09.2.4	자본시장법 286조
투자상담관리사	'09.2.4	자본시장법 시행령 307조 금감원 금융투자 전문인력 자격제도 개선방안(06.12.27)
금융투자분석사	'09.2.4	자본시장법 286조 금감원 금융투자 전문인력 자격제도 개선방안(06.12.27)
자산평가분석사	'09.2.4	자본시장법 시행령 285조
집합투자재산평가사	'09.2.4	자본시장법 시행령 285조, 307조
집합투자재산계산사	'09.2.4	자본시장법 시행령 276조, 307조
집합투자기구평가사	'09.2.4	자본시장법 시행령 280조, 307조

☐ 최근 5년간 자격증 폐지 현황 : 해당 사항 없음

< 향후 계획 >

☐ 금융투자협회의 자격제도개편안('09.9.30 보도,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람

<별첨> 금융투자협회의 자격제도개편안('09.9.30 보도)

보 도 자 료 / '09.9.30(수) 조간부터 보도바랍니다.

작성부서 자율규제기획부 규제기획팀(☎2003-9377, 387, 388)	
책 임 자 이정수 이사 (☎2003-9370)	담 당 자 허 욱(☎2003-9377)
배 포 일 2009. 9. 29(화)	배포부서 홍보실(☎2003-9311~6)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제도 개편 예고

I.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 자율규제위원회(위원장 안광명)는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제도 시행('09.2월) 후 발생한 일부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자격제도 개편방안을 마련 10.16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임

* 자격제도의 지나친 세분화('09.2월전 11개 ⇒ 20개)로 인해 혼합펀드, CMA 등 단일 상품에 다수 자격이 요구, 상품에 대한 단편적 지식 습득으로 투자자보호상 문제 발생, 자격취득기간의 장기화, 자격명칭구분 곤란 등 문제점 발생

- 동 개편안은 업계, 학계, 법률전문가, 금투협 등이 공동으로 TF를 구성('09.4월), 6개월간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 현행 자격제도 관련 규정과 영업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해외 사례를 zero-base에서 재검토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였음
- 회원사 임직원 및 시험준비자의 많은 관심과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자 함

* 이메일(sro@kofia.or.kr), Fax(02-782-2302), 우편(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 회원사 대상 설명회 개최(10.8일 15시 금융투자협회 3층 볼스홀)

- 향후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자율규제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임

II. 주요 개편 내용

< 기본 방향 >

◆ 자격제도는 단순·명료화하되 투자자보호는 강화

- 자격제도와 시험을 통합하여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전문성을 향상
- 보수교육 실효성 제고 및 직업윤리 관련 평가 선진화 등을 통한 자격자 관리체계 강화

◆ 자격시험 세분화에 따라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

- 유사시험간 통합을 통해 중복평가 요소를 제거하고, 자격취득기간을 단축
- 자격시험 유효기간 도입으로 학생 등 일반인의 과도한 응시를 제한

⇒ 금융투자상품은 펀드, 증권(펀드 제외), 파생상품으로 구분, 규제대상업무는 투자권유자문, 투자자산운용, 조사분석, 위험관리, 영업인력관리자로 구분

※ 전문인력종류 기존 20개 ⇒ 7개, 시험종류 기존 11개 ⇒ 6개
(존치 전문인력 및 시험은 붙임 설명자료(p.4) 참조)

가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간 통합

1 펀드투자상담사 자격 및 시험 통합

- 현행 4개인 펀드투자상담사 자격(시험은 3개)을 단일화

* 자격은 증권·부동산·파생·특별자산펀드투상 4개며 증권·부동산·파생펀드투상(3개)은 개별 시험으로 특별자산펀드투상은 교육으로 자격 부여

- 금융당국의 펀드불완전판매대책('08.11월 발표) 취지와 영업현실의 어려움을 감안, 시험은 통합하되 시험수준은 강화(100문항/120분)* 하는 것으로 판매인력의 전문성이 더욱 향상** 될 것으로 기대

* 기존 3개 펀드시험 단순합산시 130문항이나, 고객관리·법규 등 중복부분이 50% 수준으로 이를 제외시 100문항은 평가수준이 강화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권위있는 자격시험으로 기능할 수 있음

** 증권펀드라도 파생상품이나 부동산, 특별자산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 펀드 자산별 구분학습은 단편적 지식습득에만 그칠 우려가 있어 전체 펀드자산 통합학습을 통해 판매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

② 투자자산운용사(펀드매니저) 자격 및 시험 통합

- 시험평가내용과 업무가 유사한 일임투자자산운용사와 집합 투자자산운용사 자격 및 시험 통합

③ CMA 투자권유자격의 단일화

- CMA투자권유시 증권투자상담사(RP형), 증권펀드투자상담사(MMF형) 등 다수 자격이 요구되나, 시험평가보완 등을 통해 증권투자상담사로 단일화

나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 또는 시험 폐지

① 투자상담관리사시험을 폐지하고 교육을 강화하되, 등록범위는 규제공백상태인 겸영 금융투자회사로 확대

- 등록인력 대상자를 현행 지점장에서 향후 금융투자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지점별 투자권유자문관리인력을 선정, 금투협에 등록
- 별도 시험은 폐지하는 대신 펀드·증권·파생상품투상 자격을 취득한 인력을 등록요건으로 하되, 등록자에 대하여 등록교육 및 연1회 보수교육을 의무화

- 자본시장법의 동일기능 동일규제원칙에 따라 은행, 보험사, 자산운용사, 선물사 관리인력도 신규 등록하되
- 금융투자업 일부만 영위하는 전업 또는 겸영사임을 감안, 취급 금융투자상품의 자격취득자(펀드, 파생 등)로 등록교육(회사별 자체교육 인정)을 통해 금투협에 등록

② 집합투자기구관계회사인력 등록제도 폐지 건의

- 현행 4개인 집합투자기구관계회사 인력(펀드평가, 채권평가, 펀드사무관리인력)을 금투협 등록·관리인력에서 제외

③ 투자자문·일임·신탁계약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등록 요건 현실화

- 투자자문·일임·신탁계약을 투자권유하는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운용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 적용되고 있어 이를 투자권유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변경

* 펀드투자권유대행인 또는 증권투자권유대행인이 해당 계약 투자권유 가능

다 자격관리체계 내실화

① 보수교육제도 내실화 추진

- ① (50% Rule 도입) 교육과목 중 직무윤리 및 법규 개정사항을 포함한 신규제도 내용을 50% 이상 포함
- ② (보수교육 관리·주기)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인력 관리위원회에 보수교육 개선 및 승인권 부여, 보수교육 주기는 2년 통일(투자상담관리인력은 1년 주기)

③ (장기과제: 실무교육제도 개선) 금투협은 상품·내부통제 등 교육에 대해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하고 회원사가 자체교육을 1년 주기로 실시

② 향후 외부전문가의 연구용역을 통해 '금융투자전문인력 윤리강령 및 기준'을 제정하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에 5% 이상 반영

③ 일반인의 과도한 응시를 제한하고, 임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해외사례(미국 2년)를 참고, 자격시험 유효기간(5년)을 도입

※ 기존 시험합격자와 시험합격 후 5년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된 인력은 유효기간 적용 면제

리 기타 자격제도 개편사항

① 금융투자분석사(애널리스트) 경력요건을 대폭 확대*

* (현행) 시험 또는 외국 금투회사 2년 이상 조사분석업무 종사 ⇨ (개편) 시험 또는 국내외 금투회사 1년 이상 조사분석자료 작성·보조업무 종사자 등 4개의 경력요건으로 확대

② 채무증권 투자권유 은행원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되, 별도 시험없이 등록교육(채무증권 투자권유업무 영위 은행의 자체교육 인정)을 통해 금투협 등록

③ 금융당국의 파생상품감독강화방안('08.12월)을 반영 파생결합증권 투자권유자를 기존 증권투상에서 파생상품투상으로 변경하되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증권은 증권투상이 투자권유토록 개편

④ 펀드투상 시험 응시를 위한 사전 판매교육(30시간) 의무화는 사회적 비용 등을 감안 폐지, 등록교육*으로 전환(15시간)

* 부동산·특별자산펀드, 불완전판매, 분쟁사례 등을 교육내용에 충분히 반영

※ 붙임.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제도 개편안 설명자료

(붙임)

Press Release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제도 개편안 설명자료**

2009. 9. 29

금융투자협회
Korea Financial Investment Association



I. 개 편 배 경

□ 자본시장법이 시행('09.2월)되면서 금융투자산업과 자본시장이 향후 우리나라의 성장 엔진으로 기능하도록 기대하는 상황

- 금융투자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의 육성이 요구

□ 금투협은 자본시장법령에 의거 금융투자업 주요직무 종사자의 등록* 및 관리업무(법§286①)를 수행

- * 금투협은 등록요건으로 시험 또는 경력요건을 규정화하여 시행중이며, 시험운영근거는 자본시장법령(령§56·§285는 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운용인력, 증권분석전문인력 관련 협회시험 시행을 명시) 및 舊 증권거래법(투자상담사), 舊 증권투자신탁업법(운용전문인력)에서 명시

- 금융투자회사는 동법에 의거 투자권유 등 업무 수행시 금투협이 등록·관리하는 전문인력을 통한 영업행위가 의무화

- * 매매·중개업자(법§71)는 투자권유시, 집합투자업자(법§85)·신탁업자(법§108)는 자산운용시 투자자문업자·투자일임업자(법§98)는 해당업 수행시

□ 한편 '09.2월 이후 법정 전문인력 증가, 불완전판매 예방, 투자자 보호 강화 등으로 자격이 세분화되면서 전문인력·시험 수가 증가

- * 전문인력 (종전 11개 ⇒ 20개, +9개), 자격시험 (종전 7개 ⇒ 11개, +4개)

- 이에 혼합펀드, CMA 등 단일 상품에 다수 자격이 요구되고 자격취득기간이 장기화되며 자격간 명칭구분이 용이하지 않은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음

⇒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제도의 문제점을 치유하되, 건전한 전문인력 양성이란 근본 취지에도 충실하도록 자격제도 재정비 필요

II. 해 외 사 례

☐ 자격 및 시험종류 비교

구 분		자격종류 (관리자)	시험종류 (관리자)
미 국	FINRA	18 (10)	24 (12)
	NFA	2 (1)	5 (0)
		20 (11)	29 (12)
홍 콩		16 (8)	10 (4)
일 본		15 (9)	8 (2)
한 국		20 (1)	11 (1)

☐ 자격제도를 일반증권과 파생상품을 기본으로 구분 · 운영

- 이를 각 국가별 특성을 반영하여 세분화(미) 또는 단순화(홍, 일), 홍콩은 증권 · 파생 외 주요업무(IB, 자산운용 등) 자격을 운영

☐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실무자의 업무수행을 감독하는 관리자에 대한 자격을 세분화하고 시험 실시

☐ 마스터 시험(미), 모듈화 시험(홍), CBT(미, 일, 홍) 시험 제도를 활용하여 제도운영의 유연성을 확보

☐ 윤리 · 실무 관련 보수교육은 금융기관 자체교육으로 운영(미, 홍)

< 시사점 >

☐ 국내 펀드판매 전문인력은 4개로 해외사례(미 펀드판매 1개, 일 · 홍은 별도 자격 없음) 대비 세분화되어 있으며,

- 국내 관리자 자격은 1개로 해외사례(미 11개, 홍 8개, 일 9개)와 비교시 단순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반면,

- 관리자를 제외한 전문인력자격(19개) 및 자격시험(10개) 수는 해외사례와 비교시 자격을 세분화하여 운영중

Ⅲ.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종류 [현행 vs. 개편]

□ 자격종류 20개 ⇒ 7개, 시험종류 11개 ⇒ 6개

- ※ (통폐합자격) 펀드투자상(4개⇒1개), 투자자문상담사·전문투자자상담사는 투자상담사 통합 운영, 부동산·사회기반시설운용사⇒투자자산운용사로 통합운영
- ※ (폐지자격) 자산평가분석사, 집합투자재산평가·계산사, 집합투자기구평가사
- ※ (시험폐지) 투자상담관리사 시험, (시험통합) 펀드투자상(3개⇒1개), 운용시험(2개⇒1개)

구 분	현 행		개 편		비 고
	자격명칭	자격부여	자격명칭	자격부여	
투자권유 자문인력	①증권펀드투자상담사	시험, 경력	①펀드투자상담사	시험	시험 통합
	②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시험 (①⑥소유자면제)			
	③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시험			자체교육
	④특별자산펀드투자상담사	교육			
	⑤증권투자상담사	시험	②증권투자상담사	시험	현행유지
	⑥파생상품투자상담사	시험	③파생상품투자상담사	시험	현행유지
	⑦투자자문상담사	시험, 경력 (⑩시험동일)	① or ② or ③ (투자자문업무만 가능)	운용시험, 경력	투자상담사 포괄운영
	⑧전문투자자상담사	시험, 경력 (⑤⑥시험동일)	① or ② or ③ (전문투자자 투자권유만 가능)	경력	투자상담사 포괄운영
투자권유자문 관리인력	⑨ 투자상담관리사	시험, 경력	④투자상담관리인력	①②③ 전부 취득	별도 시험폐지
투자운용인력	⑩일임투자자산운용사	시험, 경력	⑤투자자산운용사	시험, 경력	시험 통합
	⑪집합투자자산운용사	시험, 경력			
	⑫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경력, ⑪시험+교육	투자자산운용사 (부동산)	경력, 교육	
	⑬사회기반시설 투자자산운용사	경력, ⑪시험+교육	투자자산운용사 (사회기반시설)	경력, 교육	
조사분석인력	⑭금융투자분석사	시험, 경력	⑥금융투자분석사	시험, 경력	경력요건 확대
증권분석 전문인력	⑮자산평가분석사	시험, 경력 (⑭시험동일)	채권평가인력	경력	시행령 개정이전 개선명칭 사용하되, 시행령 개정 후 자격폐지
집합투자재산 평가전문인력	⑯집합투자재산평가사	시험, 경력 (⑭시험동일)			
집합투자재산 계산전문인력	⑰집합투자재산계산사	경력	펀드사무관리인력	경력	
집합투자기구 평가전문인력	⑱집합투자기구평가사	경력	펀드평가인력	경력	
위험관리 전문인력	⑲재무위험관리사	시험	⑦재무위험관리인력	업무영위 (시험합격자비등록)	자율시험
증권분석사	⑳증권분석사	시험	현행유지	비등록	자율시험

IV. 제도개편 이후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요건

□ 금융투자분석사 경력요건이 대폭 확대(현행 외국 금투회사 2년 근무)되고, 투자상담관리인력 등록요건을 완화*

* 투자상담관리사 시험 합격 또는 증권·파생상품·증권펀드투상시험 전부 합격+10년 근무 ⇒ 증권·파생상품·(증권)펀드투상시험 전부 합격

전문인력		등록요건	
		시험·교육요건	경력요건
투자 상 담 사	①펀드투자상담사	펀드투자상담사시험 + 등록교육	(없 음)
	②증권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시험 + 등록교육	(없 음)
	증권투자상담사 (은행취급채무 증권제한)	등록교육(은행 자체 교육 인정)	
	③파생상품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시험 + 등록교육	(없 음)
	전문투자자에게만 투자권유하는 경우 투자자문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금융투자업 경력이 1년이상일 경우 등록교육 후 업무영위 가능 [예: 증권투자상담사(전문투자자 상담업무에 한정)]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요건을 갖추는 경우 업무영위 가능	
④투자상담관리인력		해당 지점에서 투자권유가능한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투자상담사 시험에 모두 합격+등록교육(은행, 보험 등은 자체교육 인정)	
⑤ 투 자 자 산 운 용 사	투자일임인력 또는 증권운용인력으로 등록하는 경우	투자자산운용사 시험 + 등록교육	① 금융기관 등에서 3년 이상 근무 + 2년 이상 증권운용전문업무 종사 ② 경영학 등 증권관계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금융위 인정 교육과정 이수자+2년 이상 증권운용전문업무 종사 ③ 공인회계사 + 2년 이상 증권운용전문 업무 종사 ④ 집합투자업 신탁자산운용업을 하는 외국금융 기관 (운용자산규모10조원이상 2년이상 증권 운용전문업무 종사

전문인력	등록요건	
	시험·교육요건	경력요건
		* 증권운용전문업무 : 집합투자재산(신탁 재산 포함) 운용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고유재산 또는 기금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
부동산운용인력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산운용사 시험+부동산투자운용 교육	① 감정평가사로서 관련 분야 5년 이상 종사 ② 부동산 석사 또는 금융위 인정 교육 + 부동산운용업무 3년 ③ 외국 부동산투자회사 5년 + 부동산 운용업무 3년 ④ 부동산 관계회사에서 부동산운용업무 3년
사회기반시설 운용인력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사회기반시설 투자운용 교육 + 사회기반시설운용 관련 업무 5년	① 경영학 등 석사 + 사회기반시설 운용업무 3년 ②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 2년 ③ 금융기관 등에서 사회기반시설 운용업무 3년 ④ 사회기반시설 자산운용규모 1조 이상 외국금융기관에서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 3년 ⑤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 5년
⑥ 금융투자분석사	금융투자분석사시험 +등록교육	① 국내외 금융투자회사에서 1년이상 조사분석자료 작성 또는 이를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한 자 ② 경영학, 경제학 등 증권관계분야 석사 학위 이상 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자율규제위원장이 인정하는 금융연구기관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③ 경영학, 경제학 등 증권관계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2년 이상 상장법인의 재무 관련 부서에 근무한 자 ④ 자율규제위원장이 인정하는 조사 분석교육과정을 수료한자
⑦ 위험관리인력	금융투자업규정 제3-43조 제2항의 위험관리 조직에 소속된 자	

* 현행 대비 자격요건 변화가 있는 자격: ④, ⑥, ⑦의 자격요건 변경

V. 자격시험

- 제도개편 후 존치시험은 ①펀드투자상담사, ②증권투자상담사, ③파생상품투자상담사, ④투자자산운용사, ⑤금융투자분석사, ⑥재무위험관리사 시험

- 법령 등에 의거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 자격시험은 ①~⑤

※ (재무위험관리사 시험) 시험의 난이도가 어렵고 관련 전문인력이 시장에 충분치 않아 업무영위를 위한 자격요건으로 설정하기 곤란, 자율시험으로 육성, 시장에 양질의 위험관리 전문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운영 예정 (증권분석사 시험) 증권분석사회 시험을 금투협이 대신 운영하는 것으로 규제 또는 등록이 필요한 시험이 아니므로 규정에서 제외하고 자율시험으로 운영

- 제도개편 후 자격시험 구성 내용 (통합시험인 펀드투자상담사, 투자자산운용사 시험과목 구성)

자격시험	문항	시간(분)	합격점	과목		비율(%)
펀드투자상담사	100	120	60	펀드공통	윤리 및 법규, 영업실무	25
					펀드 일반	25
				파생상품 펀드과목	파생상품운용 관련 법규 및 영업실무	10
					파생상품투자론	15
				부동산 펀드과목	부동산운용 관련 법규 및 영업실무	10
					부동산투자론	15
투자자산운용사	120	180	70	윤리 및 법규		20
				고객자산관리 및 세무전략		15
				투자분석과 리스크관리		15
				운용 및 전략Ⅰ(증권, 파생상품운용)		25
				운용 및 전략Ⅱ(채권, 해외자산, 대안투자자산 운용, 성과분석)		25

VI. 제도개편 설명

1 투자권유자문인력제도 개편안

- ☐ (자격제도) 금융투자업 인가단위, 겸영사, 전업사의 영업현실을 고려하여 펀드, 증권, 파생상품으로 분류

구분	펀드	증권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 (투자상담사) 금융투자상품을 증권, 파생상품, 펀드로 그룹화
 - 舊 금융투자업 전업단위(증권업, 선물업, 자산운용업)와 펀드, 파생상품만을 취급하는 겸영사·전업사의 영업현실을 고려
- (투자자문상담사) 투자상담사(펀드, 증권, 파생)에 포괄하여 운영
 - ※ 기존 운용·일임시험 합격자와 통합신설되는 투자자산운용사 시험 합격자는 금투협 등록 후 투자자문업무 수행 가능(현행과 유사)
- (전문투자자상담사) 투자상담사(펀드, 증권, 파생)에 포괄하여 운영
 - ※ 현행과 같이 금투회사 1년 근무자는 시험없이 금투협 등록 후 전문투자자 투자권유 가능

- ☐ (자격시험) 증권, 파생, 펀드 시험 3개로 운영

- 시험문항수는 증권, 파생상품, 펀드투상은 각 100문항
 - * 특별자산펀드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기초자산별로 판매사가 자체교육을 실시하되, 교육 시간규제를 합리화(5시간→2시간)하고, 자체교육 사전인증방식을 사후점검방식으로 변경

- ☐ (펀드투상 사전판매교육) 응시자 대상 의무 사전교육(30시간)은 폐지하고, 합격자 대상 등록교육(15시간)으로 전환

- * 부동산·특별자산펀드, 불완전판매, 분쟁사례 등을 교육내용에 충분히 반영

2 투자운용인력제도 개편안

□ 4개의 투자운용인력을 “투자자산운용사”로 명칭 통합

- 일임투자자산운용사와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자격 및 시험 통합
- 부동산, 사회기반시설투자운용사* 자격요건은 현행과 동일

* 투자자산운용사(부동산), 투자자산운용사(사회기반시설)

3 투자권유자문관리인력제도 개편안

① 등록인력 대상자 변경

- 지점장 ⇨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지점별 투자권유자문관리인력을 선정*하여 금투협 등록

* 대상자 예시: 지점에 금융위 규정상의 영업관리자, 지점장 또는 별도의 투자상담사 관리인력 존재시 해당 인력 중 1인을 회사가 선정하여 등록

② 투자상담관리사 시험 폐지 및 등록·보수교육 의무화, 보수교육주기는 1년

③ 등록인력 요건: 투자상담사((증권)펀드, 증권, 파생투자) 시험 전무 합격자 중 금융투자회사가 지정하여 금투협 등록

④ 겸영 금투회사(은행, 보험) 및 자산운용사, 선물사로 확대 적용

- 취급 금융투자상품 투자상담사 자격자(펀드·파생 등)로서 등록·보수교육은 회사별 자체교육을 통해 실시(금투협은 가이드라인 제시, 교육내용 승인, 인력등록, 교육실적 접수 실시)

4 금융투자분석사제도 개편안

□ 자격시험을 유지하고, 경력요건은 대폭 확대

- 애널리스트의 준법의식 및 윤리성 강화를 위해 윤리와 관계 법규를 철저히 교육할 계획

※ 자격요건: ① 금융투자분석사 시험 합격자, ② 국내외 금융투자회사에서 1년 이상 조사분석자료 작성 또는 보조업무 종사자, ③ 경영학, 경제학 등 증권 관계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자율규제위원장이 인정하는 금융연구기관에 2년 이상 종사자, ④ 경영학, 경제학 등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2년 이상 상장 법인 재무관련 부서 근무자, ⑤ 자율규제위원장이 인정하는 조사분석교육과정 수료자

5 집합투자기구관계회사인력제도 개편안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건의를 통해 금투협 등록·관리 인력에서 제외

- 시행령 개정에 시일이 소요될 수 있어 개정 이전에는 명칭을 쉽게 변경하여 적용

* 집합투자재산계산사 ⇒ 펀드사무관리인력
집합투자기구평가사 ⇒ 펀드평가인력
집합투자재산평가사·자산평가분석사 ⇒ 채권평가인력

6 재무위험관리사제도 개편안

□ 금융투자회사의 위험관리조직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등록을 의무화하고, 보수교육 실시(시험은 자율시험)

※ 등록요건: 금융투자업규정 제3-43조 제2항의 위험관리 조직(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또는 인수업 투자매매업 인가사에 설치 의무화)에 소속된 자

7 자문, 일임, 신탁계약 투자권유대행인 관련 개편안

- ☐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능력 평가시험에 합격한 펀드투자권유대행인 또는 증권투자권유대행인이 해당 계약 체결권유 가능토록 변경

8 보수교육제도 개편안

- ☐ (50% Rule 도입) 교육과목 중 직무윤리 및 법규 개정사항을 포함한 신규제도 내용을 50%이상 포함
- ☐ (보수교육관리) 전문인력관리위원회에 보수교육 개선 및 승인권한을 부여
- ☐ (보수교육주기) 2년 주기로 통일(투자상담관리인력은 1년)
- ☐ (장기과제 : 실무교육제도 개선)
 - 실무교육은 해외사례를 참조하여 금투협은 교육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하고 회원사가 자율적으로 교육하도록 추진
 - “실무교육”은 1년 주기로 하되 일정 준비기간을 거쳐 금융투자회사 자체교육으로 실시토록 개선
 - * 자율교육이 불가능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금융투자교육원이 연수를 제공할 계획

9 전문인력 윤리성 강화 및 자격시험 유효기간 도입

- ☐ (윤리성) 외부전문가의 연구용역을 통해 “금융투자전문인력 윤리 강령 및 기준”을 제정, 시험 및 보수교육에 윤리과목을 5% 이상 반영
- ☐ (유효기간) 시험합격 또는 등록말소후 5년 이내 금융투자업에 종사하지 않을시 시험 재응시 강제화(기존 합격자는 유효기간 적용 배제)

10 기타 자격제도 개편사항

- ☐ CMA 투자권유자격을 증권투자상담사로 단일화(기존은 RP형은 증권투상, MMF형은 증권펀드투상이 투자권유)
 - 증권투자상담사 시험에 CMA 평가를 강화하되, 기존 자격자의 경우 등록·보수교육시 관련 교육을 강화
- ☐ 채무증권 투자권유 은행원에 대한 등록·관리제도 도입
 - 채권투자권유업무 영위 은행은 등록교육*(은행 자체교육 인정) 후 금투협 등록 가능(표기는 증권투자상담사-은행취급채무증권 제한)
 - * 시험을 통한 자격부여는 현재 증권투상내 채권평가문항이 미미(5문항 미만 수준)하므로 등록교육을 통해 자격부여하되 은행 자체교육도 인정
- ☐ 파생결합증권 투자권유는 파생상품투상이 투자권유하되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증권은 증권투상도 투자권유 가능

11 기존 자격자 연계방안

☐ (펀드투자상담사) 펀드투자상담사 부분 자격보유자의 기득권 인정*

* 증권펀드투상 자격보유자는 통합펀드투상 자격이 없더라도 증권펀드 취급 가능

- 다만, 통합자격 보유를 위한 전환시험*은 2년간 수회 실시 하되, 3년 이후에는 전환수요 등을 파악 연 1회 수준 실시

* 예) 증권펀드투상시험 합격자 ⇨ 통합 펀드투상 시험 중 부동산, 파생상품 과목 합격 필요

☐ (투자상담관리사) 기존 관리사자격시험 합격자가 투자상담 관리인력 등록시 투자상담사 자격이 전부 없더라도 등록 가능, 등록시 등록교육 및 보수교육 1회 면제

☐ (투자운용인력) 일임투자자산운용사와 집합투자자산운용사는 업종 전환시(집합↔일임) 전환교육 및 평가*를 통해 통합자격부여

* ①일임 ⇒ 운용 전환시: 30시간 교육+평가, ②운용 ⇒ 일임 전환시: 10시간 교육+평가, ③일임 · 운용시험 전부 합격자: 별도 전환교육 필요없음

12 시 행 시 기

☐ (규정개정 후 즉시 시행) 투자권유대행인의 일임계약 등 등록규제 현실화

☐ (규정개정 후 3개월내 시행) 제도개편안 대부분 시행

☐ (2010.23 시행) 장외파생상품 투자권유시 파생투상시험 합격 의무화

☐ (규정개정 1년 후 시행) 파생결합증권, 은행 채무증권 자격규제

☐ (2011.2.3 시행) 투자상담관리인력, 애널리스트 자격규제

5. 산은지주사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정책방향

□ 정부는 산은과 민간금융회사와의 시장마찰 문제 근본적 해소,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 기존 산업은행을 산은지주사 및 그 자회사 체제로 재편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정책금융공급의 원활화를 위해 정책금융공사 설립을 추진 중

- ① 관련법령 제·개정 등 산은 민영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기 마련
 - 산은법 개정('09.4) 및 시행령 개정('09.5) 등 관련법령 정비(모두 '09.6.1 시행)
- ② 산은의 원활한 민영화 및 정책금융공사의 정책업무 수행 능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산은 분할방안 마련('09.7)
- ③ 산은 내규(정관 등) 정비, 산은지주사 설립 등 후속작업 추진중

- '09.10월중 산은을 분할하여 산은 지주사, 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할 계획

□ 현시점에서는 당면한 현안인 산은 지주사 및 정책금융공사의 설립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역량을 집중

□ 향후 정부는 산업은행과 민간금융회사와의 시장마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산업은행 민영화를 추진하되,

- 민영화 일정은 국내외 금융시장상황,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매각가치 극대화, 산은의 민영화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2014.5월 이전까지 최초 지분 매각 의무화(산은법 부칙 제4조)

6. 정책금융공사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정책방향

- 금융위는 금번 정책금융공사 설립을 통해,
 -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지역개발·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금융시장 안정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고,
 - 기존의 정책금융기관과의 합리적인 역할 정립을 통해 정책금융의 효율성 극대화를 도모함으로써,
 - 국가 경쟁력 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고용창출,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임
- 현재 정책금융공사 감독규정 제정 등 관련 제도 개편은 완료된 상황이며, 정관제정 등 후속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10월 중 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임

7. 보험회사에 대한 지급결제업무 허용과 관련한 회의일시 및 회의참석자, 법적근거, 이에 따른 후속조치

□ 금융규제개혁심사단(08.5.8)

- 회의참석자 : 이지순(서울대 교수), 김정수(중앙일보 전문기자), 박상조(전 공정위 상임위원), 최수현(금융위 기획조정관) 등 13명
- 법적근거 : 2008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 따른 「민간주도의 금융규제개혁」 추진
- 후속조치 : 금융규제개혁심사단 회의에서 금융투자회사에 허용한 수준으로 보험사에도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토록 결정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08.6.26)

- 회의참석자 : 이명박(대통령), 사공일(국경위원장), 강만수(기재부장관), 전광우(금융위원장) 등 24명
- 법적근거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규정(대통령령)
- 후속조치 : 금융회사 상품개발 및 업무범위 확대의 일부로 보험회사 지급결제업무를 허용

□ 금융위원회(08.7.25)

- 회의참석자 : 전광우(금융위원장), 이창용(부위원장) 등 8명
- 법적근거 : 금융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
- 후속조치 : 보험회사에 대한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토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 차관회의(08.12.5)

- 회의참석자 : 조중표(국무총리조정실장), 배국환(기획재정부차관) 등 16명
- 법적근거 : 차관회의규정
- 후속조치 : 보험회사에 대한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토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

□ 국무회의(08.12.9)

- 회의참석자 : 한승수(국무총리), 강만수(기획재정부장관) 등 16명
- 법적근거 : 국무회의규정
- 후속조치 : 보험회사에 대한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토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

8. 휴면예금관리재단 및 미소금융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소액서민금융재단 2009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

(1) 복지사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 2009년도 사업 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08년		'09년 (계획)
	(계획)	실적	
소액금융	250	241	400
소액보험	30	30	40
합계	280	271	440

1. 저소득층 창업·취업 지원

- 기존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수혜자 범위를 확대
- 창업·취업 분야의 신규 복지사업자를 발굴하여 지원

2.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사회적 기업 지원

- 사업지원의 확대를 통한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
- 유망기업이 선정·지원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 개선·강화

3. 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 복지사업자가 수행하는 소액대출 프로그램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
- 소액금융 수혜 대상자의 범위 확대

4. 전통시장 영세상인을 위한 소액대출 지원

- 서울시 시범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지원 강화
-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전국 광역자치체로의 사업 확대 추진

5. 저소득층 보험계약 체결·유지 지원

- 지원금의 증액을 통한 소액보험 사업의 확대
- 사업규모 및 내용을 고려한 최적의 수혜자 그룹 선정
- 수혜자 선호도를 파악하여 보험 상품을 개선

(2) 원권리자 보호에 충실

- 소액금융사업비에 대해 적정규모*로 통제하여 원권리자에 대한 휴면예금의 안정적 지급을 도모

* 휴면예금 가용재원의 25% 이내로 사업규모를 제한

- 출연·지급정보 등 관련 데이터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통합 업무지원 및 복지사업 지원 시스템 구축을 추진

II. 2009년도 예산안

-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긴축 편성
 - 급여 및 제수당은 동결(단, 직원 급여는 호봉승급수준(2%) 반영)
 - 일반관리비도 4% 수준 삭감 등

<수입 및 지출>

수입(백만원)		지출(백만원)	
기본재산 전입금	40,000	재단사업비	44,000
이자수입	7,597	공사운영비	40,000
은행출연금 이자수익	2,770	기금관리비용	4,000
보험출연금 이자수익	4,827	재단운영비	3,597
수익총계	47,597	비용총계	47,597

< 붙임 2 > 09년도 소액서민금융재단 예산 내역

1. 수입 예산

(단위 : 천원)

관	항	목	'09년도 예산액	비 고
기본재산 전입금	기본재산 전입금	은행출연금 전입금	40,000,000	소액금융사업비
이자수입	이자수입	은행출연금 이자수입	2,822,206	재단운영비
		보험출연금 이자수입	4,842,996	소액보험사업비 : 4,000,000 재단운영비: 842,996
계			47,665,202	

2. 지출예산

(단위 : 천원)

관항목	'09년도 예산액	'08년도 12개월 환산예산액 ('08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재단사업비	44,000,000	28,000,000	16,000,000	57.1
소액금융사업비	40,000,000	25,000,000	15,000,000	60.0
소액보험사업비	4,000,000	3,000,000	1,000,000	33.3
재단운영비*	3,665,202	3,997,815 (1,991,766**)	△332,613 (1,673,436)	△8.3 (84.0)
자산취득비	832,525	1,059,200 (89,000)	△226,675 (743,525)	△21.4 (835.4)
인건비	1,235,757	1,171,139 (874,904)	64,618 (360,853)	5.5 (41.2)
일반관리비	1,512,219	1,577,104 (933,016)	△64,885 (579,203)	△4.1 (62.1)
예비비	71,867	190,372 (94,846)	△118,505 (△22,979)	△62.2 (△24.2)
퇴직급여충당금	12,834	-	12,834	-
계	47,665,202	31,997,815 (29,991,766)	15,667,387 (17,673,436)	48.9 (58.9)

* '08년도 예산은 재단출범이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의 예산임.

** '08년 1월 ~4월까지 집행된 전산장비구입비 970,200천원과 전산업무개발비 242,000천원 포함

□ 미소금융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

- 미소금융 사업은 휴면예금관리재단을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실시할 예정으로 사업비 및 운영비 등의 예산은 중앙재단 설립이후 편성예정

〈참고〉 미소금융 확대방안 인쇄본 별도 제출

9. 최근 5년간 퇴직자 및 이직자 재취업현황

□ 최근 5년간 퇴직자 및 이직자 재취업현황

성명	직위(직급)	퇴직일자	재취업기관
000	부위원장(차관급)	08.03.13	LS네트웍스 고문
000	금융정보분석원장(고위공무원)	08.03.28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000	부이사관	09.03.26	한국자금중개 전무
000	서기관	09.05.15	신영증권 상무이사

10. 최근 5년간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금융위의 진상 파악내역 및 고발 등 후속조치

- ☐ 동 내용들은 공개될 경우 수사 또는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관련 기업의 주가 등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 또한, 개인의 명예·사생활 및 기업의 영업비밀 등의 침해 등으로 관련자 및 해당기업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며,
 - 기타 개인의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부득이 이를 제공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참고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실무는 금융감독원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권 택 기 의원

1~3.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 목적 및 운용계획안,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통해 매입한 채권 목록

□ (조성 경과) 채권시장안정펀드는 채권시장 불안요인 해소를
통해 실물부문으로의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도모할 목적으로

- '08.12.17일 10조원 규모*로 설립되었으며, 1차로 조성된
5조원**을 산은자산운용이 운용 중

* 시중 은행(8조원), 보험회사(1.5조원), 증권회사(0.5조원) 출자

※ 채안펀드 조성 관련 당정협의(08.12.12일) 자료 별첨

□ (투자 현황) 투자자 등으로 구성된 투자리스크관리위원회*가 투자
대상 채권의 등급, 채권별 투자 규모 등 투자지침을 정하고

* 채안펀드의 투자 대상 채권 및 투자 시기 등을 결정하는 기구 : 업권별 최다
출자기관(4) 및 출자금액 상위 5개 은행 부기관장, 금융위·한은 추천인사(2),
통합펀드 자산운용사(2)등 총 13명으로 구성

- 산은자산운용이 투자지침에 따라 펀드를 운용하여 '09.7.13일
현재 3.77조원의 채권*에 투자

* 투자된 채권 리스트는 별첨으로 첨부(출처 : 산은자산운용)

□ (향후 운용 방향) 향후 채안펀드는 채권 시장 상황 및 신보의
보증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한 높은 신용등급의 기업 채권보다는 낮은
신용등급의 채권을 신보의 신용보강을 거쳐 매입할 계획
- 이와 함께 미 조성분 5조원은 채권시장 상황 등을 감안
하여 추가 조성 여부를 검토

설명자료

채권시장안정펀드 현황 및 운용방향

2008. 12. 17



금융위원회

1. 채권시장안정펀드 현황

가. 필요성 및 정책 목표

□ 채권시장의 마찰적 신용 경색 해소

- 거래상대방 위험 증가로 인한 일시적·마찰적 불안요인을 해소하여 실물부문으로의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유도

나.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 추진 현황

(1) 펀드 재원 및 조성 현황

□ (펀드 총액) 총 10조원*을 민간 금융회사가 전액 출자하고 한은이 기관별 출자금의 50%를 대출 지원

- 은행권(8조), 보험업권(1.5조), 증권업권(0.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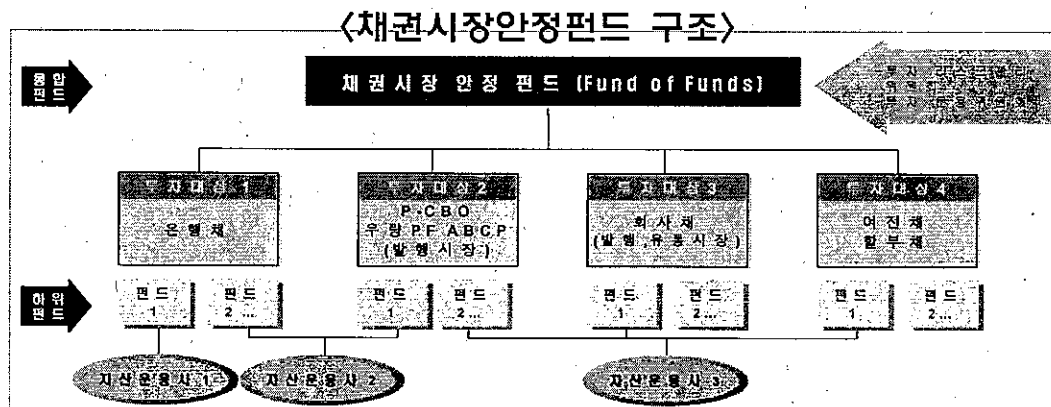
□ (1차 조성 규모) 12.17일 1차 5조원 규모로 출범

(2) 펀드 성격 및 구조

□ 사모펀드로 3년 만기 Fund of Funds 구조로 운영

- (상위 펀드) 전체 투자자산의 배분을 담당하며 산은자산운용이 운용
- (하위 펀드) 투자분야별(예: P-CBO, 회사채, 은행채 펀드 등) 하위펀드는 출자상위 기관이 선정한 자산운용사*가 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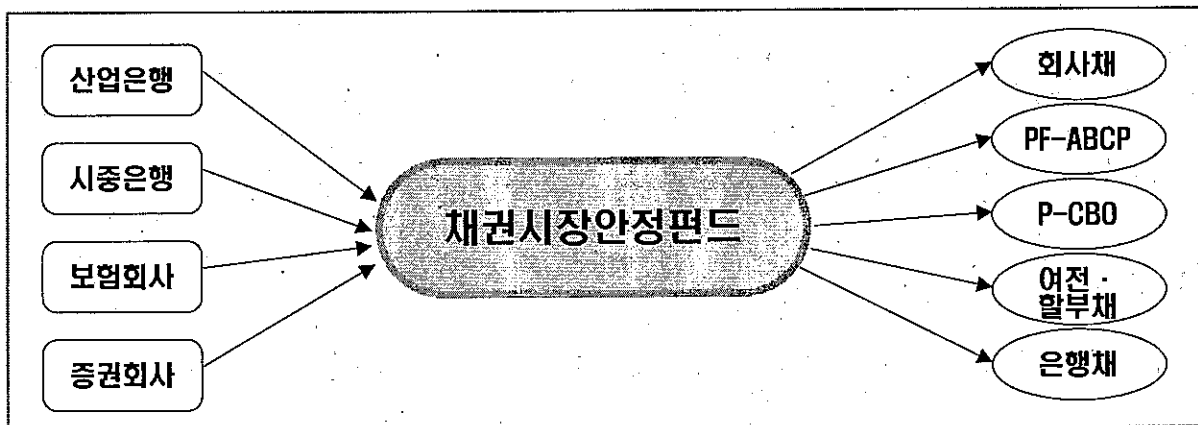
* SH자산운용, 하나UBS자산운용, 한국투신운용 등 8개사



2. 채권시장안정펀드의 운용 방향

가. 운용 방향

- (투자 대상) 회사채, PF ABCP, 여전·할부금융채 등 만기 도래 채권에 투자
- (신용 등급)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회사의 일정등급 이상 채권
 - 등급 미만 채권의 경우 신보의 신용보강을 통해 투자



나. 투자 현황 및 향후 계획

- (투자 현황) 회사채, 여전채 등 만기도래채권의 차환발행물 중 시장소화가 어려운 채권을 중심으로 매입 (8. 4일 현재 3.77조원 채권 매입)
- (향후 계획) 시장소화가 가능한 우량 채권에 대한 투자는 지양하고, 신용보강을 통해 저신용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
 - * 펀드 1차분(5조원) 자금 소진 추이를 보아 2차분(잔여 5조원) 조성 추진

연입채권명	채권종류	발행회사	신용등급	액면가액	평균금액	양도가액	발행일	인기일	매입금리 (%)	인수주거지
신보2008 3RD 유동	P-CBO			337,850,000,000	337,850,000,000		2008-12-23	2011-12-23	6.59	IBK투자증권, 현대증권, 동양증권금융증권
기초자산	기초자산	여진NOC	A	7,923,700,342	7,923,700,342	7,923,700,342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기초자산	계룡건설산업	A-	7,923,700,342	7,923,700,342	7,923,700,342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기초자산	신한기업	BBB+	7,801,168,894	7,801,168,894	7,801,168,894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기초자산	해태제과식품	BBB+	7,801,168,894	7,801,168,894	7,801,168,894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기초자산	대우자동차판매	BBB	11,701,753,340	11,701,753,340	11,701,753,340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기초자산	동원시스템즈	BBB	11,701,753,340	11,701,753,340	11,701,753,340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기초자산	현대종합상사	BBB-	41,369,231,048	41,369,231,048	41,369,231,048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기초자산	세화건설	BBB-	1,097,881,779	1,097,881,779	1,097,881,779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기초자산	휴비스	BBB-	7,801,168,894	7,801,168,894	7,801,168,894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기초자산	로케트전기	BB+ 이하	6,077,559,850	6,077,559,850	6,077,559,850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기초자산	모나미	BB+ 이하	7,678,637,445	7,678,637,445	7,678,637,445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기초자산	엘티전자	BB+ 이하	11,517,956,167	11,517,956,167	11,517,956,167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기초자산	대왕이앤씨	BB+ 이하	465,619,505	465,619,505	465,619,505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기초자산	대진약품	BB+ 이하	310,413,003	310,413,003	310,413,003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기초자산	비타민하우스	BB+ 이하	465,619,505	465,619,505	465,619,505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기초자산	신창건설	BB+ 이하	4,943,327,074	4,943,327,074	4,943,327,074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기초자산	하나종합건설	BB+ 이하	698,429,257	698,429,257	698,429,257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기초자산	대보세라믹스	BB+ 이하	1,097,881,779	1,097,881,779	1,097,881,779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기초자산	마노로	BB+ 이하	376,416,610	376,416,610	376,416,610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기초자산	우리철강	BB+ 이하	211,734,343	211,734,343	211,734,343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기초자산	에이스종합건설	BB+ 이하	3,169,480,137	3,169,480,137	3,169,480,137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기초자산	복합시스템	BB+ 이하	1,584,740,068	1,584,740,068	1,584,740,068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기초자산	솔버스	BB+ 이하	1,584,740,068	1,584,740,068	1,584,740,068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기초자산	아이씨디	BB+ 이하	792,370,034	792,370,034	792,370,034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기초자산	계성	BB+ 이하	396,185,017	396,185,017	396,185,017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기초자산	광원주택	BB+ 이하	2,377,110,103	2,377,110,103	2,377,110,103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기초자산	글로벌통상	BB+ 이하	2,377,110,103	2,377,110,103	2,377,110,103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기초자산	금호건설	BB+ 이하	396,185,017	396,185,017	396,185,017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기초자산	남성	BB+ 이하	3,961,850,171	3,961,850,171	3,961,850,171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기초자산	다온나라	BB+ 이하	792,370,034	792,370,034	792,370,034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기초자산	대국아이엔티	BB+ 이하	396,185,017	396,185,017	396,185,017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기초자산	대림아이티에스	BB+ 이하	1,584,740,068	1,584,740,068	1,584,740,068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기초자산	대양상선	BB+ 이하	11,885,550,513	11,885,550,513	11,885,550,513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기초자산	대림철강	BB+ 이하	2,377,110,103	2,377,110,103	2,377,110,103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기초자산	덕한금속	BB+ 이하	792,370,034	792,370,034	792,370,034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기초자산	동광석회공업	BB+ 이하	396,185,017	396,185,017	396,185,017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기초자산	동북소림	BB+ 이하	1,584,740,068	1,584,740,068	1,584,740,068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기초자산	동성석유	BB+ 이하	396,185,017	396,185,017	396,185,017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기초자산	동화세마	BB+ 이하	3,961,850,171	3,961,850,171	3,961,850,171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기초자산	드림스코	BB+ 이하	3,961,850,171	3,961,850,171	3,961,850,171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기초자산	드림포크	BB+ 이하	396,185,017	396,185,017	396,185,017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기초자산	디씨에프트랙	BB+ 이하	3,169,480,137	3,169,480,137	3,169,480,137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디씨엘배어링	BB+ 이하	1,584,740,068	1,584,740,068	1,584,740,068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디엠에스	BB+ 이하	3,961,850,171	3,961,850,171	3,961,850,171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라운건설	BB+ 이하	1,584,740,068	1,584,740,068	1,584,740,068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루벤스	BB+ 이하	3,961,850,171	3,961,850,171	3,961,850,171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림스텍	BB+ 이하	792,370,034	792,370,034	792,370,034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마이크로핀티	BB+ 이하	2,377,110,103	2,377,110,103	2,377,110,103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만복칠강	BB+ 이하	2,377,110,103	2,377,110,103	2,377,110,103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메타텍	BB+ 이하	396,185,017	396,185,017	396,185,017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명성기업	BB+ 이하	792,370,034	792,370,034	792,370,034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누벨이앤씨	BB+ 이하	1,584,740,068	1,584,740,068	1,584,740,068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삼산로피스	BB+ 이하	11,885,550,513	11,885,550,513	11,885,550,513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삼영플랜트	BB+ 이하	396,185,017	396,185,017	396,185,017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삼일기업	BB+ 이하	396,185,017	396,185,017	396,185,017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서울금속	BB+ 이하	2,377,110,103	2,377,110,103	2,377,110,103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성수	BB+ 이하	792,370,034	792,370,034	792,370,034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성우시멘트	BB+ 이하	5,546,590,240	5,546,590,240	5,546,590,240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성화식품	BB+ 이하	1,584,740,068	1,584,740,068	1,584,740,068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세정	BB+ 이하	11,093,180,479	11,093,180,479	11,093,180,479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세창이심일	BB+ 이하	3,961,850,171	3,961,850,171	3,961,850,171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신일세엠	BB+ 이하	1,584,740,068	1,584,740,068	1,584,740,068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신화인더크루	BB+ 이하	1,584,740,068	1,584,740,068	1,584,740,068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씨유엔디	BB+ 이하	3,961,850,171	3,961,850,171	3,961,850,171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아이엔티글로벌	BB+ 이하	792,370,034	792,370,034	792,370,034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아몬텔레콤	BB+ 이하	1,584,740,068	1,584,740,068	1,584,740,068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안성공업	BB+ 이하	396,185,017	396,185,017	396,185,017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알토	BB+ 이하	3,961,850,171	3,961,850,171	3,961,850,171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에너지솔루션즈	BB+ 이하	3,961,850,171	3,961,850,171	3,961,850,171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에스엘루드	BB+ 이하	396,185,017	396,185,017	396,185,017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에스제이테크	BB+ 이하	7,923,700,342	7,923,700,342	7,923,700,342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에스피코조선	BB+ 이하	11,885,550,513	11,885,550,513	11,885,550,513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엘에스플렉	BB+ 이하	396,185,017	396,185,017	396,185,017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에진에프앤지	BB+ 이하	1,584,740,068	1,584,740,068	1,584,740,068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우성케미칼	BB+ 이하	1,584,740,068	1,584,740,068	1,584,740,068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우진메디텍	BB+ 이하	396,185,017	396,185,017	396,185,017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위비스	BB+ 이하	3,961,850,171	3,961,850,171	3,961,850,171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유비온	BB+ 이하	1,188,555,051	1,188,555,051	1,188,555,051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윤창기업	BB+ 이하	1,188,555,051	1,188,555,051	1,188,555,051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지루	BB+ 이하	1,584,740,068	1,584,740,068	1,584,740,068	2011-12-22	2011-12-22
기초자산	정우금속공업	BB+ 이하	3,961,850,171	3,961,850,171	3,961,850,171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중앙원앤비	BB+ 이하	1,584,740,068	1,584,740,068	1,584,740,068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진양건설	BB+ 이하	1,584,740,068	1,584,740,068	1,584,740,068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진양해운	BB+ 이하	3,961,850,171	3,961,850,171	3,961,850,171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정광	BB+ 이하	3,961,850,171	3,961,850,171	3,961,850,171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정보산업	BB+ 이하	1,584,740,068	1,584,740,068	1,584,740,068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정산화학	BB+ 이하	396,185,017	396,185,017	396,185,017	2008-12-22	2011-12-22

신보채안펀드채일차	기초자산	케이엔더블유	BB+ 이하	2,377,110,103	2,377,110,103	2,377,110,103	2009-12-22	2011-12-22		
신보채안펀드채일차	기초자산	코레스	BB+ 이하	3,961,850,171	3,961,850,171	3,961,850,171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코스텔퍼워	BB+ 이하	2,377,110,103	2,377,110,103	2,377,110,103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태성포리텍	BB+ 이하	396,185,017	396,185,017	396,185,017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텔로드	BB+ 이하	2,377,110,103	2,377,110,103	2,377,110,103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트리코월드	BB+ 이하	396,185,017	396,185,017	396,185,017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파날링크	BB+ 이하	396,185,017	396,185,017	396,185,017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종량철강	BB+ 이하	792,370,034	792,370,034	792,370,034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종양성사	BB+ 이하	1,584,740,068	1,584,740,068	1,584,740,068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한국축산의약품사료	BB+ 이하	396,185,017	396,185,017	396,185,017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한국축산의약품사료	BB+ 이하	396,185,017	396,185,017	396,185,017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한성투유물반기계	BB+ 이하	1,584,740,068	1,584,740,068	1,584,740,068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한중	BB+ 이하	3,961,850,171	3,961,850,171	3,961,850,171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현대제이콤	BB+ 이하	792,370,034	792,370,034	792,370,034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홍창산업	BB+ 이하	396,185,017	396,185,017	396,185,017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화성판필	BB+ 이하	60,000,000,000	60,000,000,000	60,000,000,000	2009-01-29	2010-01-29	3.82	동양증권금융증권, 현대증권, 한화증권, HMC투자증권
	P-080			906,100,000,000	906,100,000,000	906,100,000,000	2009-01-29	2010-01-29	4.83	
	기초자산	대우캐피탈	A+	57,300,000,000	57,300,000,000	57,300,000,000	2009-01-28	2012-01-28		
	기초자산	두산캐피탈	A+	57,300,000,000	57,300,000,000	57,300,000,000	2009-01-28	2012-01-28		
	기초자산	두산인프라코어	A	38,800,000,000	38,800,000,000	38,800,000,000	2009-01-28	2012-01-28		
	기초자산	두산중공업	A	28,650,000,000	28,650,000,000	28,650,000,000	2009-01-28	2012-01-28		
	기초자산	대원전선	A-	48,500,000,000	48,500,000,000	48,500,000,000	2009-01-28	2012-01-28		
	기초자산	대원해운	A-	29,100,000,000	29,100,000,000	29,100,000,000	2009-01-28	2012-01-28		
	기초자산	STX	A-	97,000,000,000	97,000,000,000	97,000,000,000	2009-01-28	2012-01-28		
	기초자산	SK건설	A-	67,900,000,000	67,900,000,000	67,900,000,000	2009-01-28	2012-01-28		
	기초자산	대우건설	A-	48,500,000,000	48,500,000,000	48,500,000,000	2009-01-28	2012-01-28		
	기초자산	우리캐피탈	A-	47,750,000,000	47,750,000,000	47,750,000,000	2009-01-28	2012-01-28		
	기초자산	호성캐피탈	A-	28,650,000,000	28,650,000,000	28,650,000,000	2009-01-28	2012-01-28		
	기초자산	고려개발	A-	28,650,000,000	28,650,000,000	28,650,000,000	2009-01-28	2012-01-28		
	기초자산	한화	A-	97,000,000,000	97,000,000,000	97,000,000,000	2009-01-28	2012-01-28		
	기초자산	한솔제지	BBB+	97,000,000,000	97,000,000,000	97,000,000,000	2009-01-28	2012-01-28		
	기초자산	코오롱	BBB+	77,600,000,000	77,600,000,000	77,600,000,000	2009-01-28	2012-01-28		
	기초자산	FNC코오롱	BBB+	29,100,000,000	29,100,000,000	29,100,000,000	2009-01-28	2012-01-28		
	기초자산	금호타이어	BBB+	38,800,000,000	38,800,000,000	38,800,000,000	2009-01-28	2012-01-28		
	기초자산	해태제과	BBB+	48,500,000,000	48,500,000,000	48,500,000,000	2009-01-28	2012-01-28		
신보채안펀드이자1-1	P-080			80,000,000,000	80,000,000,000	80,000,000,000	2009-03-05	2010-03-05	3.42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 신영증권, KB투자증권
신보채안펀드이자1-2	P-080			644,050,000,000	644,050,000,000	644,050,000,000	2009-03-05	2012-03-05	4.49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 신영증권, KB투자증권
	기초자산	대우캐피탈	A+	38,200,000,000	38,200,000,000	38,200,000,000	2009-03-04	2012-03-04		
	기초자산	두산캐피탈	A+	47,750,000,000	47,750,000,000	47,750,000,000	2009-03-04	2012-03-04		
	기초자산	두산중공업	A	97,000,000,000	97,000,000,000	97,000,000,000	2009-03-04	2012-03-04		
	기초자산	여진NCC	A	48,500,000,000	48,500,000,000	48,500,000,000	2009-03-04	2012-03-04		
	기초자산	우리캐피탈	A-	28,650,000,000	28,650,000,000	28,650,000,000	2009-03-04	2012-03-04		
	기초자산	호성캐피탈	A-	28,650,000,000	28,650,000,000	28,650,000,000	2009-03-04	2012-03-04		
	기초자산	SK건설	A-	19,400,000,000	19,400,000,000	19,400,000,000	2009-03-04	2012-03-04		

기초자산	금호타이어	BBB+	9,700,000,000	9,700,000,000	9,700,000,000	2009-03-04	2012-03-04		
기초자산	한라건설	BBB+	42,975,000,000	42,975,000,000	42,975,000,000	2009-03-04	2012-03-04		
기초자산	금호석유화학	BBB	48,500,000,000	48,500,000,000	48,500,000,000	2009-03-04	2012-03-04		
기초자산	아시아나항공	BBB	48,500,000,000	48,500,000,000	48,500,000,000	2009-03-04	2012-03-04		
기초자산	대우자동차판매	BBB	38,800,000,000	38,800,000,000	38,800,000,000	2009-03-04	2012-03-04		
기초자산	동부제철	BBB	48,500,000,000	48,500,000,000	48,500,000,000	2009-03-04	2012-03-04		
기초자산	코오롱건설	BBB	48,500,000,000	48,500,000,000	48,500,000,000	2009-03-04	2012-03-04		
기초자산	금호피엔티화학	BBB-	29,100,000,000	29,100,000,000	29,100,000,000	2009-03-04	2012-03-04		
기초자산	뉴코아	BBB-	29,100,000,000	29,100,000,000	29,100,000,000	2009-03-04	2012-03-04		
기초자산	휴비스	BBB-	29,100,000,000	29,100,000,000	29,100,000,000	2009-03-04	2012-03-04		
기초자산	이랜드윌드	BBB-	29,100,000,000	29,100,000,000	29,100,000,000	2009-03-04	2012-03-04		
기초자산	쌍용중공업	BBB-	33,425,000,000	33,425,000,000	33,425,000,000	2009-03-04	2012-03-04		
신보회양디젤1-1	P-CBD		241,975,000,000	241,975,000,000	241,975,000,000	2009-03-31	2012-03-31	5.17	배부지증권, 신용증권, 대우증권, 현대증권
기초자산	대한해운	A-	19,400,000,000	19,400,000,000	19,400,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크라온제과	BBB+	19,400,000,000	19,400,000,000	19,400,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스콜정보통신	B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대동아크로텍	BBB+ 이하	2,910,000,000	2,910,000,000	2,910,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케이엘에스	BBB+ 이하	2,910,000,000	2,910,000,000	2,910,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태경진기산업	B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대성메이저임업에스지	BBB+ 이하	4,850,000,000	4,850,000,000	4,850,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대우중공업	BBB+ 이하	5,820,000,000	5,820,000,000	5,820,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호창건설	B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세싸이트	BBB+ 이하	2,910,000,000	2,910,000,000	2,910,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부국이엔지	B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아이엔에이지	B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코로스	BBB+ 이하	4,850,000,000	4,850,000,000	4,850,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제이씨엔지니어링	B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수경테크	B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모나미	BBB+ 이하	9,550,000,000	9,550,000,000	9,550,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유성타이어에스	BBB+ 이하	4,775,000,000	4,775,000,000	4,775,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경원	BBB+ 이하	1,940,000,000	1,940,000,000	1,940,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아진스프린	B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대륙테크놀로지	BBB+ 이하	1,940,000,000	1,940,000,000	1,940,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성일로탈프리팅	BBB+ 이하	1,940,000,000	1,940,000,000	1,940,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리스피엔서	BBB+ 이하	2,910,000,000	2,910,000,000	2,910,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에스엔비	BBB+ 이하	2,910,000,000	2,910,000,000	2,910,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지에이엠	B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엘드건설	BBB+ 이하	2,910,000,000	2,910,000,000	2,910,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티지에스파이프	BBB+ 이하	1,940,000,000	1,940,000,000	1,940,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오킨스전자	BBB+ 이하	2,910,000,000	2,910,000,000	2,910,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미라플라이앤서	BBB+ 이하	1,940,000,000	1,940,000,000	1,940,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대륙금속	BBB+ 이하	2,910,000,000	2,910,000,000	2,910,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코아스틸	BBB+ 이하	3,880,000,000	3,880,000,000	3,880,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슈기버블	BBB+ 이하	2,910,000,000	2,910,000,000	2,910,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에스와의비닐	BBB+ 이하	1,940,000,000	1,940,000,000	1,940,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경전선박		BB+ 이하	2,910,000,000	2,910,000,000	2,910,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영화제작		BB+ 이하	2,910,000,000	2,910,000,000	2,910,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제주팩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디에이서블리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에이저엘지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세호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바이백정보통신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영웅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토람크리트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이티에이치		BB+ 이하	1,940,000,000	1,940,000,000	1,940,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원웅건설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대원건설		BB+ 이하	1,940,000,000	1,940,000,000	1,940,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이강물산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유진정밀		BB+ 이하	1,940,000,000	1,940,000,000	1,940,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신기방직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에스티에스반도체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와이지-원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비케이엘씨디		BB+ 이하	4,775,000,000	4,775,000,000	4,775,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성우하이텍		BB+ 이하	9,700,000,000	9,700,000,000	9,700,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능원금속공업		BB+ 이하	4,775,000,000	4,775,000,000	4,775,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세우산업개발		BB+ 이하	4,850,000,000	4,850,000,000	4,850,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웅진종합특수강		BB+ 이하	4,850,000,000	4,850,000,000	4,850,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두용상사		BB+ 이하	4,850,000,000	4,850,000,000	4,850,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소명화장품		BB+ 이하	4,850,000,000	4,850,000,000	4,850,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세신전자		BB+ 이하	9,700,000,000	9,700,000,000	9,700,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환산공업		BB+ 이하	19,400,000,000	19,400,000,000	19,400,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HS바이오랩		BB+ 이하	2,910,000,000	2,910,000,000	2,910,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아베스타		BB+ 이하	6,790,000,000	6,790,000,000	6,790,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신성물산		BB+ 이하	9,550,000,000	9,550,000,000	9,550,000,000	2009-03-30	2012-03-30		
신보희망디엠동제이차1-1	P-CB0			14,925,000,000	14,925,000,000	14,925,000,000	2009-05-21	2011-05-21	3.9	한국투자증권, 동부증권, KB투자증권, 부국증권, 동양증권, 금융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부국증권, 동양증권, 금융투자증권
신보희망디엠동제이차1-2	P-CB0			329,125,000,000	329,125,000,000	329,125,000,000	2009-05-21	2012-05-21	4.53	한국투자증권, 동부증권, KB투자증권, 부국증권, 동양증권, 금융투자증권
기초자산	계룡건설산업		A-	9,700,000,000	9,700,000,000	9,70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심원캐슈		BBB-	9,700,000,000	9,700,000,000	9,70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서진산업		BBB-	14,550,000,000	14,550,000,000	14,55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대경건설		BB+ 이하	1,344,000,000	1,344,000,000	1,344,000,000	2009-05-20	2011-05-20		
기초자산	미리넷		BB+ 이하	2,304,000,000	2,304,000,000	2,304,000,000	2009-05-20	2011-05-20		
기초자산	세하		BB+ 이하	5,376,000,000	5,376,000,000	5,376,000,000	2009-05-20	2011-05-20		
기초자산	이토건설		BB+ 이하	1,344,000,000	1,344,000,000	1,344,000,000	2009-05-20	2011-05-20		
기초자산	대호산업		BB+ 이하	558,000,000	558,000,000	558,000,000	2009-05-20	2011-05-20		
기초자산	신원산업		BB+ 이하	2,604,000,000	2,604,000,000	2,604,000,000	2009-05-20	2011-05-20		
기초자산	에덴엔터테인먼트		BB+ 이하	1,395,000,000	1,395,000,000	1,395,000,000	2009-05-20	2011-05-20		
기초자산	대한방직		BB+ 이하	9,550,000,000	9,550,000,000	9,55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신성물산		BB+ 이하	9,550,000,000	9,550,000,000	9,55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성우하이텍		BB+ 이하	14,550,000,000	14,550,000,000	14,55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에스티에스반도체		BB+ 이하	9,700,000,000	9,700,000,000	9,70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외이자-원	BB+ 이하	9,700,000,000	9,700,000,000	9,70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유성티엔에스	BB+ 이하	4,775,000,000	4,775,000,000	4,775,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화인텍	BB+ 이하	9,550,000,000	9,550,000,000	9,55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캡스콜라비트	BB+ 이하	9,550,000,000	9,550,000,000	9,55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보리네오기구	BB+ 이하	6,790,000,000	6,790,000,000	6,79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디에스제강	BB+ 이하	1,455,000,000	1,455,000,000	1,455,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섬미식품	BB+ 이하	2,910,000,000	2,910,000,000	2,91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세미텍	BB+ 이하	4,850,000,000	4,850,000,000	4,85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인스프리트	BB+ 이하	1,940,000,000	1,940,000,000	1,94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코이코	BB+ 이하	1,940,000,000	1,940,000,000	1,94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휴먼텍코리아	BB+ 이하	9,700,000,000	9,700,000,000	9,70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건아엔터프라이즈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검동건설	BB+ 이하	4,850,000,000	4,850,000,000	4,85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광선엔터프라이즈	BB+ 이하	2,910,000,000	2,910,000,000	2,91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글로벌엔에프지	BB+ 이하	1,940,000,000	1,940,000,000	1,94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금강기전	BB+ 이하	1,940,000,000	1,940,000,000	1,94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대산철강	BB+ 이하	4,850,000,000	4,850,000,000	4,85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대흥철강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대흥철강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덕광중공업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동아산업	BB+ 이하	2,910,000,000	2,910,000,000	2,91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동양메닉스	BB+ 이하	1,940,000,000	1,940,000,000	1,94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동양캐치나라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동성산업	BB+ 이하	1,940,000,000	1,940,000,000	1,94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동성플라스	BB+ 이하	1,940,000,000	1,940,000,000	1,94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동인기연	BB+ 이하	1,940,000,000	1,940,000,000	1,94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동철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디엔씨엔지니어링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디자인플랜트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디케이산업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윙키엘텍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리트코	BB+ 이하	4,850,000,000	4,850,000,000	4,85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만성스텝	BB+ 이하	2,910,000,000	2,910,000,000	2,91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메이지텍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범양이앤씨	BB+ 이하	3,880,000,000	3,880,000,000	3,88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보아스건설	BB+ 이하	1,940,000,000	1,940,000,000	1,94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부일로지스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비에스텍크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삼부산업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삼신글속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삼신이노텍	BB+ 이하	2,425,000,000	2,425,000,000	2,425,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삼정산업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삼원산업개발	BB+ 이하	1,940,000,000	1,940,000,000	1,94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상진미크론	BB+ 이하	4,850,000,000	4,850,000,000	4,85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서용약품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성신중공업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성호건설	BB+ 이하	2,910,000,000	2,91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세신버팔로	BB+ 이하	2,910,000,000	2,91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세임창공	BB+ 이하	1,940,000,000	1,94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소이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솔버스	BB+ 이하	1,940,000,000	1,94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송강산업	BB+ 이하	7,760,000,000	7,76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시스온칩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신한제강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실로정보시스템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베크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씨티에스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아보금속공업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아산	BB+ 이하	4,850,000,000	4,85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아이지스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에스엔에스인더스트리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에스원지	BB+ 이하	1,940,000,000	1,94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에스제이테크	BB+ 이하	2,910,000,000	2,91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엔피텍	BB+ 이하	1,455,000,000	1,455,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엠포럼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여원미디어한국기드너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우진알파	BB+ 이하	4,850,000,000	4,85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우창공업	BB+ 이하	3,880,000,000	3,88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원일	BB+ 이하	2,910,000,000	2,91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원스틸	BB+ 이하	3,880,000,000	3,88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원케이엔지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유니메탈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유엘피	BB+ 이하	1,940,000,000	1,94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유토퍼인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제호물산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전단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정원엔지니어링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제이엘피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제이엘피솔루션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주성플러머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중앙인터내셔널	BB+ 이하	2,910,000,000	2,91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지엔오코퍼레이션	BB+ 이하	1,940,000,000	1,94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지에이엘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지에이엘텍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지화사	BB+ 이하	2,910,000,000	2,91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진서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진호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채스투어즈	BB+ 이하	2,910,000,000	2,91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케이엘티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코스텍크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코에버퍼패널	BB+ 이하	1,940,000,000	1,940,000,000	1,94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크리스패션	BB+ 이하	3,880,000,000	3,880,000,000	3,88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태성코우전자	BB+ 이하	1,455,000,000	1,455,000,000	1,455,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트라이튼테크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티지윙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웅이서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프라임팜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프롬브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한겨레빌딩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한국엔지니어링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한국인스팜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한국특장기술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한라산업개발	BB+ 이하	9,700,000,000	9,700,000,000	9,70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한림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한미상제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한미시스템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한배전자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한본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한창하이메탈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호진실업	BB+ 이하	4,850,000,000	4,850,000,000	4,85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화인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한용정공	BB+ 이하	2,910,000,000	2,910,000,000	2,91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화림철강	BB+ 이하	4,850,000,000	4,850,000,000	4,85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슈브글로벌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신뢰회합디엠동계상차	P-CBO	AAA	203,700,000,000	203,700,000,000	203,700,000,000	2009-06-30	2012-06-30	HMC투자증권, 삼성증권, 한화증권, 우리투자증권, KB투자증권
기초자산	가나레포츠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강릉건설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강원철피씨	BB+ 이하	1,940,000,000	1,940,000,000	1,94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광운유	BB+ 이하	1,455,000,000	1,455,000,000	1,45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광우정보통신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구보인터네셔널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그리마건설	BB+ 이하	4,850,000,000	4,850,000,000	4,85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극동철강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금아플로우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기웅스텐레스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풍그림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나진스틸	BB+ 이하	1,455,000,000	1,455,000,000	1,45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남명	BB+ 이하	1,455,000,000	1,455,000,000	1,45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남양산업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남양건설	BB+ 이하	2,910,000,000	2,910,000,000	2,91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내일엔지니어링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대진씨엔에스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대우농산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대덕에프알디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대웅신관	BB+ 이하	1,455,000,000	1,455,000,000	1,45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대부인더스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대영유아텍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대형공업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대형산업개발	BB+ 이하	1,940,000,000	1,940,000,000	1,940,000,000	1,94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대부자원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덕천단지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대이센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대코립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도시인디스트리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동성정광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동우세원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동원테크	BB+ 이하	2,910,000,000	2,910,000,000	2,910,000,000	2,91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두성산업	BB+ 이하	2,910,000,000	2,910,000,000	2,910,000,000	2,91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북원산업개발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리프론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만성스틸	BB+ 이하	2,425,000,000	2,425,000,000	2,425,000,000	2,42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알온이더지는영어	BB+ 이하	1,940,000,000	1,940,000,000	1,940,000,000	1,94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명민시스템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몬티스타텔레콤	BB+ 이하	2,910,000,000	2,910,000,000	2,910,000,000	2,91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미도원피니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반석중공업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백산철강	BB+ 이하	1,940,000,000	1,940,000,000	1,940,000,000	1,94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백조원코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보미중철건설	BB+ 이하	5,820,000,000	5,820,000,000	5,820,000,000	5,82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브리지하운항공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비메스지피트너스	BB+ 이하	1,455,000,000	1,455,000,000	1,455,000,000	1,45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비투케이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삼영개발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세원공업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삼흥시	BB+ 이하	4,850,000,000	4,850,000,000	4,850,000,000	4,85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삼화주철공업	BB+ 이하	1,940,000,000	1,940,000,000	1,940,000,000	1,94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삼원식품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석영인터프라이즈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선진풍운	BB+ 이하	2,910,000,000	2,910,000,000	2,910,000,000	2,91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성진이에스티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성원밀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성원정밀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세원테크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세원수신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세원지	BB+ 이하	4,850,000,000	4,850,000,000	4,850,000,000	4,85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세원정밀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승원특수금속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신영금속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신영건구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원리정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세티지아이앤씨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아성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이성산업개발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아세아유니온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아스텍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아이티블유아이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아이릭스인내셔널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아이서브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아이에스피	BB+ 이하	1,940,000,000	1,940,000,000	1,94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양일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업카이트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에스아이디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에스케이이엘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에이치.케이.씨	BB+ 이하	1,940,000,000	1,940,000,000	1,94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에이치엠금융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에이치케이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영지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영림목재	BB+ 이하	1,940,000,000	1,940,000,000	1,94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영우디지털	BB+ 이하	1,940,000,000	1,940,000,000	1,94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영진케이볼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영진랜드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오도엠아이티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우성안전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웅양건설	BB+ 이하	2,910,000,000	2,910,000,000	2,91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원방주철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헬스텔	BB+ 이하	1,940,000,000	1,940,000,000	1,94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유건트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유니트힐	BB+ 이하	1,940,000,000	1,940,000,000	1,94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유성하이테크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유성산진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웅성테크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이니텍기계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이폴리머	BB+ 이하	2,425,000,000	2,425,000,000	2,42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이피에스솔루션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인텔실강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일신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진한솔라이드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정명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제신약품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제이에스지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제일건설	BB+ 이하	4,850,000,000	4,850,000,000	4,85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제일트림스	BB+ 이하	1,455,000,000	1,455,000,000	1,45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제우팩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중앙산업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지신화학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전미식품	BB+ 이하	2,910,000,000	2,910,000,000	2,910,000,000	2012-06-29	2009-06-29	2,910,000,000	2012-06-29		
기초자산	진보자원개발	BB+ 이하	1,940,000,000	1,940,000,000	1,940,000,000	2012-06-29	2009-06-29	1,940,000,000	2012-06-29		
기초자산	진산스틸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12-06-29	2009-06-29	485,000,000	2012-06-29		
기초자산	진원산업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12-06-29	2009-06-29	970,000,000	2012-06-29		
기초자산	청어피농업회사법인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12-06-29	2009-06-29	970,000,000	2012-06-29		
기초자산	코리아데이터카드	BB+ 이하	2,910,000,000	2,910,000,000	2,910,000,000	2012-06-29	2009-06-29	2,910,000,000	2012-06-29		
기초자산	큐앤스브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12-06-29	2009-06-29	485,000,000	2012-06-29		
기초자산	태백금속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12-06-29	2009-06-29	970,000,000	2012-06-29		
기초자산	태백주철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12-06-29	2009-06-29	485,000,000	2012-06-29		
기초자산	태사리시이클링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12-06-29	2009-06-29	970,000,000	2012-06-29		
기초자산	티아이엠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12-06-29	2009-06-29	485,000,000	2012-06-29		
기초자산	피워팩스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12-06-29	2009-06-29	485,000,000	2012-06-29		
기초자산	풍한금속공업	BB+ 이하	2,910,000,000	2,910,000,000	2,910,000,000	2012-06-29	2009-06-29	2,910,000,000	2012-06-29		
기초자산	한국네트인	BB+ 이하	1,940,000,000	1,940,000,000	1,940,000,000	2012-06-29	2009-06-29	1,940,000,000	2012-06-29		
기초자산	한미오앤에프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12-06-29	2009-06-29	485,000,000	2012-06-29		
기초자산	한백뉴로텍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12-06-29	2009-06-29	970,000,000	2012-06-29		
기초자산	한울종합건설	BB+ 이하	4,850,000,000	4,850,000,000	4,850,000,000	2012-06-29	2009-06-29	4,850,000,000	2012-06-29		
기초자산	한중제약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12-06-29	2009-06-29	485,000,000	2012-06-29		
기초자산	한대철강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12-06-29	2009-06-29	970,000,000	2012-06-29		
기초자산	현대티엘알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12-06-29	2009-06-29	485,000,000	2012-06-29		
기초자산	호성사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12-06-29	2009-06-29	485,000,000	2012-06-29		
기초자산	호진실업	BB+ 이하	4,850,000,000	4,850,000,000	4,850,000,000	2012-06-29	2009-06-29	4,850,000,000	2012-06-29		
기초자산	화성철강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12-06-29	2009-06-29	485,000,000	2012-06-29		
기초자산	화인제미칼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12-06-29	2009-06-29	970,000,000	2012-06-29		
기초자산	초원산업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12-06-29	2009-06-29	485,000,000	2012-06-29		
기초자산	웹스트시스템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12-06-29	2009-06-29	485,000,000	2012-06-29		
기초자산	하가리이노비전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12-06-29	2009-06-29	970,000,000	2012-06-29		
기초자산	신상에프에이	BB+ 이하	9,700,000,000	9,700,000,000	9,700,000,000	2012-06-29	2009-06-29	9,700,000,000	2012-06-29		
기초자산	신우	BB+ 이하	3,880,000,000	3,880,000,000	3,880,000,000	2012-06-29	2009-06-29	3,880,000,000	2012-06-29		
기초자산	케이디씨정보통신	BB+ 이하	2,910,000,000	2,910,000,000	2,910,000,000	2012-06-29	2009-06-29	2,910,000,000	2012-06-29		
기초자산	신성이엔지	BB+ 이하	9,700,000,000	9,700,000,000	9,700,000,000	2012-06-29	2009-06-29	9,700,000,000	2012-06-29		
국민은행2901이표	은행채	AAA	80,000,000,000	80,000,000,000	80,000,000,000	2011.01.22	2009.01.22	80,000,000,000	2011.01.22	4.35	KB투자증권, 하나대우증권
국민은행2901할인일01	은행채	AAA	10,000,000,000	10,000,000,000	10,000,000,000	2010.01.30	2009.01.30	10,000,000,000	2010.01.30	3.49	KB투자증권
국민은행2901할인일01	은행채	AAA	10,000,000,000	10,000,000,000	10,000,000,000	2010.08.09	2009.02.09	10,000,000,000	2010.08.09	3.93	KB투자증권
국민은행2901할인일01	은행채	AAA	30,000,000,000	30,000,000,000	30,000,000,000	2010.01.20	2009.01.20	30,000,000,000	2010.01.20	3.28	KB투자증권
국민은행2901할인일01	은행채	AAA	10,000,000,000	10,000,000,000	10,000,000,000	2010.02.02	2009.02.02	10,000,000,000	2010.02.02	3.23	KB투자증권, 키움증권
국민은행2901할인일01	은행채	AAA	10,000,000,000	10,000,000,000	10,000,000,000	2010.02.04	2009.02.04	10,000,000,000	2010.02.04	3.18	KB투자증권
국민은행2901할인일01	은행채	AAA	10,000,000,000	10,000,000,000	10,000,000,000	2010.08.06	2009.02.06	10,000,000,000	2010.08.06	3.66	KB투자증권
국민은행2901할인일01	은행채	AAA	10,000,000,000	10,000,000,000	10,000,000,000	2010.12.31	2009.12.31	10,000,000,000	2010.12.31	6.27	KB투자증권, 키움증권
국민은행2901할인일01	은행채	AAA	80,000,000,000	80,000,000,000	80,000,000,000	2010.01.13	2009.01.13	80,000,000,000	2010.01.13	4.22	KB투자증권, 하나대우증권
국민은행2901할인일01	은행채	AAA	10,000,000,000	10,000,000,000	10,000,000,000	2010.01.16	2009.01.16	10,000,000,000	2010.01.16	4.65	KB투자증권, 키움증권
국민은행2901할인일01	은행채	AAA	50,000,000,000	50,000,000,000	50,000,000,000	2010.01.30	2009.01.30	50,000,000,000	2010.01.30	3.5	KB투자증권, 키움증권
국민은행2901할인일01	은행채	AAA	40,000,000,000	40,000,000,000	40,000,000,000	2010.02.06	2009.02.06	40,000,000,000	2010.02.06	3.3	KB투자증권, 키움증권

우리은행12-12이2간	은행채	우리은행	AAA	80,000,000,000	80,000,000,000		2008.12.26	2010.12.26	5.89	X8투자증권, 하나대우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하나은행09-01월12간2	은행채	하나은행	AAA	10,000,000,000	10,000,000,000		2009.01.22	2010.01.22	3.52	X8투자증권
하나은행09-01이24	은행채	하나은행	AAA	50,000,000,000	50,000,000,000		2009.01.22	2011.01.22	4.35	신영증권, 키움증권
하나은행09-02월12	은행채	하나은행	AAA	10,000,000,000	10,000,000,000		2009.02.06	2010.02.06	3.25	키움증권
SC제일은행09-02월01-	은행채	SC제일은행	AAA	40,000,000,000	40,000,000,000		2009.02.06	2010.02.06	3.25	신영증권, 키움증권, X8투자증권
롯데카드122	여전채	롯데카드	AA-	20,000,000,000	20,000,000,000		2009.01.16	2010.01.16	5.48	굿모닝신한증권, 우리투자증권
삼성카드1797	여전채	삼성카드	AA0	20,000,000,000	20,000,000,000		2008.12.18	2011.12.18	8.44	한국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신한카드1340	여전채	신한카드	AA0	20,000,000,000	20,000,000,000		2008.12.18	2011.12.18	8.44	동양증권, 동부증권
현대카드166	여전채	현대카드	AA0	20,000,000,000	20,000,000,000		2008.12.18	2011.12.18	8.44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
현대카드1997	여전채	현대카드	AA0	20,000,000,000	20,000,000,000		2009.01.22	2012.01.22	6.09	대우증권, 키움증권
신세계117	회사채	신세계	AA+	50,000,000,000	50,000,000,000		2009.02.25	2012.02.25	5.3	한국투자증권
신세계118	회사채	신세계	AA+	50,000,000,000	50,000,000,000		2009.05.07	2012.05.07	4.89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E120-2	회사채	E1	AA-	60,000,000,000	60,000,000,000		2009.06.26	2012.06.26	5.32	이트레이드증권, 하이투자증권, 하나대우증권
LG화학43	회사채	LG화학	AA0	40,000,000,000	40,000,000,000		2009.04.29	2012.04.29	4.85	우리투자증권
SK247-1	회사채	SK	AA+	70,000,000,000	70,000,000,000		2009.06.04	2012.06.04	4.88	SK증권, 삼성증권
SK에너지21-1	회사채	SK에너지	AA+	40,000,000,000	40,000,000,000		2009.04.15	2012.04.15	4.94	SK증권, 삼성증권
		계		3,777,725,000,000	3,777,725,000,000	2,817,725,000,000				

신보2008 제3차 P-CBO 기초자산명세

단위:억원

순번	회사명	신용등급	금액
1	여천NCC	A	79.2
2	계룡건설산업	A-	79.2
3	삼환기업	BBB+	78.0
4	해태제과식품	BBB+	78.0
5	대우자동차판매	BBB	117.0
6	동원시스템즈	BBB	117.0
7	현대종합상사	BBB-	413.7
8	서희건설	BBB-	11.0
9	휴비스	BBB-	78.0
10	로케트전기	BB+ 이하	60.8
11	모나미	BB+ 이하	76.8
12	알티전자	BB+ 이하	115.2
13	대왕이앤씨	BB+ 이하	4.7
14	대전약품	BB+ 이하	3.1
15	비타민하우스	BB+ 이하	4.7
16	신창건설	BB+ 이하	49.4
17	하나종합건설	BB+ 이하	7.0
18	대보세라믹스	BB+ 이하	11.0
19	마프로	BB+ 이하	3.8
20	우리철강	BB+ 이하	2.1
21	에이스종합건설	BB+ 이하	31.7
22	콤텍시스템	BB+ 이하	15.8
23	솔버스	BB+ 이하	15.8
24	아이씨디	BB+ 이하	7.9
25	계성	BB+ 이하	4.0
26	광원목재	BB+ 이하	23.8
27	글로벌통상	BB+ 이하	23.8
28	금호전선	BB+ 이하	4.0
29	남성	BB+ 이하	39.6
30	다운나라	BB+ 이하	7.9
31	대국아이엔티	BB+ 이하	4.0
32	대명아이티에스	BB+ 이하	15.8
33	대양상선	BB+ 이하	118.9
34	대협철강	BB+ 이하	23.8
35	덕현금속	BB+ 이하	7.9
36	동광석회공업	BB+ 이하	4.0
37	동북쇼핑	BB+ 이하	15.8
38	동성석유	BB+ 이하	4.0
39	동화씨마	BB+ 이하	39.6
40	드림스코	BB+ 이하	39.6
41	드림포크	BB+ 이하	4.0
42	디씨에프트랙	BB+ 이하	31.7
43	디씨엘베어링	BB+ 이하	15.8
44	디엠에스	BB+ 이하	39.6
45	라운건설	BB+ 이하	15.8
46	루멘스	BB+ 이하	39.6
47	림스텍	BB+ 이하	7.9
48	마이크로필터	BB+ 이하	23.8
49	만복철강	BB+ 이하	23.8
50	메타텍	BB+ 이하	4.0
51	명성기업	BB+ 이하	7.9
52	부일이앤씨	BB+ 이하	15.8
53	삼선로직스	BB+ 이하	118.9

54	삼영플랜트	BB+ 이하	4.0
55	삼일기업	BB+ 이하	4.0
56	서울금속	BB+ 이하	23.8
57	성수	BB+ 이하	7.9
58	성우시앤시	BB+ 이하	55.5
59	성화식품	BB+ 이하	15.8
60	세정	BB+ 이하	110.9
61	세정이십일	BB+ 이하	39.6
62	신일씨엠	BB+ 이하	15.8
63	신화인터크루	BB+ 이하	15.8
64	씨유알디	BB+ 이하	39.6
65	아이엠티글로벌	BB+ 이하	7.9
66	아톤텔레콤	BB+ 이하	15.8
67	안성공업	BB+ 이하	4.0
68	알토	BB+ 이하	39.6
69	에너지솔루션즈	BB+ 이하	39.6
70	에스엠우드	BB+ 이하	4.0
71	에스제이테크	BB+ 이하	79.2
72	에스피피조선	BB+ 이하	118.9
73	엘에스폼웍	BB+ 이하	4.0
74	에진에프앤지	BB+ 이하	15.8
75	우성케미칼	BB+ 이하	15.8
76	우진메디텍	BB+ 이하	4.0
77	위비스	BB+ 이하	39.6
78	유비온	BB+ 이하	11.9
79	윤창기공	BB+ 이하	11.9
80	자루	BB+ 이하	15.8
81	정우금속공업	BB+ 이하	39.6
82	중앙엘앤비	BB+ 이하	15.8
83	진솔건설	BB+ 이하	15.8
84	진양해운	BB+ 이하	39.6
85	청광	BB+ 이하	39.6
86	청보산업	BB+ 이하	15.8
87	청산화학	BB+ 이하	4.0
88	케이엔더블유	BB+ 이하	23.8
89	코레스	BB+ 이하	39.6
90	코스탈파워	BB+ 이하	23.8
91	태성포리텍	BB+ 이하	4.0
92	텔로드	BB+ 이하	23.8
93	트라코월드	BB+ 이하	4.0
94	패널뱅크	BB+ 이하	4.0
95	풍림철강	BB+ 이하	7.9
96	풍양상사	BB+ 이하	15.8
97	한국다크로	BB+ 이하	4.0
98	한국축산의희망서울사료	BB+ 이하	39.6
99	한성물류운반기계	BB+ 이하	4.0
100	한중	BB+ 이하	15.8
101	현대제이콤	BB+ 이하	39.6
102	홍창산업	BB+ 이하	7.9
103	화성판넬	BB+ 이하	4.0
계			3,378.5

주) P-CBO 발행시점의 신용등급임

신보채안펀드 제1차 P-CBO 기초자산명세

단위:억원

NO	업체명	신용등급	금액
1	대우캐피탈	A+	573
2	두산캐피탈	A+	573
3	두산인프라코어	A	388
4	두산중공업	A	287
5	대한전선	A-	485
6	대한해운	A-	291
7	STX	A-	970
8	SK건설	A-	679
9	대우건설	A-	485
10	우리캐피탈	A-	478
11	효성캐피탈	A-	287
12	고려개발	A-	287
13	한화	A-	970
14	한솔제지	BBB+	970
15	코오롱	BBB+	776
16	FNC코오롱	BBB+	291
17	금호타이어	BBB+	388
18	해태제과	BBB+	485
	계		9,661

주) P-CBO 발행시점의 신용등급임

신보채안펀드 제2차 P-CBO 기초자산명세

단위:억원

NO.	업체명	신용등급	금액
1	대우캐피탈	A+	382
2	두산캐피탈	A+	478
3	두산중공업	A	970
4	여천NCC	A	485
5	우리캐피탈	A-	287
6	효성캐피탈	A-	287
7	SK건설	A-	194
8	금호타이어	BBB+	97
9	한라건설	BBB+	430
10	금호석유화학	BBB	485
11	아시아나항공	BBB	485
12	대우자동차판매	BBB	388
13	동부제철	BBB	485
14	코오롱건설	BBB	485
15	금호피앤비화학	BBB-	291
16	뉴코아	BBB-	291
17	휴비스	BBB-	97
18	이랜드월드	BBB-	291
19	성우종합건설	BBB-	334
	계		7,240.5

주) P-CBO 발행시점의 신용등급임

신보희망디딤돌 제1차 P-CBO 기초자산명세

단위:억원, %

NO.	업체명	총액	금액
1	대한해운	A-	194
2	크라운제과	BBB+	194
3	스콧정보통신	BB+ 이하	5
4	대봉아크로텍	BB+ 이하	29
5	케이엘에스	BB+ 이하	29
6	태경전기산업	BB+ 이하	5
7	대창에이치알에스지	BB+ 이하	49
8	대주중공업	BB+ 이하	58
9	호창건설	BB+ 이하	5
10	씨싸이트	BB+ 이하	29
11	부국이엔지	BB+ 이하	5
12	아이언에이지	BB+ 이하	5
13	코모스	BB+ 이하	49
14	제이씨엔지니어링	BB+ 이하	5
15	수경테크	BB+ 이하	5
16	모나미	BB+ 이하	96
17	유성티엔에스	BB+ 이하	48
18	경인	BB+ 이하	19
19	아진스크린	BB+ 이하	10
20	대륙테크놀러지	BB+ 이하	19
21	성일토탈프린팅	BB+ 이하	19
22	리스피엔씨	BB+ 이하	29
23	에스앤비	BB+ 이하	29
24	지에이엠	BB+ 이하	10
25	엘드건설	BB+ 이하	29
26	티지에스파이프	BB+ 이하	19
27	오킨스전자	BB+ 이하	29
28	미라콤아이앤씨	BB+ 이하	19
29	대륙금속	BB+ 이하	29
30	코아스틸	BB+ 이하	39
31	슈가버블	BB+ 이하	29
32	에스와이패널	BB+ 이하	19
33	명진선박	BB+ 이하	29
34	영화금속	BB+ 이하	29
35	제주팩	BB+ 이하	5

36	디에이치폴리	BB+ 이하	5
37	에이치앤지	BB+ 이하	10
38	세호	BB+ 이하	10
39	바이텍정보통신	BB+ 이하	10
40	영공	BB+ 이하	10
41	토암콘크리트	BB+ 이하	5
42	이티에이치	BB+ 이하	19
43	현중건설	BB+ 이하	10
44	대림전선	BB+ 이하	19
45	이강물산	BB+ 이하	10
46	유진정밀	BB+ 이하	19
47	신기방적	BB+ 이하	10
48	에스티에스반도체	BB+ 이하	97
49	와이지-원	BB+ 이하	97
50	비케이엘씨디	BB+ 이하	48
51	성우하이텍	BB+ 이하	97
52	능원금속공업	BB+ 이하	48
53	씨유산업개발	BB+ 이하	49
54	웅진종합특수강	BB+ 이하	49
55	두올상사	BB+ 이하	49
56	소망화장품	BB+ 이하	49
57	세신전자	BB+ 이하	97
58	한신공영	BB+ 이하	194
59	HS바이오팜	BB+ 이하	29
60	아비스타	BB+ 이하	68
61	신성통상	BB+ 이하	96
	계		2,419.75

주) P-CBO 발행시점의 신용등급임

신보희망디딤돌 제2차 P-CBO 기초자산명세

단위:억원

NO.	업체명	신용등급	금액
1	계룡건설산업	A-	97
2	삼환까뮤	BBB-	97
3	서진산업	BBB-	146
4	대경건설	BB+ 이하	13
5	미리넷	BB+ 이하	23
6	세하	BB+ 이하	54
7	이토건설	BB+ 이하	13
8	대호산업	BB+ 이하	6
9	신일산업	BB+ 이하	26
10	예당엔터테인먼트	BB+ 이하	14
11	대한방직	BB+ 이하	96
12	신성통상	BB+ 이하	96
13	성우하이텍	BB+ 이하	146
14	에스티에스반도체통신	BB+ 이하	97
15	와이지-원	BB+ 이하	97
16	유성티엘에스	BB+ 이하	48
17	화인텍	BB+ 이하	96
18	김스클럽마트	BB+ 이하	96
19	보르네오가구	BB+ 이하	68
20	디에스제강	BB+ 이하	15
21	삼미식품	BB+ 이하	29
22	세미텍	BB+ 이하	49
23	인스프리트	BB+ 이하	19
24	코미코	BB+ 이하	19
25	휴먼텍코리아	BB+ 이하	97
26	건아엔터프라이즈	BB+ 이하	5
27	경동건설	BB+ 이하	49
28	광신엔터프라이즈	BB+ 이하	29
29	글로벌엠에프지	BB+ 이하	19
30	금강기건	BB+ 이하	19
31	대신철강	BB+ 이하	49
32	대창양회	BB+ 이하	10
33	대흥철강	BB+ 이하	10
34	덕광중공업	BB+ 이하	10
35	동아산업	BB+ 이하	29
36	동양메닉스	BB+ 이하	19
37	동양키친나라	BB+ 이하	5
38	동영산업	BB+ 이하	19
39	동영플러스	BB+ 이하	19
40	동인기연	BB+ 이하	19
41	동철	BB+ 이하	19
42	디엔씨엔지니어링	BB+ 이하	10
43	디자인플랜트	BB+ 이하	10

44	디케이산업	BB+ 이하	10
45	럭키알텍	BB+ 이하	10
46	리트코	BB+ 이하	49
47	만성스텐	BB+ 이하	29
48	메이저텍	BB+ 이하	10
49	범양이앤씨	BB+ 이하	39
50	보아스건설	BB+ 이하	19
51	부일로지스	BB+ 이하	10
52	비에스테크	BB+ 이하	10
53	삼부선재	BB+ 이하	10
54	삼신금속	BB+ 이하	10
55	삼신이노텍	BB+ 이하	24
56	삼정산업	BB+ 이하	10
57	상원산업개발	BB+ 이하	19
58	상진미크론	BB+ 이하	49
59	서웅약품	BB+ 이하	10
60	성신중공업	BB+ 이하	5
61	성호건설	BB+ 이하	29
62	세신버팔로	BB+ 이하	29
63	세양정공	BB+ 이하	19
64	소이	BB+ 이하	5
65	솔버스	BB+ 이하	19
66	송강산업	BB+ 이하	78
67	시스온칩	BB+ 이하	10
68	신한제강	BB+ 이하	10
69	실로정보시스템	BB+ 이하	5
70	쎬크	BB+ 이하	10
71	씨티에스	BB+ 이하	5
72	아봉금속공업	BB+ 이하	10
73	아산	BB+ 이하	49
74	아이지스	BB+ 이하	10
75	에스엔에스인더스트리	BB+ 이하	10
76	에스엔지	BB+ 이하	19
77	에스제이테크	BB+ 이하	29
78	엔피텍	BB+ 이하	15
79	엠포엠	BB+ 이하	10
80	여원미디어한국가드너	BB+ 이하	10
81	우진알파	BB+ 이하	49
82	우창공업	BB+ 이하	39
83	원일	BB+ 이하	29
84	원스틸	BB+ 이하	39
85	원텍이앤지	BB+ 이하	10
86	유니메탈	BB+ 이하	10
87	유엘피	BB+ 이하	19
88	유토파인	BB+ 이하	10
89	재호물산	BB+ 이하	10

90	전단	BB+ 이하	10
91	정원엔지니어링	BB+ 이하	5
92	제이알피	BB+ 이하	10
93	제이엠피솔루션	BB+ 이하	5
94	주성폴리머	BB+ 이하	5
95	중일인터내셔널	BB+ 이하	29
96	지앤오코퍼레이션	BB+ 이하	19
97	지에이엠	BB+ 이하	5
98	지와이인텍	BB+ 이하	10
99	지학사	BB+ 이하	29
100	진서	BB+ 이하	10
101	진호	BB+ 이하	5
102	체스투어즈	BB+ 이하	29
103	케이엠티	BB+ 이하	5
104	코스텍	BB+ 이하	10
105	코에버어패럴	BB+ 이하	19
106	크리스패션	BB+ 이하	39
107	태성코우전자	BB+ 이하	15
108	트라이튼테크	BB+ 이하	10
109	티지유통	BB+ 이하	10
110	풍미사	BB+ 이하	10
111	프라임팜	BB+ 이하	5
112	프로브	BB+ 이하	5
113	한겨레철강	BB+ 이하	10
114	한국엔지니어링	BB+ 이하	10
115	한국인스팜	BB+ 이하	5
116	한국특장기술	BB+ 이하	10
117	한라산업개발	BB+ 이하	97
118	한림	BB+ 이하	10
119	한미상재	BB+ 이하	10
120	한미시스템	BB+ 이하	10
121	한백전자	BB+ 이하	10
122	한본	BB+ 이하	5
123	한창하이메탈	BB+ 이하	10
124	호전실업	BB+ 이하	49
125	화인	BB+ 이하	10
126	환웅정공	BB+ 이하	29
127	회림철강	BB+ 이하	49
128	휴브글로벌	BB+ 이하	10
	계		3,440.5

주) P-CBO 발행시점의 신용등급임

신보희망디딤돌 제3차 P-CBO 기초자산명세

단위:억원

NO.	업체명	신용등급	금액
1	가나레포츠	BB+ 이하	10
2	강릉건설	BB+ 이하	10
3	강원엘피씨	BB+ 이하	19
4	골든듀	BB+ 이하	15
5	광우정보통신	BB+ 이하	10
6	구보인터내셔널	BB+ 이하	10
7	그리마건설	BB+ 이하	49
8	극동철강	BB+ 이하	10
9	금아플로우	BB+ 이하	10
10	기웅스텐레스	BB+ 이하	5
11	꿈그린	BB+ 이하	5
12	나진스틸	BB+ 이하	15
13	남명	BB+ 이하	15
14	남양산업	BB+ 이하	5
15	남영건설	BB+ 이하	29
16	내일엔지니어링	BB+ 이하	5
17	대건씨앤에스	BB+ 이하	10
18	대구농산	BB+ 이하	10
19	대덕에프알디	BB+ 이하	10
20	대동신관	BB+ 이하	15
21	대부인더스	BB+ 이하	10
22	대영유비텍	BB+ 이하	5
23	대청공영	BB+ 이하	10
24	대청산업개발	BB+ 이하	19
25	더부자원	BB+ 이하	10
26	덕천판지	BB+ 이하	10
27	데이썬	BB+ 이하	10
28	데코탑	BB+ 이하	5
29	도시인더스트리	BB+ 이하	5
30	동성정공	BB+ 이하	10
31	동우씨엠	BB+ 이하	5
32	동원테크	BB+ 이하	29
33	두성산업	BB+ 이하	29
34	룩현산업개발	BB+ 이하	5
35	리프론	BB+ 이하	10
36	만성스텐	BB+ 이하	24
37	말문이터지는영어	BB+ 이하	19
38	명민시스템	BB+ 이하	5
39	몬티스타텔레콤	BB+ 이하	29
40	미도컴퍼니	BB+ 이하	10
41	반석중공업	BB+ 이하	10
42	백산철강	BB+ 이하	19
43	백조생크	BB+ 이하	5

44	보미종합건설	BB+ 이하	58
45	브리지해운항공	BB+ 이하	5
46	비에스지파트너스	BB+ 이하	15
47	비투케이	BB+ 이하	5
48	삼양개발	BB+ 이하	5
49	세원공업	BB+ 이하	10
50	삼흥사	BB+ 이하	49
51	삼화주철공업	BB+ 이하	19
52	상일식품	BB+ 이하	10
53	석영엔터프라이즈	BB+ 이하	10
54	선진통운	BB+ 이하	29
55	섬진이에스티	BB+ 이하	5
56	성안염직	BB+ 이하	10
57	성형정밀	BB+ 이하	5
58	세명테크	BB+ 이하	10
59	세민수산	BB+ 이하	5
60	세원전자	BB+ 이하	49
61	세화정밀	BB+ 이하	5
62	승림특수금속	BB+ 이하	5
63	신영금속	BB+ 이하	10
64	신일건구	BB+ 이하	10
65	썬리취	BB+ 이하	10
66	씨티지아이앤씨	BB+ 이하	10
67	아성	BB+ 이하	5
68	아성산업개발	BB+ 이하	10
69	아세아유니온	BB+ 이하	10
70	아스픽	BB+ 이하	10
71	아이더블유아이	BB+ 이하	10
72	아이렉스인터내셔널	BB+ 이하	5
73	아이서브	BB+ 이하	5
74	아이에스피	BB+ 이하	19
75	양일	BB+ 이하	10
76	업카이트	BB+ 이하	10
77	에스아이디	BB+ 이하	10
78	에스케이이엠	BB+ 이하	10
79	에이치.케이.씨	BB+ 이하	19
80	에이치엠금속	BB+ 이하	10
81	에이치케이	BB+ 이하	5
82	엠지	BB+ 이하	10
83	영림목재	BB+ 이하	19
84	영우디지털	BB+ 이하	19
85	영전케이블	BB+ 이하	10
86	영진랜드	BB+ 이하	5
87	오토엠아이티	BB+ 이하	5
88	우성안전	BB+ 이하	5
89	운양건설	BB+ 이하	29

90	원방주철	BB+ 이하	10
91	웰스틸	BB+ 이하	19
92	유켄트	BB+ 이하	10
93	유니트월	BB+ 이하	19
94	유성하이테크	BB+ 이하	5
95	유양산전	BB+ 이하	5
96	윤성테크	BB+ 이하	5
97	이니텍기계	BB+ 이하	10
98	이폴리머	BB+ 이하	24
99	이피에스솔루션	BB+ 이하	5
100	인텔철강	BB+ 이하	10
101	일신	BB+ 이하	10
102	전한슬라이드	BB+ 이하	5
103	정명	BB+ 이하	10
104	제신약품	BB+ 이하	10
105	제이에스지	BB+ 이하	5
106	제일건설	BB+ 이하	49
107	제일트림스	BB+ 이하	15
108	제주팩	BB+ 이하	5
109	중앙산업	BB+ 이하	5
110	지산화학	BB+ 이하	10
111	진미식품	BB+ 이하	29
112	진보자원개발	BB+ 이하	19
113	진산스틸	BB+ 이하	5
114	진원산업	BB+ 이하	10
115	청아띠농업회사법인	BB+ 이하	10
116	코리아더카드	BB+ 이하	29
117	큐앤솔브	BB+ 이하	5
118	태백금속	BB+ 이하	10
119	태백주철	BB+ 이하	5
120	태서리사이클링	BB+ 이하	10
121	티아이엠	BB+ 이하	5
122	파워렉스	BB+ 이하	5
123	풍한금속공업	BB+ 이하	29
124	한국네트인	BB+ 이하	19
125	한미오앤에프	BB+ 이하	5
126	한백뉴로텍	BB+ 이하	10
127	한울종합건설	BB+ 이하	49
128	한중제약	BB+ 이하	5
129	현대철강	BB+ 이하	10
130	현대티엘알	BB+ 이하	5
131	호상사	BB+ 이하	5
132	호전실업	BB+ 이하	49
133	화성금속	BB+ 이하	5
134	화성철강	BB+ 이하	10
135	화인케미칼	BB+ 이하	5

136	효림산업	BB+ 이하	29
137	웨스트시스템	BB+ 이하	5
138	히가리아노비전	BB+ 이하	10
139	신성에프에이	BB+ 이하	97
140	신우	BB+ 이하	39
141	케이디씨정보통신	BB+ 이하	29
142	신성이엔지	BB+ 이하	97
	계		2,037

주) P-CBO 발행시점의 신용등급임

4.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금융위원회가 마이크로 크레딧(소액서민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계획안, 결과 포함)

1. 소액서민금융재단을 통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 휴면예금을 활용하여 저소득층의 취업·창업 지원 등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08.3월 소액서민금융재단 설립
- '08년, 빈곤아동 2천명·저신용자 4천명 등 1만여명과, 서울시 24개 전통시장 등 13개 단체에 총 271억원 지원
- '09년, 그 규모를 60%이상 확대하여 440억원 지원

< 소액서민금융재단 현황 >

	출 연	지 출
'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704억 원 - 은행대출 1,767억 원 - 보증대출 917억 원 - 저축은행 18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71억 원 - 소액대출 241억 원 - 소액보증 30억 원
'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29억 원 - 은행대출 894억 원 - 보증대출 232억 원 - 저축은행 3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40억 원 - 소액대출 400억 원 - 소액보증 40억 원

2. 서민의 자활지원을 위한 미소금융(마이크로 크레딧)사업 대폭 확대

- ※ 별첨 1 : 미소금융확대방안 보도자료
- 별첨 2 : 미소금융확대 세부시행 방안
- 별첨 3 : 미소금융사업 Q&A

(참고) 소액서민금융재단의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실적

☐ 2008년도 사업



2009년 8월말 기준

구분	특지사업자	지원금		대출현황		비고
		배정	교부	인원	금액	
소액 금융 사업	사회연대은행	25억원	25억원	144명	24.1억원	
	신나는조합	6억원	6억원	공동체 2개 개인 26명	6억원	
	함께일하는재단	20억원	20억원	11개 기업	15.6억원	
	신용회복위원회	120억원	120억원	4,093명	120억원	
	한마음금융	60억원	60억원	2,594명	60억원	
	전통시장소액대출 (서울시 14개 자치구 24개 전통시장)	10억원	10억원	408명	10억원	
	소계	241억원	241억원	공동체 2개 개인 7,265명 사회적기업 11개	235.7억원	
소액 보험 사업	13개 보험사	30억원	30억원	총 수혜자 3,323명(빈곤아동 2,005명, 부양자 1,318명 포함)		

□ 2009년도 사업

2009년 8월말 기준

구분	복지사업자	지원금		대출현황		비고
		배정	교부	인원	금액	
소액 금융 사업	해피월드복지재단	5억원	5억원	26명	4.6억원	
	소상공인진흥원	40억원	20억원	78명	14.7억원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	10억원	5억원	14명	4.1억원	
	신용회복위원회	90억원	90억원	2,894명	89.9억원	
	열매나눔재단	5억원	5억원	6개 기업	5억원	
	민생경제정책 연구소	10억원	5억원	1개 기업	1억원	
	민생포럼	10억원	5억원	2개 기업	0.7억원	
	전통시장소매대출	90억원	19.5억원	-	-	
소액 보험 사업	소계	260억원	154.5억원	개인 3,012명 사회적기업 9개	120억원	
	보험사	40억원	-	16개 광역시도와 협약 체결 완료 9월말까지 수혜자와 보험계약 체결 예정		

 금융위원회	<h1>보도자료</h1> <h2>9. 17(목) 17:00부터 보도가능</h2>	 소액서민금융재단 Microfinance Foundation (유엔예금관리재단)
---	--	---

작성부서	금융위원회·금융서비스국 중소기업금융과 소액서민금융재단 사무처		
책 임 자	금융위 배준수 과장(2156-9850) 소액서민금융재단 장훈기 처장(2084-7905) 문의전화 (국번없이)1600-5500	담 당 자	금융위 주흥만·서재홍사무관(2156-9851~2) 소액서민금융재단 양창엽 팀장(2084-7960)
배 포 일	2009. 9. 17(목)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총 8 매

제 목 : 서민의 자활지원을 위한 미소금융(마이크로 크레딧)사업 대폭 확대

- 향후 10년간 2조원 이상 지원(과거 10년간 지원 규모의 13배이상)
- 재정지원 없이 민간 기부 등을 중심으로 사업재원 조성·운영
- 「소액서민금융재단」을 「(가칭)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개편하여 미소금융사업을 총괄
- 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미소금융사업수행 법인을 전국 200~300여개로 확대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및 자원봉사자 위주 운영으로 『나눔과 봉사의 문화』 확산

□ 「제31차 비상경제대책회의」(9.17일)에서,
 현재 소액서민금융재단을 중심으로 수행중인 '무담보·소액대출'(Microcredit)을 미소금융사업으로 대폭 확대하여,
 서민의 원활한 자활을 지원할 수 있는 「미소(美少)금융* 확대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이를 금년 12월부터 시행키로 하였음

* 아름다운 소액대출(아름다울 美, 적을 少)로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

1. 추진 배경

□ 외환위기 이후 10여년간 양극화가 심화되어 중산층이 줄어들고 저소득층으로 전락한 서민층이 증가

○ 특히, 자활의지는 있으나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층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대출이 용이한 불법 사금융 등을 이용하게 되고 이에 따라 높은 이자부담과 불법 추심행위에 시달리는 사례가 많이 발생

* '09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등록대부업 대출 규모는 5.2조원

- 기존의 제도권 서민금융회사들도 2000년대 초반 소액신용대출 부실화 등으로 그 동안 PF대출 등 고위험·고수익위주의 영업에 치중한 결과 전통적 서민금융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그간 정부는 신용회복지원, 저금리 전환대출 등 다양한 서민금융대책*을 마련·시행해 왔으나, 경기침체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서민금융수요 충족에는 충분하지 못한 상황

* '09.8월 현재 서민금융 지원 현황

- 신용회복기금 : 채무재조정 50,327건, 전환대출(환승론) 14,561건
- 신용회복위원회 : 개인워크아웃('08년~) 120,410건, 개인프리워크아웃('09.4~) 4,561건
- 재래시장 및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2.0~3.5% → 2.0~2.2%)

□ 해외에서는 제도권 금융의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무담보 소액대출인 “마이크로 크레딧”이 민간에 의해 자생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국내에도 10여년전부터 도입되어 서민금융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나름대로 수행해 왔음

- 그간 일부 민간기부금과 재정을 재원으로 하는 “마이크로 크레딧”은 ‘08.3월 “마이크로 크레딧 뱅크(Microcredit Bank)” 역할을 하는 소액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을 계기로 그 규모가 확대**되는 등 새로운 轉機를 맞이하였음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08.3월)

** ‘00~’09년중 마이크로 크레딧 지원 규모(1,480억원)의 1/3이상(501억원)을 소액서민금융재단이 ‘08~’09년 2년간 공급

- 그러나, 정부와 민간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①규모 미흡*, ②전달체계의 비효율에 따른 중복 또는 과소 지원, ③적은 수의 수행기관 등에 따른 서민의 접근성 제약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08년 마이크로 크레딧 규모는 GDP의 0.005%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

- 이에 따라, 금번에 서민금융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면서 저소득층·저신용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대책을 강구하게 된 것임

2. 추진 내용

- ①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소액서민금융재단」을 (가칭)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개편하여 마이크로 크레딧의 중추적 기관으로 활용
- 미소금융중앙재단은 마이크로 크레딧 정책방향 결정, 사업의 가이드라인 설정, 미소금융 수행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컨설팅, 교육훈련, 지원정보의 통합관리 등 미소금융사업을 총괄하고,

- 동 재단은 지역별 미소금융수행 법인(미소금융 ○○지점) 및 동 법인의 지부 설립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200~300개의 전국적인 마이크로 크레딧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를 통해 미소금융사업을 수행
- 재계·금융권 등도 희망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미소금융재단을 설립·운영토록하고, 미소금융중앙재단에의 기부금을 동 재단에 배분
- 지역별 미소금융법인은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부터 대출재원 (초기에는 3~5억원) 및 일정수준의 운영비를 지원받아 직접 대출 및 회수, 자활컨설팅, 상담업무를 수행
- 동 법인은 지역내 사회공헌도가 높고 사회봉사의지가 있는 대표자 1명, 직원 2~5명으로 구성
- 자원봉사 취지를 감안하여 대표자는 무보수·명예직, 경험 많은 금융회사 퇴직자 등 기간요원은 월100만원 이하, 청년 자원 봉사자는 최소한의 실비 지급
- 제 1단계로 전국에 20~30개 정도의 지역법인을 설립하고,
 - 제 2단계로 기 설립 지역법인의 지부 확대 및 신규법인 설립 등을 통해 200~300개 규모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확대
-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지역별 미소금융법인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실적이 우수한 법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하고, 저조한 법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축소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유지

**② 재정지원 없이 향후 10년간 총 2조원이상(금년중 약 3천억원)의
기금을 조성**

* 지난 10년간('00~'09) 마이크로 크레딧 지원규모(1,480억원)의 13배 이상

- **재계**(전경련 소속회원기업) 기부금 약 1조원과 휴면예금* 출연금
(7천억원)을 포함한 금융권 기부금 1조원 이상으로 조성

* '09.9월 현재, 기 출연액 약 2천억원 외에 향후 10년간 매년 500억원
가량 출연될 것으로 예상

**③ 청년·금융회사 퇴직자 등 자원봉사자 위주로 운영인력을
채용하여 마이크로 크레딧의 지변을 확대**

- 전국 200~300개의 지역법인에 법인당 2~5명 수준의 자원
봉사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일정기간 봉사한 청년에 대해서는
취업시 추천서 발급 등을 통해 우대하고

-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의 핵심인력인
자활컨설팅 전문인력(RM)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나아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지역법인도 신설할 수 있도록 지원

④ 지원내용

- **영세사업자 운영자금** : 2년이상 영업자에 대해 원재료 구입,
시설 개·보수 자금 등 운영자금 지원

- **전통시장 상인대출** :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영세상인 운영
자금 지원

- **프랜차이즈 창업자금*** : 시장에서 검증을 받아 성공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업체와 연계하여 창업시 권리금 등 창업자금 지원

*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처음 시도

- **일반 창업자금** : 본인의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거나 기존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임차보증금 지원
- **공동대출** : 자활추진단체에 대해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
- **사회적기업 지원 자금** : 사회적육성기업법에 의해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해 운영자금을 지원

* 「사회적육성기업법」 상의 요건을 갖춰 취약계층에 일자리나 사회서비스(교육, 예술·관광·운동, 간병·가사지원 등)를 제공하는 회사(노동부장관 인증)

- 대출한도는 지원내용에 따라 500만원~1억원 이내
- 금리는 시장금리 이하로 적용(현시점 5% 수준)
- 상환기간은 지원내용에 따라 1~5년 분할 상환
(단, 기존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자의 대출내용과 달리 거치기간은 무이자로 운영)

⑤ 재계·금융권 등이 설립한 미소금융재단 운영

- 재계·금융권 등이 미소금융중앙재단에 지정기부한 자금을 배정받아 재계 및 금융권이 직접 자율성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
-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사업모델 개발, 표준운영방안 제시, 교육 훈련, 지원정보의 통합관리 등을 통해 재계·금융권 등이 설립한 미소금융재단의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 정부는 미소금융중앙재단을 세법상 특례기부단체로 지정하여 미소금융사업에 동참하는 재계·금융권 등에 대해 세제상 지원

3. 기대효과

- ① (저소득층의 자활지원) 자활의지가 있으나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층 및 영세사업자의 자활을 제도적으로 지원 가능
 - 지난 10년간 1,480억원(연평균 148억원)이 조성·공급되었으나, 향후 10년간 2조원 이상(연평균 2천억원 이상)이 조성·공급 되면 약 13배 이상 확대
 - 향후 10년간 약 20~25만 가구 이상의 저소득층들이 미소금융 사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
- ②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재계와 금융권이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자금을 기부하고, 직접 미소금융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이행
- ③ (나눔·봉사문화 확산) 미소금융지점 대표자, 금융회사 퇴직자·청년 자원봉사자 등이 미소금융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또한, 기부와 봉사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도 나눔과 봉사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 마련
- ④ (금융시스템의 보완·발전) 제도권 금융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고금리 사채 등 불법 사금융시장을 대체함으로써 서민·영세자영업자의 금융 이용기회를 부여하고 고금리 부담도 경감

4. 추진 일정

□ 사업 준비 ('09.9~11월)

- 소액서민금융재단을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개편(10월)
- 지역별 미소금융법인(미소금융지점) 설립준비 (9~11월)
-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 (10~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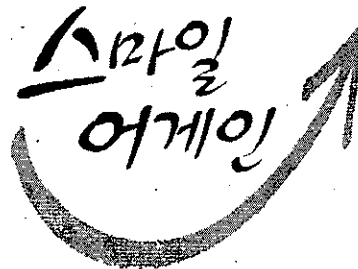
□ (1단계 사업) 지역별 미소금융법인 설립 ('09.12~'10.5)

- 20~30개 수준의 지역별 미소금융법인 설립 추진
- 재계·금융권 미소금융재단도 준비를 마치는대로 설립 추진

□ (2단계 사업) 지역별 네트워크를 단계적으로 200~300개로 확대 추진 ('10.6월~)

* 문의전화 : (국번없이) **1600-5500** (종합안내센터)

※ 별첨 : 1. 미소금융 확대방안
2. 미소금융사업 Q&A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별첨2〉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서민의 자활지원을 위한
미소금융 [美少金融 마이크로 크레딧] 확대방안

2009. 9. 17

금 융 위 원 회
소액서민금융재단

I. 마이크로 크레딧의 의의

II. 우리나라 마이크로 크레딧 현황 및 문제점

III. 추진 방안

IV. 기대효과

IV. 추진 일정

〈참고1〉 서민금융 지원현황

〈참고2〉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 현황

1. 마이크로 크레딧의 의의

1. 마이크로 크레딧(Micro-Credit) 발전과정

◇ 마이크로 크레딧은 일반적으로 제도권 금융회사와 거래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무담보 대출'을 의미

□ 70년대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등 제도금융권이 발달되지 않은 저개발국에서 민간주도로 빈민에 대한 소자본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출발

□ 80년대 들어 방글라데시 Grameen Bank*, 인도네시아 국영은행(BRI), 남미 ACCION(Action) 등의 성공사례가 알려지면서 전세계적으로 마이크로 크레딧이 확산

* 방글라데시어로 "마을"을 뜻하는 그라민뱅크는 '76년 Yunus교수 주도로 창업 자금 지원. 5명 단위의 여성그룹에게 평균 100달러를 무담보 대출하고 자금 상황에 연대책임 부과(회수율 98%) → '83년 은행으로 전환

□ 90년대부터 NGO가 운영하는 일부 마이크로 크레딧 기관이 예금을 받아 대출 재원을 확대하고자 은행 또는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전환

* 은행 전환 사례: BancoSol(볼리비아), Compartamos (멕시코), Mibanco(페루) 등

□ UN · WB · ADB 등 국제기구의 차관 · 무상원조가 마이크로 크레딧 확대에 큰 역할

○ UN은 '97년 Microcredit Summit Declaration을 채택

○ 특히, 국제기구가 중심이 되어 구성한 CGAP (Consultative Group to Assist the Poor)는 '95년부터 마이크로크레딧 발전을 위한 주요전략과 원칙을 확립하는 제도확산에 기여

2. 해외의 마이크로크레딧 유형

가. NGO형 (방글라데시 Grameen Bank, 남미 ACCION)

□(연혁) NGO들이 빈곤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금융사업을 시작한 데서 유래

□(운영) 대출재원은 기업 기부, 정부·국제기구 등의 지원에 의존하며, 대출시 통상 담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이자율은 시장금리 이상의 높은 수준

나. 조합형 (남미 FINCA Village Bank)

□(연혁) 각국별로 지역별 유대에 따라 전통적으로 계승되던 협동체를 전국단위로 조직화하면서 발전(우리나라의 신협)

* FINCA Village Bank의 경우, 1984년 볼리비아에서 시작된 이후 현재 남미·아프리카·아시아 등 23개국으로 확산

□(운영) 대출재원은 조합원 출자금·예금, 금융차입, 기업 기부에 의존하며, 조합원에게 소액(FINCA Village Bank의 경우 50달러)을 대출

다. 은행형 (인도네시아 국영은행 Bank Rakyat Indonesia)

□(연혁) '84년 기존 국영 농업 개발은행에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부(BRI unit desa)를 신설하여 농촌지역에 여·수신 제공 (우리나라 농수협의 상호금융)

□(운영) 대출재원은 일반은행처럼 예금(약 75%)에 의존하며, 상환 실적에 따라 대출한도를 인상하고, 이자율은 시장금리 이상이며, 지역주민을 고용하여 대출고객을 모니터링

Ⅱ. 우리나라 마이크로 크레딧 현황 및 문제점

1. 현 황

◇ 30여개의 민간단체가 재정, 지자체 예산, 소액서민금융재단 자금, 민간 기부금을 지원받아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수행

※ 정부, 지자체, 소액서민금융재단은 직접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민간단체에 자금만 지원

□ (사업수행기관) 2000년부터 (사)신나는조합 등 민간단체가 민간 기부금으로 창업자금 지원을 시작

○ '05년 재정(복지부), '08년 소액서민금융재단의 지원으로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 규모가 확대

□ (재원① : 재정) '05년부터 복지부는 예산으로 민간기관에 자금을 무이자로 대출('05~'08년 연 20억원, '09년 330억원)

* 지원대상 기관은 '05년에 사회연대은행·신나는 조합 등 2개 단체였으나 '09년 19개 단체로 확대

□ (재원② : 지자체) '09.5월, 서울시가 복지부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마이크로 크레딧 기관에 자금대출 개시(60억원)

□ (재원③ : 소액서민금융재단) '08.3월 금융회사 휴면예금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소액서민금융재단 설립 이후 대폭 확대

○ 기존의 마이크로 크레딧 수행기관 외에, 지자체(전통시장 지원), 신용회복위원회(금융채무불이행자 지원), 보험회사(소액서민보험)를 통한 지원도 실시

* '08년 271억원, '09년 440억원 지원

2. 문제점

① 수요에 비해 지원규모가 미흡 ⇨ 재원 확충 · 다양화

○ 경기침체 영향으로 인한 저소득계층의 실업증가로 자활금융 수요는 커진데 비해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움

○ 제도권 금융을 보완해 줄 마이크로 크레딧 지원규모는 크지 않음

▪ 우리나라(총 인구 및 GDP 대비 수혜자 및 지원액, '08년)

– 총 인구대비 0.014%(6,800여명), GDP대비 0.005%(470억원)

② 전달체계의 효율성이 낮고 추진기반이 취약 ⇨ 민간 참여 확대

○ 전달체계가 서로 연계되지 않아 중복지원의 소지가 크고, 재원조달 등에서 민간의 자발적 기반도 취약

* (예) 서울 거주 9등급 저신용 자영업자는 복지부 · 서울시 · 소액 서민금융재단 지원 민간단체 등에 중복 신청 가능

③ 서민들의 접근성이 제한 ⇨ 접근성 제고

○ 일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마이크로 크레딧이 지원되고 있으나 수행기관이 적어 수요자들의 접근이 제한적

◇ 글로벌 경제위기로 자활의지는 있으나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 · 영세자영업자 등은 제도권 금융이용이 제한되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私금융에까지 의존

◇ 그동안 정부 재정지원(지역신보 보증)을 확대하여 왔으나 보다 근본적으로 저신용 서민 · 영세 자영업자 등의 자활 지원을 위해 마이크로 크레딧 자금의 공급을 확대하고 제도화하는 대책 필요

Ⅲ. 추진 방안

【 기본 방향 】

- ①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소액서민금융재단」을 마이크로 크레딧의 중추적 기관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 개편
 - 총괄기능 : 마이크로 크레딧 정책방향 결정, 사업의 가이드라인 설정, 컨설팅, 교육, 정보의 통합관리 등
 - 자체 네트워크 구성·지원 기능 : 지역별로 미소금융을 직접 수행하는 법인인 미소금융○○지점 등을 공모하여 200~300개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수행
 - 재원 배분 기능 : 미소금융 수행법인에 대출 및 운영자금을 배분·지원
- ② 민간 기부 활성화를 통해 향후 10년간 총 2조원 이상 (금년중 약 3천억원)의 기금을 조성
 - 재계(전경련소속 회원기업 기부금) : 1조원 이상 (금년중 1천억원)
 - 금융권(휴면예금 및 기부금) : 1조원 이상 (금년중 2천억원)
 - ※ 재계·금융권 등의 기부금은 재계·금융권 등이 직접 운영하는 미소금융재단에 배분
- ③ 청년 자원봉사자·금융회사 퇴직자 등을 운영인력으로 활용하여 민간 자원봉사 주도로 마이크로 크레딧의 저변을 확대
- ④ 미소금융중앙재단의 자체 네트워크를 통해 금년 12월부터 1단계 사업을 시작하고, 내년 6월부터 2단계 전국사업으로 확대
 - 재계·금융권의 미소금융사업은 준비후 내년 1월부터 추진

1. 소액서민금융재단을 미소금융의 중추적 기구로 확대·개편

- 기존의 소액서민금융재단을 마이크로 크레딧 전국 네트워크의 중추기구(미소금융중앙재단)로 확대·개편
 - 미소금융중앙재단은 마이크로 크레딧 정책방향 결정, 사업 가이드라인 설정, 컨설팅, 교육, 정보의 통합관리 등 총괄 기능 수행
 -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를 통해 재단의 자체적인 미소금융사업 수행을 확대
 - 재계·금융권의 기부금을 받아 이를 재계·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미소금융재단에 배분

2. 미소금융 수행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 구축

-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전국의 영세상인 및 서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 미소금융법인을 공개모집
 - 동 법인을 미소금융○○지점으로 설립하여 해당 지역의 미소금융사업을 수행
 - 지역내 사회공헌도가 높고 사회봉사의지가 있는 대표자 1명과 금융회사 퇴직자·청년 등 자원봉사자 2~5명 등을 포함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
- 금년 12월부터 지역별로 미소금융의 업무를 시작하되, 2단계로 전국규모의 네트워크를 구성
 - (1단계: '09.12~'10.5) 20~30여개의 지역별 법인 설립을 추진
 - (2단계: '10.6~) 전국에 걸쳐 법인 설립 및 동 법인의 지부 확대 등을 통해 200~300개의 네트워크 구성

□ 미소금융지점은 자활자금지원 및 회수, 자활컨설팅 업무, 상담 등 마이크로 크레딧 업무를 수행

○ (대출) 서류심사, 현장실사 및 면접심사 등 체계적인 심사 절차를 거쳐 수요자 맞춤형 소액대출

- 대출재원은 초기 지점당 3~5억원에서 중장기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일정수준의 운영비를 지원

○ (자활 컨설팅)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속 전문가(RM) 등의 지원을 받아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 사업계획 및 입지선정, 마케팅, 재무 및 회계, 고객 서비스 등

○ (상담) ① 소액금융상담, 신용관리상담(부채클리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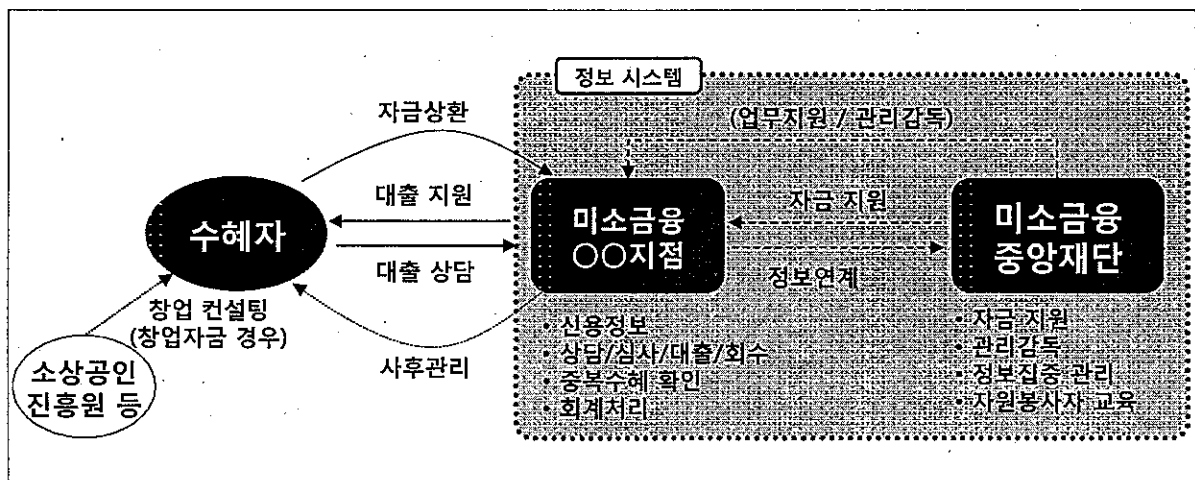
② 자활 컨설팅(소상공인지원센터 연계)

③ 신복위(채무재조정), 신복기금(전환대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구직)로의 연결·알선

□ 미소금융지점의 사무실은 서민들의 접근성이 높고 임차 비용이 들지 않는 사무공간을 활용

* (예시) 전통시장 상가, 마을회관, 공공기관·민간단체의 여유허간 활용(고용지원센터 44개, 소상공인지원센터 57개, 지방상의 71개)

< 지역법인 업무절차 >



3. 재계·금융권의 자율적 미소금융사업 확산

□ 재계·금융권 등이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이행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직접 설립·운영하는 재단을 미소금융중앙재단에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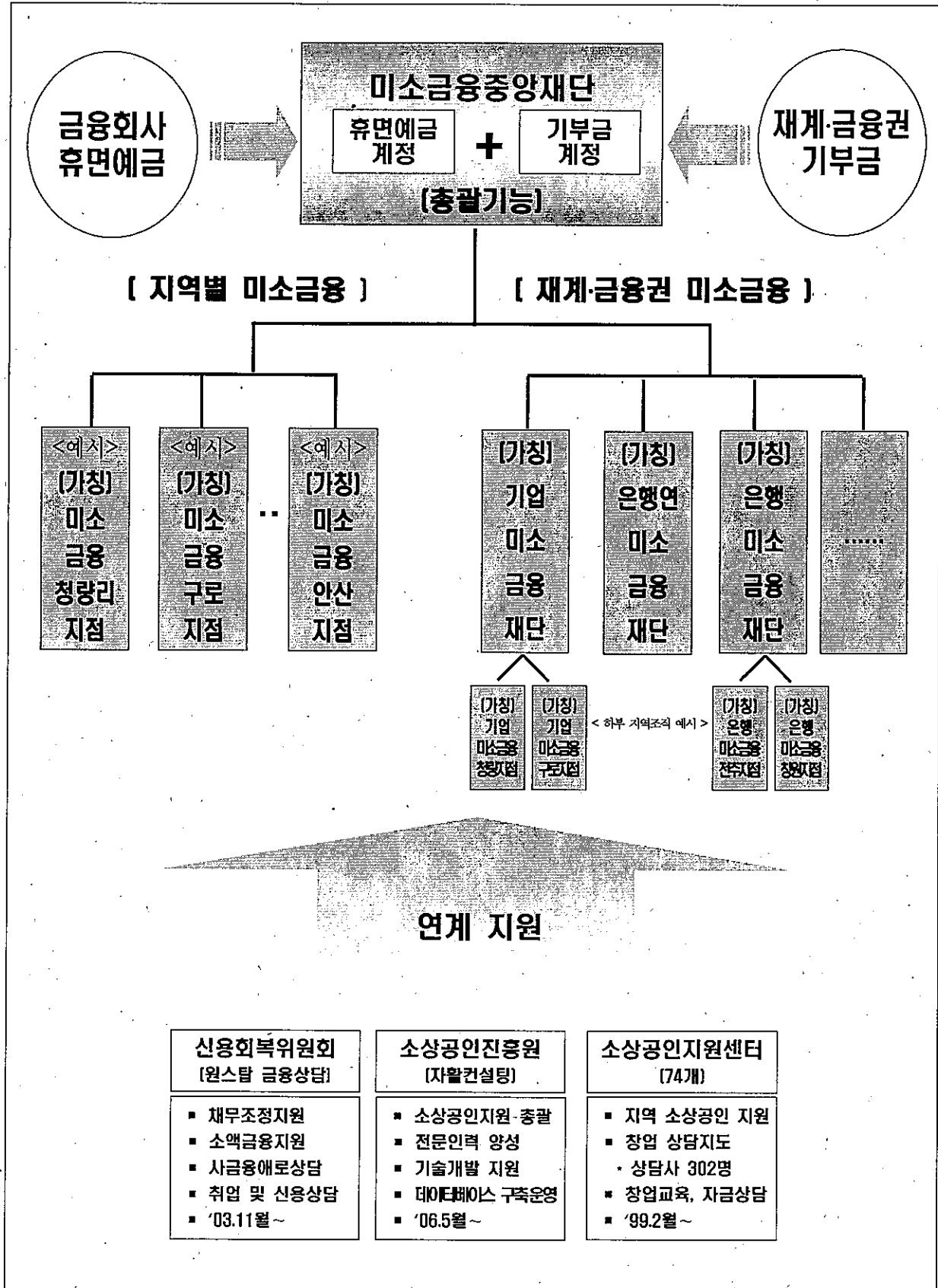
○ 재계·금융권 등이 미소금융중앙재단에 지정기부한 자금은 재계·금융권 등이 설립한 개별 미소금융재단에 배분

○ 재계·금융권 등이 설립한 미소금융재단은 자율성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 운영

-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사업모델 개발, 표준운영방안 제시, 정보제공, 교육훈련 등을 통해 개별 미소금융 사업을 지원하여 전체적인 미소금융사업간의 연계성을 강화

○ 재계·금융권 등 민간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미소금융중앙재단을 세법상 특례기부단체로 지정 추진

< 미소금융중앙재단 운영체계 >



4. 미소금융사업의 대상과 내용

가. 총괄

-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중심이 되어 지원 대상·조건 및 지원 내용을 모델화하여 전체 미소금융사업 일관성을 제고
- 자활의지가 있으나 신용이 낮아, 제도권 금융회사 접근이 어려운 저신용층·영세자영업자·저소득층이 주요 지원 대상

< 지원내용(요약) >

	지원 내용	지원 조건
영세사업자 운영자금	영세사업자에 대해 원재료 구입, 시설 개·보수 자금 등 운영자금 지원	1천만원 이내 5년상환 시장금리 이하 (2~3% 낮은 금리)
전통시장 상인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영세상인 운영 자금 지원	상인당 5백만원 3년상환 시장금리 이하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검증을 받아 성공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업체를 연계하여 권리금 등 창업자금 지원	5천만원 이내 5년상환 시장금리이하
창업자금	창업을 하거나 기존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임차보증금 지원	5천만원 이내 5년상환 시장금리 이하
공동대출	자활추진단체에 대해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	1억원 이내 5년상환 시장금리 이하
사회적 기업	사회적육성기업법에 의해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에 대해 운영자금 등을 지원	1억원이내 5년상환 시장금리 이하

나. 사업별 세부지원내용

① 영세사업자 운영자금 : 영세사업자에 대한 원재료 구입·시설 개·보수 등 일시적으로 소요되는 운영자금을 지원

- 지원조건 : 1천만원 이내, 5년분할상환, 시장금리보다 2~3% 낮은 금리(현시점 5%이하)

- 소상공인진흥원 등의 경영진단 결과, 구조조정 및 취급 상품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필요자금을 지원

* 소상공인진흥원 :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혁신 교육, 컨설팅, 유망사업 안내 등의 지원서비스를 수행

② 전통시장 영세상인 대출 : 전통시장 상인회에 지원하여 상인회가 회원인 영세상인에게 운영자금 등을 대출

- 지원조건 : 상인당 5백만원, 3년 분할상환, 시장금리보다 2~3% 낮은 금리

- 현재 시행 또는 시행준비중인 서울시 및 6개 광역지자체를 포함하여 전국 16개 지자체로 확대

* (현재) 서울시 24개 시장(10억원) → (내년) 전국 약 200여개 시장(120억원)

③ 프랜차이즈 : 이미 시장에서 검증을 받아 성공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업체의 기술·브랜드 등을 창업희망자가 활용하여 창업시 권리금과 창업자금 등을 지원

- 지원조건 : 일반적으로 소액(1천만원이내) 위주로 하되 최고 5천만원 이내, 5년분할상환(1년거치, 거치기간 무이자), 시장금리보다 2~3% 낮은 금리

- 프랜차이즈 지원시 수혜자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되, 대출재원 보전을 위해 지역사업권 권리는 대출금 상환시까지 재단이 보유

④ **창업자금** : 본인의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고자 하거나 기존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증액이 필요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지원

- 지원조건 : 일반적으로 소액(1천만원이내) 위주로 하되 최고 5천만원 이내, 5년분할상환(1년거치, 거치기간 무이자), 시장금리보다 2~3% 낮은 금리
- 임차보증금 지원시 재단 명의로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대출금 회수 장치 마련

⑤ **공동대출** : 자활공동체 등 자활단체에 대해 수요 및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창업 및 운영자금을 지원

- 지원조건 : 1억원 이내, 5년 분할상환, 시장금리보다 2~3% 낮은 금리
- 대출재원 보전을 위해 지원단체 소속원 공동채무로 하거나 지원단체 대표가 연대보증

⑥ **사회적 기업 지원**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인증된 사회적기업에 대해 운영자금 등을 지원

- 지원조건 : 1억원 이내, 5년 분할상환, 시장금리보다 2~3% 낮은 금리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을 지원
- * 사회서비스 :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분야의 서비스로
①보육, ②예술·관광 및 운동 ③간병 및 가사지원 ④ 그밖에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인정하는 서비스

5. 자원봉사자의 적극 활용

□ 미소금융 지점별로 대표자가 주관하여 소요인력을 자체 모집

- 전국 300여개 지점의 소요인력(지점당 2~5명)을 선발시 금융회사 퇴직자, 청년 등 자원봉사자 위주로 모집
 - 금융회사 퇴직자 등 경험많은 자원봉사자는 기간요원으로 하여 월 100만원이하의 보수를 지급
 - 청년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실비 지급
- 대표자의 경우 무보수·명예직으로 하여 자원봉사 취지를 구현

□ 미소금융중앙재단이 기간요원 등 자원봉사자 교육 실시

- 금융관련 교육은 신용회복위원회, 자활지원 관련 교육은 소상공인진흥원과 연계하여 전문성 있는 위탁교육 실시

□ 일정기간 봉사한 청년에 대해서는 복지기관·금융회사 등 취업 희망시 우대

- 추천서 발급 : 복지기관, 금융회사 등 취업을 위한 서류 제출시 자원봉사 관련 추천서 발급
- 자활컨설팅 전문인력 교육지원 : 미소금융중앙재단의 전문 교육 이수를 거쳐 미소금융지점에 전문인력(RM)으로 파견
- 우수한 자원봉사자가 향후 지역단체 설립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

6. 자원 조달

□ 향후 10년간 총 2조원 이상의 기금 조성을 추진 (금년중 3천억원 이상)

○ 재계(전경련소속 회원기업) 기부금 : 약 1조원 (금년중 약 1,000억원)

○ 금융권 기부금 : 약 1조원 이상 (금년중 2,000억원 이상)

· 금융회사 휴면예금 약 7천억원* (금년중 약 800억원) 출연

* '09년까지 누적출연 2,000억원 ('09년 800억원) + 향후 10년간 매년 약 500억원 규모 출연

· 은행 중심으로 2,500억원 이상 (금년중 700억원 이상) 출연

· 증권유관기관이 500억원(금년중 500억원) 출연

7. 자금 운용

□ 조달된 자금은 미소금융지점과 재계·금융권 재단의 미소금융 사업자금으로 활용

○ 휴면예금은 미소금융중앙재단 자체 지역사업에 사용

○ 재계·금융권의 기부금은 재계 및 금융권이 설립한 미소금융재단에게 다시 배분하여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에 자율적으로 직접 사용

□ 미소금융재단은 기존의 '휴면예금'과 '기부금'을 구분처리하여 자원운영의 투명성을 강화

IV. 기대 효과

①(저소득층의 자활지원) 자활의지가 있으나 신용이 낮아 제도권 금융회사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층·영세사업자·저신용층에 자활자금을 제도적으로 지원 가능

○ 지난 10년간 1,480억원(연평균 148억원)이 조성·공급되었으나, 향후 10년간 2조원 이상(연평균 2천억원 이상)이 조성·공급되면 약 13배 이상 확대

○ 향후 10년간 기존 제도금융권 밖 약 20만~25만가구* 이상의 저소득층이 미소금융사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

②(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 재계와 금융권이 저소득층의 자활 지원을 위한 자금을 기부하고, 재계 및 금융권이 직접 미소금융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이행

③(나눔·봉사문화 확산) 지점 대표자, 금융회사 퇴직자·청년 자원봉사자 등이 미소금융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또한, 기부와 봉사문화의 확산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도 나눔과 봉사에 대한 인식 전환 계기 마련

④(금융시스템의 보완·발전) 제도권 금융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고금리 사채 등 비제도권 금융시장을 대체함으로써 서민·영세자영업자의 금융 이용기회를 부여하고 부담도 경감

V. 추진 일정

□ 사업 준비 ('09.9~11월)

- 소액서민금융재단을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개편(10월)
- 지역별 미소금융법인(미소금융지점) 설립준비 (9~11월)
-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 (10~11월)

□ (1단계 사업) 미소금융 지점 설립 ('09.12~'10.5)

- 20~30개 수준의 미소금융지점 설립 추진
- 재계·금융권 미소금융재단도 준비를 마치는대로 설립 추진

□ (2단계 사업) 지역별 네트워크를 200~300개로 확대 추진 ('10.6월~)

〈참고1〉 서민금융 지원현황

1. 개 요

-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저소득층 및 저신용층 등 서민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시행중

- ◆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
- ◆ 대부업체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면서,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적발·조치

2. 주요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비영리사단법인)의 신용회복 지원

- 금융회사 채무를 연체한 서민들에 대해 이자감면, 만기연장 등 개인워크아웃 및 개인프리워크아웃을 지원

* '08년~, 개인워크아웃 120,410명, 개인프리워크아웃 4,561명 등 총 124,971명

- 신용회복기금(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 및 전환대출

- 신용회복기금을 설립('08.9월)하여 신용이 낮은 서민들에게 연체채무의 만기연장 등 채무재조정과, 대부업체 고금리(20%이상)를 은행권 금리(12%)로 전환해주는 전환대출(환승론) 시행

< 신용회복기금 지원실적 >

구분	채무재조정	환승론
건수	50,327 건	14,561 건
채권액	1,880 억원	1,430 억원

□ 소액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재단)의 마이크로크레딧

- 소액서민금융재단을 설립('08.3월)하여 저소득층 및 저신용층 서민에 대해 무보증 소액대출을 지원

- '08년, 빈곤아동 2천명 · 저신용자 4천명 등 1만여명과, 서울시 24개 전통시장 등에 총 271억원 지원

□ 제도금융권을 활용한 대출 지원

-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저신용 근로자 생계보증 대출 (5천억원 규모), 자영업자(무점포 포함) 특례보증(3.95조원 규모)

* '09.8월말 현재, 근로자 대출 167억원 / 자영업자 대출 2.8조원

- 14개 시중은행, 저신용자 전용대출 상품 판매(희망홀씨대출)

* '09.8월말 현재, 5,362억원 대출(10만여명)

- 재래시장 및 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2.0~3.5% → 2.0~2.2%)

□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 대책」(4.28 국무회의 보고) 시행

- 검·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 집중단속, 사금융 피해상담자에 원스탑서비스 제공(금감원) 및 소송지원(법률구조공단) 등

〈참고2〉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 현황

□ 재원별 조성 및 지원실적

(‘00년~’09.7월, 단위 : 억원)

재 원 출 처	조성금액	지원실적
민 간 기 부 금	512	343
재정(복지부,희망키움뱅크)	410	80
휴 면 예 금(소액서민금융재단)	501	337
지 자 체(서울시,희망드림뱅크)	60	12
합 계	1,483	772

* 민간단체의 전체 조성 및 지원금액중 재정(복지부), 지자체, 휴면예금으로부터의 지원금액을 제외한 순수 기부금(추정액)

□ 사업수행기관(민간단체) 현황

(단위 : 억원)

기 관	개시 연도	용도	재 원	지원액(누계)
신나는 조합	2000	창업 자금 사회적 기업 지원	100	45
사회연대은행	2002		250	208
아름다운세상기금	2003		50	12
함께일하는재단	2008		20	15.6
열매나눔재단	2003		30	15.5
창원지역 사회복지은행	2003		8	4
신나는 은행	2005		0.4	0.2
해피월드복지재단	2007		6	5.6
하나희망재단	2008		300	16
소상공인진흥원	2009		60	14.7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09		10	2.9
민생경제정책연구소	2009		10	1
민생포럼	2009		10	0.5
전통시장상인회	2008	생활	100	8.4
신용회복위원회	2006	운영 자금	373	362
한미음금융(자산관리공사)	2008		155.3	60.2
총 계	-	-	1,482.7	771.6

〈별첨 3〉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미소금융사업 Q&A

2009. 9. 17

금 융 위 원 회

목 차

1. 미소금융사업의 내용은?1
2. 미소금융사업의 추진 체계는?2
3. 지역 미소금융법인 등의 설립시기 및 업무는?3
4. 미소금융에서 취급하는 대출상품 내용은?4
5. 자원봉사자는 어떻게 활용하나?5
6. 미소금융사업의 기대효과는?6

1. 미소금융사업의 내용은?

□ 미소금융사업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곤란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Micro Credit)을 대폭 확대하여,

- 금융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소외계층이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사업전반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 그간 우리나라의 마이크로 크레딧 활동을 보면,

- 2000년 이후 약 10년간 30여개의 민간단체가 재정, 지자체 예산, 소액서민금융재단자금, 민간 기부금을 재원으로 수행해 왔으나,
- 전체 사업규모가 크지 않고 민간 추진기반이 취약하여 전달체계의 효율성이 낮으며, 사업자의 수도 적어 서민들의 접근성이 제한되는 등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 이에 동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 200~300개의 미소금융법인을 설립하여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 재계·금융권 등의 기부금과 휴면예금 출연금을 재원으로 향후 10년간 총 2조원 이상의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 금융이용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자활의지가 있으나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층 및 영세사업자의 자활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미소금융사업의 추진 체계는?

□ 현재 금융회사가 출연한 휴면예금을 관리하는 소액서민금융재단을 (가칭)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개편하여,

* 소액서민금융재단은 「휴면예금관리재단법」에 의거 '08.3월 설립되었으며 휴면예금의 관리와 이를 통한 복지사업자 지원과 감독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임

○ 동 중앙재단이 앞으로 설립될 지역별 미소금융법인과 재계·금융권의 미소금융재단 등의 마이크로 크레딧 정책방향 및 사업 가이드라인 설정, 컨설팅, 교육, 정보의 통합관리 등 미소금융사업 전반에 걸쳐 총괄 기능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 지역별 미소금융법인은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전국의 영세상인 및 서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공개모집할 것이며,

○ 그 형태는 비영리사단법인(미소금융○○지점)으로 설립하여 중앙재단이 지원한 재원으로 해당 지역의 미소금융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 재계·금융권 등이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이행하기 위하여 직접 설립·운영하는 미소재단은 중앙재단으로부터 재원을 지원받아 자율성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 지역 미소금융법인 등의 설립시기 및 업무는?

- 지역 미소금융법인을 신설하는 작업은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 우선 '09.11월까지 지역 미소금융법인 모집 등 준비기간을 거쳐 '09.12부터 1단계로 20~30여개 정도의 지역별 법인을 설립하고,
 - 2단계로 '10.6월부터 전국에 걸쳐 지역 법인 설립 및 지부 확대 등을 통해 200~300개 수준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미소금융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 지역별 미소금융지점의 주요업무는 자활자금지원 및 회수, 자활컨설팅 업무, 상담 등입니다.
 - 대출서류심사, 현장실사 및 면접심사 등 체계적인 심사절차를 거쳐 수요자 맞춤형 소액대출을 시행·관리하고,
 - 소상공인진흥원 소속 전문가(RM) 등의 지원을 받아 창업 및 경영컨설팅을 지원하며,
 - 소액금융상담, 신용관리상담 등의 상담업무와 채무재조정이 필요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연결시켜 주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참고로, 미소금융지점의 사무실은 서민들의 접근성이 높고 임차비용이 들지 않는 전통시장상가, 마을회관 등 여유사무공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4. 미소금융에서 취급하는 대출상품 내용은?

- ☐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지원 대상·조건 및 지원내용을 모델화하여 브랜드화한 대출상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 대출상품은 주로 자활의지가 있으나 신용이 낮아, 제도권 금융회사 접근이 어려운 저신용층·영세자영업자·저소득층을 위한 상품을 우선 제공할 예정입니다.

< 대출상품(요약) >

	지원 내용	지원 조건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검증을 받아 성공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업체를 연계하여 권리금 등 창업자금 지원	5천만원 이내 5년상환 시장금리 이하
창업자금	창업을 하거나 기존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임차보증금 지원	5천만원 이내 5년상환 시장금리 이하
운영자금	2년이상 영업자에 대해 원재료 구입, 시설 개보수 자금 등 운영자금 지원	1천만원 이내 5년상환 시장금리 이하
공동대출	자활추진단체에 대해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	3천만원~1억원 이내 3년상환 시장금리 이하
전통시장 상인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영세상인 운영자금 지원	5백만원 1년상환 시장금리 이하
사회적 기업	사회적육성기업법에 의해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을 지원	6천만원~1억원이내 5년상환 시장금리 이하

5. 자원봉사자는 어떻게 활용하나?

- ☐ 미소금융 사업은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여 나눔·봉사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 ☐ 이를 위해 미소금융 지점별로 소요인력(지점당 2~5명) 선발시 금융회사 퇴직자, 청년 등 자원봉사자 위주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 대표자의 경우 무보수·명예직으로 하고, 금융회사 퇴직자 등 경험 많은 자원봉사자는 기간요원으로 양성하여 월 100만원이하의 보수를 지급하고, 청년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실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 ☐ 또한, 미소금융중앙재단은 기간요원 등 자원봉사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 금융관련 교육은 신용회복위원회, 자활지원 관련 교육은 소상공인진흥원과 연계하여 전문성 있는 위탁교육 실시할 예정입니다.
- ☐ 한편, 향후 일정기간 봉사한 청년에 대해서는 복지기관·금융회사 등 취업 희망시 우대하는 대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6. 미소금융사업의 기대효과는?

- ① (저소득층의 자활지원) 우선 자활의지가 있으나 신용이 낮아 제도권 금융회사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층·영세사업자·저신용층에 대해 자활자금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지원규모 면에서는 지난 10년간 1,480억원(연평균 148억원)이 공급되었으나, 향후 10년간 2조원 이상(연평균 2천억원 이상)이 공급되면 약 13배 이상 확대되는 효과가 있고,
 - 향후 10년간 기존 제도금융권 밖에 있는 약 20만~25만 가구* 이상의 저소득층이 미소금융사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②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 한편, 재계와 금융권이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자금을 기부하고, 직접 미소금융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이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③ (나눔·봉사문화 확산) 더불어 지점 대표자, 금융회사 퇴직자·청년 자원봉사자 등이 미소금융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 기부와 봉사문화의 확산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도 나눔과 봉사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 대형저축은행을 지방은행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필요한 절차 및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 저축은행이 지방은행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은행법(§8)에서 정한 은행업 인가기준 등에 적합해야함
 - (인가기준 등)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소유제한(없음 → 15%), 자산건전성 분류기준(고정여신 6개월이상 연체 → 3개월이상, FLC 도입 등),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정상 0.5% → 0.7% 등), 최소 BIS자기자본비율(5%→8%), 자본금요건(40~ 120억원 → 최소 250억원) 등
- 현재 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자본건전성 기준 등을 감안할 경우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저축은행은 없음
 - 향후 대형저축은행이 지방은행으로 전환하기 원할 경우 상당 기간 동안 대대적인 구조조정, 자본확충, 고객기반 확대 등의 노력을 기울여 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함

6. 금융위원회가 외국계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서민 대출을 독려하기 위해 지도·감독한 내용

□ 외국계 은행들의 경우에도 지난해 10월 대외채무 지급보증시
실물부문 지원에 대한 MOU(MOU2*)를 체결

- * '08.10월 대외채무 지급보증시, 2종류의 MOU를 체결
- MOU1(지급보증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방지): 지급보증 참여 은행만 체결
- MOU2(중기 등 실물지원 의무 부과): 전 은행과 체결

○ 금융당국은 MOU상 실물지원 목표 이행실적을 점검 중

□ '08년말 실적점검 결과, 시중은행 중 씨티·SC제일·외환 등
외국계 은행의 실물지원 실적이 미진하였는 바,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 촉구('08.2)한 바 있음

□ 감독당국은 매월 MOU 이행실적에 대해 점검 중이며, 점
검 결과에 대하여는 은행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실물지원 노력을 유도하고 있음

[첨부] 실물지원 MOU 이행상황 점검 보고('09.8월 보고)

은행외화채무 지급보증 운용 현황 및 MOU 이행상황 점검 보고

2009. 08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1. 은행 외화표시채무 지급보증 후속조치 추진 경과

① 지급보증 동의안 국회 의결('08.10) 및 금감원과 각 은행간 (총18개)간 MOU 체결 ('08.11)

* 외화채무 지급보증과 관련된 'MOU 1'과 실물경제 유동성 지원 등에 관한 'MOU2'로 구분하여 체결하였으며, SC제일과 한국씨티는 'MOU2'만 체결

- 그동안 재정부·금융위·금감원·한은 합동으로 MOU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매2개월마다 국회에 제출('09.2, 4, 6월)

② 외화채무 국가보증 동의안 개정('09.4)시 국회에서 제시한 부대의견에 근거하여 금감원-은행간 MOU를 재체결('09.5)

- 5~6월 이행실적은 재체결한 MOU 내용을 바탕으로 점검

주요 부대 의견	MOU 반영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화자산매각 등 은행의 자구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화조달 및 비핵심외화자산 축소를 통한 외화유동성 확보 목표(총51.3억\$) 이행의무 ▪ 중장기 차입비율 목표(52.4%) 이행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은 가계 및 기업의 금융부담 최소화 노력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기대출비율 목표(50.4%) 이행의무 ▪ 수출기업 자원(매입외환 증가) 목표(34억\$) 이행의무 ▪ 가계대출 만기연장, 분할상환 유예, 고정금리부 대출로의 전환지원 등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은 보수체계 합리적 조정 등 경영 합리화 방안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보수 및 스톡옵션 조정(10~30% 삭감) ▪ 성과지표 및 보상체계를 장기업적 평가 위주로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은행의 건전성 등 경영 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 자기자본 확충 노력 (BIS비율 10%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대지급발생 방지노력 및 발행시장에서 거주자 참여가 최소 규모로 이루어지도록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대지급발생 우려시 은행 보유 외화 자산 매각 등을 통해 보증대상채무 최우선 상환 ▪ 외화표시 채권발행시 발행시장에서 거주자 참여가 최소화되도록 노력

2. 은행 외화채무 지급보증 운용현황

□ '09.8월말 현재까지 총 2건, 12.8억불 발행 (하나은행)

< 채권 발행 내역 >

발행일자	발행규모	만 기	금 리	발행지
'09.4.9	10억불	3년	USD Libor + 4.90%	미국, 유럽, 아시아
'09.6.19	2.8억불	2.5년/2.99년	USD Libor + 2.99%	말레이시아

3. MOU 이행상황 점검 결과('09년 5~6월 실적)

□ 평가 결과 은행들의 이행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일부은행이 목표에 미달

평가 항목		점검 내용																
M O U 1	지급보증부 외화차입금 용도제한	▪ 지급보증 신청에 대비하여 은행들은 내부통제방안을 마련 * 보증차입금 용도제한 등을 담은 운용지침, 한도관리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																
	외화조달 자구노력 강화	▪ (외화유동성 확보) '09.1~6월중 총 121.2억달러를 확보하여 계획치인 33.8억달러를 초과달성 - 단, 하나, 전북 및 광주은행은 목표 미달 ▪ (중장기차입비율) 평균 74.8%로 전체은행 평균목표(55.9%)를 초과달성																
M O U 2	실물부문 유동성 지원	▪ (중기대출) 중기대출비율은 평균 65.4%로서 목표(48.9%)를 초과달성 - 단, 외환 및 SC제일은행은 목표 미달 ▪ (무역금융) 매입외화평잔은 5~6월 △1.5억달러 감소하였으나 계획 (△3.3억달러) 초과달성																
	가계대출 차주에 대한 채무상환 부담 완화	▪ 5~6월 가계대출 차주에 대한 부담경감 규모는 총 28조원 (단위 : 조원) <table><tr><th>일시상환대출</th><th colspan="2">분할상환대출</th><th rowspan="2">기타</th><th rowspan="2">합계</th></tr><tr><th>만기연장</th><th>만기조정</th><th>거치기간 연장</th></tr><tr><td>25.2</td><td>0.3</td><td>2.0</td><td>0.4</td><td>28.0</td></tr></table> * 고정금리부대출로의 전환액 등					일시상환대출	분할상환대출		기타	합계	만기연장	만기조정	거치기간 연장	25.2	0.3	2.0	0.4
일시상환대출	분할상환대출		기타	합계														
만기연장	만기조정	거치기간 연장																
25.2	0.3	2.0	0.4	28.0														
	경영합리화 추진	▪ 은행장·임원 등의 보수수준을 목표(10~30%)대로 삭감하였고 스톡옵션도 10~30% 반납 * 외환은행의 신입행장에 대한 스톡옵션 중 20% 반납완료(5.8일)																
	적정자기 자본 확충	▪ BIS자기자본비율은 13.1%로 각 은행별 목표수준 달성(3월말기준) ▪ 기본자기자본비율은 9.3%로 각 은행별 목표수준 달성(3월말기준)																

4. MOU 실적에 따른 후속조치

□ 지급보증을 받은 하나은행 등의 MOU 1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의 촉구 및 개선조치 공문 발송

* 외화 유동성 확보 금액이 당초 목표치에 미달

○ 최초 위반, 위반사항이 경미*한 점을 감안하여 보증한도 축소, 보증수수료 인상 등의 조치보다는 주의촉구가 바람직

* 외화자산 감소로 인한 차입규모 축소에 기인한 일시적인 것으로 외화 예수금을 통한 추가 외화유동성 확보 등으로 7월말 현재 외화유동성 목표 초과 달성

○ 향후 동일사항의 MOU 이행위반이 누적되는 경우 보증한도 축소 및 보증수수료 인상 등의 체재조치 계획임을 명시하여 공문으로 통보

□ MOU2 목표 달성이 미흡한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진 면담, 주의 촉구 및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MOU 이행을 담보

① MOU상 중소기업대출 미흡 은행에 대해 금감원에서 경영진 면담 실시

② MOU 목표미달 은행에 대해 주의 재촉구 공문 발송

③ 금감원 「은행 경영실태평가」시 MOU 이행실적을 반영

④ 하반기 중 목표미달 은행들을 중심으로 MOU 이행실태 점검 실시 예정

참 고

국회제시 부대의견별 이행상황

부대 의견	이행 상황															
가. 정부지급보증은 만기도래채무상환과 수출·중소기업 지원 등 실물경제 활성화에 사용하며, 이번지원을 바탕으로 가게 및 기업의 금융부담 최소화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은행들은 보증차입금 용도제한 등을 담은 운용지침 등 내부통제방안 마련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강화실적 <table><tr><th></th><th>중기대출 증가액</th><th>평균 중기대출비율</th></tr><tr><td>08.11~12</td><td>4.6조원</td><td>67.5%</td></tr><tr><td>09.1~6</td><td>21.7조원</td><td>65.4%</td></tr></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가계대출 차주 부담완화실적 <table><tr><th></th><th>대출 만기 및 거치기간 연장 등</th></tr><tr><td>08.11~12</td><td>22.7조원</td></tr><tr><td>09.1~6</td><td>76.4조원</td></tr></table>		중기대출 증가액	평균 중기대출비율	08.11~12	4.6조원	67.5%	09.1~6	21.7조원	65.4%		대출 만기 및 거치기간 연장 등	08.11~12	22.7조원	09.1~6	76.4조원
	중기대출 증가액	평균 중기대출비율														
08.11~12	4.6조원	67.5%														
09.1~6	21.7조원	65.4%														
	대출 만기 및 거치기간 연장 등															
08.11~12	22.7조원															
09.1~6	76.4조원															
나. 자구노력(외화자산 매각 등) 및 신용도 등에 따른 보증수수료율과 보증한도 차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외화 조달 자구노력 실적 <table><tr><th></th><th>외화유동성 확보*</th><th>중장기차입비율</th></tr><tr><td>08.11~12</td><td>50.7억\$</td><td>58.4%</td></tr><tr><td>09.1~6</td><td>121.2억\$</td><td>74.8%</td></tr></table> <p>* 외화예수금 증대, Credit Line 확대, 비핵심 외화자산 매각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시장상황·주채무자의 재무현황 등에 따라 수수료 차등 가능(운영지침반영)		외화유동성 확보*	중장기차입비율	08.11~12	50.7억\$	58.4%	09.1~6	121.2억\$	74.8%						
	외화유동성 확보*	중장기차입비율														
08.11~12	50.7억\$	58.4%														
09.1~6	121.2억\$	74.8%														
다. 은행의 보수체계 합리적 조정 등 경영합리화방안을 마련하고 MOU 위반시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경영합리화방안 실적- 은행 임원 등 보수수준 삭감(10~30%) 및 스톡옵션 반납(10~30%)MOU 위반에 대한 제재실적① 자본확충펀드 매입금리 차등적용* (09.3) 신종자본증권 30bp, 후순위채 10bp② 금감원 '은행경영실태평가' 항목에 MOU 이행실적 추가															
라. 대지급 발생 우려시 총당금을 적립, 대지급 발생시 구상권 행사 및 경영진 책임 추궁	<ul style="list-style-type: none">대지급 발생방지를 위해 은행들은 Contingency Plan 등 자체 대책 마련정부지급보증 최소화를 위해 외화유동성 확보노력 강화 유도															
마. 정부는 선진국 등과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시장안정화를 위해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미·일·중과 통화스왑체결(900억\$)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G20 논의에 적극 참여															
바. 은행별 MOU 추진상황 지속 점검 및 국회보고(각월 또는 국회요청시 즉시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관계기관 합동 '사후조치평가회의' 개최 (09.24, 415, 58)를 통해 MOU 추진상황 점검1·2·3차 점검결과 국회기보고(09.218, 416, 629)															

**7. 동아일보 김재호 대표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불공정 거래혐의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보고받은 문건**

- 동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혐의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될 경우 수사 또는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관련 기업의 주가 등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 또한, 개인의 명예·사생활 및 기업의 영업비밀 등의 침해 등으로 관련자 및 해당기업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며,
- 기타 개인의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부득이 이를 제공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대부업 실태조사 자료

☐ 첨부 참조

※ 제3차 대부업 실태조사는 사금융실태조사 결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금융 실태조사 결과

< 목 차 >

I. 조사개요

II. 사금융 시장 실태조사 결과

1. 전체 사금융 시장 규모
2. 사금융 이용자의 연체 및 제도권 대출 이용 현황
3. 사금융 시장의 특성
4. 사금융 이용자의 특성

III. 정책 시사점

I. 조사 개요

1. 목 적

- 금융소외자의 사금융 이용 현황 및 상환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사금융 실태조사를 실시
 - 사금융시장에서의 공급자(등록 대부업체)와 수요자(대부 이용자) 측면에서 각각 조사
 - ➡ 지원 가능한 대상의 범위, 지원한도 등을 정하고, 지원 대상자 수, 필요 예산 등을 산정하기 위함

2. 경 과

① 등록 대부업자 실태조사 ('08.4월 : 1개월)

- 전체 등록업자 대상 : 전국 약 18,000개 등록 대부업자를 서면으로 조사
 - * 자료분석이 가능한 7,058개 대부업체의 자료를 기초로 분석
- 일부 현장조사 : 247개* 등록 대부업자를 방문하여 업무 담당자 및 임원 면접
 - * 대형업체 67개, 중소법인 80개, 개인업체 100개

② 사금융 이용자 실태조사 ('08.4월 : 1개월)

- 전국민 조사 : 1만명 전화조사 (한국갤럽, 미디어리서치)
- 사금융 이용자 조사 :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3,000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
- 기존 데이터 활용 : 한신평정, 한신평 CB에 등록된 약 3,500만명의 대출정보 분석

II. 사금융 시장 실태조사 결과

1. 전체 사금융 시장 규모

① (사금융 이용자) 전국민(20세이상 3,500만명)의 5.4%인 189만명이 현재 사금융을 이용

○ 이중 49.9%는 등록 대부업체, 17.6%는 무등록 대부업체, 32.4%는 지인으로부터 차입

* 사금융 이용자중 128만명이 대부업체(등록+무등록)를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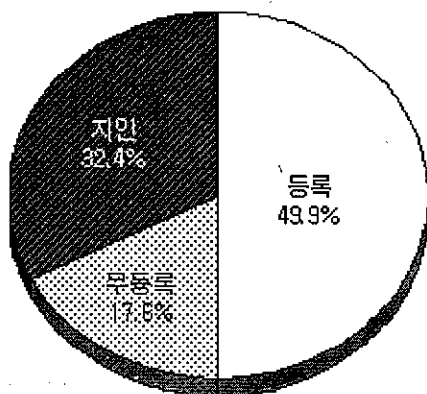
② (사금융 시장규모) 약 16.5조원(189만명×873만원*)으로 추정

* 1인당 평균 사금융 이용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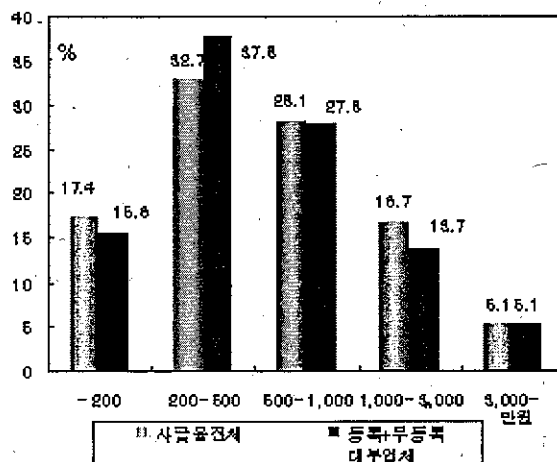
○ 이중 지인을 통한 차입을 제외한 등록 및 무등록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규모는 총 10.0조원 (127.6만명×783.4만원*)

* 등록 및 무등록 대부업체 이용자의 평균 사금융 이용액

<사금융 이용 형태>



<사금융 대출 금액>



2. 사금융 이용자의 연체 및 제도권 대출 이용 현황

① (사금융 연체) 사금융 대출자중 연체자의 비율은 약 26.4%

* CB사에 등록된 대부업체 이용자의 연체율(23%)와 무등록 대부업체 연체율(대부업체 연체율의 1.55배=36%)의 평균

- 연체된 사금융 채무중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가 46.5%로 다수이나, 1년 이상 연체된 채무도 29.4%에 달함

② (제도권 대출 이용) 사금융 이용자중 57.4%가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을 이용

- 사금융 이용자의 평균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규모는 3천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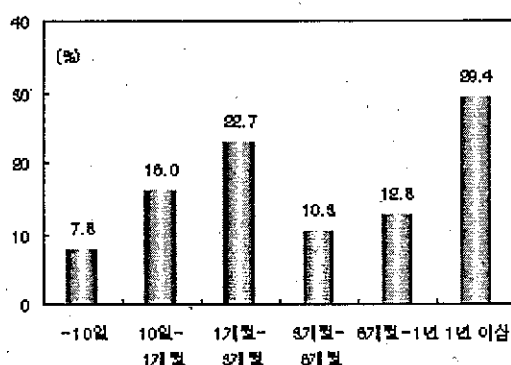
*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중 신용대출 이용자의 비율은 68.5%
(신용대출의 경우 1천만원 이하 대출자가 53.0%, 3천만원 이하가 84.7%, 5천만원 이하는 91.7%로 평균신용대출 금액은 1,900만원)

-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자중 13.7%가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을 연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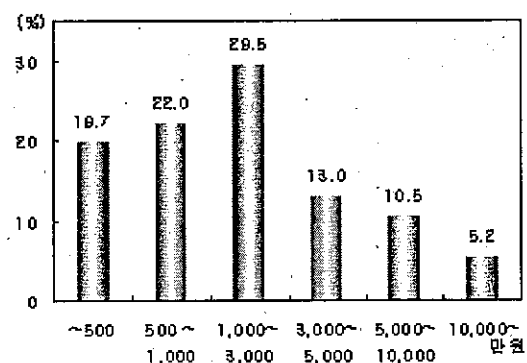
* 전체 국민의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 연체율(3개월 이상 연체)은 5.2%

- 이중 3개월 이하 연체자는 32.2%이고, 3개월~1년 연체는 29.2%, 1년이상 연체는 37.2%

<사금융 연체일수>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규모>



3. 사금융 시장의 특성

① (이자율) 사금융 대출의 이자율 평균은 연 72.2%

○ 연 30% 이하 대출이 17.8%, 연 30~49%가 33.9%, 연 49%이상 대출이 48.1%

* 등록 대부업체 이자율 평균이 연 68%인 반면, 무등록 대부업체는 이보다 높은 연 78%

** 대부업법상 이자한도 : 49% ('07.10.4일부터 시행)

*** 사금융 이자율이 법상 이자율보다 크게 높은 것은 사금융 이용자들이 법 개정후 이자가 낮아진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용자는 자신이 부담하는 금리를 높게 인식하기 때문(등록 대부업체 조사결과 신용대출 금리는 약 37~44%로 조사됨)

② (이용업체수) 사금융 이용자는 평균적으로 2곳에서 사금융을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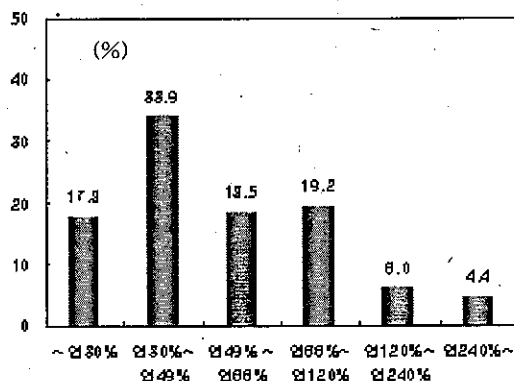
* 이용업체수 : 1군데(48.5%), 2군데(19.4%), 3군데(17.2%), 4군데(6.6%), 5군데 이상(5.1%)

③ (대출형태) 사금융 시장의 76.0%는 개인 신용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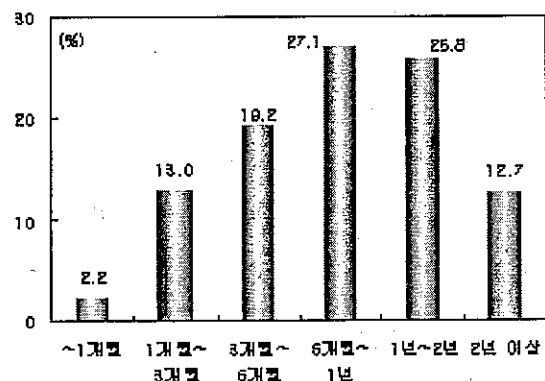
* 개인 담보대출은 15.4%, 타인신용보증 대출은 8.6%

④ (상환기간) 일반적인 사금융 상환기간은 3개월~1년(46.3%)이지만, 12.7%는 상환기간이 2년 이상이 소요되기도 함

<사금융 연 이자율>



<사금융 평균 상환기간>



4. 사금융 이용자의 특성

① (사금융 이용계기) 주로 가계 생활자금(47.4%)이나 사업(39.6%)을 위해 사금융을 이용

- 가계생활자금 용도로는 생활비 비중이 46.0%로 가장 높고, 교육비(24.5%), 병원비(14.9%) 순임

② (상환의지) 대다수 사금융 이용자들은 상환의지가 비교적 높고, 상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스스로 긍정적으로 평가

- 자력(73.6%) 또는 주변사람들의 도움(10.4%)으로 상환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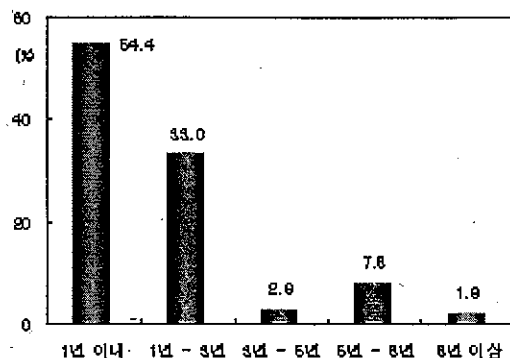
* 기타답변 :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음(6.2%), 추가대출로 상환(3.2%), 새로운 신용회복 대책 기다림(3.2%), 개인회생이나 파산 활용(1.8%), 현행 신용회복 기구 이용(1.5%)

- 사금융 연체자의 경우에는 36.5%만이 상환할 수 있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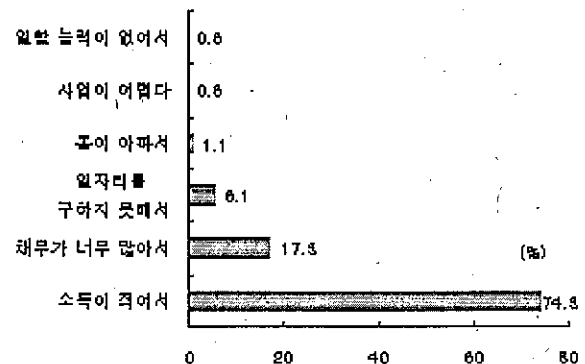
- 이들중 1년 이내에 상환 할 수 있다고 한 이용자는 54.4%

- 상환할 수 없는 이유로는 대체로 소득은 있지만 소득규모가 작거나 소득대비 채무가 많기 때문으로 나타남

<사금융 연체 대출금 상환시기>



<연체 대출금 미상환 이유>



③ (상환능력) 사금융 연체자의 경우 대출상환 가능금액은 월평균 5만원, 정상상환자는 약 62만원

* 연체자 가구 월평균 가구소득은 166만원, 정상 상환자 월평균 가구 소득은 223만원, 월평균 생활비는 161만원

- 연간 가구소득 대비 총채무액(제도권+등록+무등록)은 100% 미만인 69.8%이고, 100~120%가 5.2%, 120% 이상이 25%

- 사금융 이용자중 6.3%는 무직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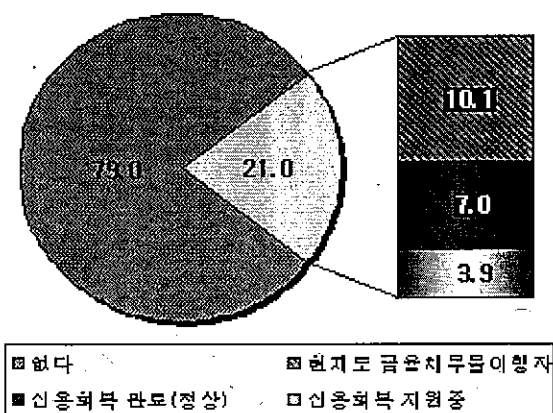
- 현재, 개인의 월평균 부채 상환액은 73만원으로 나타남

④ (금융채무불이행자) 사금융 이용자중 21%는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험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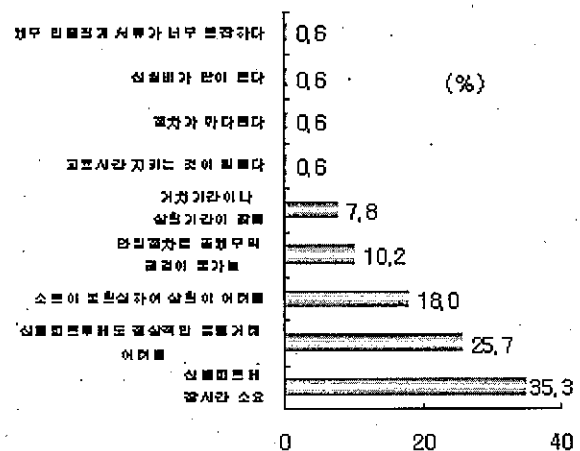
- 이중 현재도 금융채무불이행인 경우는 48.3%, 신용회복 지원금은 18.4%, 신용회복을 완료하고 정상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는 33.1%로 나타남

- 신용회복 지원제도 이용과 관련한 불편 사항으로 '신용회복에 장시간 소요'(35.3%), '신용회복 이후에도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움(25.7%)' 등을 지적

<금융채무불이행자 현황>



<신용회복 지원제도 불편사항>



⑤ (기초수급자) 제도권 금융기관 또는 사금융을 통한 대출이 있는 자중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1.5%인 27만명

*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06년 현재 약 153만명으로 전국민의 3.2% 이지만 소득이 낮아 대출이 어려워 대출자중 비중이 낮음

○ 제도권 금융기관 및 사금융 대출을 연체중인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10.3만명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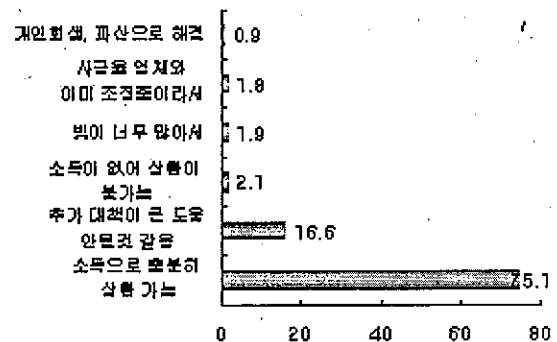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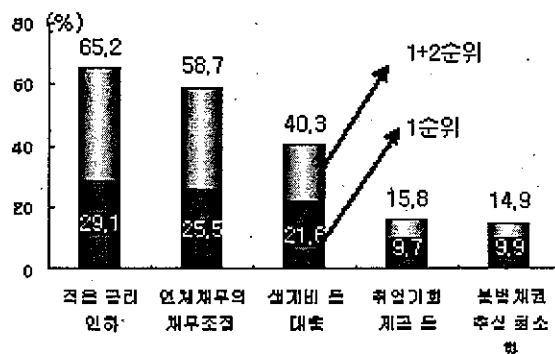
- 제도권 금융기관 및 사금융 대출 연체자(286만명)의 약 3.6%, 대출중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약 38%

⑥ (정부대책) 정부의 추가적인 신용회복 대책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61.6%)이 많은 반면, 추가대책 참여 의향은 다소 낮음 (46.2%)

○ 사금융 이용자들이 희망하는 추가 신용회복 대책은 '적용금리 인하', '연체채무의 채무조정(장기분할 상환)', '생계비 대출' 순으로 나타남

○ 추가 신용회복 대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는 '본인의 소득으로 충분히 상환 가능'하기 때문이 대부분 (75.1%)

<희망하는 추가 신용회복 대책> <신용회복 추가대책 비참여 이유>



○ 또한, 정부 자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23.5%가 참여의향을 밝힌 가운데, 창업관련 지원을 주로 희망

*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 37.3%,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금 대출 32.6%, 중소기업 취업지원 13.3%, 직업훈련 11.9%, 공공근로 4.7%

Ⅲ. 정책 시사점

① 금융소외자 지원 대상수 추정

전 국 민 4,700 만명	대출 있음 (1,774 만명)	제도권 대출만 있음 (1,646만명)	대부업체 대출 있음(128만명)	
			제도권 대출 있음 (71만명)	제도권 대출 없음 (57만명)
		정상상환 (1,339만명)	정상상환 (49만명)	정상상환 (42만명)
		금융채무불이행 (240만명)	금융채무불이행 (20만명) -돌다연체(17만명) -제도권만 연체(3만명)	대부업체 대출 연체 (15만명)
		신용회복중 (67만명)	대부업체 대출만 연체 (2만명)	
	대출없음 (2,926만명)			

➡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규모 및 재정투입 여부
및 방식 등은 6월중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

② 대부업체의 정책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 채무재조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신청 대상자의 모든 제도권·사금융 채권을 일괄하여 조정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① 대부업협회와 공동으로 채권매각 등 대부업체가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 노력
 - ② 대부업체로부터 일괄하여 채권을 매입함과 동시에 채무조정 대상자의 다른 사금융 채권도 조정할 수 있도록 개별 매입을 추진하며
 - ③ 불법대부업체의 참여등을 위해 신복위, 대부업 협회 등 민간기구의 채무조정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③ 매입대상 연체채권의 범위

-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 3개월 이상 연체인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로서 금융활동이 제한되므로
 - 금융채무불이행자를 채무조정 대상으로 고려
- (대부업체 대출) 대부업체 연체채권(3개월 이상 연체)중에서 사실상 채권가격이 충분히 낮게 형성되고, 대부업체들도 매각의사를 밝히고 있는 6개월 이상 연체 채권이 정책대상이 될 가능성이 큼
 - * 대부업체의 경우 6개월 이하의 연체채권은 추심을 통해 어느정도 상환받을 수 있어 매각의사가 없음

④ 사금융 이용자의 상환의지 및 상환능력

- 실태조사 결과 대체로 사금융 이용자들은 상환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
- 다만, 사금융 연체자의 경우 소득에 비해 채무규모가 커 채무 상환이 어렵다는 답변이 다수
- ➔ 연체 채무자에 대해서는 소득규모에 맞는 상환이 가능하도록 채무를 재조정하여 채무 상환 가능성을 높일 필요

⑤ 사금융 이용자들의 정책 희망사항

- 사금융 이용자들은 적용금리 인하 방안을 가장 선호
- 현재 사금융시장에서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대출을 제도권 금융기관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조치가 필요
- 또한, 지원제도 시행시 혜택의 폭을 넓히고, 이용을 편리하게 하며,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

⑥ 채무외의 근로 및 창업지원 병행

- 현재 사금융 이용자중 실직자의 비율은 약 6.3%로 실질적인 자활지원과 도덕적 해이 최소화를 위해서는 이들의 상환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지원이 병행될 필요
- 사금융 이용자들은 자활 지원과 관련하여 근로보다는 창업 지원을 희망
- 지원제도 참가자중 희망자에 대해서는 창업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창업교육을 완수하고 의지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창업자금을 지원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08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I. 개 황

※ 보고서를 제출한 10,398개 대부업체 중 대부잔액이 없거나(3,676개사) 작성 오류가 심한 대부업체(64개사) 등 3,740개를 제외한 6,658개만을 대상으로 분석

◇ '08.9월말 현재 분석대상 대부업체의 대부잔액 및 거래자 수는 '08.3월말 대비 증가하였으며,

○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의 대형대부업체로의 집중이 심화* 되는 추세

* 전체 대부업체 중 대부금액의 85%를 차지

□ '08.9월말 현재 대부잔액은 5조 6,065억원이고 거래자는 130.7만명으로,

○ '08.3월말 대비 금액기준 1.1조원(24.7%), 거래자기준 24.2만명(22.7%) 증가

※ 보고서 제출 업체 증가로 인한 증가분을 제외할 경우 각각 12.2%(금액), 20.3%(거래자) 증가하였으며 자산규모 70억원이상 대형 대부업체의 증가분이 90% 이상을 차지

○ 1인당 대출금액은 4.3백만원으로 '08.3월말(4.2백만원)과 비슷한 수준

□ 신용대출이 3조 5,800억원으로 전체의 63.9%를 차지하고, 담보 대출은 2조 265억원으로 36.1% 차지('08.3월말 각각 61.7%, 38.3%)

II. 대부업체 규모별 조사 결과

가 자산 70억원 이상 대부업체 대출 현황

- (대부금액) '08.9월말 현재 자산규모 70억원이상 대부업체(83개사)의 대부잔액은 4조 7,675억원으로 전체 대부금액의 85.0%
 - 거래자수는 106.8만명으로 전체 거래자의 81.7% 수준
 - (대출형태) 신용대출이 3조 2,073억원으로 이들 업체 총 대부금액의 67.2%를 차지하고 담보대출은 1조 5,602억원으로 32.8%
 - 신용대출 중 개인신용대출은 2조 6,080억원(81.3%), 법인신용대출은 5,993억원(18.7%)
 - (대출금리) 개인신용대출 평균금리는 45.3% 수준
 - (5백만원이하 대출현황) 전체 거래자(106.8만명) 중 5백만원 이하 거래자가 102.1만명으로 95.6% 차지('08.3월말 78만명)
 - 5백만원 이하 대출금은 2조 2,374억원으로 총 대출금의 46.9%를 차지('08.3월말 45.2%)
- ※ 5백만원 이하 거래자 1인당 대출금액 : 2.2백만원
- (신규대출 직업별·용도별 현황) '08.1~6월 중 신규대출금액은 1조 2,324억원(42사 대부업체 응답)이며 이 중,
 - 회사원이 받은 대출금액은 4,618억원(37.5%)이며 대출금 사용용도는 사업자금이 5,602억원(45.5%) 차지

신규대출자의 직업 및 신규대출금의 사용용도 분포('08.1~6월)

(단위 : 억원, %)

신규대출금(비율)	자영업자	회사원	학생, 주부	공무원	기타
12,324(100)	1,973(16.0)	4,618(37.5)	655(5.3)	146(1.2)	4,932(40.0)

(단위 : 억원, %)

신규대출금(비율)	사업자금	타대출 상환	생활비	물품구매	기타
12,324(100)	5,602(45.5)	1,054(8.5)	1,985(16.1)	193(1.6)	3,490(28.3)

나 자산 70억원 미만 대부업체 대출 현황

- (대부금액) 소규모법인 대부업체(387개사)의 대부잔액은 4,563억원으로 전체 대부금액의 8.2%이고,
 - 거래자수는 6.7만명으로 전체 거래자의 5.1% 수준
 - 신용대출이 2,162억원으로 이들 업체 총 대부금액의 47.4%를 차지하고 담보대출은 2,401억원으로 52.6%

다 개인 대부업자 대출 현황

- (대부금액) 개인 대부업자(6,188개)의 대부잔액은 3,827억원으로 전체 대부금액의 6.8%이고,
 - 거래자수는 17.2만명으로 전체 거래자의 13.2% 수준
 - 신용대출이 1,565억원으로 이들 업체 총 대부금액의 40.9%를 차지하고 담보대출은 2,262억원으로 59.1%

'09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I. 개 요

□ '09. 3월말 현재 등록 대부업체는 15,723개로 '08. 9월말 (16,120개) 대비 2.5% (△397개) 감소*

* 자진 등록취소 및 지자체에서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대부업체를 직권 등록취소함에 따라 개인 대부업체가 큰폭으로 줄어든 데 기인

- '08. 3월말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 '08. 3월말 17,713개 → '08. 9월말 16,120개

□ 이중 10,632개 업체가 보고서를 제출* (응답률 67.6%) 하여 '08. 9월말 (64.5%) 대비 3.1%p (234개) 상승

* 자산 70억원 이상 96개, 자산 70억원 미만 849개, 개인 9,687개

※ 보고서 제출율 : '08. 3월말 53.3% → '08. 9월말 64.5%

실태조사 보고서 제출 현황

(단위 : 개, %, %p)

구 분		'08. 9월말 (A)		'09. 3월말 (B)		증 감 (B-A)	
		등 록	제 출 (율)	등 록	제 출 (율)	등 록	제 출 (율)
법 인	자산 70억원이상	92	91 (98.9)	100	96 (96.0)	8	5 (△29)
	자산 70억원미만	1,107	813 (73.4)	1,131	849 (75.0)	24	36 (1.6)
개 인		14,921	9,494 (63.6)	14,492	9,687 (66.8)	△429	193 (3.2)
합 계		16,120	10,398 (64.5)	15,723	10,632 (67.6)	△397	234 (3.1)

II.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10,632개중 대출잔액이 없거나(2,744개) 작성 오류가 심한 업체(62개) 등 2,806개를 제외한 7,826개를 대상으로 분석('08.9월말기준 분석대상 대비 1,168개 증가)

1 전국 대부업체 영업 현황

대출 및 거래자 현황

□ '09.3월말 현재 7,826개 분석대상 대부업체가 1,431,656명에게 5조 1,576억원을 대출

○ '08.9월말 대비 보고서 분석대상 업체가 증가(1,168개) 하였음에도 대출금은 감소* (△8.0%, △0.4조원)

※ 보고서 분석대상업체수 증가분(1,168개)을 제외할 경우에도 대출금은 감소 (△1.8%, △858억원)

○ 한편, 자산 7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가 소액신용대출 위주 영업을 계속 확대함에 따라 시장지배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

□ 1인당 대출금은 3.6백만원으로 '08.9월말(4.3백만원) 대비 70만원 감소

규모별 거래자 및 대출금 현황

(단위 : 명, 억원, %)

구 분	거 래 자			대 출 금			1인당 대출금 (백만원)
	'08.9월말	'09.3월말	증 감 (율)	'08.9월말	'09.3월말	증 감 (율)	
자산 70억원 이상	1,068,118	1,212,652	144,534 (13.5)	47,675	44,748	△2,927 (△6.1)	3.7
자산 70억원 미만	66,946	55,725	△11,221 (△16.8)	4,563	3,092	△1,471 (△32.2)	5.5
개 인	172,207	163,279	△8,928 (△5.2)	3,827	3,737	△90 (△2.4)	2.3
합 계	1,307,271	1,431,656	124,385(9.5)	56,065	51,576	△4,489(△8.0)	3.6

형태별 대출금 및 대출금리 현황

□ 신용대출이 4조 361억 원으로 전체 대출금(5조 1,576억 원)의 78.3%를 차지하고, 담보대출이 1조 1,215억 원으로 21.7%를 차지

○ '08. 9월말 대비 신용대출은 증가* (12.7%, 4,561억 원) 하였으나, 담보대출은 감소 (△44.7%, △9,050억 원)

* 대형 대부업체가 소액신용대출 위주로 영업을 확대한 데 기인

□ 1인당 평균 신용대출금은 3백만원이고, 담보대출금은 9백만원

□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38.4%로 '08. 9월말 대비 0.5%p 하락 하였으며, 담보대출 평균 금리 (15.6%) 도 1.1%p 하락

형태별 대출금 및 대출금리 현황

(단위 : 억 원, %, %p)

구 분		'08. 9월말 (A)	'09. 3월말 (B)	증 감 (B-A)
자산 70억 원 이 상	신용대출금	32,073	36,802	4,729
	금 리	38.9	38.4	△0.5
	담보대출금	15,602	7,946	△7,656
	금 리	11.1	10.2	△0.9
자산 70억 원 미 만	신용대출금	2,162	1,928	△234
	금 리	35.4	34.1	△1.3
	담보대출금	2,401	1,164	△1,237
	금 리	31.9	30.2	△1.7
개 인	신용대출금	1,565	1,631	66
	금 리	43.1	42.3	△0.8
	담보대출금	2,262	2,106	△156
	금 리	39.0	37.7	△1.3
합 계	신용대출금	35,800	40,361	4,561
	금 리	38.9	38.4	△0.5
	담보대출금	20,265	11,215	△9,050
	금 리	16.7	15.6	△1.1

자산 70억원 이상 대부업체 96개가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겸업업체로서 대출잔액이 없는 8개를 제외한 88개를 대상으로 분석('08.9월말기준 분석대상 대비 5개 증가)

대출 상대별 현황

□ '09.3월말 현재 자산규모 70억원 이상 대부업체의 대출금은 4조 4,748억원으로 전체 대부업체의 86.8%를 차지

○ 거래자수는 1,212,652명으로 전체 거래자의 84.7%

○ 대출금 및 거래자 비중 모두 '08.9월말 (85.0%, 81.7%) 대비 증가

□ 신용대출은 3조 6,802억원으로 이들 대부업체 총 대출금의 82.2%를 차지하고, 전체 대부업체 신용대출금 (4조 361억원)의 91.2% 차지

○ 담보대출은 7,946억원으로 이들 대부업체 총 대출금의 17.8%

※ 신용대출거래자 : 1,206,604명 (99.5%), 담보대출거래자 6,408명 (0.5%)

자산 70억원 이상 대부업체의 대출상대별 대출현황

(단위 : 명, 억원, %)

구 분		거 래 자			대 출 금		
		'08.9월말	'09.3월말	증 감(율)	'08.9월말	'09.3월말	증 감(율)
개 인	신 용	1,055,837	1,203,311	147,474(14.0)	26,080	29,563	3,483(13.4)
	담 보	6,358	4,434	△1,924(△30.3)	8,827	5,924	△2,903(△32.9)
	소 계	1,062,195	1,207,745	145,550(13.7)	34,907	35,487	580(1.7)
법 인	신 용	4,685	3,293	△1,392(△29.7)	5,993	7,239	1,246(20.8)
	담 보	1,238	1,614	376(30.4)	6,775	2,021	△4,754(△70.2)
	소 계	5,923	4,907	△1,016(△17.2)	12,768	9,261	△3,507(△27.5)
전 체	신 용	1,060,522	1,206,604	146,082(13.8)	32,073	36,802	4,729(14.7)
	담 보	7,596	6,048	△1,548(△20.4)	15,602	7,946	△7,656(△49.1)
	계	1,068,118	1,212,652	144,534(13.5)	47,675	44,748	△2,927(△6.1)

대출금액별 현황

□ 차주 1인당 5백만원 이하 대출은 2조 5,106억원으로 이들 업체 총 대출의 56.1%를 차지 ('08. 9월말 46.9%)

○ 5백만원 이하 신용대출 (2조 5,076억원) 은 전체 신용대출금의 68.1%를 차지

※ 5백만원 이하 거래자의 1인당 평균 대출금은 2.2백만원

자산 70억원 이상 대부업체의 금액대별 대출금 현황

(단위 : 명, 억원, %)

구 분	5백만원 이하 거래자 (비율)		5백만원 이하 대출금 (비율)	
	'08. 9월말	'09. 3월말	'08. 9월말	'09. 3월말
신용대출	1,018,978 (96.1)	1,155,104 (95.7)	22,327 (70.6)	25,076 (68.1)
담보대출	2,076 (27.3)	2,121 (35.1)	47 (0.3)	30 (0.4)
합 계	1,021,054 (95.6)	1,157,225 (95.4)	22,374 (46.9)	25,106 (56.1)

주 : ()내는 자산 70억원 이상 대부업체의 신용, 담보, 총대출에서 5백만원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임

연체 현황

□ '09. 3월말 현재 연체율은 17.9%로 '08. 9월말 (13.9%) 대비 4.0%p 상승

* 1일 이상 연체율

○ 담보대출 연체율 (38.8%)이 신용대출 연체율 (13.6%)의 3배 수준

자산 70억원 이상 대부업체의 연체율 현황

(단위 : 억원, %, %p)

구 분		'08. 9월말 연체비율 (A)	'09. 3월말			비율증감 (B-A)
			전 체	연 체	비 율 (B)	
대출금	신용대출	10.2	35,009	4,751	13.6	3.4
	담보대출	21.5	7,246	2,808	38.8	17.3
	계	13.9	42,255	7,560	17.9	4.0
거래자	신용대출	9.1	1,204,868	159,188	13.2	4.1
	담보대출	23.1	6,048	1,870	30.9	7.8
	계	9.2	1,210,916	161,058	13.3	4.1

신규대출 이용자

- '08. 10월 ~ '09. 3월중 신규대출 (6,870억원) 이용자의 40.4% (2,776억원)가 회사원이고, 15.7% (1,079억원)는 자영업자임
- 주요 대출 목적으로는 생활비 충당 (1,937억원, 28.2%) 및 사업자금 조달(1,819억원, 26.5%)이 많음

대출이용자별 신규대출 현황

(단위 : 억원, %)

직업	대출목적					계 (점유비)
	사업자금	타대출상환	물품구매	생활비	기타	
자영업	564	78	16	135	286	1,079 (15.7)
공무원	29	165	19	182	428	823 (12.0)
회사원	117	375	178	1,338	768	2,776 (40.4)
학생·주부	21	40	13	216	216	506 (7.4)
기타	1,088	71	80	66	381	1,686 (24.5)
합계	1,819	729	306	1,937	2,079	6,870 (100.0)

대출이용기간

- '08. 10월 ~ '09. 3월 이용자 (대출상환액 기준) 중 46% (5,874억원)는 3개월내 대출금을 상환하고, 1년 초과도 25.1% (3,200억원)나 됨

대출상환액의 대출기간별 현황

(단위 : 억원, %)

대출상환액	3월 미만	3~6월 미만	6~12월 미만	1년 이상
12,772	5,874	1,473	2,223	3,200
(비율)	(46.0)	(11.5)	(17.4)	(25.1)

자산 70억원 미만 대부업체는 296개 ('08. 9월 대비 91개 감소), 개인 대부업체는 7,442개 ('08. 9월 대비 1,254개 증가)를 대상으로 분석

대출 및 거래자 현황

□ 자산 70억원 미만 대부업체 (296개)의 대출금은 3,092억원으로 전체 대부업체 대출금의 6.0% 차지

○ 업체당 평균 대출금은 10.4억원*, 평균 거래자수는 188명

* 이들 업체는 신용대출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이 여의치 않아 신용대출 비중이 62.4%로 전체 평균 (82.2%) 보다 낮은 등 담보대출 위주로 영업

○ 거래자 1인당 평균 대출금은 5.5백만원

□ 개인 대부업체 (7,442개)의 대출금은 3,737억원으로 전체 대부업체 대출금의 7.3% 차지

○ 개인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금은 50백만원, 평균 거래자수는 22명

○ 거래자 1인당 평균 대출금은 2.3백만원

자산 70억원 미만 및 개인 대부업체의 거래자 및 대출금 현황

(단위 : 건, 억원, %, %p)

구 분	자산 70억 미만			개 인		
	'08. 9월말	'09. 3월말	증 감	'08. 9월말	'09. 3월말	증 감
거래자	66,946	55,725	△ 11,221	172,207	163,279	△ 8,928
대출금	4,563	3,092	△ 1,471	3,827	3,737	△ 90
신용 (점유비)	2,296 (50.3)	1,928 (62.4)	△ 368	1,565 (40.9)	1,631 (43.6)	66
담보 (점유비)	2,267 (49.7)	1,164 (37.6)	△ 1,103	2,262 (59.1)	2,106 (56.4)	△ 156
1인당 대출금	6.8	5.5	△ 1.3	2.2	2.3	0.1

지역별 현황

- 자산 70억원 미만 대부업체 (296개) 는 서울 (166개, 56.1%), 경기 (42개, 14.2%), 인천 (8개, 2.7%) 등 수도권이 216개로 73%를 차지

※ 개인 대부업체 (7,442개) 는 수도권이 3,739개로 50.2%를 차지

- 거래자 (55,725명) 는 서울 (40,518명, 72.7%), 경기 (3,355명, 6.0%), 인천 (1,601명, 2.9%) 등 수도권이 45,474명으로 81.6% 차지

※ 개인 대부업체 거래자 (163,279명) 는 수도권이 73,002명으로 44.7% 차지

- 대출금 (3,092억원) 은 서울 (2,218억원, 71.7%), 경기 (289억원, 9.4%), 인천 (167억원, 5.4%) 등 수도권이 2,674억원으로 86.5% 차지

※ 개인 대부업체 대출금 (3,737억원) 은 수도권이 2,613억원으로 69.9% 차지

자산 70억 미만 및 개인 대부업체의 지역별 대출현황

(단위 : 건,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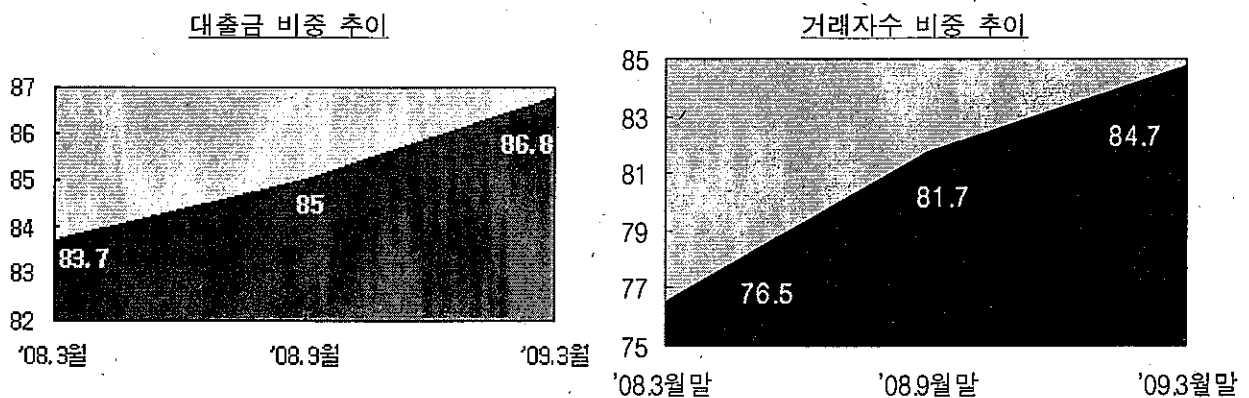
구 분	자산 70억 미만 법인				개 인			
	업체수	거래자수	대출금	1인당대출금 (백만원)	업체수	거래자수	대출금	1인당대출금 (백만원)
서울	166	40,518	2,218	5.5	2,052	35,064	1,685	4.8
경기	42	3,355	289	8.6	1,416	29,567	807	2.7
인천	8	1,601	167	10.4	271	8,371	121	1.4
강원	4	75	11	14.7	250	4,811	93	1.9
충북	3	78	2	2.6	185	2,162	49	2.3
충남	11	360	42	11.7	274	2,278	73	3.2
대전	7	342	25	7.3	271	4,287	99	2.3
전북	6	504	46	9.1	151	1,878	59	3.1
전남	0	0	0	0	219	3,762	43	1.1
광주	5	59	3	5.1	190	4,623	80	1.7
경북	1	58	4	6.9	238	5,410	76	1.4
대구	9	212	31	14.6	537	12,970	85	0.7
경남	4	898	31	3.5	352	11,679	114	1.0
부산	22	7,158	151	2.1	734	29,802	253	0.8
울산	3	260	20	7.7	249	5,048	65	1.3
제주	5	247	52	21.1	53	1,567	38	2.4
계	296	55,725	3,092	5.5	7,442	163,279	3,737	2.3

Ⅲ. 평가 및 시사점

□ (대출규모) 대형 대부업체로의 집중도 지속

- 최고 이자율 인하(66%→49%) 및 금융위기로 인한 자금조달의 어려움, 홍보효과 등으로 자본력이 풍부한 대형 대부업체로의 집중화가 점차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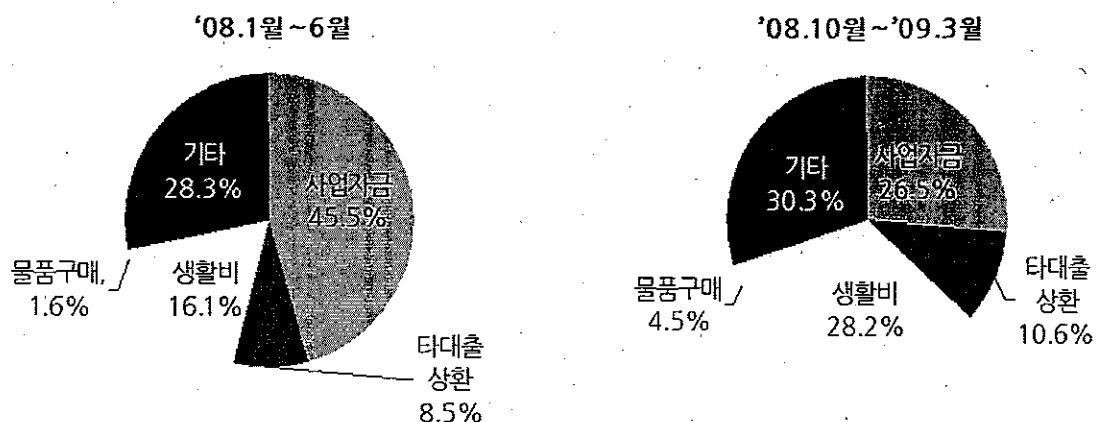
<자산 7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의 비중 추이(%)>



⇒ 특히, '08년 말 이후 검찰·경찰의 불법 사금융 집중단속으로 불법 대부업체의 영업이 제한을 받게 되면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는 대형 대부업체의 상대적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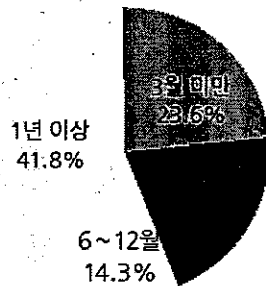
□ (대출형태) 신용대출 및 단기·소액 대출의 비중 증가

- 경기침체에 따라 생활비관련 대출은 증가한 반면, 사업자금 관련 대출은 큰 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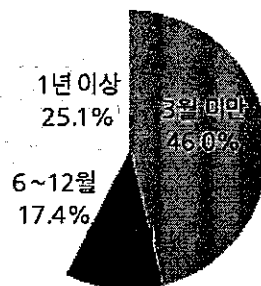


- '08.1월 ~ 6월 기간중에는 1년이상 이용자가 41.8%로 가장 많았으나, '08.10월 ~ '09.3월 기간에는 3월 미만 이용자가 46.0%로 가장 많았음

'08.1월~'08.6월



'08.10월~'09.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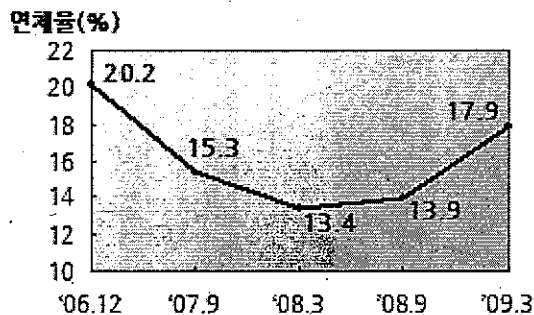


- 경기침체로 인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대출 수요 증가와 더불어 법인 대부업체들의 보수적(소액화) 운용에 따라 단기·소액·신용대출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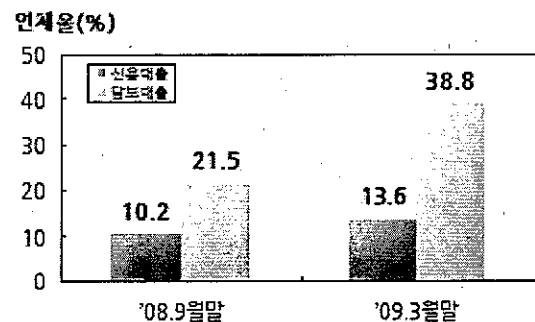
□ (연체율 상승)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형 법인의 연체율 상승

- 특히, 담보대출 연체율(38.8%)이 신용대출 연체율(13.6%)의 3배 수준

전체 연체율 추이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추이



- 담보대출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소득원은 적으나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신용대출보다 경기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9.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금융위 지원 현황

<1> 채권시장안정펀드

□ (구성 경과) 채권시장안정펀드는 채권시장 불안요인 해소를 통해 실물부문으로의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도모할 목적으로

- '08.12.17일 10조원 규모*로 설립되었으며, 1차로 조성된 5조원**을 산은자산운용이 운용 중

* 시중 은행(8조원), 보험회사(1.5조원), 증권회사(0.5조원) 출자
※ 채안펀드 조성 관련 당정협의(08.12.12일) 자료 별첨

□ (투자 현황) 투자자 등으로 구성된 투자리스크관리위원회*가 투자 대상 채권의 등급, 채권별 투자 규모 등 투자지침을 정하고

* 채안펀드의 투자 대상 채권 및 투자 시기 등을 결정하는 기구 : 업권별 최다 출자기관(4) 및 출자금액 상위 5개 은행 부기관장, 금융위·한은 추천인사(2), 통합펀드 자산운용사(2)등 총 13명으로 구성

- 산은자산운용이 투자지침에 따라 펀드를 운용하여 '09.7.13일 현재 3.77조원의 채권*에 투자

* 투자된 채권 리스트는 별첨으로 첨부(출처 : 산은자산운용)

□ (향후 운용 방향) 향후 채안펀드는 채권 시장 상황 및 신보의 보증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한 높은 신용등급의 기업 채권보다는 낮은 신용등급의 채권을 신보의 신용보강을 거쳐 매입할 계획
- 이와 함께 미 조성분 5조원은 채권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가 조성 여부를 검토

<2> 금융안정기금

□ 조성 및 집행실적 없음

- 금융안정기금 조성은 향후 은행자본확충펀드 소진상황 등을 보아가며 결정할 예정

설명자료

채권시장안정펀드 현황 및 운용방향

2008. 12. 17



금융위원회

1. 채권시장안정펀드 현황

가. 필요성 및 정책 목표

□ 채권시장의 마찰적 신용 경색 해소

- 거래상대방 위험 증가로 인한 일시적·마찰적 불안요인을 해소하여 실물부문으로의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유도

나.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 추진 현황

(1) 펀드 재원 및 조성 현황

□ (펀드 총액) 총 10조원*을 민간 금융회사가 전액 출자하고 한은이 기관별 출자금의 50%를 대출 지원

- 은행권(8조), 보험업권(1.5조), 증권업권(0.5조)

□ (1차 조성 규모) 12.17일 1차 5조원 규모로 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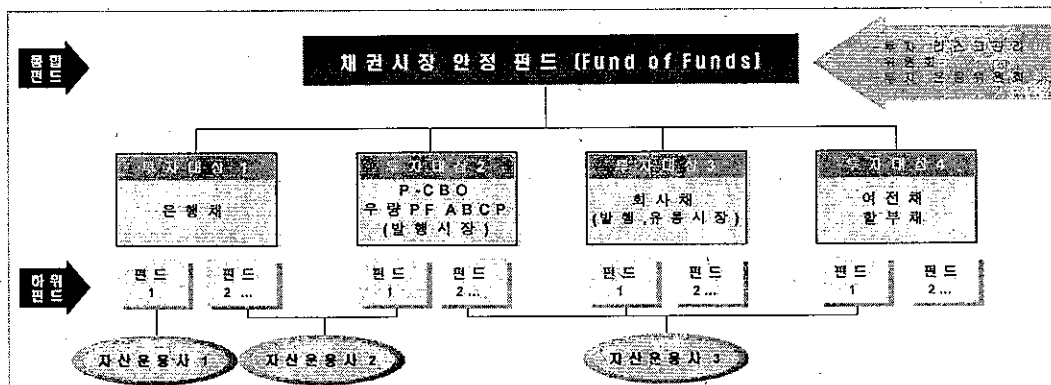
(2) 펀드 성격 및 구조

□ 사모펀드로 3년 만기 Fund of Funds 구조로 운영

- (상위 펀드) 전체 투자자산의 배분을 담당하며 산은자산운용이 운용
- (하위 펀드) 투자분야별(예: P-CBO, 회사채, 은행채 펀드 등) 하위펀드는 출자상위 기관이 선정한 자산운용사*가 운용

* SH자산운용, 하나UBS자산운용, 한국투신운용 등 8개사

〈채권시장안정펀드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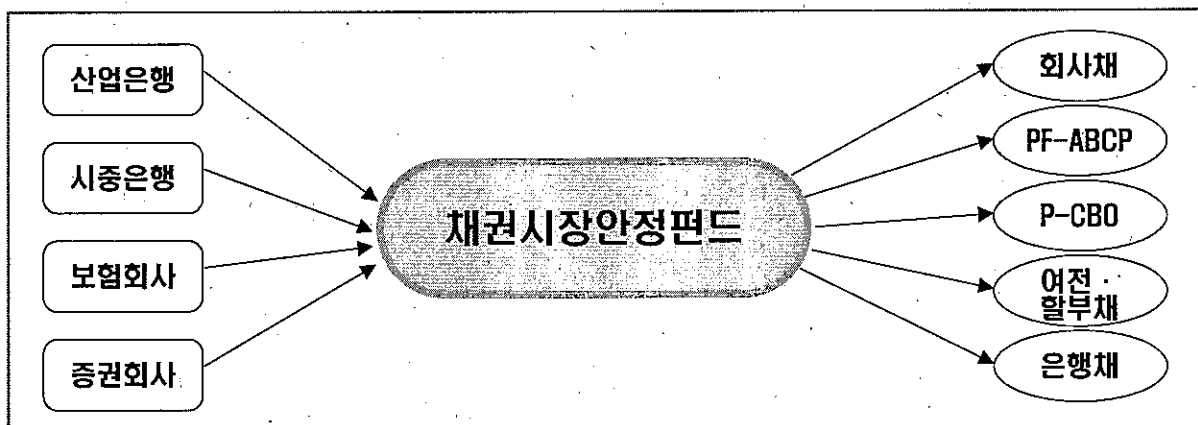
2. 채권시장안정펀드의 운용 방향

가. 운용 방향

□ (투자 대상) 회사채, PF ABCP, 여전·할부금융채 등 만기 도래 채권에 투자

○ (신용 등급)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회사의 일정등급 이상 채권

- 등급 미만 채권의 경우 신보의 신용보강을 통해 투자



나. 투자 현황 및 향후 계획

□ (투자 현황) 회사채, 여전채 등 만기도래채권의 차환발행물 중 시장소화가 어려운 채권을 중심으로 매입 (8. 4일 현재 3.77조원 채권 매입)

□ (향후 계획) 시장소화가 가능한 우량 채권에 대한 투자는 지양 하고, 신용보강을 통해 저신용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

* 펀드 1차분(5조원) 자금 소진 추이를 보아 2차분(잔여 5조원) 조성 추진

단위:원

편입채권명	자신종류	발행회사	신용등급	액면가액	평가금액	영도가액	발행일	인기일	매입금리 (%)	인수추간시
신보2008 3RD 유동	P-CBO			337,850,000,000	337,850,000,000		2008-12-23	2011-12-23	6.59	IBK투자증권, 현대증권, 동양증권금융증권
	기초자산	에치NCC	A	7,923,700,342	7,923,700,342	7,923,700,342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계룡건설산업	A-	7,923,700,342	7,923,700,342	7,923,700,342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삼한기업	BBB+	7,801,168,894	7,801,168,894	7,801,168,894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해태제과식품	BBB+	7,801,168,894	7,801,168,894	7,801,168,894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대우자동차판매	BBB	11,701,753,340	11,701,753,340	11,701,753,340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동원시스템즈	BBB	11,701,753,340	11,701,753,340	11,701,753,340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현대종합상사	BBB-	41,369,231,048	41,369,231,048	41,369,231,048	2008-12-22	2009-12-22		
	기초자산	서화건설	BBB-	1,097,881,779	1,097,881,779	1,097,881,779	2008-12-22	2010-12-22		
	기초자산	유비스	BBB-	7,801,168,894	7,801,168,894	7,801,168,894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로케트전기	BBB+ 이하	6,077,559,850	6,077,559,850	6,077,559,850	2008-12-22	2010-12-22		
	기초자산	오니미	BBB+ 이하	7,678,837,445	7,678,837,445	7,678,837,445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안티진자	BBB+ 이하	11,517,956,167	11,517,956,167	11,517,956,167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대왕이앤씨	BBB+ 이하	465,619,505	465,619,505	465,619,505	2008-12-22	2010-12-22		
	기초자산	대진약품	BBB+ 이하	310,413,003	310,413,003	310,413,003	2008-12-22	2010-12-22		
	기초자산	비타민하루스	BBB+ 이하	465,619,505	465,619,505	465,619,505	2008-12-22	2010-12-22		
	기초자산	신창건설	BBB+ 이하	4,943,327,074	4,943,327,074	4,943,327,074	2008-12-22	2010-12-22		
	기초자산	하나종합건설	BBB+ 이하	698,429,257	698,429,257	698,429,257	2008-12-22	2010-12-22		
	기초자산	대보세리믹스	BBB+ 이하	1,097,881,779	1,097,881,779	1,097,881,779	2008-12-22	2010-12-22		
	기초자산	미프로	BBB+ 이하	376,416,610	376,416,610	376,416,610	2008-12-22	2010-12-22		
	기초자산	우리철강	BBB+ 이하	211,734,343	211,734,343	211,734,343	2008-12-22	2010-12-22		
	기초자산	에이스종합건설	BBB+ 이하	3,169,480,137	3,169,480,137	3,169,480,137	2008-12-22	2010-12-22		
	기초자산	풍택시스템	BBB+ 이하	1,584,740,068	1,584,740,068	1,584,740,068	2008-12-22	2010-12-22		
	기초자산	솔비스	BBB+ 이하	1,584,740,068	1,584,740,068	1,584,740,068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아이씨디	BBB+ 이하	792,370,034	792,370,034	792,370,034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계성	BBB+ 이하	396,185,017	396,185,017	396,185,017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광원유재	BBB+ 이하	2,377,110,103	2,377,110,103	2,377,110,103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글로벌용상	BBB+ 이하	2,377,110,103	2,377,110,103	2,377,110,103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금호건설	BBB+ 이하	396,185,017	396,185,017	396,185,017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남성	BBB+ 이하	3,961,850,171	3,961,850,171	3,961,850,171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대운나라	BBB+ 이하	792,370,034	792,370,034	792,370,034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대국아이엔티	BBB+ 이하	396,185,017	396,185,017	396,185,017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대명아이티에스	BBB+ 이하	1,584,740,068	1,584,740,068	1,584,740,068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대양건설	BBB+ 이하	11,885,550,513	11,885,550,513	11,885,550,513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대원건설	BBB+ 이하	2,377,110,103	2,377,110,103	2,377,110,103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덕원금속	BBB+ 이하	792,370,034	792,370,034	792,370,034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동광석회공업	BBB+ 이하	396,185,017	396,185,017	396,185,017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동북소령	BBB+ 이하	1,584,740,068	1,584,740,068	1,584,740,068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동성식유	BBB+ 이하	396,185,017	396,185,017	396,185,017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동화씨마	BBB+ 이하	3,961,850,171	3,961,850,171	3,961,850,171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드림스코	BBB+ 이하	3,961,850,171	3,961,850,171	3,961,850,171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드림포크	BBB+ 이하	396,185,017	396,185,017	396,185,017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디세이프트릭	BBB+ 이하	3,169,480,137	3,169,480,137	3,169,480,137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디서일베어링	BB+ 이하	1,584,740,068	1,584,740,068	1,584,740,068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디엠에스	BB+ 이하	3,961,850,171	3,961,850,171	3,961,850,171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라운건설	BB+ 이하	1,584,740,068	1,584,740,068	1,584,740,068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루벤스	BB+ 이하	3,961,850,171	3,961,850,171	3,961,850,171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림스텍	BB+ 이하	792,370,034	792,370,034	792,370,034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마이크로컬티	BB+ 이하	2,377,110,103	2,377,110,103	2,377,110,103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만복철강	BB+ 이하	2,377,110,103	2,377,110,103	2,377,110,103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메타텍	BB+ 이하	396,185,017	396,185,017	396,185,017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명성기업	BB+ 이하	792,370,034	792,370,034	792,370,034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부일아연세	BB+ 이하	1,584,740,068	1,584,740,068	1,584,740,068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삼신토닉스	BB+ 이하	11,885,550,513	11,885,550,513	11,885,550,513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삼영플렉트	BB+ 이하	396,185,017	396,185,017	396,185,017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삼일기업	BB+ 이하	396,185,017	396,185,017	396,185,017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서울금속	BB+ 이하	2,377,110,103	2,377,110,103	2,377,110,103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성수	BB+ 이하	792,370,034	792,370,034	792,370,034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성우시멘트	BB+ 이하	5,546,590,240	5,546,590,240	5,546,590,240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성화식품	BB+ 이하	1,584,740,068	1,584,740,068	1,584,740,068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세정	BB+ 이하	11,093,180,479	11,093,180,479	11,093,180,479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세정아실빌	BB+ 이하	3,961,850,171	3,961,850,171	3,961,850,171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신일씨엠	BB+ 이하	1,584,740,068	1,584,740,068	1,584,740,068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신화인테크루	BB+ 이하	1,584,740,068	1,584,740,068	1,584,740,068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세우알디	BB+ 이하	3,961,850,171	3,961,850,171	3,961,850,171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아이엠티글로벌	BB+ 이하	792,370,034	792,370,034	792,370,034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아온테크콤	BB+ 이하	1,584,740,068	1,584,740,068	1,584,740,068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안성공업	BB+ 이하	396,185,017	396,185,017	396,185,017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알토	BB+ 이하	3,961,850,171	3,961,850,171	3,961,850,171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에너지솔루션즈	BB+ 이하	396,185,017	396,185,017	396,185,017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에스엘우드	BB+ 이하	7,923,700,342	7,923,700,342	7,923,700,342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에스제이테크	BB+ 이하	11,885,550,513	11,885,550,513	11,885,550,513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엘에스플렉	BB+ 이하	396,185,017	396,185,017	396,185,017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에진에프앤지	BB+ 이하	1,584,740,068	1,584,740,068	1,584,740,068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우성케미칼	BB+ 이하	1,584,740,068	1,584,740,068	1,584,740,068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우진메디텍	BB+ 이하	396,185,017	396,185,017	396,185,017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위비스	BB+ 이하	3,961,850,171	3,961,850,171	3,961,850,171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유비온	BB+ 이하	1,188,555,051	1,188,555,051	1,188,555,051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윤창기업	BB+ 이하	1,188,555,051	1,188,555,051	1,188,555,051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지루	BB+ 이하	1,584,740,068	1,584,740,068	1,584,740,068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정우금속공업	BB+ 이하	3,961,850,171	3,961,850,171	3,961,850,171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중앙엔비	BB+ 이하	1,584,740,068	1,584,740,068	1,584,740,068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진솔건설	BB+ 이하	1,584,740,068	1,584,740,068	1,584,740,068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진양해운	BB+ 이하	3,961,850,171	3,961,850,171	3,961,850,171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정광	BB+ 이하	3,961,850,171	3,961,850,171	3,961,850,171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정보산업	BB+ 이하	1,584,740,068	1,584,740,068	1,584,740,068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정산화학	BB+ 이하	396,185,017	396,185,017	396,185,017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케이엔디블유	BB+ 이하	2,377,110,103	2,377,110,103	2,377,110,103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코레스	BB+ 이하	3,961,850,171	3,961,850,171	3,961,850,171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코스텔퍼워	BB+ 이하	2,377,110,103	2,377,110,103	2,377,110,103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태성포리텍	BB+ 이하	396,185,017	396,185,017	396,185,017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텔로드	BB+ 이하	2,377,110,103	2,377,110,103	2,377,110,103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드라코월드	BB+ 이하	396,185,017	396,185,017	396,185,017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페널뱅크	BB+ 이하	396,185,017	396,185,017	396,185,017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웅림철강	BB+ 이하	792,370,034	792,370,034	792,370,034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중앙상사	BB+ 이하	1,584,740,068	1,584,740,068	1,584,740,068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한국디크로	BB+ 이하	396,185,017	396,185,017	396,185,017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한국축산의회암서물시료	BB+ 이하	3,961,850,171	3,961,850,171	3,961,850,171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한성물류운반기계	BB+ 이하	396,185,017	396,185,017	396,185,017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한중	BB+ 이하	1,584,740,068	1,584,740,068	1,584,740,068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현대제이름	BB+ 이하	3,961,850,171	3,961,850,171	3,961,850,171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홍성산업	BB+ 이하	792,370,034	792,370,034	792,370,034	2008-12-22	2011-12-22		
	기초자산	화성파넬	BB+ 이하	396,185,017	396,185,017	396,185,017	2008-12-22	2011-12-22		
신보채안펀드제일차	P-C80			60,000,000,000	60,000,000,000	-	2008.01.29	2010.01.29	3.82	동양종합금융증권, 한화증권, HMO투자증권
신보채안펀드제일차	P-C80			908,100,000,000	908,100,000,000		2009.01.29	2012.01.29	4.83	
기초자산	대우캐피탈	A+		57,300,000,000	57,300,000,000	57,300,000,000	2009-01-28	2012-01-28		
기초자산	두산캐피탈	A+		57,300,000,000	57,300,000,000	57,300,000,000	2009-01-28	2012-01-28		
기초자산	두산인프라코어	A		38,800,000,000	38,800,000,000	38,800,000,000	2009-01-28	2012-01-28		
기초자산	두산중공업	A		28,650,000,000	28,650,000,000	28,650,000,000	2009-01-28	2012-01-28		
기초자산	대한전선	A-		48,500,000,000	48,500,000,000	48,500,000,000	2009-01-28	2012-01-28		
기초자산	대원해운	A-		29,100,000,000	29,100,000,000	29,100,000,000	2009-01-28	2012-01-28		
기초자산	SIX	A-		97,000,000,000	97,000,000,000	97,000,000,000	2009-01-28	2012-01-28		
기초자산	SK건설	A-		67,900,000,000	67,900,000,000	67,900,000,000	2009-01-28	2012-01-28		
기초자산	대우건설	A-		48,500,000,000	48,500,000,000	48,500,000,000	2009-01-28	2012-01-28		
기초자산	우리캐피탈	A-		47,750,000,000	47,750,000,000	47,750,000,000	2009-01-28	2012-01-28		
기초자산	호성캐피탈	A-		28,650,000,000	28,650,000,000	28,650,000,000	2009-01-28	2012-01-28		
기초자산	고려개발	A-		28,650,000,000	28,650,000,000	28,650,000,000	2009-01-28	2012-01-28		
기초자산	원화	A-		97,000,000,000	97,000,000,000	97,000,000,000	2009-01-28	2012-01-28		
기초자산	한솔제지	BBB+		97,000,000,000	97,000,000,000	97,000,000,000	2009-01-28	2012-01-28		
기초자산	코오롱	BBB+		77,600,000,000	77,600,000,000	77,600,000,000	2009-01-28	2012-01-28		
기초자산	POSCO에너지	BBB+		29,100,000,000	29,100,000,000	29,100,000,000	2009-01-28	2012-01-28		
기초자산	금호타이어	BBB+		38,800,000,000	38,800,000,000	38,800,000,000	2009-01-28	2012-01-28		
기초자산	해태제과	BBB+		48,500,000,000	48,500,000,000	48,500,000,000	2009-01-28	2012-01-28		
신보채안펀드드라이1-1	P-C80			80,000,000,000	80,000,000,000		2009.03.05	2010.03.05	3.42	우리투자증권, 신영증권, K3투자증권
신보채안펀드드라이1-2	P-C80			644,050,000,000	644,050,000,000		2009.03.05	2012.03.05	4.49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 신영증권, K8투자증권
기초자산	대우캐피탈	A+		38,200,000,000	38,200,000,000	38,200,000,000	2009-03-04	2012-03-04		
기초자산	두산캐피탈	A+		47,750,000,000	47,750,000,000	47,750,000,000	2009-03-04	2012-03-04		
기초자산	두산중공업	A		97,000,000,000	97,000,000,000	97,000,000,000	2009-03-04	2012-03-04		
기초자산	여진NCC	A		48,500,000,000	48,500,000,000	48,500,000,000	2009-03-04	2012-03-04		
기초자산	우리캐피탈	A-		28,650,000,000	28,650,000,000	28,650,000,000	2009-03-04	2012-03-04		
기초자산	호성캐피탈	A-		28,650,000,000	28,650,000,000	28,650,000,000	2009-03-04	2012-03-04		
기초자산	SK건설	A-		19,400,000,000	19,400,000,000	19,400,000,000	2009-03-04	2012-03-04		

기초자산	김초타이어	B88+	9,700,000,000	9,700,000,000	9,700,000,000	2009-03-04	2012-03-04	
기초자산	한진건설	B88+	42,975,000,000	42,975,000,000	42,975,000,000	2009-03-04	2012-03-04	
기초자산	금호석유화학	B88	48,500,000,000	48,500,000,000	48,500,000,000	2009-03-04	2012-03-04	
기초자산	아시안나환공	B88	48,500,000,000	48,500,000,000	48,500,000,000	2009-03-04	2012-03-04	
기초자산	대우자동차판매	B88	38,800,000,000	38,800,000,000	38,800,000,000	2009-03-04	2012-03-04	
기초자산	동부제철	B88	48,500,000,000	48,500,000,000	48,500,000,000	2009-03-04	2012-03-04	
기초자산	코오롱건설	B88	48,500,000,000	48,500,000,000	48,500,000,000	2009-03-04	2012-03-04	
기초자산	금호엔비화학	B88-	29,100,000,000	29,100,000,000	29,100,000,000	2009-03-04	2012-03-04	
기초자산	뉴코아	B88-	29,100,000,000	29,100,000,000	29,100,000,000	2009-03-04	2012-03-04	
기초자산	휴비스	B88-	9,700,000,000	9,700,000,000	9,700,000,000	2009-03-04	2012-03-04	
기초자산	이랜드월드	B88-	29,100,000,000	29,100,000,000	29,100,000,000	2009-03-04	2012-03-04	
기초자산	성우중간건설	B88-	33,425,000,000	33,425,000,000	33,425,000,000	2009-03-04	2012-03-04	
신보희망디딤돌1-1	P-080		241,975,000,000	241,975,000,000	241,975,000,000	2009-03-31	2012-03-31	내부자증권, 신원증권, 대우증권, 현대증권
기초자산	대한제약	A-	19,400,000,000	19,400,000,000	19,400,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크리온제과	B88+	19,400,000,000	19,400,000,000	19,400,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스마트모공신	B8+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대동아크로텍	B8+ 이하	2,910,000,000	2,910,000,000	2,910,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케이엘에스	B8+ 이하	2,910,000,000	2,910,000,000	2,910,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태광건설산업	B8+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대창에이지일메스지	B8+ 이하	4,850,000,000	4,850,000,000	4,850,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대우중공업	B8+ 이하	5,820,000,000	5,820,000,000	5,820,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호랑건설	B8+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씨씨아트	B8+ 이하	2,910,000,000	2,910,000,000	2,910,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부국이엔지	B8+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아이인에이지	B8+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코모스	B8+ 이하	4,850,000,000	4,850,000,000	4,850,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제이씨엔지니어링	B8+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슈강테크	B8+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모나미	B8+ 이하	9,550,000,000	9,550,000,000	9,550,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유성트랜에스	B8+ 이하	4,775,000,000	4,775,000,000	4,775,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경인	B8+ 이하	1,940,000,000	1,940,000,000	1,940,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아진스핀	B8+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대륙테크놀로지	B8+ 이하	1,940,000,000	1,940,000,000	1,940,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성일토발로핀팅	B8+ 이하	1,940,000,000	1,940,000,000	1,940,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리스피엘씨	B8+ 이하	2,910,000,000	2,910,000,000	2,910,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에스엔비	B8+ 이하	2,910,000,000	2,910,000,000	2,910,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지에이엠	B8+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엘드건설	B8+ 이하	2,910,000,000	2,910,000,000	2,910,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티에스파이프	B8+ 이하	1,940,000,000	1,940,000,000	1,940,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오킨스전자	B8+ 이하	2,910,000,000	2,910,000,000	2,910,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미래클리어엔씨	B8+ 이하	1,940,000,000	1,940,000,000	1,940,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대륙금속	B8+ 이하	2,910,000,000	2,910,000,000	2,910,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코아스틸	B8+ 이하	3,880,000,000	3,880,000,000	3,880,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슈기버홀	B8+ 이하	2,910,000,000	2,910,000,000	2,910,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에스이매널	B8+ 이하	1,940,000,000	1,940,000,000	1,940,000,000	2009-03-30	2012-03-30	

기초자산	명진선박	BB+ 이하	2,910,000,000	2,910,000,000	2,910,000,000	2012-03-30		
기초자산	영화금속	BB+ 이하	2,910,000,000	2,910,000,000	2,910,000,000	2012-03-30		
기초자산	제주택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12-03-30		
기초자산	디에이치폴리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12-03-30		
기초자산	에이치앤지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12-03-30		
기초자산	세호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12-03-30		
기초자산	바이텍정보통신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12-03-30		
기초자산	영광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12-03-30		
기초자산	트림테크크리트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12-03-30		
기초자산	이티에이치	BB+ 이하	1,940,000,000	1,940,000,000	1,940,000,000	2012-03-30		
기초자산	현중건설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12-03-30		
기초자산	대원건설	BB+ 이하	1,940,000,000	1,940,000,000	1,940,000,000	2012-03-30		
기초자산	이강물산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12-03-30		
기초자산	유진정림	BB+ 이하	1,940,000,000	1,940,000,000	1,940,000,000	2012-03-30		
기초자산	신기방직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12-03-30		
기초자산	에스티에스반도체	BB+ 이하	9,700,000,000	9,700,000,000	9,700,000,000	2012-03-30		
기초자산	와이지-원	BB+ 이하	9,700,000,000	9,700,000,000	9,700,000,000	2012-03-30		
기초자산	비케이엘씨디	BB+ 이하	4,775,000,000	4,775,000,000	4,775,000,000	2012-03-30		
기초자산	성우하이텍	BB+ 이하	9,700,000,000	9,700,000,000	9,700,000,000	2012-03-30		
기초자산	능원금속공업	BB+ 이하	4,775,000,000	4,775,000,000	4,775,000,000	2012-03-30		
기초자산	세유산업개발	BB+ 이하	4,850,000,000	4,850,000,000	4,850,000,000	2012-03-30		
기초자산	웅진종합책수감	BB+ 이하	4,850,000,000	4,850,000,000	4,850,000,000	2012-03-30		
기초자산	두용상사	BB+ 이하	4,850,000,000	4,850,000,000	4,850,000,000	2012-03-30		
기초자산	소망회창출	BB+ 이하	4,850,000,000	4,850,000,000	4,850,000,000	2012-03-30		
기초자산	세신전자	BB+ 이하	9,700,000,000	9,700,000,000	9,700,000,000	2012-03-30		
기초자산	한신공업	BB+ 이하	19,400,000,000	19,400,000,000	19,400,000,000	2012-03-30		
기초자산	HS마이크로	BB+ 이하	2,910,000,000	2,910,000,000	2,910,000,000	2012-03-30		
기초자산	아비스타	BB+ 이하	6,790,000,000	6,790,000,000	6,790,000,000	2012-03-30		
기초자산	신성통신	BB+ 이하	9,550,000,000	9,550,000,000	9,550,000,000	2012-03-30		
신보화합디스플레이1-1	P-C80		14,925,000,000	14,925,000,000	14,925,000,000	2012-03-30		한국투자증권, 동부증권, IBK투자증권, 국민증권, 동양증권, 신한금융투자
신보화합디스플레이1-2	P-C80		329,125,000,000	329,125,000,000	329,125,000,000	2012-03-30		한국투자증권, 동부증권, IBK투자증권, 국민증권, 동양증권, 신한금융투자
기초자산	계룡건설산업	A-	9,700,000,000	9,700,000,000	9,700,000,000	2012-05-20		
기초자산	삼환개발	BBB-	9,700,000,000	9,700,000,000	9,700,000,000	2012-05-20		
기초자산	서진산업	BBB-	14,550,000,000	14,550,000,000	14,550,000,000	2012-05-20		
기초자산	대경건설	BB+ 이하	1,344,000,000	1,344,000,000	1,344,000,000	2011-05-20		
기초자산	미리넷	BB+ 이하	2,304,000,000	2,304,000,000	2,304,000,000	2011-05-20		
기초자산	세하	BB+ 이하	5,376,000,000	5,376,000,000	5,376,000,000	2011-05-20		
기초자산	이토건설	BB+ 이하	1,344,000,000	1,344,000,000	1,344,000,000	2011-05-20		
기초자산	대호산업	BB+ 이하	558,000,000	558,000,000	558,000,000	2011-05-20		
기초자산	신일산업	BB+ 이하	2,604,000,000	2,604,000,000	2,604,000,000	2011-05-20		
기초자산	메달엔터테인먼트	BB+ 이하	1,395,000,000	1,395,000,000	1,395,000,000	2011-05-20		
기초자산	대한방직	BB+ 이하	9,550,000,000	9,550,000,000	9,550,000,000	2012-05-20		
기초자산	신성통신	BB+ 이하	9,550,000,000	9,550,000,000	9,550,000,000	2012-05-20		
기초자산	성우하이텍	BB+ 이하	14,550,000,000	14,550,000,000	14,550,000,000	2012-05-20		
기초자산	에스티에스반도체	BB+ 이하	9,700,000,000	9,700,000,000	9,700,000,000	2012-05-20		

기초자산	외이자-원	BB+ 이하	9,700,000,000	9,700,000,000	9,70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유성티앤에스	BB+ 이하	4,775,000,000	4,775,000,000	4,775,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화인텍	BB+ 이하	9,550,000,000	9,550,000,000	9,55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킴스클럽마트	BB+ 이하	9,550,000,000	9,550,000,000	9,55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보리내오기구	BB+ 이하	6,790,000,000	6,790,000,000	6,79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디에스제강	BB+ 이하	1,455,000,000	1,455,000,000	1,455,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삼미식품	BB+ 이하	2,910,000,000	2,910,000,000	2,91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세미텍	BB+ 이하	4,850,000,000	4,850,000,000	4,85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인스프리트	BB+ 이하	1,940,000,000	1,940,000,000	1,94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코미코	BB+ 이하	1,940,000,000	1,940,000,000	1,94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휴먼텍코리아	BB+ 이하	9,700,000,000	9,700,000,000	9,70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건아엔터프라이즈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경동건설	BB+ 이하	4,850,000,000	4,850,000,000	4,85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광신엔터프라이즈	BB+ 이하	2,910,000,000	2,910,000,000	2,91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글로벌엔에프지	BB+ 이하	1,940,000,000	1,940,000,000	1,94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금강기전	BB+ 이하	1,940,000,000	1,940,000,000	1,94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대신철강	BB+ 이하	4,850,000,000	4,850,000,000	4,85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대창양회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대흥철강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익광중공업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동아산업	BB+ 이하	2,910,000,000	2,910,000,000	2,91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동양메닉스	BB+ 이하	1,940,000,000	1,940,000,000	1,94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동양카친나라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동원산업	BB+ 이하	1,940,000,000	1,940,000,000	1,94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동원플러스	BB+ 이하	1,940,000,000	1,940,000,000	1,94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동원기연	BB+ 이하	1,940,000,000	1,940,000,000	1,94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동철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디앤씨엔지니어링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디자인플랜트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디케이산업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박기열텍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리트코	BB+ 이하	4,850,000,000	4,850,000,000	4,85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만성스텍	BB+ 이하	2,910,000,000	2,910,000,000	2,91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메이저텍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범양이앤씨	BB+ 이하	3,880,000,000	3,880,000,000	3,88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모이스건설	BB+ 이하	1,940,000,000	1,940,000,000	1,94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부일로지스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비에스테크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삼부신재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삼신글속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삼신이노텍	BB+ 이하	2,425,000,000	2,425,000,000	2,425,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삼정산업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삼원산업개발	BB+ 이하	1,940,000,000	1,940,000,000	1,94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상진미크론	BB+ 이하	4,850,000,000	4,850,000,000	4,85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서용약품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상진중공업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상호건설	BB+ 이하	2,910,000,000	2,910,000,000	2,91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세신비발로	BB+ 이하	2,910,000,000	2,910,000,000	2,91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세양정공	BB+ 이하	1,940,000,000	1,940,000,000	1,94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소이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솔비스	BB+ 이하	1,940,000,000	1,940,000,000	1,94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송강산업	BB+ 이하	7,760,000,000	7,760,000,000	7,76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시스온힐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신한제강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신로정보시스템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세크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세티에스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아볼글속공업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아진	BB+ 이하	4,850,000,000	4,850,000,000	4,85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아이시스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에스엔에스인더스트리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에스엔지	BB+ 이하	1,940,000,000	1,940,000,000	1,94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에스제이테크	BB+ 이하	2,910,000,000	2,910,000,000	2,91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엔피텍	BB+ 이하	1,455,000,000	1,455,000,000	1,455,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영포원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머원미디어한국가드너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두진일과	BB+ 이하	4,850,000,000	4,850,000,000	4,85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우송공업	BB+ 이하	3,880,000,000	3,880,000,000	3,88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원일	BB+ 이하	2,910,000,000	2,910,000,000	2,91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원스틸	BB+ 이하	3,880,000,000	3,880,000,000	3,88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원텍이앤지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유니메탈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유엔피	BB+ 이하	1,940,000,000	1,940,000,000	1,94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유평파인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재호물산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전단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정원엔지니어링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제이일피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제이엘피솔루션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주상물리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중앙인내셔널	BB+ 이하	2,910,000,000	2,910,000,000	2,91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자연오프퍼레이션	BB+ 이하	1,940,000,000	1,940,000,000	1,94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제이엘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지아이인텍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지학사	BB+ 이하	2,910,000,000	2,910,000,000	2,91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진서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진호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제스투어즈	BB+ 이하	2,910,000,000	2,910,000,000	2,91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케이엔티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코스텍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코에버퍼패널	BB+ 이하	1,940,000,000	1,940,000,000	1,94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크리스패션	BB+ 이하	3,880,000,000	3,880,000,000	3,88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태실코우전자	BB+ 이하	1,455,000,000	1,455,000,000	1,455,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블레이드테크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티지유흥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종미사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프라임팩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프로브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한겨레출판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한국연지니아어령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한국인스팜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한국특장기술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한라산업개발	BB+ 이하	9,700,000,000	9,700,000,000	9,70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한림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한미상재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한미시스템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한배전자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한본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한창하이메탈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호진셀염	BB+ 이하	4,850,000,000	4,850,000,000	4,85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화인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화웅정공	BB+ 이하	2,910,000,000	2,910,000,000	2,91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화림철강	BB+ 이하	4,850,000,000	4,850,000,000	4,850,000,000	2009-05-20	2012-05-20	
기초자산	휴블로빌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5-20	2012-05-20	
신보희망디딤돌제상차	P-C80	AAA	203,700,000,000	203,700,000,000	203,700,000,000	2009-06-30	2012-06-30	HMC투자증권, 삼성증권, 한화증권, 우리투자증권, K3투자증권
기초자산	기니레포조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강종건설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강원엘퍼서	BB+ 이하	1,940,000,000	1,940,000,000	1,94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광두루	BB+ 이하	1,455,000,000	1,455,000,000	1,45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광우정보통신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구로인타내셔널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그리마건설	BB+ 이하	4,850,000,000	4,850,000,000	4,85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극동철강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금어플로우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기웅스텔레스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꿈그린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니진스틸	BB+ 이하	1,455,000,000	1,455,000,000	1,45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병영	BB+ 이하	1,455,000,000	1,455,000,000	1,45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남양산업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남양건설	BB+ 이하	2,910,000,000	2,910,000,000	2,91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내일엔지니어링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대건씨앤에스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대구농산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대덕에프엠디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대동산업	BB+ 이하	1,455,000,000	1,455,000,000	1,45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대부인더스	98+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대영유비텍	98+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대청공업	98+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대청산업개발	98+ 이하	1,940,000,000	1,940,000,000	1,94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대부자원	98+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덕천관지	98+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데이센	98+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대코텍	98+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도시인더스트리	98+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동성창공	98+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동우씨엠	98+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동원테크	98+ 이하	2,910,000,000	2,910,000,000	2,91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두성산업	98+ 이하	2,910,000,000	2,910,000,000	2,91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북한산업개발	98+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리프론	98+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만성스틸	98+ 이하	2,425,000,000	2,425,000,000	2,42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말론이더지는영어	98+ 이하	1,940,000,000	1,940,000,000	1,94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명인시스템	98+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몬티스타텔레콤	98+ 이하	2,910,000,000	2,910,000,000	2,91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이도컴퍼니	98+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반성중공업	98+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백신철강	98+ 이하	1,940,000,000	1,940,000,000	1,94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백조윙크	98+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보미종합건설	98+ 이하	5,820,000,000	5,820,000,000	5,82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브리지해운항공	98+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비에스지파트너스	98+ 이하	1,455,000,000	1,455,000,000	1,45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비투케이	98+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삼양개발	98+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세원공업	98+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삼흥사	98+ 이하	4,850,000,000	4,850,000,000	4,85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삼화주철공업	98+ 이하	1,940,000,000	1,940,000,000	1,94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삼원식품	98+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석영엔터프라이즈	98+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성진통운	98+ 이하	2,910,000,000	2,910,000,000	2,91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성진이에스티	98+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성안염직	98+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성원정밀	98+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세명테크	98+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세민수산	98+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세원전자	98+ 이하	4,850,000,000	4,850,000,000	4,85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세화정밀	98+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승림특수금융	98+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신영금융	98+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신일건구	98+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편리취	98+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서티지아이엔씨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아성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아성산업개발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아세이유니온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아스텍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아이더블유아이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아이텔스인터네셔널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아이서브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아이메스피	BB+ 이하	1,940,000,000	1,940,000,000	1,94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광일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캡카이트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에스아이디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에스케이이엠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에이치.케이.씨	BB+ 이하	1,940,000,000	1,940,000,000	1,94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에이치엘금속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에이치케이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엘지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영림목재	BB+ 이하	1,940,000,000	1,940,000,000	1,94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영우디지털	BB+ 이하	1,940,000,000	1,940,000,000	1,94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영진케이볼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영진랜드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오트엠아이티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우성인진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운양건설	BB+ 이하	2,910,000,000	2,910,000,000	2,91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원방주철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웰스릴	BB+ 이하	1,940,000,000	1,940,000,000	1,94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유건트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유니트월	BB+ 이하	1,940,000,000	1,940,000,000	1,94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유성하이테크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유양산전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웅성테크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이너텍기계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이플리머	BB+ 이하	2,425,000,000	2,425,000,000	2,42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이피에스솔루션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인텔칩강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일신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전한솔리이드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정명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제신약품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제이에스지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제일건설	BB+ 이하	4,850,000,000	4,850,000,000	4,85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제일트림스	BB+ 이하	1,455,000,000	1,455,000,000	1,45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제주백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중앙산업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지신화학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전미식품	BB+ 이하	2,910,000,000	2,910,000,000	2,91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진보자원개발	BB+ 이하	1,940,000,000	1,940,000,000	1,94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전신산업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전원산업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청아미농업회사법인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코리아디커드	BB+ 이하	2,910,000,000	2,910,000,000	2,91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큐알솔브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태백금속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태백주철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태서리시이클링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타이어엠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파워텍스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중합금공업	BB+ 이하	2,910,000,000	2,910,000,000	2,91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한국네트웍	BB+ 이하	1,940,000,000	1,940,000,000	1,94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한미오앤에프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한솔화학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한솔제약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한솔화학건설	BB+ 이하	4,850,000,000	4,850,000,000	4,85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한솔제약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한솔화학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현대건설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현대타이어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호신사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호진산업	BB+ 이하	4,850,000,000	4,850,000,000	4,85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화성금속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화성철강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화성철강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화진캐미칼	BB+ 이하	2,910,000,000	2,910,000,000	2,91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호림산업	BB+ 이하	485,000,000	485,000,000	485,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웨스트시스템	BB+ 이하	970,000,000	970,000,000	97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히가리이노비전	BB+ 이하	9,700,000,000	9,700,000,000	9,70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신성에프케이	BB+ 이하	3,880,000,000	3,880,000,000	3,88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신우	BB+ 이하	2,910,000,000	2,910,000,000	2,91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케이디세정보통신	BB+ 이하	9,700,000,000	9,700,000,000	9,700,000,000	2009-06-29	2012-06-29	
기초자산	신성이앤지	AAA	80,000,000,000	80,000,000,000	80,000,000,000	2009-01-22	2011-01-22	4.35
국민은행2501이표일	국민은행	AAA	10,000,000,000	10,000,000,000	10,000,000,000	2009-01-30	2010-01-30	3.49
국민은행2501합인일1	국민은행	AAA	10,000,000,000	10,000,000,000	10,000,000,000	2009-01-30	2010-01-30	3.93
국민은행2502이표일	국민은행	AAA	10,000,000,000	10,000,000,000	10,000,000,000	2009-02-09	2010-02-09	3.93
기림은행(신)0901합	기림은행	AAA	30,000,000,000	30,000,000,000	30,000,000,000	2009-01-20	2010-01-20	3.28
기림은행(신)0902합	기림은행	AAA	10,000,000,000	10,000,000,000	10,000,000,000	2009-02-02	2010-02-02	3.23
기림은행(신)0902합1	기림은행	AAA	10,000,000,000	10,000,000,000	10,000,000,000	2009-02-04	2010-02-04	3.18
기림은행신0902	기림은행	AAA	10,000,000,000	10,000,000,000	10,000,000,000	2009-02-06	2010-02-06	3.68
농공채2009-02011.5	농림중앙회	AAA	10,000,000,000	10,000,000,000	10,000,000,000	2009-02-06	2010-02-06	3.93
대구은행29-120136A	대구은행	AA+	10,000,000,000	10,000,000,000	10,000,000,000	2008-12-31	2011-12-31	6.27
신금09신010300-011	신협은행	AAA	80,000,000,000	80,000,000,000	80,000,000,000	2009-01-13	2012-01-13	4.22
수협은행09-01010	수협중앙회	AAA	10,000,000,000	10,000,000,000	10,000,000,000	2009-01-16	2012-01-16	4.65
신한은행13-01합1A	신한은행	AAA	50,000,000,000	50,000,000,000	50,000,000,000	2009-01-30	2010-01-30	3.5
신한은행13-02합1A	신한은행	AAA	40,000,000,000	40,000,000,000	40,000,000,000	2009-02-06	2010-02-06	3.3

우리은행12-12이2간	은행채	우리은행	AAA	80,000,000,000	80,000,000,000	2008.12.26	2010.12.26	5.89	K8투자증권, 하나대투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하나은행09-01월12간2	은행채	하나은행	AAA	10,000,000,000	10,000,000,000	2009.01.22	2010.01.22	3.52	K8투자증권
하나은행09-01이24	은행채	하나은행	AAA	50,000,000,000	50,000,000,000	2009.01.22	2011.01.22	4.35	신영증권, 키움증권
하나은행09-02월12	은행채	하나은행	AAA	10,000,000,000	10,000,000,000	2009.02.06	2010.02.06	3.25	키움증권
SC제일은행09-02월01-	은행채	SC제일은행	AAA	40,000,000,000	40,000,000,000	2009.02.06	2010.02.06	3.25	신영증권, 키움증권, K8투자증권
롯데카드122	여전채	롯데카드	AA-	20,000,000,000	20,000,000,000	2009.01.15	2010.01.15	5.48	국민신한증권, 우리투자증권
삼성카드1797	여전채	삼성카드	AA0	20,000,000,000	20,000,000,000	2008.12.18	2011.12.18	8.44	한국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신한카드1340	여전채	신한카드	AA0	20,000,000,000	20,000,000,000	2008.12.18	2011.12.18	8.44	동양종합금융증권, 동부증권
현대카드186	여전채	현대카드	AA0	20,000,000,000	20,000,000,000	2009.01.22	2012.01.22	6.09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
현대캐피탈997	여전채	현대캐피탈	AA0	20,000,000,000	20,000,000,000	2009.02.25	2012.02.25	5.3	한국투자증권
신세계117	회사채	신세계	AA+	50,000,000,000	50,000,000,000	2009.05.07	2012.05.07	4.69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신세계118	회사채	신세계	AA+	50,000,000,000	50,000,000,000	2009.06.26	2012.06.26	5.32	이트레이드증권, 하이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하나대투증권
E120-2	회사채	E1-	AA0	60,000,000,000	60,000,000,000	2009.04.29	2012.04.29	4.85	우리투자증권
LG화학43	회사채	LG화학	AA0	40,000,000,000	40,000,000,000	2009.05.04	2012.05.04	4.68	SK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SK247-1	회사채	SK	AA+	70,000,000,000	70,000,000,000	2009.04.15	2012.04.15	4.94	SK증권, 삼성증권
SK에너지21-1	회사채	SK에너지	AA+	40,000,000,000	40,000,000,000				
계				3,777,725,000,000	3,777,725,000,000	2,817,725,000,000			

신보2008 제3차 P-CBO 기초자산명세

단위:억원

순번	회사명	신용등급	금액
1	여천NCC	A	79.2
2	계룡건설산업	A-	79.2
3	삼환기업	BBB+	78.0
4	해태제과식품	BBB+	78.0
5	대우자동차판매	BBB	117.0
6	동원시스템즈	BBB	117.0
7	현대종합상사	BBB-	413.7
8	서희건설	BBB-	11.0
9	휴비스	BBB-	78.0
10	로케트전기	BB+ 이하	60.8
11	모나미	BB+ 이하	76.8
12	알티전자	BB+ 이하	115.2
13	대왕이앤씨	BB+ 이하	4.7
14	대전약품	BB+ 이하	3.1
15	비타민하우스	BB+ 이하	4.7
16	신창건설	BB+ 이하	49.4
17	하나종합건설	BB+ 이하	7.0
18	대보세라믹스	BB+ 이하	11.0
19	마프로	BB+ 이하	3.8
20	우리철강	BB+ 이하	2.1
21	에이스종합건설	BB+ 이하	31.7
22	콤텍시스템	BB+ 이하	15.8
23	솔버스	BB+ 이하	15.8
24	아이씨디	BB+ 이하	7.9
25	계성	BB+ 이하	4.0
26	광원목재	BB+ 이하	23.8
27	글로벌통상	BB+ 이하	23.8
28	금호전선	BB+ 이하	4.0
29	남성	BB+ 이하	39.6
30	다운나라	BB+ 이하	7.9
31	대국아이엔티	BB+ 이하	4.0
32	대명아이티에스	BB+ 이하	15.8
33	대양상선	BB+ 이하	118.9
34	대협철강	BB+ 이하	23.8
35	덕현금속	BB+ 이하	7.9
36	동광석회공업	BB+ 이하	4.0
37	동북쇼펍	BB+ 이하	15.8
38	동성석유	BB+ 이하	4.0
39	동화씨마	BB+ 이하	39.6
40	드림스코	BB+ 이하	39.6
41	드림포크	BB+ 이하	4.0
42	디씨에프트랙	BB+ 이하	31.7
43	디씨엘베어링	BB+ 이하	15.8
44	디엠에스	BB+ 이하	39.6
45	라운건설	BB+ 이하	15.8
46	루멘스	BB+ 이하	39.6
47	림스텍	BB+ 이하	7.9
48	마이크로필터	BB+ 이하	23.8
49	만복철강	BB+ 이하	23.8
50	메타텍	BB+ 이하	4.0
51	명성기업	BB+ 이하	7.9
52	부일이앤씨	BB+ 이하	15.8
53	삼선로직스	BB+ 이하	118.9

54	삼영플랜트	BB+ 이하	4.0
55	삼일기업	BB+ 이하	4.0
56	서울금속	BB+ 이하	23.8
57	성수	BB+ 이하	7.9
58	성우시앤시	BB+ 이하	55.5
59	성화식품	BB+ 이하	15.8
60	세정	BB+ 이하	110.9
61	세정이십일	BB+ 이하	39.6
62	신일씨엠	BB+ 이하	15.8
63	신화인터크루	BB+ 이하	15.8
64	씨유알디	BB+ 이하	39.6
65	아이엠티글로벌	BB+ 이하	7.9
66	아톤텔레콤	BB+ 이하	15.8
67	안성공업	BB+ 이하	4.0
68	알토	BB+ 이하	39.6
69	에너지솔루션즈	BB+ 이하	39.6
70	에스엠우드	BB+ 이하	4.0
71	에스제이테크	BB+ 이하	79.2
72	에스피피조선	BB+ 이하	118.9
73	엘에스폼웍	BB+ 이하	4.0
74	예진에프앤지	BB+ 이하	15.8
75	우성케미칼	BB+ 이하	15.8
76	우진메디텍	BB+ 이하	4.0
77	위비스	BB+ 이하	39.6
78	유비온	BB+ 이하	11.9
79	윤창기공	BB+ 이하	11.9
80	자루	BB+ 이하	15.8
81	정우금속공업	BB+ 이하	39.6
82	중앙엠앤비	BB+ 이하	15.8
83	진솔건설	BB+ 이하	15.8
84	진양해운	BB+ 이하	39.6
85	청광	BB+ 이하	39.6
86	청보산업	BB+ 이하	15.8
87	청산화학	BB+ 이하	4.0
88	케이엔더블유	BB+ 이하	23.8
89	코레스	BB+ 이하	39.6
90	코스탈파워	BB+ 이하	23.8
91	태성포리텍	BB+ 이하	4.0
92	텔로드	BB+ 이하	23.8
93	트라코월드	BB+ 이하	4.0
94	패널뱅크	BB+ 이하	4.0
95	풍림철강	BB+ 이하	7.9
96	풍양상사	BB+ 이하	15.8
97	한국다크로	BB+ 이하	4.0
98	한국축산의회망서울사료	BB+ 이하	39.6
99	한성물류운반기계	BB+ 이하	4.0
100	한중	BB+ 이하	15.8
101	현대제이콤	BB+ 이하	39.6
102	홍창산업	BB+ 이하	7.9
103	화성판넬	BB+ 이하	4.0
계			3,378.5

주) P-CBO 발행시점의 신용등급임

신보채안펀드 제1차 P-CBO 기초자산명세

단위:억원

NO	업체명	신용등급	금액
1	대우캐피탈	A+	573
2	두산캐피탈	A+	573
3	두산인프라코어	A	388
4	두산중공업	A	287
5	대한전선	A-	485
6	대한해운	A-	291
7	STX	A-	970
8	SK건설	A-	679
9	대우건설	A-	485
10	우리캐피탈	A-	478
11	효성캐피탈	A-	287
12	고려개발	A-	287
13	한화	A-	970
14	한솔제지	BBB+	970
15	코오롱	BBB+	776
16	FNC코오롱	BBB+	291
17	금호타이어	BBB+	388
18	해태제과	BBB+	485
	계		9,661

주) P-CBO 발행시점의 신용등급임

신보채안펀드 제2차 P-CBO 기초자산명세

단위:억원

NO	업체명	신용등급	금액
1	대우캐피탈	A+	382
2	두산캐피탈	A+	478
3	두산중공업	A	970
4	여천NCC	A	485
5	우리캐피탈	A-	287
6	효성캐피탈	A-	287
7	SK건설	A-	194
8	금호타이어	BBB+	97
9	한라건설	BBB+	430
10	금호석유화학	BBB	485
11	아시아나항공	BBB	485
12	대우자동차판매	BBB	388
13	동부제철	BBB	485
14	코오롱건설	BBB	485
15	금호피앤비화학	BBB-	291
16	뉴코아	BBB-	291
17	휴비스	BBB-	97
18	이랜드월드	BBB-	291
19	성우종합건설	BBB-	334
	계		7,240.5

주) P-CBO 발행시점의 신용등급임

신보희망디딤돌 제1차 P-CBO 기초자산명세

단위:억원, %

NO.	업체명	종액	금액
1	대한해운	A-	194
2	크라운제과	BBB+	194
3	스콧정보통신	BB+ 이하	5
4	대봉아크로텍	BB+ 이하	29
5	케이엘에스	BB+ 이하	29
6	태경전기산업	BB+ 이하	5
7	대창에이치알에스지	BB+ 이하	49
8	대주중공업	BB+ 이하	58
9	호창건설	BB+ 이하	5
10	씨싸이트	BB+ 이하	29
11	부국이엔지	BB+ 이하	5
12	아이언에이지	BB+ 이하	5
13	코모스	BB+ 이하	49
14	제이씨엔지니어링	BB+ 이하	5
15	수경테크	BB+ 이하	5
16	모나미	BB+ 이하	96
17	유성티엔에스	BB+ 이하	48
18	경인	BB+ 이하	19
19	아진스크린	BB+ 이하	10
20	대륙테크놀러지	BB+ 이하	19
21	성일토탈프린팅	BB+ 이하	19
22	리스피엔씨	BB+ 이하	29
23	에스앤비	BB+ 이하	29
24	지에이엠	BB+ 이하	10
25	엘드건설	BB+ 이하	29
26	티지에스파이프	BB+ 이하	19
27	오킨스전자	BB+ 이하	29
28	미라콤아이앤씨	BB+ 이하	19
29	대륙금속	BB+ 이하	29
30	코아스틸	BB+ 이하	39
31	슈가버블	BB+ 이하	29
32	에스와이패널	BB+ 이하	19
33	명진선박	BB+ 이하	29
34	영화금속	BB+ 이하	29
35	제주팩	BB+ 이하	5

36	디에이치폴리	BB+ 이하	5
37	에이치앤지	BB+ 이하	10
38	세호	BB+ 이하	10
39	바이텍정보통신	BB+ 이하	10
40	영공	BB+ 이하	10
41	토암콘크리트	BB+ 이하	5
42	이티에이치	BB+ 이하	19
43	현중건설	BB+ 이하	10
44	대림전선	BB+ 이하	19
45	이강물산	BB+ 이하	10
46	유진정밀	BB+ 이하	19
47	신기방적	BB+ 이하	10
48	에스티에스반도체	BB+ 이하	97
49	와이지-원	BB+ 이하	97
50	비케이엘씨디	BB+ 이하	48
51	성우하이텍	BB+ 이하	97
52	능원금속공업	BB+ 이하	48
53	씨유산업개발	BB+ 이하	49
54	웅진종합특수강	BB+ 이하	49
55	두울상사	BB+ 이하	49
56	소망화장품	BB+ 이하	49
57	세신전자	BB+ 이하	97
58	한신공영	BB+ 이하	194
59	HS바이오팜	BB+ 이하	29
60	아비스타	BB+ 이하	68
61	신성통상	BB+ 이하	96
	계		2,419.75

주) P-CBO 발행시점의 신용등급임

신보희망디딤돌 제2차 P-CBO 기초자산명세

단위:억원

NO.	업체명	신용등급	금액
1	계룡건설산업	A-	97
2	삼한까무	BBB-	97
3	서진산업	BBB-	146
4	대경건설	BB+ 이하	13
5	미리넷	BB+ 이하	23
6	세하	BB+ 이하	54
7	이토건설	BB+ 이하	13
8	대호산업	BB+ 이하	6
9	신일산업	BB+ 이하	26
10	예당엔터테인먼트	BB+ 이하	14
11	대한방직	BB+ 이하	96
12	신성통상	BB+ 이하	96
13	성우하이텍	BB+ 이하	146
14	에스티에스반도체통신	BB+ 이하	97
15	와이지-원	BB+ 이하	97
16	유성티엔에스	BB+ 이하	48
17	화인텍	BB+ 이하	96
18	김스클럽마트	BB+ 이하	96
19	보르네오가구	BB+ 이하	68
20	디에스제강	BB+ 이하	15
21	삼미식품	BB+ 이하	29
22	세미텍	BB+ 이하	49
23	인스프리트	BB+ 이하	19
24	코미코	BB+ 이하	19
25	휴먼텍코리아	BB+ 이하	97
26	건아엔터프라이즈	BB+ 이하	5
27	경동건설	BB+ 이하	49
28	광신엔터프라이즈	BB+ 이하	29
29	글로벌엠에프지	BB+ 이하	19
30	금강기건	BB+ 이하	19
31	대신철강	BB+ 이하	49
32	대창양회	BB+ 이하	10
33	대흥철강	BB+ 이하	10
34	덕광중공업	BB+ 이하	10
35	동아산업	BB+ 이하	29
36	동양메닉스	BB+ 이하	19
37	동양키친나라	BB+ 이하	5
38	동영산업	BB+ 이하	19
39	동영플러스	BB+ 이하	19
40	동인기연	BB+ 이하	19
41	동철	BB+ 이하	19
42	디엔씨엔지니어링	BB+ 이하	10
43	디자인플랜트	BB+ 이하	10

44	디케이산업	BB+ 이하	10
45	력키알텍	BB+ 이하	10
46	리트코	BB+ 이하	49
47	만성스텐	BB+ 이하	29
48	메이저텍	BB+ 이하	10
49	범양이엔씨	BB+ 이하	39
50	보아스건설	BB+ 이하	19
51	부일로지스	BB+ 이하	10
52	비에스테크	BB+ 이하	10
53	삼부선재	BB+ 이하	10
54	삼신금속	BB+ 이하	10
55	삼신이노텍	BB+ 이하	24
56	삼정산업	BB+ 이하	10
57	상원산업개발	BB+ 이하	19
58	상진미크론	BB+ 이하	49
59	서웅약품	BB+ 이하	10
60	성신중공업	BB+ 이하	5
61	성호건설	BB+ 이하	29
62	세신버팔로	BB+ 이하	29
63	세양정공	BB+ 이하	19
64	소이	BB+ 이하	5
65	솔버스	BB+ 이하	19
66	송강산업	BB+ 이하	78
67	시스온칩	BB+ 이하	10
68	신한제강	BB+ 이하	10
69	실로정보시스템	BB+ 이하	5
70	썬크	BB+ 이하	10
71	써티에스	BB+ 이하	5
72	아봉금속공업	BB+ 이하	10
73	아산	BB+ 이하	49
74	아이지스	BB+ 이하	10
75	에스엔에스인더스트리	BB+ 이하	10
76	에스엔지	BB+ 이하	19
77	에스제이테크	BB+ 이하	29
78	엔피텍	BB+ 이하	15
79	엠포엠	BB+ 이하	10
80	여원미디어한국가드나	BB+ 이하	10
81	우진알파	BB+ 이하	49
82	우창공업	BB+ 이하	39
83	원일	BB+ 이하	29
84	원스틸	BB+ 이하	39
85	원텍이엔지	BB+ 이하	10
86	유니메탈	BB+ 이하	10
87	유엘피	BB+ 이하	19
88	유토파인	BB+ 이하	10
89	재호물산	BB+ 이하	10

90	전단	BB+ 이하	10
91	정원엔지니어링	BB+ 이하	5
92	제이알피	BB+ 이하	10
93	제이엠피솔루텍	BB+ 이하	5
94	주성폴리머	BB+ 이하	5
95	중일인터내셔널	BB+ 이하	29
96	지앤오코퍼레이션	BB+ 이하	19
97	지에이엠	BB+ 이하	5
98	지와이인텍	BB+ 이하	10
99	지학사	BB+ 이하	29
100	진서	BB+ 이하	10
101	진호	BB+ 이하	5
102	체스투어즈	BB+ 이하	29
103	케이엠티	BB+ 이하	5
104	코스텍크	BB+ 이하	10
105	코에버어패럴	BB+ 이하	19
106	크리스패션	BB+ 이하	39
107	태성코우전자	BB+ 이하	15
108	트라이튼테크	BB+ 이하	10
109	티지유통	BB+ 이하	10
110	풍미사	BB+ 이하	10
111	프라임팜	BB+ 이하	5
112	프로브	BB+ 이하	5
113	한겨레철강	BB+ 이하	10
114	한국엔지니어링	BB+ 이하	10
115	한국인스팜	BB+ 이하	5
116	한국특장기술	BB+ 이하	10
117	한라산업개발	BB+ 이하	97
118	한림	BB+ 이하	10
119	한미상재	BB+ 이하	10
120	한미시스템	BB+ 이하	10
121	한백전자	BB+ 이하	10
122	한본	BB+ 이하	5
123	한창하이메탈	BB+ 이하	10
124	호전실업	BB+ 이하	49
125	화인	BB+ 이하	10
126	환웅정공	BB+ 이하	29
127	희림철강	BB+ 이하	49
128	휴브글로벌	BB+ 이하	10
	계		3,440.5

주) P-CBO 발행시점의 신용등급임

신보희망디딤돌 제3차 P-CBO 기초자산명세

단위:억원

NO.	업체명	신용등급	금액
1	가나레포츠	BB+ 이하	10
2	강릉건설	BB+ 이하	10
3	강원엘피씨	BB+ 이하	19
4	골든듀	BB+ 이하	15
5	광우정보통신	BB+ 이하	10
6	구보인터내셔널	BB+ 이하	10
7	그리마건설	BB+ 이하	49
8	극동철강	BB+ 이하	10
9	금아플로우	BB+ 이하	10
10	기웅스텐레스	BB+ 이하	5
11	꿈그린	BB+ 이하	5
12	나진스틸	BB+ 이하	15
13	남명	BB+ 이하	15
14	남양산업	BB+ 이하	5
15	남영건설	BB+ 이하	29
16	내일엔지니어링	BB+ 이하	5
17	대건씨엠에스	BB+ 이하	10
18	대구농산	BB+ 이하	10
19	대덕에프알디	BB+ 이하	10
20	대동신관	BB+ 이하	15
21	대부인더스	BB+ 이하	10
22	대영유비텍	BB+ 이하	5
23	대청공영	BB+ 이하	10
24	대청산업개발	BB+ 이하	19
25	더부자원	BB+ 이하	10
26	덕천판지	BB+ 이하	10
27	데이썬	BB+ 이하	10
28	데코탑	BB+ 이하	5
29	도시인더스트리	BB+ 이하	5
30	동성정공	BB+ 이하	10
31	동우씨엠	BB+ 이하	5
32	동원테크	BB+ 이하	29
33	두성산업	BB+ 이하	29
34	룩현산업개발	BB+ 이하	5
35	리프론	BB+ 이하	10
36	만성스텐	BB+ 이하	24
37	말문이터지는영어	BB+ 이하	19
38	명민시스템	BB+ 이하	5
39	몬티스타텔레콤	BB+ 이하	29
40	미도컴퍼니	BB+ 이하	10
41	반석중공업	BB+ 이하	10
42	백산철강	BB+ 이하	19
43	백조썬크	BB+ 이하	5

44	보미종합건설	BB+ 이하	58
45	브리지해운항공	BB+ 이하	5
46	비에스지파트너스	BB+ 이하	15
47	비투케이	BB+ 이하	5
48	삼양개발	BB+ 이하	5
49	세원공업	BB+ 이하	10
50	삼흥사	BB+ 이하	49
51	삼화주철공업	BB+ 이하	19
52	상일식품	BB+ 이하	10
53	석영엔터프라이즈	BB+ 이하	10
54	선진통운	BB+ 이하	29
55	섬진이에스티	BB+ 이하	5
56	성안염직	BB+ 이하	10
57	성형정밀	BB+ 이하	5
58	세명테크	BB+ 이하	10
59	세민수산	BB+ 이하	5
60	세원전자	BB+ 이하	49
61	세화정밀	BB+ 이하	5
62	승림특수금속	BB+ 이하	5
63	신영금속	BB+ 이하	10
64	신일건구	BB+ 이하	10
65	썬리취	BB+ 이하	10
66	씨티지아이앤씨	BB+ 이하	10
67	아성	BB+ 이하	5
68	아성산업개발	BB+ 이하	10
69	아세아유니온	BB+ 이하	10
70	아스픽	BB+ 이하	10
71	아이더블유아이	BB+ 이하	10
72	아이렉스인터내셔널	BB+ 이하	5
73	아이서브	BB+ 이하	5
74	아이에스피	BB+ 이하	19
75	양일	BB+ 이하	10
76	업카이트	BB+ 이하	10
77	에스아이디	BB+ 이하	10
78	에스케이이엠	BB+ 이하	10
79	에이치.케이.씨	BB+ 이하	19
80	에이치엠금속	BB+ 이하	10
81	에이치케이	BB+ 이하	5
82	엠지	BB+ 이하	10
83	영림목재	BB+ 이하	19
84	영우디지털	BB+ 이하	19
85	영전케이블	BB+ 이하	10
86	영진랜드	BB+ 이하	5
87	오토엠아이티	BB+ 이하	5
88	우성안전	BB+ 이하	5
89	운양건설	BB+ 이하	29

90	원방주철	BB+ 이하	10
91	웰스틸	BB+ 이하	19
92	유겐트	BB+ 이하	10
93	유니트월	BB+ 이하	19
94	유성하이테크	BB+ 이하	5
95	유양산전	BB+ 이하	5
96	윤성테크	BB+ 이하	5
97	이니텍기계	BB+ 이하	10
98	이폴리머	BB+ 이하	24
99	이피에스솔루션	BB+ 이하	5
100	인텔철강	BB+ 이하	10
101	일신	BB+ 이하	10
102	전한슬라이드	BB+ 이하	5
103	정명	BB+ 이하	10
104	제신약품	BB+ 이하	10
105	제이에스지	BB+ 이하	5
106	제일건설	BB+ 이하	49
107	제일트림스	BB+ 이하	15
108	제주팩	BB+ 이하	5
109	중앙산업	BB+ 이하	5
110	지산화학	BB+ 이하	10
111	진미식품	BB+ 이하	29
112	진보자원개발	BB+ 이하	19
113	진산스틸	BB+ 이하	5
114	진원산업	BB+ 이하	10
115	청아띠농업회사법인	BB+ 이하	10
116	코리아더커드	BB+ 이하	29
117	큐앤솔브	BB+ 이하	5
118	태백금속	BB+ 이하	10
119	태백주철	BB+ 이하	5
120	태서리사이클링	BB+ 이하	10
121	티아이엠	BB+ 이하	5
122	파워팩스	BB+ 이하	5
123	풍한금속공업	BB+ 이하	29
124	한국네트인	BB+ 이하	19
125	한미오앤에프	BB+ 이하	5
126	한백뉴로텍	BB+ 이하	10
127	한울종합건설	BB+ 이하	49
128	한중제약	BB+ 이하	5
129	현대철강	BB+ 이하	10
130	현대티엠알	BB+ 이하	5
131	호상사	BB+ 이하	5
132	호전실업	BB+ 이하	49
133	화성금속	BB+ 이하	5
134	화성철강	BB+ 이하	10
135	화인케미칼	BB+ 이하	5

136	효림산업	BB+ 이하	29
137	웨스트시스템	BB+ 이하	5
138	히가리이노비전	BB+ 이하	10
139	신성에프에이	BB+ 이하	97
140	산우	BB+ 이하	39
141	케이디씨정보통신	BB+ 이하	29
142	신성이엔지	BB+ 이하	97
	계		2,037

주) P-CBO 발행시점의 신용등급임

10. 작년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금융위·금감원·
소속기관 지원 현황

- 시기별, 기관별, 사업별, 총공급규모, 시기별 (설정)
규모, 회수액, 잔액, 주요내용, 기대효과

11. 위 10번과 관련하여 사업 시행 후 점검 결과

- 점검 시기별, 계획 대비 실적, 실적 평가, 향후 계획

□ 기관별 대책 및 집행 실적

구 분	연 월	대 책	총규모	예 산	집행실적 및 효과
산업 은행	'08.1~12	자금공급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	공급규모 : 28조원 (중소기업 : 8조원)	정부출자 5,000억원	총공급액 : 30.1조원 (중소기업 : 10.0조원)
	'09.1~12	자금공급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	공급규모 : 32조원 (중소기업 : 12조원)	정부출자 9,000억원	1.1~8.31 : 24.4조원 (중소기업 : 9.1조원)
기업 은행	'08.1~12	자금공급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	공급규모 : 27조원 (중소기업 : 24조원)	정부출자 5,000억원	총공급액 : 36.9조원 (중소기업 : 29.3조원)
	'09.1~12	자금공급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	공급규모 : 36조원 (중소기업 : 32조원)	정부출자 8,000억원	1.1~8.31: 32.4조원 (중소기업: 24.1조원)
신용 보증 기금	'08.1~12	자금공급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	공급규모 : 26.5조원 (일반보증 기준)	정부출연 925억원	총공급액 : 29조원 (중소기업 : 29조원)
	'09.1~12	자금공급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	공급규모 : 36.3조원 (일반보증 기준)	정부출연 19,800억원	1.1~8.31 : 26.4조원 (중소기업 : 26.4조원)
기술 신용 보증 기금	'08.1~12	자금공급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	공급규모 : 11.5조원 (일반보증 기준)	정부출연 1,575억원	총공급액 : 12.6조원 (중소기업 : 12.6조원)
	'09.1~12	자금공급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	공급규모 : 17.1조원 (일반보증 기준)	정부출연 7,200억원	1.1~8.31: 12.4조원 (중소기업 : 12.4조원)

12. 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 외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기구, 가칭 ‘금융소비자 보호위원회’ 설치에 대한 금융위의 의견

- ☐ 금융소비자 보호강화라는 정책 방향에는 적극 동의하며 앞으로 이 부분에 보다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필요
- ☐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강화는 체제·기구 뿐만 아니라 제도 및 인식·관행 등 다양한 문제가 얹혀 있는 사안인 만큼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

13.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를 갖추고 있는 외국 사례(캐나다 사례 포함)

□ 영·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의 금융감독기구는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며,

* 영국 FSA, 미국 FRB·OCC·SEC, 일본 금융청, 독일 BaFin 등

○ 금융감독기구를 건전성 감독기구와 소비자 보호기구로 분리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음

※ 별첨 캐나다 금융소비자보호청 참고

□ 최근 미국 재무부는 소비자금융보호청을 신설하여, 건전성 감독기구와는 별도로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치·운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 현재 의회에서 입법절차가 진행중인 점을 감안할 때 신설 기관이 어떤 기능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됨

1. 설립 목적

☐ 소비자 보호 및 금융서비스 계몽·홍보를 위해 2001년 공포된 「Financial Consumer Agency of Canada Act」에 의해 설립

- (소비자 보호)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기관*들의 소비자 보호법 준수여부 및 금융기관의 내부적인 사회책임강령, 공식 발언 등의 준수여부 감시

* 은행, 보험사, 신탁회사, 금융회사, 공동으로 운영되는 소매업협회 등

- (소비자 교육) 소비자들에게 금융지식과 소비자의 권리를 계몽·홍보

2. 주요 역할

- 금융기관들의 소비자보호법 등 준수 여부 감시
- 소비자보호조항을 금융기관의 정책과 계획에 포함시키도록 유도
- 금융기관들의 자발적 사회책임강령 및 공개발언 준수여부 감시
- 금융기관들의 의무를 인식시켜 줌
- 금융서비스에 대한 이해도 증진
- 법규 위반에 대한 징계 결정

3. 인력 및 자원

☐ (인력) 청장·부청장 외 직원 47명

☐ (재원) 분담금, 과태료 및 정부출연금

14. 미국 오바마 정부가 CFPA 신설과 관련하여 의회에 제출한 법안의 번역본

- 지난 6.17일 美재무부는 「금융규제개혁(안)」을 발표하였으며,
동 보고서에서 단일 연방기구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CFPA)
신설을 제안하였으며,
- 6.30일 美재무부는 「소비자금융보호청(CFPA ;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Agency) 설치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음
- 美의회에 제출된 법안은 현재 번역본을 마련하고 있는 중
인바, 이를 대신하여 「금융규제개혁(안)」 중 CFPA 설치 관련
부분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함

※ 별첨 : 「금융규제개혁(안)」 중 CFPA 관련 부분 번역본

A. 소비자금융보호기구(CFPA) 신설

① 신용, 저축, 결제 및 기타 소비자 금융상품 및 서비스 관련된 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제를 위한 연방차원의 소비자금융보호기구(CFPA) 신설

○ 이미 SEC 또는 CFTC에 의해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 투자상품 및 서비스는 CFPA의 보호대상에서 제외

② CFPA는 신용, 저축 및 지급 등 소비자금융상품 및 서비스 관련 시장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보유

○ CFPA의 목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실히 하는 것임

- 소비자들은 책임있는 금융 관련 의사결정시 필요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함
- 소비자들은 시장교란, 불공정, 사기, 또는 차별 등에서 보호를 받아야 함
- 소비자금융 서비스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의 여지를 갖고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 전통적으로 소외되었던 소비자들과 커뮤니티도 대출, 투자 및 금융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함

③ CFPA는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원을 보유한 독립적인 기구

○ CFPA의 의사결정구조는 의장 및 이사회로 구성

- 이사회는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가진 집단이어야 하고 최소한 한 명의 이사는 주요 연방감독기구의 대표가 임명되어야 함

○ CFPA 재원은 부분적으로 은행, 비은행 금융회사, 기타 보호대상 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들을 포함한 금융부문의 기업 및 거래에 부과되는 수수료로 충당

④ CFPA는 소비자금융 보호를 위한 규제 제정권한 보유

○ CFPA는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에 따라 공지 및 의견수렴(notice and comment) 절차를 거쳐 불공정, 시장교란, 또는 사기행위 등에 대응해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규제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함

○ CFPA는 규제제정시 규제의 혜택과 동시에 금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 감소 등을 포함하여 소비자비용도 감안해야 함

⑤ CFPA는 부보예금수취기관 및 지금까지 연방감독기구의 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금융회사를 포함하여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모든 당사자들에 대한 감독권한을 보유하고, 법집행을 위해서 연방법원에서 법무부와 공조

○ CFPA는 연방인가 또는 州인가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은행의 금융소비자 관련 규제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책임을 다른 감독기구들로부터 인수(州감독기구도 해당)

- ⑥ CFPA는 정기적인 규제 분석, 외부자문위원회 운영, 금융감독위원회(FSOC)와의 공조 등 규제의 효율성 제고 방안 강구
- ⑦ CFPA의 규제는 최소한의 기준으로서의 역할
 - 州정부는 인·허가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형태의 금융회사에 대해 CFPA보다 엄격한 법규를 제정 및 실행하고 연방법을 동시에 적용
- ⑧ CFPA는 규제실행을 위해 州정부와 협력
- ⑨ CFPA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광범위한 활동 전개
 - 데이터 수집 및 연구, 소비자 등의 불만 접수, 금융교육, 지역 사회 활동 등

B. 소비자보호 개선 (Reform Consumer Protection)

- ① 투명성(Transparency)
 - CFPA는 금융상품제공자에 대한 정보공개 및 소비자와의 대화가 합리적이어야 하고, 금융상품 혜택을 제시함에 있어 소비자가 비용, 벌칙 및 리스크를 명확히 인식해야 함을 요구
- ② 간편성(Simplicity)
 - CFPA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 및 중개인에 대해 소비자에게 더욱 단순한 상품, 그리고 직관적인 가격체계를 갖춘 상품을 충분하게 제공할 것을 요구

③ 형평성(Fairness)

- CFPA는 소비자에 대한 규제 비용보다 혜택이 더 많을 경우 상품의 조건 및 제공자의 관행에 대해 규제하고, 더 나아가서 금융자산에 대해 적절한 주의 의무(duties of care) 부과

④ 접근성(Access)

- CFPA는 금융회사가 공정한 대출에 대한 법률과 지역재투자법 (Community Reinvestment Act)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소외되었던 소비자 및 지역사회가 금융서비스, 대출 및 투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C. 투자자 보호 강화(Strengthen Investor Protection)

① SEC에게 투자정보 공개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확대된 권한 부여

② SEC에게 투자자를 위한 공정성 제고 수단 부여

- 투자자들에게 증권 관련 상담을 제공하는 브로커-딜러에게 등록된 투자상담사와 같은 수탁자의 의무를 부과
- 투자상담사와 브로커-딜러에 대한 규제 차이를 해소

③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은 고객 및 투자자들에게 신뢰 제공

-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확대, 규제 실행을 위한 제재수단 확대, 임직원 보수에 대한 (구속력 없는) 주주 투표권 요구 등

④ 금융감독위원회(FSOC)의 주도로 연방 및 州단위의 소비자보호 기구들이 참여하는 금융소비자협력위원회(Financial Consumer Coordinating Council) 신설

- 州검찰총장 및 소비자보호기구들이 주요 이슈 또는 규제 차이에 대해 위원회에 제안하도록 함
- 위원회는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입법 및 규제 개선안을 반년 주기로 의회에 보고
- 위원회는 광범위한 금융상품들 간의 규제 차이 인식, 정보 공유 및 해결책 모색을 위해 관련된 연구활동을 지원하거나 소비자 테스트에 참여

⑤ 직장 차원 및 개인적인 차원의 퇴직계획을 강화하고 적절한 저축을 권장함으로써 미국인의 퇴직생활 안전성 제고

15. 저축은행업계에서 요구하는 ‘저축은행의 비과세 예금 허용’ 요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의견

- ☐ 비과세 예금의 경우 서민들의 저축 장려를 통한 재산증식을 지원하기 위한 혜택으로 그 목적 달성이 전제될 경우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 다만, 최근 저축은행 예수금의 대부분이 5천만원 이하의 정기예금으로 서민들의 저축 수단이기 보다는 고액자산 보유자들의 고금리 저축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음
- ☐ 따라서, 금융회사에 대한 비과세예금 혜택을 모든 금융회사에 일률적으로 허용하기 보다는 예금재원이 서민금융지원으로 이어지는 여부 등에 따라 차별하여 허용할 필요

16.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추진한 정책 및 향후 계획

- 정부는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영업구역확대, 업무범위 확대 등을 통해 수익성을 제고하여 서민금융공급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 또한, 저축은행들의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평가 기능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한 표준 신용평가시스템 공급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음
- 한편, 저축은행들이 신인도를 제고하여 양질의 저비용 차금 조달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고,
 - 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포함한 저축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08.12.29)한 바 있음
- 향후 금융위는 기 추진중인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저축은행들이 서민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17. 저축은행이 ‘채무자 회생 지원을 위해 채무재조정을 실시하는 경우’ 채무감면액에 대한 세제혜택여부

- ☐ 정부는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촉법 등에 따라 내국법인이 채권단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 약정을 체결하고 채무를 재조정할 경우,
 - 채권 금융기관(저축은행 포함)에 대해 면제한 채무에 대한 손금 산입을 매우 제한적·한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 ☐ 다만, 저축은행의 자유험약에 의한 채권면제의 경우는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

18. 저축은행의 영업구역내 의무대출비율을 규정한 이유 및 저축은행업계의 제도 폐지요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의견

- 영업구역내 의무대출비율 규제는 지역서민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공급 확대를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 당초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 출범한 저축은행의 설립목적 등을 감안할 경우 유지가 필요함
- 한편, 동 규제를 폐지하는 경우
 - 대부분의 저축은행들이 수도권지역에서의 영업만 치중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결과 경쟁심화 등에 따른 동반부실화가 우려되고,
 - 영업구역별로 차등화되어 있는 최저 자본금 규제 등 저축은행법의 전반적인 개정이 불가피하고 이 경우 적은 자본으로 은행과 같은 업무를 영위하는 역차별 발생도 우려됨

**19. 저축은행의 서민대출 취급실적을 감독당국의 경영
실태 평가시 반영하는 문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의견**

- ☐ 저축은행의 서민대출 취급실적을 경영실태 평가시 비계량 항목에 포함하는 것은 가능
- ☐ 다만, 저축은행의 경우 전체차주 중 저신용등급(7~10등급) 차주의 비중이 78.4%(대출액 비중 61.6%) 수준에 이르고 있어,
 - 서민대출 취급실적을 경영실태평가의 항목으로 포함시키더라도 실익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봄

20. 외감 대상 대부업체에 대해 은행연합회 등에 신용 정보를 집중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에 대한 금융 위원회의 입장

- ☐ 현재 대부업체 이용자의 신용정보는 신용정보회사(한신정·한신평정)를 통해 대부업체간 자율적으로 공유되고 있음
 - * CB사간 정보는 서로 공유되지 않음
- ☐ 외감대상 대부업체 신용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집중하도록 의무화하는 경우
 - ① 대부업 이용자의 신용정보를 제도권 금융기관이 공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부업 이용자에 대한 업권간 경쟁이 유발되어
 - 대부업체 이자율 인하, 서비스 제고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 ② 금융회사가 대부업체를 이용한 다중채무자에 대한 신용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긍정적 측면이 있음
- ☐ 다만, 대부업 신용정보 공유로 제도권 금융기관의 신용관리가 엄격해져 저신용계층에 대한 신용경색이 오히려 심화될 우려가 상존하는 등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
- ☐ 따라서, 은행연합회에 대부업체의 신용정보 집중을 의무화하는 방안은
 - 우선적으로 CB사간 대부업 정보공유를 통해 대부업 시장의 금리인하 경쟁을 유도하고
 - 대부업 신용정보의 공유가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충분한 분석한 이후 타업권과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

21. 생계형이 아닌 낭비형 금융채무불이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 현재 개인워크아웃 등 민간 자율로 실시하는 신용회복프로그램은 신청자들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하여 지원대상 및 조건을 엄격히 적용
 -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기본적으로 연체이자는 감면하되, 원금은 감면없이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자 본인의 상환노력을 중시
 - 채무조정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연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전 5개월간 채무증가액이 총채무액의 1/3을 넘는 경우 신청을 각하

22. '08년 이후 분기별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한 부실채권 규모 및 PF부실채권의 비중

□ 캄코는 '08.1월~'09.8월까지 금융회사로부터 총 57,393억원의 부실채권을 인수하였으며, 이중 PF대출채권은 25,603억원으로 인수 부실채권의 44.6%임

- 캄코 전체(구조조정기금 포함) 인수실적

(단위 : 억원)

연 도	분 기	담보부채권		PF대출채권		합 계		PF대출 채권비중 (A/B)
		채권액	매입액	채권액 (A)	매입액	채권액 (B)	매입액	
2008년	1/4분기	2,281	1,654	-	-	2,281	1,654	-
	2/4분기	2,605	2,080	-	-	2,605	2,080	-
	3/4분기	1,995	1,655	-	-	1,995	1,655	-
	4/4분기	10,594	7,759	5,023	2,638	15,617	10,397	32.2%
	소 계	17,475	13,148	5,023	2,638	22,498	15,786	22.3%
2009년	1/4분기	7,454	5,572	12,416	10,627	19,870	16,199	62.5%
	2/4분기	6,726	4,920	8164	4,622	14,890	9,542	54.8%
	3/4분기	135	99	-	-	135	99	-
	소 계	14,315	10,591	20,580	15,249	34,895	25,840	59.0%
전체합계		31,790	23,739	25,603	17,887	57,393	41,626	44.6%

* 매입대금 사후정산방식(추가이익배당형상품)은 원금채권과 계약체결일 전일까지의 발생이자 합계액을 한도로 매입대금을 산정하므로 발생이자(3,604억원) 포함

○ 공사고유계정은 동 기간에 총 49,229억원의 부실채권을 인수하였으며, 이중 PF대출채권은 17,439억원으로 인수 부실채권의 35.4%임

- 공사고유계정 인수실적

(단위 : 억원)

연 도	분 기	담보부채권		PF대출채권		합 계		PF대출 채권비중 (A/B)
		채권액	매입액	채권액 (A)	매입액	채권액 (B)	매입액	
2008년	1/4분기	2,281	1,654	-	-	2,281	1,654	-
	2/4분기	2,605	2,080	-	-	2,605	2,080	-
	3/4분기	1,995	1,655	-	-	1,995	1,655	-
	4/4분기	10,594	7,759	5,023	2,638	15,617	10,397	32.2%
	소 계	17,475	13,148	5,023	2,638	22,498	15,786	22.3%
2009년	1/4분기	7,454	5,572	12,416	10,627	19,870	16,199	62.5%
	2/4분기	6,726	4,920	-	-	6,726	4,920	-
	3/4분기	135	99	-	-	135	99	-
	소 계	14,315	10,591	12,416	10,627	26,731	21,218	46.4%
전체합계		31,790	23,739	17,439	13,265	49,229	37,004	35.4%

- 구조조정기금('09.5월이후)은 동 기간에 총 8,164억원의 부실채권을 인수하였으며, 모두 PF대출채권으로 인수 부실채권의 100%임

- 구조조정기금 인수실적

(단위 : 억원)

연 도	분 기	담보부채권		PF대출채권		합 계		PF대출 채권비중 (A/B)
		채권액	매입액	채권액 (A)	매입액	채권액 (B)	매입액	
2009년	1/4분기	-	-	-	-	-	-	-
	2/4분기	-	-	8,164	4,622	8,164	4,622	100%
	3/4분기	-	-	-	-	-	-	-
합계				8,164	4,622	8,164	4,622	100%

23. 은행과 저축은행의 PF 대출심사 프로세스 비교

- PF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심사 프로세스는 금융회사별로 고유의 심사 프로세스가 있으며,
 - 특히, 부동산 PF대출의 경우 은행과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PF대출의 종류가 달라 대출심사에 차이점이 있음
-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부동산 PF대출의 경우 브릿지론 형태로 주로 부지매입대금 마련을 위한 대출로 차주인 시행사의 상환능력 보다는 담보로 제공되는 매입 부지의 가치 및 사업승인 가능성 등을 대출심사시 고려하고 있으며,
 - 은행이 취급하는 부동산 PF대출의 경우 부지매입과 사업승인이 완료된 본 PF대출로서 향후 분양가능성 등 사업성 위주로 대출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24. 금융위에서 파악하고 있는 저축은행 PF 대출심사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 계획

- 저축은행의 부동산 PF대출심사가 저축은행별 여신심사 능력 등에 따라 차이가 있고,
- 저축은행들의 PF대출 취급 기간도 짧아 심사노하우 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여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규정에 PF대출 취급규정을 마련·보급(07.7.1)한 바 있음

25. PF 사업성 평가를 위한 공적기관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의견

□ 차주에 대한 신용평가(사업성평가 등)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로
부동산 PF에 대한 사업성평가는 대출을 시행하는 개별 금융회
사 고유의 업무이므로,

○ 평가를 위한 공적기관을 설립할 경우 PF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부실에 대한 법적 책임문제 등으로 추진이 곤란할
것으로 생각함

26-1. 녹색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조성계획 및 운용 계획

- 그동안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09.7.6)을 마련하였음
 - 동 방안에서는 녹색펀드, 녹색장기예금 및 녹색채권 등 녹색금융상품의 활성화를 포함하고 있음
- 녹색펀드의 경우 녹색인증을 받은 기술·프로젝트나 녹색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이 발행한 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로 투자자가 자신의 위험 선호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모 또는 사모형태의 다양한 펀드가 운영될 예정임
- 녹색예금 및 채권의 경우 국민들의 녹색금융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은행 등이 장기예금 또는 채권 발행을 통해 시중 금리보다 낮게 자금을 조달하고 동 자금을 녹색프로젝트 등에 장기 저리로 대출하는 구조임
- 정부는 이러한 녹색금융상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인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임

**26-2. 녹색금융상품이 고수익에 대한 보장이 없고
이자가 시중금리보다 낮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의견**

- 정부가 발표한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09.7.6)은 기본적으로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녹색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금유입 메커니즘을 구축하고자 하였음
 - 따라서 녹색금융상품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조성·운영하는 것으로 녹색금융상품에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음
- 한편, 녹색장기예금 및 녹색채권에 투자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장단기금리차 등을 감안하여 정부가 이자소득 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부여할 예정으로
 -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녹색장기예금 등의 이자가 시중금리보다 낮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음

26-3. 녹색금융상품에 개인 투자자 및 민간자본의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한 금융 위원회의 의견

- 정부는 녹색산업 특성에 맞는 자금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을 마련하였음
 - ① (발전단계별 맞춤형 지원) 산업의 성장단계별·기업규모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자금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채널을 구축
 - ② (재정과 금융의 역할 분담) 시장기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정부 또는 금융공기업의 역할로 보완
 - ③ (자본시장 적극 활용) 특히 장기·위험자본의 조달이 용이하도록 자본시장을 활용한 다양한 금융수단과 체계를 개발
 - ④ (국민의 자발적 참여) 녹색성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자발적 참여에 의한 자금조달방안 강구(녹색예금·채권 등)
- 이와 함께, 자금유입 시스템의 실효성 있는 작동을 위하여 투자대상의 저변확대를 병행함
 - 이를 위해 ① 녹색인증제 도입 ② 『선택과 집중』에 따른 핵심 녹색산업 육성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
- 이러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녹색산업의 경제성 및 성장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해소되어 개인투자자 및 민간자본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27. '08년 이후 대부업정책협의회 회의록

☐ 별도 제출

28. 금융위원회가 파악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소송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향후개선 계획

□ 금년 상반기 중 금융감독원은 전년동기대비 113.9% 증가한 16,148건의 금융분쟁을 처리하였음

- 이중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61건을 상정하여 금융회사와 신청인 간의 입장차를 조정하였고, 1,234건은 소송제기로 인해 조정을 중지하였음

<금융감독원 분쟁처리 실적>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09.6월말
분쟁처리(건) (수용율, %) ¹⁾	17,844 (50.7%)	17,393 (51.5%)	18,395 (48.6%)	16,148 (44.2%)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상정(건) (인용율, %) ²⁾	92 (65.2%)	110 (68.1%)	105 (57.6%)	61 (57.4%)
소송제기로 조정 중지(건) (조정 중지 비율, %) ³⁾	-	1,298 (7.5%)	1,673 (9.0%)	1,234 (7.6%)

주) 1) 수용율(%) = 요청수용 건수 / 총 처리 건수 × 100

2) 인용율(%) = 인용 건수(취하 포함) / 총 부의 건수 × 100

3) 조정중지 비율(%) = 조정중지 건수 / 분쟁처리 건수 × 100

□ 한편,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된 사안을 금융회사가 부당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신청인의 요청에 의해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금융회사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대부분 수용함에 따라 지금까지 실제적인 소송지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06년 조정위 인용결정을 HSBC가 불수락함에 따라 신청인에게 소송 지원을 결정하자 HSBC가 결정금액을 지급(소송지원 중단)

<참고> 금융감독원의 소송지원제도 운영 근거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51조, 제55조)

제51조 (분쟁조정기구) 제38조 각호의 기관과 예금자등 금융수요자 기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관련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5조 (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제5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당해 조정안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금융분쟁조정세칙 제32조의2 제1항

①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피신청인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여 소송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인을 위한 소송지원을 할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조정결정된 사건
2. 위원회에서 조정결정이 있기 전 사건으로서 위원회의 조정선례 또는 법원의 판례 등에 비추어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조정결정될 것이 명백한 사건

□ 금융분쟁조정 업무는 법률상 금융감독원 소관입니다만, 최근 분쟁조정 요청건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융소비자 보호강화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쟁조정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긴밀히 협의할 방침임

○ 특히, 금융회사가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불수락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금감원이 운영하는 「소송지원제도」를 통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외부변호사로만 구성된 소송지원 변호인단에 금융감독경험이 많은 금감원 소속 변호사를 추가하는 한편, 동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음

29. 모기지신용보험(MCI) 연계 주택담보대출의 개요 및 현황

<모기지신용보험(MCI) 연계 주택담보대출>

- ☐ 주택담보대출시의 담보인정비율(LTV)해당액 산정기준은 [(대출
금액 + 선순위채권 + 소액임차보증금)/담보가액]이나
 -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해 모기지신용보험상품(MCI)*에 가입하여
위험이 헤지된 경우에는 소액임차보증금을 대출금에서 제외하여
LTV를 산정하고 있음

* 현재 서울보증보험에서만 취급

<모기지신용보험(MCI) 연계 주택담보대출 현황>

- ☐ 은행의 대출금대비 보험가입 비중을 고려하여 모기지신용보험 연계
주택담보대출을 서울보증보험이 추정한 결과 약 68조원('09년 6월말)인
것으로 파악됨

30. 시중은행들이 모기지신용보험 연계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함에 따라 그 피해가 서민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에 대한 견해

A. 금융정책과

☐ 모기지신용보험 연계 주택담보대출(이하 동 대출)은 차주의 소득 등과 관련없이

- 신규주택구입용 대출 및 기존주택을 담보로한 생활자금 대출 등 다양한 용도의 대출에 이용(서민층만을 주요 대상으로 한 상품은 아님)

☐ 최근 일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동 대출의 취급을 중단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 이들 은행을 제외한 다수의 금융회사들은 해당 대출 상품을 계속해서 취급 중이며

* 모기지신용보험 연계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회사

: 시중은행 8, 지방은행 5, 보험 13, 기타 5

-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일부 은행들의 동 대출 취급 중단에 따른 부작용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 다만 동 대출이 지나치게 위축될 경우 자기자금이 부족한 서민층의 주택구입 애로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 은행 등 금융회사의 동 대출 취급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여 나가도록 하겠음

31. 모기지신용보험(MCI) 연계 주택담보대출 중단에 따라 서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

B. 보험과

- ☐ 현재까지 MCI 연계 대출 취급 중단을 발표한 곳은 신한은행, 농협, 우리은행임
- ☐ 따라서 서민들은 MCI 연계 대출을 중단하지 않은 은행, 보험사 및 신협 등을 통하여 MCI 연계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 한편, MCI 외에도 MI(Mortgage Insurance)* 등을 통하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고, MI 연계 주택담보대출은 거의 중단되지 않은 상황

* MI(Mortgage Insurance) : 금융회사가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MI 가입하는 경우, 적정 LTV(60%)를 초과하여 최대 85%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증보험 상품임

32.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인적구성 계획 및 향후 운영방안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인적구성

- 당연직 위원 : 금융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 민간위원

성명	주요경력	추천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現)	국회 상임위원회
윤용만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現)	국회 상임위원회
임치용	-법무법인태평양 변호사(現)	법원행정처장
서지희	-삼정회계법인 상무이사(現)	공인회계사회장
박경서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現)	전국은행연합회장
민상기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現)	대한상공회의소회장


□ 향후 운영방안

- 공자위는 캠프, 예보가 관리하는 공적자금의 지원·회수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할 예정
- 향후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금융회사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 자산을 인수하는 등 공적자금 지원을 추진하고
-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출자금용회사의 지분을 매각하는 등 공적자금 회수도 적극 추진

33. 민간 배드뱅크 설립에 따른 기대효과 및 문제점

- 은행연합회는 '09.3월부터 외부전문기관, 주요 은행 등으로 구성된 T/F에서 '민간배드뱅크' 설립방안을 마련해 왔으며,
 - 지난 8.20일 민간배드뱅크 참여 6개 은행(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들은 「배드뱅크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음
 - 현재는 은행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민간배드뱅크 설립을 위한 실무 준비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한편 민간 배드뱅크 설립으로 은행권의 자체 부실채권 정리*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 현재 은행권은 매분기 평균 약 3.7조원('08~'09.1/4분기 중 분기 평균) 정도의 부실자산을 상각·매각 등을 통해 자체 정리중
- 일부에서는 외국의 사례 등에 비추어 민간 배드뱅크의 부실채권 고가 매입, 부실채권 일시 보유(Parking) 후 은행에 재매각 등 도덕적 해이의 발생을 우려하고 있으나
 - 현재 은행권은 도덕적 해이 방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동시에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첨부 : 민간배드뱅크 관련 '09.8.20일자 은행연합회 보도자료

 전국은행연합회	報道資料		은행산업을 선도하는 최고의 금융단체
	보도일시	배포시 부터	
작성일	2009년 8월 20일	작성부서	여신제도부
담당자	마상천 부장(3705-5704)	작성자	이인균 부부장(3705-5223)

제 목 : 민간 배드뱅크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 6개 은행은 '09. 8. 20일(목) 『배드뱅크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음

[양해각서 체결 경위]

- 지난 2. 15일 「금융당국 및 주요은행 은행장 합동 워크숍」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국내경기가 크게 둔화됨에 따라 급증하는 은행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민간 배드뱅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
- 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외부전문기관, 주요 은행 및 전국은행연합회 실무전문가들로 구성된 T/F에서 설립방안을 마련
- 7. 30일 금융당국은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민간배드뱅크 설립계획 보고

- 민간 배드뱅크 등 금융회사의 자체 정리 노력 확대

- 최근 자체 부실채권 처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은행 등 6개 은행이 공동으로 총1.5조원을 투자하여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 중(9월 설립 목표)

□ 배드뱅크 설립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투자은행 :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 주요사업 :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인수, 관리 및 처분 업무
- 법적형태 : 상법상 주식회사
- 존속기간 : 5년(2014년까지)
- 총 투자약정액 : 1조 5천억원(Capital Call 방식에 의해 투자)
 - 출자금 1조원, 대출금 5천억원
 - 지분을
 - 신한, 하나, 기업, 국민 : 각각 17.5%
 - 농협, 우리 : 각각 15.0%
 - 배드뱅크 설립 후 외부투자자를 적극 유치하여 출자은행 지분의 일부를 양도
- 부실채권매입 예상규모 : 약 5조원
- 지배구조
 - 주주총회(의장 : 전국은행연합회장)
 - 이사회
 - 대표이사(의장), 상근이사 2명, 사외이사 2명
 - 감사(상근)
 - 공정가치심의위원회
 - 구성 : 교수, 회계사,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5인
 - 기능
 - 부실채권평가기관(회계법인 등) 선정 기준 자문
 - 부실채권 매입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부실채권 매입관련 제도 및 실무 개선사항 자문
- 설립예정일 : 본계약 체결, 관계기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9.30 일 설립 목표

□ 기대효과

- 민간 자원에 의한 은행의 부실채권 정리 가능
- 은행의 자산 건전성 제고로 실물경제지원 여력 확충
- 공적자금으로 조성되는 「구조조정기금」과 상호보완기능 수행
- 부실채권시장 활성화

붙임 : 민간 배드뱅크 설립관련 Q&A 1부. 끝.

이 자료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http://www.kfb.or.kr>)의 ‘은행연소식’과 ‘보도자료’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민간 배드뱅크 설립관련 Q&A

1. 배드뱅크에서 처리 가능한 부실채권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 배드뱅크의 부실채권 매입구조와 현 부실채권 시장상황을 감안할 때 배드뱅크가 처리할 수 있는 부실채권 규모는 투자금액(1.5조원)의 3배 이상인 약 5조원 정도로 예상됨
- 배드뱅크 설립 후 1~2년 후부터는 매입한 부실채권의 매각대금으로 재투자(revolving)가 가능하고, 자체 차입 등을 통해 레버리지(leverage)를 높일 경우 추가적인 부실채권 정리도 가능할 전망

2. 배드뱅크는 국제회계기준(IFRS) 상 True Sale이 가능한 구조인가?

- 국제회계기준(IFRS)에 의한 True Sale 여부는 매각자산에 대한 위험과 보상이 매수자에게 이전되는지 여부, 매도 후 매도자가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하는지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됨
- 배드뱅크는 매각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에 관한 권리와 위험 일체를 양수받아 자체 이익을 위해 독립적으로 관리하게 되므로 이러한 기준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음

3. 은행이 배드뱅크를 통해 부실채권을 일시 Parking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 배드뱅크는 부실채권 매각 은행과는 별개의 법적 실체임
- 회계적으로도 부실채권에 대한 법적 권리와 위험 일체가 이전되는 True Sale 방식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므로 부실채권의 Parking 문제는 발생할 수 없음

4. 은행이 부실채권을 고가로 매각할 의도로 배드뱅크를 설립하려는 것은 아닌지?

- 배드뱅크가 부실채권을 고가에 매입할 경우 배드뱅크의 자산가치가 축소되어 그만큼 출자은행의 지분가치가 하락하게 되므로 출자은행의 입장에서 고가로 매각할 유인이 없음
- 배드뱅크는 독립된 상법상 주식회사이고, 출자구조 상 특정 주주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갖지 못하도록 되어있음
- 배드뱅크는 모럴해저드 방지 및 투명경영을 담보하기 위한 지배구조를 갖출 것임
 - 사외이사(2명) 및 상근감사제 채택
 - 부실채권 매입가격의 적정성 검토 등을 위한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정가치심의위원회」 설치·운영
- 아울러, 배드뱅크 설립 후 외부투자자를 적극 유치하여 배드뱅크 경영의 독립성을 제고할 계획임. 끝.

34. 자산70억원 이상 대부업체의 대출금리 및 대출 잔액

- '09.3월 말 기준 자산7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38.9%이며, 담보대출 평균금리는 11.1%임
- '09.3월 말 현재 대형 대부업체의 전체 대출 잔액은
5조 1,576억원이며, 신용대출이 4조 361억원으로 78.3%,
담보대출이 1조 1,215억원으로 21.7%를 차지

35. '07년 이후 금융위원회 및 산하기관들이 수행한 대국민 금융교육 실적현황

※ 산하기관 금융교육실적 개별제출

□ 금융교육추진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실적

- ('07.11.28) 금융교육추진협의회
 - 금융교육 추진협의회 운영방안, 금융교육 강화방안 등
- ('07.12.12) 금융교육추진실무협의회
 - '08년 금융교육 추진계획
- ('08.9.1) 금융교육추진실무협의회
 - 금융교육 추진방향 논의
- ('09.5.6) 금융교육추진실무협의회
 - 기관별 금융교육 추진현황 점검

* 참여기관 : 금융위(舊금감위), 금감원, 청소년금융협의회,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

□ 기관별 금융교육 실적

① 청소년 금융교육 협의회

	교육일시	교육대상(기관)	교육인원	교육내용
'07년	연간507회	초중고일반	79,218	금융경제 출장교육
	연간4회	초등학생	384	금융경제 캠프
	연간11회	초등학생	519	주말금융경제교실
'08년	연간501회	초중고일반	76,197	금융경제 출장교육
	연간5회	초등학생	420	금융경제 캠프
	연간10회	초등학생	450	주말금융경제교실
'09년	연간307회	초중고일반	42,449	금융경제 출장교육
	연간3회	초등학생	250	금융경제 캠프
	연간6회	초등학생	220	주말금융경제교실

② 신용회복위원회

	교육일시	교육대상(기관)	교육인원	교육내용
'07년	연간173회	성남문원중 등 173개 초, 중, 고	71,226	용돈관리, 소비관리, 신용의 개념, 신용관리 등
	연간7회	상명대 등 7개 학교 대학생	728	재무 / 부채 / 신용관리 요령, 신용회복지원제도 등
	연간484회	신당사회복지관 등 484개 기관	23,996	재무 / 부채 / 신용관리 요령, 신용회복지원제도 등
	연간105회	군인(306보충대 등 105개 부대)	136,470	재무 / 부채 / 신용관리 요령, 신용회복지원제도 등
'08년	연간 174회	부천정보산업고 등 174개 초, 중, 고	66,476	용돈관리, 소비관리, 신용의 개념, 신용관리 등
	연간5회	충남대 등 5개 학교 대학생	910	재무 / 부채 / 신용관리 요령, 신용회복지원제도 등
	연간544회	구리고용지원센터 등 544개 기관 일반인	24,220	재무 / 부채 / 신용관리 요령, 신용회복지원제도 등
	연간121회	군인(육군훈련소 등 121개 부대)	177,581	재무 / 부채 / 신용관리 요령, 신용회복지원제도 등

	교육일시	교육대상(기관)	교육인원	교육내용
'09년	연간41회	용인정보산업고 등 41개 초, 중, 고	22,116	용돈관리, 소비관리, 신용의 개념, 신용관리 등
	연간2회	목포대 등 2개 대학 학생	500	재무 / 부채 / 신용관리 요령, 신용회복지원제도 등
	연간465회	대교보호관찰소 등 465개 기관 일반인	27,315	재무 / 부채 / 신용관리 요령, 신용회복지원제도 등
	연간101회	군인(39사단 신교 대 등 101개 부대)	125,313	재무 / 부채 / 신용관리 요령, 신용회복지원제도 등

③금융투자협회(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연도	교육일시	교육대상(기관)	교육인원	교육내용
'07년	연중	일반인	23,676	증권 관련 8개분야 35과목(온라인교육)
			4,128	웰스아카데미(온라인교육)
			2,965	펀드아카데미(온라인교육)
	3-11월	초등학생	1,040	주말 증권교실(총 12회)
	7.21~23	초등학생	192	경제·금융캠프
	3-12월	초등학생	1,522	인천연수도서관 경제교실(총45회)
	4.6	고등학생	250	금융특성화고교 증권·경제교육
	연중	복지시설청소년	400	증권·경제교실(서울200/부산200)
	7.9~10	대학생	360	전국대학생 하계 증권캠프 (65개대학)
	1,7,8월	초/중/고 교사	864	교원직무연수(총23회)
	2~11월	일반인(여성)	700	여성증권아카데미
	3-12월	경찰/군인	3,500	특수직군 교육프로그램
	9-11월	사회복지사	240	전국사회복지사증권·경제교육(3회)
	5-6월	일반인	675	금융상품중심 특설 프로그램
	7.4-5	일반인	135	연령대별/세대별 종합자산관리 강좌
	8.10-18	일반인	480	음악과 함께하는 투자자교육 아카데미
	연중	일반인	11,329	강사파견 현장방문교육(학교, 기업체 등)
	11.25	고등학생	1,699	고교증권경시대회
	10월~1월	대학생	63팀	대학생 증권선물경시대회(45개대학)
	11.2~3	일반인	4,700	투자자교육 엑스포

연도	교육일시	교육대상(기관)	교육인원	교육내용
	연중	청소년	6,170	지역청소년증권·금융 교실
	11.1~21	대학생	1,700	전국 대학생 대상 CEO특강 (7개대학)
	3-9월	대학생	2,240	대학생 증권경제세미나 (7회)
	10-12월	일반인(여성)	400	지역 여성증권 아카데미 (5회)
	10-12월	일반인	2,700	지역 증권이슈 특강 (18회)
	6월,11월	일반인	170	증권경제아카데미(2회)
	연중	일반인	4,205	지역 현장방문교육(61회)
	6.30~7.1	대학생	100	신규강사 양성 프로그램
	8.24-25	관련 전문가	65	투자자교육 워크숍
'08년	연중	일반인 및 청소년	132,000 (연/hr)	증권 관련 8개분야 29과목,아카데미 등 (온라인교육)
	연중	일반인	1,200,000 (연/hr)	증권·금융 관련 방송컨텐츠 20편 방영 (총 300회)
	5.29	서울시교육청	300	교육청 임직원 대상 자산관리 특강
	9-12월	초중고생	1,500	금융교육협력학교(초등7,중등1,고등2)
	7-12월	사회초년생	1,900	실업계고, 직업학교, 특수학교 등 졸업 예정자 대상 자산설계 및 관리
	11.23	고등학생	1,749	고교증권경시대회
	동·하계 방학중	초중고 교사	1,110	교원직무연수일반과정(29회)
			30	교원직무연수심화과정(3회)
	8.11~23	대학생	78	초등학교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4월~11월	초등학생	880	주말 증권교실(11회)
	4월~11월	고등학생 (서울여상)	470	금융특성화고교 증권교실
	4월~12월	저소득층 자녀 복지시설청소년	1,189	소외계층 청소년 저축,신용,소득관리 등 체험식 교육
	8.6-7	초등학생	150	어린이 증권·금융캠프
	6.25, 10.29	사회복지사 (중앙아동자립지 원센터)	240	전국사회복지사 증권·경제교육(2회)
	5월~11월	장애인(한국장애 인고용촉진공단)	900	취업,창업에 따른 자산설계
	4월,10월	노인(서울시	690	노후설계, 금융사기 예방(4회)

연도	교육일시	교육대상(기관)	교육인원	교육내용
		노인복지센터)		
	5월,10월	새터민 (하나원 등)	170	신용관리, 피해예방금융기관 상품 (3회)
	4월~10월	신용불량자(서울 시 자활지원과)	550	금융사기 예방, 저축가계소득과 소비(7회)
	3월~10월	일반인(여성)	380	여성증권 아카데미(4회)
	연중	서울지방경찰청 해병대2사단 행정안전부	2,760	합리적인 경제활동 행복한 재무/인생설계(42회)
	5.21-27	대학생	1,030	전국대학생 대상 CEO 특강 (6회)
	7.16-17	대학생	300	하계 증권캠프
	3월~10월	기업체임직원 (삼성전자, 삼진제약 등)	1,535	종합 자산관리 교육(13개 기업, 총15회)
	연중	청소년 및 일반인	9,860	강사파견 현장방문교육(학교, 기업체 등 125회)
	연중	일반인	2,110	월레이슈 특강
	10월~1월	대학생	69팀	대학생 증권선물 경시대회(40개대학)
	4월~11월	직장인	690	직장인을 위한 주말자산관리 강좌(10회)
'09년	연중	일반인 및 청소년	현재 집계불가	증권 관련 8개분야 29과목,아카데미 등 (온라인교육)
	연중	일반인	현재 집계불가	증권·금융 관련 방송컨텐츠 20편 방영 (총 300회)
	연중	일반인 및 청소년	230,479	투교협 보유 온라인 컨텐츠 탑재 네이버 다음등 누적
	4-6월	초중고생	2,912	금융교육협력학교(초등12,중등1,고등1) (총57회)
	하계 방학중	초중고 교사	580	교원직무연수 일반과정(15회)
			30	교원직무연수 심화과정(3회)
	3월~6월	초등학생	280	주말 증권교실 (7회)
	4.3	고등학생 (서울여상 등)	250	금융특성화고교 증권교실
	3월~8월	소외계층청소년	561	경제·금융, 저축·신용 및 소득관리 등

연도	교육일시	교육대상(기관)	교육인원	교육내용
		(지역아동센터연합회, 서울시아동복지연합회, 셋넷학교)		
	3월-6월	소외계층 (장애인 등)	790	금융사기 예방 등
	6.11	일반인(여성)	90	여성증권 아카데미
	연중	군인/경찰 등	3,440	특수직군 자산설계 및 금융투자교육
	5.8-6.4	대학생	1,150	전국대학생 대상 CEO특강
	7.8-9	대학생	263	대학생 하계 증권캠프
	4월-8월	기업체 임직원 (한진해운 등)	400	기업체 임직원 대상 자산관리 종합교육(총4회)
	3월-7월	일반인	450	월례증권이슈특강
	연중	일반인 및 청소년	2,237	현장방문 교육(총47회)
	3월-6월	직장인	680	주말 자산관리 특강(7회)

④생명보험협회

	교육일시	교육대상(기관)	교육인원	교육내용
'07년	3.30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신규회원	40명	생명보험의 이해
	5.29	"	70명	"
	11.7	"	40명	"
	4.25	서울YWCA 도우미 회원	100명	"
	5.18	서울YWCA 직원	60명	"
	6.20	서울YWCA 도배사 등	60명	"
	6.22	서울YWCA 간병사	60명	"
	9.17	서울YWCA 지역주민,교육생	60명	"
	10.2	서울YWCA 신입회원	150명	"

	교육일시	교육대상(기관)	교육인원	교육내용
	11.13	서울YWCA 일반회원	120명	"
	11.16	서울YWCA 도우미회원	400명	"
	3.27	한국소비자교육원 본부회원	100명	2007년부터 달라지는 생명보험제도
	4.26	한국소비자교육원 지부회원	50명	생명보험의 이해
	6.19	한국소비자교육원 본부회원	100명	"
	10.16	"	100명	"
	12.11	"	100명	"
	3.20	주부교실중앙회 회원 및 일반인	100명	2007 국내외 경제전망 및 경제상식
	4.17	"	100명	글로벌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의 자세
	5.15	"	150명	행복한 미래 설계를 위한 가정 경제
	6.22	"	100명	생명보험에 관한 경제강좌
	7.23	"	150명	21세기 경제의 힘은 '여성'이다
	9.28	"	100명	소비자 경제교육
	10.10	"	100명	신용사회와 소비생활
	11.20	"	120명	재테크를 통한 가정경제의 활성화
	5.17	화성YWCA 일반인	20명	생명보험의 이해
'08년	5.28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본회 신규회원	70명	생명보험의 이해
	6.2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요리지부회원	100명	"
	9.19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소비자학당회원	60명	"
	2.19	서울YWCA 도우미, 신입회원	150명	"
	3.21	서울 YWCA직원	50명	"

	교육일시	교육대상(기관)	교육인원	교육내용
	6.24	서울YWCA 도우미회원	100명	"
	9.23	서울YWCA 요리사, 직원	50명	"
	9.30	서울YWCA 신입도우미	100명	"
	11.18	서울YWCA 회원 및 직원	50명	"
	3.18	한국소비자교육원 본부회원	100명	"
	4.15	한국소비자교육원 지부 주부회원	100명	"
	9.19	한국소비자교육원 지부회원	100명	"
	11.19	한국소비자교육원 본부회원	50명	"
	3.27	주부교실중앙회 회원 및 일반인	130명	생명보험은 무엇인가
	4.17	"	1,200명	세계화시대의 나라경제와 가정경제
	5.30	"	100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성의 역할
	6.20	"	100명	경제이해와 재테크
	7.18	"	100명	자유무역협정의 추진현황과 과제
	7.21	"	100명	행복한 삶을 위한 경제 살리기
	9.17	"	100명	보험을 통한 여성 경제교육
	11.25	"	100명	바로알면 경제가 보인다
'09년	2.27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신규회원	65명	생명보험의 이해
	6.9	"	65명	"
	9.8	"	60명	"
	3.3	서울YWCA 도우미회원	100명	"
	3.11	서울YWCA 소비자모니터요원	50명	"

	교육일시	교육대상(기관)	교육인원	교육내용
	3.19	서울YWCA직원	60명	"
	6.23	서울YWCA도우미	100명	"
	3.10	한국소비자교육원 본부회원	65명	"
	6.30	한국소비자교육원 지부회원	50명	"
	9.4	"	50명	"
	3.27	주부교실중앙회 회원 및 일반인	100명	행복한 부자 만들기
	4.21	"	1,200명	한국경제의 미래와 부자 되는 길
	5.28	"	100명	소비자를 위한 경제
	6.26	"	100명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소비자의 역할
	7.10	"	100명	재테크로 불황을 극복하는 방법

⑤손해보험협회

	교육일시	교육대상(기관)	교육인원	교육내용
'07년	4 03	주부교실(전주)	50여명	손해보험 일반 및 자동차보험 보상사례
	4 10	주부클럽(경주)	30여명	"
	4 17	녹색소비자연대(안산)	40여명	"
	5 08	한국소비자연맹(김해)	80여명	"
	5 08	한국소비자연맹(대전)	700여명	"
	5 09	주부클럽(강릉)	40여명	"
	5 23	한국소비생활연구원(경산)	80여명	"
	5 28	녹색소비자연대(평택)	40여명	"
	5 29	YMCA(시흥)	40여명	"
	6 20	YWCA(동해)	40여명	"
	6 28	소비자시민의모임(태백)	30여명	"
	9 05	YWCA(마산)	40여명	"
	9 19	YWCA(조치원)	40여명	"

	교육일시	교육대상(기관)	교육인원	교육내용
	10. 09	소비자시민모임(원주)	40여명	"
	10. 18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서울)	70여명	"
	11. 13	한국소비자교육원(보령)	50여명	"
'08년	1. 29	녹색소비자연대(고양)	30여명	"
	3. 13	주부클럽(청주)	50여명	"
	3. 19	주부클럽(양산)	70여명	"
	4. 04	소비자시민모임(김포)	30여명	손해보험 일반 및 자동차보험 보상사례
	4. 10	한국소비생활연구원(울산)	80여명	"
	4. 10	한국YMCA전국연맹(대구)	70여명	"
	4. 16	소비자시민모임(광주)	30여명	"
	4. 18	한국소비자교육원(대전)	50여명	"
	4. 23	한국소비생활연구원(함양)	40여명	"
	4. 28	한국YMCA전국연맹(김천)	30여명	"
	5. 06	대한주부클럽연합회(익산)	50여명	"
	5. 13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서울)	120여명	"
	5. 29	녹색소비자연대(부산)	50여명	"
	6. 05	녹색소비자연대(제주)	50여명	"
	6. 11	전국주부교실중앙회(구미)	40여명	"
	6. 17	한국소비자연맹(목포)	40여명	"
	9. 04	한국소비자연맹(의정부)	40여명	"
	10. 02	대한YWCA연합회(안양)	60여명	"
	10. 24	대한YWCA연합회(군산)	40여명	"
	11. 11	전국주부교실중앙회(수원)	50여명	"
	11. 13	소비자시민모임(천안)	30여명	"
'09년	'09. 2. 10	대한YWCA연합회(창원)	50여명	"
	2. 13	한국소비자교육원(하남)	40여명	"
	3. 18	전국주부교실중앙회(이천)	50여명	"

⑥여신금융협회

	교육일시	교육대상(기관)	교육인원	교육내용
'07년	03월 09일	천안녹색소비자연대	40	올바른 신용카드 사용 및 신용관리 방법
	03월 15일	부산거주 새터민	60	
	04월 10일	서울녹색소비자연대	50	
	05월 09일	건양대학교 재학생	440	
	05월 10일	건양대학교 재학생	440	
	06월 04일	평택녹색소비자연대	40	
	06월 12일	인천YWCA 주부회원	30	
	09월 19일	우송대학교 재학생	40	
	10월 09일	한밭대학교 재학생	40	
	10월 29일	의정부YWCA 주부회원	40	
	11월 22일	목포소비자연맹 주부회원	32	
	11월 27일	서울YWCA 주부회원	50	
	05월 3일	전국주부교실 양주지회	94	"
	06월 28일	의정부 성모대학 수강생	70	
'08년	04월 03일	부산소비자연맹 주부회원	80	올바른 신용카드 사용 및 신용관리 방법
	09월 04일	인천소비자연맹 주부회원	130	
	09월 22일	대구소비자연맹 주부회원	56	
	10월 08일	대전소비자연맹 민방위대원	160	
	06월 17일	목동 월촌중학교 3학년	130	합리적 소비와 신용관리
	06월 21일	인천여상 1, 2학년	40	
	07월 03일	포천노인대학	62	올바른 신용 카드 사용 및 금융사기 피해 예방법
	11월 5일	남양주 사능초등학교	76	합리적인 소비생활 및 용돈관리
	11월 10일	남양주 덕소초등학교	33	
'09년	05월 19일	해성국제컨벤션 고등학교	30	합리적인 소비생활 및 용돈관리

36. 최근 5년간, 신용회복위원회에 접수된 소액대출 상담 현황 및 실제 집행 현황

(기준: 2009.8.31)

(단위 : 명, 원)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지원 현황				
일자	방문상담건수	콜백상담건수*	집행건수	집행금액
2006년 계**	1,620		17	53,500,000
2007년 계	12,713		1,168	3,468,900,000
2008년 계	11,638	41,261	4,488	13,750,700,000
2009년 계	10,058	38,379	8,655	26,271,000,000
총 누 계	36,029	79,640	14,328	43,544,100,000

* 2008.2.11 소액금융 콜백상담 개시

** 2006.11.13 소액금융지원 사업 개시

37. 작년 9월 리먼 브러더스 파산 이후 금융위 지원 현황

- 은행자본확충펀드

- 「은행자본확충펀드」는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국내 은행권의 자본여력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의 우려가 점증하는 상황에서
 - 은행의 자본여력을 확충하면서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성·운영
- 은행자산 규모에 따라 「펀드」 참여 14개 은행에 대해 12.3조원 한도(credit line) 배정(3.10일)

그룹 I	그룹 II	그룹 III	그룹 IV
국민(2조원) 우리(2조원) 신한(2조원)	하나(1.5조원) 기업(1.5조원) 농협(1.5조원)	외환(0.5조원)*	수협(0.2조원), 대구(0.3조원), 부산(0.3조원), 경남(0.23조원), 광주(0.17조원), 전북(0.07조원), 제주(0.03조원)

* 최초 배정후 외환은행은 신종자본증권 매입(0.25조원) 자진 철회(3.16일)

** 그룹 I (자산 200조원 이상), 그룹II(200~140), 그룹III(140~50), 그룹IV(50조원 이하)

- 8개 금융기관이 발행한 4조원 상당의 신종자본증권(3.5조원) 및 후순위채권(0.5조원) 매입 완료(3.31일)

(단위 : 억원)

구 분	우리 지주	우리	국민	하나	농협	수협	경남	광주	합계
신종자본증권	-	10,000	10,000	4,000	7,500	1,000	1,160	870	34,530
후순위채권	3,000	-	-	-	-	-	1,160	870	5,030
합 계	3,000	10,000	10,000	4,000	7,500	1,000	2,320	1,740	39,560

- 자본확충펀드 지원과 은행의 자체 자본확충 노력 등으로 BIS비율이 상승하는 등 자본적정성이 개선

<은행별·금융지주회사별 BIS비율 개선 추이(%)>

구 분	우리 지주	우리	국민	하나	농협	수협	경남	광주
'08.9월말	10.50	10.61	9.77	10.66	10.38	11.52	11.26	10.62
'08.12월말	10.90	11.68	13.18	13.51	11.12	11.26	11.78	12.12
'09.3월말	11.66	12.88	13.16	13.56	11.99	12.55	13.05	12.98
'09.6월말	12.06	13.86	13.65	14.21	13.19	13.15	13.58	12.78

- (실물경제 지원) '09.3~6월 중 「펀드」 참여 14개 은행은 중소기업지원 19.1조원, 구조조정지원 4.8조원 등 총 23.9조원을 실물지원에 활용
 - (중기지원) 중기 대출 8.5조원, Fast Track 프로그램 지원 7.5조원, 신·기보 등 보증기관 출연 2.0조원 등
 - (구조조정지원) 구조조정기업 신규자금 지원 4,311억원, 충당금 전입액 1.2조원, 특별상각·매각 3.1조원 등

38. 위 37번과 관련하여 사업시행 후 점검결과
- 점검 시기별, 계획대비 실적, 실적 평가, 향후 계획

☐ '09.3~6월간 은행자본확충펀드 점검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 [붙임] 은행자본확충펀드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붙임]

은행자본확충펀드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2009. 9

은행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

1 자본확충펀드 사용 경과 및 실적점검 방식

1) 지원 경과

□ 자본확충펀드 지원신청 은행에 대하여 제1차 지원한도 12.3조원 배정('09.3.10)

<자본확충펀드 1차 한도배정 현황>

그룹 I	그룹 II	그룹 III	그룹 IV
국민(2조원) 우리(2조원) 신한(2조원)	하나(1.5조원) 기업(1.5조원) 농협(1.5조원)	외환(0.5조원)*	대구(0.3조원), 부산(0.3조원), 광주(0.17조원), 제주(0.03조원), 전북(0.07조원), 경남(0.23조원), 수협(0.2조원)

* 외환은행은 제3차 운영위원회(3.20)에서 배정금액을 0.25조원으로 조정

□ 지원한도 12.3조원 중 8개 기관이 발행한 약 4조원의 신종 자본증권 및 후순위채권 매입('09.3.31)

<펀드지원 대상 금융기관>

(단위 : 억원)

구 분	우리 제주	우리	국민	하나	농협	수협	경남	광주	합계
신종자본증권	-	10,000	10,000	4,000	7,500	1,000	1,160	870	34,530
후순위채권	3,000	-	-	-	-	-	1,160	870	5,030
합 계	3,000	10,000	10,000	4,000	7,500	1,000	2,320	1,740	39,560

2) 실적평가 절차

□ 각 은행은 중소기업 지원, 구조조정 지원, 외화조달 실적 등을 펀드 운영위원회 사무국에 제출

□ 금감원은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펀드 운영위원회에 보고

3) 실적평가 방법

□ 기본 평가방향

- (평가 항목) 중소기업 대출 등 실질적으로 신규 지원이 이루어진 항목*만을 실적으로 인정하여 평가

* 예대상계, 대출만기연장, 외화조달 실적 등 펀드 한도배정에 의한 직접적인 성과로 보기 어려운 항목들은 필요시 비계량평가지표로 활용

- (평가 기준) 한도배정(credit-line)에 대응한 위험가중자산 증가분을 평가함으로써 실질적인 은행의 리스크부담을 고려

□ 세부 평가항목 및 항목별 위험 가중치(펀드지원 MOU상 점검항목)

구분	평가항목	위험 가중치
중소기업 등 지원	중소기업 대출	100%
	중기지원 성격의 대기업 대출	100%
	중소기업 직접투자	150%
	중소기업 투자펀드 출자	150%
	Fast Track 프로그램에 의한 지원	100%
	신기보 등 보증기관에 대한 특별출연	1,250%
	수출금융 지원	100%
	서민금융 지원*	75%
	부실우려 차주 지원**	100%
구조조정 지원	구조조정기업 신규자금 지원	100%
	구조조정 관련 총당금 전입액	1,250%
	부실채권 매각관련 손실 금액	1,250%
	출자전환 및 채무면제금액	150%
	과거 3년 평균 초과 특별상각·매각	1,250%

* 환승론, 저신용자 대상 '희망홀씨' 대출 등

** 프리워크아웃, 자체 신용회복 정책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지원실적 등

2 은행권 지원실적(은행별 제출자료 단순 합계)

□ 위험가중자산에 근거한 은행별 평가에 앞서 은행의 지원 실적의 단순 합계치를 확인하여 전반적인 지원내역을 파악

□ '09.3~6월중 지원실적(단순 합계): 23.9조원

○ '09.3~6월 중 은행권은 중소기업지원 19.1조원, 구조조정 지원 4.8조원 등 총 23.9조원을 지원

- (중기지원) 중기 대출 8.5조원, Fast Track 프로그램 지원 7.5조원, 신·기보 등 보증기관 출연 2.0조원 등

- (구조조정지원) 구조조정기업 신규자금 지원 4,311억원, 충당금 전입액 1.2조원, 특별상각·매각 3.1조원 등

<'09.3~6월중 지원 실적(단순 합계)>

(단위 : 억원)

분류	지원 항목	3월	4월	5월	6월	합계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대출	36,423	24,081	26,576	(1,600)	85,485
	중기지원 성격의 대기업 대출	50	13	389	1,167	1,575
	중소기업 직접투자	10	0	112	250	372
	중소기업투자펀드출자	10	88	26	71	183
	Fast Track 프로그램에 의한 지원	23,364	18,507	14,788	18,211	74,869
	신기보 등 보증기관 특별출연	4,370	6,252	4,269	4,653	19,545
	수출금융 지원*	2,677	707	(5,852)	(4,699)	(659)
	서민금융 지원	512	526	737	1,293	3,059
	부실우려 차주지원	1,804	1,572	1,146	1,558	6,081
	소 계(A)	69,220	51,746	42,192	20,903	190,511
구조조정 지원	구조조정기업 신규자금 지원	1,316	1,393	386	1,215	4,311
	구조조정 관련 충당금 전입액	6,712	1,667	2,128	1,881	12,388
	부실채권 매각 관련 손실 금액	0	0	180	288	468
	출자전환 및 채무면제금액	0	20	0	406	426
	과거 3년 평균 초과 특별상각·매각	9,458	0	2,591	18,506	30,554
	소 계(B)	17,485	3,080	5,285	22,296	48,147
	합 계(A+B)	86,706	54,826	47,477	43,199	238,658

* 수출금융 지원금액은 USD기준 실적에 6월말 기준환율(1284.7₩/\$)을 일괄 적용

3

은행별 평가(위험가중자산 증가액 기준)

[1] 평가지표 : 지원목표 달성을

6월말 기준 지원목표 달성률 = 위험가중자산⁽ⁱ⁾ ÷ (한도배정액 × 10 × 40%)⁽ⁱⁱ⁾

(i) 리스크를 감안한 지원실적 평가를 위해 은행이 제출한 실적으로 「위험가중자산 증가액」 산정

(ii) BIS비율 10% 유지* 가정 하에 위험가중자산은 연말까지 자본확충펀드 투입한도의 10배까지 증가 가능

- 3~6월중 지원실적은 총 기간(3~12월)의 40%에 해당하므로 한도배정액 10배의 40%를 기준으로 목표 달성률을 평가

* 경영실태평가 1등급 기준: BIS비율 10% 이상

[2] 은행별 지원목표 달성률('09.3 ~ 6월)

- ☐ 은행권 전체: 평균 지원목표 달성률은 199.7%
- ☐ 시중은행 : 지원목표 달성률은 평균 207.7%
- ☐ 지방은행 : 지원목표 달성률은 평균 184.2%
- ☐ 특수은행 : 지원목표 달성률은 평균 185.6%

[3] '09.3월말 실제 펀드지원금액 대비 실물지원 실적평가

- ☐ 전체 평균: 평균 지원목표 달성률*은 404.6%

* '09.3월 펀드에서 실제로 지원한 3.7조원(우리금융지주 지원금액 제외)의 10배의 40%를 기준으로 한 목표 달성률

- ☐ 7개 펀드지원 은행 중 경남은행(87.6%)을 제외하고는 목표 비율 100%를 초과

4 향후 계획 및 조치 사항

□ 은행별 지원실적 및 목표 달성률을 지속 점검

- 은행들이 제출한 외화조달 실적 등 기타 항목들은 향후 지원조건 등 결정시 비계량평가지표로 활용

□ 한도배정액 대비 지원실적이 저조한 은행에 대한 조치(금감원)

- 실적미진 은행*에 대해 상반기 실적평가 결과(미진항목 포함)와
실물지원·구조조정 이행 독려 서한 발송

* 대상은행 : (특수) 수협
(지방) 경남

- 아울러, 3분기 실적점검 후 한도 축소조정 등 가능성 사전 예고

[참고1] 지원한도 대비 목표달성율('09.3~6월)

(단위 : 억원, %)

분류	지원금액	위험가중자산 환산금액			지원한도 ×10×40% (B)	목표 달성률 (C=A/B)
		(A)	중소기업	구조조정		
시중은행(5개)	130,266	643,727	296,322	349,397	310,000	207.7
지방은행(6개)	29,527	81,066	32,522	48,548	44,000	184.2
특수은행(3개)	78,866	237,580	87,945	149,638	128,000	185.6
합 계	238,658	962,373	416,789	547,583	482,000	199.7

[참고2] 펀드지원 수혜은행의 지원금 대비 목표달성율('09.3~6월)

(단위 : 억원, %)

분류	지원실적	위험가중자산 환산금액			지원금액 ×10×40% (B)	목표 달성률 (C=A/B)
		(A)	중소 기업	구조 조정		
시중은행(3개)	108,146	502,440	277,063	225,377	96,000	523.4
지방은행(2개)	10,966	24,043	11,706	12,339	16,240	148.0
특수은행(2개)	13,546	65,276	12,953	52,325	34,000	192.0
합 계	132,658	591,759	301,722	290,041	146,240	404.6

김 동 철 의 원

1. 자료요구

- 최근 5년 간 자금세탁혐의 거래보고 접수현황 (월별, 금융기관별)
- '08.12.22 이후 카지노 사업자별 자금세탁혐의 거래보고 접수현황
- 최근 5년간 범집행기관별 자금세탁혐의 거래정보 제공 및 처리현황
- 최근 5년간 범죄수익의 자금세탁관련 사건처리 현황 및 몰수, 추징현황
- 최근 5년간 불법수익의 자금세탁관련 사건처리 현황 및 몰수, 추징현황
- 최근 5년간 범집행기관으로부터의 정보제공 요구현황(기관별)
- FATF가 자금세탁 전제범죄 중 환경범죄의 정의, 구체적 사례, 외국의 입법례

□ 별첨 참조

□ 최근 5년 간 자금세탁혐의 거래보고 접수현황(월별, 금융기관별)

○ 월별 혐의거래보고현황

(단위 : 건)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05	602	370	674	937	941	1,425	1,466	1,551	1,518	1,411	1,210	1,354	13,459
2006	1,945	2,014	1,513	1,553	1,610	1,751	1,813	2,094	2,114	2,180	2,667	2,895	24,149
2007	3,009	3,245	4,378	4,215	4,566	4,033	3,956	4,776	3,945	4,347	6,769	5,235	52,474
2008	6,745	6,780	8,179	7,867	7,020	7,421	8,187	7,553	7,360	8,668	9,352	6,961	92,093
2009	11,164	7,655	8,136	11,221	10,040	12,087	14,297	11,024					85,624

○ 금융기관별 혐의거래보고현황

(단위 : 건)

	은행	증권	보험	기타*	계
2005	12,941	260	51	207	13,459
2006	23,522	199	58	370	24,149
2007	51,330	218	56	870	52,474
2008	89,542	710	90	1,751	92,093
2009.8	81,834	1,403	50	2,337	85,624

* 기타 :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우체국, 카지노

□ '08.12.22 이후 카지노 사업자별 자금세탁 혐의거래 보고 접수현황

- 2009.8월 말 현재 전체 보고의무대상자 17개 카지노 중 2개의 카지노가 11건의 STR을 보고
- STR을 보고한 카지노의 업체명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9조 및 제3조의 취지에 따라 공개가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 【별첨】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9조 및 제3조

□ 최근 5년간 법집행기관별 자금세탁혐의 거래정보
제공 및 처리현황

○ 법집행기관별 혐의거래보고 제공현황

(단위 : 건)

구 분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	선관위	합 계
2005	593	292	313	570	31	0	1,799
2006	534	612	413	657	50	1	2,267
2007	561	607	490	629	44	0	2,331
2008	763	1,354	2,215	884	18	0	5,234
2009.8.	498	1,218	2,237	538	29	0	4,520

○ 법집행기관별 특정금융거래보고 처리현황

- 현재 금융정보분석원은 제공정보의 처리 결과를 누적관리하고 있어, 상기 요구 자료를 금융정보분석원 출범이후의 누계자료로 같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11~2009.8.말 법집행기관별 특정금융거래보고 처리현황>

(단위 : 건)

기관	제공	종결				처리중
		계	조치*	무혐의	내사중지	
검찰청	3,604	2,280	958	1,088	234	1,324
경찰청	4,391	1,069	217	778	74	3,322
국세청	5,913	1,372	1159	213	-	4,541
관세청	3,564	2,356	876	1,480	-	1,208
금융위	199	83	39	44	-	116
선관위	11	11	1	10	-	0
계	17,682	7,171	3,250	3,613	308	10,511

※ 참고로 국세청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 이후에야 비로소 제공받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활용이 가능한 바 타 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처리종결 건수가 많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 최근 5년간 범죄수익의 자금세탁관련 사건처리현황
및 몰수, 추징현황 및 최근 5년간 불법수익의 자금
세탁관련 사건처리현황 및 몰수, 추징현황

- 자금세탁 관련 사건의 처리현황 및 몰수·추징 현황 관련
통계 수집·관리의 주관기관은 대검찰청임
- 따라서 금융정보분석원은 부득이 해당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 최근 5년간 법집행기관으로부터의 정보제공 요구 현황
(기관별)

(단위 : 건)

구 분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	선관위	합 계
2005	6	2	1	1	0	1	11
2006	58	9	3	0	0	7	77
2007	30	24	29	2	0	1	86
2008	144	30	25	3	0	12	214
2009.8.	104	36	16	4	0	1	161

□ FATF가 자금세탁 전제범죄 중 환경범죄의 정의,
구체적 사례, 외국의 입법례

○ 환경범죄의 개념 및 구체적 사례

- FATF 권고사항은 단순히 "environmental crime"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개념정의는 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환경범죄의 개념은 그 용어 자체의 의미와 각국의 입법례상 환경범죄의 범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환경범죄의 구체적 사례

- FATF 권고사항에서 환경범죄의 구체적 사례를 명시하고 있지 않음

※ 【참고】 우리나라의 주요 환경범죄

법 명	조항	내 용	처 벌
대기환경보전법	§55 1호, §10 ①	무허가배출시설설치	7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수질환경보전법	§56 1호, §10 ①	무허가배출시설설치조업	7년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53 3호, §24의2 ①	무허가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 운영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폐기물관리법	§59 1호, §26 ③	무허가폐기물처리업	5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해양오염방지법	§72 4호, §37 ①	무등록방제청소업영위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 외국의 입법례

- 일본의 입법례는 다음과 같음

: 「조직범죄 처벌 및 범죄수익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의 별표 42호에서 환경범죄를 자금 세탁의 전제범죄로 규정

일본 「조직범죄 처벌 및 범죄수익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42.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호(무허가폐기물 처리업자), 제5호(허가조건위반), 제6호(부적격업자에 대한 위탁) 혹은 제8호(폐기물처리시설의 무허가설치) 또는 제26조제5호의 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 중계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와 관련된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특정금융거래정보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 중계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금융정보분석원) ④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건수
2.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수사기관등에 제공한 건수
3.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 정보를 교환한 건수
4.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 업무와 관련된 통계자료

2. 일반 금융회사와 카지노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상 차이점

□ 별첨 참조

<별첨>

☐ 일반 금융회사와 카지노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 비교

	일반 금융회사	카지노 사업자
혐의거래보고 (STR)	·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2천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보고	< 좌 동 >
고액현금거래 보고 (CTR)	· 3천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1거래일 동일명의인 지급· 영수액 각 합산)	· 1건당 2천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고객확인제도 (CDD)	· 계좌개설시 또는 2천만원 (미화 1만불)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시	· 2천만원 (미화 1만불) 이상 일회성 거래시 * 카지노의 경우 계좌개설이 없어 해당 없음

※ 참고

- ① 혐의거래보고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 금융거래와 관련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공중협박(테러)자금조달행위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보고 (특정금융거래보고법 §4)
- ② 고액현금거래보고 (Currency Transaction Report)
: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을 지급·영수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보고 (특정금융거래보고법 §4의2)
- ③ 고객확인제도 (Customer Due Diligence)
: 자금세탁·공중협박(테러)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시 거래당사자의 신원 등을 확인 (특정금융거래보고법 §5의2)

3. 최근 3년간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과 조치현황

□ 붙임 참조



금융정보분석원

수신자 감사원장(산업금융감사국 제3과장)
(경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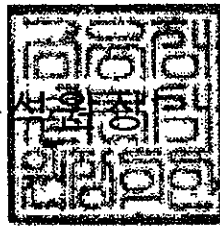
제목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조치 완료 통보

1. 귀 원의 재정금융감사국 제3과-835호(2008.6.11)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귀 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기에 불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불임 : 감사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완료) 1부. 끝.

금융정보분



주무관	전종일	행정사무관	이귀웅	기획행정실 팀장	이영직	기획행정실 실장	김근익
금융정보분석원 04/17							
원장	김영과						
협조자							
시행 기획행정실-425		(2009. 04. 17.)		접수			
우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 http://www.kofiu.go.kr	
전화 02-2156-9417	전송 02-2156-9679		/ jong210@fsc.go.kr		/ 비공개(2)		

감사원 처분요구사항 조치 결과 [완료]

(2009.4.15 현재)

1. 금융정보 분석·제공 업무의 개선

번호	요구 요지	처분	조치결과	진행상황
1-1-①	협 의 거 래 정 보 제 공 확 대	통보	【완료】 ① 법집행기관의 정보제공 요구 활성화 추진 - 기제공건 관련 STR 제공 프로세스 개선 - FIU정보시스템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요구서식을 전산화·규격화하고, 문서교환을 전자화 - 법집행기관협의회 등 계기 법집행기관에게 FIU 정보의 적극적인 활용을 요청 ② 기초분석단계 검증절차 강화 - 양질 정보의 보존처리(미활용) 방지를 위해 2단계 기초분석 체제 도입 (08년 전산개발, 09.1월부터 시행) ③ 위 ①을 우선 추진한 후 미국 FinCEN과 같이 법집행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 - 이를 위한 사전 단계로 연구용역 ¹⁾ (08.7월 발주) 완료	【완료】 ① 법집행기관 정보제공 활성화 완료 - 정보제공 크게 확대 07년 2.3천건 → 08년 5.2천건 ② 정책연구 용역완료, 정보공유는 중장기과제로 검토
주 1) 연구용역 : 「미국 FinCEN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실태 연구」 (08.7월~12월) (연구자 : 아주대학교 이윤제, 이진국 교수)				
1-1-②	자 금 세 탁 방 지 행 위 의 동 향 · 방 지 대 책 에 대 한 조 사 · 연 구 업 무 활 성 화	통보	【완료】 ① 「자금세탁 동향보고서」(반기) 발간 추진(계획) ② 자금세탁 혐의거래 동향분석 (범죄별, 기관별, 지역별, 거래 종류별 혐의거래보고 동향) 작성 → 내부 분석자료 활용 및 금융기관 등 피드백 (08년 전산개발, 09.1월부터 시행)	【완료】 동향보고서 발간 심사분석 우수사례 매월포상

			<p>③ 혐의거래통계 관리강화 : 자금세탁 동향을 관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계 추출 추진</p> <p>④ 심사분석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조사·연구 업무를 활성화 (기 시행)</p>	
1-2-(2)-②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 금융거래원장은 폐기 조치	통보	<p>【완료】</p> <p>① 보고기관의 혐의거래보고시 정상적인 금융거래내역이 포함된 자료의 첨부 금지하는 규정의 신설 추진 (보고 및 감독규정 제6조 개정)</p> <p>※ 보고 및 감독규정 별지서식의 '3개월 이전의 거래내역자료와 혐의거래기간 거래내역자료' 첨부 규정은 기 삭제 조치</p> <p>② STR 서술내용만으로 보고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거나, 기초분석과 상세분석 결과 전제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첨부 금융거래 자료 삭제</p>	<p>【완료】</p> <p>불필요한 자료 삭제 완료 (08.12월)</p>
1-2-(3)-①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입수·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내부통제 방안 마련	통보	<p>【완료】</p> <p>① 신용정보 조회에 대한 사전경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검색시 검색화면에 "경고문구" 자동 제시 - 심사분석자의 분석 모니터에 경고 스티커 부착 <p>② 조회시 조회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조회대상자의 STR과의 관계도 기록하도록 하는 등 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지속 관리체계를 구축</p> <p>③ 내부 보안심의회 정례화(분기별 실시)로 내부통제를 강화</p>	<p>【완료】</p> <p>내부통제 시행중</p> <p>(감사지적을 반영하여 07.12월부터 시행중)</p>

2. 혐의거래 추출·보고 업무의 개선

번호	요구 요지	처분	조치결과	진행상황
2-1-①	은행의 혐의거래추출 조건 및 대상 합리화 등 전산시스템 개선	통보	【완료】 ① 혐의거래추출 조건·기준을 합리화 - 혐의거래 추출조건 정비, 제외 고객 등록, 고객의 자금세탁 위험도에 따른 차등 적용 등 ② 은행 전체와 고객단위 혐의거래 추출을 명시	【완료】 지침시달 완료('08.8.11)
2-1-②	거액 현금거래 기록·관리, 혐의거래보고 제외 사유 등 관리방안 마련	통보	【완료】 ① 거액 현금거래자 관리방안 마련 - 출처, 용도등의 기록 관리 철저 - STR 제외사유 기록·결재 ② 검사 강화	【완료】 지침시달 완료('08.8.11)
2-1-③	거액 현금거래 등의 혐의거래 보고기준, 위반시 제재기준 마련	통보	【완료】 ① 합리적 이유없는 거액현금 거래는 혐의거래로 보고토록 지도 ② 혐의거래 미보고 등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 (미보고 금액별 과태료 부과기준 등)	【완료】 지침시달 완료('08.8.11)
2-2	대체거래를 현금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지침 개정, 지도·감독방안 마련	통보	【완료】 ① 업무지침 관련 규정 개정 - 고객이 대체거래를 현금거래로 처리할 것을 요청한 경우 수용하고 CTR로 보고토록 한 규정을 삭제, '대체거래 현금처리 요청시 STR 검토' 추가 ② 지도공문 발송 - 거래내용에 맞게 전표처리 - 현금처리 요청시 대체처리 권유	【완료】 지침시달 완료('08.8.11)
2-3	현행 영업점 단위의 혐의거래추출 전산시스템을 은행·고객단위로 변경	통보	【완료】 2-1-① (은행의 혐의거래추출 조건/대상 합리화 등 개선) 조치사항에 포함 ⇒ 은행 전체, 고객 단위로 혐의거래를 추출하도록 명시	【완료】 지침시달 완료('08.8.11)

2-5	체신관서·저축은행·수협·산림조합 등이 자금세탁방지 업무체계를 갖추도록 지도·감독 강화	통보	【완료】 ① 보고책임자 임명 등 내부통제체제를 구축하도록 지도·감독 강화 ② 자금세탁 혐의거래 추출 시스템 구축 추진 ③ 검사 강화	【완료】 지침시달 완료(08.11.4)
-----	---	----	---	---------------------------------

3. 자금세탁방지 감독·검사 업무의 개선

번호	요구 요지	처분	조치결과	진행상황
3-1-①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 수립·운용을 위한 세부기준 수립·시달	통보	【완료】 「업무지침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 각 협회 등을 통해 금융기관에 통보('08.9.5)	【완료】 세부기준 수립·시달
3-1-②	검사수탁기관들이 금융기관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의 적법성·효율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검사업무를 체계적·효율적 수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통보	【완료】 <input type="checkbox"/> 감독·검사업무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²⁾ 완료('08.12)하고, 이를 토대로 ① 감독·검사 개선방안 마련('09.1.28) - 업무지침개정, 검사매뉴얼 작성지침 마련, 업무지침 평가를 위한 세부 체크리스트 마련(개정)등 ② 검사수탁기관에 대한 검사위탁을 통해 동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통보('09.2.13)	【완료】 검사업무를 체계적·효율적 수행 방안 마련
주 2) 연구용역 :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수준 제고를 위한 감독·검사업무 효율화 방안」('08.8월~12월, 한영회계법인)				
3-2-①	검사매뉴얼·운용지침을 개발하여 검사수탁기관에게 제공하고, 검사수탁기관이 이에 맞춰 자체	통보	【완료】 ① 감독·검사 개선방안 마련('09.1.28) ② 검사수탁기관에 「검사매뉴얼 작성 지침」 통보('09.3.31) 및 작성결과 통보 요구('09.6.10까지)	【완료】 검사매뉴얼·운용지침을 개발, 제공, 자체개발 감독 강화

	매뉴얼을 개발· 운용하도록 지 도·감독 강화			
3-2-②	검사수탁기관 검사인력에 대 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마련	통보	【완료】 ① 감독·검사 개선방안 마련('09.1.28) ② 검사수탁 검사인력 교육·훈련 프로그램 마련 - 금감원 연수원을 활용한 검사자 전문교육과정 개설 · '09.7.20-7.24, 5일간 실시 · 수탁기관에 대상자 선발 및 이수요구 ('09.6월 예정)	【완료】 검사수탁기 관 검사인력 에 대한 교 육·훈련 프 로그램 마련
3-3	검사자의 금융 거래자료 및 혐의거래 보고 내용 열람 근 거 마련	통보	【완료】 ① 감독·검사 개선방안 마련('09.1.28) ② 소관부서와의 검토·협의 등 추진일정 마련('09.1.28) - 연내 개정협의완료 - 검사매뉴얼 작성지침 통보를 통해 개별거래를 점검하도록 요구('09.3.31))	【완료】 검사자의 금 융거래자료 및 혐의거래 보고 내용 검사 강화
3-4	농협중앙회 등 5개 자율규제 기관 위탁검사 업무의 실효성 확보 위한 검 사결과 감리· 제재시스템 구 축 또는 금융 감독원에 검사 업무 위탁	통보	【완료】 ① 감독·검사 개선방안 마련('09.1.28) ② 수탁기관의 검사실효성 강화를 위한 「감독·검사 지원시스템」 구축('09.2) - 검사계획·결과·개선조치 등 동 시스템에 입력·분석 ※개정 검사체크리스트 활용 - 동 분석결과를 자가평가결과와 비교·검토하여 검사의 문제점 등 도출 및 개선조치 ③ 감독·검사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자가평가 시스템」 구축('09.2) - 금융기관 자체 AML이행결과를 검토·진단하고 그 결과를 동 시스템에 입력·분석('09.하반기) ※자가평가항목(140여개) 마련	【완료】 위탁검사업 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검사결과 감 리·제재시 스템 구축 완료

4. AML 업무지침 작성 가이드라인

□ 불임 참조

AML업무지침 작성 가이드라인

2008. 08

금 융 정 보 분 석 원

목 차

I. 개요	1
1. 목적	1
2. 적용	1
3. 구성	2
II. 자금세탁방지제도	3
1. 개념	3
1.1.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3
1.2. 자금세탁방지제도 체계	4
2. 도입배경 및 필요성	5
2.1. 도입배경	5
2.2. 필요성	5
3. 현행 관련법령 주요내용	6
3.1. 특정금융거래보고법	6
3.2. 범죄수익규제법	8
3.3.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9
4. 금융기관 등의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10
III.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구축	15
1. 개요	15
2. 자금세탁방지업무 담당 구성원별 역할·책임	15
2.1. 이사회	15
2.2. 경영진의 역할 및 책임	16
2.3. 보고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	16
3. 임직원	18
3.1. 개요	18
3.2. 교육 및 연수 주관	18
3.3. 교육 및 연수 내용	18
3.4. 교육대상·시기·방법·기록관리	18
4. 직원알기제도 (Know Your Employee)	19
5. 독립적인 감사체계	19
5.1. 개요	19
5.2. 감사주체 및 수행주기	19
5.3. 감사 범위	20

5.4. 감사결과보고	20
6. 신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절차 수립	20
IV. 고객확인 의무	21
1. 의의	21
1.1. 개념	21
1.2. 필요성	21
2. 위험관리 체계	26
2.1. 개요	26
2.2. 위험의 식별 및 평가	26
2.2.1. 위험분류	26
2.2.2. 국가위험	26
2.2.3. 고객위험	27
2.2.4. 상품 및 서비스위험	27
3. 적용 대상	29
3.1. 계좌 신규개설	29
3.2. 2천만원(외화인 경우 미화환산 1만불 상당액)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29
3.3.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30
3.4. 고객확인 의무가 면제 가능한 대상	30
3.5. 기존 고객에 대한 적용	31
3.6. 인수·합병시 적용	31
4. 이행시기	31
4.1. 원칙	31
4.2. 예외적용	32
4.3. 지속적인 고객확인 의무	32
5. 고객확인 및 검증	33
5.1. 개요	33
5.2. 개인 (외국인 포함)	33
5.3. 법인 (영리, 비영리, 기타 및 외국단체 포함)	36
5.4. 대리인에 대한 확인	38
5.5. 요주의 리스트 필터링	38
6. 전신송금	39
6.1. 개요	39
6.2. 자금세탁 위험	39
6.3. 전신송금에 대한 주의의무	40
6.3.1. 송금 금융기관의 주의의무	40

6.3.2. 중개 금융기관의 주의의무	40
6.3.3. 수취 금융기관의 주의의무	41
6.3.4. 정보보관의무	41
6.4. 국내 자금이체에 대한 적용	41
7. 비대면 거래관계 및 거래	41
8. 제3자를 활용한 고객확인 의무	42
8.1. 개요	42
8.2. 자금세탁위험	42
8.3. 제3자를 활용한 고객확인 시 주의의무	42
8.4. 제3자의 고객확인의무 이행능력 확인	42
8.5. 제3자에 의한 고객확인의무 위탁 계약 시 주의의무	42
9. 고객확인 및 검증거절시 조치	43
10. 고객공지의무	43
11. 해외지점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43
V. 주요 고위험군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44
1. 환거래계약(Correspondent banking relationship)	44
1.1. 개요	44
1.2. 자금세탁 위험	44
1.3. 환거래 계약시 주의의무	45
1.3.1. 환거래 요청은행에 대한 고객확인 및 검증의무	45
1.3.2. 환거래 계약에 대한 관리자의 검토 및 승인	46
2. 고액자산관리(Wealth Management)	48
2.1. 개요	48
2.2. 자금세탁 위험	48
2.3. 고액자산관리에 대한 주의의무	48
2.3.1. 고액자산관리 고객에 대한 확인 및 검증	49
2.3.2. 고액자산관리 고객에 대한 금융거래 모니터링	49
3.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Politically Exposed Persons)	50
3.1. 개요	50
3.2. 자금세탁 위험	50
3.3. 정치적 주요인물에 대한 주의의무	50
3.3.1. 정치적 주요인물에 대한 고객확인 및 검증	51
3.3.2. 정치적 주요인물에 대한 모니터링	51
4. 비영리 단체	52
4.1. 개요	52

4.2. 자금세탁 위험	52
4.3. 비영리단체에 대한 주의의무	52
4.3.1. 비영리단체에 대한 고객확인 및 검증	52
4.3.2. 비영리단체에 대한 모니터링	53
5. FATF 비협조 국가	54
5.1. 개요	54
5.2. 자금세탁 위험	54
5.3. FATF 비협조 국가에 대한 주의의무	54
5.4. FATF 비협조 국가에 대한 모니터링	54
6. 공중협박자금조달 고객	55
6.1. 개요	55
6.2. 자금세탁 위험	55
6.3. 공중협박자금조달 고객에 대한 주의의무	55
6.3.1. 공중협박자금조달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 및 검증	55
6.3.2. 공중협박자금조달 고객에 대한 금융거래 모니터링	56
VI 위험기반 거래 모니터링 체계	57
1. 개요	57
2. 지속적인 모니터링	57
3. 모니터링 결과 분석 및 보고	58
4. 분석자료 보존절차	58
VII. 보고체계의 수립(STR, CTR)	59
1. 내부보고체계의 수립	59
1.1. 보고체계 형태	59
2. 외부보고체계의 수립	62
2.1. 의심스러운 거래보고(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	62
2.1.1. 보고대상	62
2.1.2. 의심스러운 거래 판단기준	63
2.1.3. 보고업무	65
2.1.4. 보고시기	65
2.1.5. 보고방법	65
2.2. 고액현금거래보고(Currency Transaction Report, CTR)	67
2.2.1. 개요	67
2.2.2. 보고대상 및 보고시기	67
2.2.3. 보고의무의 주체와 거래상대방	69

2.2.4. 보고내용	70
2.2.5. 보고방법	70
VII. 관련 자료 보존체계	72
1. 보존의무	72
2. 보존 대상	72
3. 보존 방법	73
4. 보존 장소	73
IX. 비밀보장 및 면책 규정	74
1. 비밀보장	74
2. 면책	75
3. 제재	76

I. 개요

1. 목적

본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이하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따라 금융기관 등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원칙과 사례들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금융기관 등이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동 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적용

- 1) 본 지침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 등”에 적용함
- 2) 본 지침이 금융기관별로 상이한 업종의 특성과 고유한 사업환경을 모두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본 지침을 기본으로 각 금융기관 등의 실정에 맞는 자금세탁방지제도 관련 업무지침 등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동 제도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3) 본 지침에서 제시한 사례들은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구체적 해설을 위한 것으로 금융기관 등은 본 지침 적용 시 업종, 규모, 업무의 범위, 관련 비용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 4) 본 지침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동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FATF 권고사항 및 해외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것으로, 본 지침이 동 법규와 해석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특정금융거래보고법, 동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이 우선함

3. 구성

○ 본 지침은 금융기관 등에서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갖추어야 할 체계를 크게 6개 항목으로 나누어 실무적 절차와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음

- 1)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구축
- 2) 위험기반 관리체계
- 3) 고객확인 의무
- 4) 위험기반 거래 모니터링 체계
- 5) 내·외부 보고체계
- 6) 관련 자료 보존체계

○ 이와는 별도로 주요 고위험군을 선정하여 항목별로 개요, 자금세탁 위험, 고객 확인 및 검증의무 등에 대해 설명하였음

○ <붙임>으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수록하였음

- 1)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2)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범죄수익규제법)
- 3)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공중협박 자금조달금지법)
- 4)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서식 및 작성방법
- 5) 고액현금거래 보고 서식 및 작성방법
- 6) 고액현금거래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공공단체의 범위
- 7) 고객거래 확인서
- 8) 자금세탁 전제범죄의 주요내용
- 9) FATF 권고사항

II. 자금세탁방지제도

1. 개념

1.1.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 1) 일반적으로 자금세탁행위는 “범죄행위로부터 얻은 불법자산을 합법적인 자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의미하나, 각국의 정치·사회적인 환경, 연구목적, 법령 등에 따라 달리 정의
- 2) 국제 자금세탁방지 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는 자금세탁행위를 ‘범죄수익의 불법원천을 가장하기 위한 과정(the process of criminal proceeds in order to disguise illegal origin)’으로 정의
- 3) 테러자금조달억제협약에서는 테러자금조달행위를 “동 협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위하여 사용할 의도가 있거나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사용될 것임을 인지하고, 직·간접적 또는 불법·고의적인 모든 수단에 의해 자금을 제공하거나 모금하는 행위”로 정의
- 4) 국내의 경우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과 달리 탈세목적으로 재산을 은닉·가장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① 자금세탁행위

- 불법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 탈세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②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 공중협박자금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 자금 또는 재산을 모집·제공하거나 이를 운반·보관하는 행위
- 공중협박자금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 자금 또는 재산의 모집·제공·운반·보관을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1.2. 자금세탁방지제도 체계

1) 금융제도, 사법제도 및 국제협력체계를 상호 연계하여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 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종합적인 관리체계

① 금융제도

- 금융기관 등의 고객확인 의무와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로 의심되는 거래(STR), 고액현금거래(CTR)를 금융정보분석원(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 KoFIU)에 보고하는 제도

② 사법제도

-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범죄로부터 얻은 수익 및 재산을 몰수·추징
- 금융기관 등이 범죄수익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

③ 국제협력

- 국가간 자금세탁 관련 정보교환, 수사공조 등 상호협력체계 구축

금융제도	사법제도	국제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제도(STR) •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 고객확인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를 범죄로 규정 • 범죄수익 몰수·추징 • 범죄사실 수사기관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인 인도, 사법공조의 국가 차원 협력 • 일반정보 및 의심스러운 거래 정보 교환 등 FIU간 협력
특정금융거래보고법	범죄수익규제법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MOU체결, 정보교환

2. 도입배경 및 필요성

2.1. 도입배경

- 1) 대내적으로는 외환자유화조치에 따라 파생될 수 있는 불법자금의 유출·입을 방지하고 금융거래를 이용한 불법자금의 세탁행위를 차단
- 2) 대외적으로는 UN, OECD 등 국제기구의 자금세탁방지제도 강화추세에 동참하여 우리나라 및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 제고

2.2. 필요성

- 1) 지능화·고도화되는 범죄의 효과적인 예방과 적절한 대응을 위해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등에 대한 자금흐름 과정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관리 체제를 강화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불법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것이 범죄 예방 및 단속에 매우 효과적

- 2) 금융기관 등의 자금세탁방지제도 강화를 통해 대·내외 신인도 및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으며, 불법자금과 연루되어 불이익을 받거나 금융기관의 명성과 평판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 3)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는 각국의 자금세탁방지제도 도입 및 상호협력 강화를 권고

○ FATF 49개 권고기준(자금세탁 관련 40개, 테러 관련 특별권고 9개) 제정, 비협조 국가 명단발표 및 국제금융거래 제재

※ FATF 비협조 국가 (Non-Cooperative Countries & Territories, NCCT)

- 2008년 6월 30일 현재 비협조국가로 등록된 국가는 없음
- http://www.fatf-gafi.org/pages/0,3417,en_32250379_32237267_1_1_1_1_1,00.html 참조

3. 현행 관련법령 주요내용

3.1. 특정금융거래보고법

1)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 설치

- 금융기관 등이 보고한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관련 금융거래정보 등을 정리·분석한 후,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

※ 특정금융거래정보

- ① 금융기관 등의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정보
- ② 외국 FIU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 ③ ① 및 ②의 정보 또는 고액현금거래보고 정보 및 외국환거래정보를 정리·분석한 정보

※ 법집행기관 :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원회, 중앙선관위

-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 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기관 등에게 자료제공 요청

※ 금융기관 등에게 외국환거래 등 관련 정보에 한하여 제공요청

-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협조 및 정보교환
-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에 따른 업무
- 금융기관 등이 수행하는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

※ 감독 및 검사업무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금융감독원 등 타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음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11조제3항 참조)

- 기타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동향 및 방지대책 조사·연구,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의심되는 거래일 가능성이 높은 거래유형 제공 등

2) 금융기관 등의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관련 특정금융거래 보고

① 의심되는 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 STR)

-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로 의심되는 거래 중 원화거래 2천만원, 외국환거래 미화 1만불 상당액 이상인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의무 보고
 - 보고기준금액 미만이라도 의심되는 거래로 판단되면 보고가능
- 자료보존 : 실명확인자료, 금융거래자료,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자료 등을 거래일 또는 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
- 면책 : 보고관련 손해배상책임면제(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보고 제외), 보고내용의 재판상 증거불인정 및 금융기관 직원의 증언거부 권한 부여

②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rt ; CTR)

- 보고기준금액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에 전자기록매체 등을 이용하여 보고
- 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금액 산정시 제외대상
 - 100만원 이하의 원화 송금(무통장입금 포함)금액
 - 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매입·매각금액
 - 금융실명법 제3조 제2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공과금 등을 수납한 금액
 - 법원공탁금, 정부/법원보관금, 송달료를 지출한 금액
 - 은행지로장표에 의하여 수납한 금액
 - 100만원 이하의 선불카드 거래금액

3) 금융기관 등의 고객확인 의무

-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고객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
 - 신규 계좌개설
 - 2천만원 이상 일회성 거래
 -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고객유형과 거래유형별로 자금세탁 위험 정도에 따라 차등화된 고객확인을 시행할 의무

4) 내부보고체계 등 구축 및 운용

금융거래정보의 원활한 보고와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① 보고책임자 임명 ② 내부보고체제수립 ③ 업무지침 작성·운용 ④ 임직원 교육 및 연수의무 부과

5)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비밀보장

금융기관 등 종사자의 보고사실 누설금지,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수사기관 종사자 등의 비밀누설 및 목적 외 이용 금지

3.2. 범죄수익규제법

1) 자금세탁행위의 범죄화

- 특정범죄로부터 얻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 발생원인에 대한 사실을 가장 은닉한 행위(자금세탁행위)를 처벌

※ 특정범죄 : 조직범죄, 뇌물범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등 38종 범죄

- ① 폭력단체 구성, 도박장 개장 등 조직범죄(13종)
- ② 사기, 횡령, 배임, 주가조작 등 경제범죄(18종)
- ③ 뇌물죄 등 부패범죄(3종)
- ④ 해외재산도피, 외화밀반출 범죄(2종)
- ⑤ 정치자금법 위반죄(1종)
- ⑥ 식품위생, 건강기능식품, 보건범죄(1종)

※ 마약류범죄 등 2종 범죄

- ①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죄 (1종)
- 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죄(1종)

- 처벌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징역과 벌금 병과, 행위자와 법인 양벌 가능)

2) 범죄사실 인지시 신고 의무

금융기관 등의 종사자는 범죄수익 수수 사실을 알게 된 때 또는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할수사기관에 신고

3)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등은 몰수·추징 가능

3.3.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1)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범죄화

공중협박자금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 자금 또는 재산을 모집·제공·운반·보관하는 행위 또는 이를 강요·권유하는 행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2) 공중협박자금 조달에 대한 사전예방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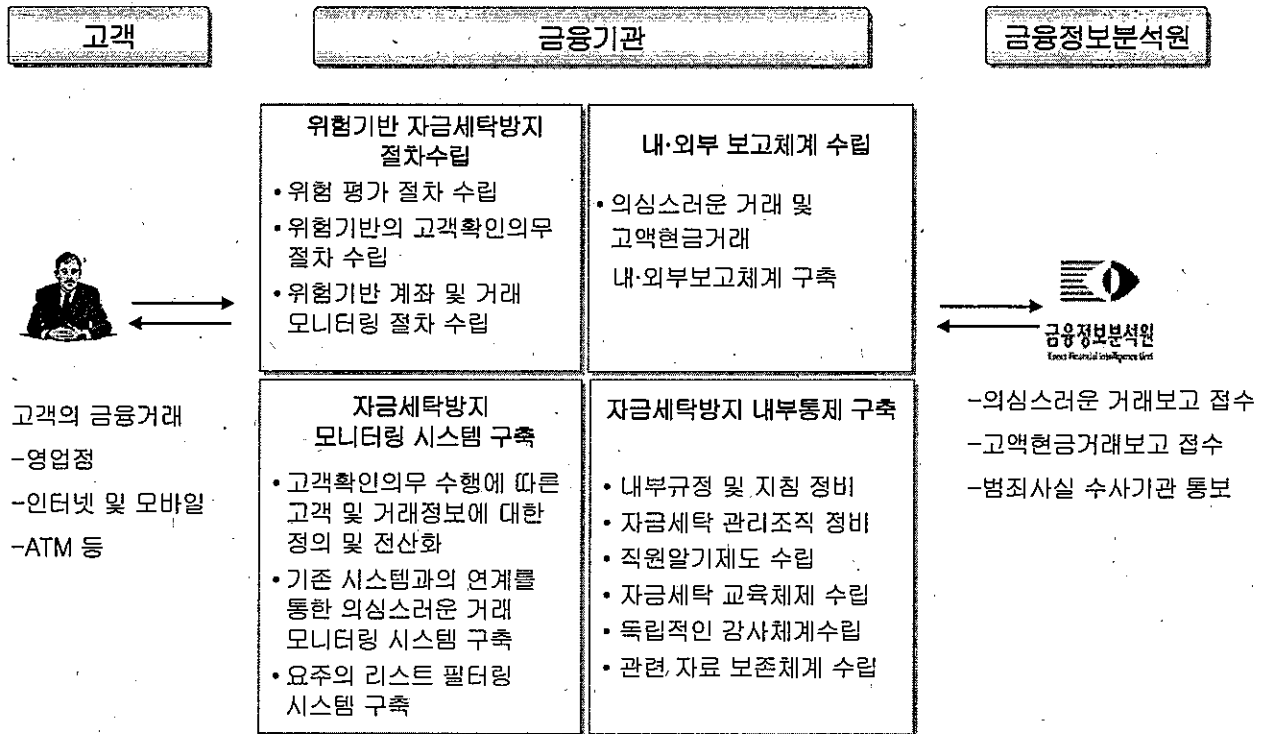
금융위원회가 금융거래제한 대상자로 지정하여 고시한 자는 금융기관 등과 금융거래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허가를 받아 금융거래를 한 자와 금융기관 등의 종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3) 범죄사실 인지시 신고 의무

금융기관 등의 종사자는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공중협박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나 그에 따른 지급·영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 또는 동법 제6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4. 금융기관 등의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금융기관 등은 의심스러운 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및 고객확인 의무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규정과 절차, 조직 및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세탁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함.



1) 위험기반 자금세탁방지 절차 수립

금융기관 등은 경영환경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위험 수준에 따른 고객확인 의무 및 모니터링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2) 보고체계 수립(STR, CTR)

금융기관 등은 STR과 CTR 보고대상 거래를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는 내부 보고 체계와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외부 보고체계로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함

3)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금융기관 등은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또는 거래패턴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심되는 거래의 판단 외에 룰(rule), 스코어링(scoring) 등 다양한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을 고려할 수 있음

4)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구축

- 금융기관 등은 자금세탁행위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고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고책임자 임명 등의 조직체계와 내부 지침 등을 수립하여야 함
- 또한, 동 지침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 및 연수체계를 수립하고,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방지 제도의 이행수준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독립적인 감사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참고 1> 자금세탁의 단계

□ 자금세탁은 일반적인 거래유형으로 포괄하기는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3단계 절차를 거침 (미국 관세청 3단계 모델 이론)

① 배치단계(Placement Stage) 또는 예치단계 :

- 범죄수익이 금융기관으로 유입되거나 타 지역으로 이송
- 주로 현금형태로 유입되며 자금추적이 어려운 지역으로 이동

② 반복단계(Layering Stage) 또는 은폐단계 :

- 복잡한 금융거래를 반복하면서 정상적인 금융거래로 위장
- 다수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수표, 채권, 주식 등으로 전환하고 상거래 및 외환거래 형태로 위장 (조세회피지역 등 활용)

③ 통합단계(Integration Stage) 또는 합법화 단계 :

- 세탁된 자금을 기업 등에 합법적으로 투자하여 적법한 출처로 전환
- 정상적인 사업수익으로 가장하여 제도금융권에 재반입

☞ 자금세탁방지제도는 주로 배치, 반복단계에서 불법거래를 인식하여 대처

<참고 2> 자금세탁방지업무 대상기관

1. 대상기관 : 모든 금융기관과 명시된 비금융기관

- 은행 :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장기신용은행
- 비은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농·수협·신협 조합 과 그 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보험사업자, 체신관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투자자문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산림조합·중앙회, 금융지주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조합,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조합, 환전영업자, 카지노사업자

※ 위 대상기관 중 다음 기관에 대해서는 보고책임자의 임명 및 내부보고체제 수립, 업무지침 작성·운용, 임직원의 교육·연수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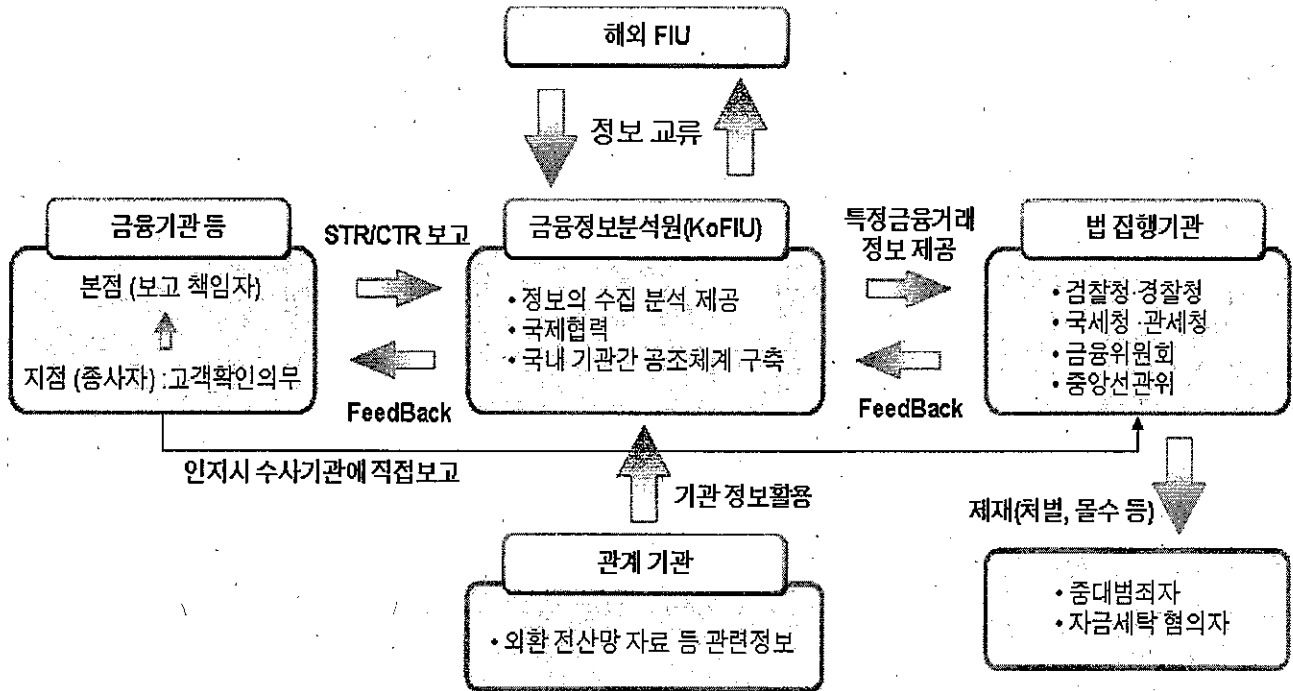
- ① 전부 면제 : 증권금융회사·중개회사, 명의개서대행회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금융지주회사
- ② 일부 면제 가능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투자자문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산림조합 중앙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조합,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조합, 환전영업자, 부동산신탁사업만을 영위하는 신탁회사,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지역조합 제외)·중앙회, 보증보험 및 재보험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중앙회

2. 대상점포 : 지점, 영업소, 출장소 등 모든 점포

- 국내점포 : 금융기관설립법에 의해 허가, 신고, 등록 등을 한 점포
- 해외점포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등록·신고 등을 한 해외지점
 - 현지법에 따라 국내로 보고할 수 없는 점포에 대해서는 보고책임자가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

※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 및 감독규정 제2조제1항 및 제3항

<참고 3> FIU 및 자금세탁방지제도 체계



III.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구축

1. 개요

- 1)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란 금융기관 내부통제기준의 일부분으로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이하 자금세탁) 위험을 예방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해 금융기관의 모든 임직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일련의 과정으로, 경영구조, 제공되는 상품, 고객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험수준에 따라 구축하여야 함.
- 2) 금융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정책 및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함
 - ① 자금세탁방지업무 담당 구성원별 역할·책임
 - ②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 ③ 직원알기제도 (Know Your Employee)
 - ④ 독립적인 감사체계
 - ⑤ 신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절차 수립
 - ⑥ 위험기반 자금세탁 방지 절차 수립
 - 고객에 대한 위험 평가 절차 수립 (“IV.2. 위험관리 체계” 참조)
 - 위험기반의 고객확인 의무 정책 수립 (“IV. 고객확인 의무” 및 “V. 주요 고위험군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 참조)
 - 위험기반 계좌 및 거래 모니터링 절차 (“VI. 위험기반 거래 모니터링 체계” 참조)
 - ⑦ 내·외부 보고체계의 수립 (“VII. 보고체계의 수립” 참조)
 - ⑧ 관련 자료 보존체계 수립 (“VIII. 관련 자료 보존체계” 참조)

2. 자금세탁방지업무 담당 구성원별 역할·책임

2.1. 이사회 역할 및 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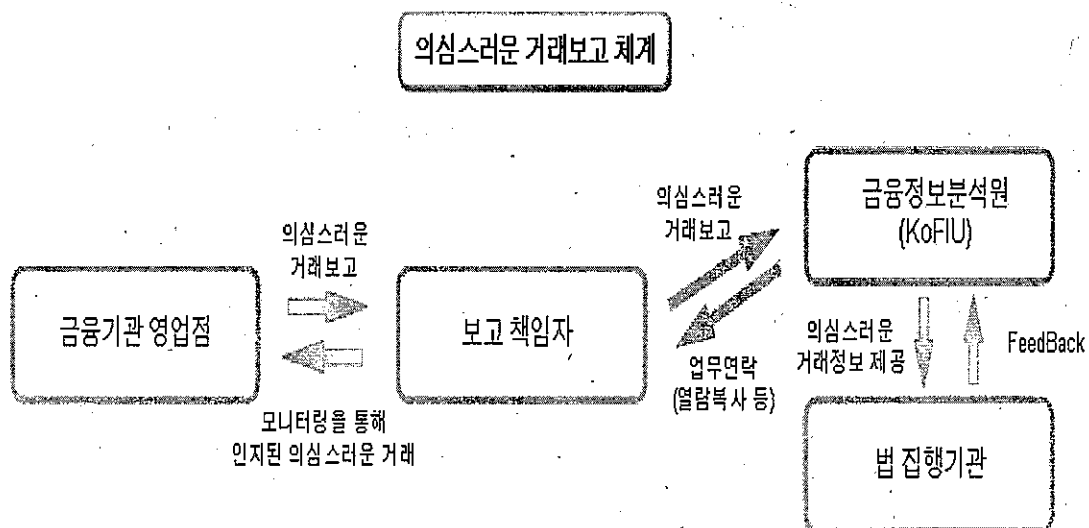
- 1) 이사회는 경영진이 설계·운영하는 자금세탁방지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 및 책임을 수행함
 - ① 경영진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설계·운영하는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감독책임
 - ②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경영진 및 감사(위원회)의 평가·조치결과에 대한 검토

2.1. 경영진의 역할 및 책임

- 1) 경영진은 자금세탁방지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 및 책임을 수행함
 - ①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정책의 이행계획·설계·운영·평가에 대한 책임
 - ②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규정 승인
 - ③ 내부통제 정책의 준수, 취약점에 대한 개선조치사항의 이사회 보고
 - ④ 내부통제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 책임
 - ⑤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정 자격과 직위를 갖춘 자를 보고책임자로 선정하고, 그 임면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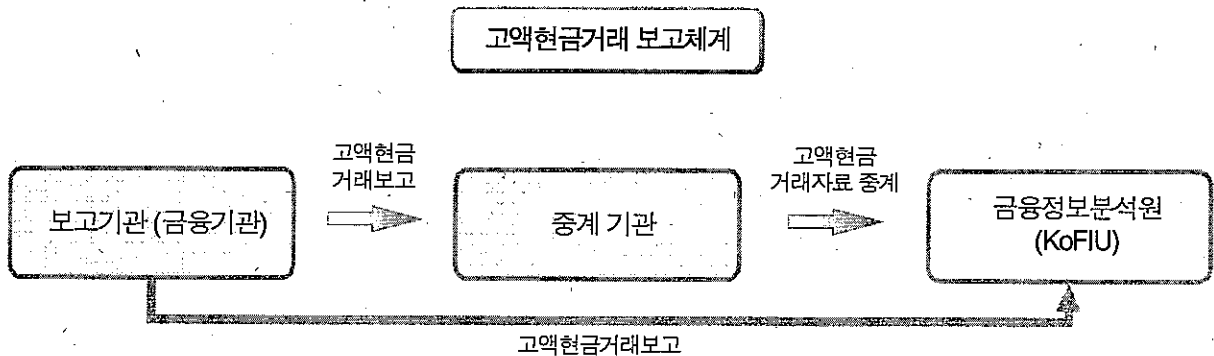
2.2. 보고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

- 1) 금융거래 시 고객확인 의무 수행 관련 업무 총괄
금융기관 등이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과 금융거래 시 신원확인 및 거래목적 파악하는 등 관련 업무를 총괄
- 2) 의심스러운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
영업점으로부터 보고받거나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인지된 의심스러운 거래를 추가 조사하거나 기타 정보 등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



3) 고액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한 현금(외국통화 제외)의 지급 또는 영수거래를 각각 합산한 금액이 보고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그 거래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



4)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의 설계·운영 및 점검

- ① 규정 및 세부 업무지침 작성·운영
- ② 임직원별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역할과 책임, 권한, 보고체계 등을 직무 기술서에 명시
- ③ 전자금융기술의 발전, 금융 신상품의 개발 등에 따른 자금세탁 유형과 기법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 ④ 직원알기체도의 수립 및 운영
- ⑤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 ⑥ 자금세탁방지 관련 자료의 보존책임
- ⑦ 운영상황 모니터링 및 개선, 보완
- ⑧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및 통제활동에 대한 운영과 효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경영진에게 보고
- ⑨ 보고책임자는 금융거래 규모 등 자체 여건을 감안하여 일정수의 전담직원을 배치

5) 금융정보분석원과의 업무협조, 정보교환 등

- 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분석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문서에 의해 외국환거래 등을 이용한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함
- ②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와 관련한 내부보고체계 운용상황의

점검·개선사항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과 정보교환 등

1.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3.1. 개요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임직원의 이해와 관심제고 등을 위해 교육프로그램 수립 및 교육·연수 실시

3.2. 교육 및 연수 주관

교육 및 연수는 보고책임자가 주관하여 실시하되, 세부사항은 각 금융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음

※ 교육 및 연수 주관에 대한 예시

보고책임자는 교육 및 연수계획 수립, 연수교재 선정 등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세부진행사항은 유관부서(예, 연수부 등)와 협조하여 진행

3.3. 교육 및 연수 내용

1) 교육 및 연수는 직급, 담당업무 등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및 연수의 내용은 교육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① 법규 및 제도의 주요 내용

②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정책 및 절차 (고객확인 및 검증방법, 고객확인의무 절차 등)

③ 의심스러운 거래의 유형 및 최근 동향

④ 고객유형별 업무처리 절차

⑤ 의심스러운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 업무처리 절차

⑥ 임직원의 역할 등

2)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변경 내용 및 자금세탁사례 등 새로운 내용을 지속적으로 교육 및 연수 내용에 반영하여야 함.

3.4. 교육대상·시기·방법·기록관리

1) 교육대상 및 시기

전 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

2) 교육방법

집합, 전달, 화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 가능하며, 협회 등 관련기관의 주관 하에 공동 교육도 가능함

3) 기록관리

교육실시 후 교육일자,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2. 직원알기제도 (Know Your Employee)

금융기관 등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하여 직원 채용 시 신원확인 등을 포함하여 직원 알기제도 관련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함

3. 독립적인 감사체계

5.1. 개요

- 1) 금융기관 등은 규모, 업무 범위, 내부통제 수준 등에 따른 위험을 고려하여 독립적인 감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 2) 감사대상은 금융기관 등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활동으로 하며, 감사수행 빈도 및 수준은 자금세탁 위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5.2. 감사주체 및 수행주기

1) 감사주체

-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감사는 감사(위원회)가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를 수행하는 자는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
- 내부감사를 감사(위원회)가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내부 감사부서 이외의 부서 또는 외부 전문가가 수행할 수 있으나, 자금세탁방지 업무 수행 임직원과는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함

2) 감사수행주기

금융기관 등의 자금세탁 위험수준을 고려하여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 본부 부서에 대한 감사는 연 1회, 영업점에 대한 감사는 임점·서면·모니터링 검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5.3. 감사 범위

감사범위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이행수준과 효과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함

- ① 자금세탁방지 관련 정책, 절차 및 통제활동 등 설계·운영의 적정성
- ②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시스템의 적정성
- ③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인원의 적정성 등

5.4. 감사결과보고

감사수행결과는 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감사 범위와 절차, 위반사항 및 사후조치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4. 신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절차 수립

금융기관 등은 전자금융기술의 발전 및 금융환경 등의 변화로 생겨날 수 있는 신규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한 자금세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동 상품 및 서비스 판매 전에 자금세탁 위험을 측정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함

I. 고객확인 의무

1. 의의

1.1. 개요

- 1) 고객확인 의무란 금융기관 등이 제공하는 금융거래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확인 및 검증, 거래관계의 목적 확인 및 실소유자 확인 등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를 말함
- 2) 금융기관 등은 고객확인 의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무지침을 작성하여 이행하여야 함
 - ① 고객확인 의무 적용대상 및 이행시기
 - ② 위험기반의 고객확인 및 검증 절차
 - ③ 고객확인 및 검증 거절시의 절차
 - ④ 고객공지의무 등

1.2. 필요성

- 1) 금융기관 등의 건전성 제고
고객확인 의무제도 도입을 통해 자금세탁 위험, 평판·운영·법률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금융기관 등의 건전성 제고
- 2)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의 효용성 제고
고객 및 금융거래의 정확한 정보 확보를 통해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제도를 보완하는 등 제도 효용성 제고
- 3) 자금세탁방지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응
국제기준의 변화, 전자금융의 발전 등 외부환경 변화에 맞추어 자금세탁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금융기관 등이 스스로 고객의 자금세탁 위험에 따라 차별화된 고객확인 의무를 수행할 필요

<참고 4> 용어 설명

1. 금융거래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금융자산*에 의한 거래

-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기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현재 정한 것이 없음)

※ “금융자산”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파생상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함. 다만, 2009년 2월 4일전까지는 “선물거래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물거래로 봄

- 가.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 나.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 다.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 “선물거래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물거래

(1) 선물거래법 제3조제1호

“선물거래”라 함은 이 법과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 증권선물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선물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를 말함

- 가. 당사자가 미래의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가격으로 특정한 일반상품 또는 금융상품을 수수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로서 전매 또는 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정한 가격과 전매 또는 환매시의 가격과의 차액을 수수하여 결제할 수 있는 거래
- 나. 당사자가 특정한 지수에 대하여 미리 약정한 수치(이하 “약정수치”라 한다)와 미래의 일정한 시기의 당해 지수의 수치와의 차이로부터 산출한 금액의 수수를 약정하는 거래
- 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부여하고, 그 권리를 부여받은 상대방은 당사자 일방에게 그 권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
 - (1)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거래
 - (2) 일반상품 또는 금융상품의 매매거래
 - (3)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

(2) 선물거래법 제3조제2호

“해외선물거래”라 함은 해외선물시장에서 행하여지는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를 말함

- 3) 대출·보증·보험·공제·팩토링(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을 양수·관리 또는 회수하는 업무를 말한다)·보호예수·금고대여 업무에 따른 거래
-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시설대여·연불 판매·할부금융·신기술사업금융 업무에 따른 거래

5) 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14호)에 의한 외국환업무에 따른 거래

- 가.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
- 나.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영수
- 다. 거주자와의 외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예금·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 라. 비거주자와의 예금·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 마. 기타 가목 내지 라목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대통령령(제5조)이 정하는 업무

- 비거주자와의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증권 또는 채권의 매매
- 거주자간의 신탁·보험 및 파생금융거래(외국환거래와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신탁·보험 및 파생금융거래
- 외국통화로 표시된 시설대여(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를 말함)
- 기타 위의 외국환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2. 불법재산 : 범죄수익(38종) + 불법수익(2종) + 공중협박자금

- 1) 범죄수익 : 범죄수익규제법에 의한 특정범죄*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수익을 말하며,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이들 재산과 이들 재산의 재산이 혼화된 재산을 포함함

※ 특정범죄 : 자금세탁범죄의 범정형(5년 이하 징역)을 기준으로 통상 장기 5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조직범죄, 밀수 등 거액경제범죄, 뇌물죄 등 부패범죄, 해외재산도피범죄 등 (38종 범죄)

- 2) 불법수익 :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에 의한 마약류범죄* 행위와 관련된 수익

※ 마약류범죄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죄 등 (2종 범죄)

☞ 이러한 40종의 범죄를 자금세탁범죄의 전제가 되는 범죄라 하며 동 전제 범죄의 주요내용은 “붙임8. 자금세탁 전제범죄의 주요내용” 참조

- 3) 공중협박자금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외국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공중에게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등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모집·제공되거나 운반·보관된 자금이나 재산(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제2조제1호)

3.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1) 자금세탁행위

가. 불법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원인에 대한 사실을 가장(假裝)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隱匿)하는 행위

※ 불법재산이란 조직범죄, 뇌물죄, 사기·횡령·배임죄, 마약류범죄 등 40종의 각종 범죄(전제범죄)와 관련된 수익을 의미함

나. 탈세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원인에 대한 사실을 가장(假裝)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隱匿)하는 행위

다. 자금세탁 행위에는 실제 발생한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발생하지 않은 거래 (예 : 창구상담 결과 거래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거래상대방의 신분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

2)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가. 공중협박자금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 자금 또는 재산을 모집·제공하거나 이를 운반·보관하는 행위

나. 공중협박자금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 자금 또는 재산의 모집·제공·운반·보관을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2. 위험관리 체계

2.1. 개요

위험관리 체계는 금융기관 등이 자금세탁과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말함

2.2. 위험의 식별 및 평가

2.2.1. 위험분류

- 1) 금융기관 등은 자금세탁위험을 식별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위험을 고려하여야 함
 - ① 국가위험
 - ② 고객위험
 - ③ 상품 및 서비스 위험
- 2) 금융기관 등은 위험 평가 시 각 기관의 경영환경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험 평가요소와 중요도를 정하여야 함

2.2.2. 국가위험

국가위험이란 특정국가의 금융거래 환경이 취약하여 자금세탁이 발생할 위험을 말하며,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 등을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음

※ 평가요소에 대한 예시

- ① FATF 지정 비협조 국가 리스트 (non-cooperative countries and territories)
- ② FATF Statement에서 FATF 권고사항 취약국가로 발표한 국가 리스트
- ③ UN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World bank, Egmont Group, OECD, IMF 등)에서 발표하는 제재, 봉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와 관련된 국가
- ④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등에 의해 선정된 국가

2.2.3. 고객위험

고객위험이란 금융거래를 하는 고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자금세탁 위험을 말하며, 업종, 직업, 거래유형, 거래빈도 등을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음

※ 평가요소에 대한 예시

- ① 정부, 감독기관 또는 기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고위험으로 판단하는 사업
- ② 대량의 현금(현금등가물)거래가 수반되는 사업 등

※ 저위험 고객 유형의 예시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UN산하 국제자선기구 (예, 유니세프 등)
- 상장회사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 고위험 고객 유형의 예시

- 고액자산가
- 외국의 정치적 주요 인물
- 비영리단체
- 비거주자
- 대량의 현금(현금등가물)거래가 수반되는 카지노사업자, 대부업자, 환전상 등
- 고가의 귀금속(보석 등) 판매상
- 금융위원회가 공중협박자금조달과 관련하여 고시하는 금융거래제한대상자
- UN(United Nations)에서 발표하는 테러리스트(Consolidated List of terrorists)
- OFAC(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에서 발표하는 SDNs(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or Blocked Persons) 리스트

2.2.4. 상품 및 서비스위험

상품 및 서비스 위험은 금융기관 등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가 자금세탁에 이용될 위험을 말하며, 상품 및 서비스 종류, 거래채널 등을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음

※ 평가요소에 대한 예시

- ① 정부, 감독기관 또는 기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고위험으로 판단하는 상품 및 서비스

② 금융거래에 있어서 익명성 및 제3자 거래가 가능한 상품 및 서비스 등

※ 고위험 상품 및 서비스 유형에 대한 예시

- 양도성 예금증서(증서식 무기명)
- 환거래 서비스
- 전자 이체 등 비대면 거래

3. 적용 대상

3.1. 계좌 신규개설

- 1) “계좌 신규개설”이라 함은 고객이 금융기관 등에서 예금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금융기관 등과 계속적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함

※ 계좌 신규 개설 예시

- 보험·공제계약·대출·보증·팩토링 계약의 체결
- 양도성 예금증서, 표지어음의 발행 등
- 대여금고 약정, 보관어음 수탁 등

- 2) “계좌 신규개설”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에 상관없이 고객확인 의무를 수행하여야 함

※ 거래의 예시

- 고객이 1천만원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발행하는 경우, 2천만원 미만의 일회성 금융거래로서 고객확인 및 검증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계좌의 신규개설로 보아 고객확인 의무의 적용대상이 됨

3.2. 2천만원(외화인 경우 미화환산 1만불 상당액)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 1) “일회성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기관 등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 거래를 말함

※ 일회성 금융거래에 대한 예시

- 무통장 입금(송금), 외화송금·환전, 자기앞 수표발행 및 지급, 보호예수(봉합된 경우 기준금액 미만으로 봄), 선불카드 매매 등을 말함

2) 금액산정 기준

- 일회성 금융거래 기준금액은 단일거래 뿐만 아니라 연결된 거래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 연결된 거래에 대한 산정기간은 금융기관 등의 영업환경 및 위험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함

○ 기준금액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액면금액과 실제거래금액이 다른 경우 실제거래금액 기준
- 금융기관 등에서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금액 미만으로 봄
- 원화와 외화가 혼합된 거래일 경우 각각의 거래로 구분하여 기준금액을 적용하며, 외화환전과 같이 원화 및 외화거래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그 중 한 거래가 기준금액에 해당되면 그 금액을 적용
- 미화 이외의 외국통화의 경우 현찰매매율 또는 전신환매매율 등 실제 거래된 환율을 적용하여 미화로 환산

<참고 5> 일회성 금융거래의 연결거래 합산 예시

1. 연결거래 대상

- 실명확인대상 금융거래 중 무통장 입금(송금), 외화송금·환전, 자기앞 수표 발행 및 지급을 포함하여 금융기관 자율적으로 정의

2. 연결거래 산정 기간

- 거래당사자를 기준으로 최소 1일 이상 합산

3. 연결거래 대상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 시점

- 최초 창구 내점 후 실명확인 대상 금융거래 수행 시

3.3.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계좌 신규개설 및 2천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와 상관없이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금융기관 등이 판단하는 경우를 말함(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의 확인)

3.4. 고객확인 의무 면제 가능 대상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객확인 의무가 면제 가능한 금융거래는 다음과 같음

- ① '금융실명법' 제3조제2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금융거래

- ② '금융실명법' 제3조제2항제3호, 동법시행령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채권의 거래
- ③ 법원공탁금, 정부 및 법원보관금, 송달료를 지출한 금액
- ④ 보험기간의 만료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대하여 만기 환급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

3.5. 기존 고객에 대한 적용

- 금융기관 등은 기존고객에 대하여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시행일 2008년 12월 22일) 이후 위험평가를 통해 자금세탁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경우 또는 거래 모니터링 결과 거래행위 등이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적절한 시점에 강화된 고객 확인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운영 하여야 함
- 다만, 금융기관 등이 고객확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고객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고, 이를 다른 정보 및 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검증한 경우에는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3.6. 인수·합병시 적용

인수·합병을 통해 취득한 금융기관 등의 고객에 대해서도 고객확인 의무를 수행하여야 함. 다만,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피인수기관 고객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을 생략할 수 있음

- ① 고객확인 및 검증을 수행한 관련기록을 입수하고 피인수기관으로부터 특정 금융거래보고법에 따른 고객확인 의무 수행에 대한 보증을 받은 경우
- ② 상기 고객확인 및 검증 관련 자료에 대한 샘플링테스트(sampling test) 등을 통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이행시기

4.1. 원칙

금융기관 등은 원칙적으로 당해 금융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4.2. 예외적용

1) 금융거래 이후 고객확인 의무 수행이 가능한 경우

금융기관 등은 금융거래의 성질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 금융거래 이후에 고객확인 의무를 수행할 수 있음

※ 금융거래 이후 고객확인 의무 수행이 가능한 경우(특정 금융거래보고 및 감독규정)

- 종업원·학생 등에 대한 일괄적인 계좌개설의 경우 거래당사자의 계좌개설 후 최초 금융거래 시
- 상법 제639조에서 정하는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보험금, 만기환급금, 그 밖의 지급금액을 그에 관한 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때 또는 보험금, 환급금, 그 밖의 지급금액에 관한 청구권이 행사되는 때
- 일회성 금융거래로서 연결된 분할거래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원화의 경우 2천만원, 외화인 경우 미화환산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후 금융기관 창구를 이용한 실명확인대상 금융거래 시

2) 금융기관 등은 고객확인 의무를 금융거래 이후에 수행할 경우에 대비한 위험 관리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위험관리 절차에 대한 예시

- 일괄적인 계좌개설시 계좌개설을 대행하는 법인 등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 수행

4.3. 지속적인 고객확인 의무

1) 금융기관 등은 고객확인 및 검증을 통해 수집된 문서, 데이터 및 정보와 금융기관 등이 파악하고 있는 고객확인정보 및 위험평가 결과를 지속적으로 비교·검토한 후 관리하여야 함

2) 금융기관 등은 고객의 거래행위를 고려한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 의무의 재확인 주기를 내규나 지침 등에 반영하여 운영하여야 함

5. 고객확인 및 검증

5.1. 개요

- 1) 고객확인 및 검증이란 금융기관 등이 고객과 금융거래 시 문서나 질문 등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여 확인(Identify)하는 과정과 고객으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문서·자료·정보 등을 통하여 검증(Verification)하는 과정을 말함
- 2) 금융기관 등은 고객확인 정보를 고객으로부터 문서나 질문 등을 통해 기록하거나 금융기관 소정양식 청구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음
- 3) 금융기관 등은 검증 시 활용되는 문서·자료·정보 등을 내규나 지침 등에 반영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검증 시 고객이 제시한 정보와 금융기관 등이 확인한 정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차이를 확인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함
- 4) 금융기관 등은 고객확인 의무 수행 후 동일 고객과 다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확인 및 검증을 생략할 수 있으나, 기존의 고객 확인정보가 부정확하거나 그 타당성에 의문이 가는 경우 고객확인 의무를 수행하여야 함
- 5) 금융기관 등은 고객에 대한 자금세탁위험이 낮다고 평가될 경우 고객확인 및 검증 시 간소화된 고객확인 의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위험이 높게 평가될 경우에는 거래목적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객정보를 추가로 확인하여야 함

5.2. 개인 (외국인 포함)

1) 고객에 대한 신원확인 및 검증

① 신원확인 정보

- 성명
- 생년월일, 성별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
- 실명번호
- 국적
- 주소 및 연락처
(단,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 실제居所 또는 연락처)

② 신원확인에 대한 검증

○ 검증 범위

- 필수 검증사항을 제외한 신원확인 정보에 대해서는 고객의 위험수준을 고려하여 검증을 생략할 수 있음

※ 필수 검증사항

- 성명
- 생년월일, 성별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
- 실명번호
- 국적
- 주소 및 연락처
(단,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 실제 거주 또는 연락처)

○ 검증 방법

- 금융기관 등은 실명확인증표(1차 문서) 등을 통해 고객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문서적 방법(2차 문서) 또는 비문서적 방법으로 신원정보를 검증하여야 함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위험수준을 고려하여 검증을 생략할 수 있음
 - 고객에 대한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과 같이 사진이 첨부되어 있으면서 필수 검증사항(연락처 제외)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실명확인증표로 고객의 신원정보를 확인한 경우
 - 학생, 군인(나라사랑카드포함), 경찰, 교도소 재소자 등에 대하여 금융실명법의 유권해석에 의한 실명확인서류 원본에 의해 실명확인을 수행한 경우

※ 검증방법 예시

- 문서적 방법 :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이름과 주소가 명시되어 있는 전기/가스/수도요금청구서 또는 영수증 등
- 비문서적 방법 : 1382 전화, 전자정부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운전면허 발급대행기관(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한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 신용정보기관을 통한 확인, 본인 음성 녹취 등

2) 실소유자(Beneficial Owner)에 대한 신원확인 및 검증

개인고객의 경우 기본적으로 고객과 실소유자가 동일하다고 추정하며, 고객과 실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고객의 위험수준을 고려하여 실소유자 여부 확인

※ 실소유자(Beneficial owner)는 궁극적으로 고객을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함

3) 거래목적 및 용도 파악

금융기관 등이 고객 및 실소유자 정보 이외에 금융거래 목적 및 용도를 파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정보의 범위는 다음의 정보를 참조하여 고객, 상품/서비스 등의 자금세탁 위험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차등화 할 수 있음

① 개인인 경우 (개인 사업자 제외)

- 직장명
- 업종
- 직장(회사) 주소(현 근무지) 및 연락처, 부서, 직위 등 직장관련 정보
- 거래자금의 원천 및 출처
- 거래 목적
- 거래 상품 및 거래 종류별 예상거래 횟수 및 금액
- 재산현황 등

② 개인 사업자인 경우

- 회사명
- 업종
- 회사 주사업장 주소 및 연락처
-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체 설립일 등 사업관련 정보
- 거래자금의 원천 및 출처
- 거래 목적
- 거래 상품 및 거래 종류별 예상거래 횟수 및 금액
- 재산현황 등

5.3. 법인 (영리, 비영리, 기타 및 외국단체 포함)

1) 고객에 대한 신원확인 및 검증

① 신원확인 정보

- 법인(단체)명
- 실명번호
- 본점/사업장 주소 및 소재지 (외국법인의 경우 연락 가능한 실제 사업장 소재지)
- 대표자 정보 (개인고객의 신원확인 사항에 준하여 확인)
- 업종, 회사 연락처
- 설립목적 (비영리 법인의 경우)

※ 대표자 정보 확인 방법에 대한 예시

- 회사 관계자를 통해 확인
- 인터넷 검색, 외부 정보제공기관을 통해 확인
- 여권, 자국 신분증 및 운전면허증, 기타 법률적으로 인증 가능한 자료를 통해 확인
- 기타 외부 공시된 자료를 통해 확인

② 신원확인에 대한 검증

○ 검증 범위

- 필수 검증사항을 제외한 신원확인 정보에 대해서는 고객의 위험수준을 고려하여 검증을 생략할 수 있음

※ 필수 검증사항

- 법인(단체)명
- 실명번호
- 본점/사업장 주소 및 소재지 (외국법인의 경우 연락 가능한 실제 사업장 소재지)
- 업종
- 설립목적 (비영리 법인의 경우)

○ 검증 방법

- 금융기관 등은 실명확인증표(1차 문서) 등을 통해 고객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문서적 방법(2차 문서) 또는 비문서적 방법으로 신원정보를 검증하여야 함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위험수준을 고려하여 검증을 생략할 수 있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인 경우
 -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상장회사인 경우

※ 검증방법 예시

- 문서적 방법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 등기부등본, 납세번호증, 영업허가서, 정관,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등
- 비문서적 방법 : 전자공시, 상용 기업정보 제공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확인 등

2) 실소유자(Beneficial Owner)에 대한 신원확인 및 검증

- ① 금융기관 등은 법인고객에 대하여 고객의 위험수준을 고려하여 실소유자에 대한 신원확인을 수행할 수 있음
- ② 실소유자는 일정 지분 이상을 소유한 주주나 주요 임원으로 정의함
 - 금융기관·대기업 :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
 - ※ 대기업의 범위는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하는 “30대 주채무계열”중 상장기업으로 함
 - 중소기업 :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
 - 주요 임원 : 일정지분을 가지고 실질지배력이 있는 자
- ③ 신원정보에 대한 검증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고객의 위험수준을 고려하여 합당한 방법을 정할 수 있음

3) 거래목적 및 용도 파악

금융기관 등이 고객 및 실소유자 정보 이외에 금융거래 목적 및 용도를 파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정보의 범위는 다음의 정보를 참조하여 고객, 상품/서비스 등의 자금세탁 위험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차등화 할 수 있음

※ 법인정보에 대한 예시

- 법인구분 정보(대기업, 중소기업 등), 상장정보(거래소, 코스닥 등), 사업체 설립일, 홈페이지, 이메일 등 회사 관련 기본정보
- 거래자금의 예상 원천 및 출처
- 거래 상품 및 거래 종류별 예상거래 횟수 및 금액
- 회사의 특징이나 그에 대한 세부사항 등 (주요상품/서비스, 시장 점유율, 재무정보, 종업원 수, 사업수행기간, 주요 공급자, 주요 고객, 시장 평판 등)

5.4. 대리인에 대한 확인

금융기관 등은 고객을 대리하여 거래관계를 체결하는 대리인에 대해서도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고객확인 및 검증절차에 준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기록을 전산 또는 문서적 방법 등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함

5.5. 요주의 리스트 필터링

금융기관 등은 계좌개설 및 자금이체 등의 금융거래 완료 전에 다음과 같은 요주의 리스트 정보와 고객정보를 비교·확인하는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함

- ①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금융거래제한대상자 리스트
- ② FATF에서 발표하는 비협조국가 리스트 (non-cooperative countries and territories) 및 FATF Statement
- ③ OFAC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에서 발표하는 SDNs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or Blocked Persons) 리스트
- ④ UN(United Nations)에서 발표하는 테러리스트 (Consolidated List of terrorists)
- ⑤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리스트 등

6. 전신송금

6.1. 개요

- 1) 전신송금이란 고객이 계좌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국내외의 타 금융기관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서비스를 말함

※ 전신송금에 대한 예시

- 계좌에 의한 이체거래
-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원화 또는 외화의 국내외 송금거래

- 2) 전신송금에 대한 주의의무는 100만원(외화의 경우 미화 환산 1천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모든 국내외 전신송금에 대해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과 같은 거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① 현금카드, 직불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에 의한 출금을 위한 이체
- ② 카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에 의한 상품 및 서비스 구입에 대한 지불을 위한 이체
- ③ 신용카드에 의한 현금 또는 대출서비스를 위한 이체
- ④ 금융기관 상호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이체와 결제

※ 금융기관 상호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예시

- 국제 자금이체 중 Swift, Telex를 등을 통한 전문
- 한국은행 금융망을 통한 금융기관간 자금결제 (단, 수취인지정 자금이체와 같이 수취인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제외)

6.2. 자금세탁 위험

전신송금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인하여 자금세탁에 노출될 위험이 높으므로 금융기관 등의 주의의무가 필요함

- ① 국·내외 거래의 신속성
- ② 인터넷 등의 전자적 장치에 대한 접근 용이성
- ③ 자금출처의 은폐 가능성

6.3. 전신송금에 대한 주의의무

금융기관 등은 전신송금 서비스 관련 자금세탁 위험과 공중협박자금조달 위험을 예방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통제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① 송금 금융기관의 주의의무
- ② 중개 금융기관의 주의의무
- ③ 수취 금융기관의 주의의무
- ④ 정보보관 의무

6.3.1. 송금 금융기관의 주의의무

송금 금융기관은 국내외 전신송금과 관련하여 자금이체 건별로 다음과 같은 송금 정보를 보관하고, 중개 또는 수취 금융기관에 동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① 송금자의 성명
- ② 송금자의 계좌번호(계좌번호가 없는 경우 참조(레퍼런스) 가능한 단일번호)
- ③ 국내 송금의 경우 송금자의 고객실명번호 또는 고객 고유번호
- ④ 해외 송금의 경우 송금자의 주소 또는 고객 고유번호(고객동의서 징구시 고객 실명번호)
- ⑤ 송금금액 및 송금일자
- ⑥ 수취 금융기관명
- ⑦ 수취인에 대한 성명, 계좌번호

6.3.2. 중개 금융기관의 주의의무

1) 국내송금인 경우 전신송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를 보관하여야 함

- ① 송·수취 계좌번호
- ② 해당 레퍼런스(금융결제원 금융거래 키번호)

※ 금융결제원에서 전신송금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정보

- ① 각 금융기관 정보(송금/중개/수취 금융기관)
- ② 송·수취인에 대한 성명 및 계좌번호(일회성 금융거래인 경우 고유번호)
- ③ 송금자의 실명번호

- ④ 송금금액 및 송금일자
- ⑤ 거래종류 (입금, 인출 등)

2) 해외송금인 경우 전신송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받아 수취 금융기관에 전달하여야 함. 다만, 송금 금융기관에서 보내지 않은 정보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 의무는 없음

- ① 송금 금융기관에서 전달한 정보
- ② 송금 금융기관명

6.3.3. 수취 금융기관의 주의의무

- 1) 수취 금융기관은 송금 금융기관 또는 중개 금융기관에서 전송한 전신송금 관련 정보를 보관하여야 함
- 2) 수취 금융기관은 상기정보의 일부가 누락된 전신송금 거래의 경우 누락된 정보를 요구하거나 거래를 거절할 수 있음

6.3.4. 정보보관 의무

각 금융기관(송금 금융기관, 중개 금융기관, 수취 금융기관)은 전신송금 관련 송금 정보를 금융거래 완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함

6.4. 국내 전신송금에 대한 적용

국내 전신송금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시 시행

7. 비대면 거래

금융기관 등은 비대면 거래 관련 특정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신규 거래관계 수립 및 지속적 고객확인 의무 수행 시 적용하여야 함

※ 비대면 거래에 대한 예시

- 인터넷 등과 같은 전자수단에 의한 거래(인터넷 뱅킹, 인터넷 증권거래 등)
- ATM 서비스 및 텔레뱅킹 서비스 등

8. 제3자를 활용한 고객확인 의무

8.1. 개요

금융기관 등은 고객확인 및 검증의무를 제3자가 대신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

8.2. 자금세탁 위험

금융기관 등은 제3자를 활용한 고객확인 의무 수행 시 자금세탁에 노출될 위험이 높으므로 주의의무가 필요함

8.3. 제3자를 활용한 고객확인 시 주의의무

금융기관 등은 제3자를 활용한 고객확인 의무 수행 시 자금세탁위험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와 통제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8.4. 제3자의 고객확인 의무 이행능력 확인

1) 금융기관 등은 제3자의 고객확인 의무 이행 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3자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외에 다음의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여야 함

- ① 고객확인 의무 위탁 계약체결 이전에 결의서 등을 통하여 제3자(중개인 등)의 자금세탁방지 이행정도
- ② 주요주주, 경영진 및 이사회 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등 내용

2) 금융기관 등은 제3자의 위험수준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할 수 있음

- ① 제3자가 FATF 회원국의 은행이거나 국제적인 지역개발은행 및 무역 은행(EBRD, IMF, WB 등)인 경우
- ② 은행·증권·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금융기관인 경우

8.5. 제3자와 고객확인 의무 위탁 계약 시 주의의무

1) 금융기관 등은 제3자와 고객확인 의무 위탁 계약 시 다음사항을 계약에 포함하여야 함

- ① 제3자는 고객확인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이 지정한 정보와 고객확인 및 검증 수행 시 획득한 자료를 금융기관 등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할 의무

- 2) 금융기관 등은 제3자와 고객확인 의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리자의 검토와 승인을 득하여야 함
- 3) 금융기관 등은 제3자가 수행한 고객확인 및 검증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고객확인 의무를 추가로 수행하여야 함

9. 고객확인 및 검증거절시 조치

금융기관 등은 고객 확인 및 검증이 충분히 수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동 고객에 대한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10. 고객공지의무

- 1) 금융기관 등은 고객확인 및 검증을 위한 고객의 정보와 이를 검증하기 위한 문서, 자료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객에게 공지하여야 함
- 2) 공지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① 고객확인 및 검증에 대한 법적근거 등
 - ② 고객확인 및 검증을 위한 정보, 문서, 자료 등
 - ③ 고객이 확인 정보제출을 거부하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금융기관의 조치

11. 해외지점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

- 1) 해외지점의 모든 금융거래는 원칙적으로 국내지점과 동일한 고객확인 의무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 2) 해외지점이 현지법령 등에 의해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금융기관 등은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II. 주요 고위험군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

1. 환거래계약(Correspondent banking relationship)

1.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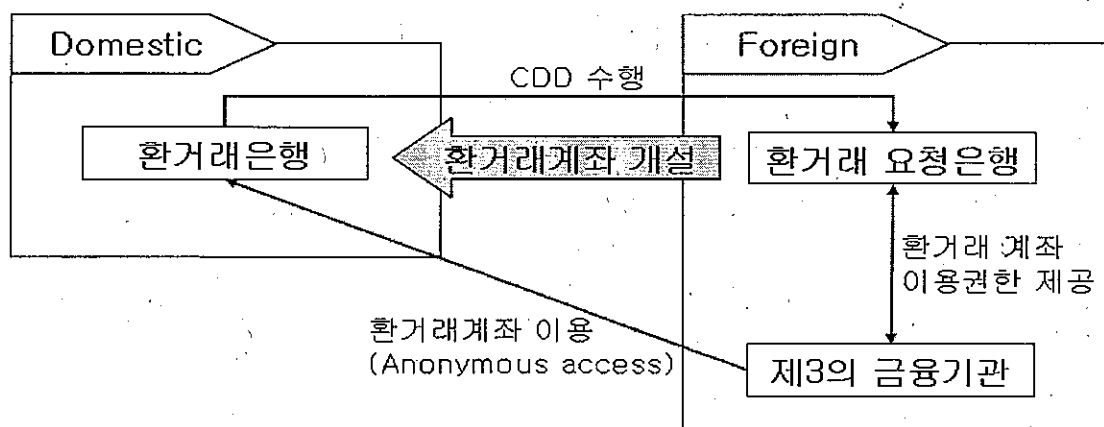
환거래 계약이란 국제간 환거래 은행(Respondent Bank)과 환거래 요청은행(Correspondent bank)이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과 수수를 위해 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말함

1.2. 자금세탁 위험

환거래 계약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취약점으로 인하여 자금세탁에 이용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주의의무가 필요함

- ① 환거래 요청은행의 고객 정보 및 거래목적 등에 대한 확인의 어려움
- ② 환거래 요청은행과 동 은행 소재국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수행정도에 대한 정보 부족
- ③ 중복계좌(Nested account)를 이용한 제3의 금융기관의 익명거래 가능성
- ④ 대리지불계좌(Payable-through account)를 통한 직접적인 금융서비스 활용 가능성

※ 중복계좌란 환거래 요청은행이 환거래은행에 개설한 환거래계좌의 이용권한을 제3의 금융기관에 부여하면, 제3의 금융기관이 익명으로 환거래은행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동 계좌(환거래 요청은행 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함



- ※ 대리지불계좌란 환거래계좌를 보유한 환거래 요청은행(master account holder)이 종속계좌 소유자(sub-account holder)로 불리는 자신의 고객에게 환거래계좌에 직접 접속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함
- 특정 국가에 환거래계좌를 보유한 외국은행이 동 국가내에서 계좌개설이 어려운 자기 고객에게 자신(외국은행)의 수표(Check)를 교부하여 동 국가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자금결제는 외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sub-Account Holder)의 계좌를 통해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이 경우 계좌개설은행은 하위 예금주(sub-Account Holder)에 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동 환거래계좌가 자금세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
 - 미국의 경우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USA PATRIOT(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등 관련 법률에서 payable-through account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계좌개설은행은 환거래계좌 예금주인 외국은행을 통해 미국내 계좌개설 시 고객주의의무 수행에 필요한 하위 예금주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이후에 payable-through account의 사용을 허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1.3. 환거래 계약시 주의의무

환거래 계약시 환거래 서비스와 관련된 자금세탁 위험을 예방하고,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 및 통제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① 환거래 요청은행에 대한 고객확인 및 검증의무
- ② 환거래 계약에 대한 관리자의 검토 및 승인

1.3.1. 환거래 요청은행에 대한 고객확인 및 검증의무

- 1) 환거래 은행은 계약체결 이전에 환거래 요청은행의 실체, 소유권 및 지배구조, 주요 제공서비스 및 고객유형, 중복계좌 존재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IV. 고객확인 의무”에서 요구하는 고객확인 및 검증의무 이외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여야 함

- ① 질의서 등을 통하여 환거래 요청은행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이행정도 확인
- ② 계약시점의 주요 주주, 경영진 및 이사회 의 변동사항
- ③ 정치적 주요인물과 연관된 경우, 정치적 주요인물의 요청은행에서의 역할 조사

- 2) 예치환거래은행의 경우에는 환거래 요청은행의 위험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한 고객확인 및 검증을 수행할 수 있음

※ 간소화된 고객확인 및 검증의무 수행에 대한 예시

- 환거래 요청은행이 FATF 회원국의 은행이거나 국제적인 지역개발은행 및 무역은행(EBRD, IMF, WB 등)인 경우

- 3) 환거래 요청은행과 테스트 키 또는 스위프트 키 교환만으로 이루어지는 무예치환거래은행의 경우 환거래 요청은행의 위험수준을 고려하여 간소화된 고객확인을 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생략할 수 있음

1.3.2. 환거래 계약에 대한 관리자의 검토 및 승인

- 1) 환거래 은행은 위장은행과 환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지속해서는 안 됨

※ 위장은행 판단을 위한 예시

- 금융활동 승인을 받은 지역에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
- 한명 또는 그 이상의 인원이 Full-Time으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
- 영업기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 금융활동을 인가한 감독당국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 단,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하더라도 FATF 비협조국가가 아닌 국가(지역)에서 영업면허를 취득하고 당해 국가(지역)의 감독당국에 의해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이 직간접적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제외

- 2) 환거래 요청은행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환거래 계약에 포함하여야 함

- ① 해당은행의 계좌가 위장은행, 위장회사의 금융기관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
- ② 중복계좌의 경우, 환거래 요청은행이 하위 환거래 요청은행의 자금세탁방지 활동을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
- ③ 특히, 대리지불계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환거래 계좌를 지불계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환거래 요청은행이 자신의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 의무 수행
 - 또한, 환거래 은행의 요청시 환거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를 수행한 고객 정보를 제공

- 3) 금융기관 등은 신규 환거래 계약 체결 시 환거래 요청은행(상대은행)이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한 적절한 통제절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환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하게 환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임원 등 고위 경영진의 검토와 승인을 득하여야 함
- 4) 환거래 은행은 환거래 요청은행에 대해 환거래 계약체결 시 또는 지속적인 고객 확인의무 수행 시 충분한 고객확인 및 검증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계약해지를 고려할 수 있음

2. 고액자산관리(Wealth Management)

2.1. 개요

- 1) 고액자산관리(Wealth Management)는 부유층(High Net Worth)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자문을 비롯한 법률, 세무 컨설팅 등 종합적인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 2) 금융기관 등은 각 기관의 자금세탁 위험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의 특정 직원에 의해 전담서비스를 제공받는 주요 관리고객(주거래 고객 또는 PB고객 등) 중 자체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자금세탁위험이 있는 고액자산관리 고객 대상을 선정한 후 동 기준을 내규나 지침 등에 반영하여 관리하여야 함

※ 자체선정기준 예시

-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고객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 수행
- 실물자산을 포함한 100억원 이상 고객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 수행

2.2. 자금세탁 위험

고액자산관리는 다음과 같은 취약점으로 인해 자금세탁에 이용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금융기관 등의 주의의무가 필요함

- ① 주요 고객층이 주로 신분노출을 원하지 않는 고액자산가, 정치적 주요인물 등으로 구성
- ② 고객에 대한 비밀보장 문화 형성
- ③ 고객과의 밀접한 유대관계 형성과 고객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전담직원 (Relationship Management)의 의식
- ④ 고객에 대한 과도한 보호의식으로 인한 내부통제 미흡
- ⑤ 수익중심의 전담직원 보상체계

2.3. 고액자산관리에 대한 주의의무

금융기관 등은 서비스와 관련된 자금세탁 위험을 예방하고, 완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 및 통제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① 고액자산관리 고객에 대한 확인 및 검증
- ② 고액자산관리 고객에 대한 금융거래 모니터링

2.3.1. 고액자산관리 고객에 대한 확인 및 검증

- 1) 금융기관 등은 “IV. 고객확인 의무”에서 요구하는 고객확인 및 검증의무 이외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여야 함

- ① 계좌개설시 사용된 자금의 원천과 출처
- ② 계좌개설 목적
- ③ 계좌의 예상거래 횟수 및 금액
- ④ 추정 자산규모

- 2) 금융기관은 고액자산관리 고객에 대하여 관리자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함

- 계좌 신규개설 시
- 고액자산관리 대상 고객으로 신규 편입 시

2.3.2. 고액자산관리 고객에 대한 금융거래 모니터링

- 1) 금융기관 등은 고액자산관리 고객에 대한 금융거래 모니터링을 위해 효과적인 내부통제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업데이트하여야 함
- 2)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고객과의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위치에 있는 상위 책임자에 의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여야 함

3.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Politically Exposed Persons)

3.1. 개요

- 1)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이란 현재 또는 과거(일반적으로 사임 후 1년 이내)에 외국에서 정치·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 그들의 가족 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말함
- 2) 정치·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말함
 - ① 외국정부의 행정, 사법, 국방, 기타 정부기관의 고위관리자
 - ② 주요 외국 정당의 고위관리
 - ③ 외국 국영기업의 경영자
 - ④ 왕족 및 귀족들
 - ⑤ 종교계 지도자들
 - ⑥ 상기 정치적 주요인물과 관련되어 있는 회사나 사업체
- 3) 가족 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물이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말함
 - ① “가족”은 일반적으로 정치적 주요인물의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혈연 또는 결혼에 의한 친인척 등을 의미함
 - ②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물”은 정치적 주요인물과 공식적으로 특별한 금전 거래를 수행하는 사람 등을 의미함

3.2. 자금세탁 위험

정치적 주요인물은 부패, 뇌물 등과 관련하여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기관 등의 주의의무가 필요함

3.3. 정치적 주요인물에 대한 주의의무

- 1) 금융기관 등은 자금세탁 위험을 예방하고, 완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 및 통제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① 정치적 주요인물에 대한 고객확인 및 검증
 - ② 정치적 주요인물에 대한 모니터링

3.3.1. 정치적 주요인물에 대한 고객확인 및 검증

- 1) 금융기관 등은 고객과 계좌 신규개설시 정치적 주요인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2) 금융기관 등은 고객이 정치적 주요인물로 확인된 경우 “IV. 고객확인 의무”에서 요구하는 고객확인 및 검증의무 이외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임원 등 고위경영진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함
 - ⊕ 계좌에 대한 거래권한을 가지고 있는 가족 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물에 대한 신원정보
 - ⊗ 정치적 주요인물이 관여되어 있는 법인에 대한 신원정보

3.3.2. 정치적 주요인물에 대한 모니터링

금융기관 등은 거래고객에 대해서 정치적 주요인물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하며, 정치적 주요인물로 확인된 경우에는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를 수행하여야 함

4.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sations)

4.1. 개요

- 1) 비영리단체는 법적형태에 관계없이 학술, 종교, 자선, 문화, 교육, 사회사업 등의 목적으로 “기금 등”을 모집 또는 사용하는 단체를 말함
- 2) “기금 등”의 범위는 현금, 여행자 수표, 자기앞 수표, 우편환, 환어음 등 형태와 수단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자산을 의미함

4.2. 자금세탁 위험

비영리단체는 다음과 같은 취약점으로 인하여 자금세탁에 이용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금융기관 등의 주의의무가 필요함

- ① 영리법인에 비해 비교적 설립이 간편하고, 설립목적의 공공성 등에 의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감독기준 적용
- ② 기부금 등 대부분의 기금은 현금의 형태
- ③ 국제적 조직체계를 갖춘 비영리단체의 경우 국내외활동 및 금융거래 시 직·간접적으로 테러자금조달에 이용될 위험이 높음

4.3. 비영리단체에 대한 주의의무

금융기관 등은 비영리단체와 관련된 자금세탁 위험을 예방하고,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 및 통제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① 비영리단체에 대한 고객확인 및 검증
- ② 비영리단체에 대한 모니터링

4.3.1. 비영리단체에 대한 고객확인 및 검증

- 1) 금융기관 등은 고객이 비영리단체인 경우 “IV. 고객확인 의무”에서 요구하는 고객확인 및 검증의무 이외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상위 책임자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함

- ① 비영리단체 설립 목적
- ② 주요 활동지역
- ③ 조직체계(구조)
- ④ 다른 비영리기관과의 제휴 현황
- ⑤ 기부관련 정보
 - 주요 기부자 정보, 주요 수혜자 정보, 모금/운영/집행자금 정보

2)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간소화된 절차를 수행할 수 있음

- 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단체
- ② UN산하의 국제자선단체 (예, 유니세프 등)
- ③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에 의해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 수리된 비영리단체
- ④ 중앙의 본부와 지회 등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조직화 되어있는 종교단체
- ⑤ 기타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비영리 단체

4.3.2. 비영리단체에 대한 모니터링

금융기관 등은 거래고객이 비영리단체인 경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하며, 위험이 높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를 수행하여야 함

5. FATF 비협조 국가(Non-Cooperative Countries and Territories)

5.1. 개요

1) FATF 비협조 국가란 FATF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이행하는 국가를 말함

① FATF 비협조 국가 리스트

② FATF Statement에서 FATF 권고사항 이행 취약국가로 발표한 국가 리스트

5.2. 자금세탁 위험

FATF 비협조 국가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부재 또는 미흡 등으로 인하여 FATF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국가에 비하여 자금세탁에 노출될 위험이 높음

5.3. FATF 비협조 국가에 대한 주의의무

금융기관 등은 FATF 비협조 국가의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함

5.3.1. FATF 비협조 국가에 대한 모니터링

금융기관 등은 FATF 비협조 국가의 자금세탁 위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평가·관리하여야 함

6. 공중협박자금조달 고객

6.1. 개요

1) 공중협박자금조달 고객이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말함

- ① 금융위원회가 공중협박자금조달과 관련하여 고시하는 금융거래제한대상자
- ② UN(United Nations)에서 발표하는 테러리스트 (Consolidated List of terrorists)

2) 공중협박자금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외국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공중에게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등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모집·제공되거나 운반·보관된 자금이나 재산을 말함

6.2. 자금세탁 위험

공중협박자금조달 고객은 현재 또는 과거에 직·간접적으로 테러를 수행하거나 공중협박자금을 조달한 경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금융기관 등의 주의의무가 필요함

6.3. 공중협박자금조달 고객에 대한 주의의무

금융기관 등은 공중협박자금조달 고객과 관련된 자금세탁 위험을 예방하고,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 및 통제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① 공중협박자금조달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 및 검증
- ② 공중협박자금조달 고객에 대한 모니터링

6.3.1. 공중협박자금조달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 및 검증

1)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금융거래제한대상자가 금융기관 등(「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 등을 말함)과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영수(領收)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 가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함

- 2) 금융기관 등은 “IV. 고객확인 의무”에서 요구하는 강화된 고객확인 및 검증의무를 수행하여야 함

6.3.2. 공중협박자금조달 고객에 대한 금융거래 모니터링

금융기관 등은 공중협박자금조달 고객에 대한 금융거래 모니터링을 위해 효과적인 내부통제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업데이트하여야 함

III. 위험기반 거래 모니터링 체계

1. 개요

- 1) 금융기관 등은 고객의 거래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함
- 2)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① 고객의 거래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 ② 모니터링 결과 분석 및 보고
 - ③ 분석자료 보존절차

2. 지속적인 모니터링

- 1) 지속적인 모니터링 절차는 각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정책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계·운영하여야 함
- 2) 금융기관 등은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또는 거래패턴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취할 수 있음
 - ① 고객의 프로파일정보 또는 유사한 고객그룹의 프로파일정보와 고객의 거래 이력 비교·검토
 - ② 과거 자금세탁 사례의 정형화를 통한 고객 거래정보와의 비교·검토
 - ③ 고객 거래정보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도 측정 및 거래내역 평가
 - ④ 고객, 계좌 및 거래정보의 연계를 통한 금융거래 패턴 분석

※ 고위험 거래유형에 대한 예시

- 3천만원을 초과하는 미성년자와의 거래
- 법인 종업원이나 가족관계가 아닌 대리인에 의한 1억원 이상의 계좌개설
- 10억원 이상의 거래로서 직업이나 소득을 명확히 밝히지 않거나, 직업·소득 등에 비추어 그 실질 소유주가 아닌 것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
- 1억원 이상의 타인신탁거래
- 1인이 동시에 5개 이상 요구불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 1명의 대리인이 동시에 5인 이상의 요구불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 1억원 이상의 현금거래 등

3. 모니터링 결과 분석 및 보고

금융기관 등은 모니터링을 통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를 분석하고 보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갖추어야 함

- ①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거래를 분석할 수 있는 직원을 담당자로 지정
- ② 과거 금융거래, 신용정보, 기타 정보 등을 활용한 거래분석
- ③ 분석과정에서 확인된 고객의 최신 정보 업데이트
- ④ 분석결과 의심스러운 거래로 판단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
- ⑤ 분석완료 후 유사거래의 재발 방지를 위한 분석내용 정보화

4. 분석자료 보존절차

금융기관 등은 모니터링 결과 및 내·외부 보고 관련 자료를 'VIII. 관련 자료 보존 체계'에 따라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함

IV. 보고체계의 수립(STR, CTR)

금융기관 등은 의심스러운 거래를 인지하거나 고액현금거래가 발생한 후 이를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는 내부보고체계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외부보고체계로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함.

1. 내부보고체계의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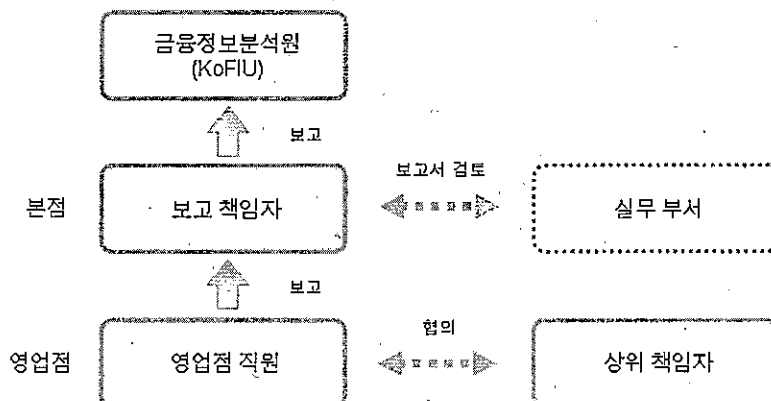
1.1. 보고체계 형태

- 1) 금융기관 등은 아래의 3가지 보고체계 형태를 참조하여 각 기관의 실정에 맞도록 내부보고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 2) 내부보고체계 수립 시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 작성자는 보고제외대상 심사업무와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대한 보고업무를 담당하는 보고책임자가 될 수 없음. 단, 소규모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형태 3”으로 할 수 있음

<참고 6> 내부보고체계 형태

형태 1 2단계로 운용

- 영업점 직원이 상위책임자(지점장 포함)와 협의를 거쳐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책임자에게 보고
 - 보고책임자가 이를 조사·검토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
 - 상위책임자와의 협의는 선택사항으로 보고사안에 따라 생략 가능



* 실선(—)은 필요업무이며 점선(---)은 선택 가능한 업무(이하 동일)

○ 장 · 단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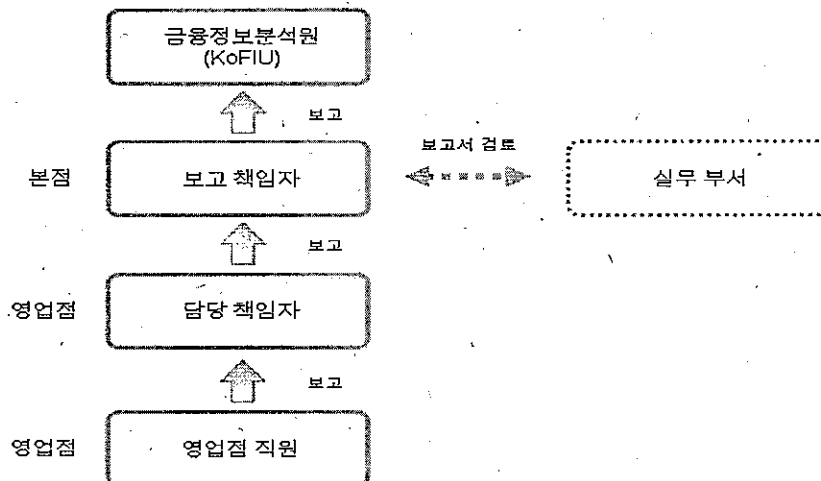
장 점	단 점
○보고체계의 간소화로 인력운용 간편 ○최초 인지자에 의한 신속한 보고로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제도 시행 취지에 적합	○영업점 직원의 업무부담 ○영업점 직원의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인한 보고책임자의 업무부담 가중

○ 운용 대상 : 중 · 소규모 금융기관 등에 적합

형태 2

3단계로 운용

- 영업점에 “담당책임자”를 지정하고 영업점 직원이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책임자에게 보고
 - 담당책임자는 이를 점검하여 보고책임자에게 보고
 - 보고책임자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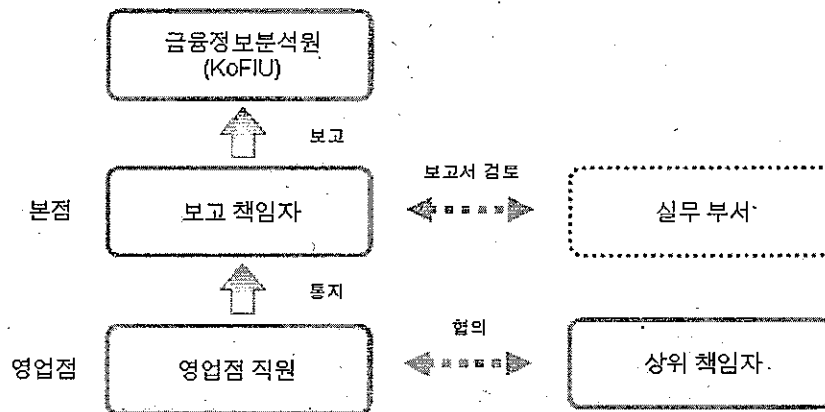
○ 장 · 단점

장 점	단 점
○영업점 직원의 보고 부담 경감 ○보고서 내용의 정확성 제고 ○보고책임자의 업무 경감	○인력 운용상의 부담 및 업무량 증가 ○영업점 담당책임자의 점검 등으로 인하여 STR 보고의 신속성이 저해 될 가능성

○ 운용대상 : 대규모 금융기관 등에 적합

형태 3 1단계로 운용

- 영업점 직원이 의심스러운 거래 발생 사실을 보고책임자에게 통지(예 : 전화 통지)
 - 보고책임자가 의심스러운 거래내용을 검토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정보 분석원장에게 보고



○ 장 · 단점

장 점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체계의 최소화로 인력운용 간편 ○ 신속한 내부보고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책임자의 업무부담 가중 ○ 영업점에서의 검토 등 여과장치가 없어 보고서 내용의 정확성 저하 가능성

- 운용대상 : 소규모 금융기관 등에서 운용 가능하며, 가급적 2단계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 함

2. 외부보고체계의 수립

2.1.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

2.1.1. 보고대상

1) 의심스러운 거래의 정의

- ①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거래
- ② 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거래

2) 의심스러운 거래보고대상 구분

① 의무보고 대상

- 의심스러운 거래 중 금융거래액이 보고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 원화거래 2천만원
 -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국환거래 등의 경우, 미화 환산 1만불 상당액
- 상기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보고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그 합계액이 보고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 범죄수익규제법에 의한 범죄수익 수수 또는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에 의한 공중협박자금 수수 사실을 알게 되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나 그에 따른 지급·영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② 임의보고대상

- 의심스러운 거래 중 금융거래액이 보고기준금액(분할거래의 경우는 합계액 기준) 미만인 경우에도 의심스러운 거래로 보고 가능
- 금융거래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의심스러운 거래로 보고 가능

③ 보고기준금액 적용방법

- 액면금액과 실제거래금액이 다른 경우 실제거래금액 기준
- 금융기관 등이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고기준금액 미만으로 간주하여 의무보고대상에서 제외
- 원화와 외화가 혼합된 거래인 경우 각각의 거래로 구분하여 보고기준금액 적용
- 미화 이외의 외국통화의 경우 현찰매매율 또는 전신환매매율 등 실제 거래된 환율을 적용하여 미화로 환산

※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예시

- 대여금고
- 청구상담 후 금융거래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거래상대방의 신분확인이 가능한 경우 등

2.1.2. 의심스러운 거래 판단기준

1)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의 판단기준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다양하고 수시로 변하고 있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는 어려우므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은 고객확인 의무 이행을 통해 확인·검증된 고객의 신원사항 또는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거래목적과 금융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고객의 직업, 주소, 소득, 평소 거래상황, 사업내용 등을 감안하여 업무지식이나 전문성, 경험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예시

- 직업 및 사업내용 등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는 고객이 다수의 타인명의의 계좌를 소지하고, 거액의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 미성년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서 거액의 금융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 평소 평이한 금융거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급여생활자,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등의 계좌에서 거액의 금융거래가 발생하고, 자금의 실제당사자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심되는 경우
- 금융거래자의 요청에 의하여 현금거래로 처리하는 등 평소 금융거래 형태와 상이한 거래로서 거액의 금융거래 또는 분할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2) 불법재산 수수 등의 전제가 되는 구체적인 특정한 범죄의 존재 사실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으며, 당해 거래가 불법재산 수수 또는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보고대상으로 판단함

-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 보고대상인 불법재산 수수,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 자금조달행위는 수사기관 등에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범죄관련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영업점에서는 당해 거래가 불법재산 수수, 자금세탁행위 등으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는 막연한 추측보다 고객확인 의무 이행을 통해 확보된 당해 고객의 정보 및 거래내용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판단

3) 분할거래에 대한 판단

- 분할거래란 의심스러운 거래 의무보고대상이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거래 금액을 다양한 방법으로 보고기준금액 미만으로 나누어 거래하는 것을 말함
- 분할거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는 곤란하나 금융거래 상대방의 수, 거래횟수, 거래기간, 거래 점포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거래가 보고대상 금융거래인지를 판단하여야 함

※ 분할거래 예시

- 금융거래 상대방이 다수의 점포(계좌)를 이용하거나 여러 날에 걸쳐 금액을 분할하여 거래
- 다수인이 금융거래 상대방이 되어 금액을 분할하여 거래

4) 고액현금거래보고 및 고객확인 의무 관련

-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현금거래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심스러운 거래로 보고하여야 함

※ 예시

- 동일인이 관리하는 다수의 계좌(본인계좌 및 타인계좌 포함)에서 현금의 지급 및 영수를 하고, 그 각각의 합산액이 3천만원 이상(1일)인 경우
- 동일인이 일자를 달리하여 현금의 지급 및 영수를 하고, 그 각각의 합산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 금융기관 등이 고객확인 의무 이행을 위해 요청하는 정보에 대해 고객이 제공을 거부하거나, 수집한 정보의 검토결과 고객의 금융거래가 정상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심스러운 거래로 보고하여야 함

2.1.3. 보고업무

- 1) 의심스러운 거래보고는 금융기관 등의 보고책임자를 경유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금융기관 직원은 당해 거래가 불법재산 수수 또는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로 의심되면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보고책임자가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보고여부를 최종 판단
- 2)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에 대한 세부 사항은 ‘붙임4.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서식 및 작성방법’ 참조

2.1.4. 보고시기

- 1) 보고책임자는 당해 금융거래가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2) “지체없이 보고”란 보고책임자가 영업점 보고내용 및 인지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심스러운 거래로 판단될 때, 시간적으로 지체함이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함
- 3) 영업점의 경우 해당 거래가 의심스러운 거래로 판단될 때 시간적으로 지체함이 없이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2.1.5. 보고방법

- 1) 보고책임자 보고

온라인 보고를 우선하되, 온라인 보고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금융기관 등은 문서 또는 플로피디스크로 봉인하여 보고하고,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FAX로 우선 보고하고 추후 보완이 가능함

① 온라인 보고

- 첨부서류도 가능한 전자화하여 보고
- 전자화가 곤란한 첨부서류는 문서 또는 플로피디스크 등의 형태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에 의해 제출할 수 있음
- 금융정보분석원은 온라인 보고를 접수한 경우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접수 사실 통보

② 문서, 플로피디스크 보고

온라인 보고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금융기관 등은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 있는 보고서 서식을 다운받아 보고하되 작성기관 확인을 위해 공문(서면) 첨부

③ 전화 또는 FAX 보고

- 금융기관 등은 긴급한 보고시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 여부를 확인하고, 보고 받은 공무원의 성명, 보고일자 및 보고내용 등을 기록 보존하며, 추후 온라인 등으로 재보고
- FAX 보고는 수신 상대방의 직위, 성명을 미리 확인하고 상대방이 대기한 상태에서 발송한 후 수신여부를 확인하고, 발송자 및 수신자에 대한 기록 유지
- 전화보고의 경우도 발신자 및 수신자에 대한 기록유지

2) 보고서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은 금융정보분석원 온라인 보고시스템으로 제출
- 우편제출은 보고서를 봉투로 봉인하여 겉봉에 「수신 :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기재하고 보고내용의 보안 유지(“秘” 등 표시)
- 직접 제출도 보고내용의 보안유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봉투를 봉인

3) 영업점 보고자 보고방법

- 금융정보분석원 온라인 보고시스템 또는 금융기관 내부전산시스템으로 보고
- 기타 영업점 직원이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는 방법은 보안이 유지되는 방법으로 보고

2.2. 고액현금거래보고 (Currency Transaction Report, CTR)

2.2.1. 개요

- 1)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
- 2) 금융기관 등 임직원의 판단에 의존하는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효과 제고

2.2.2. 보고대상 및 보고시기

1) 보고대상

- 보고대상은 현금(외국통화 제외)의 지급 또는 영수거래임
-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란 금융기관과 고객 사이에 이루어지는 현금의 물리적 이동을 의미
- 금융기관 창구거래 뿐만 아니라 현금자동입출금기상의 현금입출금, 야간금고에서의 현금입금 등도 보고대상에 포함

※ 보고대상에 대한 예시

거래유형	거래내역 예시	비고
계좌거래	금융기관의 창구 또는 자동화기기 등을 이용하여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거나 입금하는 경우	각각 현금의 지급·영수
비계좌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송금하는 경우	현금의 영수
환전거래	외화를 한국은행권으로 환전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각각 현금의 지급·영수
유가증권거래	수표·어음 등 유가증권을 제시하여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현금의 지급·영수
계좌+비계좌거래	계좌에서 현금 출금 또는 예금을 해지하여, 현금으로 무통장입금 하거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는 경우	각각 현금의 지급·영수

※ CTR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의심스러운 거래로 보고하여야 함

2) CTR보고 기준금액의 단계적 하향 조정(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부칙 제2조)
5천만원(2006.1.18) → 3천만원(2008.1.1) → 2천만원(2010.1.1)

3) 기준금액 산정 방법

① 보고 금융기관 등에서 동일인이 1거래일 동안 지급하거나 영수한 금액을 각각 별도 합산하여 산정

- “동일인”이라 함은 금융실명법 제2조제4호의 실지명의(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등)가 동일한 경우를 말함
- “외국인”의 경우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각 실명증표별로 구분 합산하여 기준금액을 산정함

② 기준금액 산정시 제외되는 금융거래는 다음과 같음

- 100만원 이하의 원화 송금(무통장입금 포함) 금액
- 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매입·매각 금액
- 금융실명법 제3조제2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공과금 등을 수납한 금액
- 법원공탁금, 정부·법원보관금, 송달료를 지출한 금액
- 은행지로장표에 의하여 수납한 금액
- 100만원 이하의 선불카드 거래금액

※ 기준금액 산정에 대한 예시

거래 사례	보고 여부	비고
甲은행에서 A가 본인 명의의 2개의 계좌를 이용, 오전에 a계좌에서 현금 1천만원, 오후에 b계좌에서 현금 2천만원을 각각 인출한 경우	해당됨	지급액 3천만원
甲은행에서 A가 1개의 계좌를 이용, 오전에 현금 2천만원 입금, 오후에 현금 1천만원 출금한 경우	해당안됨	지급액 1천만원, 영수액 2천만원
甲은행에서 A가 오전에 본인 계좌에 현금 2천만원을 입금하고, 오후에 같은 은행에서 현금 1천만원을 무통장입금으로 乙은행의 B계좌에 송금한 경우	해당됨	영수액 3천만원
甲은행에서 A가 오전에 본인 계좌에 2,900만원을 현금 입금하고, 오후에는 B에게 현금 1백만원을 송금한 경우	해당안됨	영수액 2,900만원 (*100만원 송금은 합산 제외)
乙은행에서 B가 1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오전에 2,900만원을 현금 입금하고, 오후에 현금 1백만원을 입금하는 경우	해당됨	영수액 3천만원

3) 보고 제외 대상

- 다른 금융기관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과의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
-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의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

※ 보고제외 대상(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에 대한 구체적 자료는 “붙임 6. CTR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공공단체의 범위” 참조

4) 보고 시기

- 금융거래 발생 후 30일 이내 보고

2.2.3. 보고의무의 주체와 거래상대방

현금의 지급·영수를 수반하는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인 금융기관 등(위탁관계에 의한 거래의 경우에는 위탁자)과 그 거래상대방인 고객이 보고기관 및 거래상대방입

구 분	보고주체 금융기관	거래상대방
통장거래	계좌 개설 금융기관	계좌 명의인
무통장송금거래	송금요청 받은 금융기관	송금 의뢰인
자동화기기 입출금거래 (타행카드 이용거래 포함)	계좌보유 금융기관	계좌 명의인
자기앞수표 지급거래	자기앞수표 발행은행	자기앞수표 지급 신청인

※ 보고의무 주체와 거래상대방에 대한 예시

거래사례	보고기관/상대방	비 고
甲은행의 B명의 계좌에 B의 통장을 소지한 A가 3천만원을 입금한 경우	- 계좌주인 B를 보고 *다만, 금융기관이 A의 입금 행위가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A에 대하여 별도로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가능	- A가 B의 부탁으로 심부름을 한 경우 등 - A가 범죄목적으로 B명의의 계좌를 양도·대여받아 거래하는 소위 대표통장의 경우
A가 甲은행을 방문, 乙은행의 B명의계좌로 무통장송금하는 경우	甲은행이 A를 보고	

A(또는 A의 대리인)가 甲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乙은행의 A계좌에서 입출금하는 경우	乙은행이 A를 보고	계좌개설 은행인 乙은행이 甲은행의 기기를 이용한 것일 뿐, 실제 금융거래는 乙은행과 A사이에 이루어진 것임
A가 甲은행에서 乙은행 발행의 자기앞수표를 '자기앞수표 실시간 정보교환 규약'에 따라 현금으로 교환하는 경우	乙은행이 A를 보고	乙은행이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이자 지급인으로서 甲은행에게 자기앞수표의 현금 지급을 위탁한 것이므로 금융거래의 당사자는 乙은행임

2.2.4. 보고내용

고액현금거래보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붙임 5. 고액현금거래보고 서식 및 작성방법' 참조

2.2.5. 보고방법

1) 보고책임자 보고

온라인 보고를 우선하되, 온라인 보고체제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금융기관 등은 문서 또는 플로피디스크로 봉인하여 보고

2) 보고서 제출방법

- 온라인보고는 금융정보분석원 온라인 보고시스템으로 제출
- 우편제출은 보고서를 봉투로 봉인하여 겉봉에 「수신 :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기재하고 보고내용의 보안 유지("秘" 등 표시)
- 직접 제출도 보고내용의 보안유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봉투를 봉인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와 고액현금거래보고의 비교>

구 분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고액현금거래보고 (Currency Transaction Report)
제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기관은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금융거래 내용을 FIU에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기관은 자금세탁 여부에 관계 없이 기준금액 이상 현금거래 내용을 FIU에 보고
법령상 보고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거나 자금 세탁 의심이 있는 금융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액 현금의 지급, 영수거래 CTR보고회피 목적 분할거래
제외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금융기관과의 거래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와의 거래 공과금 등의 수납·지출거래 등 외국통화 거래
기준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화 2천만원 이상 외화 1만불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화 3천만원 이상 (2010년 ~ : 2천만원)
판단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기관 종사자의 업무지식, 전문성, 경험 등을 바탕으로 의심되는 거래 정황을 고려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률적인 객관적 기준(금액)에 따라 보고
보고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심스러운 거래로 판단되는 때로부터 지체없이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거래 발생후 30일 이내 보고
보고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On-line 보고 우선 문서, 플로피디스크 등으로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On-line 보고 우선 문서, 플로피디스크 등으로 보고
보고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액현금거래 보고서, 다만, CTR 보고회피 목적 분할거래는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로 보고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기관 직원의 전문성 활용 정확도가 높고 활용도가 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금세탁행위 예방효과 분석 자료로 참고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기관 의존도가 높음 참고유형 제시 등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확도가 낮음 금융기관의 추가비용 발생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FATF 권고사항중 고객확인 의무와 함께 AML/CFT의 핵심적인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FATF의 선택적 권고사항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도입·운용

V. 관련 자료 보존체계

1. 보존의무

- 1) 금융기관 등은 고객확인 및 검증자료, 금융거래기록,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를 포함한 내·외부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등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함
 - ① 고객확인 및 검증 관련 자료 등은 고객과의 거래관계 종료 후 5년 이상 보존
 - ※ 거래관계 종료시점은 다음과 같음
 - 일회성 거래인 경우 개별거래 종료 시점
 - 계좌거래인 경우 계좌 해지 시점
 - ② 고객과의 금융거래 기록은 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보존
 - ③ 내·외부 보고 관련 자료는 보고일로부터 5년 이상 보존
 - ④ 기타자료는 발생일로부터 5년 이상 보존
- 2) 금융기관 등은 고객확인 의무를 통해 확인 또는 검증된 고객 관련 정보를 기존 고객정보 관리와 동일한 주의의무로 보관·관리 하여야 함

2. 보존 대상

- 1) 고객확인 및 검증자료, 계좌정보와 관련하여 보존해야 할 자료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음
 - ① 고객(대리인, 실소유자 포함)에 대한 고객확인서, 실명확인 증표 사본 및 고객 신원정보를 확인하거나 검증하기 위해 확보한 문서 및 자료
 - ② 고객신원정보 이외에 금융거래의 목적 및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로 확인한 문서 및 자료
 - ③ 고객확인 의무 이행을 위한 내부승인 관련 자료
 - ④ 계좌개설 일시, 계좌개설 담당자 등 계좌개설 관련 자료
- 2) 금융거래기록과 관련하여 보존해야 할 자료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음
 - ① 거래에 사용된 계좌 번호, 상품 종류, 거래일자, 통화 종류, 거래 금액을 포함한 전산 자료나 관련 거래신청서, 약정서, 내역표, 전표의 사본
 - ② 금융거래에 대한 내부승인 관련 근거자료

3) 내·외부 보고와 관련된 자료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말함

- ①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서(사본 또는 내부결재양식) 및 보고대상이 된 금융거래 자료
- ②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영업점 등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나 의심스러운 거래로 판단한 이유에 관해 검토한 자료 또는 보고서 서식에 기재한 내용도 가능)
- ③ 의심스러운 거래 미보고 대상에 대하여 자금세탁가능성과 관련하여 조사하였던 기록 및 기타 자료
- ④ 자금세탁방지업무 보고책임자의 경영진 보고서 등

4) 기타자료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말함

- ①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활동의 설계·운영·점검과 관련된 자료
- ② 독립적인 감사수행 및 사후조치 기록
- ③ 자금세탁방지 교육내용, 일자, 대상자를 포함한 교육 관련 사항

3. 보존 방법

1) 보존 대상 문서 및 자료는 금융기관 등에서 일반적으로 보존하는 방법으로 보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함

- 원본, 사본, 마이크로 필름, 스캔, 전산화 형식 등 다양한 형태로 금융기관 등의 내부 관리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2) 금융기관 등은 보고책임자의 책임 하에 보안이 유지되도록 보존자료를 관리하여야 하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해당 자료를 요구할 경우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보존하여야 함

4. 보존 장소

금융기관 등은 보존대상 자료를 적절한 장소(본점 또는 문서보관소)에 보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보고책임자의 판단으로 그 밖의 장소에 보존할 수 있음

VI. 비밀보장 및 면책 규정

1. 비밀보장

1) 보고사실 누설 금지

- ① 금융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는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하고자 하거나 보고한 경우 그 사실을 당해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의 상대방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공이 가능함
 -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금융기관 등의 내부에서 그 보고사실을 제공하는 경우
 -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에 대하여 해당 외국의 법령에 따라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에 상당하는 보고를 하는 경우
- ② 금융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는 범죄수익규제법 제5조제1항(수수한 재산이 범죄 수익 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때 또는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수사기관에 신고하고자 하거나 신고한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신고에 관련된 금융거래의 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됨(범죄수익규제법 제5조제2항)
- ③ 금융기관 등의 종사자는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제5조제2항(수수한 재산이 공중협박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동법 제4조제3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나 그에 따른 지급·영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 또는 동법 제6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 따라 관할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려 하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금융거래의 상대방을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됨(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제5조제3항).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공이 가능함
 - 동일한 금융기관 등의 내부에서 공중협박자금의 조달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신고사실을 제공하는 경우

2) 금융거래정보 등의 우선제공

다음의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7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22조 (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세부내용은 <참고 7> 참조)

- ① 금융기관 등의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 ② 한국은행총재, 세관장, 외환정보집중기관장은 외국환업무 거래자료 통보
 - ③ 금융정보분석원의 법집행기관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 ④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 ⑤ 금융정보분석원의 관계행정기관장, 신용정보집중기관장에 자료제공 요청
 - ⑥ 금융기관 등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제공요구에 따라 외국환거래 및 그 밖의 대외거래를 이용한 금융거래관련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 3)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외국환거래 등을 이용한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이때 정보 또는 자료 제공의 요청이나 요구는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함

※ 기재 사항

- 거래자 인적사항
- 사용목적
- 요구하는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

2. 면책

1) 손해배상책임 면제

금융기관 등(금융기관 등의 종사자 포함)은 의심스러운 거래보고를 한 경우 당해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의 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음.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보고를 한 경우에는 제외

2) 재판상 증거 불인정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한 사항 중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수사 기관 등 법집행기관 등에 제공한 특정금융거래정보는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없음.

3) 증언거부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에 관여한 금융기관 등의 종사자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과 관련된 재판을 제외하고는 당해 보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 다만,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거부할 수 없음

3. 제재

1) 허위 보고 및 보고사실 누설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14조)

가) 위반행위

- ①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를 허위로 한 자
- ②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하고자 하거나 보고한 경우 그 사실을 당해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의 상대방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금융기관 종사자

나) 벌칙

- 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② 징역과 벌금은 병과 가능
- ③ 금융기관 등의 종사자가 처벌받는 경우 양벌규정에 의해 금융기관 등에 대해서도 벌금형 부과

2) 신고의무위반 및 신고사실 누설(범죄수익규제법 제5조,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제6조제3항)

가) 위반행위

- ① 범죄수익규제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사기관 앞 신고의무 위반 자
- ② ①항의 신고를 하고자 하거나 신고한 경우 그 사실을 누설한 금융기관 등의 종사자

나) 벌칙

- 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② 징역과 벌금은 병과 가능
- ③ 금융기관 등의 종사자가 처벌받는 경우 양벌규정에 의해 금융기관 등에 대해서도 벌금형 부과

※ 참고

- 금융정보분석원의 소속 공무원, 중계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수사기관 등의 종사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특정금융거래정보 및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병과 가능)

3) 허가받지 아니한 금융거래 제한대상자와의 금융거래(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제6조 및 제7조))

가) 위반행위

금융기관 등은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거래 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의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영수 업무를 한 자

나) 벌칙

-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② 징역과 벌금은 병과 가능
- ③ 금융기관 등의 종사자가 처벌받는 경우 양벌규정에 의해 금융기관 등에 대해서도 벌금형 부과

다) 벌칙(금융기관 등의 종사자가 과실로 위반한 경우에 한함)

- ①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②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4) 금융거래 미보고 및 감독 명령 등 거부(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17조)

가) 위반행위

- ① 의심스러운 거래보고(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 고액 현금거래보고(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4조의2 제1항, 제2항)를 하지 아니한 자
-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감독상 필요한 명령 또는 지시,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나) 벌칙

- 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

- ③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참고 7> 특정금융거래보고법과 금융실명법 및 외국환거래법과의 관계

□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 다음 경우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7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22조(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

-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하는 경우
-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고액현금거래를 보고하는 경우
-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보고된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사항을 분석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의 보관자료를 열람·복사하는 경우
-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한국은행총재, 세관의 장으로부터 지급수단의 수출입에 대한 허가·신고관련 자료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으로부터 국세청장, 관세청장에게 통보된 외환거래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수사기관 등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수사기관 등이 특정 형사사건의 수사 등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정보, 고액현금거래보고정보 또는 외환자료정보를 정리 또는 분석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와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
-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분석을 위해 관계행정기관장, 신용정보집중기관장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외국환거래 등을 이용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구 분	금융실명법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고객정보수집	▪ 실명확인	▪ 고객확인 의무 이행으로 신원확인, 실소유자 여부 및 금융거래목적 확인
비밀보장예외 및 정보제공	▪ 예금주의 요구·동의 ▪ 영장 등 특별한 경우	▪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보고된 정보를 수사기관 등에 제공가능 ▪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요청에 의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분석을 위한 정보제공
정보제공 사실통보	▪ 정보제공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타인 누설금지)	▪ 본인 통보금지(보고사실 누설금지)
면책	-	▪ 보고관련 손해배상책임 면제, 재판상 증거 불인정, 증언거부

<참고 8> 관련법상 주요 제재내용

□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 주요 제재 내용

위 반 행 위	벌칙 또는 과태료	처벌 대상자	비 고
<p>[제13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권을 남용하여 금융기관이 보존하는 관련 자료를 열람·복사하거나 금융기관장에게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자 ○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된 특정금융거래 정보 및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 용도로 사용한 자, 위의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요구한 자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FIU 소속공무원 또는 수사기관 종사자 등	징역과 벌금 병과가능
<p>[제14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R, CTR을 허위로 보고한 자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 	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	금융기관 등 및 그 종사자	징역과 벌금 병과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R 보고를 하고자 하거나 보고를 한 경우 보고와 관련된 사실을 거래상대방을 포함한 다른사람에게 누설한 자 		금융기관 등 및 그 종사자	
<p>[제 16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의 위반 행위를 한 때 	5백만원 이하 벌금	법인 (금융기관 등)	제14조의 양벌규정
<p>[제17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R, CTR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4조 제1항·제2항, 제4조의2제1항·제2항) ○ 명령, 지시,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천만원이하 과태료	금융기관 등	
<p>[제11조제2항, 제3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검사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위반행위에 관련된 임·직원에게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감독원의 원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그 소속직원으로서 하여금 검사 및 징계조치를 할 수 있음 			

□ 범죄수익규제법상 주요 제재내용

위 반 행 위	벌칙 또는 과태료	처벌 대상자	비 고
[제5조제3항] ○ 범죄수익 등 수수의 미신고 ○ 범죄수익 등 수수의 신고 사실누설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금융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 (금융기관 등 벌금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징역과 벌금 병과가능 양벌규정 적용대상

□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상 주요 제재내용

위 반 행 위	벌칙 또는 과태료	처벌 대상자	비 고
[제6조제2항제3호] ○ 허가받지 아니한 금융거래제한대상자에 대한 금융거래 취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금융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징역과 벌금 병과가능 양벌규정 적용 대상
[제6조제3항] ○ 공중협박자금의 수수,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의 미신고 ○ 상기 신고 사실의 누설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금융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 (금융기관 등 벌금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징역과 벌금 병과가능 양벌규정 적용 대상
[제7조제1항] ○ 금융기관이 허가받지 아니한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에 대해 금융거래 또는 그에 따른 지급 영수를 한 경우 (금융기관 등의 종사 자가 과실로 위반한 경우에 한함)	2천만원 이하 과태료	금융기관 등	

5. FATF - APG 합동 상호평가의 주요 권고 사항 및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

1. FATF - APG 합동 상호평가의 주요 권고 (지적) 사항

<자금세탁방지 관련>

- ☐ 자금세탁 혐의거래보고 기준금액 (2천만원)의 폐지
- ☐ 고객확인제도 관련 법적 의무규정 마련 등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 관련>

- ☐ 공중협박자금 (Terrorist Financing) 관련 자산동결시스템 마련
- ☐ 테러리스트 및 테러조직의 자금조달행위 범죄화 규정 명시 등

2.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사항>

- ☐ 자금세탁 혐의거래보고 기준금액 (2천만원)의 폐지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개정사항>

- ☐ 공중협박자금 (Terrorist Financing) 관련 자산동결시스템 마련
- ☐ 테러리스트 및 테러조직의 자금조달행위 범죄화 규정 명시

6. 자금세탁과 관련한 외국의 처벌 형량

□ 자금세탁관련 외국의 처벌 형량

국가	최고 형량
호주	25년
인도네시아	15년
필리핀	14년
홍콩, 중국	14년
말레이시아	7년
싱가포르	7년
스페인	6년
스웨덴	6년
핀란드	6년
일본	5년

※ 우리나라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

(단,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에 의한 자금세탁 범죄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능)

김 영 선 의원

1. 감사원 처분요구서 (최근 3년간)
2.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 감사계획서 (최근 3년간)

□ 감사원 처분요구서

- 우리 위원회는 '해당사항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 감사원이 09.5.28~7.17까지 금융위원회에 대해 실시한 감사결과
는 감사원이 내부절차를 거쳐 처리중 있음

□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 감사계획서

- 별도첨부

'08년 자체감사 실시계획(안)

< 목 적 >

- ◇ 청사 이전비용 집행 등 업무처리의 적정성 점검을 통하여
위원회 출범 후 업무처리의 적정성 제고를 도모

1. 감사방법

- ☐ 일부 부서의 업무를 선정하여 표본감사로 실시
- ☐ 수감부서 부담 경감을 위하여 서류점검 위주로 실시
 - 감사반이 필요서류 열람 또는 기초자료 징구
 - 담당 공무원 면담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지양

2. 감사 실시계획

- ☐ 감사기간 : '08.6.23(월)~6.27(금) (5일간)
 - ☐ 감사대상 부서(3개) : 혁신행정과, 기획재정담당관실, 산업금융과
 - ☐ 감사반 구성 : 감사담당관실 전원 (과장1, 5급3, 6급2명)
 - ☐ 감사 대상 주요업무
 - ① 조직개편으로 인한 청사이전 관련 제비용 집행 실태 (혁신행정과)
 - ② '07년 이후 물품 관리 현황 (혁신행정과)
 - ③ '07년 이후 비정규직 운영현황 (혁신행정과)
 - ④ '07년 결산국회 지적사항(정책연구과제) 처리실태(기획재정, 혁신행정과)
 - ⑤ '07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보증제도) 처리실태 (산업금융과)
- * 조치 이행여부 점검에 한하고, 정책내용의 판단은 제외

3. 행정사항 및 감사결과 조치

- ☐ 의사운영정보팀은 감사반이 수감부서의 전자문서 열람 가능토록 조치
- ☐ 수감부서에 감사일정(예비감사 및 본감사) 및 점검사항 통보
- ☐ 감사결과 문제점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고
 - 모범사례는 격려 및 공지

2009년도 감사계획(요약)

1. 감사 기본방향 및 원칙

◇ 금융위기 극복에 감사역량 집중

- 산하기관별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핵심분야에 대한 이행 점검
- 일반감사는 선택과 집중에 입각하여 최소한으로 실시

2. 감사실시 계획

① 정책지원감사 : 미정 (기관별 자체감사결과를 보아 1~2 기관 선정)

- (감사시기) 4월중
- (대상업무) 금융공공기관의 정책집행업무
 - * 금감원은 면책제도 운영 실태, 신보·산은·기은 등은 중소기업 보증 및 자금지원 실태 등을 점검

② 종합감사 : 여신전문금융협회(3/4분기), 금융연수원 (4/4분기)

- (선정기준) 감사대상 기관 중 외부기관의 감사를 장기간 받지 않은 기관중에서 기관의 중요도·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 * 여전협회는 99년, 금융연수원은 '06년 각각 재경부의 수감 이후 감사를 받지 않음
- (대상업무) 감사대상기관의 업무 전반

③ 부분감사 : 금융위 및 금감원의 민원처리 실태 (2/4분기)

- (선정기준) 금융위는 연 1회이상 민원처리 실태 점검의무 (민원 업무세척), 금감원은 다수의 민원이 금융위와 연계되어 있고, 금감원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이 빈번 (금감원 민원 연간 5만여건)

④ 수시감사 : 미정

- (선정기준) 위원장 지시 등 특별히 감사의 필요성이 발생하거나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선제적 점검이 필요한 경우

2008년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

2008. 9.

감사담당관실

- 목 차 -

I. 감사개요

II. 감사실시 결과

1. 총 평

2. 부문별 감사결과

가. 청사이전관련 경비 등 예산집행 실태

나. 물품관리 실태

다. 비정규직 운영실태

라. 정책연구과제 운영실태

마. 감사원 처분요구 이행실태 (신용보증 제도)

3. 지적사항별 조치내역

4.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5. 감사결과 처리요령

◇ 청사 이전비용 집행, 외부기관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금융위원회 업무처리의 적정성 제고를 도모

- 감사실시 기간 : 2008.6.23(월)~6.27(금) (5일간)
 - 감사대상 기간 : '07.1. ~ '08.5. (단, 예산집행은 08.1~5.)
 - 감사대상 부서 : 혁신행정과, 기획재정담당관실, 산업금융과
 - 감사반 : 감사담당관실 전 직원 (과장, 5급3, 6급2)
 - 감사방법 : 표본감사, 서류감사
 - 감사대상업무 : 청사이전 비용 등 예산집행, 물품관리, 정책 연구용역, 보증제도
 - ① 조직개편으로 인한 청사이전 관련 제비용 집행 실태 (혁신행정과)
 - ② '07년 이후 물품 관리 현황 (혁신행정과)
 - ③ '07년 이후 비정규직 운영현황 (혁신행정과)
 - ④ '07년 결산국회 지적사항(정책연구과제) 처리실태 (기획재정, 혁신행정과)
 - ⑤ '07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보증제도) 처리실태 (산업금융과)
- * 조치 이행여부 점검에 한하고, 정책내용의 판단은 제외

1. 총 평

- 금번 감사는 구 재정경제부(금융정책국)과 구 금융감독위원회가 통폐합되어 새로이 출범한 우리 위원회가 업무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음
- 주요 감사대상 업무를 조직통폐합 과정에서 발생한 청사이전 경비 등 각종 예산집행실태와 물품관리 실태, 구 재경부 및 구 금감위에서 각각 채용하여 운영중에 있던 비정규직 공무원의 금융위 출범 후 통합운영 실태
- 또한, 결산국회에서 지적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의 적정성 여부, '07년 감사원의 중소기업 보증제도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실태 등으로 선정하였음
- 감사실시 전 감사대상 부서에 감사대상 업무 및 선정이유, 감사 착안사항을 사전 통보하여 자체적으로 점검·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했음
- 감사결과, 조직개편에 따른 신규업무 증가·담당자 변경 등으로 업무처리체계가 정착되지 않아 예산집행·차량 및 물품관리, 비정규직 급여, 연구용역 현황관리 등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었음
- 금번 감사를 계기로 관행적으로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거나 관리소홀·규정 미숙지 등에 따른 잘못된 업무처리를 바로 잡는 등 금융위 업무시스템이 조기 정착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

[부문별 총평]

① 청사이전 관련 경비 등 예산집행 실태

- 복잡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청사이전 및 사무실 재배치 업무를 큰 문제점 없이 수행했던 것으로 평가, 다만
 - 일반업무용 차량의 중형위주 임차·운영, 국외출장시 규정 미숙지로 인한 숙박비 초과 수령, 정부구매카드 사용자 실명 미서명 등의 사례가 있었음

② 물품관리 실태

- 재물조사의 부적정으로 물품관리대장과 실제 관리되고 있는 현물과 일치하지 않음

③ 비정규직 운영실태

- 금융위 본부와 FIU 근무자간의 보수체계가 상이하고 보수 수준도 일관성이 없는 등 문제점이 발견됨

④ 정책연구과제 운영실태

-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 등으로 용역결과물(보고서)의 관리 및 활용 등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음

⑤ 보증제도

- 산업금융과는 감사원의 처분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 및 조치 계획을 회신한바, 당초 감사기준으로 설정했던 조치 실시 여부 및 절차상 문제점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 없음

2. 부문별 감사결과

가. 청사 이전관련 경비 등 예산집행 실태

〔Ⅰ〕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새로이 출범한 금융위원회는 조직규모와 기능면에서 구 금융감독위원회보다 확대되어 구 금감위사무실(금융감독원 건물내)을 계속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따라서, 금융위 사무실을 현재 청사(서초구 반포로)로 이전하게 되었는데, 사무실 이전 및 재배치 작업은 짧은 기간내에 신속하게 실시해야 하는 반면, 복잡하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였음
- 이러한 상황에서의 예산집행은 오류발생 가능성이 있는바, 부적정한 예산집행이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청사 이전과정에서의 예산집행 실태」를 표본 감사대상으로 선정
- 아울러, 평소 공무원들이 오류를 범하기 쉬운 국외출장 경비집행, 정부구매카드 사용 등에 대한 '08.1~5월 기간중 실태를 감사대상으로 선정함

〔Ⅱ〕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금번 감사는 별도의 감사장을 설치하지 않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일반업무를 수행하면서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서,
- 짧은 감사기간(5일)에 선정된 감사대상업무(청사이전 및 국외출장 경비 등)전반을 감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음

□ 따라서, 청사이전과 관련된 경비의 경우 청사이전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여부, 관련업체 선정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으며

- 업무용차량 운영의 경우 조직개편 후 신규추가 수량 및 차종 · 운영의 적정성 등을 감사했으며, 국외출장 경비 집행실태 및 정부구매카드 사용실태에 대해서도 감사

□ 혁신행정과에서 비치하고 있는 관련서류(청사이전계획서, 계약서, 지출결의서, 차량운행일지, 지출관련 영수증 등)를 제출토록 하여 서류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했고,

- 관련서류 점검 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지출관(지출관 보조 포함)의 설명을 듣는 방식을 취했으며, 필요한 통계는 별도 작성을 요구하기도 했음

【Ⅲ】 감사 결과

□ 금융위 '08년 총예산은 1,037억31백만원으로서, 금융위 본부 (160억78백만원), 금융정책사업비* (792억52백만원), FIU사업비 (53억60만원), IBRD차관 원리금상환금(30억41백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금융정책 사업비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669억4백만원), 역모기지론 출연(70억원), 금융전문대학출연(20억원), 모기지론 이차보전(16억39백만원), 금융시스템 시스템선진화(10억78백만원), 정책연구개발(6억3천만원)등으로 구성

- 금번 청사이전 과정에서 지출한 경비는 총 14억25백만원으로서 주로 금융위 본부예산을 집행하였는바, 주요 지출내역은

- 이사비용 및 사무실 재배치 공사 등 356백만원, 사무실 등 임차료 297백만원, 집기 등 구입비 133백만원, 통신시설 관련 경비 500백만원 등임

청사이전 관련 경비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경비 소요 부문	집행액	총집행액 대비비율	비 고
계	1,425	100	
이사비용	31	2.2	
사무실재배치공사 등	325	22.8	
사무실 임차료 등	297	20.8	사무실(281), 차량(16)
집기 등 구입비	133	9.3	책상, 의자, PC 등
통신시설 관련	500	35.1	전화시설, 전산실 이전, 전자회의시스템, 메신저 도입 등
기 타	139	9.8	인건비, 무인경비시스템 등

* 세부집행내역 : <별표 1>

- 감사결과, 청사이전 기본계획 수립·관련업체 선정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업무용 차량 운영, 국외출장비(숙박비), 정부구매카드 사용 등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음

① 업무용 차량운영의 불합리

《지적사항》 (또는 우수사례)

- 신설된 금융위는 구 금감위보다 인원수가 대폭 증가하고 (80→155명, FIU제외), 업무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업무용차량 수요가 증가
 - 금감원장을 겸직했던 구 금감위원장은 금감원의 차량을 사용했었으나, 금융위 출범에 따라 금감원장 직위가 분리되어 금융위원장 전용차량 수요가 신규로 발생하였음
 - 또한, 금융위는 소관법률은 많아서(45개) 관련부처 및 국회 등과의 잦은 업무협약이 발생하는데, 단독청사에 입주해 있는 관계로 차량수요가 증가

- 그러나, 구 금감위는 업무용차량을 2대(부위원장, 일반업무용)만 운영했고, 구 재정부(금융정책국)는 업무용 차량이 없었으므로 증가된 차량 소요에 비하여 운영차량 수는 적었음
- 이런 관계로 금융위는 조직개편 직후 업무용차량 6대를 신규로 추가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음

업무용차량 운영현황

(단위 : 대)

종 전(구 금감위)				변 경(금융위)			
대형	중형	소형	계	대형*	중형	소형	계
1		1	2	3	4	1	8

* 대형(3대)는 위원장 · 부위원장 · 외빈의전용

- 한편, 공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 제5조는 차종 및 차형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면서, 일반업무용차량에 대해서는 1,600cc 이하로 운영(동규정 별표1)토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금융위는 특수업무용(외빈의전 등)으로 중형차량 4대를 신규로 임차했으나 실제운영의 대부분을 일반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일반업무용차량은 1,600cc 이하로 운영토록 하고 있는 규정과 배치됨

《조치할 사항》

- (시정요구, 표창상신 등)

② 기타 예산집행의 불합리

〈지적사항〉 (또는 우수사례)

o 공무 국외출장 경비지급 부적정

-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제16조④항은 국외 공무출장을 함에 있어서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예산집행 서류를 조사('08.1~5월분)한 결과, 한·캐나다 FTA협상(3.25~29)을 위한 국외출장시 항공기에서 1박을 하는데 그 숙박비(\$95)를 지급하였고, 한·인도 CEPA협상(4.1~4)을 위한 국외출장시에도 항공기에서 1박을 하는데 숙박비(\$95)를 지급한 사실이 있었음

o 정부구매카드 사용시 관련지침 이행 불철저

- 예산집행지침(기획재정부)은 정부구매카드 사용시 카드사용 영수증에 실명으로 서명하도록 하고 있고('08년부터 시행), 업무추진비 집행 시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예산집행 서류를 조사('08.1~5월분)한 결과,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면서 카드영수증에 실명서명을 한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 '소속부서명' 또는 '금융위' 등으로 서명을 하고 있었음
- 또한 업무추진비 집행 시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 대부분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있었으나, 1.17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 관련 업무추진비를 집행(995,000원)함에 있어서는 주된 상대방 소속·성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 라고만 기재한 사실이 있었음

o 예산 지출과목의 부적정

- 일과 전·후 직무수행으로 인한 식사비용은 특근매식비(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함이 타당한데도 혁신행정과는 211일 아침 학습동아리(외부강사 초빙 모닝클래스 : 김&장 정성구 변호사)를 마친 후 조찬비용(76,000원)과 5.13일 저녁 직원친절 교육 후 석식비용(73,000원)을 일반수용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

o 수당지급의 부적정

- 5급에서 4급으로 승진('07.10.24)하면서 대우수당 지급사유가 소멸한 공무원에 대하여 전산오류로 '07.12월부터 '08.5월까지 대우수당이 매월 지급(6회, 703,640원)된 사실이 발견되었음
- '07.12~'08.2월분은 구 재정경제부에서, '08.3~5월분은 금융위에서 지급

〈조치할 사항〉

- o (시정요구, 표창상신 등)

〈별표1〉

청사이전 관련 경비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세부 사업	예산과목	'08예산 현액 (A)	집행액(B)*		집행률 (B/A×100)(%)
계		2,693,330	1,424,557		52
기본경비	소계	2,137,330	1,091,779		51
	일반수용비	950,900	이사비용	31,359	15
			사무실 파티션 작업 등	78,000	
			전산실 이전 인건비 등	22,062	
			네트워크 공사 인건비 등	8,984	
			전자메일 라이선스 구입	2,200	
			소계	142,605	
	임차료	475,986	사무실 임차료	280,786	62.5
			차량 임차료(3~5월)	16,547	
			소계	297,333	
	시설장비유지비	211,823	통신시설 유지보수비 등	223,305	105
	시설비	339,325	사무실 이전 재배치 공사	246,699	87
			사무실 이전 전기공사	33,000	
			금융위회의실 음향설비	10,230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	5,868	
			소계	295,797	
	자산취득비	159,296	사무용 집기, pc 등 구입	132,739	83
정보화 지원사업	소계	556,000	332,778		60
	일반수용비	9,650	-	-	
	연구개발비	193,000	메신저시스템 신규 도입 등	55,800	29
	자산취득비	353,350	전산실 이전	195,938	78
			정책고객관리서버 도입	15,967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49,060	
			메신저시스템 신규 도입	16,013	
			소계	276,978	

*집행액은 청사이전과 관련된 비용만 기재

<별표2>

공용차량 운영 현황

(단위 : 천원)

차종 (차량번호)	기사	임대 (구입)일	임대료 (월)	연료	유류비(월)						용 도	월평균 주행 (km)
					1월	2월	3월	4월	5월	계		
에쿠스 35허7871		08.03.06	1,485	휘발유			843	776	778	2,397		2,324
체어맨 47허2026		08.04.04	1,058	휘발유			642	900	658	2,200		1,885
그랜저 35허7929		08.03.11	677	LPG			161	139	68	368		845
SM5 35허7972		08.03.19	580	LPG			116	195	200	511		1,062
SM5 35허7959		08.03.14	580	LPG			115	196	200	511		1,257
SM5 35허5560		08.03.14	580	LPG			10	194	230	434		1,112
SM5 35허7958		08.03.14	580	LPG			199	202	235	636		1,385
아반떼 01모7285		04.04.20	14,040	휘발유			192	163	277	632		1,013
계							2,278	2,765	2,646	7,698		

나. 물품 관리 실태

[1]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정부조직개편으로 새로이 출범한 금융위는 구 금감위보다 조직 규모가 확대되어 보유물품 수량 및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물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
 - 이에 따라 새로 보유·운용하게 되는 물품의 관리상태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감사대상으로 선정
- 감사 범위는 소수의 감사인력으로 물품관리 업무 전체를 조사하기에는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어
 - 물품의 재고관리, 관리기관 설치, 재물조사 등 물품관리법상의 기본 규정 준수 여부를 감사범위로 한정함

<2008년도 금융위원회 수시재물 조사 현황>

(‘08.5월 현재, 단위 : 원)

합계	관리대장계	실사계	활용대상	불용대상	
				사용가능품	사용불가능품
수량	1,482	1,482	1,218	193	71
금액	801,607,532	801,607,532	701,274,952	94,947,780	5,384,800

[II]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07년~'08년 물품수급계획서, 수시재물조사결과표, 물품관리대장을 제출받아 물품수급계획의 수립여부 및 내용, 정기재물조사의 실시 및 결과 등을 서면으로 먼저 감사하고
- 물품관리대장과 실제 물품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과를 방문하여 관리대장과 대조하며 실지 감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였음
- 실지감사는 재물조사표상 1,482개 물품을 전수조사 하기에는 시간과 감사인력 등의 여건이 충분치 않아
 - 식별이 용이하고 비교적 고가의 사무기기인 복사기와 노트북을 선별하여 시행하였음

[III] 감사 결과

- 서면감사 결과 물품수립 계획 및 정기 재물조사는 관련 규정에 의거, 연1회 수립·집행되었고
 - 조달청의 「정부조직 통폐합 기관의 재물조사 실시」 요청('08.4.28)에 따라 수시재물조사를 실시, 재물조사표가 조달청에 통보('08.5.22)된 사실을 확인하였음

《지적사항》 (또는 우수사례)

- 현재 금융위는 총 28대의 노트북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리대장에는 7대만 기재되어 있고

- 조직개편 이후 추가 구입한 노트북 19대와 구 재정부에서 이관된 노트북 5대 중 2대가 미기재 되어 있는 등 총 21대가 미기재 되어 있음

<물품관리대장 미기재 노트북 현황>

구 분	대 수	실지 관리과
금융위 회의용	19	의사운영정보팀
구 재정부 이관	1	시장분석과
	1	글로벌금융과
미기재 총계	21	

《조치할 사항》

- (시정요구, 표창상신 등)

다. 비정규직 운영 실태

〔Ⅰ〕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구 재정부(금융정책국, FIU)와 구 금융감독위원회는 비정규직을 각각 11명, 14명 등 총 25명을 운영해 오고 있었는 바,
 - 두 기관의 통폐합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처우는 없었는지, 두 기관의 비정규직 운영(근무조건, 급여, 4대보험 등)에 있어서의 차별적인 요소는 없는지,
 - 조직개편 직후 신규채용(8명)의 필요성·절차 등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점검 필요가 있었음

〔Ⅱ〕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비정규직 운영 기본계획 수립여부, 채용절차 및 방법, 예산 현황 및 보수체계 등을 감사대상으로 하면서,
 - 특히, 비정규직(총 31명) 중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무보조원(21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
- 감사방법은 근로계약서·관련 예산서 및 급여지급서·4대보험료 납부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 서류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했으며,
 - 관련서류 점검 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인사담당자의 설명을 듣는 방식을 취했으며, 필요한 통계는 별도 작성을 요구하기도 했음

【Ⅲ】 감사 결과

□ 비정규직 관련 서류를 점검한 결과, 금융위 본부는 비정규직 운영에 관한 기본지침인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07.9.27, 금감위 제정) 비정규직을 운영하고 있으나,

○ FIU는 본부와 달리 근로계약서에 따라 운영하고 있음

□ 현재 비정규직은 총 31명으로서, 속기사·YP·에디터·사무보조원·운전원 등으로 구성

○ 조직개편 이후 2명* 퇴직, 8명 신규채용으로 6명이 순증 되었음

* 1명은 금감원 취업, 1명은 건강상 이유로 퇴직

- 이는 조직규모 및 업무범위 확대로 사무보조원 2명, 공용차량 증설에 따른 운전원 4명 등 신규 추가소요가 발생한 것에 기인

구 분	인원 수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속기사	2	의사운영팀, 위원회 속기업무
YP	1	금융정책과, 규제개혁 업무
에디터	3	금융정책과, FIU(2명), 영문 교열
운전원	4	업무용차량 운전
사무보조원	21	각과 및 비서실, 사무보조
계	31명	

□ 비정규직 신규채용시 홈페이지에 모집공고 후 공개적으로 채용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는바, 신규채용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4대보험의 경우도 관련 법령에 따라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음

○ 다만, 금융위 본부와 FIU와의 보수체계 상이 및 보수수준의 불균형이 있었음

□ 본부와 FIU의 사무보조원의 보수체계를 비교해 보면

- 본부소속 비정규직의 보수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금융위 훈령)에 근거하여 근속연수별 연봉표에 근거한 기본연봉에 더하여 정근수당·성과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 *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비례하여 지급비율이 상향(월봉의 100%까지)되며, 성과급은 최대 80만원까지 지급
- FIU소속 비정규직의 보수는 근로계약서에 연봉을 명시하고 매년초 연봉 재계약을 하며, 정근수당과 성과급은 없음
 - * 구 재경부(금융정책국) 소속이었다가 금융위 본부로 소속이 바뀐 직원은 본부 보수체계로 운영
- 시간외수당 지급에 있어서도 본부는 시간외 근무를 월간 최대 15시간(시간당 8,092~8,680원* 최대 13만원)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 * 근로기준법에 의한 비정규직 시간당 보수 산출근거에 따름
- FIU는 월간 최대 20시간까지 시간외 근무를 인정 (시간당 5,000원, 최대 10만원)

□ 본부와 FIU 사무보조원의 보수수준을 비교해 보면

- 본부 신규직원('08년 채용)의 경우 연봉이 13.5백만원 수준에 이르는데 반하여, FIU의 '05년 채용자는 12.9백만원에 불과함

본부와 FIU 보수체계 및 수준 비교 (단위 : 만원)

구 분	보수 체 계				연간보수 수준(채용연도별)				
	기본 연봉	정근 수당	성 과 급	시간외 수당	'01	'04	'05	'06~7	'08
본 부	근무연수에 따라 상향 조정	근무연수에 따라 상향 조정 (월 봉 의 10~100%)	32~ 38	월 한도: 15시간 단가: 8,092~8,680원 최대지급: 월13만원	1,525	1,488	-	1,414	1,353
FIU	없음	없음	없음	월 한도: 20시간 단가: 5,000원 최대지급: 월10만원	1,588	1,436	1,285	-	1,224

* 연간 보수수준은 시간외 수당, 성과급을 제외한 금액임

《지적사항》 (또는 우수사례)

- FIU가 소속기관이므로 독립성을 어느정도 보장한다 할지라도, FIU소속 비정규자의 근무환경·업무량·업무난이도·전문성 등이 본부 소속 비정규직과 특별한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현행과 같이 보수체계를 다르게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함

《조치할 사항》

- (시정요구, 표창상신 등)

<별표1>

비정규직(사무보조원) 연봉현황

(금액단위 : 천원)

연도	본 부				F I U		
	채용월	성 명	근무부서	연 봉	채용월	성 명	연 봉
2001	7월		의사운영팀	15,248	5월		15,876
	11월		대 변 인 실	15,248	7월		15,876
2002	-		-	-	6월		15,876
2003	6월		중소서민과	14,998	-		-
	7월		혁신행정과	14,998			
	11월		구조개선과	14,998			
2004	12월		사무처장실	14,877	12월		14,364
	12월		금정국장, 서비스국장	14,877			
2005	-		-	-	5월		12,852
2006	7월		보 험 과	14,139	-		-
	11월		정책홍보팀	14,139			
	12월		공정시장과	14,139			
2007	3월		법무담당관	14,139	-		-
	4월		자산운용과	14,139			
2008	4월		위 원 장 실	13,530	7월		12,240
	4월		운전원	23,400			
	4월		운전원	23,400			
	4월		운전원	23,400			
	5월		증선위원실	13,530			
	5월		혁신행정과	13,530			
	5월		글로벌금융	13,530			
	5월		운전원	23,400			

* 본부 비정규직 연봉은 성과상여금이 미반영된 금액임

** 속기사 2명, 에디터:3명, YP 1명 등 6명은 제외함

<별표2>

2008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연봉표

☐ 사무보조원

(단위 : 원)

본 부				FIU
근무기간	기본급	정근수당	연봉액	연봉액
1년미만	1,127,500	미지급	13,530,000	연봉계약서에 따름
1년~2년	1,168,500	58,425 × 2회	14,138,850	
2년이상	1,209,500	120,950 × 2회 ~	14,755,900~	

* 1) 정근수당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 지급기준 준용

근무년수	월봉급액의 해당 지급률(연2회)	근무년수	월봉급액의 해당 지급률(연2회)
1년미만	미지급	6년이상 7년미만	30%
1년이상 2년미만	5%	7년이상 8년미만	35%
2년이상 3년미만	10%	8년이상 9년미만	40%
3년이상 4년미만	15%	9년이상 10년미만	45%
4년이상 5년미만	20%	10년이상	50%
5년이상 6년미만	25%		

2)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연봉외 급여로 성과급(별표 6) 지급 가능

3) 시간외 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 48시간 이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2008년은 최대 월 15시간 지급)

라. 정책연구과제 운영 실태

[I]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 정책연구용역은 국회 예·결산 심사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 ☐ 금융위 발족에 따라 기존에 수행한 용역결과물을 적정하게 운영·관리하여 향후 유사정책 수립이나 용역과제 선정에 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 '07년 이후 정책연구용역(구 재경부와 구 금감위에서 수행)의 「관리현황 및 활용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

< 2007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정책연구용역 현황 >

(백만원)

구 재경부 금융정책국		구 재경부 금융정보분석원		구 금감위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7	553	4	133	3	88	24	774

[II]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 정책연구용역의 내용적 충실성 보다는, 관리실태 및 활용실태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
- ☐ 감사방법은 먼저 정책연구용역 국회 지적사항에 대해 '07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및 정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등을 통해 지적사항을 파악한 후 담당과를 방문하여 확인·점검하고

- 정책연구용역심의회의철, 연구용역관리현황, 연구용역결과물 관련철을 제출받아 그 관리·활용이 관련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서면 점검했으며
- 현황(리스트)에서 과제 누락 및 PRISM 미등록과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대면하여 확인했음

【Ⅲ】 감사 결과

- 용역과제선정은 정책연구용역심의회에서 과제의 중복여부, 계약방법 및 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 '07.6월 국회 결산 심사시 정무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당초 계획과 다른 용역사업은 문제가 있으므로 자체 '정책연구용역심의회'를 거쳐 차년도 용역과제를 선정하여 용역과제의 변경을 최소화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 담당과에서 '09년 예산 확정전에 자체 '정책연구용역심의회'를 거쳐 용역과제를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과제의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음
- 용역대금결제 부분을 점검한 결과 납기를 준수하고 있고, 하자 검수부분을 점검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정책연구용역예산의 이·불용을 점검한 결과 '07년 용역과제 24건중 2건만 이월되었으며, '08년 용역예정과제 약 20건도 이월 또는 불용 비율이 낮을 것으로 전망
- 다만, 조직개편에 따라 금융위가 신설된 관계 등으로 현황관리 및 PRISM 미등록 등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음

《지적사항》, (또는 우수사례)

- 정책연구용역 현황을 각 과로 부터 받아본 결과, 2개부서 (△△△과, △△△과)가 '07년 수행과제 24과제 중 3과제를 리스트에서 누락했으며
- '08.6.24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PRISM)을 통해 등록 현황을 점검한 결과, 24과제 중 13과제만 등록되어 있고 △△△과, △△△과, △△△과, △△△과, △△△과 등에서 11과제를 등록하고 있지 않았음

《조치할 사항》

- (시정요구, 표창상신 등)

2007년도 금융위원회 소관(재정부 및 금감위) 정책연구용역 현황

과 명	과 제 명	계약자	계약 방식	기간	계약금 (천원)	현황	특수 여부
국 민 안 전 회	어음제도 개선방안 연구		수의	07. 2. 9 - 5. 8	14,250	×	○
	금융산업 선진화에 대한 의견 조사		수의	07. 7.25 - 8.24	28,500		×
	소비자금융현황 및 제도화 방안		수의	07. 8. 3 - 11. 2	23,750		×
	금융법령·법규 영문화		수의	06.12.11 - 5.10	150,000		×
	금융시장 현황지표 산출과정 자동화프로그램 개발		수의	07. 6.26 - 8.25	19,000		×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방안 연구		수의	07. 9.21 - 12.20	28,500		○
	국민소득 2만불시대 금융의 역할		수의	07.10.19 - 12.18	28,500		×
	해외단기 금융시장 제도에 관한 연구		수의	07.10.12 - 12.11	28,500		×
	홍콩사례를 중심으로 한 금융회사의 비합리적인 해외진출 전략 모색		경쟁	07.10.26 - 12.11	38,000		×
	해외사례분석을 통한 은행지배구조 개선방안		경쟁	07.10.29 - 12.13	28,500	×	○
	금융업의 직무와 업무수행 역량 분석		경쟁	07.11.2 - 12.17	19,000		×
	뉴욕 런던시 등의 금융클러스터 조성사례의 정책적 시사적 연구		수의	07.11.5 - 12.20	33,000		○
	장외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		수의	07.11.15 - 12.20	25,000		×
	금융허브 육성을 위한 금융관련 행정의 국제화 방안 연구		수의	07.11.19 - 12.24	29,000		×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경쟁	07.11. 7 - 12. 7	7,800		○
	주요선진국의 금융인프라 관련 제도현황 연구		수의	07.10.25 - 12.14	21,800		○
	아시아 전자금융시장 분석과 한국 기업의 진출 전략		수의	07.12.20 - 08.2.19	30,000	×	×
	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경쟁	07. 7.30 - 12.14	33,200		○
	역외금융기관, 역외 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 유형 및 대응방안		경쟁	07. 9. 5 - 12.20	38,000		○
금 감 위 계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에 대응한 자금세탁 방지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경쟁	07.10. 5 - 12.20	28,500		○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경쟁	07.10. 5 - 12.20	33,000		○
	우리나라 회계관련 제도의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		수의	07.10.19 - 08.3.4	45,000		○
금 감 위 계	펀드판매망(채널) 선진화 방안		수의	07. 9. 7 - 12.20	21,000		○
	기업상장제도의 국제적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수의	07. 7.24 - 10. 8	22,000		○
					773,800		

라. 감사원 처분요구 이행실태 [중소기업 신용보증 제도]

(Ⅰ)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감사원 처분요구 이행실태는 향후 감사원의 기관감사, 특별감사* 등에서 주요 점검대상이 되므로 사전 자체감사의 필요성이 높은 영역임

* '07.3월 감사원은 「재정·금융분야 감사결과조치 이행실태」 감사실시

- '07년 이후 우리 위원회(舊 금감위, 재경부 금융정책국 포함)에 대한 감사원 감사 대상은 「중소기업 보증지원 실태」 등 5개 부문*

* 중소기업 보증지원 실태, 특정업무 경비집행, 문서보안 실태, 공무국외여행 경비집행, 금융법규 영문화사업 사후관리

- 이중 최근 5년간 감사원 처분요구가 가장 많았던(8건) 산업금융과 소관의 「중소기업 보증지원 실태」 부문에 대하여 표본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 부서에 전파하여 참고토록 함

(Ⅱ) 감사방향 및 방법

- 감사원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 내용보다는 조치여부 및 조치 절차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보완하도록 함

- 조치계획을 수립한 경우 동 계획대로 정책을 추진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지 여부를 점검

- 감사 방법으로는 우선 감사대상부서(산업금융과)로부터 조치 결과·계획 및 관련자료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검토하고,

-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담당자 면담 및 유관기관(신·기보 등)으로부터의 자료 수집 등을 통해 보완

(Ⅲ) 감사 결과

□ 산업금융과는 감사원의 6개 처분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1개사항) 및 조치 계획(5개 사항)을 회신

○ (조치 결과) 보증부 대출금의 용도와 유용(부동산 매입 등)
방지를 위한 신·기보 업무 지도·감독 강화 요구에 대하여

- 신·기보가 보증금을 회수토록 하고 금감원 등 지시로 은행이
보증부 대출금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음을 조치결과로 회신

○ (조치계획) '총 보증규모 적정관리' 등 5개 사항*에 대하여

* ①총 보증규모 적정관리 ②장기보증이용기업 보증축소 ③중복보증 해소
④기술평가보증제도 합리적 운용 ⑤보증연계투자 폐지 등 방안마련

- 신·기보 공동발주 용역결과를 참고하여 금년 중 정부
정책에 반영 예정임을 조치계획으로 회신

□ 이밖에도 조치결과 및 계획 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하였거나
추진예정임

○ 신·기보 보증부 약정서 개정(신·기보 사후관리 업무 감독강화),
보증업무 선진화방안에 대한 공개토론회 개최예정
(조치계획에 따른 정책수립 절차상 객관성 확보) 등

□ 따라서 당초 감사기준으로 설정했던 조치실시 여부 및 절차상
문제점 측면에서 지적사항은 발견되지 않음

3. 지적사항별 조치내역

일련 번호	지 적 내 용	조치구분
1	업무용 차량 운영의 불합리	시정
2	국외출장시 숙박비 과다 수령	현지조치
3	정부구매카드 실명서명 미이행 및 업무추진비 건당 50만원 초과집행시 상대방 인적사항 기재 불철저	현지조치
4	직원교육 전·후 식비 지출과목의 부적정	현지조치
5	대우수당 지급의 부적정	현지조치
6	재물조사 실시 불철저	시정
7	정책연구용역과제 관리 미흡	현지조치

4.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제14조에 따라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적의 조치토록 요구

3.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 ☐ 총리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09년 자체평가 실시계획을 별첨(파일)과 같이 제출합니다.

2009년도 자체평가계획(안)

2009



금융위원회

목 차

I. 개 요

II.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담당조직의 구성·운영

III. 자체평가 대상

IV.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V. 자체평가 방법 및 일정

VI.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

VII. 기타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1. '09년 자체평가 기본방향

◆ 자체평가의 객관성 및 전문성 제고, 평가결과의 환류 강화, 평가 과정에서의 컨설팅 기능 강화를 통한 정책품질 향상

① 실용적 자체평가시스템을 통한 정책품질 향상

- 과제별 추진실적을 연중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하고, 성과 지표의 계량화·객관화 노력 지속
- 자체평가 과정에서 정책품질 향상을 위한 컨설팅 기능 강화
 - 단순한 사후평가가 아닌 정책추진과정에서의 바람직한 대안모색 노력 강화
 - 평가위원과 과제담당자간 정보교류 채널을 구축하여 정책 추진방향 등에 대한 조언 제공

② 자체평가결과의 환류로 평가의 유용성 제고

- (정책) 평가결과를 익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하고, 미흡과제의 경우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를 통해 정책환류를 강화
- (성과평가) 각 부문별 자체평가결과를 개인성과평가 등에 평정 자료로 활용

2. 성과관리 평가계획 수립 경과

- 금융위원회 '09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09.3)
- 금융위원회 '09 자체평가 계획안 수립('09.5)

II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담당조직의 구성·운영(안)

1.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 자체평가위원 현황

구분	성명	소속	직위	경력	분야
내부	조인강	금융위	기획조정관	-재경부 금융정책심의관	
	추경호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재경부 금융정책과장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재경부 공자위국장	
	홍영만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금감위 대변인	
외부	김정식	연세대	교수	-금융발전심의 위원	1소위 (금융정책, 금융정보 분석)
	지동현	KB금융지주	전략담당부사장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복	서강대	교수	-관세청 자체평가위원	
	정찬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금융발전심의 위원	
	성태윤	연세대	교수	-KDI 부연구위원	
	오규택	중앙대	교수	-국민경제자문회의 전문위원	2소위 (금융서비스, 자본시장)
	홍은주	iMBC	사장	-재경부 정책자문평가위원	
	이미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대한변협 여성 부회장	
	정순섭	서울대	교수	-한국금융투자협회 공익이사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조정실장	-백지신탁위원회 위원	
	김성은	경희대	교수	-재경부 정책자문평가위원	3소위 (인사, 조직, 정보화)
	이미영	건국대	교수	-정보화평가위원회 위원	
	최명희	외환은행	부행장	-금감원 국제협력실실장	
	김현수	동양제철화학	HR담당상무	-동양제철화학 HR상무	

☐ 분야별 전문가 비율

총계	분야별 전문가					내부위원
	정책관련전문가	재정분야 전문가	행정관리역량 분야 전문가	기타	소계	
	10(71.4 %)	-	4(28.6%)	-	14 (100%)	4
100%	(55.6 %)	-	(22.2%)	-	-	(22.2%)

2.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 (구성) 18명으로 위원을 구성(외부 14명, 내부 4명)

< 소위원회 구성 >

구 분	분 야	위원장	위 원
1소위	금융정책, 금융정보분석	김정식	정찬우, 이상복, 지동현, 성태윤, 기획조정관, 금융정책국장
2소위	금융서비스, 자본시장	오규택	이미현, 정순섭, 김필규, 홍은주, 금융서비스국장, 자본시장국장
3소위	행정관리역량	김성은	김현수, 이미영, 최명희

* 행정관리역량 : 조직, 인사, 정보화, 재정운영

- (전체회의) 전체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되, 긴급한 심의 사항 발생시 위원장의 직권 또는 과반수 자체평가위원의 요구로 수시회의 개최 가능

- 자체평가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소위원회) 3개 소위*로 구분하여 위원회 심의사항(자체평가계획, 추진실적 평가 등)을 사전 검토하여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

* (1, 2소위) 주요정책·재정사업을 소관 실·국별로 구분하여 평가,
(3소위) 행정관리역량(조직, 인사, 정보화, 재정운영)을 평가

- (자체평가의 실시)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지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되, 자체평가를 반기별로 1회이상 실시

3. 평가지원팀의 구성 및 운영

□ 평가지원팀의 구성

- 평가 총괄팀과 소위원회별 평가지원 T/F를 구성
 - 소위의 평가정책에 대상에 속하는 소관부서를 중심으로 평가지원 T/F를 구성

평가지원팀	역 할	팀원(직책)	연락처
평가지원 총괄팀	위원회 운영지원 및 전체 자체 평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 지원	홍재문(과 장)	2156-9560
		김정주(사무관)	2156-9563
1소위 지원팀	금융정책국, 금융정보분석원 소관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등 1소위 평가활동 지원	이병래(과 장)	2156-9710
		정완규(실 장)	2156-9401
		안창국(서기관)	2156-9711
		김건영(서기관)	2156-9781
		이귀웅(사무관)	2156-9411
2소위 지원팀	금융서비스국, 자본시장국에 대한 정보 제공 등 2소위 평가활동 지원	최 훈(과 장)	2156-9810
		유재수(과 장)	2156-9870
		유영준(서기관)	2156-9811
		전요섭(서기관)	2156-9871
3소위 지원팀	금융위 인사, 조직, 재정, 정보 화 등 기관의 역량평가에 관한 정보제공 등 3소위 평가활동 지원	송재근(팀 장)	2156-9561
		김제동(사무관)	2156-9562
		나형호(사무관)	2156-9289
		임왕섭(주무관)	2156-8622

□ 평가지원팀의 운영

- 평가총괄 담당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지원 및 추진실적 점검 등 부문별 자체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지원
- 소위원회별 평가지원 T/F
 - 평가지원 T/F는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 평가활동 추진을 위해
필요한 관련자료 준비 및 정보제공 등 위원회의 평가활동을
지원

III

자체평가 대상 : 35개 과제

1. 주요정책과제

□ 평가 대상 : 31개 관리과제

< 평가대상 세부현황 >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09년 목표치
기업자금지원 및 구조조정 추진	1. 기업 자금조달 확대 방안마련	①은행권 실물지원	MOU 이행상황 점검	80%
		②보증기관보증확대	만기연장을 점검	80%
	2.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추진 체계 마련	①기업재무개선지원단 구성여부	구성여부	구성여부
		②위원 신규선임 및 사무국 인원 보강여부	위원신규선임 및 인원보강 여부	위원신규선임 및 인원보강 여부
	3. 취약산업 구조조정 추진	워크아웃 추진 기업	워크아웃추진 기업 수	20
모니터링 강화 및 선제적 대응으로 금융시장 안정 달성	1. 현장 밀착형 신속 대응체제 마련	미시·거시·금융산업별 모니터링 체제 운영· 가동 횟수	리스크 점검 보고서 개수	12
	2. 한국금융 바로알리기 지원단 운영	정례간담회 및 해외 설명회 추진	회의 개최 횟수	18
	3. 파생상품시장 모니터링 체계 개편	파생 모니터링 체계 구축	보고서서식 개정, 변동성 지표 개발	시스템구축, 지표개발 및 회의개최
	4. 외화유동성 지원	은행별 외화자금 확보 노력 강화	MOU 이행상황	MOU 이행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를 통한 시스템 리스크 방지	1. 은행자본확충 추진	은행자본확충 추진	조성(안) 마련	조성안 마련
	2.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능력 강화	RBC제도 시행	RBC제도 관련 사항 보험업 감독규정상에 반영 여부	RBC제도 관련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규제혁파를 통한 금융 회사의 자율성 제고 및 금융혁신 유도	1. 권역별 법령 정비작업 추진	은행법 및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시행령 개정 여부	시행령 개정
	2. 금융상품 판매 체계 개편	(가칭)금융상품판매법 제정	법안 제출 여부	법 제정
	3. 보험회사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	보험업법시행령 개정	시행령 개정 여부	시행령 개정
금융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1. 산업은행 민영화의	①산은지주지분 49% KDF 앞 현물출자	49% 현물출자 여부	49% 현물출자 완료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09년 목표치
금융시장의 자율성 제고	단계적 추진	②등 49% 지분 매각 착수	상장 등 매각절차 착수 여부	매각절차 착수
	2. 예금보험공사 · 자산관리공사 보유지분 매각	보유자산 매각계획안 마련 및 보유자산 매각 진행	계획안 마련 및 자산매각 진행 여부	일부 보유자산 매각 진행
금융글로벌화의 지속적 추진으로 국제경쟁력 강화	1. FTA 금융협상 지속 추진	①상대국 양허 및 제도개선 요구	상대국 제도 개선	개선
		②국내 금융제도의 특수성 및 업계 의견 반영	업계의견 검토 여부	개선
		③금융협상 TF 운영	FTA 금융협상 TF 개최 횟수	4회
핵심 금융 인프라 선진화로 금융발전 촉진	1. 회계공시제도 개선	국제회계기준 관련 시행령 및 규정 개정	법규정 개정 여부	시행령 및 규정 개정
	2. 전자증권제도 도입	전자증권법 제정	국회제출 여부	법제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의 선진화	1.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선진화 및 국제공조 강화	FATF 상호평가 수검 및 제도개선 달성도	· 시행령 개정 여부 · 검사시스템 선진화 방안 마련 · FATF안건 상정 여부 · 이행계획 마련 여부 · 이상 4개 과제중 3개 과제 달성 목표	75%
	2. 심사분석 효율성 향상 등 제도운영의 내실화	①심사분석 평균소요 기간 단축	심사분석 소요기간, '08년 목표치(45일)보다 5%이상 단축	42.5일
		②자금세탁행위 조사/연구 활성화위한 보고서 발간	정기보고서 발간 횟수	2회
	3.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이행수준 제고	① 금융회사의 혐의거래 점검시스템 구축비율	전산시스템 구축비율	67%
		② 검사수탁기관의 · 검사매뉴얼 및 검사 체크리스트 개정	개정 비율	77%
		③ 수요자(교육대상자 등)의 고객만족도	수요자 고객만족도	70%
녹색성장 지원	1. 금융업권별 녹색금융 실천 계획 마련 유도	녹색금융 실천 계획 마련	계획 마련 여부	계획 마련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09년 목표치
	2.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	방안 마련 여부	방안 마련
따뜻한 사회 구현을 위한 금융지원	1. 마이크로크레딧 활성화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건수	'08년 중 지원 건수에서 20% 상향 조정	5,400건
	2. 신용회복기금 확대를 통한 금융소외자 지원	신용회복기금 지원 인원 증가율	'08년도 지원인원에서 20% 추가 지원	20%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추진	1. 불완전판매 재발방지 추진	①판매인력 등급제	도입 여부	신규진입
		②미스터리 쇼핑 실시	실시 여부	신규진입
		③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시행령개정여부	시행령개정
	2. 파생금융상품 투자자보호장치 강화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	개정 여부	법/령 개정
	3. 금융회사 내부통제 및 KPI 제도개선	①내부통제 개선	국회제출 여부	법
		②KPI 개선	은행별 시행여부	은행별 자율시행
	4. 금융교육 활성화	금융교육 실시 횟수	금융교육 횟수	800회
	5. 일자리창출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①산업자금지원	지원액	10조원
		②특별펀드조성	펀드규모	300억원
		③보증기관 보증지원	보증지원액	12.3조원
금융서비스의 다양화고도화 추진으로 변화된 금융수요 충족	1. 다양한 파생상품 도입 추진	다양한 파생상품 도입	신규 상품상장 수	2
	2. 헤지펀드 도입	헤지펀드 도입 여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여부	시행령 개정

□ 평가 제외 : 해당 없음

2. 재정사업(일반재정, R&D, 정보화 사업 포함)

[1] 일반재정사업

□ 평가 대상 : 2개 관리과제

○ '09년 평가대상 재정사업* : 금융전문인력양성, 금융정책알리기

* 재정사업의 경우 연도별로 전체 과제의 1/3씩 평가

< 재정사업 세부현황 >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09년 목표치
모니터링 강화 및 선제적 대응으로 금융시장 안정 달성	정책금융기관 역할 강화	①원스톱 현장지원반 설치 및 운영	현장 지원반 설치 및 운영여부	지원반 설치, 운영
		②중기정책금융지원 집행규모	계량	국책은행:68조 보증기관:6조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를 통한 시스템리스크 방지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자산 매입추진	부실채권 매입규모	부실채권 매입규모	3조원
금융글로벌화의 지속적 추진으로 국제경쟁력 강화	1. 금융중심지 육성	①금융중심지 추진위 개최 ②금융클러스터 조기정착	회의개최 횟수 건의사항 수용	2 제도개선
	2.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지원	외국 금융회사 애로사항 해소	각종 인허가 및 영업관련 애로사항 처리 횟수	개선
	3. 금융관련 국제협력	우리 금융회사의 상대국 진출 지원 실적	금융협상 및 MOU체결 실적	개선
	4. [평가과제] 금융전문인력 양성	①입학생 지원율 ②졸업생 취업 성취도	정원 대비 지원자 수 취업 현황 조사	3 : 1 개선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추진	1.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 출연	기금출연 실적	기금출연액	650억원
	2. 저축의 날 행사	저축의 날 행사 개최	개최 여부	저축의 날 행사 개최
	3. 모기지론 이차보전	금리우대 보증자리론 공급 실적	연간 보증자리론 실적	2,000억원 3,300세대
	4. 한국주택금융 공사 출자	①MBS 발행실적 ②SLBS 발행실적	연간 발행실적 연간 발행실적	42,000억원 25,000억원
	5. 역모기지론 활성화 출연 및 노후연금 보증	주택연금 공급실적	연간 주택연금 지원실적	303억원
금융서비스의 다양화·고도화 추진으로 변화된 금융수요 충족	[평가과제] 금융정책 알리기	세부사업 달성도	(완료 사업 개수 ÷ 세부 사업 개수(5개))* 100	100%
		금융정책 인지도 향상	홈페이지 방문자수 증가	개선

[2] R&D사업

☐ 평가 대상 : 해당 없음

[3] 정보화 사업

☐ 평가 대상 : 2개 관리과제

< 평가대상 세부현황 >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09년 목표치
핵심 금융인프라 선진화로 금융 발전 촉진	1. 효율적 금융 및 감독정책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내부사용자 만족도	$\sum(\text{항목별가중치} \times \text{항목별응답자}) / \text{전체응답자}$	85%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의 선진화	2. FIU 전산망 구축 및 운용	① 행정자료 입수 온라인화 ② 자동 배당된 기초 분석의 적중률 향상	자료제공 일시 - 자료요청 일시 $(\text{자동배당 건수} / \text{전체제공 건수}) \times 100$	12일 45%

3. 행정관리 역량

☐ 평가대상

- 인사관리, 조직관리, 재정운용, 정보화관리 등 4개 영역별 기관 내부 관리능력 및 생산성 향상 노력

IV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1. 평가부문별 평가체계

(1) 평가 개요

평가부문	평가대상	평가방법	평가지기
주요정책	'09년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모든 정책과제	계획수립의 적절성(15점), 시행과정의 적절성(10점), 정책효과성(15점), 성과달성도(60점)를 평가 * 총 평정점수에 따라 평가과제를 5등급(우수~미흡)으로 구분	'09년 11월말 실적을 기준으로 '10년 부처업무보고 전까지 평가완료
재정사업 (일반재정, 정보화)	'09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과제중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된 관리과제 * 전체과제의 1/3씩 평가	전 부처 공통 평가지표체계 적용	'09년 12월말 실적을 기준으로 '10.1월~2월 평가
행정관리	기관의 조직, 인사, 정보화, 재정운영 등의 관리능력	전 부처 공통 평가지표체계 적용	주요정책과제와 함께 평가

(2) '09년 평가과제 현황 및 소위별 소관과제

- 주요정책 31개, 재정사업 4개(일반재정사업 2, 정보화사업 2)

평가부문	평가과제	소위별 소관과제		평가지행부서 (평가총괄부처)
		자체평가위 소위원회	소관 실국	
주요정책	○ 31개	1소위 : 16개	기획조정관실(2), 금융정책국(8), 국제협력관실(3), FIU(3)	행정인사과 (국무총리실)
		2소위 : 15개	금융서비스국(6), 자본시장국(7), 기업재무개선지원단(2)	
재정사업 (일반재정, 정보화)	○ 4개 - 일반재정(2) - 정보화(1)	일반재정, 정보화 사업으로 평가위원을 나누어 평가	(일반재정) 글로벌금융과(1), 대변인실(1) (정보화) FIU(1), 의사운영정보팀(1)	기획재정담당관실 (기획재정부)
행정관리	○ 조직, 인사 등 기관역량	3소위	행정인사과, 의사운영정보팀	행정인사과 (행정안전부)

2. 주요정책과제

[1] 평가체계

- 평가결과의 관대화 경향을 방지하고 과제간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효과성'과 '성과지표의 적절성' 평가항목의 점수를 구간별로 강제배분(상대평가)
- 해당과제의 파급효과, 문제점 진단, 성과부진 원인분석 및 대안 제시가 가능하도록 정성적 측정방법을 병용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배점	비고
계획수립의 적절성 (15점)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 관련통계현황사례 조사 및 이해관계자(정책수요자)전문가 의견수렴 여부	15	대부분의 과제가 법령개정·제도개선 과제로 의견수렴이 중요 (절대평가)
시행과정의 적절성 (10점)	추진일정의 충실성	○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여부	10	평가수행 객관성과 평가결과 수용가능성이 높은 지표 (절대평가)
정책효과성 (15점)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 여부 ○ 해당과제가 상위목표(성과목표) 달성에 기여한 정도	15	정책수행의 궁극적 목표인 정책효과성 측정 필요성 과제별 강제배분적용 (상대평가)
성과달성도 (60점)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50	공통평가지표 (절대평가)
	성과지표의 적절성	○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10	공통평가지표 과제별 강제배분적용 (상대평가)

[2] 세부평가지표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15점)

평가지표	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측정방법	<p>○ 관련통계현황·사례 조사 및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여부</p> <table border="1"> <tr> <td>①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사전조사</td></tr> <tr> <td>②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td></tr> </table> <p>- ①,②를 모두 충족 : 15점(S) - ①,②중 1개만 충족 : 10점(A) - ①,② 모두 미충족 : 5점(B)</p> <p>* 단, 과제의 특성 상 사례분석이 불가능하거나 의견수렴이 불필요하다면 일정 점수 부여</p>	①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사전조사	②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①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사전조사			
②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측정기준	<p>○ '충족' 판단 기준</p> <p>①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사례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검토 실적이 있는 경우 충족 - 통계현황이나 사례조사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하며, 근거자료의 출처도 함께 명시 <p>②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협의회, 설문조사나 관련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검토 실적이 있는 경우 충족 - 개최 계획(공문, 업무연락, 온나라시스템의 게시물 포함) 및 의견수렴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검토 실적 필요 <p>* 분석은 계획수립단계에서 실시된 경우 인정(기본적으로 성과관리시행 계획 작성 전후부터 자체평가 계획 작성 시까지의 기간에 실시하여야 함)</p> <p>* 다만, 예외적으로 계속사업의 경우, 상황변화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분석 및 의견수렴이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다면 기존에 실시한 것이라도 제한적으로 인정</p>		
평가근거/자료	<p>○ 통계자료나 사례조사 분석결과 인용시 분석자료</p> <p>○ 공청회, 간담회, 협의회, 설문조사, 전문가 회의 개최 공문 및 결과</p>		

② 시행과정의 적절성(10점)

평가지표	2. 추진일정의 충실성
측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여부 ○ 자체평가계획상의 과제별 추진계획 - 자체평가계획상에 수립한 관리과제의 추진계획에 따라 모든 일정을 완료한 경우 : 10점(S) - 추진계획 대비 일정 준수사항이 90% 이상인 경우 : 7점(A) - 추진계획 대비 일정 준수사항이 80%~90%미만인 경우 : 4점(B) - 추진계획 대비 일정 준수사항이 80%미만인 경우 : 1점(C)
측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족' 판단 기준 - 평가대상과제별로 자체평가계획상의 추진계획 일정을 기한 내에 모두 완료한 경우 * 일정지연이 전적으로 외생적 요인에 의한 경우에는 자체평가시 그 사유를 고려하여 평정 * 추진계획 대비 일정 준수사항이 80%미만인 경우라도 12월말 기준으로 지연되었던 사항이 모두 완료된 경우에는 일정점수를 부여 ○ 일정지연 관련 외생변수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 환경(대북관계 포함) 변화에 의해 지연된 경우 - 사회적으로 점에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의 이해관계자 및 관련기관의 반대로 지연된 경우 - 국회 파행으로 인한 개회 일정 지연 등으로 목표를 미달성한 경우 등
평가근거/자료	○ 각 사업별 추진계획 대비 최종실적

③ 정책 효과성(15점)

평가지표	3.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측정방법	<p>○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 여부 및 해당 과제가 상위 목표(성과목표) 달성에 기여한 정도</p> <table border="1"> <tr> <td>④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구체적으로 발생</td></tr> <tr> <td>⑤ 해당 과제가 상위목표(성과목표) 달성에 기여 정도</td></tr> </table> <p>○ 자체평가위원회에서 과제별로 4단계 강제배분</p> <table border="1"> <tr> <th>평가등급</th><th>S(매우 우수)</th><th>A(우수)</th><th>B(보통)</th><th>C(미흡)</th></tr> <tr> <td>과제별 배정 비율</td><td>20%</td><td>30%</td><td>40%</td><td>10%</td></tr> <tr> <td>점수</td><td>15점</td><td>11점</td><td>7점</td><td>3점</td></tr> </table>	④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구체적으로 발생	⑤ 해당 과제가 상위목표(성과목표) 달성에 기여 정도	평가등급	S(매우 우수)	A(우수)	B(보통)	C(미흡)	과제별 배정 비율	20%	30%	40%	10%	점수	15점	11점	7점	3점
④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구체적으로 발생																		
⑤ 해당 과제가 상위목표(성과목표) 달성에 기여 정도																		
평가등급	S(매우 우수)	A(우수)	B(보통)	C(미흡)														
과제별 배정 비율	20%	30%	40%	10%														
점수	15점	11점	7점	3점														
측정기준	<p>○ '충족' 판단 기준</p> <p>④ 정책영향(효과)이 구체적으로 발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 여부를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으로 평가 - 신규사업 등 정책영향이 발생할 단계가 아닌 경우 "획기적인 제도 개선 내용을 포함하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간 갈등 조정" 등을 통해 기본계획 등을 수립한 경우 우수점수 부여 · 다만, 그 외의 경우에는 보통점수 부여 <p>⑤ 상위목표(성과목표) 달성에 기여 정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과제의 상위목표 달성에 기여 정도를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으로 평가 																	
평가근거/ 자료	○ 정책영향 및 상위목표 기여도 판단 근거 등																	

<정책영향 측정방법>

① 정책영향이 발생한 경우

① 정책영향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

○ 정책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가 있는 경우

등 급	내 용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실적이 전년 대비 상승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적 상승률은 달성한 실적의 추세치를 고려하여 【별첨】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여부”의 측정방법에 준해서 판단 ○ 사업실적이 추세치를 반영할 정도는 아니나 소폭 상승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획기적인 제도개선, ② 다수의 이해관계자간 갈등 문제 해결 ③ “①②”에 준하는 사업성과를 거둔 경우 <p>예시) 과제명 : 노사관계 제도·관행 선진화 ⇒ 노·시간 조정 성립율 : 전년대비 3.5% 증가('04년 53.3%→'05년 56.8%)</p>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적이 전년대비 유사한 경우 ○ 실적이 전년대비 하락하였으나, 상기 “①②③”에 해당하는 경우
미흡	○ 전년대비 실적이 하락한 경우

○ 성과지표가 결과지표인 경우

등 급	내 용
우수	○ 성과지표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하여 100%달성한 경우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 목표치를 90%이상 달성하였고 목표치도 적극적으로 설정한 경우 ○ 성과지표 목표치를 100%달성하였으나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
미흡	○ 성과지표 목표치를 90%미만 달성한 경우

② 정책영향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

○ 정책수혜자 만족도 조사 및 전문가 설문 조사 실시

- 만족도 및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경우 설문조사 절차 및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인정되면 만족도 점수에 따라 정책영향 판단

* 성과지표가 만족도 조사 결과가 아니고, 정책영향을 계량화 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 부처가 만족도나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정책영향 측정 방법으로 인정

- 다만 이 경우도 만족도 조사 계획을 자체평가(12월 이전)전에 수립할 필요

등 급	내 용
우수	○ 만족도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보통	○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경우
미흡	○ 만족도 점수가 50점 미만인 경우

○ 정성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 급	내 용
우수	○ 당초 수립한 사업계획의 목적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기대 효과가 모두 나타난 경우
보통	○ 당초 수립한 사업계획의 목적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의 기대 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난 경우
미흡	○ 당초 수립한 사업계획상의 목적 및 성과관리시행 계획의 기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정책의 부정적 효과가 나타난 경우

② 정책영향이 발생할 단계가 아닌 경우

- ① 획기적인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 ② 다수의 이해관계자간 갈등 조정 등을 통해 기본계획 등을 수립, ③ 외부(국민, 언론, 국회 등)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경우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되면 우수점수를 부여

- 그 외는 보통점수를 부여

예시) 과제명 : 과학기술 기본계획 수립, 일과 가정 양립지원 확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등

④ 성과달성도(60점)

평가지표

4-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50점)

측정방법

- 당초 설정한 목표의 달성여부를 확인하여 4단계로 배점부여
< 4단계 배점 방법 >

평가등급	S(매우 우수)	A(우수)	B(보통)	C(미흡)
점수	50점	45점	40점	35점

측정기준

① 'S' 판단 기준

- 목표치가 적극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면서 과제의 목표달성은 물론 상위목표의 달성에도 기여한 경우
- 언론 또는 기타 객관적인 자료등을 통해 긍정적인 정책영향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② 'A' 판단 기준

- 목표치가 어느정도 적극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목표는 달성되었으나 사업초기 등을 이유로 궁극적인 효과달성 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 언론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였고 긍정적인 정책영향이 나타났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③ 'B' 판단 기준

- 목표치의 적절성이 미흡하거나 검증이 곤란적인 자료를 통해 성과지표 목표치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목표치가 어느정도 적극적으로 설정되었고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나 통계수치의 신뢰성이 낮거나 검증이 곤란한 경우
- 목표치가 적극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언론 또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평가결과 사업목적을 상당한 정도로 달성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④ 'C' 판단 기준

-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이 미흡하고 목표달성도도 부족한 경우

※ 각 단계 배점의 성과 수준은 부처의 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소관별로 판단

평가근거
/자료

- 성과관리시행계획 등

평가지표	4-2. 성과지표의 적절성(10점)																	
측정방법	<p>○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p> <table border="1"> <tr> <td>①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td></tr> <tr> <td>②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td></tr> </table> <p>○ 자체평가위원회에서 과제별로 평가점수 강제배분</p> <table border="1"> <tr> <th>평가등급</th><th>S(매우 우수)</th><th>A(우수)</th><th>B(보통)</th><th>C(미흡)</th></tr> <tr> <td>과제별 배정 비율</td><td>20%</td><td>30%</td><td>40%</td><td>10%</td></tr> <tr> <td>점 수</td><td>10점</td><td>7점</td><td>4점</td><td>1점</td></tr> </table>	①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②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평가등급	S(매우 우수)	A(우수)	B(보통)	C(미흡)	과제별 배정 비율	20%	30%	40%	10%	점 수	10점	7점	4점	1점
	①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②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평가등급	S(매우 우수)	A(우수)	B(보통)	C(미흡)														
과제별 배정 비율	20%	30%	40%	10%														
점 수	10점	7점	4점	1점														
측정기준	<p>①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실적치가 있는 경우, 신규사업인 경우, 법령 제개정의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정량·정성적으로 판단 * 구체적 측정방법은 【별첨】 참조 <p>②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정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가 정책내용을 부분적이 아닌 포괄적으로 대표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정책내용과 성과지표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 또한 성과지표를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성과정보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성과정보의 신뢰성 : 예를 들어 만족도 조사시 설문항목의 적정성, 표본구성 등 측정방법이 객관적이어야 함을 의미 																	
평가근거/ 자료	<p>○ 최근 3년간 목표치 현황 자료, 신규지표인 경우 유사지표의 목표치 현황 자료 등</p>																	

2. 재정사업 / 행정관리 역량

- '09년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 및 세부매뉴얼에서 제시한 평가지표, 배점, 세부측정기준 및 방법을 반영하여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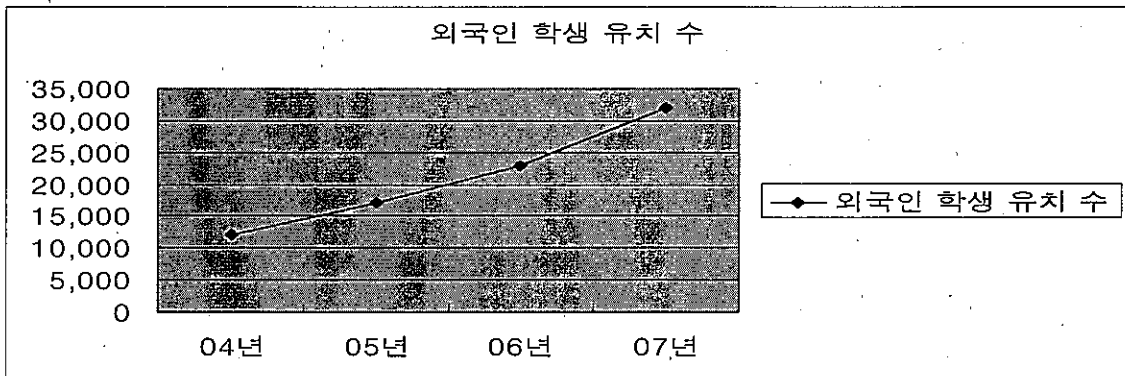
【별첨】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정도 판단기준

Ⅰ 최근 실적치를 활용하여 평가가 가능한 경우

① 최근 3년간 실적치가 상승세인 경우

- 최근 3년간 실적치가 상승세인 경우
 - 추세치 수준을 그대로 반영한 경우 : 중

예시) 교육산업의 경쟁력 강화(외국인 학생 유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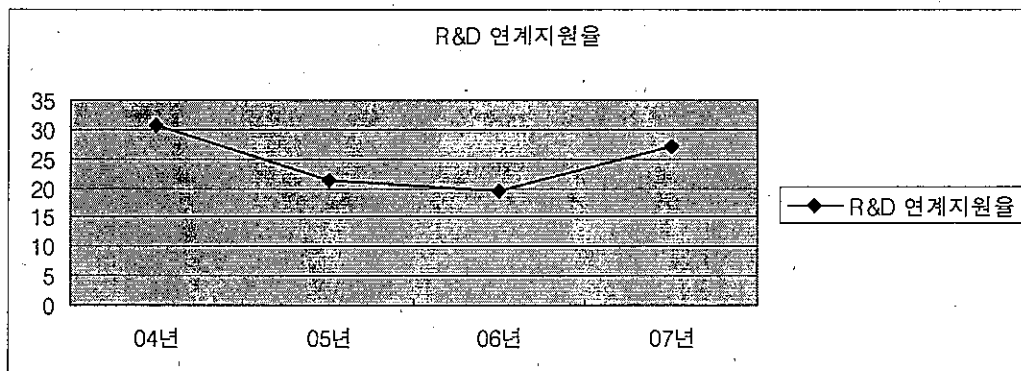


* 추세치 : 2년간 평균 증가율(예: '05~'06년 5%상승, '06~'07년 7%상승한 경우 평균 증가율인 6%가 전체 추세치임)

- 최근 3년간 실적치가 하향 추세인 경우

- 최근 3년간 실적치의 평균값 수준으로 설정한 경우 :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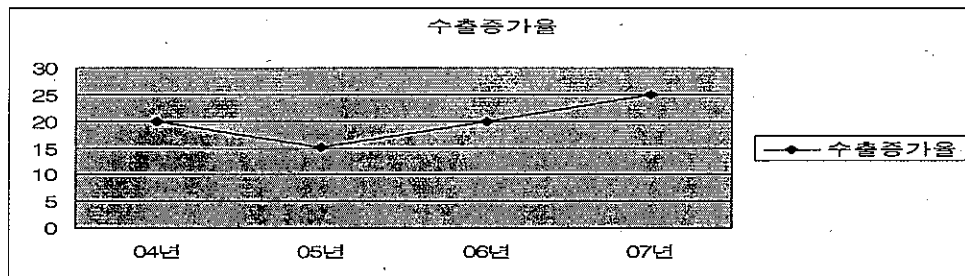
예시) 개발기술 사업화 촉진(R&D 연계지원율)



- 최근 3년간 실적치가 등락하는 경우

- 상승국면의 추세치 수준에 따라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 중

예시) 글로벌 경쟁력 강화(수출 증가율)



▪ 상승 후 하강국면일 경우엔 3년간 평균치 수준으로 설정한 경우 : 중

② 목표치가 2년간만 있는 경우 상승국면일 땐 상승세 반영 시 : 중
하향 추세 일 땐 가장 높은 목표치(실적치) 수준으로 설정한 경우 : 중

③ 목표치가 전년도 실적만 있는 경우 상승률이 전년대비 10%이상
높게 설정한 경우 : 중 (예: 5%→5.5%(상승률 10%), 50%→55%(상승률 10%))

② 신규사업 등 최근 실적치('07년, '08년)가 없는 경우

○ 업무수행 및 목표치 달성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자체평가위원회
에서 정성·정량적으로 판단

* 국·내외 관련분야나 인접분야의 통계자료 추세치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판단자료로 활용

③ 성과지표가 법률 제·개정인 경우

○ 이해관계자가 다수이거나 비용부담자가 명백하여 반대가 심한
사안 등 법률 제·개정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 목표치를 적극적
설정 한 것으로 인정

* 법률 국회 제출을 성과지표로 제시한 경우 불인정, 다만 다수의 이해관계
자 의견 조율 등 난이도가 높고 '09년도에 처음으로 추진한 법률 제정 사
업일 경우 인정

④ 국제평가지수를 활용하여 성과지표를 설정한 경우

○ 국제평가지수를 활용하여 국제적 수준의 목표치를 설정하였다면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인정

V

자체평가 방법 및 일정

1. 자체평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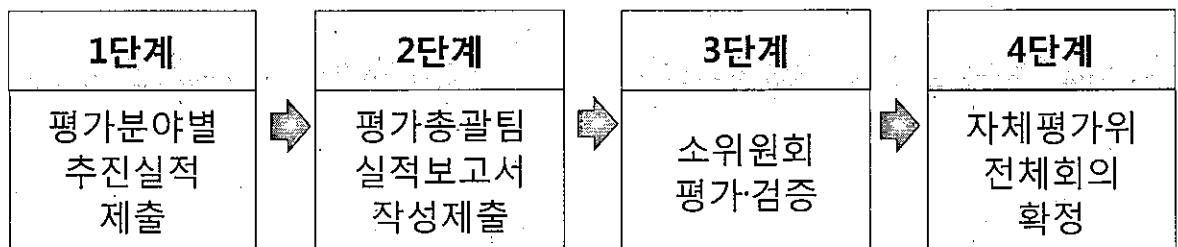
- ☐ 자체평가위원회가 주요정책, 재정성과, 기관역량부문에 대해 평가하여 평정점수 부여
- 자체평가 대상과제 전체에 대해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 실시
- 주요정책과제 평가결과는 과제별 평정점수 순위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한 평정등급을 사용하여 과제별 평가의 변별력을 제고

순위 누적 %	등급	예시(총 10개 정책)	
		동순위 미발생시	동순위 발생시
~상위 15%이내	우수	1위	-
15%초과~40%이내	다소 우수	2, 3, 4위	1, 1, 3, 4위 (동점1위를 2위로 계산)
40%초과~80%이내	보통	5, 6, 7, 8위	5, 6, 7, 8위
80%초과~95%이내	다소 미흡	9위	-
95%초과~	미흡	10위	9, 9위 (동점9위를 10위로 계산)

* 순위 누적 %= (순위/총 과제수)×100%. 단, 동 순위일 경우 하위 순위를 적용

☐ 평가 절차

- (단계적 평가) 내부 평가지원과 함께 소위원회, 전체회의로의 단계적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



* 증빙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소위원회에서 적절한 평가 및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전체회의에서는 과제 전체에 대한 균형적인 평가를 도모하는데 중점

- (1단계) 평가분야별 추진실적 제출
 - 해당 과별로 각 분기의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평가총괄팀으로 제출
- (2단계) 평가총괄팀이 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 평가총괄팀이 국·과별로 작성한 실적보고서 및 성과목표 달성 현황을 수집하여 분야별 실적보고서 작성
- (3단계) 소위원회 평가·검증
 - 평가총괄팀에서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소위원회에서 평가·검증
- (4단계) 자체평가 전체위원회 최종 심의·확정
 - 소위원회에서 제출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최종등급 확정

2. 자체평가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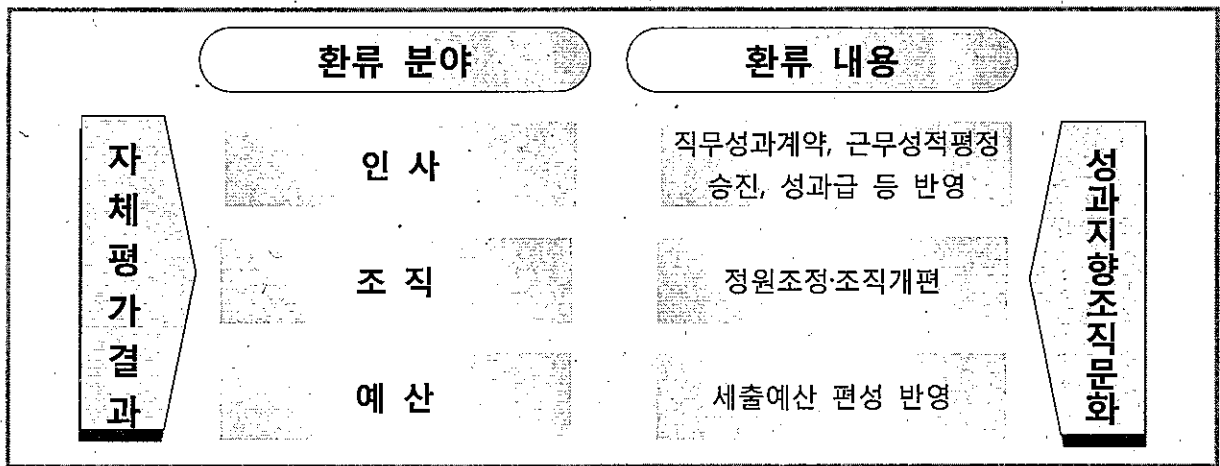
구 분	추진일정 (주관부서)		주요논의 사항
○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09.6 (행정인사과)		자체평가위원 개편방향 논의
○ 상반기 점검	'09.7 (행정인사과)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점검
○ 하반기 평가	주요정책, 행정관리 역량	'09.12 (행정인사과)	하반기 업무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
	재정사업	'10.1 (기획재정 담당관실)	

VI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

1. 기본원칙

- 평가결과를 성과급 지급시 적극 반영하여 성과지향적 조직문화 정착
- 금융정책, 금융감독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조직·인사·예산 등에 평가결과를 적극 활용



2. 평가결과의 정책, 예산, 조직 등에의 활용계획

< 정책분야 >

- 점검결과 추진실적이 부진·미흡한 과제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차기 성과관리전략·시행계획 수립시 과제 및 성과지표 보완

< 예산분야 >

- 평가결과를 차년도 위원회 내 예산편성시 우선순위 결정 및 세출 구조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 조직분야 >

-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조직개편(신설·폐지 등), 인원 보충 또는 축소가 필요한 경우 조치

3. 평가결과의 개인성과(인사, 포상, 성과급 등) 활용 계획

- ☐ 개인 성과급 지급의 평가요소로 자체평가결과를 적극 반영
- ☐ 인사기준으로 연계 강화하는 방안 지속 강구

4. 평가결과 공유·확산 방안

- ☐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직원이 이를 공유하도록 하여 향후 정책개선에 활용토록 조치

VII 기타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 ☐ 자체평가 결과 및 조치계획의 보고 및 공개
 - '10.1월 까지 자체평가 위원회는 자체평가결과와 조치계획을 금융위원장에게 보고
 - 평가결과를 실·국에 문서로 통보

4.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최근 3년간)

□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 우리 위원회는 '해당사항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5. 각종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 동 건과 관련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6. 고유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 ☐ 금융위원회 주요 정책과제 '08년 정부업무 자체평가보고서를 별첨 (파일)과 같이 제출 합니다.

'08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주요정책부문-

2009. 1

금융위원회

1. 자체평가 개요

(1) 중점 평가방향

- '08년 정부업무평가는 평가결과를 종합한 기관서열화는 폐지하되 자체평가위원회에서 부처 내 상대평가 실시
- 자체평가위원회가 주요정책 대상과제 전체에 대해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 실시
- 계획 수립의 적절성, 시행과정의 충실성, 정책효과성, 성과달성도 등 주요정책과제 추진 현황 전반에 대한 평가 실시

(2) 평가추진 개요

□ 평가추진 체계

(자체평가위원회)

- 자체평가위원회는 민간위원 14인(위촉직)과 당연직 위원 4인을 포함한 총 18인으로 구성
 - 새정부의 국정철학 공유, 정책기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설된 금융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높은 식견이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 주요정책 이외의 기관역량, 정보화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이 참여하도록 구성
- * 금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6.16), 그에 따라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안 마련(06.24)
- 금융정책소위(7명), 금융서비스 소위(7명), 기관역량* 소위(4명)를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실적 점검과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

* 기관역량 : 조직, 인사, 변화관리, 정보화, 정보공개(재정성과포함)

(평가지원조직)

○ 평가 총괄 담당 : 혁신행정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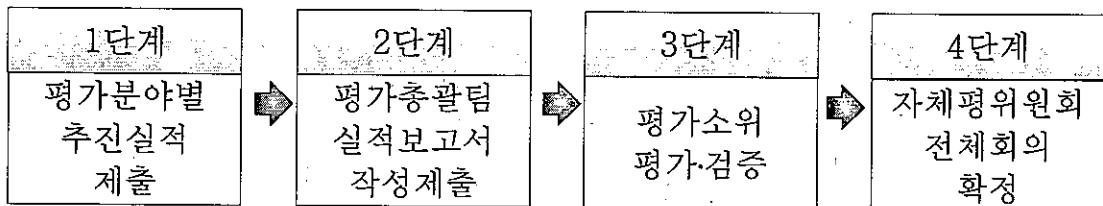
- 성과달성도 등 평가지표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등 부문별 자체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지원

○ 소위원회별 평가지원 T/F

- 소위별로 금융위 소관부서를 중심으로 평가지원 T/F를 구성
- 평가지원 T/F는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 평가활동 추진을 위해 필요한 관련자료 준비 등 위원회의 평가활동을 지원

□ 평가방법

- (단계적 평가) 내부 평가지원과 함께 소위원회, 자체평가 위원회로의 단계적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



- * 증빙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소위원회에서 적절한 평가 및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전체회의에서는 과제 전체에 대한 균형적인 평가를 도모하는데 중점

- (상대평가) 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정책과제에 대해 상대평가 실시

- 평가지표 중에서도 정성적 평가 성격이 큰 항목에 대해서는 상대평가를 병행하여 평가의 변별력을 제고

※ 상대평가 대상 평가지표

1. 계획수립 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3.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 평가대상

- '08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의 전략목표는 5개, 성과목표는 14개이며, 전체 관리과제 31개를 평가대상으로 선정

○ 평가지표

평가지표	측정항목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 관련통계현황·사례 조사 및 이해관계자(정책수요자) 전문가 의견수렴 여부
추진일정의 충실성	○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여부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 여부 ○ 해당과제가 상위목표(성과목표)달성에 기여한 정도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성과지표의 적절성	○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2. 평가결과 총평

(1) 평가결과 개요

- '08년도 14개 성과목표, 31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우수 5개(15%), 다소우수 8개(25%), 보통 13개(40%), 다소미흡 4개(15%), 미흡 1개(5%)로 나타남
 - 우수한 과제는 금융규제 전수조사, 권역별 법령 정비작업 추진, 산업은행 민영화, 회계·공시제도 개선, 헤지펀드 도입이며, 미흡한 과제는 자산유동화(ABS)제도 개선인 것으로 평가됨
- 전체 44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율은 96.4%로
 - 34개 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10개 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함
 - 성과목표 미달성은 국회 일정지연으로 인한 법안 통과 지연 및 금융위기로 인한 정책 환경변화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2) 주요성과

- 금융규제 전수조사, 권역별 법령 정비작업 추진, 산업은행 민영화, 회계·공시제도 개선, 헤지펀드 도입은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 금융규제 전수조사는 현존하는 모든 금융규제에 대해 존치·완화·폐지 여부를 '수요자(민간) 주도'로 심사·결정 함에 따라 상위 성과목표인 “규제개혁 효과의 전략적 추진”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음

- 권역별 법령 정비작업 추진은 은행업과 보험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반영한 은행법과 보험업법 개정을 적기에 추진하였으며,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등 규제대상인 시장참여자의 needs를 반영한 입법을 추진하였음
- 산업은행 민영화는 관련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단기간내 민영화 방안 및 법안을 마련하였으며, 경쟁력 있는 투자은행그룹 육성 기반 조성으로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회계·공시제도 개선은 국제회계기준 수용 등과 함께 우리나라 공시제도를 글로벌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공시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였음
- 헤지펀드 도입은 리스크 대비 고수익 상품 설계, 위험관리 수단 제공 등을 통해 자본시장 효율성과 유동성을 증진 시키고, 궁극적으로 금융시장의 자금중개기능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됨

(3) 개선·보완 사항

- 자산유동화(ABS)제도 개선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 자산유동화(ABS) 제도 개선을 위하여 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한 자산보유자 범위 확대, 유동화 관련 공시 및 등록제도 개선, 합성CDO 발행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 하였으나,
 - 전세계적으로 유동화증권의 리스크에 대한 재평가와 유동화 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자산유동화법 개정을 당분간 유보키로 함

- 상황이 호전될 경우 자산유동화법 개정을 재추진 할 것이며,
- 법 개정 전이라도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은행들의 자금조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조화 커버드본드(Structured Covered Bond) 등 새로운 유형의 유동화증권 발행을 지원(08.5월~)하였음

< 평가결과 종합 >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
금융규제 전수조사	우수
권역별 법령 정비작업 추진	우수
금산분리 완화의 단계적 추진	다소우수
산업은행 민영화의 단계적 추진	우수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	다소우수
금융회사 해외 진출 규제완화	보통
금융중심지 육성	보통
신BIS 도입을 통한 은행권 리스크 관리 강화	다소우수
증권사리스크 평가 시스템 구축	다소우수
RBC 제도 도입	보통
현장 밀착형 신속 대응체제 마련	다소우수
국내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보통
회계·공시 제도 개선	우수
예금보험 제도 개편	보통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보통
자산유동화제도(ABS) 개선	미흡
회사채 정보시스템 구축	보통
헤지펀드 도입	우수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선진화, 국제공조 강화	다소우수
심사분석 등 제도 운영의 내실화	보통
금융회사의 자금 세탁방지 업무 이행수준 제고	보통
국제수준의 투자권유·판매제도 도입 및 고객자산운용의 책임성 확대	다소우수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
수익자 편익 중심의 공시, 감독 강화	보통
시장 투명성 제고	다소미흡
소액서민 금융재단을 통한 금융소외자 지원	보통
신용회복기금 설치를 통한 금융소외자 지원	보통
신용회복지원 기록 말소	다소우수
불공정 채권추심 방지법 제정	다소미흡
(가칭)KIF 설립 추진	보통
<선택과 집중>에 의한 보증지원체계 구축	다소미흡
선진행정 구현을 위한 윤리의식 확립 및 효율적 감사체계 구축	다소미흡

3.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1	금융규제 전수조사	우수
---	-----------	----

(1) 평가결과 종합

□ 현존하는 모든 금융규제에 대해 존치·완화·폐지 여부를 '수요자(민간) 주도'로 심사·결정

○ 150여개의 금융관련 법령 및 감독규정 등을 대상으로 기능별로 4차례에 걸쳐 1,444건의 금융규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상위 성과목표인 “규제혁파의 전략적 추진”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반을 마련

- 총 316건(전수조사 1,444건의 21.8%)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08년 중에 182개 과제를 개선완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어느 부처도 이렇게 광범위하게 규제를 전수조사한 사례가 없는 과제로서 지표가 매우 적극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평가됨
2.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우수	'금융규제 전수조사 계획 및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운영계획'을 수립('08.4)하고, 분야별로 10차례에 걸쳐 규제개선사항을 발표하는 등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100% 달성
3.계획수립 시 사전 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우수	금융규제 현황, 규제수준, 과거 규제개혁추진방법, 해외사례 등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금융업계·협회·연구원 등 수요자로부터 규제개선 요구사항을 취합하였으며, 민간중심의 규제개혁심사단을 구성하여 수요자 입장에서 규제개혁을 추진
4.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추진일정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였음
5.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우수	금융규제에 대한 체계적인 전수조사가 이루어짐으로써 향후 기능별 금융법령정비의 기반을 마련

(1) 평가결과 종합

□ 시장참여자의 needs를 반영한 권역별 법령 정비작업 추진

- 은행업과 보험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반영한 은행법과 보험업법 개정을 적기에 추진하였으며,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등 규제대상인 시장참여자의 needs를 반영한 입법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정책내용과 성과지표 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고 대표성이 있음
2.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우수	은행법·보험업법개정안 국회제출 목표 달성 및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제정완료
3.계획수립 시 사전 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우수	금융규제 전수조사·연구 용역·해외사례 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4.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추진일정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였음
5.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우수	규제전수조사 등 그간 규제개혁과제를 모두 포함하여 금융산업 규제혁파에 기여

(1) 평가결과 종합

□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국회제출 및 각 시행령 개정·시행 등 금산분리 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 은행주식을 보유하는 동일인의 범위에서 BTO·BTL 관련회사 등을 제외함으로써 공적 연기금 등이 BTO·BTL 관련회사 투자로 인하여 산업자본에 해당되어 은행주식 보유가 제한되는 문제점을 해소

- 관련법안 연내 국회제출 및 동 안의 취지·기대효과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설득을 추진하는 등 전반적으로 우수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제도개선 완료라는 목표치 설정은 적절함
2.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우수	제도개선 관련 법안을 마련하여 국회 제출
3.계획수립 시 사전 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다소 우수	해외사례 조사 및 정책세미나 개최 등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 수시 수렴
4.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추진일정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였음
5.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다소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행자본 확충을 통해 우리 은행산업의 경쟁력과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제고 ·정부소유 은행의 원활한 민영화를 위한 장애요인 해소 ·국내 은행 경영지배구조 개선의 기반 마련 ·금산분리 완화·산업은행 민영화 등의 단계적 추진에 기여

(1) 평가결과 종합

□ 산은 민영화 방안의 확정·발표, 산업은행법 개정안 국회 제출 등 산업은행 민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 산업은행 민영화는 관련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단기간 내 민영화 방안 및 법안을 마련하였으며, 경쟁력 있는 투자은행그룹 육성 기반 조성으로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민영화 목표를 시장마찰 해소에만 두지 않고 국정목표와 금융정책의 비전 달성과 연계하여 장기적인 비전하에 추진하였으므로 성과지표의 적절성이 인정됨
2.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우수	산은 민영화 방안 확정, 산은법 개정안 국회 제출
3.계획수립 시 사전 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우수	해외 정책금융기관 역할 변천 및 선진금융기관의 발전 사례를 조사하고 유관기관과 수차례 협의과정을 거쳤으며, 전문가의 의견 수시 수렴
4.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지주사 설립이 지연되었으나, 외부적 요인 및 업무 난이도를 고려하여 점수 부여
5.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우수	경쟁력 있는 투자은행그룹 육성 기반 조성으로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1) 평가결과 종합

□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국회제출 등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금융그룹 육성의 계기 마련

- 관련법안 연내 국회제출 및 동 법안의 취지·기대효과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설득을 추진하는 등 전반적으로 우수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제도개선 완료라는 목표치 설정은 적절함
2.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우수	제도개선 관련 법안의 국회제출
3.계획수립 시 사전 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다소 우수	지주회사 관련 해외사례 조사 및 정책세미나개최 등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 수렴
4.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추진일정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였음
5.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다소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주회사그룹 통합감독을 통해 외환위기와 같이 그룹 단위로 일어날 수 있는 금융위기의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킴 ·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소유지배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기 마련 ·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금융그룹을 육성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양질의 금융서비스와 직장을 제공 · 과감한 금융규제 혁파로 글로벌 플레이어 출현기반 마련에 기여

(1) 평가결과 종합

☐ 금융회사 해외진출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우리 금융회사의 글로벌화 촉진을 위한 기반 마련

- 은행의 해외진출시 감독당국에 원칙적으로 사후보고, 예외 사전협의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 국회제출 및 보험사의 해외자회사 주식소유에 대해 자회사 주식소유 총액 한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보험업법시행령 개정 완료

- 향후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심의 과정에 성실히 대응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은행 및 보험사의 해외진출을 위한 규제완화 중 사전협의 완화와 지분취득 제한 철폐가 중요하므로 지표 적절
2.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우수	은행 해외진출을 위한 법률개정안 국회제출 및 보험사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분취득 제한 철폐를 위한 시행령 개정 완료
3.계획수립 시 사전 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보통	관계자 의견 수렴 및 수요 분석
4.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추진일정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였음
5.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보험사 해외진출을 위한 기회 증대 · 개방 및 해외진출 확대를 통한 글로벌 금융 가속화

(1) 평가결과 종합

□ 국내외 금융회사와 금융전문인력이 모여 금융비즈니스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

- 관계부처, 금융협회 및 외부 민간전문가 등으로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5개 시도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09.1월 금융중심지 지정
- 국내외 금융회사의 국내 진입 및 해외진출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One-stop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개소
-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운영방법 개선 및 금융중심지 조성발전 기본계획 보완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구성과 금융중심지 지정은 금융중심지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로서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인정됨
2.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다소 우수	위원회 개최실적 등은 목표가 달성되었으나, 금융중심지 지정시기는 지자체 심사자료 보완 등의 사유로 다소 지연('09.1월 지정)
3.계획수립 시 사전 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보통	금융산업선진화 의견조사, 위원회 구성,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실시
4.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금융중심지 지정이 다소 지연
5.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금융산업 성장력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1) 평가결과 종합

□ 금년부터 시행되는 신 BIS기준에 의한 은행 리스크 관리 강화

- 은행 자체적인 평가 모형에 의한 기업등급 평가를 인정하는 내부 등급법의 승인으로 은행의 최저자기자본 비율 규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은행 대출여력을 늘리는 효과
- 내부 등급법 승인신청을 한 9개 은행에 대하여 8개 은행에 대해 심사에 착수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신 BIS 협약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은행의 리스크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은행 자체적인 기업 신용도 평가가 중요하므로 지표 적절
2.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우수	75% 이상인 성과목표치 달성
3.계획수립 시 사전 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우수	은행 자본 확충 효과 및 은행 수요 분석
4.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추진일정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였음
5.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다소 우수	금융회사의 건전성강화를 통한 시스템 리스크 방지

(1) 평가결과 종합

□ 제도개선을 통해 '08.7월부터 리스크평가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

- 증권회사의 리스크평가시스템 시험운영(Pilot test) 및 보완작업 완료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하여 증권사의 리스크 관리능력 강화
및 리스크 중심감독(RBS)체제 구축 기반 마련
- 시스템 구축 이후 증권사의 리스크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리스크관리 인프라가 크게 향상되는 등 증권사의 리스크관리
능력이 크게 제고된 것으로 평가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시스템 구축 여부가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의 목표치이며, 성과지표가 시스템 구축 여부 확인으로 규정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대표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음
2.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우수	리스크평가시스템 도입을 완료하여 성과 목표 달성
3.계획수립 시 사전 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다소 우수	증권업계 리스크관리실태 조사 및 설명회, 공청회, T/F 구성 등을 통한 외부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4.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추진일정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였음
5.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다소 우수	증권사의 리스크관리 인프라가 확대 및 능력 제고를 통해 잠재적 위험요인에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음

(1) 평가결과 종합

□ RBC제도 종합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보험회사의 제도시행 준비 지원

○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선진화 및 자본충실화 유도방안을 마련·추진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안정성 제고

－ 특히, 국제적 정합성과 우리 금융환경의 특수성을 조화롭게 반영하는 감독제도 구축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성과지표인 감독규정개정 및 방안마련 등의 감독제도 개선은 비계량지표로서 추진 시 의견수렴 절차, 환경분석 등을 거치므로 목표달성 여부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적절
2.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우수	성과지표인 감독제도 정비 및 도입방안 마련하여 당초 설정한 목표를 모두 달성
3.계획수립 시 사전 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다소 우수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를 개최한 후 결과 분석을 통해 도입안 마련
4.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추진일정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였음
5.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다소 우수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증대되고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감독기구 주도로 개별 회사의 리스크 수준을 일일이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보험회사 스스로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강화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

(1) 평가결과 종합

□ 주요 이슈 및 잠재적 리스크 요인에 대한 수시 점검 및 분석, 해외 동향 분석 및 보고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진행상황 및 한국시장에 대한 해외시각 수시 점검

- 글로벌 금융위기 확산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여 금융시장의 리스크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조기 발굴 및 선제적 대응에 기여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시장별 동향 파악 및 위험 징후 발견 등은 시장분석 및 모니터링의 대표적 업무
2.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다소 우수	성과지표인 미시·거시·금융산업 모니터링 체제 운영 및 가동은 목표치인 12번 점검 및 보고 등을 달성
3.계획수립 시 사전 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우수	한은·KDI등의 시장분석 자료 및 각종 민간연구기관의 분석자료 등 외부자료와 그간 진행해왔던 정부내부의 시장분석자료 등을 토대로 사례조시 실시
4.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추진일정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였음
5.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리스크 요인 조기 발굴 및 선제적 대응에 기여 ·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해외의 시각을 종합적으로 분석, 대응논리 마련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통해 한국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 및 대내외의 부정적 인식을 완화 · 글로벌 위기 진화에 따른 시장 급변동 상황에서 시장 상황에 대한 즉각적 followup 가능

(1) 평가결과 종합

□ 관계기관간 긴밀한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합동 포럼 개최를 통해 민간과 정부의 의사소통 활성화

- 일일 상황점검회의 및 매주 거시감독포럼 등을 개최하여, 정책당국 간 커뮤니케이션 강화 및 금융정책, 거시정책, 통화정책 등의 유기적 연계 등에 기여
- 연구기관, 신용평가기관 및 애널리스트 등 민간연구기관 등과 민관합동포럼을 개최하여 민간과 정부의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시장상황의 정확하고 빠른 업데이트 및 정책 수립·집행 과정에서의 혼선을 최소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관과도 협의 채널을 구축하고 월 1회 정기적으로 가동하기로 한 목표치는 적절
2.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다소 우수	관계기관간 협의채널 구축에 기여하였으며, 매주 거시감독 포럼 개최 등 민관합동포럼 등으로 민관합동포럼 10회 이상 목표 초과달성
3.계획수립 시 사전 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보통	타부처의 협조체제 구축 사례 등을 참고하였으며, 이해 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협의채널구축
4.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추진일정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였음
5.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시급한 정책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교환 및 시장 상황에 대한 다양한 시각 및 정보 수시 업데이트

(1) 평가결과 종합

□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도록 회계제도를 정비하고 기업의 과도한 회계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회계제도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

- 회계·공시제도 개선은 국제회계기준 수용 등과 함께 우리나라 공시제도를 글로벌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공시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였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국제회계기준 및 연결중심 공시제도가 원활히 정착되도록 관련법령 정비를 포괄적으로 대표하고 있으며, 공시제도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병행함으로써 목표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추진
2.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우수	외감법, 자본시장법 국회제출을 완료
3.계획수립 시 사전 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우수	관련 제도의 통계현황,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회계제도 선진화 추진단, IFRS 조기도입 자문 TF, 공시제도 개선 T/F등을 통해 기업 및 전문가 의견 수렴
4.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추진일정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였음
5.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우수	기업 등의 과도한 회계부담을 완화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금융인프라 서비스 선진화 구축

(1) 평가결과 종합

☐ 예금보험제도 개편방안을 바탕으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제출

- 예금보험제도 개편 T/F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예보제도 개편방안을 5월중에 마련하고 이를 반영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21일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과제추진 계획을 달성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성과 지표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
2.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우수	예금자보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목표 달성
3.계획수립 시 사전 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보통	예금보험제도 관련 해외사례 수집·분석 및 예금보험제도 개편 T/F 운영
4.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추진일정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였음
5.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예금보험제도의 선진화 달성

(1) 평가결과 종합

□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및 부처합의안 마련

- 단기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진 방안 및 계획을 마련하고, 시장 전문가, 유관기관 등을 중심으로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TF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추진 방안을 구체화
- 콜 시장 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단기금융시장 제도개편에 따른 시장 영향분석 연구용역을 추진함으로써 제도개편 방안의 실현가능성과 타당성을 점검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하여 최초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관련 제도개선이 필수적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성과지표의 적절성이 인정됨
2.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다소 우수	제도개선안 마련이라는 목표 달성
3.계획수립 시 사전 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다소 우수	단기금융시장 통계 및 단기금융시장 제도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추진 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
4.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추진일정에 맞게 추진하였으나 제도개선을 일부 실시
5.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다소 우수	기관간 RP거래 비중 확대 등 자금중개기능의 다양화라는 상위목표 달성에 기여

(1) 평가결과 종합

□ 자산유동화(ABS) 제도 개선을 위하여 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한 자산보유자 범위 확대, 유동화 관련 공시 및 등록제도 개선, 합성CDO 발행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산유동화법 개정안 마련

○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유동화증권의 리스크에 대한 재평가와 유동화 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법 개정을 당분간 유보

○ 법 개정 전이라도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은행들의 자금조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조화 커버드본드(Structured Covered Bond) 등 새로운 유형의 유동화증권 발행을 지원

- 상황이 호전될 경우 자산유동화법 개정을 재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ABS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므로 성과 지표는 적절
2.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보통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나, 국회에 제출되지 못하였음
3.계획수립 시 사전 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보통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금감원, 업계, 학계, 법률전문가 등으로 「자산유동화법 개정 T/F」를 구성하여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4.추진일정의 충실성	미흡	ABS법 개정안 국회제출 지연
5.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현행 제도를 활용한 새로운 유동화제도 도입을 추진함으로써 “자금중개기능 다양화”라는 상위목표에 기여

(1) 평가결과 종합

□ 고수익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고수익채권의
부도율·회수율 정보시스템 구축

- 부도율·회수율 정보시스템 구축은 채권시장의 오랜 과제였으나 관련 정보가 충분치 않을 뿐만 아니라, 정보보유 기관간 공감대도 형성되지 못하여 시스템구축에 애로
- T/F를 구성하여 20여차례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부도율·회수율 정보 시스템 구축작업을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부도율·회수율 시스템 구축은 고수익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채권시장의 오랜 과제였으므로 적절한 지표임
2.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다소 우수	'09.1월중 회사채 정보시스템 구축 예정
3.계획수립 사전 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다소 우수	관련 통계, 보고서 분석 및 전문가 의견 수렴
4.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채권 가격결정 및 모델 구축이 다소 지연
5.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기업의 신용위험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함에 따라 고수익채권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지원

(1) 평가결과 종합

□ 헤지펀드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을 마련

- 헤지펀드 도입은 리스크 대비 고수익 상품 설계, 위험관리 수단 제공 등을 통해 자본시장 효율성과 유동성을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 금융시장의 자금중개기능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됨

- 1단계로 기존 사모펀드의 진입규제·펀드 설립규제 및 차입금지 등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여 적격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헤지펀드를 허용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법률 개정을 통해서만 금번 헤지펀드 도입이 가능하므로 성과지표 적절
2.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우수	자본시장법 국회제출 완료
3.계획수립 시 사전 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우수	선진국 사례를 충분히 조사하였고, 학계·변호사·업계 등의 전문가로 T/F 구성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설문조사 결과 활용, AIMA회의 참석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4.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추진일정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였음
5.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다소 우수	궁극적으로 금융시장의 자금중개기능을 제고하는 효과 발생

(1) 평가결과 종합

□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국제적 수준에 맞춰 선진화 달성

- 시행령 제·개정, 테러자금조달 방지체제 구축, 카지노의 자금 세탁방지제도, 강화된 고객확인제도 등을 시행
 - 이를 통해 우리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국제적 위상이 강화되고, FATF 정회원 가입을 위한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됨
- 활발한 국제활동과 국제공조 강화로 자금세탁방지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
 - 제16차 에그몽 그룹 총회 성공리에 개최하고 주요 3국과 MOU를 체결함으로써 국가간 정보교환/상호협력의 기반을 확대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08년 FIU의 대표업무로 성과지표가 대표성을 충실히 확보
2.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우수	성과 목표를 달성
3.계획수립 시 사전 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다소 우수	외국의 FATF 상호평가 수검사례 분석 및 경험 청취,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자금세탁방지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4.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추진일정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였음
5.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다소 우수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선진화와 국제공조 강화의 충실한 달성을 통해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글로벌화의 기반을 제공

(1) 평가결과 종합

□ 심사분석의 효율화를 통한 소요기간 단축

- 다양한 교육을 통한 분석자의 역량강화 및 분석시스템 효율화를 통하여 심사분석 소요기간 단축
 - 전산시스템(Kofis)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기초분석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고 기제공된 사건에 대한 분석시간 단축
- 행정정보 입수 온라인화 작업
 - 출입국정보 온라인화 완료 및 가족관계부 온라인화 협의
 - 행정자료 협조기관 및 법집행기관과의 유기적 공조체계 구축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지표가 적절하게 선정된 것으로 평가
2.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우수	심사분석소요기간 평균 32.4일(45일 목표), 주요 행정정보의 75% 온라인화(70% 목표) 등 목표 초과달성
3.계획수립 시 사전 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보통	'06, '07년 심사분석소요기간을 산출하여 추이를 분석한 후, '08년의 성과목표를 설정
4.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추진일정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였음
5.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심사분석소요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행정정보 입수 온라인화 목표 달성

(1) 평가결과 종합

□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제도(AML) 이행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AML 업무지침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제공하고 전국적 순회교육·홍보 활동 등을 통해 적극 지원

- 지속적인 AML교육과 제도이행 점검·지도활동을 펼친 결과 혐의거래보고건수가 대폭 증가하는 등 AML이행수준 개선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제도이행을 위한 기본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적절
2.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우수	금융회사의 업무지침개정 100%(목표 67%), AML모니터링 시스템구축 금융회사수 24개(목표16개), 금융회사 AML 담당자에 대한 고객만족도 79%(목표70%) 등 목표 초과달성
3.계획수립 시 사전 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다소 우수	금융회사의 AML모니터링 구축사례와 혐의거래보고현황 등의 통계자료를 참고하였으며,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
4.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추진일정에 맞게 정책을 수행 하였음
5.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다소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체계 개선 및 혐의거래 보고실적 증가 ⇒ 「금융거래의 투명성」 및 「건전한 금융시스템 구축」에 기여 · 금융회사의 AML 적극이행이 FATF 가입을 위한 상호평가시 긍정적인 효과 거양 ⇒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의 글로벌화」에 기여

(1) 평가결과 종합

□ 국제수준의 투자권유·판매제도 도입 및 고객자산운용의 책임성 확대를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정 및 보험업법 개정 추진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설명의무, 적합성원칙 등 선진 투자권유규제를 도입
 - 적합성원칙, 불초청 투자권유 금지, 의사에 반하는 재권유 금지 등 투자권유와 관련하여 고려 가능한 모든 형태의 보호장치를 도입
-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반영한 보험업법 개정을 적기에 추진
 - 적합성 원칙 도입, 상품설명 및 정보제공 의무 강화, 기초서류 준수 의무 신설 및 허위·과장광고 규제근거 마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투자권유규제는 금융소비자와 투자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규제 중의 하나이므로 지표 적절
2.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우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정 및 보험업법개정안 국회제출 목표 달성
3.계획수립 시 사전 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우수	선진국의 투자권유규제 관련 입법례를 조사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 학계, 투자자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
4.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추진일정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였음
5.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다소 우수	실제 시행시점에서 구체적인 정책효과 발생 가능

(1) 평가결과 종합

□ 보수수수료비교공시 제도 도입 및 미스터리쇼핑제도 도입

- 비교·공시시스템제도 도입을 통해 투자자 중심의 공시·감독을 강화 하였으며, 이는 자산운용사 자율적으로 판매보수를 낮추도록 유도하는 성과를 거둠
- 미스터리 쇼핑제도 시행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동시에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도 시범실시 및 선진 외국사례 집중 검토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수익자 편익 중심의 공시·감독 강화를 위해서는 판매보수 수수료에 대한 투자자의 감독체제 및 불완전판매 방지장치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성과지표는 적절함
2.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우수	성과지표 100% 달성
3.계획수립 시 사전 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보통	관련 현황 자료 및 영국 사례를 분석하고 TF 구성 등을 통해 업계,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4.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추진일정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였음
5.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다소 우수	불완전 판매 사전 방지 등 금융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에 기여

(1) 평가결과 종합

□ 조사업무 절차 및 관행 개선 등을 통해 시장 투명성 제고

- 우선사건 처리기준 마련, 공동조사 처리기준 마련, 증선위원장 긴급조치 기준 마련 등을 통하여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처리 절차를 효율화하여 사건 처리기간을 단축함
- 불공정거래 시장정보시스템 개선, 불건전거래자 정보 공유,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개선 및 거래소의 증권사 감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조사대상건수는 증가추세인 반면 조사인원은 감축되는 것을 감안하면 적극적인 목표설정으로 판단됨
2.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다소 우수	조사업무 절차 및 관행 개선은 달성되었으나, 조직개편 및 불공정거래 수법의 조직화·지능화·대형화 등으로 불공정거래조사처리율은 미달성(59.8%, 목표 : 66%)
3.계획수립 시 사전 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보통	분기 단위의 조사통계 및 불공정거래 사례 연구 등을 분석하고, T/F 구성·실무작업반 회의·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관련기관 및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4.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추진일정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였음
5.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 불공정 거래의 신속성·효율성 강화 및 사전예방 기능 강화를 통한 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 · 금융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에 기여

(1) 평가결과 종합

□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을 통해 '08년말 현재 7개 복지사업자에게 총 271억 지원

- 소액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을 통해 개별 금융기관에서 출연된 휴면예금을 통합 관리·운영하여 원권리자를 보호
- 휴면예금의 원권리자 지급준비금 이외의 재원으로 복지사업자를 활용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 구축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08년.5월 누계 기준으로 파악된 국내 마이크로 크레딧 지원 건수가 약 2,800건임을 감안할 때 목표치는 적극적으로 설정
2.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우수	현재 대략4,700건 지원하여 목표 달성
3.계획수립 시 사전 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보통	관련자료 분석 및 수차례의 회의를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4.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추진일정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였음
5.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다소 우수	각종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하여 금융소외자에 대한 권익 향상에 기여

(1) 평가결과 종합

☐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하여 1천만원이하 채무재조정 및 환승론 사업 본격 시행

○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중 금융기관 배분금을 재원으로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하여

- 금융기관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에게 채무를 재조정해 주는 한편 고금리(연 30%이상)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층에게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환승론을 시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사금융 실태조사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2.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우수	신용회복기금을 통한 채무재조정 및 환승론 사업을 본격 시행하였으므로 목표 달성
3.계획수립 시 사전 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보통	'08.3월~5월 금융소외자의 사금융 이용 현황 및 상환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사금융 실태조사를 실시
4.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추진일정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였음
5.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다소 우수	금융소외자에 대한 권익 향상에 기여

(1) 평가결과 종합

□ 자율적인 민간 협약에 의한 신용회복프로그램을 2년이상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신용회복지원중” 기록 삭제

○ “신용회복지원중” 기록 정보는 사실상 신용회복지원중인 저신용층의 신용등급 한계선(7등급)으로 작용하고 있었는 바,

- 동 정보 삭제에 따라 신용회복지원 확정자의 신용등급 한계선을 제거함으로써 저신용층에 대해 기간경과에 따라 제도권 대출이 가능한 등급에 도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 총 30.7만명에 대해 “신용회복지원중” 기록 삭제(6.2일, 6.12일)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신용회복지원중’ 기록 삭제는 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으로 완료됨을 감안할 때 적절하게 설정
2.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우수	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을 통해 ‘신용회복지원중’ 기록 삭제 근거 및 방법을 마련함으로써 목표 달성
3.계획수립 시, 사전 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보통	저신용층 신용등급분포의 변화 추정 및 이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업체와 업무협의
4.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추진일정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였음
5.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우수	‘신용회복지원중’ 기록 삭제는 신용회복중인자의 신용등급 상향요인으로 작용하여 금융소외자에 대한 권익 향상에 기여

(1) 평가결과 종합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안” 국회 제출

-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에 대하여 금지되는 채권추심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해 민사상, 행정상 제재를 가하거나,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 공정한 채권추심의 풍토를 조성하고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성과지표는 적절하게 설정
2.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우수	법률안이 법사위 제출은 되었으나, 국회통과가 지연
3.계획수립 시 사전 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다소 미흡	사금융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고, 관련 부처 및 기관의 협의를 거침
4.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상임위 및 본회의 통과가 다소 지연
5.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다소 미흡	불법채권추심 피해를 입고 있는 금융소외자에 대한 권익 향상에 기여

(1) 평가결과 종합

□ 한국정책금융공사(KPBC) 설립을 위한 정부 입법절차 완료

- 산은 민영화 추진에 따라 국제적인 정합성을 갖춘 시장친화적인 새로운 정책금융기관(KPBC)을 설립
- KPBC 설립을 통해 금융회사를 통한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도록 하여 시장의 기업선별 기능을 활용한 선진형 정책금융 방향을 제시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KPBC 법제정은 KPBC 설립의 가장 중요한 척도이므로 지표 선정은 적절함
2.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우수	법안의 국회 통과 지연
3.계획수립 시 사전 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보통	선진국의 중소기업 지원방식 사례분석 및 중소기업 금융 지원 현황 분석
4.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정부 입법절차를 완료하였으나, 국회 법안 심의일정 차질로 KPBC 설립 지연
5.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KPBC 설립은 효율적인 정책금융지원체계 도입으로 공기업 선진화라는 국정목표와 산은 민영화를 통한 글로벌 플레이어 기반마련 등의 정책목표 달성에 초석을 제공

(1) 평가결과 종합

□ 관련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는 등 방안을 검토중이나, 금융위기 상황등 외부요인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추진시기는 연기

-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 등 외부요인이 안정될 때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중기 정책금융 개편방안 마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신·기보 등 보증지원체계 개선은 중기금융지원체계 개선의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중기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 마련은 성과지표로 적절
2.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우수	구체적 방안 확정과 개편안 추진(법안 마련 등)은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일정이 연기된 상황
3.계획수립 시 사전 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다소 미흡	다른 국가들의 보증기관 운영현황 사례를 검토하고 각종 통합방안의 장단점 분석 및 전문가 의견 수렴
4.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금융위기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추진 일정 연기
5.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다소 미흡	신보·기보 등 보증지원체제의 업무중복과 비효율성을 해소하여 효율적 정책금융체제 구축에 기여

(1) 평가결과 종합

□ 금융위 공무원의 윤리의식 확립 및 감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 청렴교육 및 결의대회 개최 등 공직자 윤리의식 확립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전개하고, 금융위 감사규정(금융위 고시)과 보안업무시행세칙(금융위 훈령)을 제정
-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업무감사 실시, 예금보험공사 등 19개 금융기관에 대한 보안지도점검을 실시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성과지표의 적절성	다소 미흡	감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의 구축이 필요했음
2.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우수	성과 목표를 달성
3.계획수립 시 사전 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보통	구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및 타부처의 규정을 참고하였고 이해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법률 등)의 의견 수렴
4.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추진일정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였음
5.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08년도 국민권익위 청렴도 측정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효율적 감사체계 구축을 통해 자체감사 및 산하기관 감사를 차질 없이 시행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개선조치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상황이 호전될 경우 자산유동화 법 개정을 재추진	상황이 호전될 경우 자산유동화 법 개정을 재추진 비등록 유동화증권의 현황 파악 이 가능하도록 제도 보완

7. 임직원 퇴직, 이직, 징계현황

□ 임직원 퇴직 현황

성명	직위(직급)	퇴직일자
000	위원장	08.03.05
000	부위원장	08.03.13
000	금융정보분석원장	08.03.28
000	FIU제도운영과장	08.04.30
000	혁신행정과장	08.05.15
000	일반계약직5호	08.06.07
000	일반계약직5호	08.08.01
000	일반계약직5호	08.08.20
000	기획조정관	08.09.02
000	일반계약직6호	08.10.07
000	일반계약직5호	08.11.19
000	상임위원	08.12.09
000	부이사관	09.01.05
000	일반계약직5호	09.01.08
000	행정사무관	09.01.09
000	위원장	09.01.20
000	서기관	09.03.17
000	부이사관	09.03.26
000	행정주사	09.04.30
000	서기관	09.05.13
000	서기관	09.05.15
000	서기관	09.07.10
000	부이사관	09.09.11

□ 임직원 징계 현황

성명	직급	징계사유	처분결과
0000	서기관	음주운전	견책
0000	서기관	청렴의무위반	감봉2월
0000	사무관	음주운전	견책

8. 검찰 및 경찰의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통보서

9.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 (최근 3
년간)

☐ 검찰 및 경찰의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
통보서

○ 별도첨부

☐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

○ 별도첨부

서울종로경찰서

수신자 금융위원회위원장(감사담당관)

(경유)

제목 공무원범죄 통보

우리경찰서 관내에서 귀 위원회 직원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실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처리하였기 국가공무원법 83제조 3제항에 의거 통보합니다.

첨부 :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 끝.

서울종로경찰서



★경사

이필호

경위

이중덕

경감

장보은

교통과장

전결 04/08
입석저

협조자

시행

교통과-001658

(2008.04.08.) 접수

감사담당관-124

(2008.04.14.)

우 110-708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운동 90-18(율곡로 46)

/ <http://jn.smpa.go.kr>

전화 02-739-0333(942 /전송 02-738-4250
,230)

/ pilhlee@hanmail.net

/ 공개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우 137-741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707 (서초동 1724)

/전화 530-4564

/전송 530-4240

등록번호 사건과-3381

2008.04.14

수신자 금융위원회

발신자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검사장 대리

검사 E강성식 ㉠

제목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

귀(부) 직원 에 대한 사건이 다음과 같이 처분되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에 의거 통보합니다.

사 건 번 호		2008 형제 37859 호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소속 및 직위	금융위원회 4급
처 분 일 자		2008. 4. 14
죄 명		처 분 내 용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구약식
피 의 사 실 요 지		별 첨 과 같 음
비 고		<p>귀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사건이 위와 같이 처분되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에 의거 통보하오니, 적의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서울노원경찰서

수신자 금융위원회위원장(감사담당관)
(경유)

제목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

아래 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사를 개시 하였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의거 통보합니다.

1. 피의자 인적사항

공무원

주민번호 :
주소 : 서울
등록기준지 : 경남

2. 사건번호

2008- 제 호

3. 수사개시 일자

2008. 07. 11. 02:03경

4. 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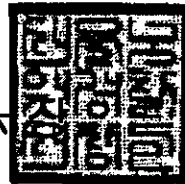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5. 피의사실 요지

피의자는 본인 소유의 호 차량을 운전하는 자로서,
11. 02:03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앞 도로에서 술
이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혈
중알콜농도(0.115%)퍼센트로 위 차량을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까지 250약미터 정도의 거리를 음주운전한 것이다.

6. 덧 붙임 :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사본 - 1부
피의자신문조사 사본 - 1부 끝.

서울노원경찰서



★경사

이승우

경위

이용선

경장

07/15

김종태

협조자

시행 경비교통과-006746 (2008.07.15.) 접수 강사담당관-672 (2008.07.16.)

우 139-702 서울 노원구 노원길 283 (서울 노원구 하계동 250) / <http://nw.smpa.go.kr>

전화 02-971-1124 /전송 02-979-4982 / lee68@police.go.kr / 공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우 139-704 서울 노원구 공릉1동 622

/ 전화 3399-4567 / 전송 3399-4568

등록번호 사건라-3192

2008. 7.23

수신자 금융위원회

발신자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 대리

검사 E이연성 ㉞

제목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

귀(부) 직원 에 대한 사건이 다음과 같이 처분되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에 의거 통보합니다.

사 건 번 호		2008 형 제 40643 호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소속 및 직위	금융위원회 5급	
처 분 일 자		2008. 7.23	
죄 명		처 분 내 용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구약식	
피 의 사 실 요 지		별 첨 과 같 음	
비 고		<p>귀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사건이위와 같이 처분되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 에 의거 통보하오니, 적의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감 사 원

바른감사
바른나라

수신자 금융위원회 위원장(감사담당관)
(경유)

제목 조사개시통보

우리 원에서 2009. 7. 27. 다음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음을 감사원법 제 3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합니다.

- 다 음 -

소 속	직 · 성명	조사대상 사건
금융위원회		민간전문가 운영에 관한 사항

끝.

감 사 원 장



감사주사보

김수만

산업금융감사국 전결 07/27
제3과장 조규환

협조자

시행 제3과-1237

(2009. 07. 27.)

접수

우 110-706 서울시 종로구 가회로 112(삼청동 25-23)

/ <http://www.bai.go.kr>

전화 02-2011-2131

전송 02-2011-2135

/ udp99@bai.go.kr

/ 비공개(6)

10. 소송현황

□ 최근 5년간 소송처리 현황

< 연도별 소송사건 처리 현황¹⁾ >

(단위 : 건)

구 분	합계	취하	각하	국가승소	일부패소	국가패소	패소율
합계 (2005~'09.8월)	67	8	2	50	2	5	10.4%
2005년	12	5	-	7	-	-	-
2006년	15	2	2	10	-	1	6.7%
2007년	10	-	-	7	1	2	30.0%
2008년	24	1	-	20	1	2	12.5%
2009.1~8월	6	-	-	6	-	-	-

주) 1) 종결사건 기준(최종확정 판결, 화해결정 수용은 일부 패소로 간주하여 처리)

<참고>

현재 진행 중인 소송 현황

제기 년도	사건명	사건내용	소송담당	진행 내역
2006	시정조치처분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제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00000가 제재 과징을 주장	금감원 (비용없음)	1심: 승 2심: 승 3심: 진행 중
2006	인가취소 및 해산통보 처분취소	자본잠식 등을 이유로 인가 취소된 0000외 1명이 자본잠식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취소요구	법무법인 세종	1심: 승 2심: 패 3심: 진행 중
2006	손해배상	000이 산업은행 등에 대한 국가의 감독부실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금감원 (비용없음)	1심: 승 2심: 승 3심: 진행 중
2007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00000 외 1명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관련 금융비주력자 판단자료 제공 거부의 취소를 요구	금감원 (비용없음)	1심: 일부 패 2심: 진행 중
2008	해임요구처분 취소	금감원 퇴직자인 000 외 1명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조치 처분의 취소요구	정부법무 공단	1심: 금융위 패 2심: 진행 중

제기 년도	사건명	사건내용	소송담당	진행 내역
2008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 기재로 제재를 받은 00000가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취소 요구	금감원 (비용없음)	1심: 승 2심: 진행 중
2008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자산양수도 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금융위 제재를 받은 00000가 적법요건 결여를 이유로 과징금부과 취소 요구	"	1심: 진행 중
2008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0000가 자산양수도 신고 불이행 등으로 증선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자 계약이 양해각서에 불과하다며 취소 요구	"	1심: 진행 중
2008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000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하지 않고 투자자를 모집하여 금융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자 본인이 투자자 모집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소 제기	"	1심: 진행 중
2008	손해배상(기)	000이 국가의 '희망모아 유동화전문회사'에 부실감독 책임을 몰어 손해배상 요구	금감원 (비용없음)	1심: 진행 중
2009	감리결과 조치 취소	000이 회계 부실감사로 증선위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자 소 제기	"	1심: 승 2심: 진행 중
2009	계약이전결정 제외 취소	000는 00상호저축은행 예금자로 5천만원이상 예금자에 대해 계약이전을 제외하는 결정은 불법이라며 소 제기	"	1심: 승 2심: 진행 중
2009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000이 상장법인의 신고·공시의무 위반 등으로 증선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 제기	"	1심: 진행 중
2009	정직조치요구처분 취소	000는 00증권(주) 00지점 과장으로 불공정거래 주문수탁금지 및 일임매매거래 제한위반으로 정직 조치를 받자 소 제기	"	1심: 진행 중
2009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000는 최대주주 변동과 관련된 신고·공시 의무위반으로 금융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자 소 제기	"	1심: 진행 중

11. 손비처리현황 또는 불납결손액

☐ 손비처리현황 : 해당 없음.

☐ 불납결손 현황

- 과징금등에 대한 결손처분은 그동안 국회(정무위)에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 과징금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07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가 금융관련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징금·과태료 체납자 중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어 징수 권한을 상실한 체납자에 대해서 현지실사 후 관련법령(국가재정법 제96조,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35조) 및 과징금징수업무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손처분을 함.

- 2007년 10건 177백만원
- 2008년 38건 2,016백만원

12.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및 배상 및 보상현황

13. 기관 예·결산 현황

1) 각종 계약 현황

- 별첨 참조

2) 해약 현황 및 배상 및 보상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기관 예·결산 현황

-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기재출

(별첨)

□ 각종 계약 현황(08.3월 - 09.8월)

(단위 : 천원)

과 제 명	용 역 비	기 간
케이블 TV 서비스 이용 계약	월589	08.4.1. - 11.3.31.
한국증권전산 CHECK단말 서비스 이용 계약	월3,696	08.4.1. - 09.3.31.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용역 계약	49,060	08.4.2. - 09.3.31.
온라인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 구축	47,000	08.5.9. - 08.7.9.
네트워크 및 PC 유지보수 계약	9,765	08.6.1.- 08.12.31.
메신저시스템 도입 계약	24,813	08.6.4.- 08.6.17.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정기회의 회의장 임대 계약	85,250	08.6.16 - 6.20
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연구용역	30,000	08.7.4-10.03
전자서명(인증) 솔루션 도입 계약	9,500	08.7.9.
외환시장 발전방향 연구용역	19,000	08.7.11-08.29
미국 FINCEN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실태 연구용역	40,000	08.7.22-08.12.21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	30,000	08.7.28-08.10.26
FTA,DDA 등 금융서비스분야 국제협상 법률적 검토 연구용역	40,000	08.8.01-08.12.24
홈페이지 부분개편 용역	9,000	08.8.1.- 08.8.15.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수준 제고를 위한 감독·검사업무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37,000	08.8.13-08.12.12

(단위 : 천원)

과 제 명	용 역 비	기 간
단기금융시장 제도개편에 따른 시장영향 분석 연구용역	20,000	08.8.18-08.10.17
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구용역	22,000	08.9.2-08.11.21
PR 자문 서비스 계약	월 8,000	08.11.01.-09.1.31.
홈페이지 개편 연구개발	29,500	08.11.5-12.26
홈페이지 연계 홍보 블로그 구축 용역	26,600	08.11.07.-08.12.26.
금융민원센터 홍보 및 안내 동영상 제작 용역 계약	9,950	08.11.19.-08.11.28.
비명시적규제 개혁 외부평가 연구용역	25,000	08.11.27-12.26
금융중심지 선정에 관한 금융 전문가 의견조사	19,000	08.12.12-12.29
네트워크 및 PC 유지보수 계약	33,000	09.1.1.-09.12.31.
청사이전에 따른 이사 용역 계약	32,511	09.1.11.-09.2.1.
청사 이전에 따른 전산실 구축 및 전산장비 이전설치 용역 계약	48,840	09.1.16.-09.2.24.
통신망 구축 용역 계약	35,113	09.1.16.-09.2.24.
통근버스 운행 계약	일:110	09.1.19.-09.12.31.
법률자문 용역 계약	1,200 한도내	09.4.1.-09.12.31.
금융상품 판매제도 도입에 따른 불완전 판매 방지방안	30,000	09.4.13 - 7.12
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방안	45,000	09.3.16 - 9.15
국내 자본시장-외환시장 연계성 증가의 파급 효과 분석	20,500	09.6.1 - 8.31

(단위 : 천원)

과 제 명	용 역 비	기 간
금융위기 이후(Post-Crisis) 대비 금융감독체제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40,000	09.6.10 - 8.15
수도권 광역금융벨트 조성 방안	30,000	09.5.13 - 6.19
위탁보증 제도 개선방안 연구	28,800	09.6.1 - 8.3
자본시장 등 금융부분별 노동력 특성 분석 및 수급 전망	30,000	09.4.21 - 9.30
금융위기의 원인분석 및 시사점분석	35,000	09.7.16 - 10.15
금융투자산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32,000	09.8.5-12.2
테러자금조달 방지 체제의 선진화 국제화 방안 연구	35,000	09.8.28-12.31
금융상품 판매제도 도입에 따른 불완전 판매 방지방안	30,000	09.4.13 - 7.12
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방안	45,000	09.3.16 - 9.15
국내 자본시장-외환시장 연계성 증가의 파급효과 분석	20,500	09.6.1 - 8.31
금융위기 이후(Post-Crisis) 대비 금융감독체제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40,000	09.6.10 - 8.15
수도권 광역금융벨트 조성 방안	30,000	09.5.13 - 6.19
위탁보증 제도 개선방안 연구	28,800	09.6.1 - 8.3
자본시장 등 금융부분별 노동력 특성 분석 및 수급 전망	30,000	09.4.21 - 9.30
금융위기의 원인분석 및 시사점분석	35,000	09.7.16 - 10.15
금융투자산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32,000	09.8.5-12.2
테러자금조달 방지 체제의 선진화 국제화 방안 연구	35,000	09.8.28-12.31

김 용 태 의원

1. 최근 5년간 금융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서 사본

☐ 별도 제출

2. 최근 5년간 금융공기업에서 제출한 성과급 신청 내용 서류 사본

- ☐ 준정부기관의 성과급 지급기준이 되는 경영실적 평가결과는 기획재정부가 주무부처와 각 기관에 통보하고 있음

※ 별첨 내용

- '04~'06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 '07~'0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 ☐ 산은·기은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경영예산심의회(금융위원회)가 결정하여 통보하고 있음('07년도부터 평가)

※ 별첨 내용

- '07~'08년도 경영평가 결과 통보 공문 사본

<별첨>

정부산하기관 '04~'06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1. 2004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 검사·검증 유형 (11개)

기관명	'04년도 평가결과			
	순위	점수	인센티브 성과급(%)	
			직원	기관장 및 임원
한국가스안전공사	1	79.24	179	83
한국전기안전공사	2	71.60	167	73
교통안전공단	3	70.94	161	69
요업기술원	4	70.29	155	64
산업기술시험원	5	70.25	150	60
선박검사기술협회	6	69.94	145	56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7	68.70	139	51
축산물등급판정소	8	63.94	129	43
한국석유품질검사소	9	63.46	123	39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10	63.42	118	35
한국소방검정공사	11	52.05	102	22

■ 금융·수익 유형 (11개)

기관명	'04년도 평가결과			
	순위	점수	인센티브 성과급(%)	
			직원	기관장 및 임원
한국지역난방공사	1	77.72	178	82
한국전력거래소	2	73.93	169	75
증권예탁결제원	3	73.00	163	70
대한주택보증(주)	4	71.59	157	65
대한지적공사	5	71.54	152	61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6	70.98	146	57
한국감정원	7	68.50	139	51
한국마사회	8	66.96	132	46
한국방송광고공사	9	66.64	127	41
88관광개발	10	60.93	116	33
별정우체국연합회	11	51.04	101	21

■ 문화·국민생활 유형 (13개)

기관명	04년도 평가결과			
	순위	점수	인센티브 성과급(%)	
			직원	기관장 및 임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1	81.54	182	85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2	73.25	169	7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72.48	164	71
국제방송교류재단	4	71.27	159	67
국립공원관리공단	5	69.03	152	62
한국소비자보호원	6	66.95	146	57
한국원자력문화재단	7	66.62	142	53
한국영상자료원	8	66.58	137	50
한국과학문화재단	9	65.73	132	46
국민건강보험공단	10	61.27	124	39
대한체육회	11	60.97	119	35
독립기념관	12	58.54	113	30
국민생활체육협의회	13	52.44	102	22

■ 산업진흥 유형 (16개)

기관명	04년도 평가결과			
	순위	점수	인센티브 성과급(%)	
			직원	기관장 및 임원
에너지관리공단	1	83.27	183	87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	81.76	178	83
한국전산원	3	79.09	172	78
한국환경자원공사	4	74.82	165	72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5	70.35	157	66
한국게임산업개발원	6	70.02	153	63
한국정보보호진흥원	7	69.77	150	60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8	69.39	146	5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9	68.41	142	53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10	67.77	138	50
한국디자인진흥원	11	67.02	134	47
대한상공회의소	12	63.40	127	41
한국인터넷진흥원	13	60.79	121	37
한국영상산업진흥원	14	59.29	116	33
영화진흥위원회	15	59.01	112	30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16	55.97	106	25

■ 연수 · 교육훈련 유형 (5개)

기관명	'04년도 평가결과			
	순위	점수	인센티브 성과급(%)	
			직원	기관장 및 임원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1	68.67	169	75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	66.15	154	63
한국산업인력공단	3	64.60	140	52
한국청소년수련원	4	55.45	118	34
한국노동교육원	5	50.98	101	21

■ 연구개발지원 유형 (6개)

기관명	'04년도 평가결과			
	순위	점수	인센티브 성과급(%)	
			직원	기관장 및 임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1	81.73	182	85
한국과학재단	2	78.29	168	75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3	76.90	157	6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	75.18	145	56
한국광기술원	5	65.31	125	40
한국학술진흥재단	6	62.09	112	30

■ 건설 · 시설관리 유형 (10개)

기관명	'04년도 평가결과			
	순위	점수	인센티브 성과급(%)	
			직원	기관장 및 임원
한국철도시설공단	1	78.50	179	83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2	77.16	172	7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	72.17	161	69
환경관리공단	4	70.27	154	6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5	70.09	148	58
부산항만공사	6	65.62	138	50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7	64.75	131	45
산재의료관리원	8	64.71	126	41
부산교통공단	9	64.12	120	36
한국체육산업개발	10	57.91	108	26

■ 연·기금운용 유형 (15개)

기관명	04년도 평가결과			
	순위	점수	인센티브 성과급(%)	
			직원	기관장 및 임원
한국수출보험공사	1	84.62	185	88
한국산업안전공단	2	77.45	174	79
국민연금관리공단	3	73.81	167	73
한국자산관리공사	4	72.96	162	70
신용보증기금	5	72.88	159	67
예금보험공사	6	70.97	153	62
정보통신연구진흥원	7	69.68	148	59
공무원연금관리공단	8	69.17	144	55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9	65.72	137	50
국민체육진흥공단	10	64.29	132	46
기술신용보증기금	11	63.91	128	43
근로복지공단	12	63.05	124	39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3	62.22	119	35
한국사학진흥재단	14	57.98	112	29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5	57.52	108	26

2. 2005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 검사·검증 유형 (12개)

기관명	'05년도 평가결과			
	순위	점수	인센티브 성과급(%)	
			직원	기관장 및 임원
한국전기안전공사	1	79.27	179	83
한국가스안전공사	2	79.09	175	80
선박검사기술협회	3	77.35	168	75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4	74.77	161	69
한국석유품질관리원	5	74.30	156	65
교통안전공단	6	69.59	147	57
산업기술시험원	7	66.82	140	52
축산물등급판정소	8	66.76	135	48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9	66.15	130	44
요업기술원	10	65.46	125	40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11	53.89	108	27
한국소방검정공사	12	53.11	103	22

■ 금융·수익 유형 (11개)

기관명	'05년도 평가결과			
	순위	점수	인센티브 성과급(%)	
			직원	기관장 및 임원
한국지역난방공사	1	80.91	181	85
대한지적공사	2	77.82	173	78
대한주택보증(주)	3	76.27	166	73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4	72.75	158	66
증권예탁결제원	5	72.45	152	62
한국전력거래소	6	72.27	147	58
한국마사회	7	70.08	140	52
한국감정원	8	69.41	134	48
한국방송광고공사	9	65.13	125	40
별정우체국연합회	10	65.10	120	36
88관광개발	11	60.16	110	28

■ 문화·국민생활 유형 (14개)

기관명	'05년도 평가결과			
	순위	점수	인센티브 성과급(%)	
			직원	기관장 및 임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1	82.13	182	8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74.54	171	77
한국과학문화재단	3	73.50	166	73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4	72.51	161	69
한국소비자보호원	5	71.20	156	65
국제방송교류재단	6	71.13	152	62
국민건강보험공단	7	69.94	147	57
한국영상자료원	8	69.34	142	54
국립공원관리공단	9	68.84	138	50
한국원자력문화재단	10	66.41	132	45
독립기념관	11	64.42	126	4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2	59.48	117	34
대한체육회	13	55.60	109	28
국민생활체육협의회	14	50.15	100	20

■ 산업진흥 유형 (16개)

기관명	'05년도 평가결과			
	순위	점수	인센티브 성과급(%)	
			직원	기관장 및 임원
에너지관리공단	1	87.81	188	90
한국전산원	2	82.88	180	84
한국교육학술정보원	3	80.95	174	79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4	73.62	164	7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5	71.40	158	66
한국환경자원공사	6	70.84	154	63
한국인터넷진흥원	7	70.12	150	60
한국정보보호진흥원	8	70.00	147	57
한국게임산업개발원	9	66.80	140	52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10	66.73	137	49
한국산업단지공단	11	65.56	132	46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12	62.63	126	41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13	61.50	122	37
영화진흥위원회	14	61.34	118	34
한국디자인진흥원	15	60.75	114	31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16	54.75	105	24

■ 연수·교육훈련 유형 (5개)

기관명	'05년도 평가결과			
	순위	점수	인센티브 성과급(%)	
			직원	기관장 및 임원
한국청소년수련원	1	72.22	172	78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2	69.89	157	66
한국산업인력공단	3	68.25	143	55
한국해양수산연수원	4	62.26	125	40
한국노동교육원	5	55.32	105	24

■ 연구개발지원 유형 (5개)

기관명	'05년도 평가결과			
	순위	점수	인센티브 성과급(%)	
			직원	기관장 및 임원
한국과학재단	1	84.23	184	87
한국산업기술평가원	2	80.45	168	74
한국학술진흥재단	3	68.54	144	5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	68.11	131	44
한국광기술원	5	66.12	116	33

■ 건설·시설관리 유형 (8개)

기관명	'05년도 평가결과			
	순위	점수	인센티브 성과급(%)	
			직원	기관장 및 임원
한국철도시설공단	1	79.97	180	84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2	77.14	170	76
환경관리공단	3	69.41	155	64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4	67.26	146	5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5	66.71	138	51
부산항만공사	6	60.13	124	4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7	57.50	115	32
산재의료관리원	8	55.75	106	25

■ 연·기금운용 유형 (16개)

기관명	05년도 평가결과			
	순위	점수	인센티브 성과급(%)	
			직원	기관장 및 임원
한국수출보험공사	1	84.90	185	88
한국자산관리공사	2	77.14	174	79
예금보험공사	3	75.93	169	75
정보통신연구진흥원	4	74.34	164	71
공무원연금관리공단	5	72.00	159	67
국민연금관리공단	6	70.85	154	63
한국산업안전공단	7	70.52	151	60
근로복지공단	8	69.29	146	57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9	68.81	142	54
한국주택금융공사	10	68.75	139	51
기술신용보증기금	11	66.62	133	47
신용보증기금	12	66.07	129	4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13	63.15	123	39
국민체육진흥공단	14	60.63	117	34
한국사학진흥재단	15	58.75	112	3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6	56.07	106	25

3. 2006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 검사·검증유형(11개)

기관명	06년도 평가결과			
	순위	점수	인센티브 성과급(%)	
			직원	기관장 및 임원
한국전기안전공사	1	80.7	181	85
한국가스안전공사	2	77.6	173	78
선박검사기술협회	3	77.0	167	74
한국석유품질관리원	4	76.2	161	69
한국전파진흥원	5	75.8	156	65
축산물등급판정소	6	74.0	149	59
교통안전공단	7	70.1	140	52
한국소방검정공사	8	68.6	134	47
산업기술시험원	9	64.9	125	40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10	63.8	119	35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11	63.0	113	30

■ 금융·수익유형(7개)

기관명	06년도 평가결과			
	순위	점수	인센티브 성과급(%)	
			직원	기관장 및 임원
대한주택보증(주)	1	80.3	180	84
한국지역난방공사	2	79.5	171	77
한국전력거래소	3	75.9	159	67
한국방송광고공사	4	74.6	150	60
한국감정원	5	73.4	140	52
대한지적공사	6	73.0	131	45
한국마사회	7	69.3	119	35

■ 문화·국민생활유형(10개)

기관명	'06년도 평가결과			
	순위	점수	인센티브 성과급(%)	
			직원	기관장 및 임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1	79.7	180	8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78.4	173	78
국민건강보험공단	3	78.1	167	74
국제방송교류재단	4	70.2	154	63
한국소비자원	5	70.0	148	58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6	69.7	142	54
국립공원관리공단	7	69.4	136	49
독립기념관	8	67.3	128	43
한국과학문화재단	9	66.7	122	38
한국원자력문화재단	10	62.0	112	30

■ 산업진흥유형(13개)

기관명	'06년도 평가결과			
	순위	점수	인센티브 성과급(%)	
			직원	기관장 및 임원
에너지관리공단	1	83.6	179	84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	83.4	147	0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3	78.2	170	76
한국교육학술정보원	4	76.1	164	71
한국산업단지공단	5	72.9	156	65
한국정보보호진흥원	6	72.7	152	61
한국환경자원공사	7	72.0	147	58
한국인터넷진흥원	8	71.3	142	5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9	69.8	136	49
한국디자인진흥원	10	69.1	132	45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11	69.0	127	42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12	64.9	119	35
광해방지사업단	13	59.9	110	28

■ 연수 · 교육훈련유형(5개)

기관명	'06년도 평가결과			
	순위	점수	인센티브 성과급(%)	
			직원	기관장 및 임원
한국청소년수련원	1	81.0	181	85
한국산업인력공단	2	76.8	164	71
한국해양수산연수원	3	67.6	143	54
한국노동교육원	4	61.8	124	39
한국청소년상담원	5	59.5	110	28

■ 학술 · 연구지원유형(6개)

기관명	'06년도 평가결과			
	순위	점수	인센티브 성과급(%)	
			직원	기관장 및 임원
한국학술진흥재단	1	80.4	180	84
한국과학재단	2	80.1	170	76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3	79.5	159	68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	72.7	143	54
한국산업기술평가원	5	68.7	129	43
요업기술원	6	57.4	107	26

■ 건설 · 시설관리유형(8개)

기관명	'06년도 평가결과			
	순위	점수	인센티브 성과급(%)	
			직원	기관장 및 임원
한국철도시설공단	1	81.0	181	85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2	75.4	168	75
산재의료관리원	3	74.7	160	68
환경관리공단	4	73.4	152	6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5	71.0	142	54
인천항만공사	6	67.6	132	4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7	64.0	121	37
부산항만공사	8	62.3	112	30

■ 연·기금운용유형(15개)

기관명	'06년도 평가결과			
	순위	점수	인센티브 성과급(%)	
			직원	기관장 및 임원
기술신용보증기금	1	80.5	180	84
신용보증기금	2	79.9	176	81
한국수출보험공사	3	79.8	173	78
한국자산관리공사	4	78.4	168	74
예금보험공사	5	78.4	164	71
정보통신연구진흥원	6	78.0	160	68
한국산업안전공단	7	75.6	154	63
근로복지공단	8	74.0	149	59
국민연금관리공단	9	73.6	145	56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0	72.5	140	52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1	70.1	134	4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2	69.9	131	45
국민체육진흥공단	13	68.5	126	4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14	65.9	119	36
한국주택금융공사	15	52.8	103	22

공기업 · 준정부기관 2007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08. 6

기 획 재 정 부

① 공기업1(14개)

분류	기관명	기관 평가	기관장 평가	인센티브 성과급(%)		
		점수	점수	직원	상임이사	기관장
우수 (2개)	한국전력공사	80.0	84.6	500.0	100.0	200.0
	대한광업진흥공사	79.8	77.4	497.0	99.0	144.7
양호 (6개)	한국철도공사	79.6	74.9	494.6	98.2	125.9
	한국석유공사	79.4	73.6	490.8	96.9	115.4
	한국토지공사	78.0	74.0	470.0	90.0	118.7
	한국수자원공사	76.4	78.5	446.2	82.1	152.9
	한국관광공사	76.2	77.5	442.0	80.7	145.2
	대한주택공사	75.7	74.7	435.3	78.4	124.4
보통 (5개)	한국공항공사	72.9	73.6	391.8	63.9	115.3
	한국도로공사	72.6	73.9	387.0	62.3	117.9
	한국조폐공사	71.4	76.1	369.3	56.4	134.5
	인천국제공항공사	71.1	70.5	364.6	54.9	92.2
	한국가스공사	70.9	69.4	361.3	53.8	83.7
부진 (1개)	대한석탄공사	60.2	58.5	200.0	-	-

② 공기업2(10개)

분류	기관명	기관 평가	기관장 평가	인센티브 성과급(%)		
		점수	점수	직원	상임이사	기관장
우수 (2개)	한국지역난방공사	76.9	75.1	500.0	100.0	200.0
	부산항만공사	75.0	70.1	453.9	81.6	137.1
양호 (4개)	한국감정원	72.6	66.0	398.1	59.2	85.7
	인천항만공사	72.4	68.8	393.2	57.3	120.7
	한국마사회	71.6	67.4	373.9	49.5	102.9
	산재의료관리원	70.3	65.3	344.8	37.9	76.1
보통 (3개)	대한주택보증(주)	69.6	72.8	328.3	31.3	171.1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69.5	68.4	325.2	30.1	115.0
	한국방송광고공사	67.8	62.8	285.6	14.2	44.3
부진 (1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66.3	59.3	250.0	-	-

③ 검사·검증(12개)

분류	기관명	기관 평가	기관장 평가	인센티브 성과급(%)		
		점수	점수	직원	상임이사	기관장
우수 (2개)	한국가스안전공사	78.6	76.3	200.0	100.0	98.1
	한국전기안전공사	77.4	76.7	192.7	94.2	100.0
양호 (4개)	대한지적공사	75.7	72.1	181.9	85.5	80.1
	한국전파진흥원	75.2	65.4	178.5	82.8	50.8
	선박안전기술공단	73.9	67.2	169.9	75.9	58.7
	한국석유품질관리원	73.1	70.8	165.2	72.1	74.4
보통 (4개)	축산물등급판정소	70.7	69.5	149.5	59.6	68.5
	교통안전공단	70.5	66.2	148.2	58.6	54.6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68.5	63.1	136.1	48.9	41.2
	한국산업기술시험원	66.5	58.2	122.9	38.3	20.0
부진 (2개)	한국소방검정공사	66.1	63.2	120.3	36.3	41.3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62.9	61.4	100.0	20.0	33.9

④ 문화·국민생활(15개)

분류	기관명	기관 평가	기관장 평가	인센티브 성과급(%)		
		점수	점수	직원	상임이사	기관장
우수 (2개)	국민건강보험공단	80.5	76.1	200.0	100.0	84.3
	한국정보문화진흥원	78.5	74.2	188.7	90.9	77.5
양호 (5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78.1	80.6	186.8	89.4	100.0
	한국고용정보원	73.2	65.7	160.1	68.0	47.3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71.9	70.8	153.3	62.6	65.5
	국제방송교류재단	71.3	63.8	150.0	60.0	40.4
	한국산업안전공단	70.6	70.6	146.1	56.9	64.5
보통 (5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68.5	69.1	134.4	47.5	59.3
	한국우편사업지원단	68.0	67.5	131.9	45.5	53.6
	국립공원관리공단	67.5	61.3	129.2	43.3	31.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66.0	65.9	121.1	36.9	47.9
	한국소비자원	64.7	61.2	113.8	31.1	31.3
부진 (3개)	한국과학문화재단	64.4	60.1	112.1	29.7	27.2
	독립기념관	62.8	58.0	103.8	23.0	20.0
	한국원자력문화재단	62.1	63.2	100.0	20.0	38.3

5 산업진흥1(11개)

분류	기관명	기관 평가	기관장 평가	인센티브 성과급(%)		
		점수	점수	직원	상임이사	기관장
우수 (2개)	에너지관리공단	81.8	76.4	200.0	100.0	89.9
	한국철도시설공단	78.0	79.3	184.3	87.5	100.0
양호 (3개)	농수산물유통공사	77.4	78.0	445.4	81.8	188.5
	한국농촌공사	77.3	75.9	443.6	81.2	170.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76.9	78.3	438.6	79.5	191.7
보통 (4개)	한국산업단지공단	74.6	75.4	170.2	76.2	86.6
	한국전력거래소	72.4	72.5	161.0	68.8	76.1
	한국환경자원공사	68.7	72.0	145.3	56.3	74.3
	환경관리공단	68.2	63.8	143.3	54.6	45.7
부진 (2개)	우정사업진흥회	62.3	60.9	118.7	34.9	35.4
	증권예탁결제원	57.8	56.5	100.0	20.0	20.0

6 산업진흥2(15개)

분류	기관명	기관 평가	기관장 평가	인센티브 성과급(%)		
		점수	점수	직원	상임이사	기관장
우수 (2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79.3	76.3	200.0	100.0	100.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76.4	70.3	186.0	88.8	81.6
양호 (5개)	한국정보사회진흥원	76.3	72.8	185.9	88.8	89.3
	한국인터넷진흥원	73.7	69.1	173.6	78.9	77.9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72.9	65.6	169.8	75.8	67.0
	한국디자인진흥원	71.9	66.3	165.1	72.1	69.3
	한국정보보호진흥원	71.4	73.0	162.6	70.1	89.8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70.1	62.3	156.4	65.1	56.9
보통 (5개)	광해방지사업단	70.1	68.6	156.4	65.1	76.2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69.9	70.3	155.4	64.3	81.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67.6	61.7	144.6	55.7	55.0
	한국환경기술진흥원	63.9	59.5	127.0	41.6	48.1
	한국산업기술재단	63.6	60.0	125.4	40.3	49.9
부진 (3개)	영화진흥위원회	62.9	60.7	121.9	37.5	51.8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58.2	50.4	100.0	20.0	20.0

7 교육훈련·연구지원(11개)

분류	기관명	기관 평가	기관장 평가	인센티브 성과급(%)		
		점수	점수	직원	상임이사	기관장
우수 (2개)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81.3	80.5	200.0	100.0	100.0
	한국과학재단	80.1	75.3	193.3	94.7	82.6
양호 (4개)	한국학술진흥재단	76.4	74.2	173.6	78.9	79.0
	한국산업인력공단	74.3	71.6	162.5	70.0	70.6
	요업기술원	70.8	65.4	144.0	55.2	49.9
	한국청소년수련원	70.0	68.5	140.1	52.1	60.3
보통 (3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68.2	67.6	130.3	44.2	57.2
	한국산업기술평가원	65.6	59.7	116.7	33.4	31.1
	한국해양수산연수원	65.0	60.0	113.5	30.8	32.2
부진 (2개)	한국청소년상담원	63.4	56.3	104.9	24.0	20.0
	한국노동교육원	62.5	60.1	100.0	20.0	32.5

8 연·기금운용(13개)

분류	기관명	기관 평가	기관장 평가	인센티브 성과급(%)		
		점수	점수	직원	상임이사	기관장
우수 (2개)	한국수출보험공사	81.4	74.8	200.0	100.0	84.0
	기술신용보증기금	81.3	80.7	199.4	99.5	100.0
양호 (5개)	사학연금관리공단	80.7	70.5	197.0	97.6	72.1
	신용보증기금	79.2	77.7	190.1	92.1	91.9
	예금보험공사	78.0	71.3	185.1	88.1	74.1
	정보통신연구진흥원	77.5	72.1	182.9	86.3	76.5
	국민연금관리공단	76.1	69.9	176.8	81.4	70.5
	근로복지공단	73.1	68.4	163.7	71.0	66.3
보통 (5개)	한국주택금융공사	70.7	63.5	153.2	62.6	52.7
	국민체육진흥공단	70.2	66.1	151.3	61.0	60.0
	한국자산관리공사	70.0	67.0	150.2	60.1	62.4
	공무원연금관리공단	69.5	61.5	148.2	58.6	47.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8.4	51.6	100.0	20.0	20.0

**200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09. 6

기 획 재 정 부

1. 평가등급별 성과급 지급기준

① 직원 (전년도 월기본급 또는 기준월봉 기준, %)

구분		S	A	B	C	D	E
공기업	· 종전 투자기관(11개)	400	352	304	256	208	200
	· 이외 기관(13개)	400	360	320	280	250	250
준정부 기관	· 종전 투자기관(3개)	400	352	304	256	208	200
	· 이외 기관(73개)	160	144	128	112	100	100

② 상임이사 (전년도 기본연봉 기준, %)

구분		S	A	B	C	D	E
공기업(24개)		80	64	48	32	16	0
준정부기관(76개)		48	38.4	28.8	19.2	9.6	0
· 7개 금융형 기관		80	64	48	32	16	0

③ 기관장 (전년도 기본연봉 기준, %)

구분		S	A	B	C	D	E
공기업(24개)		160	128	96	64	32	0
준정부기관(76개)		48	38.4	28.8	19.2	9.6	0
· 7개 금융형 기관		80	64	48	32	16	0

2. 기관별 평가등급 및 성과급 지급률

1. 공기업

평가유형	기관명	평가등급	직원	상임이사	기관장	
					기관장 평가수준 ¹	기관장 평가비수준 ²
SOC (14개)	한국수자원공사	A	352.0	64.0	96.0	128.0
	한국전력공사	A	352.0	64.0	64.0	128.0
	한국도로공사	B	304.0	48.0	64.0	96.0
	한국지역난방공사	B	320.0	48.0	96.0	96.0
	한국철도공사	B	304.0	48.0		96.0
	한국토지공사	B	304.0	48.0	32.0	96.0
	대한주택공사	C	256.0	32.0	32.0	64.0
	부산항만공사	C	280.0	32.0	64.0	64.0
	인천국제공항공사	C	280.0	32.0	32.0	64.0
	인천항만공사	C	280.0	32.0	64.0	64.0
	한국가스공사	C	280.0	32.0		64.0
	한국공항공사	C	280.0	32.0	64.0	64.0
	한국석유공사	C	256.0	32.0	32.0	64.0
	한국전력에너지부두공단	D	250.0	16.0		32.0
서비스· 진흥·제조 (10개)	한국광물자원공사	A	352.0	64.0	96.0	128.0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B	320.0	48.0		96.0
	한국감정원	B	320.0	48.0	32.0	96.0
	한국관광공사	B	304.0	48.0	64.0	96.0
	한국마사회	B	320.0	48.0	64.0	96.0
	한국조폐공사	B	304.0	48.0	64.0	96.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C	280.0	32.0		64.0
	한국산재의료원	C	280.0	32.0	0.0	64.0
	대한석탄공사	D	208.0	16.0	0.0	32.0
	한국방송광고공사	D	250.0	16.0	0.0	32.0

* 음영처리된 기관은 기관장 경영계획서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기관으로 기관장 성과급 산출시 기관 평가점수를 활용

* 주1)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를 받는 현직기관장

* 주2) 경영계획서작성지침 시행전 퇴임기관장('08.6.10일 이전 퇴임),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를 받지 않는 현직기관장('08.10.1일 이후 임명),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기준일 전 퇴임기관장('08.6.10~'09.3.31일 퇴임)

② 준정부기관

평가유형	기관명	평가등급	직원	상임이사	기관장	
					기관장 평가수점 ¹	기관장 평가비수점 ²
검사·검증 (6개)	대한지적공사	B	128.0	28.8	19.2	28.8
	한국가스안전공사	B	128.0	28.8		28.8
	한국전기안전공사	B	128.0	28.8		28.8
	교통안전공단	C	112.0	19.2	19.2	19.2
	한국산업기술시험원	D	100.0	9.6	9.6	9.6
	한국전파진흥원	D	100.0	9.6	9.6	9.6
문화· 국민생활 (9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A	144.0	38.4		38.4
	국민건강보험공단	A	144.0	38.4	19.2	38.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B	128.0	28.8	19.2	28.8
	국제방송교류재단	C	112.0	19.2	9.6	19.2
	도로교통공단	C	112.0	19.2	9.6	19.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C	112.0	19.2	9.6	19.2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C	112.0	19.2	9.6	19.2
	국립공원관리공단	D	100.0	9.6	9.6	9.6
	한국정보문화진흥원	D	100.0	9.6	0.0	9.6
산업진흥1 (10개)	한국농어촌공사	A	352.0	38.4	28.8	38.4
	농수산물유통공사	B	304.0	28.8	19.2	28.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B	304.0	28.8	28.8	28.8
	에너지관리공단	B	128.0	28.8	19.2	28.8
	한국산업단지공단	C	112.0	19.2	19.2	19.2
	한국예탁결제원	C	112.0	32.0	16.0	32.0
	한국전력거래소	C	112.0	19.2	9.6	19.2
	한국철도시설공단	C	112.0	19.2	19.2	19.2
	한국환경자원공사	C	112.0	19.2	9.6	19.2
	환경관리공단	C	112.0	19.2	9.6	19.2

* 음영처리된 기관은 기관장 경영계획서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기관으로 기관장 성과급 산출시 기관 평가점수를 활용

* 주1)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를 받는 현직기관장

* 주2) 경영계획서작성지침 시행전 퇴임기관장('08.6.10일 이전 퇴임),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를 받지 않는 현직기관장('08.10.1일 이후 임명),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기준일 전 퇴임기관장('08.6.10~'09.3.

평가유형	기관명	평가등급	직원	상임이사	기관장	
					기관장 평가수점 ¹	기관장 평가비수점 ²
산업진흥2 (6개)	한국광해관리공단	B	128.0	28.8	19.2	28.8
	한국교육학술정보원	B	128.0	28.8	9.6	28.8
	한국보건산업진흥원	C	112.0	19.2	9.6	19.2
	한국정보사회진흥원	C	112.0	19.2	0.0	19.2
	한국디자인진흥원	D	100.0	9.6		9.6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D	100.0	9.6		9.6
교육훈련 연구지원 (6개)	한국산업인력공단	A	144.0	38.4	19.2	38.4
	한국과학재단	B	128.0	28.8		28.8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B	128.0	28.8	19.2	28.8
	한국학술진흥재단	B	128.0	28.8		28.8
	한국산업기술평가원	C	112.0	19.2	9.6	19.2
	한국세라믹기술원	D	100.0	9.6		9.6
연기금 운용 (14개)	근로복지공단	A	144.0	38.4	19.2	38.4
	기술보증기금	A	144.0	64.0	48.0	64.0
	신용보증기금	A	144.0	64.0	32.0	64.0
	공무원연금관리공단	B	128.0	28.8	9.6	28.8
	국민연금공단	B	128.0	28.8	19.2	28.8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B	128.0	28.8	19.2	28.8
	국민체육진흥공단	B	128.0	28.8	9.6	28.8
	예금보험공사	B	128.0	48.0	32.0	48.0
	한국수출보험공사	B	128.0	48.0	48.0	48.0
	한국자산관리공사	B	128.0	48.0	32.0	48.0
	한국주택금융공사	B	128.0	48.0	48.0	48.0
	정보통신연구진흥원	C	112.0	19.2	9.6	19.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D	100.0	9.6		9.6
	영화진흥위원회	E	100.0	0.0	0.0	0.0

* **음영**처리된 기관은 기관장 경영계획서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기관으로 기관장 성과급 산출시 기관 평가점수를 활용

* 주1)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를 받는 현직기관장

* 주2) 경영계획서작성지침 시행전 퇴임기관장('08.6.10일 이전 퇴임),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를 받지 않는 현직기관장('08.10.1일 이후 임명),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기준일 전 퇴임기관장('08.6.10~'09.3.

평가유형	기관명	평가등급	직원	상임이사	기관장	
					기관장 평가수집 ¹	기관장 평가비수집 ²
중소형 기관 (25개)	독립기념관	A	144.0	38.4	19.2	38.4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A	144.0	38.4	19.2	38.4
	한국과학창의재단	A	144.0	38.4	28.8	38.4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A	144.0	38.4	19.2	38.4
	한국산업기술재단	A	144.0	38.4	9.6	38.4
	한국소방산업기술원	A	144.0	38.4	19.2	38.4
	한국정보보호진흥원	A	144.0	38.4	19.2	38.4
	한국환경기술진흥원	A	144.0	38.4	28.8	38.4
	선박안전기술공단	B	128.0	28.8	19.2	28.8
	한국고용정보원	B	128.0	28.8	19.2	28.8
	한국소비자원	B	128.0	28.8	0.0	28.8
	한국송강기안전관리원	B	128.0	28.8		28.8
	한국시설안전공단	B	128.0	28.8	9.6	28.8
	한국우편물류지원단	B	128.0	28.8	19.2	28.8
	한국인터넷진흥원	B	128.0	28.8	9.6	28.8
	한국청소년수련원	B	128.0	28.8	0.0	28.8
	한국해양수산연수원	B	128.0	28.8	9.6	28.8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C	112.0	19.2		19.2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C	112.0	19.2		19.2
	한국원자력문화재단	C	112.0	19.2		19.2
	축산물등급판정소	D	100.0	9.6	0.0	9.6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D	100.0	9.6		9.6
	한국석유관리원	D	100.0	9.6	9.6	9.6
	한국우편사업지원단	D	100.0	9.6		9.6
	한국청소년상담원	D	100.0	9.6	9.6	9.6

* 음영처리된 기관은 기관장 경영계획서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기관으로 기관장 성과급 산출시 기관 평가점수를 활용

* 주1)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를 받는 현직기관장

* 주2) 경영계획서작성지침 시행전 퇴임기관장('08.6.10일 이전 퇴임),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를 받지 않는 현직기관장('08.10.1일 이후 임명),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기준일 전 퇴임기관장('08.6.10~'09.3)



금융위원회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08년 국책은행 경영평가 지침 및 07년 경영실적 결과 통보

1. 국책은행 경영예산심의회에서 확정된 08년 국책 은행 경영평가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성과중심의 운영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심의회에서 평가한 07년 경영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은행명	점수	등급	지급률	비고
기업은행	97.0	S등급	100%	
산업은행	96.7	S등급	100%	

붙임 08년 국책은행 경영평가지침 1부. 끝.

금융위원회위원장

수신자 한국산업은행총재, 중소기업은행장

★행정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산업금융과-237 (2008.05.30.) 접수 @D-@N ()

우 137-756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648번지 / <http://www.fsc.go.kr>

전화 2156-9755 /전송 2156-9749 / lee3759@fsc.go.kr / 비공개(5)



금 융 위 원 회

수신자 기업은행
(경유)

제목 '09 경영평가 지침 송부 및 '08 경영평가 결과 통보

1. 국책은행 경영예산심의회에서 확정된 '09년 국책은행 경영평가 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성과중심의 운영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아울러 동 심의회에서 평가한 '08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은행명	점수	등급	비고
기업은행	96.2	S	

* 기관장 및 감사에 대해서도 동 경영평가에 근거하여 성과급을 지급

금융위원회위원장

행정사무관

산업금융과 과 전결 06/01
장

협조자

시행 산업금융과-795

접수

우 137-756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648

/ <http://www.fsc.go.kr>

전화 02-2150-9755

전송 02-2150-9749

/ taehoon@fsc.go.kr

/ 비공개(5)



금 융 위 원 회

수신자 한국산업은행
(경유)

제목 '09 경영평가 지침 송부 및 '08 경영평가 결과 통보

1. 국책은행 경영예산심의회에서确定的한 '09년 국책은행 경영평가 지침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성과중심의 운영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아울러 동 심의회에서 평가한 '08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은행명	점수	등급	지급률	비고
한국산업은행	96.3	S	100%	

* 기관장 및 감사에 대해서도 동 경영평가에 근거하여 성과급을 지급

금융위원회위원장

행정사무관 산업금융과 과 전결 06/01
장

협조자

시행 산업금융과-794

접수

우 137-756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648

/ <http://www.fsc.go.kr>

전화 02-2150-9755

전송 02-2150-9749

/ taehoon@fsc.go.kr

/ 비공개(5)

3. 최근 5년간 금융공기업 경영예산심의회 예산 승인 회의록, 성과급 예산 심의 자료

- 금융공기업 예산은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편성지침”을 준용한 “금융공공기관 예산지침”에 따라 경영
예산심의회의 자문을 거쳐 금융위원회 의결로 승인하고 있음

※ 별첨 내용

- 금융공기업 예산승인안
- 금융위원회 의사록

(별첨 1)

예금보험공사 2009회계연도 예산 승인안(요약)

1. 제안이유

「금융 공공기관 경영예산심의회」에서 심의한 예금보험공사 2009회계연도 예산안을 예금자보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승인하고자 함

2. 주요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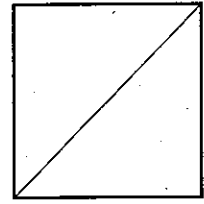
□ 예산심의 기본방향

-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 공공부문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인건비, 경상경비 등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기재부)」 및 「금융 공공기관 예산지침(금융위)」 준수 및 감사원·국회 등의 지적사항 반영

□ '09 예보공사 예산(안)

- 정원 : 607명('08대비(614명) △7명)
 - 예산액 : 899.6억원('08대비 9억원 감액, △1.0%)
 - 총액인건비 : 437.9억원('08대비 9.5억원 감액, △2.1%)
 - 경상경비 : 229.5억원('08대비 16.3억원 감액, △6.6%)
 - 예비비 등 기타 : 232.5억원('08대비 16.8억원 증액, 7.8%)
- ※ 지침변경으로 예비비(성과급)를 '08대비 16.0억원 증액

3. 시행일자 : 2009. 1. 1



議案番號	第 號
議 決 年 月 日	2008. 12. 26. (第 18 次)

議
決
事
項

예금보험공사 2009회계연도 예산 승인안

金融委員會會議案件

提 出 者	委 員 長 全 光 宇
提出年月日	2008. 12. 26.

1. 의결주문

예금보험공사 2009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하여 「금융 공공기관 경영 예산심의회」에서 심의한 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금융 공공기관 경영예산심의회」에서 심의한 예금보험공사 2009회계연도 예산안을 예금자보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승인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예산 심의 기본방향

-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 공공부문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인건비, 경상경비 등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기획재정부)」 및 「금융 공공기관 예산지침(금융위)」 준수 및 감사원·국회 등의 지적 사항 반영

□ '09 예보공사 예산(안)

- 정원 : 607명('08대비(614명) △7명)

< '09년도 직급별 정원현황 >

구분	일반직(단위 : 명)							별정직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사무직	계		
인원	20	32	68	146	126	28	420	187	607

※ 공기업 선진화방안 : '12년말까지 '08정원(614명)중 11%(69명) 감축

○ 예산액 : 899.6억원('08대비 9억원 감액, △1.0%)

- 총액인건비 : 437.9억원('08대비 9.5억원 감액, △2.1%)

- 경상경비 : 229.5억원('08대비 16.3억원 감액, △6.6%)

- 예비비 등 기타 : 232.5억원('08대비 16.8억원 증액, 7.8%)

※ 예산편성지침 변경으로 예비비(성과급)를 '08대비 16.0억원 증액

< '09년도 예금보험공사 예산내역 >

(금액단위 : 백만원)

예산항목	'08년 예산	'09년 예산				전년대비 증감율
		요구안	증감액	심의결과	증감액	
총인건비	44,741	44,558	△183	43,799	△942	△2.1%
경상경비	24,579	23,695	△884	22,954	△1,625	△6.6%
사복기금출연	1,508	1,508	0	1,461	△47	△3.1%
정원의 인건비	260	233	△27	233	△27	△10.4%
퇴직급여	4,496	4,324	△172	4,324	△172	△3.8%
기타경비	9,227	9,312	85	9,312	85	0.9%
자본예산	3,899	4,730	831	3,894	△5	△0.1%
예비비	2,150	4,744	2,594	3,980	1,830	85.1%
합 계	90,860	93,104	2,244	89,958	△902	△1.0%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예금자보호법

제23조(예산과 결산) 공사의 예산과 결산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예산과 결산)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공사의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관계부서 협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별첨2)

한국주택금융공사 2009회계연도 예산 승인안(요약)

1. 제안 이유

- ☐ 한국주택금융공사 2009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하여 경영예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안을 승인 요청하기 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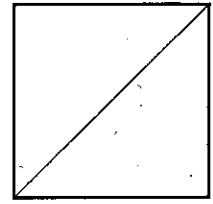
2. 주요골자

☐ 예산심의 기본방향

- 인건비 및 경상경비는 「0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09년도 금융 공공기관 예산지침」을 준용하여 심의
 - 총 인건비는 호봉승급분 등 자연증감 소요를 제외하고는 동결
 - 경상경비는 2008년도 예산액 대비 5%이상 감액
- 사업경비 및 자본예산은 '08년도 예산액 범위내에서 공사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사업에 우선적으로 배분

☐ 예산 조정 내역 [389억원 요구 → 414억원으로 조정(+25억원)]

- 총예산은 '08년 예산 367억원 대비 12.8% 증가(08년도는 07년 대비 19.1% 증가)한 414억원으로 조정
 - 인 건 비 : 131억원(08년 대비 0.7% 감소)
 - 경상경비 : 33억원(08년 대비 15.1% 감소)
 - 사업경비 : 126억원(08년 대비 동일 수준)
 - 예 비 비 : 31억원(08년 대비 33.8% 증가)
 - 자본예산 : 92억원(08년 대비 100% 증가)
- * 학자금대여금 등 09년 소요예산액 4,607백만원 반영



議案番號	第 號
議 決 年 月 日	2008. 12. 26. (第 18 次)

議
決
事
項

한국주택금융공사 2009회계연도
예산 승인안

金融委員會會議案件

提 出 者	委員長 全 光 宇
提出年月日	2008. 12. 26.

1. 의결주문

한국주택금융공사 2009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하여 경영예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0조제3항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8조제1항에 의거 한국주택금융공사 2009회계연도 예산안을 경영예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승인 요청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예산심의 기본방향

- 인건비 및 경상경비는 「0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09년도 금융 공공기관 예산지침」을 준용하여 심의
 - 총 인건비는 호봉승급분 등 자연증감 소요를 제외하고는 동결
 - 경상경비는 2008년도 예산액 대비 5%이상 감액
- 사업경비 및 자본예산은 '08년도 예산액 범위내에서 공사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사업에 우선적으로 배분

□ 예산 조정 내역 [389억원 요구 → 414억원으로 조정(+25억원)]

- 총예산은 '08년 예산 367억원 대비 12.8% 증가(08년도는 07년 대비 19.1% 증가)한 414억원으로 조정
 - 인 건 비 : 131억원(08년 대비 0.7% 감소)
 - 경상경비 : 33억원(08년 대비 15.1% 감소)
 - 사업경비 : 126억원(08년 대비 동일 수준)
 - 예 비 비 : 31억원(08년 대비 33.8% 증가)

- 자본예산 : 92억원(08년 대비 100% 증가)

* 학자금대여금 등 09년 소요예산액 4,607백만원 반영

< 예산내역 >

(단위 : 백만원, %)

비목	08년 예산	09년 예산				요청대비 증감액
		요구안	증감율	심의결과	증감율	
인 건 비	13,247	13,418	1.3	13,150	Δ0.7	Δ268
경상경비	3,918	3,618	Δ7.7	3,327	Δ15.1	Δ291
사업경비	12,644	13,399	6.0	12,644	-	Δ755
예 비 비	2,310	3,394	46.9	3,091	33.8	Δ303
자본예산	4,581	5,039	10.0	9,188	100.6	4,149
합 계	36,700	38,868	5.9	41,400	12.8	2,532

< 別 紙 : 2008년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예산총칙(안) >

4. 참고사항(관계법규)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40조 (예산의 편성) ①~②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편성·제출한 예산안은 이사회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의 의결이나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후 이를 거쳐 확정하고, 준정부기관의 예산에 관하여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 확정하도록 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⑥ (생략)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8조(업무계획·예산 및 결산) ①공사의 업무계획 및 예산은 매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략)

(별 지) 2009년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예산총칙(안)

제1조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예산은 공사 고유회계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하 “주신보”라 한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이하 “주연보”라 한다)·학자금신용보증기금(이하 “학신보”라 한다) 규모를 반영하여 통합운영 하되, 계정별 정원·업무비중 등에 따라 발생비용을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공사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계리한다.

제2조 공사 고유회계의 2009도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는 다음과 같다.

1. 추정손익계산서

(억원)

비 용	수 익	순이익
2,510	2,025	Δ485

2. 추정대차대조표

(억원)

자 산	부 채	자 본
19,455	12,907	6,548

제3조 관리업무비, 예비비 및 자본예산의 관·항별 금액 및 집행임원 연봉은 “별표 1, 2”와 같으며 비목별 금액은 사장이 정한다. 다만, 임원 성과급은 승인된 예산 범위 안에서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제4조 사장은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지상황을 감안하여 조직·인원 및 보수체계의 개선, 불요불급한 경비의 절감 등 내부경영의 합리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시장금리 변동 등 경영환경변화에 대응한 위험관리(Risk Management)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5조 공사는 분기별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예산집행이 특정시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액 승인범위 내에서 집행예산을 편성하여 2009년 1월 31일까지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예산집행상 관·항·목간의 전용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항간의 전용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목간의 전용은 사장의 결정에 의하여 시행하되 인건비, 경상경비 중 급여성 복리후생비 및 업무추진비의 총액 전용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연봉제 방식의 변경 등 보수체계의 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급여성 복리후생비의 총액 범위 내에서 항·목간 전용은 사장이 결정한다.

제7조 퇴직금·세금과공과금·제상각비·사내근로복지기금 비목에 대하여는 예산에 계상된 금액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 지출에 대하여 사장이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직전 사업년도의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제8조 사장은 일반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 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내역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직원의 성과급과 인력증원, 정·현원차 및 인턴사원 봉급예비비의 인건비 전용은 사장이 결정하여 집행한다.

제9조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비용과 그 부대비용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공사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3”와 같다. 업무량의 증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상 정원을 초과하여 증원(직급별 상향 조정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 (1) 예산이 성립된 후의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주신보·주연보·학신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승인받은 경우는 이를 공사 추가경정예산으로 승인된 것으로 본다.

(2) 제1항의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본예산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2조 공사는 예산집행에 관한 감사원 등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처리한다.

(별표 1) 관리업무비, 예비비 및 자본예산의 관·항별 금액

(백만원)

과 목		2009년도 예산		
관	항	공사 고유회계	기금	계
○ 관리업무비		29,121	47,026	76,147
	- 총인건비	13,150	25,335	38,485
	(인 건 비)	(11,393)	(22,686)	(34,079)
	(잡급 및 전문계약직)	(743)	(699)	(1,442)
	(퇴 직 금)	(1,014)	(1,950)	(2,964)
	- 경 비	15,971	21,691	37,662
	(경상경비)	(3,327)	(5,470)	(8,797)
	(사업경비)	(12,644)	(16,221)	(28,865)
○ 예비비		3,091	-	3,091
	- 일반예비비	874	-	874
	- 성과급 예비비	901	-	901
	- 정·현원차 봉급예비비	956	-	956
	- 인턴사원 봉급예비비	360	-	360
○ 자본예산		9,188	1,260	10,448
	- 유·무형자산	4,581	1,260	5,841
	- 기타자산	4,607	-	4,607
합 계		41,400	48,286	89,686

(별표 2) 임원 연봉

구분	기본연봉	성과급
사장	161백만원	161백만원
감사	129백만원	129백만원
부사장	121백만원	121백만원
이사	100백만원	100백만원

(별표 3) 2009년도 공사 직급별 정원

(명)

구분	종합직						사무직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이사대우		
계	14	35	84	125	176	3	11	448
공사회계	7	18	30	34	49	1	11	150
주신보회계	4	13	40	70	98	1	-	226
주연보회계	1	2	7	8	13	-	-	31
학신보회계	2	2	7	13	16	1	-	41

(별첨3)

한국산업은행 2009회계연도 예산 승인안(요약)

1. 제안이유

- 한국산업은행 2009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하여 금융공공기관 경영예산심의회에서 심의한 안을 승인 요청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예산심의 기본방향

- 민간 금융기관과 경쟁하는 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경쟁력 강화 및 선진인프라 구축은 적극 지원하되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
- 임원 인건비는 삭감하고 직원 인건비는 동결하며, 비영업 비용 및 자본예산에 대하여는 절감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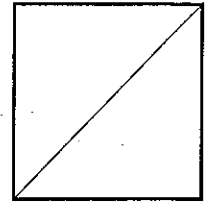
□ 예산 조정 내역(5,979억원 요구 → 5,763억원으로 조정(△216억원))

- 총지출예산은 2008년 예산 5,962억원 대비 3.3% 감소(08년도 는 07년 대비 7.6% 증가) 한 5,763억원으로 조정

- 인 건 비 : 2,600억원 (전년대비 0.1% 감소)
- 경 비 : 2,042억원 (전년대비 4.4% 감소 ; 경상경비는 5.1% 감소)
- 자본예산 : 739억원 (전년대비 20.5% 감소)
- 예 비 비 : 382억원 (전년대비 28.6% 증가)

- 민영화예비비(1,254억원)은 별도 계상

3. 시행일자 : 2009. 1. 1



議案番號	第 號
議 決 年 月 日	2008. 12. 26. (第 18 次)

議
決
事
項

한국산업은행 2009회계연도 예산 승인안

金融委員會會議案件

提 出 者	委員長 全 光 宇
提出年月日	2008. 12. 26.

1. 의결주문

한국산업은행 2009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하여 금융공공기관 경영예산심의회에서 심의한 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한국산업은행법」 제37조 및 「한국산업은행 정관」 제53조에 의거 한국산업은행 2009회계연도 예산안을 금융공공기관 경영예산심의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승인 요청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예산 심의 기본방향

- 민간 금융기관과 경쟁하는 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경쟁력 강화 및 선진인프라 구축은 적극 지원하되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
- 임원 인건비는 삭감하고 직원 인건비는 동결하며, 비영업 비용 및 자본예산에 대하여는 절감 유도

☐ 예산 조정 내역(5,979억원 요구 → 5,763억원으로 조정(△216억원))

- 총지출예산은 2008년 예산 5,962억원 대비 3.3% 감소(08년도는 07년 대비 7.6% 증가) 한 5,763억원으로 조정

- 인 건 비 : 2,600억원 (전년대비 0.1% 감소)
- 경 비 : 2,042억원 (전년대비 44% 감소 ; 경상경비는 5.1% 감소)
- 자본예산 : 739억원 (전년대비 20.5% 감소)
- 예 비 비 : 382억원 (전년대비 28.6% 증가)

○ 민영화예비비(1,254억원)은 별도 계상

< 예산총괄표 >

(단위 : 억원, %)

비 목	08년 예산	09년 예산				요청 대비 증감액
		요구안	증감율	심의결과	증감율	
일 반 관 리 비	4,736	4,743	0.1	4,642	△2.0	△101
인 건 비	2,601	2,673	2.8	2,600	△0.1	△73
경 비	2,135	2,070	△3.0	2,042	△4.4	△28
경 상 경 비	692	678	△2.0	657	△5.1	△21
기 타 경 비	1,443	1,392	△3.5	1,385	△4.0	△7
자 본 예 산	929	789	△15.1	739	△20.5	△50
예 비 비	297	447	50.5	382	28.6	△65
소 계	5,962	5,979	0.3	5,763	△3.3	△216
민영화예비비	-	1,254	-	1,254	-	-
합 계	5,962	7,233	21.3	7,017	17.7	△216

<別 紙 : 2009 회계연도 예산서(안)>

4. 참고사항(관계법규)

[한국산업은행법]

제37조(회계연도·예산 및 결산)

① (생략)

② 한국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수입과 지출의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한국산업은행 정관]

제53조(예산·준예산 및 예비비) ① 이 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수입과 지출의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이 은행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안이 승인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이를 당해연도의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으로 본다.

< 별지 >

2009 회계연도 예산서 (안)

< 목 차 >

① 예 산 총 칙 5

[별표1] 일반관리비, 예비비, 자본예산의
관 · 항별 금액 7

[별표2] 2009년도 직위군별 정원 8

② 예산 총괄표 9

(붙임 ①)

예 산 총 칙

제1조 2009년도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는 다음과 같다.

(1) 추정손익계산서

(단위 : 억원)

비 용	수 익	순 손 익
392,066	413,630	21,564

(2) 추정대차대조표

(단위 : 억원)

자 산	부 채	자기자본
1,690,485	1,494,572	195,913

제2조 일반관리비, 예비비 및 자본예산의 관·항별 금액은 "별표1"과 같으며 비목별 금액은 한국산업은행 총재가 정한다.

제3조 한국산업은행 총재는 일반관리비 및 자본예산의 총규모 범위 내에서 각 목간의 금액을 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항간의 전용(총인건비 대상비목의 상호전용 제외) 및 총인건비, 경상경비, 임원급여 총액을 증액 전용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한국산업은행 총재는 전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성 경비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외의 비목에서 지급할 수 없다.

제5조 한국산업은행 총재는 다음 비목에 대하여는 예산에 계상된 금액에 불구하고 초과 지출할 수 있다.

1. 퇴 직 금
2.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3. 세금과공과, 등기소송비 및 보험료

제6조 한국산업은행 총재는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이 유 및 금액을 명시한 조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경영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임원 및 직원 앞 지급되는 인센티브성과급, 인건비성예비비 및 민영화 예비비는 한국산업은행 총재가 지급할 수 있고, 인센티브성과급이나 인건비성예비비, 또는 민영화 예비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당해 연도 결산보고서 제출시 평가결과 및 집행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예산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출하지 못한 경비 및 자본예산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비용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한국산업은행 총재는 환율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9조 (1) 2009년도 한국산업은행의 직위군별 정원은 "별표2"와 같다.

(2) 한국산업은행 총재는 업무량 증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전항의 정원을 초과하여 증원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한국산업은행 총재는 거래처파견 지원, 신규업무취급, 정책적 수요 및 이와 관련된 직제개편을 위하여 (1)항의 직위군별 정원을 각각 3% 범위 내에서 초과 운용할 수 있다.

[별표1]

일반관리비, 예비비, 자본예산의 관·항별 금액

(단위 : 백만원)

과 목		2009년도 예산
관	항	
1. 일반관리비		464,191
	○ 인 건 비	259,037
	(총인건비)	(212,394)
	○ 경 비	205,154
	(경상경비)	(65,715)
2. 예 비 비	○ 예 비 비	38,186
3. 자 본 예 산	○ 고정자산	73,907
소 계		576,284
4. 민영화 예비비	○ 예 비 비	125,394
합 계		701,678

[별표2]

2009년도 직위군별 정원

(단위 : 명)

구 분	정 원
임 원	11
부서장급	115
팀 장 급	464
팀 원 급	1,820
합 계	2,410

- 주1) 경영효율화 관련 기존부문 10명 감축 및 민영화 사전준비를 위한 50명 추가 운용 포함
- 주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은 당해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운용
- 주3) 민영화 추진시 제6조의 민영화 예비비 범위 내에서 부서장급 50명, 팀장급 70명, 팀원급 280명을 추가 운용할 수 있음.

(붙임 ②)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예산	2009년 예산	증감액
일반관리비		473,605	464,191	△9,414
인건비		260,126	260,045	△81
	급여	232,020	228,469	△3,551
	후생	566	1,008	442
	퇴직	27,540	30,568	3,028
경비		213,479	204,146	△9,333
경상경비		69,241	65,715	△3,526
	복리	24,161	24,504	343
	여비	4,993	4,440	△553
	통신	1,580	1,502	△78
	전력	2,701	2,551	△150
	연료	865	865	-
	소모	1,678	1,610	△68
	피복	98	392	294
	도서	6,300	5,834	△466
	수선	1,475	1,298	△177
	차량	1,307	1,253	△54
	운반	306	232	△74
	회의	2,383	2,393	10
	업무	3,004	3,983	979
	교육	14,282	11,500	△2,782
	조사	1,258	707	△551
	포상	1,436	1,422	△14
	협력	1,414	1,229	△185
기타경비		144,238	138,431	△5,807
	지급	14,260	17,790	3,530
	지급	22,439	22,126	△313
	광고	17,745	17,745	-
	전산	33,369	28,304	△5,065
	채권	1,620	1,492	△128
	세금	18,394	18,456	62
	감가	22,566	20,037	△2,529
	보험	689	403	△286
	등기	200	200	-
	무형	12,956	11,878	△1,078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예산	2009년 예산	증감액
자본예산		92,862	73,907	△18,955
유형자산		71,262	44,581	△26,681
	토 지	34,892	15,196	△19,696
	건 물	12,402	4,646	△7,756
	구 축 물	198	60	△138
	임차점포시설물	3,907	3,978	71
	기 계 장 치	16,500	17,490	990
	차 량 운 반 구	474	195	△279
	공 구 와 기 구	1,594	1,359	△235
	비 품	1,295	1,657	362
무형자산		21,600	29,326	7,726
	개 발 비	13,391	23,842	10,451
	기 타 무 형 자 산	8,209	5,484	△2,725
예 비 비		29,733	38,186	8,453
	인센티브성과급	26,645	27,608	963
	인건비성 예비비	88	9,578	9,490
	일 반 예 비 비	3,000	1,000	△2,000
소 계		596,200	576,284	△19,916
민영화예비비		-	125,394	125,394
합 계		596,200	701,678	105,478

(별첨 4)

중소기업은행 2009회계연도
인건비 예산안에 대한 승인안(요약)

1. 제안이유

- ☐ 중소기업은행 2009년도 인건비 예산안에 대하여 금융공공기관 경영예산심의회에서 심의한 안을 승인 요청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예산심의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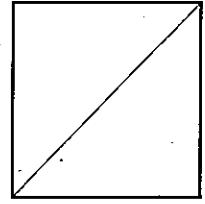
- 완전경쟁시장에서 시중은행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기관의 특성을 감안하되, 경영효율화 계획 및 감사원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
- 임원 인건비는 삭감하고 직원 인건비는 동결하되,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분은 1.7% 범위내에서 인정

☐ 예산 조정 내역{9,325억원 요구 → 8,627억원으로 조정(△698억원)}

- 인건비 총액은 2008년 예산 8,175억원 대비 5.5% 증가(08년도는 07년 대비 12.4% 증가) 한 8,627억원으로 조정

- 총인건비 : 6,089억원 (전년대비 0.1% 증가)
- 퇴직급여충당금 : 762억원 (전년대비 0.4% 감소)
- 정원외직원인건비 : 559억원 (전년대비 7.1% 감소)
- 인건비예비비 : 1,217억원 (전년대비 67.6% 증가)

3. 시행일자 : 2009. 1. 1



議案番號	第 號
議 決 年 月 日	2008. 12. 26. (第 18 次)

議決事項

중소기업은행 2009회계연도
인건비 예산안에 대한 승인안

金融委員會會議案件

提 出 者	委員長 全 光 宇
提出年月日	2008. 12. 26.

1. 의결주문

중소기업은행 2009회계연도 인건비 예산안에 대하여 금융공공기관 경영예산심의회에서 심의한 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중소기업은행법」 제37조 2항 및 「중소기업은행 정관」 제69조 2항에 의거 중소기업은행 2009회계연도 인건비 예산안을 금융공공기관 경영예산심의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승인 요청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예산심의 기본방향

- 완전경쟁시장에서 시중은행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기관의 특성을 감안하되 경영효율화 계획 및 감사원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
- 임원 인건비는 삭감하고 직원 인건비는 동결하되,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분은 1.7% 범위내에서 인정

□ 예산 조정 내역{9,325억원 요구 → 8,627억원으로 조정(△698억원)}

- 인건비 총액은 2008년 예산 8,175억원 대비 5.5% 증가(08년도는 07년 대비 12.4% 증가) 한 8,627억원으로 조정

- 총인건비 : 6,089억원 (전년대비 0.1% 증가)
- 퇴직급여충당금 : 762억원 (전년대비 0.4% 감소)
- 정원의직원인건비 : 559억원 (전년대비 7.1% 감소)
- 인건비예비비 : 1,217억원 (전년대비 67.6% 증가)

< 인건비 예산 조정내역 >

(단위 : 억원, %)

구 분	2008년 예산		2009년 예산				
	예산 편성	전년대비 증감률	신청내용		예산조정(안)		
			금 액	증감률	금 액	전년대비 증감액	증감률
총인건비	6,082	14.4	6,761	11.2	6,089	7	0.1
인 건 비	6,082	14.4	6,719	10.5	6,047	△35	△0.6
급여성복리후생비	-	-	42	0.7	42	42	0.7
퇴직급여충당금	765	9.3	819	7.0	762	△3	△0.4
정원의직원인건비	602	△16.8	569	△5.4	559	△43	△7.1
인건비예비비	726	17.3	1,176	62.0	1,217	491	67.6
합 계	8,175	12.4	9,325	14.1	8,627	452	5.5

<別 紙 : 2009 회계연도 예산서(안)>

4. 참고사항(관계법규)

[중소기업은행법]

제37조 【회계연도·예산 및 결산】

① (생략)

② 중소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 예산에 대하여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중소기업은행 정관]

제53조 【회계연도·예산 및 결산】

① (생략).

② 당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예산에 대하여는 미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별지 >

2009 회계연도 예산서 (안)

< 목 차 >

예 산 총 칙

[별표1] 인건비 예산 총괄표

[별표2] 2009년도 직급별 정원

- ※ 중소기업은행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 인건비 예산에 대하여만
미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므로 2009년도 경비예산
및 자본예산 관련 내용은 이사회 의결 후('08.12.26 개최 예정)
별도 제출 예정
- ※ 예산총칙 중 2009년 추정 재무제표 관련 계수는 미확정 잠정치임

예 산 총 칙

제1조(목적) 이 총칙은 예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은행의 효율적 예산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의 규모) ① 2009년도 중소기업은행의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는 다음과 같다.

(1) 추정손익계산서

(단위:백만원)

비 용	수 익	순 손 익
24,365,098	24,415,098	50,000

(2) 추정대차대조표

(단위:백만원)

자 산	부 채	자 본
163,508,110	155,718,113	7,789,997

② 2009년도 중소기업은행의 일반관리비, 예비비의 관·항·목별 규모는 “별표1”과 같다.

제3조(예산의 전용) 중소기업은행장은 각 항목간의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경비에서 인건비(급여성 경비 포함)로의 전용과 임원급여, 직원급여 및 잡급예산을 증액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 및 이사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4조(예산집행의 규제) 중소기업은행장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성 경비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외의 비목에서 지급할 수 없다.

제5조(예산의 초과집행) 중소기업은행장은 다음 비목에 대하여는 예산에 계상된 금액에 불구하고 초과 집행할 수 있다.

1. 금융비용, 제상각비, 영업외비용, 특별손실
2. 퇴직금, 세금과공과, 보험료, 등기소송비

제6조(예비비의 사용) 중소기업은행장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조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성과급 및 정현원차 봉급예비비 등 인건비성예비비는 중소기업은행장이 지급할 수 있고, 인센티브 성과급이나 인건비성예비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당해연도 결산보고서 제출시 평가결과 및 집행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의 이월) 예산은 익년도에 이월할 수 없다. 다만, 연도내 지출원인행위를 한 경비 및 자본예산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정원) ①2009년도 직급별 정원은 “별표”2와 같다.

②제1항의 직급별 정원의 구분은 임원, 1급, 2급, 3급, 4급 및 행원으로 한다.

③중소기업은행장은 업무량증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상의 정원을 초과하여 증원(하위직급의 상향조정운용은 포함하되 상위직급의 하향운용은 제외)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별표1]

인건비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예산	2009년 예산		
		금 액	전년대비	
			증감액	증감률
총인건비	608,195	608,882	687	0.1
인 건 비	608,195	604,726	△3,469	△0.6
급여성복리후생비	-	4,156	4,156	0.7
퇴직급여충당금	76,563	76,201	△362	△0.4
정원외직원인건비	60,165	55,903	△4,262	△7.1
인건비예비비	72,587	121,706	49,119	67.6
합 계	817,510	862,692	45,182	5.5

[별표2]

2009년도 직급별 정원

(단위 : 명)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정원(순증)
	정 원	현 원	정현원차	
임 원	9	7	2	9 (-)
1급	60	45	15	60 (-)
2급	360	184	176	360 (-)
3급	1,469	1,495	△26	1,469 (-)
4급	3,262	2,773	489	3,212 (△50)
5급	2,232	2,586	△354	2,232 (-)
소 계	7,392	7,090	302	7,342 (△50)

주1) 4급 및 5급 통합 운용

주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은 당해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운용

주3) 2009년도 주요 인력 수급 현황

구 분		3급	4급	행원	계
수 요 (증원)	① 점포신설*(20개)	40	60	60	160
	② 중소기업금융 지원 강화	69	-	-	69
	③ 건전성 및 영업력 강화	7	82	38	127
	④ 자산증가에 따른 직원 증원	-	42	32	74
	소 계 (A)	116	184	130	430
공 급 (감축)	⑤ 정원대비 현원부족(B)	-	302	-	302
신 청 인 원 (A - B)		116	-118	130	128

* 점포신설관련 인원은 예산정원 범위내 소형점포로 탄력적운용 방안 포함

(별첨 5)

제18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08. 12. 26.)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08년 12월 26일(금) 14:20~17:10

2. 장 소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전 광 우 위 원 장

이 종 구 위 원

김 종 창 위 원

박 대 동 위 원

이 승 일 위 원

채 희 율 위 원

4. 회의경과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1) 2008년도 제17차 금융위 회의록 보고

- ☐ 2008년도 제17차 금융위 회의록을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의결안건 심의

- ☐ 의안 제277호 『금융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제278호 『증권선물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의사운영정보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의결함

- ☐ 의안 제279호 『(주)골든브릿지의 금융지주회사 인가취득 등의 기간 연장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의결함

- ☐ 의안 제280호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판매현장 사전점검 제도의 도입은 금융서비스 이용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의가 있음. 다만 점검 결과 문제점이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서 개선권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선권고를 해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제재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함

(판매현장 사전점검 결과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특별검사를 나가서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충분히 법적으로 제재를 취할 수 있다고 답변)

- 판매현장 사전점검 제도의 도입으로 불완전 판매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고, 실제 잘못된 점이 발견되었을 경우 확실한 제재로 연결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원안 의결함

- 의안 제281호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서비스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의결함

- 의안 제282호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의안 제283호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서비스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저축은행 업계의 BIS 자기자본비율 확대 산정 등 회계정보를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원안 의결함

- 의안 제284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의결함

- 의안 제285호 『예금보험공사 2009회계연도 예산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구조개선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산하기관 업무계획 및 예산 승인 관련 안건들은 내용이 매우 중요하고 복잡하므로, 앞으로는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원안 의결함

- 의안 제286호 『한국주택금융공사 2009년도 업무계획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2008년도 유동화증권 발행 목표치가 6조2천4백억 이었으나, 실제 발행 실적은 5조3천억 정도로서 약 1조 정도가 발행이 안 되었는데, 내년 목표치를 6조4천억으로 잡은 것에 대해 설명을 요청함

(내년도 채권시장이 올 하반기처럼 경색현상이 지속될 경우 목표 달성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는 예상되지만,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채권시장이 안정되어 MBS나 SLBS가 시장에서 소화가 가능하리라는 전제하에 주택금융공사에서 목표치를 잡은 것이라고 설명)

⇒ 원안 의결함

- 의안 제287호 「한국주택금융공사 2009회계연도 예산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의결함

- 의안 제288호 「신용보증기금 2009년도 업무계획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에서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의결함

- 의안 제289호 「기술신용보증기금 2009년도 업무계획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에서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의결함

- 의안 제290호 「한국산업은행 2009년도 업무계획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에서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의결함

□ 의안 제291호 『중소기업은행 2009년도 업무계획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에서 내용을 설명함

- 중소기업은행의 예대율이 다른 일반 시중은행보다 높은 경향이
있는데, 업무계획 상에서 나와 있듯이 앞으로 중소기업 채권을
계속 발행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예대율을 상대적
으로 낮추기 위한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 질의함
-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은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으로서
자금시장이 경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은행이 정책적인 대출을 해 줌에 있어
대출금을 예금으로 전부 충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중소기업
은행은 일반 시중은행과는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의
견이 제시됨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전부 직접 보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손실보전 조항에 근거해서 자금조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시중은행의 LDR과는 조금 다르게 볼 측면이 있음.
일반 시중은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LDR이 약간 안
좋은 것은 사실이나, 현재 일반 시중은행에 대비해서 약 75~80%
정도 수준에 이르고 있고, 나머지 20% 정도는 중소기업이 갖
고 있는 손실보전 조항이나 국책은행으로서의 이점을 활용하
면 충분히 보완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

- 외국경제학자나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시각은 지금 CDS 금
리가 중소기업은행과 시중은행 간에 큰 차이가 없고, 중소
기업은행의 국책은행으로서의 기능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중

은행과 동일하게 평가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예대율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 원안 의결함

- 의안 제292호 『한국산업은행 2009회계연도 예산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에서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의결함

- 의안 제293호 『중소기업은행 2009회계연도 인건비 예산안에 대한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에서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의결함

- 의안 제294호 『키움증권(주)의 키움인베스트먼트(주) 출자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서비스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의결함

- 의안 제295호 『노무라인터내셔널증권 서울지점 등 27개사의 금융투자업 인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서비스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의결함

- ☐ 의안 제296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의결함

- ☐ 의안 제297호 『○○ 보험대리점 부문검사 결과조치안』, 의안
제298호 『○○ 보험대리점 부문검사 결과조치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광주지원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의결함

- ☐ 의안 제299호 『○○보험대리점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
정하여 금융감독원 대구지원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의결함

- ☐ 의안 제300호 『○○○ 등 2인의 증권거래법규 위반에 대한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의결함

- ☐ 의안 제301호 『외화환산 회계처리 관련 기업회계기준 등 수
정요구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의결함

□ 의안 제302호 『장외파생상품 관련 기업회계기준 수정요구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파생상품의 처리에 관한 특례 대상의 범위를 수정안대로 하게 될 경우, 웬만한 외화 장외파생상품들은 전부 포함되게 되어 범위가 너무 포괄적인 것이 아닌지에 대해 질의함

(당초에는 키코와 관련된 것에 한정하자는 취지로 외화위험요소, 옵션요소 및 비대칭적 레버리지 요소가 모두 포함된 파생상품에 대해서만 한정을 했었는데, 그럴 경우 회계에서 파생상품으로 보고 있는 통화선도 관련 기업들은 제외가 되고 오히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키코나 스노우볼, 피봇 관련 기업들은 혜택을 보게 되는 역효과가 발생하는 측면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정의견을 내게 되었다고 답변)

⇒ 수정 의결함*

* 기업회계기준안 제70조의2 중 '시가가 없는 파생상품 중 외화 위험요소, 옵션요소 및 비대칭적 레버리지요소가 모두 포함된 파생상품에 대해'를 '시가가 없는 파생상품 중 외화 위험요소가 포함된 파생상품에 대해서는'으로 수정

□ 의안 제303호 『금융감독원 2009회계연도 예산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이종구 상임위원이 소위원회 심의결과
및 안건내용을 설명함

⇒ 원안 의결함

3) 보고안건 심의

- 보고안건 제76호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제도 운영 방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접수함

- 보고안건 제77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개정 보고』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접수함

- 보고안건 제78호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 개정 보고』, 보고안건 제79호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 '연결재무제표' 개정 보고』, 보고안건 제80호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 개정 보고』, 보고안건 제8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3호 '사업결합' 등 개정 보고』, 보고안건 제82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등 개정 보고』, 보고안건 제83호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원가'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1호 등 개정 보고』, 보고안건 제84호 『'금융자산의 분류변경'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9호 등 개정 보고』, 보고안건 제85호 『'뜻가능 금융상품과 청산시 발생하는 의무'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2호 등 개정 보고』, 보고안건 제86호 『'가득조건과 취소'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2호 개정 보고』, 보고안건 제87호 『'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관련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제1105호 등 개정 보고」, 보고안건 제88호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결과보고』, 보고안건 제
89호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결과 보고』를 서면
보고함

제78호 관련

- 안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단기매매증권 분류변경을 허용해
줄 경우 은행들의 BIS비율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지에 대해
계산해 보았는지에 대해 질의함

(은행들의 경우 단기매매로 분류된 부분은 많이 없었고, 오히려
증권회사에서 단기매매증권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분석을 해
본 결과, 이미 기존에 단기매매증권을 매각해서 실현을 시켜
버렸기 때문에 9월말까지는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고, 10월부터 12월 말까지는 아직 보고서가 나오지 않아 그 효
과를 가늠하기 어려우나, 9월말 주가지수가 1,440포인트였는데
현재 1,100포인트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회사당 800억 내
지 1,000억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만 채권 쪽
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답변)

⇒ 각각 원안 접수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08년도 금융위원회 제18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4. 최근 5년간 금융공기업 성과급 관련 지침

□ 금융공기업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금융공공기관 예산지침”에 따라 예비비로 편성한 후

○ 기획재정부 및 경영예산심의회에서 결정한 성과급 지급률에 따라 지급

※ 별첨 내용

- '06~'07년도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
- '0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
- '0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 '09년도 금융공공기관 예산지침

□ '06년도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

2006년도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

- 목 차 -

I. 일반 기준

II. 수입관련 기준

III. 지출관련 기준

IV. 경영평가 인센티브성과급

V. 행정사항

【첨부】

1. 정부산하기관의 조직·정원 조정 통보양식

2. 임·직원의 인센티브성과급 산출방식

3. 인센티브성과급 채원조성

I. 일반 기준

1. (예산정보 등의 공개) 정부산하기관은 당해 기관의 설립 목적 및 공익에 맞도록 예산을 관리·운용하여야 하며,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주요 정보를 기획예산처의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해서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2. (예산서의 작성) 정부산하기관은 투명한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해 원칙적으로 정부예산과목 수준으로 비목을 구분하여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자체 예산집행지침) 정부산하기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자체적으로 예산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운용함으로써 예산의 집행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예산집행계획) 정부산하기관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효율을 기하고, 매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예산 집행의 성과를 분석·평가하여 관련 지침의 개선 등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5. (예산집행의 효율화) 정부산하기관은 예산의 이·전용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며,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생산성을 제고하는 등 예산 집행의 효율을 제고하여야 한다.
6. (출연·출자·보증 등의 제한) 정부산하기관은 국가적 정책사업을 제외하고는 다른 단체 또는 기관의 신설, 다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한 추가 출연·출자·보증 등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7. (외부위탁의 활성화) 정부산하기관은 핵심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외부위탁 대상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8. (국회 등 지적사항 반영) 국회, 감사원,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단 등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마련한 후 예산을 집행한다.
9. (타 지침과의 관계) 본 기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2006년도 세출 예산집행지침 또는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관련규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비의 주체, 지급대상, 사용용도 등 성격상 준용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0. (예산관리기준의 변경 등) 기획예산처장관은 추후 경제·재정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관리기준을 변경 또는 추가 통보할 수 있다.

II. 수입관련 기준

1. (수입예산의 구분) 정부산하기관의 수입예산은 국고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출자금, 출연금, 보조금과 자체수입 및 차입금 등으로 구분한다. 자체수입에는 법령에 당해 정부산하기관의 업무로 규정된 업무 또는 법령에 규정된 위탁근거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로 인한 수입금 및 법령의 근거에 의하여 부여된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등을 포함한다.
2. (자체수입 확대 노력) 정부산하기관은 설립 목적 및 기능범위 내에서 새로운 수입원의 적극적인 발굴과 효율적인 자산운영 등으로 자체수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수익사업의 타당성 사전검토) 자체수입만으로 운영되는 정부산하기관이 신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하여 지출을 확대하는 경우, 예상 수입액을 전망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 사업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4. (차입금의 이자비용) 수입의 일부를 재정융자특별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 민간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충당하는 정부산하기관은 이자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지출계획과 차입 시기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5. (주주 우선 배당의 원칙)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여 운영되는 정부산하기관에서 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결손보전이나 법정적립금 등 필수 소요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주주에게 우선 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국고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보조금예산을 지원받는 정부산하기관은 동 보조금을 일반사업비와 구분하여 계리하고, 이자발생 현황을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동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 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Ⅲ. 지출관련 기준

<지출기준 일반>

1. (세출예산의 구분) 정부산하기관의 세출예산은 인건비, 경비, 사업비 및 예비비로 구분한다.
2. (재무구조 개선) 정부산하기관은 자체수입 확대, 기금 등 여유자금의 수익성 제고, 외부차입금 및 채무보증 축소, 금융비용 최소화, 비업무용 자산매각 등을 통하여 재무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3. (전자조달 및 경쟁계약 확대) 정부산하기관은 주요 장비 및 물품 구매의 전자조달 비율을 확대하고, 수의계약의 축소와 경쟁계약 체결 확대 등을 통해 조달·구매예산의 절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인건비>

4. (인건비 지급의 근거) 인건비는 실행예산의 범위내에서 법령, 정관 또는 내부규정 등에 지급근거가 명시된 대로 집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지급대상 또는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예산이 정한대로 집행한다.
5. (인건비 증액) 2006년도 총 인건비는 인력증원 반영, 호봉승급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05년 총 인건비의 2% 증액 범위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6. (보수체계의 변경) 정부산하기관은 보수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연가보상비, 시간외수당 등 개인별로 지급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당을 기본급으로 일괄 전환하여서는 아니된다.

7. (인건비에서 타 비목으로의 전용 제한) 정부산하기관은 인건비 관련 비목에 잉여재원이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인건비 관련비목 상호간을 제외한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다. 다만, 경영평가 인센티브성과급의 지급, 정부업무위탁으로 인한 관련 인건비 지급, 공공요금 등 지출이 불가피한 경비에 부족이 발생하여 전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타비목에서 인건비로의 전용 제한) 정부산하기관은 편성된 인건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조직과 인력을 운용하여야 한다. 특히, 예산에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은 기구 및 인력증원은 최대한 억제하고 증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소요되는 인건비는 예산상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에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여타 비목으로부터의 전용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9. (정원 및 현원의 관리) 정부산하기관의 현원 관리는 직제상의 정원 범위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정부로부터 위탁사업의 수행 또는 정책 목적 수행을 위한 팀 등 한시적 조직으로 인한 초과 정원은 임무가 종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해소하여야 한다. 정부산하기관의 조직 또는 정원에 변동이 있는 경우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 1> 양식으로 1주일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0. (총인건비 통계자료의 관리) 정부산하기관은 매년 과거 5년간의 총인건비, 임원 및 직원의 직급별 1인당 총인건비 및 증가율 추이에 관한 자료를 비치하여야 하며, 주무기관의 장 또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총인건비는 인건비와 급여성 복리후생비의 합계액을 말하며, 임원연봉을 포함하되, 사업비 및 경비에 포함된 한시적 인력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금액을 의미한다(업무추진비에 포함된 직급보조비 등 포함).
11.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기준) 정부산하기관은 연도 중 퇴직급여충당금 소요에 대비하여 법정부담 의무액(연간 인건비 지급액의 1/12)을 매 분기별로 우선적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경비>

12. (경상경비의 절감집행)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 집행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말에 집중 집행하거나 과다 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업무추진비의 일원화) 정부산하기관은 사업추진을 위한 접대비 성격의 예산은 업무추진비에 일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14. (업무추진비의 집행) 정부산하기관은 업무추진비를 신용카드 중 클린카드로 집행하여야 하며, 기관장 및 임원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분기별로 당해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또한 업무추진비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및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15. (복리후생비의 정비) 정부산하기관은 주택대출금, 학자금, 개인연금 등 복리후생비 중 불합리하게 집행되고 있는 항목은 정비하여야 한다.
16. (국내외 출장) 국내외 출장은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출장기간 및 출장인원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시행한다. 출장이행 확인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하되, 신용카드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기관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7. (국제회의 등 행사) 정부산하기관은 행사계획 수립단계부터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한다. 회의장 임차는 공공기관(예: 학교시설, 구민회관, 공공 문화시설 등)을 우선 활용하도록 노력하고, 국제회의·국제세미나는 국제관례와 상호주의를 적용한다.

18. (주택관리비의 부담) 정부산하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관리비는 입주한 임직원이 부담하도록 한다. 다만, 재산세, 보험료 등의 제세공과금과 건물 및 부대시설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비는 정부산하기관이 부담하도록 한다.
19.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법령의 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성하고 투명하게 관리한다. 또한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목적에 부합하게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사업비>

20. (핵심기능 위주의 사업관리) 정부산하기관은 핵심기능 위주로 사업을 관리하고, 기관의 설립 목적과 사업간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 및 사업추진의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1. (용역비용 산정의 기준) 정부산하기관의 분야별 용역제공에 대한 비용 산정은 원칙적으로 다음 기준을 상한으로 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① 기술용역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과학기술부 공고) 또는 측량용역대가의 기준(건설교통부 고시)
 - ② 전산용역 :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정보통신부 고시)
 - ③ 업무관련용역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재정경제부 회계예규)
22. (불필요한 예산집행의 방지) 정부산하기관은 배정된 예산을 전액 집행하여야 한다는 관행에서 탈피하여 집행 및 집행 규모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시에는 불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각 부서별 또는 개인별 예산의 절감 또는 수입의 초과달성 실적을 내부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예비비>

23. (예비비의 구분)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법 제1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영평가 인센티브예비비로 구분한다. 다만 예비비 항목이 없는 기금 운용 정부산하기관은 인센티브성과급 계상을 위하여 별도 세세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24. (예비비의 전용 제한) 정부산하기관은 예비비사용명세서에 정해진 목적대로 집행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주무부처 등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조직의 신설 또는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요에 충당하거나, 재해복구를 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인센티브 예비비는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이외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IV. 경영평가 인센티브성과급

1. (인센티브성과급의 상한) 임원에 대한 인센티브성과급은 임원의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산출한 기준연봉의 100%를 상한으로 하고,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성과급은 직원 기준월봉의 200%를 상한으로 한다.
2. (경영평가 인센티브예비비의 편성) 정부산하기관은 인센티브성과급의 지급률 하한과 상한의 범위내에서 인센티브예비비를 편성하여야 하며, 기존 상여금 또는 기본연봉에서 조성된 인센티브전환금을 인센티브예비비 재원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다만 2006년도 인센티브예비비를 편성하지 아니한 기관은 'IV-5'에 따라 집행할 수 있으나, 다음연도 예산에는 인센티브예비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3. (예산 전용 등) 인센티브성과급 예산이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에 미달하게 계상된 정부산하기관의 경우 이사회 의결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4. (인센티브성과급 산출방식) 정부산하기관 임·직원의 기준연봉 및 기준월봉의 도출,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성과급 산출방식은 <첨부 2>와 같다.
5. (인센티브예비비 미편성기관) 2005년 신규 법 적용 대상기관은 <첨부 3>에 따라, 기존 법 적용 대상기관중 2006년 예산에 인센티브예비비를 편성하지 않은 기관은 <첨부 3>의 1, 4, 5에 따라 인센티브성과급 재원을 마련하여 집행하도록 한다.
6. (기존 성과상여금의 예비비 전환과 집행) 2005. 1. 1이전 도입된 기존 성과상여금은 인센티브예비비에 통합하여 계상하며 그 집행은 <첨부 3>의 5를 준용한다.

7. (절대평점과 상대평점) 인센티브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 취득한 점수와 각 유형 내에서 상대적인 순위를 감안한 점수를 고려하여 산출한다.
8. (내부 인센티브성과급 지급기준) 정부산하기관은 본 기준에 의한 인센티브성과급 총액 범위 내에서 개인별 또는 부서별로 차별화된 인센티브성과급 지급에 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V. 행정사항

1. (본 기준의 발효시기) 본 기준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초과정원의 해소) 본 기준 'Ⅲ-9'의 규정과 관련, 2006년 1월 1일 현재 현원을 직제상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하고 있는 정부산하기관은 조속한 시일내 초과 인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인센티브성과급의 퇴직금 산입) 정부산하기관은 인센티브성과급의 예비비 편성에 따라 퇴직금의 감소 및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인센티브예비비 관련 노사합의) 정부산하기관은 인센티브성과급의 예비비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노사합의를 하여야 한다.

<첨부 1> 정부산하기관 조직·정원 조정 정보양식

시기 ¹⁾	구분 ²⁾	최근 3년간 변동현황		조정내용 ³⁾		조정근거 ⁴⁾	조정사유 ⁵⁾	협의절차 ⁶⁾	향후계획 ⁷⁾
		년	년	년	년				
1. 조직개편 내용 (개)									
	○본부(단)								
	○실(처)								
	○센터								
	○부								
	○팀								
	○지사								
	○사업소								
2. 정원조정 내용 (명)									
	합 계								
	○임원								
	○직원								
	-정규직 ⁸⁾								
	-비정규직 ⁸⁾								

- 주 1) 시기 : 변동 시점의 연월을 기재. 연도 내에 2회 이상의 조정이 있는 경우, 매회의 조정시기를 모두 기재
- 2) 구분 : 구분란에 기재되지 않은 부서가 있는 경우 양식 변경 가능
- 3) 조정내용 : 조정 전후의 조직도(자회사 포함) 및 직급별 인원 별첨
- 4) 조정근거 : 조직·정원 조정의 근거를 명시 (예) 신규 ○○사업 추진, △△업무 추진, ◇◇직무분석에 의한 조직개편 등.
조정의 근거가 직무분석·조직진단(자체·외부위탁 포함)인 경우 주요내용(시기, 대상, 진단결과) 별첨
- 5) 조정사유 : 조직·정원 조정의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 (예) △△사업을 위해 ○○지역 ◇◇지사 설치
- 6) 협의절차 : 조직·정원 조정을 위해 협의한 근거(별명, 정관), 기관(주무부처 등), 형태(협의, 승인 등), 절차(이사회 상정, 정관 개정 등)를 모두 기재
- 7) 향후계획 : 향후 직무분석·조직진단 및 주요사업에 따른 조직·정원의 조정 예정사항 기재
직무분석·조직진단 계획시 주요내용 별첨
- 8) 비정규직의 경우 조직·분야별 현황 및 필요성, 비정규직 대책(유지·증가·감소, 치우개선, 정규직화 등) 별첨

<첨부 2> 정부산하기관 임·직원의 인센티브성과급 산출방식

1. 임·직원의 기준연봉 및 기준월봉 도출

- 기관별 임원의 기준연봉 및 직원의 기준월봉은 [참고1]을 기초로 산정한다.
- 임원의 기준연봉은 88개기관 임원의 기본연봉 평균값을 기준으로 기관별 기본연봉이 평균값 이하인 경우 기본연봉의 60%를, 평균값 이상인 경우 평균값의 60%를 말한다

* 기본연봉 평균값 : 기관장 1억원, 감사 0.84억원, 이사 0.8억원

- 직원의 기준월봉은 [참고1]에 따라 산출된 연간보수의 1/12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임·직원의 인센티브성과급 산출

- 임원의 인센티브성과급은 기준연봉에 경영평가 점수에 의해 결정되는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text{임원의 인센티브성과급} = \text{기준연봉} \times \text{지급률}$$

$$\begin{aligned} \text{임원의 지급률(\%)} &= 0.5 \times [20 + \{(\text{절대평점} - 50) / 50 \times 80\}] \\ &+ 0.5 \times [20 + \{(\text{상대평점} - 50) / 50 \times 80\}] \end{aligned}$$

* 상대평점은 동일한 유형내 100~50점을 기관수에 따라 균등하게 1등부터 최하위기관까지 순차적으로 부여한 점수 [참고 2]

- 직원의 인센티브성과급은 기준월봉에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text{직원의 인센티브성과급} = \text{기준월봉} \times \text{지급률}$$

$$\begin{aligned} \text{직원의 지급률(\%)} &= 0.5 \times [100 + \{(\text{절대평점} - 50) / 50\} \times 100] \\ &+ 0.5 \times [100 + \{(\text{상대평점} - 50) / 50\} \times 100] \end{aligned}$$

<첨부 3> 정부산하기관의 인센티브성과급 재원조성

1. (인센티브성과급의 재원) 인센티브성과급의 재원은 기존 상여금 또는 기본연봉에서 조성하는 인센티브전환금과 인센티브성과급 지급목적으로 결산잉여금 또는 전년도 이월금, 자체수입 초과달성, 경상경비 절감, 기타 불용예산 등에서 추가로 조성하는 인센티브추가금으로 마련한다. 다만 인센티브전환금은 인센티브성과급 지급시 이를 상계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인센티브전환금에 관한 노사합의) 정부산하기관은 2005년도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하여 인센티브전환금에 대하여 인센티브성과급 지급전까지 노사합의하여야 한다.
3. (인센티브성과급의 지급) 인센티브전환금에 대해 노사합의된 기관은 2005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공표된 이후부터 2006년도 12월말 까지 자율적으로 인센티브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4. 인센티브성과급 재원 마련 : 인센티브전환금과 인센티브추가금
 - 인센티브전환금은 임원은 기준연봉의 20%, 직원은 기준월봉의 100%를 [참고1]의 기준연봉 산정기준이 되는 인건비 항목에서 전환한다. 단, 직원에 대한 기존 자체 성과상여금이 있는 경우 동 재원에서 우선 전환한다.
 - 인센티브추가금(임원은 최대 기준연봉의 80%, 직원은 최대 기준월봉의 100%)은 자체수입 초과달성, 경상경비 절감, 인력감축 등 경영개선으로 발생한 여유재원 또는 기타 불용예산을 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다.

5. 기존 성과상여금과의 관계

- 기존 성과상여금은 동 제도로 통합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임원에 대해서는 기존 성과상여금 재원(금액기준)에서 인센티브 추가금을 우선 조성하여야 한다. 단, 기존 성과급 상한이 커서 기준연봉의 8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경영평가 지급률에 비례하게 지급한다.
- 직원에 대해서는 기존 성과상여금 재원(금액기준)에서 인센티브 전환금을 우선 조성하며, 그 잔여분에 대해서는 기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 내부규정 개정을 통한 인센티브 신설 및 상한 인상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인정 시점을 '05. 1. 1.이전 도입된 제도로 한정한다.

참고 1

기준연봉(기준월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인건비

구분		호봉제 기관	연봉제 기관
기준연봉 (기준월봉) 산정 기준이 되는 인건비	① 기본급여	기본급, 본봉, 통상임금	기본연봉 ¹⁾
	② 통상적 수당 ²⁾	직무수당, 직책수당, 책임수당, 위험작업수당 등	-
	③ 상여금성 복리후생비 ³⁾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등	-
	④ 고정 상여금 ⁴⁾	상여수당, 기본상여금, 정기상여금,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	-
기타	⑤ 기타 수당 ²⁾	가족수당, 통근수당, 연월차수당, 유급휴가수당, 주택수당, 증식수당 등	-
	⑥ 기타 복리후생비	자녀학자금보조, 건강진단비, 체육행사비 등	-
	⑦ 초과 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
	⑧ 성과 상여금 ⁴⁾	경영성과배분금, 포상금 성과금, 생산장려금 등	성과연봉
법정 부담금	⑨ 4대보험 부담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좌동
	⑩ 퇴직급여 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좌동

주 1) 연봉제 대상자에게 통상적 수당, 고정급적 복리후생비, 또는 고정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을 포함하여 기본연봉으로 함

주 2) 통상적 수당과 기타수당의 구분은 '노동부 임금구조통계조사'의 내용을 준용

주 3) 상여금성 복리후생비는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 기본급의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실질적인 상여금 성격을 갖는 보수를 말함

주 4) 고정상여금은 업무성과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말하며, 성과상여금은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상여금임(성과금, 포상금 등)

참고 2

정부산하기관 유형별 상대평점 배분

검사·검증기관		금융·수익기관		문화·국민생활기관		산업진흥기관	
순위	상대평점	순위	상대평점	순위	상대평점	순위	상대평점
1	100.00	1	100.00	1	100.00	1	100.00
2	95.45	2	95.00	2	96.15	2	96.67
3	90.91	3	90.00	3	92.31	3	93.33
4	86.36	4	85.00	4	88.46	4	90.00
5	81.82	5	80.00	5	84.62	5	86.67
6	77.27	6	75.00	6	80.77	6	83.33
7	72.73	7	70.00	7	76.92	7	80.00
8	68.18	8	65.00	8	73.08	8	76.67
9	63.64	9	60.00	9	69.23	9	73.33
10	59.09	10	55.00	10	65.39	10	70.00
11	54.55	11	50.00	11	61.54	11	66.67
12	50.00			12	57.69	12	63.33
				13	53.85	13	60.00
				14	50.00	14	56.67
						15	53.33
						16	50.00

연수·교육훈련기관		건설·시설관리기관		연구개발기관		연·기금운용기관	
순위	상대평점	순위	상대평점	순위	상대평점	순위	상대평점
1	100.00	1	100.00	1	100.00	1	100.00
2	87.50	2	93.75	2	87.50	2	96.67
3	75.00	3	87.50	3	75.00	3	93.33
4	62.50	4	81.25	4	62.50	4	90.00
5	50.00	5	75.00	5	50.00	5	86.67
		6	68.75			6	83.33
		7	62.50			7	80.00
		8	56.25			8	76.67
		9	50.00			9	73.33
						10	70.00
						11	66.67
						12	63.33
						13	60.00
						14	56.67
						15	53.33
						16	50.00

※ 평가결과 확정시점에서 유형내 기관수가 변경된 경우 상대평점 변경

□ '07년도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

2007년도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

기 획 예 산 처

- 목 차 -

I. 일반 기준

II. 수입관련 기준

III. 지출관련 기준

IV. 경영평가 인센티브성과급

V. 행정사항

【첨부】

1. 정부산하기관의 조직·정원 조정 통보양식
2. 임·직원의 인센티브성과급 산출방식
3. 인센티브성과급 재원조성

I. 일반 기준

1. (예산정보 등의 공개) ①정부산하기관은 당해 기관의 설립 목적 및 공익에 맞도록 예산을 관리·운용하여야 하며,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주요 정보를 기획예산처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공공기관 알리오) 등을 통해서 국민에게 공개한다.
②정확한 경영정보의 공개를 위하여 담당책임자를 지정·운용한다.
2. (예산서의 작성) 정부산하기관은 투명한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해 원칙적으로 정부예산과목 수준으로 비목을 구분하여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자체 예산집행지침) 정부산하기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자체적으로 예산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운용함으로써 예산의 집행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예산집행계획) 정부산하기관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효율을 기하고, 매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예산집행의 성과를 분석·평가하여 관련 지침의 개선 등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5. (예산집행의 효율화) 정부산하기관은 예산의 이·전용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며,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생산성을 제고하는 등 예산 집행의 효율을 제고하여야 한다.
6. (출연·출자·보증 등의 제한) 정부산하기관은 국가적 정책사업을 제외하고는 다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한 출연·출자·보증 등을 최대한 억제한다.
7. (국회 등 지적사항 이행) 정부산하기관은 2007년도 예산집행시 국회, 감사원의 시정권고를 충실히 이행한다.

8. (타 지침과의 관계) 본 기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200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관련규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비의 주체, 지급대상, 사용용도 등 성격상 준용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II. 수입관련 기준

1. (수입예산의 구분) 정부산하기관의 수입예산은 국고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출자금, 출연금, 보조금과 자체수입 및 차입금 등으로 구분한다.
2. (자체수입 확대 노력) 정부산하기관은 자체수입 확대를 위하여 설립 목적 및 기능의 범위내에서 새로운 수입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보유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한다.
3. (수익사업의 타당성 사전검토) 자체수입만으로 운영되는 정부산하기관이 신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하여 지출을 확대하는 경우,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 예산을 집행한다.
4. (차입금의 이자비용) 수입의 일부를 차입금으로 충당하는 정부산하기관은 이자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지출계획과 차입 시기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5. (주주 우선 배당의 원칙)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여 운영되는 정부산하기관에서 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결손보전이나 법정적립금 등 필수 소요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주주에게 우선 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국고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보조금예산을 지원받는 정부산하기관은 보조금을 일반사업비와 구분하여 계리하고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 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한다.

Ⅲ. 지출관련 기준

<지출기준 일반>

1. (세출예산의 구분) 정부산하기관의 세출예산은 인건비, 경비, 사업비 및 예비비로 구분한다.
2. (재무구조 개선) 정부산하기관은 자체수입 확대, 기금 등 여유자금의 수익성 제고, 외부차입금 및 채무보증 축소, 금융비용 최소화, 비업무용 자산매각 등을 통하여 재무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3. (전자조달 및 경쟁계약 확대) 정부산하기관은 주요 장비 및 물품 구매의 전자조달 비율을 확대하고, 수의계약의 축소와 경쟁계약 체결 확대 등을 통해 조달·구매예산의 절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인건비>

4. (인건비 지급의 근거) 인건비는 실행예산의 범위내에서 법령, 정관 또는 내부규정 등에 지급근거가 명시된 대로 집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지급 대상 또는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예산이 정한대로 집행한다.
5. (인건비 증액) ①2007년도 총인건비는, 2006년도 총 인건비의 2%이내에서 증액(인력증원 및 호봉승급 별도)하여 집행한다.
②총인건비는 임직원(잡급직원 제외)의 모든 인건비와 급여성 복리후생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③인력증원을 위하여 편성된 인건비는 기존인력의 인건비 인상에 활용할 수 없다.
6. (일부 수당의 기본급 전환금지) 정부산하기관은 연가보상비, 시간외수당 등 개인별로 지급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당을 기본급으로 일괄 전환하여서는 아니된다.

7. (인건비에서 타 비목으로의 전용 제한) ①정부산하기관은 인건비 관련 비목에 잉여재원이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인건비 관련비목 상호간을 제외한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다.
②경영평가 인센티브성과급, 정부업무위탁으로 인한 관련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지출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여 전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타비목에서 인건비로의 전용 제한) 정부산하기관은 예산에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은 기구 및 인력증원은 최대한 억제하고 증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소요되는 인건비는 예산상 인건비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에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여타 비목으로부터의 전용은 최소화한다.
9. (정원 및 현원의 관리) ①정부산하기관의 현원 관리는 직제상의 정원 범위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한시적 조직을 운영할 경우 초과 정원은 임무가 종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해소한다.
②정부산하기관의 조직 또는 정원에 변동이 있는 경우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 1> 양식으로 1주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10. (총인건비 통계자료의 관리) 정부산하기관은 매년 과거 5년간의 총 인건비, 임원 및 직원의 직급별 1인당 총인건비 및 증가율 추이에 관한 자료를 비치하여야 하며, 주무기관의 장 또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제출한다.
11.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기준 등) 정부산하기관은 연도 중 퇴직급여충당금 소요에 대비하여 법정부담 의무액(연간 인건비 지급액의 1/12)을 매분기별로 우선적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2.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관련) 비정규직의 퇴직금·법정수당, 단순 노무인력의 인건비 단가(외주화 포함) 등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06.8월, 노동부)』 및 『200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07.1월, 기획예산처)』을 준용하여 집행한다.
13. (법정부담금 집행관련) 정부산하기관은 예산절약을 위해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1/4분기에 일괄 납부 할 수 있다.

<경비>

14. (경상경비의 절감집행)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 집행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말에 집중 집행하거나 과다 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 (업무추진비의 일원화) 정부산하기관은 사업추진을 위한 접대비 성격의 예산은 업무추진비에 일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16. (업무추진비 집행) ①정부산하기관은 업무추진비를 신용카드 중 클린카드로 집행하여야 한다.
 ②기관장 및 임원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분기별로 사용내역을 당해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③업무추진비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및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④업무추진비가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한다.
 ⑤업무추진비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해 『200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범위내에서 업무추진비의 사용범위 및 집행절차 등에 대한 자체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17.(복리후생비의 정비) 정부산하기관은 주택대출금, 학자금, 개인연금 등 복리후생비 중 불합리하게 집행되고 있는 항목은 정비하여야 한다.

18. (국내외 출장) 국내외 출장은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출장기간 및 출장인원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시행한다. 출장이행 확인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하되, 신용카드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기관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9. (국제회의 등 행사) 정부산하기관은 행사계획 수립단계부터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한다. 회의장 임차는 공공기관(예: 학교시설, 구민회관, 공공 문화시설 등)을 우선 활용하도록 노력하고, 국제회의·국제세미나는 국제관례와 상호주의를 적용한다.
20. (주택관리비의 부담) 정부산하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관리비는 입주한 임직원이 부담하도록 한다. 다만, 재산세, 보험료 등의 제세공과금과 건물 및 부대시설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비는 정부산하기관이 부담하도록 한다.
21.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성하고 투명하게 관리한다. 또한 조성된 사내복지기금은 기금목적에 부합하게 적정하게 집행한다.
22. (물품구매) 정부산하기관은 자산취득비 등 물품구매시 친환경상품, 중소기업제품,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등 법적의무사항을 준수하여 구매한다.

<사업비>

23. (핵심기능 위주의 사업관리) 정부산하기관은 핵심기능 위주로 사업을 관리하고, 기관의 설립 목적과 사업간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 및 사업추진의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4. (용역비용 산정의 기준) 정부산하기관의 분야별 용역제공에 대한 비용 산정은 원칙적으로 다음 기준을 상한으로 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① 기술용역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과학기술부 공고) 또는 측량용역대가의 기준(건설교통부 고시)
 - ② 전산용역 :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정보통신부 고시)
 - ③ 업무관련용역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재정경제부 회계예규)
25. (불필요한 예산집행의 방지) 정부산하기관은 배정된 예산을 전액 집행하여야 한다는 관행에서 탈피하여 집행 및 집행 규모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시에는 불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각 부서별 또는 개인별 예산의 절감 또는 수입의 초과달성 실적을 내부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예비비>

26. (예비비의 구분) ①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법 제1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영평가 인센티브예비비로 구분한다.
- ②예비비 항목이 없는 기금운용 정부산하기관은 인센티브 성과급 계상을 위하여 별도내역으로 관리할 수 있다.
27. (예비비의 전용 제한) ①정부산하기관은 예비비사용명세서에 정해진 목적대로 집행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② 주무부처 등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조직의 신설 또는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요에 충당하거나, 재해복구를 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인센티브 예비비는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이외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IV. 경영평가 인센티브성과급

1. (인센티브성과급의 상한) 임원에 대한 인센티브성과급은 임원의 기본 연봉을 기준으로 산출한 기준연봉의 100%를 상한으로 하고,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성과급은 직원 기준월봉의 200%를 상한으로 한다.
2. (경영평가 인센티브예비비의 편성) ①정부산하기관은 인센티브성과급의 지급률 하한과 상한의 범위내에서 인센티브예비비를 편성한다.
②기존 상여금 또는 기본연봉에서 조성된 인센티브전환금은 인센티브예비비로 계상한다.
③ 2007년도 인센티브예비비를 편성하지 아니한 기관은 'IV-5'에 따라 집행할 수 있으나, 다음연도 예산에는 인센티브예비비로 편성한다.
3. (예산 전용 등) 인센티브성과급 예산이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에 미달하게 계상된 정부산하기관의 경우 이사회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4. (인센티브성과급 산출방식) 정부산하기관 임·직원의 기준연봉 및 기준월봉의 도출,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성과급 산출방식은 <첨부 2>와 같다.
5. (인센티브예비비 미편성기관) 2006년 신규 법적용 대상기관은 <첨부 3>에 따라, 기존 법적용 대상기관중 2007년 예산에 인센티브예비비를 편성하지 않은 기관은 <첨부 3>의 1, 4, 5에 따라 인센티브성과급 재원을 마련하여 집행한다.
6. (기존 성과상여금의 예비비 전환과 집행) 2005. 1. 1이전 도입된 기존 성과상여금은 인센티브예비비에 통합하여 계상하며 그 집행은 <첨부 3>의 5를 준용한다.

7. (절대평점과 상대평점) 인센티브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 취득한 점수와 각 유형 내에서 상대적인 순위를 감안한 점수를 고려하여 산출한다.
8. (내부 인센티브성과급 지급기준) 정부산하기관은 본 기준에 의한 인센티브 성과급 총액 범위 내에서 개인별 또는 부서별로 차별화된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에 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V. 행정사항

1. (본 기준의 발효시기) 본 기준은 2007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초과정원의 해소) 본 기준 'Ⅲ-9'의 규정과 관련, 2007년 1월 1일 현재 현원을 직제상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하고 있는 정부산하기관은 조속한 시일내 초과 인원을 해소하도록 노력한다.
3. (인센티브성과급의 퇴직금 산입) 정부산하기관은 인센티브성과급의 예비비 편성에 따라 퇴직금의 감소 및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경과조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제4항에 따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경영평가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실시한 공기업·준정부 기관의 2006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대한 성과급 지급은 『2007년도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 기준』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첨부 1> 정부산하기관 조직·정원 조정 통보양식

시기 ¹⁾	구분 ²⁾	최근 3년간 변동현황		조정내용 ³⁾	조정전(A)	조정후(B)	증감(B-A)	조정근거 ⁴⁾	조정사유 ⁵⁾	협의절차 ⁶⁾	향후계획 ⁷⁾
		년	년								
1. 조직개편 내용 (개)											
	○본부(단)										
	○실(처)										
	○센터										
	○부										
	○팀										
	○지사										
	○사업소										
2. 정원조정 내용 (명)											
	합 계										
	○임원										
	○직원										
	-정규직										
	-비정규직 ⁸⁾										

- 주 1」 시기 : 변동 시점의 연월을 기재. 연도 내에 2회 이상의 조정이 있는 경우, 매회의 조정시기를 모두 기재
- 2」 구분 : 구분란에 기재되지 않은 부서가 있는 경우 양식 변경 가능
- 3」 조정내용 : 조정 전후의 조직도(자회사 포함) 및 직급별 인원 별첨
- 4」 조정근거 : 조직·정원 조정의 근거를 명시 (예) 신규 ○○사업 추진, △△업무 수탁, ◇◇직무분석에 의한 조직개편 등.
조정의 근거가 직무분석·조직진단(자체·외부위탁 포함)인 경우 주요내용(시기, 대상, 진단결과) 별첨
- 5」 조정사유 : 조직·정원 조정의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 (예) △△사업을 위해 ○○지역 ◇◇지사 설치
- 6」 협의절차 : 조직·정원 조정을 위해 협의한 근거(법령, 정관), 기관(주무부처 등), 형태(협의, 승인 등), 절차(이사회 상정, 정관 개정 등)를 모두 기재
- 7」 향후계획 : 향후 직무분석·조직진단 및 주요사업에 따른 조직·정원의 조정 예정사항 기재
직무분석·조직진단 계획시 주요내용 별첨
- 8」 비정규직의 경우 조직·분야별 현황 및 필요성, 비정규직 대책(유지·증가·감소, 처우개선, 정규직화 등) 별첨

<첨부 2> 정부산하기관 임·직원의 인센티브성과급 산출방식

1. 임·직원의 기준연봉 및 기준월봉 도출

- 기관별 임원의 기준연봉 및 직원의 기준월봉은 [참고1]을 기초로 산정한다.
- 임원의 기준연봉은 88개기관 임원의 기본연봉 평균값을 기준으로 (기관별 기본연봉이 평균값 이하인 경우 기본연봉의 60%를, 평균값 이상인 경우 평균값의 60%를 말한다

* 기본연봉 평균값 : 기관장 1억원, 감사 0.84억원, 이사 0.8억원

- 직원의 기준월봉은 [참고1]에 따라 산출된 연간보수의 1/12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임·직원의 인센티브성과급 산출

- 임원의 인센티브성과급은 기준연봉에 경영평가 점수에 의해 결정되는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text{임원의 인센티브성과급} = \text{기준연봉} \times \text{지급률}$$

$$\begin{aligned} \text{임원의 지급률(\%)} = & 0.5 \times [20 + \{(\text{절대평점} - 50) / 50 \times 80\}] \\ & + 0.5 \times [20 + \{(\text{상대평점} - 50) / 50 \times 80\}] \end{aligned}$$

* 상대평점은 동일한 유형내 100~50점을 기관수에 따라 균등하게 1등부터 최하위기관까지 순차적으로 부여한 점수 [참고 2]

- 직원의 인센티브성과급은 기준월봉에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text{직원의 인센티브성과급} = \text{기준월봉} \times \text{지급률}$$

$$\begin{aligned} \text{직원의 지급률(\%)} = & 0.5 \times [100 + \{(\text{절대평점} - 50) / 50\} \times 100] \\ & + 0.5 \times [100 + \{(\text{상대평점} - 50) / 50\} \times 100] \end{aligned}$$

<첨부 3> 정부산하기관의 인센티브성과급 재원조성

1. (인센티브성과급의 재원) 인센티브성과급의 재원은 기존 상여금 또는 기본연봉에서 조성하는 인센티브전환금과 인센티브성과급 지급목적으로 결산잉여금 또는 전년도 이월금, 자체수입 초과달성, 경상경비 절감, 기타 불용예산 등에서 추가로 조성하는 인센티브추가금으로 마련한다. 다만 인센티브전환금은 인센티브성과급 지급시 이를 상계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인센티브전환금에 관한 노사합의) 정부산하기관중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성과급을 최초로 지급하는 기관은 인센티브전환금에 대하여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전까지 노사합의하여야 한다.
3. (인센티브성과급 지급) 정부산하기관은 2006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공표된 이후부터 2007년도 12월말까지 자율적으로 인센티브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4. 인센티브성과급 재원 마련 : 인센티브전환금과 인센티브추가금
 - 인센티브전환금은 임원은 기준연봉의 20%, 직원은 기준월봉의 100%를 [참고1]의 기준연봉 산정기준이 되는 인건비 항목에서 전환한다. 단, 직원에 대한 기존 자체 성과상여금이 있는 경우 동 재원에서 우선 전환한다.
 - 인센티브추가금(임원은 최대 기준연봉의 80%, 직원은 최대 기준월봉의 100%)은 자체수입 초과달성, 경상경비 절감, 인력감축 등 경영개선으로 발생한 여유재원 또는 기타 불용예산을 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다.

5. 기존 성과상여금과의 관계

- 기존 성과상여금은 동 제도로 통합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임원에 대해서는 기존 성과상여금 재원(금액기준)에서 인센티브 추가금을 우선 조성하여야 한다. 단, 기존 성과급 상한이 커서 기준연봉의 8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경영평가 지급률에 비례하게 지급한다.
- 직원에 대해서는 기존 성과상여금 재원(금액기준)에서 인센티브 전환금을 우선 조성하며, 그 잔여분에 대해서는 기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 내부규정 개정을 통한 인센티브 신설 및 상한 인상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인정 시점을 '05. 1. 1.이전 도입된 제도로 한정한다.

참고 1

기준연봉(기준월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인건비

구분		호봉제 기관	연봉제 기관
기준연봉 (기준월봉) 산정 기준이 되는 인건비	① 기본급여	기본급, 본봉, 통상임금	기본연봉 ¹⁾
	② 통상적 수당 ²⁾	직무수당, 직책수당, 책임수당, 위험작업수당 등	-
	③ 상여금성 복리후생비 ³⁾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등	-
	④ 고정 상여금 ⁴⁾	상여수당, 기본상여금, 정기상여금,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	-
기타	⑤ 기타 수당 ²⁾	가족수당, 통근수당, 연월차수당, 유급휴가수당, 주택수당, 중식수당 등	-
	⑥ 기타 복리후생비	자녀학자금보조, 건강진단비, 체육행사비 등	-
	⑦ 초과 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
	⑧ 성과 상여금 ⁴⁾	경영성과배분금, 포상금 성과금, 생산장려금 등	성과연봉
법정 부담금	⑨ 4대보험 부담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좌동
	⑩ 퇴직급여 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좌동

주 1) 연봉제 대상자에게 통상적 수당, 고정급적 복리후생비, 또는 고정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을 포함하여 기본연봉으로 함

주 2) 통상적 수당과 기타수당의 구분은 '노동부 임금구조통계조사'의 내용을 준용

주 3) 상여금성 복리후생비는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 기본급의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실질적인 상여금 성격을 갖는 보수를 말함

주 4) 고정상여금은 업무성과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말하며, 성과상여금은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상여금임(성과금, 포상금 등)

참고 2

정부산하기관 유형별 상대평점 배분

검사·검증기관		금융·수익기관		문화·국민생활기관		산업진흥기관	
순위	상대평점	순위	상대평점	순위	상대평점	순위	상대평점
1	100.00	1	100.00	1	100.00	1	100.00
2	95.45	2	91.67	2	95.00	2	95.83
3	90.91	3	83.33	3	90.00	3	91.67
4	86.36	4	75.00	4	85.00	4	87.50
5	81.82	5	66.67	5	80.00	5	83.33
6	77.27	6	58.33	6	75.00	6	79.17
7	72.73	7	50.00	7	70.00	7	75.00
8	68.18			8	65.00	8	70.83
9	63.64			9	60.00	9	66.67
10	59.09			10	55.00	10	62.50
11	54.55			11	50.00	11	58.33
12	50.00					12	54.17
						13	50.00

연수·교육훈련기관		건설·시설관리기관		학술·연구지원기관		연·기금운용기관	
순위	상대평점	순위	상대평점	순위	상대평점	순위	상대평점
1	100.00	1	100.00	1	100.00	1	100.00
2	87.50	2	92.86	2	90.00	2	96.43
3	75.00	3	85.71	3	80.00	3	92.86
4	62.50	4	78.57	4	70.00	4	89.29
5	50.00	5	71.43	5	60.00	5	85.71
		6	64.29	6	50.00	6	82.14
		7	57.14			7	78.57
		8	50.00			8	75.00
						9	71.43
						10	67.86
						11	64.29
						12	60.71
						13	57.14
						14	53.57
						15	50.00

※ 평가결과 확정시점에서 유형내 기관수가 변경된 경우 상대평점 변경

□ '08년도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지침

2008년도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지침

I. 예산편성·집행기본방향

□ 책임경영체제에 부합되도록 기준과 원칙에 따라 예산을 운용한다.

○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고,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예산 운용의 질서와 원칙을 확립한다.

○ 고유·핵심업무 중심으로 재원을 중점 배분한다.

□ 예산절감 및 성과지향적 예산운용으로 경영효율성을 제고한다.

○ 성과관리, 예산사업성과평가 등을 통한 지출 구조조정 및 경상경비 절감 등으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한다.

○ 연봉제, 내부 성과평가, 예산성과금 제도 등 성과관리시스템을 내실있게 운영한다.

□ 예산 편성·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 국회·감사원·언론·시민단체·경영평가단 등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한다.

○ 외부 회계감사, 경영공시 등을 내실있게 추진한다.

○ 원칙적으로 정부예산과목 수준으로 비목을 구분하여 예산서를 작성한다.

○ 분기별 집행계획 수립·시행 및 집행점검을 강화하여 예산 불용·이월·이용·전용 최소화 등 집행효율성을 제고한다.

II. 주요 항목별 편성지침

1 인 건 비

□ 2008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07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3%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한다.

○ 다만, 2007년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의 인건비 인상률을 초과하여 편성·집행한 기관의 경우에는, 2007년도 해당 지침에 따른 인건비 인상률을 적용하여 2007년도 인건비 기준을 산정한다.

○ 총인건비는 모든 인건비와 인건비 항목 외에 계정과목 및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임직원의(정원외직원 제외)의 소득세법상 근로 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한다.

▪ 다만, 퇴직급여충당금, 경영평가 성과금은 제외한다.

○ 총인건비 예산은 원칙적으로 2007년말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한다.

▪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해당하는 인건비 예산은 인건비 인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다.

▪ 관계기관과 협의된 2008년도 정원 증원에 해당하는 소요 인건비를 예비비에 계상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정-현원 차이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예비비에 계상한다.

▪ 예비비에 계상하는 총인건비는 채용에 따른 실소요액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채용이후에 예산을 전용하여 실소요액을 집행한다.

- 총인건비 한도내에서의 개인별·항목별 등 구체적인 증감은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새로운 수당, 복리후생비 등의 신설을 억제하고,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로 단순화해 나간다.
 - 직제상 정원외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잡급’에 계상하고,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급여성 복리후생비’에 계상하되, 다른 비목에 계상 할 수 없다.
-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성과관리시스템을 강화하되, 연봉제가 임금인상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한다.
- 대상직위에 대하여 업무의 중요도, 책임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등급별로 연봉액의 범위를 설정하고, 업무성과를 반영하여 연봉액을 차등 결정한다.
 - 등급의 수, 등급별 연봉액, 성과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퇴직급여충당금은 근속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추계액에 맞추어 매분기별로 우선적으로 적립한다.
- 다만, 퇴직연금제 등 새로운 퇴직급여제도를 도입한 기관의 경우 제도에 따른 소요액을 반영한다.
- 200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별로 차등 지급되는 경영평가 성과급은 예비비에 계상하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이외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예비비에 계상할 경영평가 성과급은 공기업의 경우 기관장은 기본연봉의 200%, 기관장을 제외한 상임임원은 기본연봉의 100%, 직원은 월기본급의 500% 이내로 하며, 준정부기관의 경우 기관장을 포함한 상임임원은 기준연봉의 100%, 직원은 기준월봉의 200% 이내로 한다.

- 경영평가 성과급의 채원조성 방안 등에 대하여는 <첨부 1>을 따른다.
- 기본연봉, 월기본급, 기준연봉 및 기준월봉의 산출에 대하여는 <첨부 2>를 따른다.
- 경영평가 성과급의 기관별 지급률 등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각 기관은 예산편성시에 <첨부 1>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을 예비비에 계상한 범위 내에서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한다.
-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개인별 또는 부서별 성과관리를 위해 본 기준에 의한 경영평가 성과급 총액 범위 내에서 차등화된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에 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2 경 비

- 경상경비는 원칙적으로 2007년도 경상경비 예산액 범위내에서 실소요액을 편성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한다.
- 다만, '06년 경영평가 결과 우수기관은 1% 이내에서 증액하고, 부진기관은 1% 삭감 편성한다. 혁신평가만 받는 기관의 경우 '06년 혁신평가 결과 우수기관은 1% 이내에서 증액하고, 부진기관 중 3단계에서 정채된 기관 및 3단계로 하락한 기관, 2단계 기관 중 '06년 신규평가 기관은 1% 삭감, 2단계에서 정채된 기관은 3% 삭감 편성한다.

* 우수기관은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결과 상위 3개 기관,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 결과 유형별 상위 2개 기관 (유형별 기관수 10개 미만인 경우 상위 1개), 혁신평가 결과 5단계 이상인 기관을 말한다.

* 부진기관은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결과 하위 2개 기관,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 결과 유형별 하위 20%인 기관 중 평가점수 66.7점 미만인 기관, 혁신평가 결과 3단계 이하인 기관을 말한다.

○ 법정경비, 인력증원 등 불가피한 증액 소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경상경비는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 기관운영 또는 영업유지를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로써,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여비교통비, 수선유지비, 통신비 등을 말한다.

□ 복리후생비는 급여성 복리후생비와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된 경비를 모두 포함한다.

▪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다른 경비항목에 계상할 수 없다.

○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는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법정복리후생비 등 기타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 주택대출금, 학자금, 개인연금 등은 과도한 복리후생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편성한다.

□ 법인세법 제25조제5항에 규정된 접대비 성격의 예산은 '업무추진비' 비목에 일괄 계상하며, 원칙적으로 세법상 손금인정 한도내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한다.

- 다만, 동 규정을 최초로 적용받는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 (법인세법 제3조2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업무추진비는 2007년도 업무추진비 예산액 범위내에서 편성한다.

□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및 연구개발이 강화되도록 노력한다.

□ 국외여비는 2007년도 국외여비 예산액 범위내에서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편성한다.

□ 광고(홍보)예산은 기관설립목적 및 경영목표와 광고효과 등을 감안하여 절감 편성한다.

- 기관 이미지 등 단순 홍보성 광고비 편성을 지양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은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년도의 세전 순이익의 100분의 5을 기준으로 정하되, 민간기업 등과 비교하여 과다하게 출연하지 않도록 하며, 다른 특별출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독점적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을 최소화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출연한다.

- 직전 사업연도에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손익에 관계없이 사전에 미실현이익(평가이익, 환산이익 등 현금의 유출입을 수반하지 않는 이익)을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사 업 비

□ 기관 고유업무와 핵심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한다.

- 기관별 경영목표와 예산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경영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
- 예산사업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비핵심사업·예산낭비요소 발굴 등을 통해 지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한다.

□ 신규 투자사업·자본출자 예산은 관계법령상 기관의 고유목적사업으로 한정한다. 다만, 해외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규 투자사업, 자본출자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예산을 반영하되,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경우는 외부전문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예산을 반영한다.
- 다만, 국가정책사업(또는 국고 지원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사업 지연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

□ 국가적 정책사업(해외에서의 사업을 포함)을 제외하고는 자회사 신설, 자회사에 대한 추가 출자·보증 및 관련기업·기관·단체 등에 대한 출자·출연은 최대한 억제한다.

□ 각 기관이 해외에서의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을 반영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각 기관이 사업의 수익성, 타당성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관계법령 및 정관에 근거가 있거나 주무부처의 승인이 있는 범위내에서 당해 기관의 핵심역량 분야와 관련한 사업에 진출한다.

- 민간 및 타 공공기관과의 동반/팩키지 진출을 확대하여 위험분산과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 해외에서의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전문직위 설정, 대내외 공모 등을 통해 우수인력 확보·양성하고, 동종 국내외 우수 기업 벤치마킹을 통해 내부역량 강화에 주력한다.
- 각 기관내에 「해외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별 투자 타당성 및 국가·환율·금리 위험 등에 따른 투자위험관리 기본계획(Contingency Plan) 등을 심의·의결한다.
 - 위원회의 구성은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민간 외부전문가를 포함
- 해외사업에 대한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외사업은 국내사업 부문과 별도로 구분하여 계리(예산, 결산)한다.
 - 해외사업 구분 계리 범위내에서 사업별 투자비, 타당성 조사비(Feasibility Study) 등에 있어서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곤란할 경우는 해외사업에 대한 과거 실적 및 향후 계획을 감안하여 해외사업 예산의 일정 범위내에서 예산상 총액계상 할 수 있다.
 - 해외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중 일부는 내부 유보를 통해 해외 사업의 재투자에 우선 사용할 수 있다.
- 총액으로 계상된 예산은 매분기 개시전 세부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사업비 집행전 타당성 및 위험 관리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사회 심의·의결 등 각 기관에서 정한 제반 예산집행 절차를 준수한다.
- 국가균형발전, 서민생활 안정, 에너지 확보 및 절약, 중소기업 지원, 기술개발 및 환경개선 등 국가 정책방향에 부응하는 투자를 확대한다.

④ 자금 및 기타 예산

- ☐ 외부 차입금 축소, 금융비용 최소화, 수익성 강화, 채무보증 축소, 비업무용자산 매각 등을 통하여 재무구조 개선에 노력한다.
- ☐ 환율, 유가, 금리 변동, 커뮤니케이션 위기, 재난 등 다양한 위협요인과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처하는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를 강화한다.
 - 위기관리는 ‘공공기관 위기관리지침’(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및 ‘공기업 환위험관리 지침’(재정경제부) 등 관련 정부지침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 추진하되, 각 공공기관의 구조와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위기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 ☐ 조달·구매예산은 수의계약 축소, 경쟁 확대 등을 통해 관련 예산 절감을 추진한다.
 - 조달·구매계약은 출자회사, 내부 이해관계집단 등과의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관련법령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체결할 수 있다.
- ☐ 자본예산 중에 계상되는 경비는 사업량 증감 등을 감안하되, 인건비·경비예산 편성기준을 따른다.

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관련

- ☐ 비정규직 근로자의 퇴직금·법정경비 등의 예산과 단순 노무인력의 인건비 단가(외주화 포함) 등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07.6, 노동부)” 및 정부의 “2008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07.5, 기획예산처)을 준용하여 편성한다.
- ☐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인력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기존 임직원과 같이 인건비로 편성한다.

- 다만, 사업 특성상 해당 사업비로 무기계약직 보수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기간제근로자보호법에 따라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별시정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예산을 반영한다.

6 예 비 비

- 예비비는 인력증원 봉급예비비, 정-현원차 봉급예비비,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경영평가인센티브 상여금과 일반예비비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 일반예비비는 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으로 계상하며, 인건비 또는 보수 보전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 인력증원 및 정-현원차 봉급예비비와 경영평가 성과급 예비비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예비비 항목이 없는 기금관리기관은 인력증원 및 정-현원차 해당 인건비, 경영평가 성과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내역으로 관리한다.

III. 주요 항목별 집행지침

1 인 건 비

- 인건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법령, 정관 또는 내부규정 등에 지급근거가 명시된 대로 집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지급대상 또는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예산이 정한대로 집행한다.

- 연가보상비, 시간외수당 등 개인별로 지급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당을 기본급으로 일괄 전환하여서는 아니된다.
- 인건비 관련 비목에 잉여재원이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인건비 관련비목 상호간을 제외한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다.
 - 정부업무위탁으로 인한 관련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지출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여 전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예산에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은 기구 및 인력증원은 최대한 억제하고 증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소요되는 인건비는 예산상 인건비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에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여타 비목으로부터의 전용은 최소화한다.
- 현원 관리는 직제상의 정원 범위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한시적 조직을 운영할 경우 초과 정원은 임무가 종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해소한다.
- 예산절약을 위해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1/4분기에 일괄 납부할 수 있다.

② 경 비

-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 집행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말에 집중 집행하거나 과다 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을 위한 접대비 성격의 예산은 업무추진비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를 신용카드 중 클린카드로 집행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및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가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한다.
 - 업무추진비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해 『200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범위내에서 업무추진비의 사용범위 및 집행절차 등에 대한 자체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다음 업종에 대해서는 클린카드의 사용을 제한하고,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제한 업종을 자율적으로 추가하는 등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자체 세부지침을 개선·시행한다.
- 유흥 업종(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 위생 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등 대인서비스)
 - 레저 업종(실내·외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 사행 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 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 법인카드의 사적사용 및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을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 경위를 소명한다. 또한, 즉시 적합한 카드로 변경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 법인카드 전표 서명시 사용자의 실명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서명이 나타나지 않는 카드전표를 회계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실명을 기재한다.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 유급휴가 외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휴가(경조사휴가, 출산휴가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에 해당하는 항목은 제외)를 운영하지 아니하며,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사용 촉구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보상 할 수 없다.

- 연차수당 산정 시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을 적용하고,
기준시간은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할증률은 적용할
수 없다.
- 국내외 출장은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출장기간 및 출장인원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시행한다. 출장이행 확인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하되, 신용카드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기관장이 정
하는 방법에 의한다.
- 국제회의 등 행사는 행사계획 수립단계부터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한다. 회의장 임차는 공공기관(예: 학교시설, 구민회관, 공
공 문화시설 등)을 우선 활용하도록 노력하고, 국제회의·국제세
미나는 국제관례와 상호주의를 적용한다.
- 각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관리비는 입주한 임직원이
부담하도록 한다. 다만, 재산세, 보험료 등의 제세공과금과 건
물 및 부대시설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비는 각 기관이
부담할 수 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성하고
투명하게 관리한다. 또한 조성된 사내복지기금은 기금목적에 부합
하게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 자산취득비 등 물품구매시 친환경상품, 중소기업제품,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등 법적의무사항을 준수하여 구매한다.
- 물품구매, 판공비 등 각종 경상경비 지출은 원칙적으로 공공구
매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한다. 이 경우 각 기관은 금융기관과
약정을 통해 카드의 사용범위, 절차 등의 기준을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마련하여야 하며,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과실금
(사용마일리지 등)은 기관의 자체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③ 사 업 비

□ 분야별 용역제공에 대한 비용 산정은 원칙적으로 다음 기준을 상한으로 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① 기술용역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과학기술부 공고)
또는 측량용역대가의 기준(건설교통부 고시)
- ② 전산용역 :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정보통신부 고시)
- ③ 업무관련용역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재정경제부 회계예규)

□ 배정된 예산을 전액 집행하여야 한다는 관행에서 탈피하여 집행 및 집행 규모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시에는 불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각 부서별 또는 개인별 예산의 절감 또는 수입의 초과달성 실적을 내부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예 비 비

□ 각 기관은 예비비 사용명세서에 정해진 목적대로 집행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주무부처 등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조직의 신설 또는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요에 충당하거나, 재해복구를 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목적예비비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⑤ 기 타

□ 인건비, 급여성 복리후생비, 경상경비의 증액전용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다.

- 명칭여하를 막론하고 급여성 경비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이외의 비목에서 지급할 수 없다..
-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임직원의 성과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성과금제도를 도입한다.
 - 예산성과금은 보수보전을 목적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정부의 예산성과금 제도에 준하여 운용한다.
- 수입의 일부를 차입금으로 충당하는 기관은 이자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지출계획과 차입 시기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여 운영되는 기관에서 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결손보전이나 법정적립금 등 필수 소요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주주에게 우선 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보조금예산을 지원받는 기관은 보조금을 일반사업비와 구분하여 계리하고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 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한다.

IV. 행정사항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 의장은 본 예산지침에 따라 편성한 2008년도 예산(안)과 예산 심의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예산(안) 의결을 위한 이사회 개최일 15일전까지 이사회 구성원에게 송부하고,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함께 송부한다.
 - 또한, 예산이 확정된 후 생긴 경영목표의 변경,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일 7일전까지 송부한다.
 -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때

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기획예산처, 주무부 및 감사원에 보고한다.

□ 2008년 1월 1일 현재 현원을 직제상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 기관은 조속한 시일내 초과 인원을 해소하도록 노력한다.

□ 각 기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자체적으로 예산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운용함으로써 예산의 집행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각 기관의 자체예산집행지침은 정부예산 집행지침 수준으로 세목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본 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예산의 편성은 『200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및 『2008년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 집행은 『200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비의 주체, 지급대상, 사용용도 등 성격상 준용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본 지침을 적용하며, 기타공공기관은 본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첨부 1> 경영평가 성과급 재원 조성 방안 등

1. 개념 정의

☐ 경영평가 성과급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을 말한다.
- 다만, 2007년 예산 이전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상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을 말한다.

☐ 자체 성과급(재원)

- 경영평가 성과급 이외에 2005.1.1 이전 도입된 제도에 의해 내부평가상여금, 포상금, 생산장려금 등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변동성 급여로 총지급액(률)이 변동하거나 실적·성과에 따라 개인별·부서별로 차등지급 되는 성과급을 지칭한다.
- 다만,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에 의거하여 자체 성과급에서 인센티브전환금 형태로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전환된 경우(직원)와 인센티브추가금 형태로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전환된 경우(임원)는 자체 성과급으로 본다.

2. 종전의 정부투자기관인 공기업의 경영평가 성과급

① 임원

- 기관장의 경우 기본연봉의 200% 이내를 인센티브 예비비에 계상할 수 있다
- 기타 상임임원의 경우 기본연봉의 100% 이내를 인센티브 예비비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직원

- 월기본급의 500% 이내를 인센티브 예비비에 계상할 수 있다.

3. 종전의 정부투자기관인 공기업을 제외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 성과급

Ⅰ 경영평가 성과급 재원 조성 원칙

- 기관장의 경우 자체성과급 재원을 경영평가 성과급 재원으로 우선 전환한 후, 경영평가 성과급 재원 한도액 대비 부족분의 1/2을 인건비에서 경영평가 성과급 재원으로 전환하여 인센티브 예비비에 계상한다.
- 직원의 경우 경영평가 성과급 재원 한도액의 1/2을 기존 인건비에서 경영평가 성과급 재원으로 전환하여 인센티브 예비비에 계상한다.
 - 자체성과급이 있는 기관은 인건비 중 자체성과급 재원에서 우선 전환하여 인센티브 예비비에 계상한다.
- 나머지 부족분은 자체수입 초과달성, 경상경비 절감, 인력 감축 등 경영개선으로 발생한 여유재원 또는 기타 불용예산을 전용하여 인센티브 예비비에 계상할 수 있다.
- 임직원 구분 및 기관유형에 따른 자체성과급 및 인건비에서 전환되는 인센티브 예비비의 구체적 산출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다.

② 자체성과급, 인건비에서 전환되는 인센티브 예비비

① 공기업 임원

- 기관장의 경우 자체성과급 재원을 우선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전환하여 인센티브 예비비에 계상한다.
- 자체 성과급 전환 후 기본연봉대비 200%에 대한 부족분은 기본연봉 조정 후, 현행 기본연봉과 조정 기본연봉의 차액을 경영평가 성과급 재원으로 전환하여 인센티브 예비비에 계상한다.

▪ 기본연봉 전환금 = 현행 기본연봉 - 조정 기본연봉

- 조정 기본연봉 = (보수 최대가능액 + 보수 최소액) / 4

* 연간보수 최소액(A) = 현행기본연봉 + 현행제수당/복리후생비

** 연간보수 최대가능액 = 연간보수 최소액(A) + 현행성과급 최대가능액

- 비고정급여가 있는 기관의 경우, 비고정급여의 40%는 조정 기본연봉에 편입하고, 60%는 인센티브 예비비에 계상한다.

* 비고정급여 : 기관의 명시적 지급의무 없으나 예산반영, 부처승인 등을 통해 직위와 관련하여 현금 지급되는 사실상의 보수 성격의 경비

- 기관장을 제외한 공기업 상임임원은 기관장에 준하여 인건비에서 전환한다.

② 공기업 직원

- 월 기본급의 250%를 자체성과급, 고정상여금 등 기존 인건비에서 경영평가 성과급 재원으로 전환하여 인센티브 예비비에 계상한다.

- 자체성과급 재원이 있는 기관의 경우는 자체성과급 재원에서 우선 전환하고 부족분은 고정상여금에서 전환한다.

- 고정상여금이 없는 기관의 경우, 상여금성 복리후생비, 통상적 수당 등으로부터 전환 한다.

③ 준정부기관 임원

- 기준연봉의 100%를 자체성과급 재원에서 경영평가 성과급 재원으로 전환하여 인센티브 예비비에 계상한다.
- 자체성과급제도가 없는 기관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도출된 금액을 고정상여금 등 인건비에서 전환하여 인센티브 예비비에 계상한다.

※ 인건비 전환금 = $\text{Min}[30\text{백만원}, 12\text{백만원} + (\text{기본연봉} - \text{기본연봉평균값}^*) \times 1/2]$

* 기본연봉 평균값 : 기관장 1억원, 감사 0.84억원, 이사 0.8억원

- 다만, 임원의 기본연봉이 기본연봉 평균값* 이하인 기관의 경우에는 기준연봉의 20%를 고정상여금 등 인건비에서 전환하여 인센티브 예비비에 계상한다.
- 종전의 정부투자기관인 준정부기관(KOTRA, 한국농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기관장은 '07년 기본연봉의 200% 이내를, 기관장을 제외한 상임임원은 '07년 기본연봉의 100% 이내를 인센티브 예비비에 계상할 수 있다.

④ 준정부기관 직원

- 기준월봉의 100%를 자체성과급, 고정상여금 등 기존 인건비에서 경영평가 성과급 재원으로 전환하여 인센티브 예비비에 계상한다.
- 자체성과급 재원이 있는 기관의 경우는 자체성과급 재원에서 우선 전환하고 부족분은 고정상여금에서 전환한다.
- 고정상여금이 없는 기관의 경우, 상여금성 복리후생비, 통상적 수당 등으로부터 전환 한다.

- 종전의 정부투자기관인 준정부기관(KOTRA, 한국농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직원은 '07년 월기본급의 500% 이내를 인센티브 예비비에 계상할 수 있다.

4. 경영평가 성과급을 초과한 자체 성과급 재원의 처리

- 공기업, 준정부기관 중 2005년 1월 1일 이전 도입된 자체 성과급 제도에 의한 자체 성과급 재원이 경영평가 성과급 재원으로 전환 후에도 남은 재원을 집행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임원은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지급률에 의해 지급한다.
 - 직원은 엄정한 내부성과 및 직무평가에 따라 개인별·부서별로 차등 지급한다.

<첨부2> 기준연봉, 기준월봉 산정 방식

- 기본연봉은 [표]에서의 기본연봉을 말하며, 월기본급은 호봉제 기관은 [표]의 기본급여의 1/12을 연봉제기관은 [표]의 기본연봉의 1/12을 말한다.
 - 기관별 임원의 기준연봉 및 직원의 기준월봉은 [표]의 기준연봉(기준월봉)의 산정기준이 되는 인건비를 기초로 산정한다.
 - 임원의 기준연봉은 [표]의 기본연봉의 60%를 말한다. 다만 기본연봉이 평균값 이상인 경우는 평균값의 60%를 말한다
- * 기본연봉 평균값 : 기관장 1억원, 감사 0.84억원, 이사 0.8억원
- 직원의 기준월봉은 [표]의 “인건비”에 따라 산출된 연간보수의 1/12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표]

구분		호봉제 기관	연봉제 기관
기준연봉 (기준월봉) 산정 기준이 되는 인건비	① 기본급여	기본급, 본봉, 통상임금	기본연봉 ¹⁾
	② 통상적 수당 ²⁾	직무수당, 직책수당, 책임수당, 위험작업수당 등	-
	③ 상여금성 복리후생비 ³⁾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등	-
	④ 고정상여금 ⁴⁾	상여수당, 기본상여금, 정기상여금,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	-
기타	⑤ 기타수당 ²⁾	가족수당, 통근수당, 연월차수당, 유급휴가수당, 주택수당, 중식수당 등	-
	⑥ 기타 복리후생비	자녀학자금보조, 건강진단비, 체육행사비 등	-
	⑦ 초과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
	⑧ 성과상여금 ⁴⁾	경영성과배분금, 포상금 성과금, 생산장려금 등	성과연봉
법정 부담금	⑨ 4대보험 부담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좌동
	⑩ 퇴직급여 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좌동

주 1) 연봉제 대상자에게 통상적 수당, 고정급적 복리후생비, 또는 고정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을 포함하여 기본연봉으로 함

주 2) 통상적 수당과 기타수당의 구분은 ‘노동부 임금구조통계조사’의 내용을 준용

주 3) 상여금성 복리후생비는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 기본급의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실질적인 상여금 성격을 갖는 보수를 말함

주 4) 고정상여금은 업무성과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말하며, 성과상여금은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상여금임(성과금, 포상금 등)

□ '09년도 금융공공기관 예산지침

2009년도

「금융 공공기관」 예산지침

2008. 11. 20.

금 융 위 원 회

- 목 차 -

I. 2009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방향

II. 예산안 항목별 편성지침

III. 예산의 집행

IV. 행정사항 등

I**2009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 방향****1. 기본 방향**

- ☐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09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심의
- ☐ 개별 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하되, 내부 경영혁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심의
 - 인건비와 경비예산을 위주로 심의하고, 사업·자본예산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심의
- ☐ 감사원·국회 등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토록 유도

2. 예산안 심의 대상기관

-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6개 기관)

3. 심의대상 예산

- ☐ 총인건비 : 임원 및 직원(정원의 직원 제외)의 인건비와 급여성 복리후생비
- ☐ 경영평가 등 실적에 의해 변동되는 성과급
- ☐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등 경상경비
- ☐ 퇴직급여, 정원의 직원의 인건비 등

II

예산안 항목별 편성지침

1. 총인건비

① 총인건비는 인건비 항목외에 계정과목 및 명목여하에 관계 없이 임직원(정원외 직원 제외)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

○ 다만, 퇴직급여충당금, 경영실적평가 및 직무수행실적평가 성과급은 제외

② 2009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08년도 총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동결

○ 다만, 호봉승급 등에 따른 자연증가 소요는 2008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1.7% 한도 내에서 별도 편성 가능

○ 「200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의 인건비 인상률을 초과하여 편성·집행한 경우에는 2008년도 지침에 따른 인건비 인상률을 적용하여 2008년도 인건비 기준을 산정

③ 총인건비는 임원 및 직원(정원외 직원 제외)의 인건비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로 구분하여 편성

○ 총인건비 예산은 원칙적으로 2008년말 정원 기준으로 편성

○ 2009년도 정원 증원에 소요되는 총인건비와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해당되는 총인건비는 예비비에 편성

○ 정규직원은 국내 근무직원과 해외 근무직원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면 구분하여 편성

※ 08년도 예산(현원기준 편성)과의 비교를 위하여 예산심의 참고 자료로 08년말 현원 기준으로 편성된 자료도 함께 제출

○ 2008년말 현재 현원기준 기본소요액에 추가소요액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계상

* 2008년말 현원기준 기본소요액이 2008년 예산상의 인건비 보다 증가된 경우는 증가액 및 그 이유를 주석에서 설명

○ 추가소요액은 신규인원 등 조직변동에 따른 증액분, 호봉승급에 따른 증액분 및 처우개선에 따른 증액분을 구분하여 편성

④ 새로운 수당, 복리후생비 등의 신설을 억제하고,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제로 단순화

○ 기본급 또는 기본연봉으로 전환된 수당은 재차 신설할 수 없음

○ 실비 성격 또는 실적·수요에 따라 달라지는 성격의 수당 등은 일괄적으로 인상하거나 일률적으로 지급할 수 없음

○ 연차수당 및 시간외수당 산정시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을 적용하고,

- 기준시간은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연차수당 산정시 할증률을 적용할 수 없음

○ 1·2급 등 상위직 관리자에 해당되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간외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2. 성과급 및 급여수준

① 임원의 급여는 기본연봉과 성과급으로 구분하여 편성

- 기본연봉은 경영평가 등 실적에 의해 변동되는 성과급을 제외하고 구성항목 여하에 관계없이 임원앞으로 지급되는 모든 인건비 총액을 계상
- 성과급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경영평가 등 실적에 의해 변동되는 성과급 이외의 자체성과급 등 성과상여금을 편성할 수 없음

② 기관장과 감사의 기본연봉과 성과급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 보수체계 개편」(2008.6.12 시행)에 따라 편성

	09년 기본연봉	경영평가 성과급 상한
기관장	161,313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 기본연봉의 200%(322,626천원) ·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 기본연봉의 100%(161,313천원)
감사	기관장 기본연봉의 80%(129,050천원)	기본연봉의 100%(129,050천원)

③ 기관장·감사를 제외한 임원(부기관장, 상임이사 등)의 급여는 기관장 및 감사 보수 수준에 맞추어 균형있게 조정

* 추후 부기관장 및 상임이사 보수수준 조정방안 논의

④ 직원의 급여는 기본급여, 상여금, 제수당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 성과급으로 구분하여 편성

- 다른 공공기관의 임금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편성
- 직원에 대한 성과급은 예비비로 편성하되 월급여의 백분율을 추가로 표시

3. 경상경비

① 경상경비는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 기관운영 또는 영업유지를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로써

-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여비, 교통비, 수선유지비, 통신비 등을 말함

② 경상경비는 원칙적으로 2008년도 경상경비 예산액 보다 5%이상 절감하여 편성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

- 상기 절감편성액을 기준으로 '07년 경영평가 결과 우수 기관은 1% 이내에서 증액하고 부진기관은 1% 삭감 편성
- 다만, 법정경비, 인력증원 등 불가피한 소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③ 경상경비 중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는 주택대출금 주거지원, 학자금지원, 개인연금 등 주요 항목별로 구분하여 편성

* 급여성복리후생비는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비를 모두 포함하며 총인건비에 포함하여 계상

④ 경상경비중 업무추진비는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기타 제경비 및 업무협약, 간담회 등 각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등을 말함

* 접대비는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접대·향응·위안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법인세법」 제25조)을 말함

- 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추진을 위한 접대비 성격의 경비는 원칙적으로 세법상 손금인정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며, '업무추진비' 비목에 일괄 계상

-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법인세법」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 추진(업무협약, 간담회 등 기관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되, 2008년도 업무추진비 예산액 보다 5% 이상 절감하여 편성

- ⑤ 불요불급한 국외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국외여비는 「공공기관 공무국외여행 개선방안」(2008.4.10 시행)에 따라 절감하여 편성

4.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은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년도의 세전 순이익의 100분의 5을 기준으로 정하되,
 - 직원 1인당 출연규모, 유사·동종업종 민간기업 출연 수준 등을 감안하여 과다하게 출연하지 않도록 하며, 다른 특별출연을 하여서는 아니됨

5. 퇴직급여

- ① 퇴직급여충당금은 근속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추계액에 맞추어 매분기별로 우선적으로 적립
 - 2009년도 정원 증원에 소요되는 퇴직급여충당금과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해당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예비비에 편성
- ② 퇴직연금제를 설정한 기관의 경우 제도에 따른 소요액을 반영하되, 법정 최소기준에 맞추어 제도를 운영
 - 퇴직연금제를 설정한 기관은 제도 설정 전의 과거 근로기간까지 퇴직연금제 가입기간으로 산입하여 운영 가능
- ③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산정

6. 정원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

- ① 직제상 정원외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잡급'에 계상하고,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급여성 복리후생비'에 계상하되, 다른 비목에 계상 할 수 없음
- ② 비정규직 근로자의 퇴직금·법정경비 등의 예산과 단순 노무 인력의 인건비 단가(외주화 포함) 등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07.6, 노동부) 및 정부의 「2009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08.5, 기획재정부)을 준용하여 편성
- ③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인력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기존 임직원과 같이 인건비로 편성
 - 다만, 사업 특성상 해당 사업비로 무기계약직 보수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 ④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별 시정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예산을 반영

7. 예비비

- ☐ 예비비는 인력증원 봉급(인건비·급여성 복리후생비·퇴직급여충당금으로 구분)예비비, 정-현원차 봉급예비비(인건비·급여성 복리후생비·퇴직급여충당금으로 구분),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과 일반예비비로 구분하여 편성

8. 기타

- ☐ 감사원·국회 등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예산 편성

III

예산의 집행

① 인건비는 실행예산의 범위내에서 법령, 정관 또는 내부 규정 등에 지급근거가 명시된 대로 집행

- 인건비 인상을 목적으로 연도 중에 내부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금지
- 명칭여하를 막론하고 급여성 경비는 인건비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 이외의 비목에서 전용할 수 없음
- 인력증원 및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해당하는 총인건비·퇴직급여충당금·성과급 등의 예산은 인건비 등의 인상 재원(급여수준 증액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음
- 별도 편성된 호봉승급분 등에 따른 자연증가분은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급여수준 증액 등에 활용할 수 없음
- 예비비에 계상하는 총인건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은 채용에 따른 실소요액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채용 이후에 예산을 전용하여 실소요액을 집행함

② 준정부기관의 성과급의 기관별 지급률 등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 기타공공기관의 성과급의 기관별 지급률은 별도의 평가결과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름

③ 각 기관은 예산편성 시에 성과급을 예비비에 계상한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

- 각 기관은 개인별 또는 부서별 성과관리를 위해 본 기준에 의한 성과급 총액 범위내에서 차등화된 성과급 지급에 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④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성과관리시스템을 강화하되, 연봉제가 임금인상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대상직위에 대하여 업무의 중요도, 책임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등급별로 연봉액의 범위를 설정하고, 업무성과를 반영하여 연봉액을 차등 결정
- 등급의 수, 등급별 연봉액, 성과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

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은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세전 순이익의 100분의 5을 기준으로 정하되, 출연을 최소화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출연

- 직전 사업연도에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여서는 아니됨
- 손익에 관계없이 사전에 미실현이익을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여서는 아니됨
-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출연금은 영업비용으로 계상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목적과 달리 편법적인 임금인상의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급여성 경비로 지급되어서는 아니됨

- ⑥ 일반예비비는 인건비 또는 보수 보전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 인력증원 및 정-현원차 봉급예비비, 성과급예비비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⑦ 2009년 1월 1일 현재 현원이 직제상 정원을 초과하는 기관은 조속한 시일내 초과 인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⑧ 예산에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은 기구 및 인력 증원은 최대한 억제하고,
- 증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소요되는 인건비는 예산상 인건비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에서 충당
- ⑨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 유급휴가 외에 특별 휴가를 운영하여서는 아니됨
- ⑩ 인건비·급여성 복리후생비의 증액전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요시 이사회 의결·주무장관 승인을 받아야 함
- 인건비중 임원의 인건비와 직원의 인건비는 상호간 전용이 금지되며, 필요시 주무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용
- ⑪ 예산의 집행 등과 관련하여 본 지침에 없는 사항은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기획재정부, 08.11.)」 등 관련지침을 적용 또는 준용
- ⑫ 연도중에 인원감축이 있는 경우 해당 인원의 인건비 예산은 인건비 등의 인상 재원(급여수준 증액 재원)으로 활용 할 수 없음

13 인턴 사원 채용 관련 예산의 경우

- 예비비로 편성하되, '인턴사원 채용 예비비'로 별도 관리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가급적 1분기중 인턴사원 채용을 완료
- 예산요구상의 채용인원에 구애받지 말고 예산을 모두 집행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인턴사원을 채용
- 단순 사무보조 등의 업무를 넘어 금융분야의 전문성을 확충할 수 있는 업무 부여방안 마련·추진
- 자회사가 있는 기관의 경우 가급적 자회사도 인턴제도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조치

VI. 행정사항 등

1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2010년도 예산승인시 및 경영실적 평가 등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음

-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이나 상위직 증원을 목적으로 새로운 직급을 편법으로 신설할 경우
- 총인건비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부당하게 실질 인건비를 인상하는 경우
- 시간외 근무수당을 편법적인 임금인상의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 기타 본 지침을 위반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한 경우

② 각 기관은 본 지침에 따라 심의대상 예산을 편성하되,

- 법령, 여타 지침 등에 의하여 본 지침과 다르게 예산 편성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본 지침에 따라 재작성하여 심의회에 상정·보고

③ 각 기관은 이사회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원칙적으로 2008년 11월30일까지 주무기관에 제출

- 이사회 개최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에도 2008년 11월 30일까지 잠정 예산안을 제출하여 주무기관의 심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늦어도 다음 심의회 개최일 3일전까지는 주무기관에 확정안을 제출

□ '09년도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2009년도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기 획 재 정 부

- 목 차 -

I. 예산편성 기본방향

II. 주요 항목별 편성지침

- ① 인건비
- ② 경비
- ③ 사업비
- ④ 자금 및 기타 예산
- 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관련
- ⑥ 예비비

III. 행정사항

I. 예산편성 기본 방향

- ◇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인건비, 경비 등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
 - ◇ 임직원 보수 합리화,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연봉제 확대 등 운영시스템 개선으로 경영의 효율성 제고
-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고통 분담에 동참한다.

- 내년도 총인건비 인상 동결, 경상경비 감축($\Delta 5\%$) 등 지출 억제를 위해 노력한다.

□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방만경영 방지를 위해 임직원의 과도한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등을 개선하는 등 과감한 경영효율화를 추진한다.

* 국회·감사원·언론 등에서 지적된 방만경영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 연봉제, 내부 성과평가 등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내실 있게 운영한다.

□ 책임경영체제에 부합되도록 기준과 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다.

-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고,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예산 운용의 질서와 원칙을 확립한다.

- 고유·핵심업무 중심으로 재원을 중점 배분하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서민생활 안정 등 국가정책 방향에 부응하는 투자를 확대한다.

II. 주요 항목별 편성지침

1 인 건 비

(1) 총인건비

□ 총인건비의 개념

- 총인건비는 모든 인건비와 인건비 항목 외에 계정과목 및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임직원(정원외직원 제외)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한다.
- 다만, 퇴직급여충당금, 경영실적평가 및 직무수행실적평가 성과급은 제외한다.

□ 총인건비의 편성

- 2009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08년도 총인건비 예산 범위내에서 동결한다. 다만, 호봉승급 등에 따른 자연증가 소요는 2008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1.7% 한도 내에서 별도 편성할 수 있다.
- 총인건비 예산은 원칙적으로 2008년말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한다.
- 다만, 200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의 인건비 인상률을 초과하여 편성·집행한 기관의 경우에는, 2008년도 지침에 따른 인건비 인상률을 적용하여 2008년도 인건비 기준을 산정한다.
- 관계기관과 협의된 2009년도 정원 증원에 해당하는 소요 인건비는 예비비에 계상한다.

-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해당하는 인건비 예산은 인건비 인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다.
- 정-현원 차이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예비비에 계상한다.
- 예비비에 계상하는 총인건비는 채용에 따른 실소요액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채용이후에 예산을 전용하여 실소요액을 집행한다.

(2) 수당 등

- 총인건비 한도내에서의 개인별·항목별 등 구체적인 증감은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새로운 수당, 복리후생비 등의 신설을 억제하고,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로 단순화해 나간다.
- 기본급 또는 기본연봉으로 전환된 수당은 제차 신설 할 수 없다.
- 실비 성격 또는 실적·수요에 따라 달라지는 성격의 수당 등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인상하거나 일률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
- 연차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시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을 적용하고, 기준시간은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에 따라 소정근로 시간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연차수당 산정 시 할증률을 적용할 수 없다.
- 1·2급 등 상위직 관리자에 해당되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3) 퇴직급여

- 퇴직급여충당금은 근속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추계액에 맞추어 매분기별로 우선적으로 적립한다.
 - 다만, 퇴직연금제를 설정한 기관의 경우 제도에 따른 소요액을 반영하되, 법정 최소기준에 맞추어 제도를 운영하도록 한다.
 - 퇴직연금제를 설정한 기관은 제도 설정 전의 과거 근로기간까지 퇴직연금제 가입기간으로 산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산정한다.

(4) 경영평가 성과급 및 직무수행실적 평가 성과급

- 200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별로 차등 지급되는 경영평가 성과급 및 200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직무수행 실적 평가 성과급은 예비비에 계상하되, 평가결과에 따른 지급 이외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기관장 및 감사의 성과급은 「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 보수체계 개편」(2008.6.12 시행)에 따라 편성한다.
 - 기타 상임임원의 성과급은 공기업의 경우 기본연봉의 100%, 준정부기관의 경우 기본연봉의 60% 이내로 편성한다.
 - 직원의 성과급은 공기업의 경우 월 기본급의 500%, 준정부기관의 경우 기준월봉의 200% 이내로 편성한다.
- 성과급의 기관별 지급률 등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48조에 따른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각 기관은 예산편성 시에 성과급을 예비비에 계상한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한다.
-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개인별 또는 부서별 성과관리를 위해 본 기준에 의한 성과급 총액 범위내에서 차등화된 성과급 지급에 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5) 기타

- 직제상 정원외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잡급'에 계상하고,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급여성 복리후생비'에 계상하되, 다른 비목에 계상 할 수 없다.
-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성과관리시스템을 강화하되, 연봉제가 임금인상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한다.
- 대상직위에 대하여 업무의 중요도, 책임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등급별로 연봉액의 범위를 설정하고, 업무성과를 반영하여 연봉액을 차등 결정한다.
- 등급의 수, 등급별 연봉액, 성과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기관장과 감사의 인건비는 「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 보수 체계 개편」(2008.6.12 시행)에 따라 편성한다.
- 다만, 종전의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기업이 준정부기관으로 변경지정되는 경우에는 기관장 기본연봉을 정무직 공무원(차관)의 기본연봉으로 조정한다.
- * 2009년도 기관장 기본연봉 인상률은 차관 연봉 인상률이 확정되는 시점에 별도 통보예정

- 상임이사의 기본연봉은 기 조정된 기관장 및 감사 보수 수준 (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 보수체계 개편 : 2008.6.12 시행)에 맞추어 균형있게 조정한다.

2 경 비

(1) 경상경비

□ 경상경비의 정의

- 경상경비는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 기관운영 또는 영업유지를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로써,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여비교통비, 수선유지비, 통신비 등을 말한다.

□ 경상경비의 편성

- 경상경비는 원칙적으로 2008년도 경상경비 예산액 보다 5% 이상 절감하여 편성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한다.
- 다만, 상기 절감편성액을 기준으로 '07년 경영평가 결과 우수 기관은 1%p 이내에서 증액하고 부진기관은 1%p 이상 삭감 편성한다.
 - * 우수기관은 경영평가 결과 8개 유형별로 상위 2개 기관(공기업 4개 기관, 준정부기관 12개 기관)으로 선정된 16개 기관을 말한다.
 - * 부진기관은 경영평가 결과 8개 유형별로 하위 20% 기관 중 평가점수가 66.7점미만(만점대비 2/3)인 기관(공기업 2개기관, 준정부기관 13개 기관)으로 선정된 15개 기관을 말한다.

- 법정경비, 인력증원 등 불가피한 증액 소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복리후생비

□ 복리후생비의 정의

- 복리후생비는 법인과와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비용을 말한다.

□ 복리후생비의 편성

- 복리후생비는 급여성 복리후생비와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된 경비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총인건비에 포함되며, 다른 경비항목에 계상할 수 없다.
 -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는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법정 복리후생비 등 기타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 주택대출금, 학자금, 개인연금 등은 과도한 복리후생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편성한다.

(3)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의 정의

- 업무추진비는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기타 제 경비 및 업무협약, 간담회 등 각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등을 말한다.

- * 접대비는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접대·향응·위안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법인세법」 제25조)을 말한다.

□ 업무추진비의 편성

- 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추진을 위한 접대비 성격의 경비는 원칙적으로 세법상 손금인정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며, '업무추진비' 비목에 일괄 계상한다.
-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법인세법」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 추진(업무협약, 간담회 등 기관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되, 2008년도 업무추진비 예산액 보다 5% 이상 절감하여 편성한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의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기금의 조성)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편성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은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세전 순이익의 100분의 5을 기준으로 정하되, 직원 1인당 출연규모, 유사·동종업종 민간기업 출연 수준 등을 감안하여 과다하게 출연하지 않도록 하며, 다른 특별출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독점적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을 최소화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출연한다.
- 직전 사업연도에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손익에 관계없이 사전에 미실현이익(평가이익, 환산이익 등 현금의 유출입을 수반하지 않는 이익)을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출연금은 영업비용으로 계상한다.

(5) 기타

- ☐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및 연구개발이 강화되도록 노력한다.
- ☐ 불요불급한 국외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국외여비는 「공공기관 공무국외여행 개선방안」(2008.4.10 시행)에 따라 절감하여 편성한다.
- ☐ 광고(홍보)예산은 기관설립목적 및 경영목표와 광고효과 등을 감안하여 절감 편성한다.
 - 기관 이미지 등 단순 홍보성 광고비 편성을 지양한다.

③ 사 업 비

□ 기관 고유업무와 핵심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한다.

- 기관별 경영목표와 예산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경영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
- 예산사업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비핵심사업·예산낭비요소 발굴 등을 통해 지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한다.

□ 신규 투자사업·자본출자 예산은 관계법령상 기관의 고유목적 사업으로 한정한다. 다만, 해외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규 투자사업, 자본출자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예산을 반영하되,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경우는 외부전문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예산을 반영한다.

- 다만, 국가정책사업(또는 국고 지원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사업 지연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

□ 국가적 정책사업(해외에서의 사업을 포함)을 제외하고는 자회사 신설, 자회사에 대한 추가 출자·보증 및 관련기업·기관·단체 등에 대한 출자·출연·보조를 최대한 억제한다.

□ 각 기관이 해외에서의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을 반영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각 기관이 사업의 수익성, 타당성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관계법령 및 정관에 근거가 있거나 주무부처의 승인이 있는 범위내에서 당해 기관의 핵심역량 분야와 관련한 사업에 진출한다.

- 민간 및 타 공공기관과의 동반/팩키지 진출을 확대하여 위험 분산과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 해외에서의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전문직위 설정, 대내외 공모 등을 통해 우수인력 확보·양성하고, 동종 국내외 우수 기업 벤치마킹을 통해 내부역량 강화에 주력한다.
 - 각 기관내에 「해외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별 투자 타당성 및 국가·환율·금리 위험 등에 따른 투자위험관리 기본계획(Contingency Plan) 등을 심의·의결한다.
 - 위원회의 구성은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민간 외부전문가를 포함한다.
 - 해외사업에 대한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외사업은 국내사업 부문과 별도로 구분하여 계리(예산, 결산)한다.
 - 해외사업 구분 계리 범위내에서 사업별 투자비, 타당성 조사비(Feasibility Study) 등에 있어서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곤란할 경우는 해외사업에 대한 과거 실적 및 향후 계획을 감안하여 해외사업 예산의 일정 범위내에서 예산상 총액계상 할 수 있다.
 - 해외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중 일부는 내부 유보를 통해 해외사업의 재투자에 우선 사용할 수 있다.
 - 총액으로 계상된 예산은 매분기 개시전 세부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사업비 집행전 타당성 및 위험 관리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사회 심의·의결 등 각 기관에서 정한 제반 예산집행 절차를 준수한다.
- 일자리창출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성장잠재력 확충, 지역 발전, 서민생활 안정 등 국가 정책방향에 부응하는 투자를 확대한다.

④ 자금 및 기타 예산

- ☐ 외부 차입금 축소, 금융비용 최소화, 수익성 강화, 채무보증 축소, 비업무용자산 매각 등을 통하여 재무구조 개선에 노력한다.
 - 자산매각과 관련하여 자체규정이 없는 기관의 경우는 국유 재산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 ☐ 환율, 유가, 금리변동, 커뮤니케이션 위기, 재난 등 다양한 위협요인과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처하는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를 강화한다.
 - 위기관리는 「공공기관 위기관리지침」(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및 「공기업 환위험관리 지침」(기획재정부) 등 관련 정부지침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 추진하되, 각 공공기관의 구조와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위기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 ☐ 조달·구매예산은 수의계약 축소, 경쟁 확대 등을 통해 관련 예산 절감을 추진한다.
 - 조달·구매계약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운영하여 관련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
- ☐ 자본예산 중에 계상되는 경비는 사업량 증감 등을 감안하되, 인건비·경비예산 편성기준을 따른다.

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관련

- ☐ 비정규직 근로자의 퇴직금·법정경비 등의 예산과 단순 노무 인력의 인건비 단가(외주화 포함) 등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07.6, 노동부) 및 정부의 「2009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08.5, 기획재정부)을 준용하여 편성한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인력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기존 임직원과 같이 인건비로 편성한다.
- 다만, 사업 특성상 해당 사업비로 무기계약직 보수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별시정 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예산을 반영한다.

[6] 예비비

- 예비비는 인력증원 봉급예비비, 정-현원차 봉급예비비, 경영 실적 평가결과 및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과 일반예비비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 일반예비비는 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으로 계상하며, 인건비 또는 보수 보전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 인력증원 및 정-현원차 봉급예비비와 성과급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예비비 항목이 없는 기금관리기관은 인력증원 및 정-현원차 해당 인건비, 성과급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내역으로 관리한다.

Ⅲ. 행정사항

-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 의장은 본 예산지침에 따라 편성한 2009년도 예산(안)과 예산 심의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예산(안) 의결을 위한 이사회 개최일 15일전까지 이사회 구성원에게 송부하고,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송부한다.
- 또한, 예산이 확정된 후 생긴 경영목표의 변경,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일 7일전까지 송부한다.
-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 주무부 및 감사원에 보고한다.
- ☐ 2009년 1월 1일 현재 현원이 직제상 정원을 초과하는 기관은 조속한 시일내 초과 인원을 해소하도록 노력한다.
- ☐ 예비비에 계상할 성과급의 재원조성 방안 및 기본연봉, 월기본급 등의 산정 방식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정한다.
- ☐ 본 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예산의 편성은 「200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및 「2009년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비의 주체, 지급대상, 사용용도 등 성격상 준용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본 지침을 적용하며, 기타공공기관은 본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2008. 11.13>

이 지침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5. 최근 5년간 금융공기업 성과급 지급 관련 감사
관련 자료 일체

☐ 해당사항 없음

박 상 돈 의원

1. 채권시장안정펀드 운용 현황

☐ 채안펀드 집행 세부내역 및 집행률

<채권별 투자 현황>

(단위 : 억원, 9. 7일 기준)

구 분	회사채	PF-ABCP	여전채	중소·중견 P-CBO	은행채	총 계
투자 현황 (집행률)	15,273	1,400	4,329	11,275	5,500	37,777 (75.4%)

☐ 채안펀드 조성 이유, 총규모, 사용 계획은 별첨자료 참고

(별첨) 채안펀드 조성 관련 당정협의(08.12.12일) 자료

설명자료

채권시장안정펀드 현황 및 운용방향

2008. 12. 17



금융위원회

1. 채권시장안정펀드 현황

가. 필요성 및 정책 목표

□ 채권시장의 마찰적 신용 경색 해소

- 거래상대방 위험 증가로 인한 일시적·마찰적 불안요인을 해소하여 실물부문으로의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유도

나.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 추진 현황

(1) 펀드 재원 및 조성 현황

□ (펀드 총액) 총 10조원*을 민간 금융회사가 전액 출자하고 한은이 기관별 출자금의 50%를 대출 지원

- 은행권(8조), 보험업권(1.5조), 증권업권(0.5조)

□ (1차 조성 규모) 12.17일 1차 5조원 규모로 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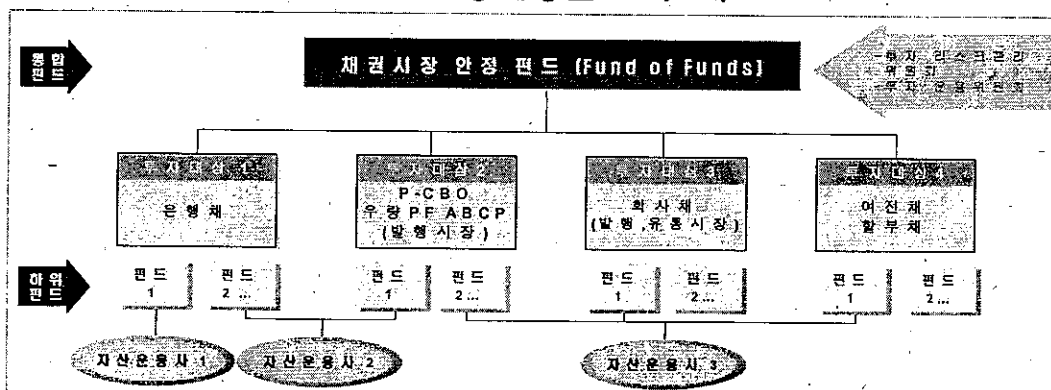
(2) 펀드 성격 및 구조

□ 사모펀드로 3년 만기 Fund of Funds 구조로 운영

- (상위 펀드) 전체 투자자산의 배분을 담당하며 산은자산운용이 운용
- (하위 펀드) 투자분야별(예: P-CBO, 회사채, 은행채 펀드 등) 하위 펀드는 출자상위 기관이 선정한 자산운용사*가 운용

* SH자산운용, 하나UBS자산운용, 한국투신운용 등 8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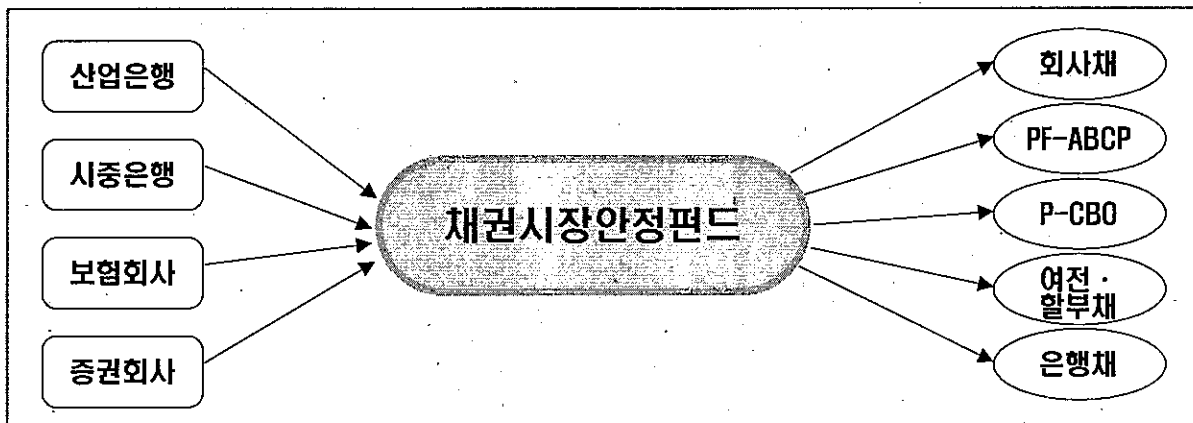
〈채권시장안정펀드 구조〉



2. 채권시장안정펀드의 운용 방향

가. 운용 방향

- (투자 대상) 회사채, PF ABCP, 여전·할부금융채 등 만기도래 채권에 투자
 - (신용 등급)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회사의 일정등급 이상 채권
 - 등급 미만 채권의 경우 신보의 신용보강을 통해 투자



나. 투자 현황 및 향후 계획

- (투자 현황) 회사채, 여전채 등 만기도래채권의 차환발행물 중 시장소화가 어려운 채권을 중심으로 매입 (9. 7일 현재 3.77조원 채권 매입)
- (향후 계획) 시장소화가 가능한 우량 채권에 대한 투자는 지양하고, 신용보강을 통해 저신용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

* 펀드 1차분(5조원) 자금 소진 추이를 보아 2차분(잔여 5조원) 조성 추진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 및 자체감사 결과

□ 우리위원회 설립(08.3월) 이후 외부(감사원)감사결과는 '해당사항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원이 09.5.28 ~ 7.17까지 금융위원회에 대해 실시한 감사결과는 감사원이 내부절차를 거쳐 처리중에 있음

□ 자체감사결과는 별도첨부(2008년)

* 2009년은 아직 미실시

2008년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

2008. 9.

감사담당관실

- 목 차 -

I. 감사개요

II. 감사실시 결과

1. 총 평

2. 부문별 감사결과

가. 청사이전관련 경비 등 예산집행 실태

나. 물품관리 실태

다. 비정규직 운영실태

라. 정책연구과제 운영실태

마. 감사원 처분요구 이행실태 (신용보증 제도)

3. 지적사항별 조치내역

4.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5. 감사결과 처리요령

◇ 청사 이전비용 집행, 외부기관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금융위원회 업무처리의 적정성 제고를 도모

- 감사실시 기간 : 2008.6.23(월)~6.27(금) (5일간)
 - 감사대상 기간 : '07.1. ~ '08.5. (단, 예산집행은 08.1~5.)
 - 감사대상 부서 : 혁신행정과, 기획재정담당관실, 산업금융과
 - 감사반 : 감사담당관실 전 직원 (과장, 5급3, 6급2)
 - 감사방법 : 표본감사, 서류감사
 - 감사대상업무 : 청사이전 비용 등 예산집행, 물품관리, 정책연구
구용역, 보증제도
 - ① 조직개편으로 인한 청사이전 관련 제비용 집행 실태 (혁신행정과)
 - ② '07년 이후 물품 관리 현황 (혁신행정과)
 - ③ '07년 이후 비정규직 운영현황 (혁신행정과)
 - ④ '07년 결산국회 지적사항(정책연구과제) 처리실태 (기획재정, 혁신행정과)
 - ⑤ '07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보증제도) 처리실태 (산업금융과)
- * 조치 이행여부 점검에 한하고, 정책내용의 판단은 제외

II 감사실시 결과

1. 총 평

- ☐ 금번 감사는 구 재정경제부(금융정책국)과 구 금융감독위원회가 통폐합되어 새로이 출범한 우리 위원회가 업무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음
- 주요 감사대상 업무를 조직통폐합 과정에서 발생한 청사이전 경비 등 각종 예산집행실태와 물품관리 실태, 구 재경부 및 구 금감위에서 각각 채용하여 운영중에 있던 비정규직 공무원의 금융위 출범 후 통합운영 실태
 - 또한, 결산국회에서 지적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의 적정성 여부, '07년 감사원의 중소기업 보증제도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실태 등으로 선정하였음
- ☐ 감사실시 전 감사대상 부서에 감사대상 업무 및 선정이유, 감사착안사항을 사전 통보하여 자체적으로 점검·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했음
- ☐ 감사결과, 조직개편에 따른 신규업무 증가·담당자 변경 등으로 업무처리체계가 정착되지 않아 예산집행·차량 및 물품관리, 비정규직 급여, 연구용역 현황관리 등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었음
- ☐ 금번 감사를 계기로 관행적으로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거나 관리소홀·규정 미숙지 등에 따른 잘못된 업무처리를 바로 잡는 등 금융위 업무시스템이 조기 정착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

[부문별 총평]

① 청사이전 관련 경비 등 예산집행 실태

- 복잡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청사이전 및 사무실 재배치업무를 큰 문제점 없이 수행했던 것으로 평가, 다만
 - 일반업무용 차량의 중형위주 임차·운영, 국외출장시 규정 미숙지로 인한 숙박비 초과 수령, 정부구매카드 사용자 실명 미서명 등의 사례가 있었음

② 물품관리 실태

- 재물조사의 부적정으로 물품관리대장과 실제 관리되고 있는 현물과 일치하지 않음

③ 비정규직 운영실태

- 금융위 본부와 FIU 근무자간의 보수체계가 상이하고 보수수준도 일관성이 없는 등 문제점이 발견됨

④ 정책연구과제 운영실태

-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 등으로 용역결과물(보고서)의 관리 및 활용 등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음

⑤ 보증제도

- 산업금융과는 감사원의 처분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 및 조치 계획을 회신한바, 당초 감사기준으로 설정했던 조치실시 여부 및 절차상 문제점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 없음

2. 부문별 감사결과

가. 청사 이전관련 경비 등 예산집행 실태

[I]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새로이 출범한 금융위원회는 조직규모와 기능면에서 구 금융감독위원회보다 확대되어 구 금감위사무실(금융감독원 건물내)을 계속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따라서, 금융위 사무실을 현재 청사(서초구 반포로)로 이전하게 되었는바, 사무실 이전 및 재배치 작업은 짧은 기간내에 신속하게 실시해야 하는 반면, 복잡하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였음
- 이러한 상황에서의 예산집행은 오류발생 가능성이 있는바, 부적정한 예산집행이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청사이전 과정에서의 예산집행 실태」를 표본 감사대상으로 선정
- 아울러, 평소 공무원들이 오류를 범하기 쉬운 국외출장 경비집행, 정부구매카드 사용 등에 대한 '08.1~5월 기간중 실태를 감사대상으로 선정함

[II]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금번 감사는 별도의 감사장을 설치하지 않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일반업무를 수행하면서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서,
- 짧은 감사기간(5일)에 선정된 감사대상업무(청사이전 및 국외출장경비 등)전반을 감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음

- 따라서, 청사이전과 관련된 경비의 경우 청사이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여부, 관련업체 선정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으며
 - 업무용차량 운영의 경우 조직개편 후 신규추가 수량 및 차종 · 운영의 적정성 등을 감사했으며, 국외출장 경비 집행실태 및 정부구매카드 사용실태에 대해서도 감사
- 혁신행정과에서 비치하고 있는 관련서류(청사이전계획서, 계약서, 지출결의서, 차량운행일지, 지출관련 영수증 등)를 제출토록 하여 서류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했고,
 - 관련서류 점검 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지출관(지출관 보조 포함)의 설명을 듣는 방식을 취했으며, 필요한 통계는 별도 작성을 요구하기도 했음

【Ⅲ】 감사 결과

- 금융위 '08년 총예산은 **1,037억31백만원**으로서, 금융위 본부(160억78백만원), 금융정책사업비* (792억52백만원), FIU사업비(53억60만원), IBRD차관 원리금상환금(30억41백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 금융정책 사업비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669억4백만원), 역모기지론 출연(70억원), 금융전문대학출연(20억원), 모기지론 이차보전(16억39백만원), 금융시스템시스템선진화(10억78백만원), 정책연구개발(6억3천만원)등으로 구성
- 금번 청사이전 과정에서 지출한 경비는 총 **14억25백만원**으로서 주로 금융위 본부예산을 집행하였는바, 주요 지출내역은
 - 이사비용 및 사무실 재배치 공사 등 **356백만원** 사무실 등 임차료 **297백만원** 집기 등 구입비 **133백만원**, 통신시설 관련 경비 **500백만원** 등임

청사이전 관련 경비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경비 소요 부문	집행액	총집행액 대비 비율	비 고
계	1,425	100	
이사비용	31	2.2	
사무실재배치공사 등	325	22.8	
사무실 임차료 등	297	20.8	사무실(281), 차량(16)
집기 등 구입비	133	9.3	책상, 의자, PC 등
통신시설 관련	500	35.1	전화시설, 전산실 이전, 전자회의시스템, 메신저 도입 등
기 타	139	9.8	인건비, 무인경비시스템 등

* 세부집행내역 : <별표 1>

- 감사결과, 청사이전 기본계획 수립·관련업체 선정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업무용차량 운영, 국외출장비(숙박비), 정부구매카드 사용** 등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음

① 업무용 차량운영의 불합리

《지적사항》 (또는 우수사례)

- 신설된 금융위는 구 금감위보다 인원수가 대폭 증가하고(80→155명, FIU제외), 업무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업무용차량 소요가 증가
 - 금감원장을 겸직했던 구 금감위원장은 금감원의 차량을 사용했으나, 금융위 출범에 따라 금감원장 직위가 분리되어 금융위원장 전용차량 소요가 신규로 발생하였음
 - 또한, 금융위는 소관법률은 많아서(45개) 관련부처 및 국회 등과의 잦은 업무협약이 발생하는데, 단독청사에 입주해 있는 관계로 차량소요가 증가

○ 그러나, 구 금감위는 업무용차량을 2대(부위원장, 일반업무용)만 운영했고, 구 재정부(금융정책국)는 업무용 차량이 없었으므로 증가된 차량 소요에 비하여 운영차량 수는 적었음

- 이런 관계로 금융위는 조직개편 직후 업무용차량 6대를 신규로 추가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음

업무용차량 운영현황

(단위 : 대)

종 전(구 금감위)				변 경(금융위)			
대형	중형	소형	계	대형*	중형	소형	계
1		1	2	3	4	1	8

* 대형(3대)는 위원장 · 부위원장 · 외빈의전용

○ 한편, 공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 제5조는 차종 및 차형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면서, 일반업무용차량에 대해서는 1,600cc 이하로 운영(동규정 별표1)토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금융위는 특수업무용(외빈의전 등)으로 중형차량 4대를 신규로 임차했으나 실제운영의 대부분을 일반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일반업무용차량은 1,600cc 이하로 운영토록 하고 있는 규정과 배치됨

《조치할 사항》

○ (시정요구, 표창상신 등)

② 기타 예산집행의 불합리

〈지적사항〉 (또는 우수사례)

o 공무 국외출장 경비지급 부적정

-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제16조④항은 국외 공무출장을 함에 있어서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예산집행 서류를 조사('08.1~5월분)한 결과, 한·캐나다 FTA협상(3.25~29)을 위한 국외출장시 항공기에서 1박을 하는데 그 숙박비(\$95)를 지급하였고, 한·인도 CEPA협상(4.1~4)을 위한 국외출장시에도 항공기에서 1박을 하는데 숙박비(\$95)를 지급한 사실이 있었음

o 정부구매카드 사용시 관련지침 이행 불철저

- 예산집행지침(기획재정부)은 정부구매카드 사용시 카드사용 영수증에 실명으로 서명하도록 하고 있고('08년부터 시행), 업무추진비 집행 시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예산집행 서류를 조사('08.1~5월분)한 결과,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면서 카드영수증에 실명서명을 한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 '소속부서명' 또는 '금융위' 등으로 서명을 하고 있었음
- 또한 업무추진비 집행 시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 대부분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있었으나, 1.17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 관련 업무추진비를 집행(995,000원)함에 있어서는 주된 상대방 소속·성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라고만 기재한 사실이 있었음

o 예산 지출과목의 부적정

- 일과 전·후 직무수행으로 인한 식사비용은 특근매식비(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함이 타당한데도 혁신행정과는 211일 아침 학습동아리(외부장사초빙 모닝클래스 : 김&장 정성구 변호사)를 마친 후 조찬비용 (76,000원)과 5.13일 저녁 직원친절 교육 후 석식비용(73,000원)을 일반수용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

o 수당지급의 부적정

- 5급에서 4급으로 승진('07.10.24)하면서 대우수당 지급사유가 소멸한 공무원에 대하여 전산오류로 '07.12월부터 '08.5월까지 대우수당이 매월 지급(6회, 703,640원)된 사실이 발견되었음
- '07.12~'08.2월분은 구 재정경제부에서, '08.3~5월분은 금융위에서 지급

〈조치할 사항〉

- o (시정요구, 표창상신 등)

〈별표1〉

청사이전 관련 경비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세부 사업	예산과목	'08예산 현액 (A)	집행액(B)*		집행률 (B/A×100)(%)
계		2,693,330	1,424,557		52
소계		2,137,330	1,091,779		51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950,900	이사비용	31,359	15
			사무실 파티션 작업 등	78,000	
			전산실 이전 인건비 등	22,062	
			네트워크 공사 인건비 등	8,984	
			전자메일 라이선스 구입	2,200	
			소계	142,605	
	임차료	475,986	사무실 임차료	280,786	62.5
			차량 임차료(3~5월)	16,547	
			소계	297,333	
	시설장비유지비	211,823	통신시설 유지보수비 등	223,305	105
	시설비	339,325	사무실 이전 재배치 공사	246,699	87
			사무실 이전 전기공사	33,000	
			금융위회의실 음향설비	10,230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	5,868	
			소계	295,797	
	자산취득비	159,296	사무용 집기, pc 등 구입	132,739	83
	소계	556,000	332,778		60
정보화 지원사업	일반수용비	9,650	-	-	
	연구개발비	193,000	메신저시스템 신규 도입 등	55,800	29
	자산취득비	353,350	전산실 이전	195,938	78
			정책고객관리서버 도입	15,967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49,060	
			메신저시스템 신규 도입	16,013	
			소계	276,978	

*집행액은 청사이전과 관련된 비용만 기재

〈별표2〉

공용차량 운영 현황

(단위 : 천원)

차종 (차량번호)	기사	임대 (구입)일	임대료 (월)	연료	유류비(월)						용 도	월평균 주행 (km)
					1월	2월	3월	4월	5월	계		
에쿠스 35허7871		08.03.06	1,485	휘발유			843	776	778	2,397		2,324
체어맨 47허2026		08.04.04	1,058	휘발유			642	900	658	2,200		1,885
그랜저 35허7929		08.03.11	677	LPG			161	139	68	368		845
SM5 35허7972		08.03.19	580	LPG			116	195	200	511		1,062
SM5 35허7959		08.03.14	580	LPG			115	196	200	511		1,257
SM5 35허5560		08.03.14	580	LPG			10	194	230	434		1,112
SM5 35허7958		08.03.14	580	LPG			199	202	235	636		1,385
아반떼 01모7285		04.04.20	14,040	휘발유			192	163	277	632		1,013
계							2,278	2,765	2,646	7,698		

나. 물품 관리 실태

[1]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정부조직개편으로 새로이 출범한 금융위는 구 금감위보다 조직규모가 확대되어 보유물품 수량 및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물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
 - 이에 따라 새로 보유·운용하게 되는 물품의 관리상태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감사대상으로 선정
- 감사 범위는 소수의 감사인력으로 물품관리 업무 전체를 조사하기에는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어
 - 물품의 재고관리, 관리기관 설치, 재물조사 등 물품관리법상의 기본 규정 준수 여부를 감사범위로 한정함

<2008년도 금융위원회 수시재물 조사 현황>

(’08.5월 현재, 단위 : 원)

합계	관리대장계	실사계	활용대상	불용대상	
				사용가능품	사용불가능품
수량	1,482	1,482	1,218	193	71
금액	801,607,532	801,607,532	701,274,952	94,947,780	5,384,800

【II】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 '07년~'08년 물품수급계획서, 수시재물조사결과표, 물품관리대장을 제출받아 물품수급계획의 수립여부 및 내용, 정기재물조사의 실시 및 결과 등을 서면으로 먼저 감사하고
- ☐ 물품관리대장과 실제 물품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과를 방문하여 관리대장과 대조하며 실지 감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였음
- ☐ 실지감사는 재물조사표상 1,482개 물품을 전수조사 하기에는 시간과 감사인력 등의 여건이 충분치 않아
 - o 식별이 용이하고 비교적 고가의 사무기기인 복사기와 노트북을 선별하여 시행하였음

【III】 감사 결과

- ☐ 서면감사 결과 물품수립 계획 및 정기 재물조사는 관련 규정에 의거, 연1회 수립·집행되었고
 - o 조달청의 「정부조직 통폐합 기관의 재물조사 실시」 요청('08.4.28)에 따라 수시재물조사를 실시, 재물조사표가 조달청에 통보('08.5.22)된 사실을 확인하였음

《지적사항》 (또는 우수사례)

- ☐ 현재 금융위는 총 28대의 노트북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리대장에는 7대만 기재되어 있고

- 조직개편 이후 추가 구입한 노트북 19대와 구 재경부에서 이관된 노트북 5대 중 2대가 미기재 되어 있는 등 총 21대가 미기재 되어 있음

<물품관리대장 미기재 노트북 현황>

구 분	대 수	실지 관리과
금융위 회의용	19	의사운영정보팀
구 재경부 이관	1	시장분석과
	1	글로벌금융과
미기재 총계	21	

《조치할 사항》

- (시정요구, 표창상신 등)

다. 비정규직 운영 실태

[Ⅰ]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 구 재경부(금융정책국, FIU)와 구 금융감독위원회는 비정규직을 각각 11명, 14명 등 총 25명을 운영해 오고 있었는데,
 - 두 기관의 통폐합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처우는 없었는지, 두 기관의 비정규직 운영(근무조건, 급여, 4대보험 등)에 있어서의 차별적인 요소는 없는지,
 - 조직개편 직후 신규채용(8명)의 필요성·절차 등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점검 필요가 있었음

[Ⅱ]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 비정규직 운영 기본계획 수립여부, 채용절차 및 방법, 예산현황 및 보수체계 등을 감사대상으로 하면서,
 - 특히, 비정규직(총 31명) 중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무보조원(21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
- ☐ 감사방법은 근로계약서·관련 예산서 및 급여지급서·4대보험료 납부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 서류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했으며,
 - 관련서류 점검 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인사담당자의 설명을 듣는 방식을 취했으며, 필요한 통계는 별도 작성을 요구하기도 했음

【Ⅲ】 감사 결과

□ 비정규직 관련 서류를 점검한 결과, 금융위 본부는 비정규직 운영에 관한 기본지침인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07.9.27, 금감위 제정) 비정규직을 운영하고 있으나,

○ FIU는 본부와 달리 근로계약서에 따라 운영하고 있음

□ 현재 비정규직은 총 31명으로, 속기사·YP·에디터·사무보조원·운전원 등으로 구성

○ 조직개편 이후 2명* 퇴직, 8명 신규채용으로 6명이 순증 되었음

* 1명은 금감원 취업, 1명은 건강상 이유로 퇴직

- 이는 조직규모 및 업무범위 확대에 사무보조원 2명, 공용차량 증설에 따른 운전원 4명 등 신규 추가소요가 발생한 것에 기인

구 분	인원 수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속기사	2	의사운영팀, 위원회 속기업무
YP	1	금융정책과, 규제개혁 업무
에디터	3	금융정책과, FIU(2명), 영문 교열
운전원	4	업무용차량 운전
사무보조원	21	각과 및 비서실, 사무보조
계	31명	

□ 비정규직 신규채용시 홈페이지에 모집공고 후 공개적으로 채용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는바, 신규채용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4대보험의 경우도 관련 법령에 따라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음

○ 다만, 금융위 본부와 FIU와의 보수체계 상이 및 보수수준의 불균형이 있었음

□ 본부와 FIU의 사무보조원의 보수체계를 비교해 보면

- 본부소속 비정규직의 보수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금융위 훈령)에 근거하여 근속연수별 연봉표에 근거한 기본 연봉에 더하여 정근수당·성과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비례하여 지급비율이 상향(월봉의 100%까지)되며, 성과급은 최대 80만원까지 지급

- FIU소속 비정규직의 보수는 근로계약서에 연봉을 명시하고 매년 초 연봉 재계약을 하며, 정근수당과 성과급은 없음

* 구 재경부(금융정책국) 소속이었다가 금융위 본부로 소속이 바뀐 직원은 본부 보수체계로 운영

- 시간외수당 지급에 있어서도 본부는 시간외 근무를 월간 최대 15시간(시간당 8,092~8,680원* 최대 13만원)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 근로기준법에 의한 비정규직 시간당 보수 산출근거에 따름

- FIU는 월간 최대 20시간까지 시간외 근무를 인정 (시간당 5,000원, 최대 10만원)

□ 본부와 FIU 사무보조원의 보수수준을 비교해 보면

- 본부 신규직원('08년 채용)의 경우 연봉이 13.5백만원 수준에 이르는 데 반하여, FIU의 '05년 채용자는 12.9백만원에 불과함

본부와 FIU 보수체계 및 수준 비교 (단위 : 만원)

구 분	보수 체계				연간보수 수준(채용연도별)				
	기본 연봉	정근수당	성과금	시간외수당	'01	'04	'05	'06~7	'08
본 부	근무연수에 따라 상향 조정	근무연수에 따라 상향 조정 (월 봉 의 10~100%)	32~38	월 한도: 15시간 단가: 8,092~8,680원 최대지급: 월13만원	1,525	1,488	-	1,414	1,353
FIU		없음	없음	월 한도: 20시간 단가: 5,000원 최대지급: 월10만원	1,588	1,436	1,285	-	1,224

* 연간 보수수준은 시간외 수당, 성과급을 제외한 금액임

《지적사항》 (또는 우수사례)

- FIU가 소속기관이므로 독립성을 어느정도 보장한다 할지라도, FIU소속 비정규자의 근무환경·업무량·업무난이도·전문성 등이 본부 소속 비정규직과 특별한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현행과 같이 보수체계를 다르게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함

《조치할 사항》

- (시정요구, 표창상신 등)

<별표1>

비정규직(사무보조원) 연봉현황

(금액단위 : 천원)

연도	본 부				F I U		
	채용월	성 명	근무부서	연 봉*	채용월	성 명	연 봉
2001	7월		의사운영팀	15,248	5월		15,876
	11월		대 변 인 실	15,248	7월		15,876
2002	-		-	-	6월		15,876
2003	6월		중소서민과	14,998	-		-
	7월		혁신행정과	14,998			
	11월		구조개선과	14,998			
2004	12월		사무처장실	14,877	12월		14,364
	12월		금정국장, 서비스국장	14,877			
2005	-		-	-	5월		12,852
2006	7월		보 험 과	14,139	-		-
	11월		정책홍보팀	14,139			
	12월		공정시장과	14,139			
2007	3월		법무담당관	14,139	-		-
	4월		자산운용과	14,139			
2008	4월		위 원 장 실	13,530	7월		12,240
	4월		운전원	23,400			
	4월		운전원	23,400			
	4월		운전원	23,400			
	5월		증선위원실	13,530			
	5월		혁신행정과	13,530			
	5월		글로벌금융	13,530			
	5월		운전원	23,400			

* 본부 비정규직 연봉은 성과상여금이 미반영된 금액임

** 속기사 2명, 에디터:3명, YP 1명 등 6명은 제외함

<별표2>

2008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연봉표

□ 사무보조원

(단위 : 원)

본 부				FIU
근무기간	기본급	정근수당	연봉액	연봉액
1년미만	1,127,500	미지급	13,530,000	연봉계약서에 따름
1년~2년	1,168,500	58,425 × 2회	14,138,850	
2년이상	1,209,500	120,950 × 2회 ~	14,755,900~	

* 1) 정근수당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 지급기준 준용

근무년수	월봉급액의 해당 지급률(연2회)	근무년수	월봉급액의 해당 지급률(연2회)
1년미만	미지급	6년이상 7년미만	30%
1년이상 2년미만	5%	7년이상 8년미만	35%
2년이상 3년미만	10%	8년이상 9년미만	40%
3년이상 4년미만	15%	9년이상 10년미만	45%
4년이상 5년미만	20%	10년이상	50%
5년이상 6년미만	25%		

2)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연봉외 급여로 성과급(별표 6) 지급 가능

3) 시간외 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 48시간 이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2008년은 최대 월 15시간 지급)

라. 정책연구과제 운영 실태

[I]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 정책연구용역은 국회·예·결산 심사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 ☐ 금융위 발족에 따라 기존에 수행한 용역결과물을 적정하게 운영·관리하여 향후 유사정책 수립이나 용역과제 선정에 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 '07년 이후 정책연구용역(구 재경부와 구 금감위에서 수행)의 「관리현황 및 활용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

< 2007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정책연구용역 현황>

(백만원)

구 재경부 금융정책국		구 재경부 금융정보분석원		구 금감위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7	553	4	133	3	88	24	774

[II]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 정책연구용역의 내용적 충실성 보다는, 관리실태 및 활용실태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
- ☐ 감사방법은 먼저 정책연구용역 국회 지적사항에 대해 '07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및 정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등을 통해 지적사항을 파악한 후 담당과를 방문하여 확인·점검하고

- 정책연구용역심의회철, 연구용역관리현황, 연구용역결과물관련철을 제출받아 그 관리·활용이 관련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서면 점검했으며
- 현황(리스트)에서 과제 누락 및 PRISM 미등록과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대면하여 확인했음

(Ⅲ) 감사 결과

- 용역과제선정은 정책연구용역심의회에서 과제의 중복여부, 계약 방법 및 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 '07.6월 국회 결산 심사시 정무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당초 계획과 다른 용역사업은 문제가 있으므로 자체 '정책연구용역심의회'를 거쳐 차년도 용역과제를 선정하여 용역과제의 변경을 최소화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 담당과에서 '09년 예산 확정전에 자체 '정책연구용역심의회'를 거쳐 용역과제를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과제의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음
- 용역대금결제 부분을 점검한 결과 납기를 준수하고 있고, 하자 검수부분을 점검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정책연구용역예산의 이·불용을 점검한 결과 '07년 용역과제 24건중 2건만 이월되었으며, '08년 용역예정과제 약 20건도 이월 또는 불용 비율이 낮을 것으로 전망
- 다만, 조직개편에 따라 금융위가 신설된 관계 등으로 현황관리 및 PRISM 미등록 등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음

《지적사항》 (또는 우수사례)

- 정책연구용역 현황을 각 과로 부터 받아본 결과, 2개부서(△△과, △△△과)가 '07년 수행과제 24과제 중 3과제를 리스트에서 누락했으며
- '08.6.24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PRISM)을 통해 등록 현황을 점검한 결과, 24과제 중 13과제만 등록되어 있고 △△과, △△△과, △△△과, △△△과, △△△과 등에서 11과제를 등록하고 있지 않았음

《조치할 사항》

- (시정요구, 표창상신 등)

2007년도 금융위원회소관(재경부 및 금감위) 정책연구용역 현황

과 명	과 제 명	계약자	계약 방식	기간	계약금 (천원)	현황	특 등 여부
국 민 예 정 편	어음제도 개선방안 연구		수의	07. 2. 9 - 5. 8	14,250	×	○
	금융산업 선진화에 대한 의견 조사		수의	07. 7.25 - 8.24	28,500		×
	소비자금융현황 및 제도화 방안		수의	07. 8. 3 - 11. 2	23,750		×
	금융법령·법규 영문화		수의	06.12.11 - 5.10	150,000		×
	금융시장 현황지표 산출과정 자동화프로그램 개발		수의	07. 6.26 - 8.25	19,000		×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방안 연구		수의	07. 9.21 - 12.20	28,500		○
	국민소득 2만불시대 금융의 역할		수의	07.10.19 - 12.18	28,500		×
	해외단기 금융시장 제도에 관한 연구		수의	07.10.12 - 12.11	28,500		×
	홍콩사례를 중심으로 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해외진출 전략 모색		경쟁	07.10.26 - 12.11	38,000		×
	해외사례분석을 통한 은행지배구조 개선방안		경쟁	07.10.29 - 12.13	28,500	×	○
	금융업의 직무와 업무수행 역량 분석		경쟁	07.11.2 - 12.17	19,000		×
	뉴욕 런던시 등의 금융클러스터 조성사례의 정책적 시사적 연구		수의	07.11.5 - 12.20	33,000		○
	장외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		수의	07.11.15 - 12.20	25,000		×
	금융허브 육성을 위한 금융관련 행정의 국제화 방안 연구		수의	07.11.19 - 12.24	29,000		×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경쟁	07.11. 7 - 12. 7	7,800		○
	주요선진국의 금융인프라 관련 제도현황 연구		수의	07.10.25 - 12.14	21,800		○
	아시아 전자금융시장 분석과 한국 기업의 진출 전략		수의	07.12.20 - 08.2.19	30,000	×	×
	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경쟁	07. 7.30 - 12.14	33,200		○
	역외금융기관, 역외 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 유형 및 대응방안		경쟁	07. 9. 5 - 12.20	38,000		○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에 대응한 자금세탁 방지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경쟁	07.10. 5 - 12.20	28,500		○
금 감 위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경쟁	07.10. 5 - 12.20	33,000		○
	우리나라 회계관련 제도의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		수의	07.10.19 - 08.3.4	45,000		○
	펀드판매망(채널) 선진화 방안		수의	07. 9. 7 - 12.20	21,000		○
	기업상장제도의 국제적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수의	07. 7.24 - 10. 8	22,000		○
계					773,800		

라. 감사원 처분요구 이행실태 [중소기업 신용보증 제도]

(Ⅰ)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 감사원 처분요구 이행실태는 향후 감사원의 기관감사, 특별감사* 등에서 주요 점검대상이 되므로 사전 자체감사의 필요성이 높은 영역임

* '07.3월 감사원은 「재정·금융분야 감사결과조치 이행실태」 감사실시

- ☐ '07년 이후 우리 위원회(舊 금감위, 재경부 금융정책국 포함)에 대한 감사원 감사 대상은 「중소기업 보증지원 실태」 등 5개 부문*

* 중소기업 보증지원 실태, 특정업무 경비집행, 문서보안 실태, 공무국외여행 경비집행, 금융법규 영문화사업 사후관리

- 이중 최근 5년간 감사원 처분요구가 가장 많았던(8건) 산업금융과 소관의 「중소기업 보증지원 실태」 부문에 대하여 표본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 부서에 전파하여 참고토록 함

(Ⅱ) 감사방향 및 방법

- ☐ 감사원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 내용보다는 조치여부 및 조치 절차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보완하도록 함

- 조치계획을 수립한 경우 동 계획대로 정책을 추진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지 여부를 점검

- ☐ 감사 방법으로는 우선 감사대상부서(산업금융과)로부터 조치 결과·계획 및 관련자료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검토하고,

-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담당자 면담 및 유관기관(신·기보 등)으로부터의 자료 수집 등을 통해 보완

(Ⅲ) 감사 결과

□ 산업금융과는 감사원의 6개 처분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1개사항) 및 조치 계획(5개 사항)을 회신

○ (조치 결과) 보증부 대출금의 용도와 유용(부동산 매입 등)
방지를 위한 신·기보 업무 지도·감독 강화 요구에 대하여

- 신·기보가 보증금을 회수토록 하고 금감원 등 지시로 은행이
보증부 대출금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음을 조치결과로 회신

○ (조치계획) '총 보증규모 적정관리' 등 5개 사항*에 대하여

* ①총 보증규모 적정관리 ②장기보증이용기업 보증축소 ③중복보증 해소
④기술평가보증제도 합리적 운용 ⑤보증연계투자 폐지 등 방안마련

- 신·기보 공동발주 용역결과를 참고하여 금년 중 정부
정책에 반영 예정임을 조치계획으로 회신

□ 이밖에도 조치결과 및 계획 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하였거나
추진예정임

○ 신·기보 보증부 약정서 개정(신·기보 사후관리 업무 감독강화),
보증업무 선진화방안에 대한 공개토론회 개최예정
(조치계획에 따른 정책수립 절차상 객관성 확보) 등

□ 따라서 당초 감사기준으로 설정했던 조치실시 여부 및 절차상
문제점 측면에서 지적사항은 발견되지 않음

3. 지적사항별 조치내역

일련 번호	지 적 내 용	조치구분
1	업무용 차량 운영의 불합리	시정
2	국외출장시 숙박비 과다 수령	현지조치
3	정부구매카드 실명서명 미이행 및 업무추진비 건당 50만원 초과집행시 상대방 인적사항 기재 불철저	현지조치
4	직원교육 전·후 식비 지출과목의 부적정	현지조치
5	대우수당 지급의 부적정	현지조치
6	재물조사 실시 불철저	시정
7	정책연구용역과제 관리 미흡	현지조치

4.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제14조에 따라 소관부서에 통보 하여 적의 조치토록 요구

3. 비정규직 해고 현황 및 인력 감축계획, 현행 및 향후 인턴 채용현황

□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은 18개(준정부기관 7개, 기타공공기관 11개)이며

○ 현재까지 계약기간 만료나 희망퇴직이 아닌 해고로 인한 비정규직의 퇴사 사례는 조사되지 않았음

□ 인력 감축계획

○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집계하여 제출합니다.

기 관 명	계 획
한국산업은행	'09-'12년 중 정원 237명 감축(2,370→2,133)
중소기업은행	'09-'12년 중 정원 740명 감축(7,392→6,652)
예금보험공사	'09-'12년 중 정원 69명 감축(614→545)
자산관리공사	'09-'12년 중 정원 144명 감축(827→683)
주택금융공사	'09-'12년 중 정원 61명 감축(455→394)
예탁결제원	'09-'12년 중 정원 90명 감축(510→420)
기은캐피탈	'09-'12년 중 현 정원의 10% 감축(205→184)
JBK 시스템	'09-'12년 중 현 정원의 10% 감축(365→328)
코스콤	'09년 중 현 정원의 10% 자체 감축(662→596)
한국기업데이터	'09-'12년 중 정원 24명 감축(172→148)

□ **현행 및 향후 인턴 채용 현황**

○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집계하여 제출합니다.

(’09.8.31 기준, 단위 : 명)

기관명	채용계획	실적	계획
한국산업은행	200	139	63
중소기업은행	507	326	200
예금보험공사	25	25	10
자산관리공사	46	46	99
주택금융공사	20	20	-
신용보증기금	200	216	-
기술보증기금	100	107	-
한국거래소	50	58	-
예탁결제원	20	20	-
산은캐피탈	7	8	-
산은자산운용	2	3	-
기은캐피탈	8	11	-
IBK 시스템	15	16	-
코스콤	20	20	-
한국자산신탁	4	4	-
한국기업데이터	6	10	4

4. 대졸초임 삭감을 비롯한 임원 및 직급별 임금 삭감 현황

□ 임원

- '08.6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 보수체계 개편”을 통해 공기업·준정부기관과 일부 기타공공기관의 기관장·감사의 기본연봉을 삭감
- 이에 따라 금융공기업 기관장 및 감사의 기본연봉도 삭감 (최고 △57%)하였으며,
- 이사의 기본연봉도 금융공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기관장 기본연봉의 60~80%수준으로 조정

	기본연봉	성과급 한도	총 한도
기관장	차관 연봉의 150% (161백만원)	· 산은·기은 → 기본연봉의 200%	483백만원
		· 예보·캠코·신보·기보·주금 공·결재원·거래소 → 기본연봉의 100%	322백만원
감사	기관장 연봉의 80% (129백만원)	· 기본연봉의 100%	258백만원

□ 신입직원

- '09.2.19 비상경제대책회의 결정에 따라 전체 공공기관의 대졸초임 삭감을 추진하였으며
- 금융공기업의 대졸초임도 삭감(△7.8~△25%)

5. 금융위 임직원의 해외 출장 내역

1) 금융위 임직원의 해외 출장 내역

- 별첨 참조

(별첨)

□ 2008년도 국외여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성명	기간	목적지	출장사유	지출비용
정완규	1.13~19	뉴욕, LA	Global Public Policy Symposium 참가	3,511
이승우 변영한	2.7~14	뉴욕, 워싱턴	'Emerged Market 증권감독자 최고회의(미국 워싱턴)' 참석 및 FRB, OCC등 참석	11,569
이종화	3.25~29	캐나다	'제 13차 한-캐나다 FTA 금융협상' 참석	2,682
이종화	4.1~4.4	인도 뉴델리	제10차 한-인도 CEPA 협상 참석	1,768
김경률	4.7~13	노르웨이	제4차 국제회계감독기구회의 참석	3,126
전광우 김주현 이현철 오화세	4.15~4.21	뉴욕, 워싱턴	VIP 미국 순방 수행출장	16,874
윤상기	4.23~26	싱가포르	3차 아주지역보험감독자회의참석	1,331
이종화	5.5~5.15	제네바, 브뤼셀	WTO DDA 및 제7차 한-EU FTA 협상 참석	3,949
전광우 홍영만 이현철 이명순 이수영 빈현준 장인선	5.25~5.30	프랑스 파리, 영국런던,	제33차 IOSCO 연차총회 참석 및 APRC 의장 출 마	42,615
임승태	5.26~29	북경	ADB 워크샵 참석	1,453
이명호	5.27~30	베이징, 칭다오	방중 정상회담 지원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1,457
김용환 손성은	6.1~5	영국 런던	한·영 미래포럼 참석	8,547

(단위 : 천원)

성명	기간	목적지	출장사유	집행액
전광우 유재훈 이현철 고상범 오화세 김태훈	6.12~13	베이징, 상하이	한·중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중국 금융당국과의 회담	8,293
임승태	6.17~6.22	뉴욕	산업은행 민영화 관련 투자설명회 참석	2,447
박재훈	6.17~22	샌프란 시스코	Asian Banking and Finance Conference 참석	3,268
이종구	6.18~6.22	런던, 프랑크 푸르트	산업은행 민영화 관련 투자설명회 참석여비 지급	1,988
유재훈	6.25~29	파리	OECD 보험 및 사적연금회의 참석	3,142
이종화	6.27~6.29	홍콩	한-EU FTA 서비스분과 회의참석	2,994
오화세	7.29~7.31	뉴델리	제11차 한.인도 CEPA 협상 참여	1,768
김건영	8.23~8.30	호주, 싱가폴, 홍콩	주요국 금융산업육성 및 금융산업 선진화노력 현지조사	4,116
김현수	8.24~9.2	룩셈부르 크, 벨기에, 포르투갈, 스페인	통계작성기관 해외연수	4,205
전태원	8.25~9.1	핀란드, 스웨덴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 담당자 해외연수	3,059
오유정	8.28~9.5	홍콩	증권연수원의 GCMA 프로그램 해외연수 참가	3,147
김선문	8.30~9.7	영국	영국 ICMA Centre의 Investment Banking Program 참석	3,857
홍영만 최유삼	9.15~19	스페인	IOSCO 전문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참석	9,495
김성조	9.20~27	남아공	제5차 국제회계감독기구회의 참석을 위한 국 외 출장	1,177
권혁세	9.24~26	홍콩	CLSA 홍콩 Investors'forum에 참석	935
최윤정	9.28~10.5	일본	2008년도 일본 인사원 훈련기관 과정 참가	141
이종구 주홍민	10.13~19	헝가리	IAIS 제15차 연차총회 참석	13,883

(단위 : 천원)

성명	기간	목적지	출장사유	지출비용
진웅섭	10.13~25	이집트, 그리스, 터키 스페인	고위정책과정 국외연수	10,319
박재훈	10.20~22	동경, 홍콩	한국경제설명을 위한 국외 출장	2,843
유재훈 조충행 이명호	10.21~22	북경	한국자본시장에 대한 북경 IR 참가	3,703
전광우 이현철 고상범 신재형	10.22	중국 베이징	한국시장 IR 참석 및 CBRC 등 주요 당국자 간 회담	6,293
이창용 이동훈 오화세	10.23~25	싱가폴	‘한국 금융-경제 현황 설명회’ 개최 참석	7,549
전광우 홍영만 최유삼 고상범	10.31~11.1	발리	IOSCO 아태지역위원회(APRC) 회의 참석	8,220
이창용 최훈 오화세	11.2~6	뉴욕, 보스톤	한국 금융시장 및 경제현황 설명회 참석	13,668
김동환	11.10~13	북경	제2차 한·중 경제통상협력 공동작업반 회의 참석	1,581
이호형	11.10~15	파리	OECD한국 경제검토회의 참석	3,533
목정민	11.13~21	런던	Global Asset Management Program’ 교육 참석	4,057
전광우 최훈 이명순 이수영 오화세 신재형	11.16~20	뉴욕	한국시장 IR 참석 및 FRB NY 총재, FSA의 장 등 주요 당국자간 회담	20,508
이종구 이현철	11.16~19	런던	한국경제 IR 참석	11,194
김주현	11.25~26	동경	거시경제 및 금융 안정화를 위한 한중일 워크 샵 참석	1,779
이종구 박영춘 오화세	12.1~3	홍콩	한국 금융시장 및 경제현황 설명회 참석	7,021
이현철	12.14~16	홍콩	제5차 금융안정화 포럼(FSF) 참석	1,506
김동환	12.15~19	비엔나	한-EU FTA 확대수석대표회담 참석	2,994

□ 2009년도 국외여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성명	기간	목적지	출장사유	지출비용
조인강	1.15~17	동경	제4차 고위공무원정책과정 참석	143
이창용	1.28~2.1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Davos포럼) 참석	6,692
김동환	2.16 부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대사관 부임에 따른 여비	4,933
박진애	2.27~3.2	도쿄	제10차 동경 라운드테이블 참가	2,073
이종구, 신재형	3.11~21	뉴욕,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한국경제바로알리기 설명회 참석	14,547
이창용, 신현준, 오화세	3.11~15	런던	영국 IR 참석	10,739
전수한	3.10~11	동경	FTSE 선진지수 편입관련 Roundtable 참석	552
이창용 신현준 류근하	3.24~26	홍콩	아시아투자컨퍼런스 참가	5,673
이종석	4.26~5.3	런던	런던집합연수 참석	4,054
임승태, 서재홍	4.27~5.4	산티아고	세계저축은행 총회 참석	16,283
김선문	4.25~5.1	바젤	국제회계감독기구 6차 정기회의	3,503
김중훈	4.26~5.3	런던	영국대사관 주관 런던집합연수	4,048
김승민	5.6~8	싱가폴	이슬람금융서비스위원회 연차총회참석	1,769
김건영	5.10~16	페루	한-페루 FTA 협상	3,259
신현준	5.17~21	호주	한-호주 FTA 협상	2,505
김광수 유영준	5.17~5.21	런던	글로벌금융 시스템개혁 상호협력방안 논의	4,459
진선영	5.17~23	파리	글로벌 금융위기 관련 세미나	3,467
이종구 신현준 김승민	5.25~29	스위스 프랑스 홍콩	FSB 오리엔테이션 및 관계자 면담	16,598
진동수 김홍식	6.24~27	스위스 프랑스	매경포럼 및 FSB 창립총회 참가	30,717

성명	기간	목적지	출장사유	지출비용
신현준 김승민 오화세		홍콩		
추경호 김태훈	6.29~7.4	프랑크푸르트 파리	선진국 정책금융공사 방문 및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현황 파악	10,979
류근하	6.30~7.02	상하이	한·중·일 거시경제 워크숍 참가	903
송현도	7.6~9	싱가폴	해운시장 동향 파악, 국외 전문가 자문 프로그램 홍보 관련 참가	1,335
이한진	7.7~7.12	브리스번	제12차 APG 연차총회 참석	2,436

6. 권익위원회의 「신용정보 관리체계 개선안」 (연체
금액 보존대상에 대한 개정/연체금액 상향 조정
및 보존기한 단축 등)에 대한 금융위의 처리 결과,
마결시 사유

- ☐ 국민권익위원회의 「신용정보 관리체계 개선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한 공문을 첨부하
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한 공문 사본 1부.



금 융 위 원 회

수신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제도개선담당관)
(경유)

제목 제도개선권고 검토의견 통보

1. 제도개선담당관-877 관련입니다.

2. 귀 위원회가 제도개선 권고한 '신용정보기록 보존기간 단축 등 신용정보 관리체계 개선'에 대하여 불임과 같이 제도개선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불 임 : 제도개선검토의견서 1부, 끝.

금융위원회위원장

행정사무관

은행과 과장

09/21

협조자

시행 은행과-2400

접수

우 150-743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원빌딩 금융위원회

/ <http://www.fsc.go.kr>

전화 02-2156-9813

전송 02-2156-9809

/ ms98@korea.kr

/ 비공개(5)

제도개선검토의견서

과 제 명	신용정보기록 보존기간 단축 등 신용정보 관리체계 개선
과 제 내 용	<p>○ 신용정보업자의 연체 등의 기록보존기간을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현행 '최장 5년 이내'에서 '최장 3년 이내'로 단축</p> <p>○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7년'이 경과되면 해제사유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을 '5년으로 단축</p>
관계법령(조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1조 제4항, 제5항
제도개선여부	수용곤란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p><input type="checkbox"/> 기록보존기간 단축 관련</p> <p>○ 신바젤기준은 금융회사 대출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시 최소 5년간의 자료 활용을 권고, 또한, 정보활용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불충분한 이력정보로 인하여 신용평점시스템의 변별력을 떨어뜨릴수 있음</p> <p>* 미국 FICO모형의 경우에도 6~7년의 이력정보를 활용, 영국의 경우 6년의 이력정보 활용</p> <p><input type="checkbox"/> 해제사유발생일 단축 관련</p> <p>○ 신용회복 지원제도 등 본인노력으로 신용회복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제사유를 단축하는 것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조장 우려</p> <p>* 해제사유발생일은 '05년도에 외국사례 등(미국 7년, 벨기에 10년, 중국 7년)을 감안하여 10년에서 현행 7년으로 단축된 바 있음</p>
담당자	○ 금융위원회 은행과, 사무관 마순 (2156-9813)

제도개선검토의견서

과 제 명	신용정보기록 보존기간 단축 등 신용정보 관리체계 개선
과 제 내 용	○ 신용정보기록으로 관리하는 연체금액의 범위를 현행 '50만원 초과'에서 200만원 초과로 상향하고, 2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현행 '2건 이상'에서 '3건 이상'으로 조정
관계법령(조항)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8조
제도개선여부	일부 수용가능 여부 검토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p>□ 연체정보 공유기준의 상향조정은 채무자의 부채 상환 의지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금융기관의 여신 승인 기준의 보수화를 초래할 가능성</p> <p>○ 특히 소액 거래 비중이 큰 신용카드 및 보증보험 통신 채권의 리스크 관리의 부실화 초래 우려</p> <p>□ 다만, 연체 관리금액 '50만원' 기준이 '02.7월 개정(기준 30만원)된 점을 감안하여 현행 경제적 상황에 적합한 지 여부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종합적으로 검토 예정</p>
담당자	○ 금융위원회 은행과, 사무관 마순 (2156-9813)

제도개선검토의견서

과 제 명	신용정보기록 보존기간 단축 등 신용정보 관리체계 개선
과 제 내 용	○ 개별 금융기관은 국민이 3개월 이상 채무를 연체한 경우에만 연체관련 정보를 신용정보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 규정 위반 시 신용정보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
관계법령(조항)	「신용정보관리규약」 제6조
제도개선여부	일부 수용가능여부 검토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p><input type="checkbox"/> 금융회사의 단기 연체정보는 연체자 미연방지 및 신용평가에 중요요소로서 활용되고 있음</p> <p>○ 특히, 현금서비스 등 단기대출의 경우에는 3개월이상 연체정보만으로는 리스크관리가 곤란한 측면</p> <p><input type="checkbox"/> 다만, '5일이상 단기 연체'가 고객의 정확한 리스크 관리에 적절한 기준인지 여부 및 고객의 금융거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관계기관 및 이해당사자 등과 종합적으로 논의하여 단기정보 활용필요성 및 활용기준 등을 검토할 계획</p>
담당자	○ 금융위원회 은행과, 사무관 마순 (2156-9813)

제도개선검토의견서

과 제 명	신용정보기록 보존기간 단축 등 신용정보 관리체계 개선
과 제 내 용	○ 파산·면책자에 대한 신용정보기록의 관리기간을 현행 '7년'에서 '3년으로 단축
관계법령(조항)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3조
제도개선여부	일부수용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p><input type="checkbox"/> 09.8.27 입법예고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 따르면,</p> <p>○ 파산면책정보의 경우, 등록일로부터 5년 경과한 후 이용관리 대상에서 삭제하도록 규정하여, 현행 연체 정보 등 불이익 정보의 관리기간(5년)과 동일하게 규정</p>
담당자	○ 금융위원회 은행과, 사무관 마순 (2156-9813)

제도개선검토의견서

과 제 명	신용정보기록 보존기간 단축 등 신용정보 관리체계 개선
과 제 내 용	<p>○ 금융기관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 채무자가 대출금 등을 연체할 경우 연체사실이 은행연합회 및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정보기록에 등재되어</p> <p>- 금융거래, 취업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대출서류 등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그 내용을 설명할 의무를 부과</p> <p>→ 관련시행령 신설(10년8월까지)</p>
관계법령(조항)	없음
제도개선여부	일부 수용여부 검토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p><input type="checkbox"/> 대출금의 연체사실 등이 금융거래, 취업 등에 있어서 미치는 사실상의 불이익은 일률적으로 명시 또는 설명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시행령 규정상 의무화하기는 어려움</p> <p><input type="checkbox"/> 다만,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대출금 등을 연체할 경우 연체정보가 제공되어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므로</p> <p>○ 시행령 규정상의 명시 및 설명의무가 아니라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이행 가능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p>
담당자	○ 금융위원회 은행과, 사무관 마순 (2156-9813)

7. 한국정책금융공사 출범에 따른 향후 운영계획

- 정부는 금년 3월 정책금융공사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동 시행령 제정 작업을 완료('09.6.1 시행)하였으며,
 - '09.10월 정책금융공사 설립을 목표로 현재 후속 작업(공사 정관 제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 중임
- 정부는 금번 정책금융공사 설립을 통해,
 -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지역개발·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금융시장 안정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함으로써,
 - 국가 경쟁력 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고용창출,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계획임

8. 기존 정책금융기관과 업무차별화 방안은?

-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금번 정책금융공사 설립을 통해,
 -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지역개발·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금융시장 안정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함으로써,
 - 국가 경쟁력 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고용창출,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 기존 정책금융기관과는 각 기관의 역할과 특성에 따라 상호보완 및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 향후 공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정책금융기관과의 불필요한 업무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적극 조정하여 정책금융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임

**9. 동산담보대출 제도 관련 금융위, 재정부, 법무
부 등 정부 차원의 검토결과 및 진행상황, 관련
자료(관련 법안 등)**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은 법무부 소관사항으로 09.7월 입법예고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바 없음

10.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불발 사유 및 미흡사항에 대한 분석 및 대책 촉구

□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09.9.21일부터 FTSE선진지수에 편입되었으며, 이는 사실상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제도 및 운영 등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되기 위한 조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여짐

* 다만, MSCI는 미흡사유로 ①원화환전의 불완전성, ②ID제도, ③지수사용권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실질적으로 거래소의 지수사용권을 획득하고자 하나 이는 거래소와의 상업적으로 협의할 사항임

□ 내년 6월 예정된 MSCI의 한국시장에 대한 평가결과 발표시 한국시장의 MSCI선진지수 편입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것으로 기대

* MSCI는 이스라엘의 경우 FTSE 선진지수 정식편입('08.9월)에 뒤이어 선진지수 편입을 결정('09.5월)한 바 있음

FTSE 선진지수	MSCI 선진지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룩셈부르크,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홍콩,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싱가포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한국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홍콩,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싱가포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선진시장 25개국	선진시장 24개국

11. 공무원 휴직제도에 대한 개요 및 연도별 대상자 명단

- 공무원 휴직제도에 대한 개요 및 연도별 대상자 명단

□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71조~73조

□ 종류 : 직권휴직(질병휴직, 병역휴직, 행방불명 등),
청원휴직(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육아휴직 등)

□ 연도별 휴직자 명단

성명	휴직구분	휴직시작일	휴직종료일	휴직기관명
000	고용휴직	20080412	20100411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000	유학휴직	20080524	20100523	미, 일리노이대
000	유학휴직	20080526	20110525	미, 일리노이대
000	유학휴직	20090706	20100705	싱가포르경영대
000	연수휴직	20080919	20090918	명지대
000	고용휴직	20090817	20120816	아시아개발은행(ADB)
000	육아휴직	20080630	20090629	육아휴직
000	육아휴직	20090723	20100621	육아휴직
000	유학휴직	20080630	20090629	싱가포르경영대
000	유학휴직	20090101	20090628	미, 미시건주립대

* 2008.02.29 금융위 출범 이후 휴직자 명단

12. 금융회사별 휴면예금, 휴면보험금 현황

□ 금융회사별 휴면예금, 휴면보험금 발생 현황

○ 첨부 참고 (자료출처: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 현재 은행 및 보험회사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정 2007.8.3, 시행 2008.2.4)에 따라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 발생분 중 원권리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할 수 있음

<첨부 1>

은행권 휴면예금 발생현황

(단위 : 천건, 억원)

은행명	2006년		2007년		2008년	
	계좌수	금액	계좌수	금액	계좌수	금액
산업은행	12	4	14	4	24	3
농협중앙회	1,066	154	1,389	151	1,254	268
신한은행	940	240	550	120	689	102
우리은행	2,018	137	1,184	110	1,124	87
SC제일은행	1,276	98	295	52	557	76
하나은행	646	93	871	114	682	95
기업은행	658	65	768	78	706	69
국민은행	2,057	129	2,122	69	1,772	65
외환은행	638	70	538	76	528	72
한국씨티은행	555	58	190	28	283	25
수협중앙회	55	10	41	10	39	6
대구은행	101	31	75	29	95	11
부산은행	374	45	360	49	330	48
광주은행	235	13	-	-	114	5
제주은행	10	0.4	9	0.4	3	0.2
전북은행	84	12	78	10	73	11
경남은행	105	6	131	9	146	10
총 계	10,830	1,165.4	8,615	909.4	8,419	953.2

<첨부 2>

생명보험사 휴면보험금 발생현황

(단위 : 천건, 억원)

보험사명	2006년		2007년		2008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한	84	874	64	1,826	57	447
알리안츠	85	136	48	167	23	129
삼성	200	1,718	176	3,447	146	1,729
흥국	53	197	51	247	41	92
교보	184	1,325	149	5,891	110	456
우리아비바	4	8	5	8	5	11
미래에셋	59	97	66	144	52	65
금호	30	39	39	47	43	55
동부	3	9	6	11	11	19
동양	12	64	91	249	125	82
메트라이프	11	35	12	46	15	33
푸르덴셜	15	19	13	22	13	35
신한	72	79	58	82	50	72
PCA	2	2	6	4	9	5
뉴욕	2	3	1	3	1	3
ING	25	93	26	97	33	75
SH&C	-	1	1	10	1	15
녹십자	4	25	4	21	3	9
라이나	98	36	100	41	81	34
AIG	59	41	66	45	80	56
하나HSBC	2	1	4	2	5	3
KB	1	3	1	7	1	9
총 계	1,005	4,805	987	12,417	905	3,434

<참부 3>

손해보험사 휴면보험금 발생현황

(단위 : 천건, 억원)

보 험 사 명	2006년		2007년		2008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메리츠	8.9	35.4	24.4	71.0	47.2	45.4
한화	5.0	17.1	5.1	18.3	12.4	21.9
롯데	3.0	11.0	2.0	9.5	2.1	5.3
그린	1.8	6.2	1.6	6.0	2.0	5.4
흥국쌍용	9.6	14.6	7.3	12.4	17.2	16.0
제일	20.5	16.4	21.3	23.6	25.9	21.4
삼성	66.2	380	65.8	733	76.8	320.3
현대	18.2	60.5	13.7	31.1	38.0	44.5
LIG	17.9	71.3	22.9	93.0	29.8	88.7
동부	19.9	59.7	25.9	78.2	46.4	61.3
총 계	171.0	672.2	190.0	1,076.1	297.8	630.2

13. 최근 3년간 적발된 증권거래법 위반건수와 이에
따른 과징금 부과내역

☐ 별첨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사업자명	과징금	부과사유	부과일
1	(주)에스앤이코프(구 (주)넷시엔터테인먼트그룹)	247,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2-02
2	(주)큐론(구 (주)하이컴텍)	254,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2-15
3	(주)코스모써엔티((신) 케이앤웨이브)	252,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2-15
4	(주)세고엔터테인먼트	245,7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2-15
5	OOO	12,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2-15
6	(주)티에스엠홀딩스(구 (주)시스맘네트웍스)	129,1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2-15
7	(주)키이스트	24,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3-19
8	(주)케드콤	5,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3-19
9	(주)씨오텍	449,2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3-30
10	큐렉소(주)	250,3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4-13
11	(주)솔빛텔레콤	174,3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5-28
12	(주)조이토토	96,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5-28
13	(주)큐엔택코리아	23,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5-28
14	(주)우리기술	23,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5-28
15	롯데관광개발(주)	156,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6-22
16	케이알선물(주)	72,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6-22
17	오스템임플란트(주)	148,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6-22
18	(주)세안	359,9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8-27
19	(주)삼화네트웍스	20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8-27
20	OOO	2,00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8-27
21	(주)나노엔텍	6,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8-27
22	(주)모델라인이엔티	5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8-27
23	(주)모라리소스	67,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8-27
24	(주)티에스엠홀딩스(구 (주)시스맘네트웍스)	89,2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8-27
25	한국창업투자(주)	12,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8-27
26	(주)디유뱅크	244,7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9-11
27	(주)솔트웍스	24,2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9-11
28	한국기술산업(주)	141,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9-11
29	OOO	26,7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9-11
30	(주)코아크로스(구 (주)매커스)	48,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0-12
31	OOO	24,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0-12
32	(주)유비스타	454,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0-12
33	(주)엔터원	23,3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0-25
34	(주)나노엔텍	48,9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0-25
35	(주)티티씨아이(구.젠크이앤아이)	324,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0-25
36	OOO	16,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0-25
37	OOO	2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0-25
38	(주)엘제이엘에너지(구 마스타테크론)	560,7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1-12
39	(주)키이스트	431,9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1-22
40	OOO	16,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1-22
41	(주)엘제이엘에너지(구 마스타테크론)	18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1-22
42	OOO	3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1-22
43	케이앤웨이브(주)	145,1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2-24
44	시큐리티코리아(주)	152,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2-24
45	산양전기(주)	316,7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2-24
46	(주)삼화네트웍스	144,9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2-24
47	OOO	3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2-24
48	(주)한텔	325,3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2-24
49	샘표식품(주)	2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2-24
50	(주)한신더애퍼	459,1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2-24

연번	사업자명	과징금	부과사유	부과일
1	(주)에너지원	7,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3-28
2	(주)모나미	9,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3-28
3	페이퍼코리아(주)	8,1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3-28
4	동신건설(주)	18,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3-28
5	대한은박지공업(주)	441,7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3-28
6	OOO	16,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3-28
7	OOO	4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4-24
8	동아회원권그룹(구. 동아G&L)	407,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4-24
9	(주)산지소프트	61,9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5-26
10	(주)조이토토	318,7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6-13
11	조성삼(조이토토 대표이사)	2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6-13
12	오펜스(주)	13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6-13
13	(주)셀런	206,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6-13
14	(주)네오솔라[구 (주)에이트픽스]	48,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6-13
15	영진약품공업(주)	994,1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6-17
16	(주)이노블루(구. (주)엠피오)	72,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6-26
17	(주)씨앤중공업	115,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6-26
18	(주)큐리어스	102,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6-26
19	(주)알에스넷[구 (주)위디츠]	81,9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6-26
20	제이에스(주)	77,7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6-26
21	(주)나래원	40,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6-26
22	(주)파로스이앤아이	15,1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6-26
23	(주)케이씨오에너지	820,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6-30
24	(주)케이에스피	7,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8-21
25	(주)모코코	7,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8-21
26	(주)필룩스	7,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8-21
27	(주)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	5,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8-21
28	현대피앤씨(주)	98,3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7-24
29	한국통신데이터(주)	49,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7-29
30	OOO	17,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8-21
31	OOO	10,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8-21
32	메디에스앤피(주)(구. 텍트론)	133,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9-17
33	(주)아이씨코퍼레이션	772,9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9-17
34	OOO	2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9-17
35	한국오발(주)	7,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10-23
36	(주)엔블루와이드	3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10-23
37	(주)샤인시스템	48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10-23
38	(주)씨라텍	16,2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10-23
39	(주)로엔케이	61,9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10-23
40	(주)이룸텍(구 마스타테크론, LJI에너지)	382,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10-27
41	넷시큐어테크놀로지(주)	103,2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10-27
42	네스테크(주)	532,9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10-27
43	(주)스카이뉴팜	254,2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11-07
44	(주)포이보스	973,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11-11
45	청안회계법인	5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11-12
46	(주)파로스이앤아이	45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12-18
47	OOO	5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12-18
48	(주)유라시아알앤티	49,3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12-26
49	(주)트루맥스(구. 티티씨아이)	22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12-26

연번	사업자명	과징금	부과사유	부과일
1	(주)이노디지엔	7,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2-27
2	(주)뉴젠비아이티	78,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2-27
3	(주)에스티앤아이	24,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2-27
4	(주)온누리에어	3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2-27
5	(주)해세나	40,2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2-27
6	오피스(주)	3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2-27
7	테스텍(주)	24,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2-27
8	한국슈넬제약(주)	18,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2-27
9	(주)펜타마이크로	12,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2-27
10	한국개발금융(주)	6,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2-27
11	(주)아이씨엠	121,2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3-20
12	네스테크(주)	355,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4-10
13	OOO	2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4-10
14	OOO	16,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4-10
15	(주)보르네오가구	4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5-06
16	(주)인네트	598,2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5-06
17	세림회계법인	8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5-27
18	(주)사라콤	310,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5-27
19	(주)휴니드테크놀로지스	2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5-27
20	(주)모라리소스	15,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5-27
21	(주)휴리프	50,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5-28
22	(주)비엔알엔터프라이즈	44,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5-28
23	(주)봉주	44,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5-28
24	(주)리노셀	41,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5-28
25	(주)확인영여사	38,6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5-28
26	(주)사이버패스	34,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5-28
27	(주)에듀언스	30,9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5-28
28	(주)삼에스코리아	28,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5-28
29	아이비네트웍스(주)	5,25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5-28
30	(주)아이잭엔컴퍼니	4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6-24
31	(주)아이씨코퍼레이션	45,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6-25
32	대우전자부품(주)	141,2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6-25
33	(주)씨모텍	232,2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7-08
34	(주)상보	97,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7-08
35	동양이엔피(주)	23,7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7-17
36	(주)원드스카이	147,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7-17
37	(주)대한온박지	34,2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7-24
38	(주)대한온박지	2,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7-24
39	(주)테라리소스	66,3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7-24
40	(주)비엔알엔터프라이즈	456,2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7-24
41	(주)야호커뮤니케이션	63,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7-24
42	(주)셀프랩(구.에이치원바이오)	217,800,00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위반	2009-07-24
43	(주)씨앤중공업	116,800,00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위반	2009-07-24
44	(주)트라이콤	79,700,00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위반	2009-07-24
45	(주)희훈디앤지	54,000,00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위반	2009-07-24
46	(주)엑스씨이	51,700,00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위반	2009-07-24
47	(주)대유	50,200,00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위반	2009-07-24
48	(주)블루스톤디앤아이	48,100,00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위반	2009-07-24
49	(주)포넷	24,400,00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위반	2009-07-24
50	(주)아원	20,000,00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위반	2009-07-24
51	(주)정원엔시스템	4,100,00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위반	2009-07-24

박 선 숙 의원

1. 외환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관련 자료

1-1. 론스타측 제출자료 : 반기별 외환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관련 자료로서 2006말 기준

1-2. 심사자료 : 반기별 외환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관련 자료로서 2006말 기준

□ 현재 '06년말 기준 외환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진행 중임

○ 이에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공해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소액서민금융재단 관련

2-1. '08년, '09년 예산 현황

① '08년 예산

□ 수입 예산

(단위 : 천원)

관	항	목	'09년도 예산액	비고
기본재산 전입금	기본재산 전입금	은행출연금 전입금	25,000,000	
		보험출연금 전입금	3,000,000	
이자수입	이자수입	이자수입	3,541,036	
계			31,541,036	

□ 지출 예산

(단위 : 천원)

관 항 목	'08년도 예산액	비고
재단사업비	28,000,000	
(은행사업비)	(25,000,000)	
(보험사업비)	(3,000,000)	
재단운영비*	3,541,036	
계	31,541,036	

* 출연금 이자수입으로 충당

② '09년 예산

□ 수입 예산

(단위 : 천원)

관	항	목	'09년도 예산액	비고
기본재산 전입금	기본재산 전입금	은행출연금 전입금	40,000,000	소액금융사업비
이자수입	이자수입	은행출연금 이자수입	2,770,134	
		보험출연금 이자수입	4,827,442	소액보험사업비 : 4,000,000
계			47,597,576	

□ 지출 예산

(단위 : 천원)

관항목	'09년도 예산액	비고
재단사업비	44,000,000	
소액금융사업비	40,000,000	
소액보험사업비	4,000,000	
재단운영비*	3,597,576	
계	47,597,576	

* 출연금 이자수입으로 충당

2-2. '08년, '09년 인력 현황

① '08년 인력 현황('08년 12월 말 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별정직	일반직			
			1급	2급	3급	4~5급
정원	25	1	2	3	4	15
현원	18	1	2	2	1	12

② '09년 인력 현황('09년 9월 28일 기준)

□ 사무처

(단위 : 명)

구분	계	별정직	일반직			
			1급	2급	3급	4~5급
정원	25	1	2	3	4	15
현원*	16	1	2	2	1	10

* 2명 퇴사

2-3. '08년, '09년 사업별 지원 현황

□ 2008년도 사업 : 271억원(소액금융 241억원, 소액보험 30억원)

(사업기간 : '08.7~'08.12)

구분	분야	복지사업자	지원금	비고
소액 금융 사업	저소득층 창업지원	사회연대은행	25억원	
		신나는조합	6억원	
	사회적기업 지원	함께일하는재단	20억원	
	신용회복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120억원	
		한마음금융	60억원	
	전통시장 소액대출		10억원	
	소계		241억원	
소액 보험 사업	13개 보험사		30억원	

□ 2009년도 사업 : 440억원(소액금융 400억원, 소액보험 40억원)

구분	분야	복지사업자	지원금	비고
소액 금융	저소득층 창업지원	해피월드 복지재단	15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	10	
		소상공인진흥원	40	
		사회연대은행	10	
		신나는조합	5	
	신용회복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140	
		한마음금융	20	
	사회적기업 지원	열매나눔재단	10	
		민생포럼	10	
		민생경제정책 연구소	20	
		함께일하는재단	-	
	전통시장 소액대출 지원	지방자치단체	110	
	소계		390	
	예비사업비*		10	
소액보험		보험회사	40	

* 예비사업비 10억원은 추후 복지사업자별 자금 집행 추이를 보아가며 배정

2-4. 사업별 지원 기준

① 소액금융사업

□ 저소득층 창업 지원

- 대상 :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취약계층*,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의 소득자 또는 자격 취득 및 기술보유 창업희망 출소자

* 실제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계층

- 금액 : 4,000만원 이내
- 기간 : 4년 이내(거치기간 포함)
- 금리 : 6% 이내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 신용회복 지원

- 대상 : 신용회복 중에 있는 자 중 1년 이상 성실 상환자
- 금액 : 500만원 이내
- 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포함)
- 금리 : 6% 이내(학자금 2%)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등

□ 전통시장 소액대출 지원

- 대상 : 전통시장 내 영세상인
- 금액 : 점포당 500만원 이내
- 기간 : 1년 이내
- 금리 : 4.5% 이내
- 상환방법 : 상인회 자율 결정

□ 사회적기업 지원

- 대상 : 사회적기업
- 금액 : 1억원 이내
- 기간 : 5년 이내
- 금리 : 4% 이내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② 소액보험사업

□ 소액보험 가입 및 유지 지원

- 대상 :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저소득층 아동과 장애인복지이용시설에 대하여 보험 가입 지원
 - 저소득층 아동 보험 가입 지원의 경우, 차상위계층 조손 가정과 한부모가정의 12세 이하 아동 및 그 부양자 약 6,000명이 후유장해보험금, 미래설계자금 등의 혜택
 - 장애인복지이용시설 보험 가입 지원의 경우, 전국 시설을 대상으로 재산손해, 신체상해 등에 대한 보장

2-5. 사업별 지원을 위한 복지사업자 선정 기준

□ 선정 기준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점
공신력 (30)	합목적성	· 설립목적과 사업내용의 적합성	10	
	사회적 인지도	· 외부기관 연계성 및 대외활동 실적 · 홈페이지 접속실적	10	
	지속가능성	· 활동의 지속성, 사업실적의 영속성 · 일관성	10	
재정능력 (25)	재무건전성	· 자산건전성(유동성, 현금성 자산의 규모 등)	5	
		· 부채규모 및 내용의 적절성, 기본재산 충실도	5	
	예산집행의 적정성	· 수입구조의 안정성	5	
		· 지출통제기능의 공정성	5	
		· 회계감사 실시여부 및 그 결과	5	
사업수행 능력 (45)	사업의지 및 전문성	· 사업비전 · 목표	5	
		· 임직원의 행정능력 및 전문성 확보 정도	5	
	사업실적	· 계획 대비 달성을	10	
		· 사업실적의 효과	5	
	사업추진 기반	· 인력 및 조직의 적절성	10	
		· 지역사회 네트워크 등	5	
		· 전산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정도	5	
			합계	

2-6. '08년, '09년 복지사업자 신청 내역

□ '08년 복지사업자 신청 내역

신청분야	신청 법인(단체)명
창업·취업 지원	(재)광성복지재단
	대경마이크로크레딧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조합)
	(사)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사)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창원사회복지은행)
	근로복지공단
신용회복 지원	(사)신용회복위원회
	한마음금융(주)
	청주새마을금고
사회적기업 지원	(재)실업극복재단
	(재)열매나눔재단
계	11개 기관

□ '09년 복지사업자 신청 내역

신청분야	신청 법인(단체)명
창업·취업	해피월드복지재단
	한국갱생보호공단
	소상공인진흥원
생활안정자금	(재)한국여성재단
사회적기업	열매나눔재단
	민생포럼
	(사)민생경제정책연구소
계	7개 기관

2-7. '08년, '09년 복지사업자 선정 내역 및 탈락 복지사업자의 탈락 사유

□ '08년 복지사업자 선정 내역 및 탈락 복지사업자의 탈락 사유

신청분야	법인(단체)명	선정 여부	탈락 사유
창업·취업 지원	(재)광성복지재단	미선정	서류 미비
	대경마이크로크레딧	미선정	법인미설립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조합)	선정	
	(사)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선정	
	(사)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창원사회복지은행)	미선정	평점 미달
	근로복지공단	선정	
신용회복 지원	(사)신용회복위원회	선정	
	한마음금융(주)	선정	
	청주새마을금고	미선정	비출연금용기관
사회적기업 지원	(재)실업극복재단	선정	
	(재)열매나눔재단	미선정	서류 미비
계	11개 기관		

□ '09년 복지사업자 선정 내역 및 탈락 복지사업자의 탈락 사유

신청분야	복지사업자명	선정여부	탈락 사유
창업·취업	해피월드복지재단	선정	
	한국갱생보호공단	선정	
	소상공인진흥원	선정	
생활안정자금	(재)한국여성재단	미선정	평점 미달
사회적기업	열매나눔재단	선정	
	민생포럼	선정	
	(사)민생경제정책연구소	선정	
계	7개 기관		

2-8. '08년, '09년 재단의 지원을 받은 복지사업자의 집행실적('09년은 6월말 기준)

① '08년 재단의 지원을 받은 복지사업자의 집행실적

1. 창업, 취업, 신용회복지원 등 분야 (231억원)

☐ 사회연대은행 : 25억원

○ 대출 : 148명 ⇒ 25억원(지원금 전액 소진)

☐ 신나는조합 : 6억원

○ 대출 : 2개 공동체, 개인 26명 ⇒ 6억원(지원금 전액 소진)

☐ 신용회복위원회 : 120억원

○ 대출 : 4,093명 ⇒ 120억원(지원금 전액 소진)

☐ 한마음금융 : 60억원

○ 대출 : 2,594명 ⇒ 60억원(지원금 전액 소진)

☐ 함께일하는재단 : 20억원

○ 대출 : 11개 사회적기업 ⇒ 15.6억원

2. 전통시장 소액대출 (10억원)

☐ 서울시에 10억원*을 교부하여 영세상인 408명**에게 10억원 대출

* 1개 시장당 3천 ~ 5천만원씩

** 2009년 2/4분기까지 집계 기준

3. 소액보험사업 (30억원)

☐ 수혜인원 : 3,323명(빈곤아동 2,005명 및 부양자 1,318명)

② '09년 재단의 지원을 받은 복지사업자의 집행실적(6월말 기준)

1. 창업, 취업, 신용회복지원 등 분야 (132.5억원)

□ 해피월드복지재단 : 5억원

○ 대출 : 25명 \Rightarrow 4.5억원

□ 소상공인진흥원 : 20억원

○ 대출 : 77명 \Rightarrow 14.5억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5억원

○ 대출 : 3명 \Rightarrow 0.9억원

□ 신용회복위원회 : 90억원

○ 대출 : 2,140명 \Rightarrow 64.1억원

□ 열매나눔재단 : 2.5억원

○ 대출 : 6개 기업 \Rightarrow 2.5억원

□ 민생경제정책연구소 : 5억원

○ 대출 : 1개 기업 \Rightarrow 1억원

□ 민생포럼 : 5억원

○ 대출 : 1개 기업 \Rightarrow 0.5억원

2-9. '08년, '09년 재단에 대한 일자별 기부 내역
- 기부기관별 기부 금액

□ '09년 9월 25일 현재, 기부 내역 없음

신 건 의원

1. 2008, 2009 자체감사결과보고서

□ 별도첨부(2008 자체감사결과보고서)

* 2009년은 아직 미 실시

2008년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

2008. 9.

감사담당관실

- 목 차 -

I. 감사개요

II. 감사실시 결과

1. 총 평

2. 부문별 감사결과

가. 청사이전관련 경비 등 예산집행 실태

나. 물품관리 실태

다. 비정규직 운영실태

라. 정책연구과제 운영실태

마. 감사원 처분요구 이행실태 (신용보증 제도)

3. 지적사항별 조치내역

4.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5. 감사결과 처리요령

◇ 청사 이전비용 집행, 외부기관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금융위원회 업무처리의 적정성 제고를 도모

- 감사실시 기간 : 2008.6.23(월)~6.27(금) (5일간)
- 감사대상 기간 : '07.1. ~ '08.5. (단, 예산집행은 08.1~5.)
- 감사대상 부서 : 혁신행정과, 기획재정담당관실, 산업금융과
- 감사반 : 감사담당관실 전 직원 (과장, 5급3, 6급2)
- 감사방법 : 표본감사, 서류감사
- 감사대상업무 : 청사이전 비용 등 예산집행, 물품관리, 정책 연구용역, 보증제도
 - ① 조직개편으로 인한 청사이전 관련 제비용 집행 실태 (혁신행정과)
 - ② '07년 이후 물품 관리 현황 (혁신행정과)
 - ③ '07년 이후 비정규직 운영현황 (혁신행정과)
 - ④ '07년 결산국회 지적사항(정책연구과제) 처리실태 (기획재정, 혁신행정과)
 - ⑤ '07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보증제도) 처리실태 (산업금융과)

* 조치 이행여부 점검에 한하고, 정책내용의 판단은 제외

1. 총 평

- 금번 감사는 구 재정경제부(금융정책국)과 구 금융감독위원회가 통폐합되어 새로이 출범한 우리 위원회가 업무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음
- 주요 감사대상 업무를 조직통폐합 과정에서 발생한 청사이전 경비 등 각종 예산집행실태와 물품관리 실태, 구 재경부 및 구 금감위에서 각각 채용하여 운영중에 있던 비정규직 공무원의 금융위 출범 후 통합운영 실태
- 또한, 결산국회에서 지적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의 적정성 여부, '07년 감사원의 중소기업 보증제도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실태 등으로 선정하였음
- 감사실시 전 감사대상 부서에 감사대상 업무 및 선정이유, 감사 착안사항을 사전 통보하여 자체적으로 점검·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했음
- 감사결과, 조직개편에 따른 신규업무 증가·담당자 변경 등으로 업무처리체계가 정착되지 않아 예산집행·차량 및 물품관리, 비정규직 급여, 연구용역 현황관리 등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었음
- 금번 감사를 계기로 관행적으로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거나 관리소홀·규정 미숙지 등에 따른 잘못된 업무처리를 바로 잡는 등 금융위 업무시스템이 조기 정착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

[부문별 총평]

① 청사이전 관련 경비 등 예산집행 실태

- 복잡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청사이전 및 사무실 재배치 업무를 큰 문제점 없이 수행했던 것으로 평가, 다만
 - 일반업무용 차량의 중형위주 임차·운영, 국외출장시 규정 미숙지로 인한 숙박비 초과 수령, 정부구매카드 사용자 실명 미서명 등의 사례가 있었음

② 물품관리 실태

- 재물조사의 부적정으로 물품관리대장과 실제 관리되고 있는 현물과 일치하지 않음

③ 비정규직 운영실태

- 금융위 본부와 FIU 근무자간의 보수체계가 상이하고 보수 수준도 일관성이 없는 등 문제점이 발견됨

④ 정책연구과제 운영실태

-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 등으로 용역결과물(보고서)의 관리 및 활용 등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음

⑤ 보증제도

- 산업금융과는 감사원의 처분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 및 조치 계획을 회신한바, 당초 감사기준으로 설정했던 조치 실시 여부 및 절차상 문제점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 없음

2. 부문별 감사결과

가. 청사 이전관련 경비 등 예산집행 실태

〔Ⅰ〕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새로이 출범한 금융위원회는 조직규모와 기능면에서 구 금융감독위원회보다 확대되어 구 금감위사무실(금융감독원 건물내)을 계속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따라서, 금융위 사무실을 현재 청사(서초구 반포로)로 이전하게 되었는바, 사무실 이전 및 재배치 작업은 짧은 기간내에 신속하게 실시해야 하는 반면, 복잡하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였음
- 이러한 상황에서의 예산집행은 오류발생 가능성이 있는바, 부적정한 예산집행이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청사 이전과정에서의 예산집행 실태」를 표본 감사대상으로 선정
- 아울러, 평소 공무원들이 오류를 범하기 쉬운 국외출장 경비집행, 정부구매카드 사용 등에 대한 '08.1~5월 기간중 실태를 감사대상으로 선정함

〔Ⅱ〕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금번 감사는 별도의 감사장을 설치하지 않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일반업무를 수행하면서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서,
- 짧은 감사기간(5일)에 선정된 감사대상업무(청사이전 및 국외출장 경비 등)전반을 감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음

- 따라서, 청사이전과 관련된 경비의 경우 청사이전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여부, 관련업체 선정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으며
 - 업무용차량 운영의 경우 조직개편 후 신규추가 수량 및 차종 · 운영의 적정성 등을 감사했으며, 국외출장 경비 집행실태 및 정부구매카드 사용실태에 대해서도 감사
- 혁신행정과에서 비치하고 있는 관련서류(청사이전계획서, 계약서, 지출결의서, 차량운행일지, 지출관련 영수증 등)를 제출토록 하여 서류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했고,
 - 관련서류 점검 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지출관(지출관 보조 포함)의 설명을 듣는 방식을 취했으며, 필요한 통계는 별도 작성을 요구하기도 했음

【Ⅲ】 감사 결과

- 금융위 '08년 총예산은 1,037억31백만원으로서, 금융위 본부(160억78백만원), 금융정책사업비*(792억52백만원), FIU사업비(53억60만원), IBRD차관 원리금상환금(30억41백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 금융정책 사업비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669억4백만원), 역모기지론 출연(70억원), 금융전문대학출연(20억원), 모기지론 이차보전(16억39백만원), 금융시스템 시스템선진화(10억78백만원), 정책연구개발(6억3천만원)등으로 구성
- 금번 청사이전 과정에서 지출한 경비는 총 14억25백만원으로서 주로 금융위 본부예산을 집행하였는바, 주요 지출내역은
 - 이사비용 및 사무실 재배치 공사 등 356백만원, 사무실 등 임차료 297백만원, 집기 등 구입비 133백만원, 통신시설 관련 경비 500백만원 등임

청사이전 관련 경비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경비 소요 부문	집행액	총집행액 대비비율	비 고
계	1,425	100	
이사비용	31	2.2	
사무실재배치공사 등	325	22.8	
사무실 임차료 등	297	20.8	사무실(281), 차량(16)
집기 등 구입비	133	9.3	책상, 의자, PC 등
통신시설 관련	500	35.1	전화시설, 전산실 이전, 전자회의시스템, 메신저 도입 등
기 타	139	9.8	인건비, 무인경비시스템 등

* 세부집행내역 : <별표 1>

- 감사결과, 청사이전 기본계획 수립·관련업체 선정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업무용 차량 운영, 국외출장비(숙박비), 정부구매카드 사용** 등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음

① 업무용 차량운영의 불합리

《지적사항》 (또는 우수사례)

- 신설된 금융위는 구 금감위보다 인원수가 대폭 증가하고 (80→155명, FIU제외), 업무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업무용차량 소요가 증가**
 - 금감원장을 겸직했던 구 금감위원장은 금감원의 차량을 사용했었으나, 금융위 출범에 따라 금감원장 직위가 분리되어 **금융위원장 전용차량 소요가 신규로 발생하였음**
 - 또한, 금융위는 소관법률은 많아서(45개) 관련부처 및 국회 등과의 잦은 업무협약이 발생하는데, 단독청사에 입주해 있는 관계로 차량소요가 증가

○ 그러나, 구 금감위는 업무용차량을 2대(부위원장, 일반업무용)만 운영했고, 구 재경부(금융정책국)는 업무용 차량이 없었으므로 증가된 차량 소요에 비하여 운영차량 수는 적었음

- 이런 관계로 금융위는 조직개편 직후 업무용차량 6대를 신규로 추가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음

업무용차량 운영현황

(단위 : 대)

종 전(구 금감위)				변 경(금융위)			
대형	중형	소형	계	대형*	중형	소형	계
1		1	2	3	4	1	8

* 대형(3대)는 위원장·부위원장·외빈의전용

○ 한편, 공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 제5조는 차종 및 차형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면서, 일반업무용차량에 대해서는 1,600cc 이하로 운영(동규정 별표1)토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금융위는 특수업무용(외빈의전 등)으로 중형차량 4대를 신규로 임차했으나 실제운영의 대부분을 일반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일반업무용차량은 1,600cc 이하로 운영토록 하고 있는 규정과 배치됨

《조치할 사항》

○ (시정요구, 표창상신 등)

② 기타 예산집행의 불합리

〈지적사항〉 (또는 우수사례)

○ 공무 국외출장 경비지급 부적정

-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제16조④항은 국외 공무출장을 함에 있어서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예산집행 서류를 조사('08.1~5월분)한 결과, 한·캐나다 FTA협상(3.25~29)을 위한 국외출장시 항공기에서 1박을 하는데 그 숙박비(\$95)를 지급하였고, 한·인도 CEPA협상(4.1~4)을 위한 국외출장시에도 항공기에서 1박을 하는데 숙박비(\$95)를 지급한 사실이 있었음

○ 정부구매카드 사용시 관련지침 이행 불철저

- 예산집행지침(기획재정부)은 정부구매카드 사용시 카드사용영수증에 실명으로 서명하도록 하고 있고('08년부터 시행), 업무추진비 집행 시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예산집행 서류를 조사('08.1~5월분)한 결과,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면서 카드영수증에 실명서명을 한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 '소속부서명' 또는 '금융위' 등으로 서명을 하고 있었음
- 또한 업무추진비 집행 시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 대부분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있었으나, 1.17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 관련 업무추진비를 집행(995,000원)함에 있어서는 주된 상대방 소속·성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라고만 기재한 사실이 있었음

o 예산 지출과목의 부적정

- 일과 전·후 직무수행으로 인한 식사비용은 특근매식비(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함이 타당한데도 혁신행정과는 211일 아침 학습동아리(외 부강사 초빙 모닝클래스 : 김&장 정성구 변호사)를 마친 후 조찬비용(76,000원)과 5.13일 저녁 직원친절 교육 후 석식비용(73,000원)을 일반수용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

o 수당지급의 부적정

- 5급에서 4급으로 승진('07.10.24)하면서 대우수당 지급사유가 소멸한 공무원에 대하여 전산오류로 '07.12월부터 '08.5월까지 대우수당이 매월 지급(6회, 703,640원)된 사실이 발견되었음
- '07.12~'08.2월분은 구 재정경제부에서, '08.3~5월분은 금융위에서 지급

〈조치할 사항〉

- o (시정요구, 표창상신 등)

〈별표1〉

청사이전 관련 경비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세부 사업	예산과목	'08예산 현액 (A)	집행액(B)*		집행률 (B/A×100)(%)
계		2,693,330	1,424,557		52
소계		2,137,330	1,091,779		51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950,900	이사비용	31,359	15
			사무실 파티션 작업 등 ¹	78,000	
			전산실 이전 인건비 등	22,062	
			네트워크 공사 인건비 등	8,984	
			전자메일 라이선스 구입	2,200	
			소계	142,605	
	임차료	475,986	사무실 임차료	280,786	62.5
			차량 임차료(3~5월)	16,547	
			소계	297,333	
	시설장비유지비	211,823	통신시설 유지보수비 등	223,305	105
	시설비	339,325	사무실 이전 재배치 공사	246,699	87
			사무실 이전 전기공사	33,000	
			금융위회의실 음향설비	10,230	
			무안경비시스템 설치비	5,868	
			소계	295,797	
	자산취득비	159,296	사무용 집기, pc 등 구입	132,739	83
정보화 지원사업	소계	556,000	332,778		60
	일반수용비	9,650	-	-	
	연구개발비	193,000	메신저시스템 신규 도입 등	55,800	29
	자산취득비	353,350	전산실 이전	195,938	78
			정책고객관리서버 도입	15,967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49,060	
			메신저시스템 신규 도입	16,013	
			소계	276,978	

*집행액은 청사이전과 관련된 비용만 기재

〈별표2〉

공용차량 운영 현황

(단위 : 천원)

차종 (차량번호)	기사	임대 (구입)일	임대료 (월)	연료	유류비(월)						용 도	월평균 주행 (km)
					1월	2월	3월	4월	5월	계		
에쿠스 35허7871		08.03.06	1,485	휘발유			843	776	778	2,397		2,324
체어맨 47허2026		08.04.04	1,058	휘발유			642	900	658	2,200		1,885
그랜저 35허7929		08.03.11	677	LPG			161	139	68	368		845
SM5 35허7972		08.03.19	580	LPG			116	195	200	511		1,062
SM5 35허7959		08.03.14	580	LPG			115	196	200	511		1,257
SM5 35허5560		08.03.14	580	LPG			10	194	230	434		1,112
SM5 35허7958		08.03.14	580	LPG			199	202	235	636		1,385
아반떼 01모7285		04.04.20	14,040	휘발유			192	163	277	632		1,013
계							2,278	2,765	2,646	7,698		

나. 물품 관리 실태

[1]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정부조직개편으로 새로이 출범한 금융위는 구 금감위보다 조직 규모가 확대되어 보유물품 수량 및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물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
 - 이에 따라 새로 보유·운용하게 되는 물품의 관리상태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감사대상으로 선정
- 감사 범위는 소수의 감사인력으로 물품관리 업무 전체를 조사하기에는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어
 - 물품의 재고관리, 관리기관 설치, 재물조사 등 물품관리법상의 기본 규정 준수 여부를 감사범위로 한정함

<2008년도 금융위원회 수시재물 조사 현황>

(’08.5월 현재, 단위 : 원)

합계	관리대장계	실사계	활용대상	불용대상	
				사용가능품	사용불가능품
수량	1,482	1,482	1,218	193	71
금액	801,607,532	801,607,532	701,274,952	94,947,780	5,384,800

[II]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 '07년~'08년 물품수급계획서, 수시재물조사결과표, 물품관리대장을 제출받아 물품수급계획의 수립여부 및 내용, 정기재물조사의 실시 및 결과 등을 서면으로 먼저 감사하고
- ☐ 물품관리대장과 실제 물품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과를 방문하여 관리대장과 대조하며 실지 감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였음
- ☐ 실지감사는 재물조사표상 1,482개 물품을 전수조사 하기에는 시간과 감사인력 등의 여건이 충분치 않아
 - 식별이 용이하고 비교적 고가의 사무기기인 복사기와 노트북을 선별하여 시행하였음

[III] 감사 결과

- ☐ 서면감사 결과 물품수립 계획 및 정기 재물조사는 관련 규정에 의거, 연1회 수립·집행되었고
 - 조달청의 「정부조직 통폐합 기관의 재물조사 실시」 요청('08.4.28)에 따라 수시재물조사를 실시, 재물조사표가 조달청에 통보('08.5.22)된 사실을 확인하였음

《지적사항》 (또는 우수사례)

- ☐ 현재 금융위는 총 28대의 노트북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리대장에는 7대만 기재되어 있고

- 조직개편 이후 추가 구입한 노트북 19대와 구 재경부에서 이관된 노트북 5대 중 2대가 미기재 되어 있는 등 총 21대가 미기재 되어 있음

<물품관리대장 미기재 노트북 현황>

구 분	대 수	실지 관리과
금융위 회의용	19	의사운영정보팀
구 재경부 이관	1	시장분석과
	1	글로벌금융과
미기재 총계	21	

《조치할 사항》

- (시정요구, 표창상신 등)

다. 비정규직 운영 실태

〔Ⅰ〕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구 재경부(금융정책국, FIU)와 구 금융감독위원회는 비정규직을 각각 11명, 14명 등 총 25명을 운영해 오고 있었던 바,
 - 두 기관의 통폐합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처우는 없었는지, 두 기관의 비정규직 운영(근무조건, 급여, 4대보험 등)에 있어서의 차별적인 요소는 없는지,
 - 조직개편 직후 신규채용(8명)의 필요성·절차 등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점검 필요가 있었음

〔Ⅱ〕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비정규직 운영 기본계획 수립여부, 채용절차 및 방법, 예산 현황 및 보수체계 등을 감사대상으로 하면서,
 - 특히, 비정규직(총 31명) 중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무보조원(21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
- 감사방법은 근로계약서·관련 예산서 및 급여지급서·4대보험료 납부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 서류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했으며,
 - 관련서류 점검 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인사담당자의 설명을 듣는 방식을 취했으며, 필요한 통계는 별도 작성을 요구하기도 했음

【Ⅲ】 감사 결과

□ 비정규직 관련 서류를 점검한 결과, 금융위 본부는 비정규직 운영에 관한 기본지침인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07.9.27, 금감위 제정) 비정규직을 운영하고 있으나,

○ FIU는 본부와 달리 근로계약서에 따라 운영하고 있음

□ 현재 비정규직은 총 31명으로서, 속기사·YP·에디터·사무보조원·운전원 등으로 구성

○ 조직개편 이후 2명* 퇴직, 8명 신규채용으로 6명이 순증 되었음

* 1명은 금감원 취업, 1명은 건강상 이유로 퇴직

- 이는 조직규모 및 업무범위 확대로 사무보조원 2명, 공용차량 증설에 따른 운전원 4명 등 신규 추가소요가 발생한 것에 기인

구 분	인원 수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속기사	2	의사운영팀, 위원회 속기업무
YP	1	금융정책과, 규제개혁 업무
에디터	3	금융정책과, FIU(2명), 영문 교열
운전원	4	업무용차량 운전
사무보조원	21	각과 및 비서실, 사무보조
계	31명	

□ 비정규직 신규채용시 홈페이지에 모집공고 후 공개적으로 채용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는바, 신규채용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4대보험의 경우도 관련 법령에 따라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음

○ 다만, 금융위 본부와 FIU와의 보수체계 상이 및 보수수준의 불균형이 있었음

□ 본부와 FIU의 사무보조원의 보수체계를 비교해 보면

- 본부소속 비정규직의 보수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금융위 훈령)에 근거하여 근속연수별 연봉표에 근거한 기본연봉에 더하여 정근수당·성과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 *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비례하여 지급비율이 상향(월봉의 100%까지)되며, 성과급은 최대 80만원까지 지급
- FIU소속 비정규직의 보수는 근로계약서에 연봉을 명시하고 매년초 연봉 재계약을 하며, 정근수당과 성과급은 없음
 - * 구 재경부(금융정책국) 소속이었다가 금융위 본부로 소속이 바뀐 직원은 본부 보수체계로 운영
- 시간외수당 지급에 있어서도 본부는 시간외 근무를 월간 최대 15시간(시간당 8,092~8,680원* 최대 13만원)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 * 근로기준법에 의한 비정규직 시간당 보수 산출근거에 따름
- FIU는 월간 최대 20시간까지 시간외 근무를 인정 (시간당 5,000원, 최대 10만원)

□ 본부와 FIU 사무보조원의 보수수준을 비교해 보면

- 본부 신규직원('08년 채용)의 경우 연봉이 13.5백만원 수준에 이르는데 반하여, FIU의 '05년 채용자는 12.9백만원에 불과함

본부와 FIU 보수체계 및 수준 비교 (단위 : 만원)

구 분	보수 체계				연간보수 수준(채용연도별)				
	기본 연봉	정근 수당	성과 금	시간외 수당	'01	'04	'05	'06~7	'08
본 부	근무연수에 따라 상향 조정	근무연수에 따라 상향 조정 (월 봉 의 10~100%)	32~38	월 한도: 15시간 단가: 8,092~8,680원 최대지급: 월13만원	1,525	1,488	-	1,414	1,353
FIU		없음	없음	월 한도: 20시간 단가: 5,000원 최대지급: 월10만원	1,588	1,436	1,285	-	1,224

* 연간 보수수준은 시간외 수당, 성과급을 제외한 금액임

《지적사항》 (또는 우수사례)

- FIU가 소속기관이므로 독립성을 어느정도 보장한다 할지라도, FIU소속 비정규자의 근무환경·업무량·업무난이도·전문성 등이 본부 소속 비정규직과 특별한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현행과 같이 보수체계를 다르게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함

《조치할 사항》

- (시정요구, 표창상신 등)

<별표1>

비정규직(사무보조원) 연봉현황

(금액단위 : 천원)

연도	본 부				F I U		
	채용월	성 명	근무부서	연 봉*	채용월	성 명	연 봉
2001	7월		의사운영팀	15,248	5월		15,876
	11월		대 변 인 실	15,248	7월		15,876
2002	-		-	-	6월		15,876
2003	6월		중소서민과	14,998	-		-
	7월		혁신행정과	14,998			
	11월		구조개선과	14,998			
2004	12월		사무처장실	14,877	12월		14,364
	12월		금정국장, 서비스국장	14,877			
2005	-		-	-	5월		12,852
2006	7월		보 험 과	14,139	-		-
	11월		정책홍보팀	14,139			
	12월		공정시장과	14,139			
2007	3월		법무담당관	14,139	-		-
	4월		자산운용과	14,139			
2008	4월		위 원 장 실	13,530	7월		12,240
	4월		운전원	23,400			
	4월		운전원	23,400			
	4월		운전원	23,400			
	5월		증선위원실	13,530			
	5월		혁신행정과	13,530			
	5월		글로벌금융	13,530			
	5월		운전원	23,400			

* 본부 비정규직 연봉은 성과상여금이 미반영된 금액임

** 속기사 2명, 에디터:3명, YP 1명 등 6명은 제외함

<별표2>

2008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연봉표

☐ 사무보조원

(단위 : 원)

본 부				FIU
근무기간	기본급	정근수당	연봉액	연봉액
1년미만	1,127,500	미지급	13,530,000	연봉계약서에 따름
1년~2년	1,168,500	58,425 × 2회	14,138,850	
2년이상	1,209,500	120,950 × 2회 ~	14,755,900~	

* 1) 정근수당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 지급기준 준용

근무년수	월봉급액의 해당 지급률(연2회)	근무년수	월봉급액의 해당 지급률(연2회)
1년미만	미지급	6년이상 7년미만	30%
1년이상 2년미만	5%	7년이상 8년미만	35%
2년이상 3년미만	10%	8년이상 9년미만	40%
3년이상 4년미만	15%	9년이상 10년미만	45%
4년이상 5년미만	20%	10년이상	50%
5년이상 6년미만	25%		

2)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연봉외 급여로 성과급(별표 6) 지급 가능

3) 시간외 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 48시간 이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2008년은 최대 월 15시간 지급)

라. 정책연구과제 운영 실태

[I]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 정책연구용역은 국회 예·결산 심사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 ☐ 금융위 발족에 따라 기존에 수행한 용역결과물을 적정하게 운영·관리하여 향후 유사정책 수립이나 용역과제 선정에 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 '07년 이후 정책연구용역(구 재경부와 구 금감위에서 수행)의 「관리현황 및 활용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

< 2007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정책연구용역 현황>

(백만원)

구 재경부 금융정책국		구 재경부 금융정보분석원		구 금감위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7	553	4	133	3	88	24	774

[II]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 정책연구용역의 내용적 충실성 보다는, 관리실태 및 활용실태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
- ☐ 감사방법은 먼저 정책연구용역 국회 지적사항에 대해 '07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및 정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등을 통해 지적사항을 파악한 후 담당과를 방문하여 확인·점검하고

- 정책연구용역심의회철, 연구용역관리현황, 연구용역결과물 관련철을 제출받아 그 관리·활용이 관련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서면 점검했으며
- 현황(리스트)에서 과제 누락 및 PRISM 미등록과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대면하여 확인했음

[Ⅲ] 감사 결과

- 용역과제선정은 정책연구용역심의회에서 과제의 중복여부, 계약방법 및 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 '07.6월 국회 결산 심사시 정무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당초 계획과 다른 용역사업은 문제가 있으므로 자체 '정책연구용역심의회'를 거쳐 차년도 용역과제를 선정하여 용역과제의 변경을 최소화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 담당과에서 '09년 예산 확정전에 자체 '정책연구용역심의회'를 거쳐 용역과제를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과제의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음
- 용역대금결제 부분을 점검한 결과 납기를 준수하고 있고, 하자 검수부분을 점검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정책연구용역예산의 이·불용을 점검한 결과 '07년 용역과제 24건중 2건만 이월되었으며, '08년 용역예정과제 약 20건도 이월 또는 불용 비율이 낮을 것으로 전망
- 다만, 조직개편에 따라 금융위가 신설된 관계 등으로 현황관리 및 PRISM 미등록 등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음

《지적사항》 (또는 우수사례)

- 정책연구용역 현황을 각 과로 부터 받아본 결과, 2개부서(△△과, △△△과)가 '07년 수행과제 24과제 중 3과제를 리스트에서 누락했으며
- '08.6.24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PRISM)을 통해 등록 현황을 점검한 결과, 24과제 중 13과제만 등록되어 있고 △△△과, △△△과, △△△과, △△△과, △△△과 등에서 11과제를 등록하고 있지 않았음

《조치할 사항》

- (시정요구, 표창상신 등)

2007년도 금융위원회소관(재정부 및 금감위) 정책연구용역 현황

과 명	과	제	명	계약자	계약 방식	기간	계약금 (천원)	현황	특정 여부	
구	금	정	정	어음제도 개선방안 연구	수의	07. 2. 9 - 5. 8	14,250	x	○	
				금융산업 선진화에 대한 의견 조사	수의	07. 7.25 - 8.24	28,500		x	
				소비자금융현황 및 제도화 방안	수의	07. 8. 3 - 11. 2	23,750		x	
				금융법령·법규 영문화	수의	06.12.11 - 5.10	150,000		x	
				금융시장 현황지표 산출과정 자동화프로그램 개발	수의	07. 6.26 - 8.25	19,000		x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방안 연구	수의	07. 9.21 - 12.20	28,500		○	
				국민소득 2만불시대 금융의 역할	수의	07.10.19 - 12.18	28,500		x	
				해외단기 금융시장 제도에 관한 연구	수의	07.10.12 - 12.11	28,500		x	
				홍콩사례를 중심으로 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해외진출 전략 모색	경쟁	07.10.26 - 12.11	38,000		x	
				해외사례분석을 통한 은행지배구조 개선방안	경쟁	07.10.29 - 12.13	28,500	x	○	
				금융업의 직무와 업무수행 역량 분석	경쟁	07.11.2 - 12.17	19,000		x	
				뉴욕 런던시 등의 금융클러스터 조성사례의 정책적 시사적 연구	수의	07.11.5 - 12.20	33,000		○	
				장외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	수의	07.11.15 - 12.20	25,000		x	
				금융허브 육성을 위한 금융관련 행정의 국제화 방안 연구	수의	07.11.19 - 12.24	29,000		x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경쟁	07.11. 7 - 12. 7	7,800		○	
				구	FIU	금	위	계	주요선진국의 금융인프라 관련 제도현황 연구	수의
아시아 전자금융시장 분석과 한국 기업의 진출 전략	수의	07.12.20 - 08.2.19	30,000						x	x
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경쟁	07. 7.30 - 12.14	33,200							○
역외금융기관, 역외 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 유형 및 대응방안	경쟁	07. 9. 5 - 12.20	38,000							○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에 대응한 자금세탁 방지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경쟁	07.10. 5 - 12.20	28,500							○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경쟁	07.10. 5 - 12.20	33,000							○
우리나라 회계관련 제도의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	수의	07.10.19 - 08.3.4	45,000							○
펀드판매망(채널) 선진화 방안	수의	07. 9. 7 - 12.20	21,000							○
기업상장제도의 국제적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수의	07. 7.24 - 10. 8	22,000							○
									773,800	

라. 감사원 처분요구 이행실태 (중소기업 신용보증 제도)

〔Ⅰ〕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감사원 처분요구 이행실태는 향후 감사원의 기관감사, 특별감사* 등에서 주요 점검대상이 되므로 사전 자체감사의 필요성이 높은 영역임

* '07.3월 감사원은 「재정·금융분야 감사결과조치 이행실태」 감사실시

- '07년 이후 우리 위원회(舊 금감위, 재경부 금융정책국 포함)에 대한 감사원 감사 대상은 「중소기업 보증지원 실태」 등 5개 부문*

* 중소기업 보증지원 실태, 특정업무 경비집행, 문서보안 실태, 공무국외여행 경비집행, 금융법규 영문화사업 사후관리

- 이중 최근 5년간 감사원 처분요구가 가장 많았던(8건) 산업금융과 소관의 「중소기업 보증지원 실태」 부문에 대하여 표본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 부서에 전파하여 참고토록 함

〔Ⅱ〕 감사방향 및 방법

- 감사원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 내용보다는 조치여부 및 조치 절차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보완하도록 함

- 조치계획을 수립한 경우 동 계획대로 정책을 추진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지 여부를 점검

- 감사 방법으로는 우선 감사대상부서(산업금융과)로부터 조치 결과·계획 및 관련자료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검토하고,

-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담당자 면담 및 유관기관(신·기보 등)으로부터의 자료 수집 등을 통해 보완

(Ⅲ) 감사 결과

□ 산업금융과는 감사원의 6개 처분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1개사항) 및 조치 계획(5개 사항)을 회신

○ (조치 결과) 보증부 대출금의 용도와 유용(부동산 매입 등)
방지를 위한 신·기보 업무 지도·감독 강화 요구에 대하여

- 신·기보가 보증금을 회수토록 하고 금감원 등 지시로 은행이
보증부 대출금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음을 조치결과로 회신

○ (조치계획) '총 보증규모 적정관리' 등 5개 사항*에 대하여

* ①총 보증규모 적정관리 ②장기보증이용기업 보증축소 ③중복보증 해소
④기술평가보증제도 합리적 운용 ⑤보증연계투자 폐지 등 방안마련

- 신·기보 공동발주 용역결과를 참고하여 금년 중 정부
정책에 반영 예정임을 조치계획으로 회신

□ 이밖에도 조치결과 및 계획 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하였거나
추진예정임

○ 신·기보 보증부 약정서 개정(신·기보 사후관리 업무 감독강화),
보증업무 선진화방안에 대한 공개토론회 개최예정
(조치계획에 따른 정책수립 절차상 객관성 확보) 등

□ 따라서 당초 감사기준으로 설정했던 조치실시 여부 및 절차상
문제점 측면에서 지적사항은 발견되지 않음

3. 지적사항별 조치내역

일련 번호	지 적 내 용	조치구분
1	업무용 차량 운영의 불합리	시정
2	국외출장시 숙박비 과다 수령	현지조치
3	정부구매카드 실명서명 미이행 및 업무추진비 건당 50만원 초과집행시 상대방 인적사항 기재 불철저	현지조치
4	직원교육 전·후 식비 지출과목의 부적정	현지조치
5	대우수당 지급의 부적정	현지조치
6	재물조사 실시 불철저	시정
7	정책연구용역과제 관리 미흡	현지조치

4.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제14조에 따라 소관부서에 통보
하여 적의 조치토록 요구

2. 2008~현재 감사원처분요구서, 집행전말서

□ 우리위원회 설립(08.3월) 이후 외부(감사원)감사결과는 '해당 사항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원이 09.5.28 ~ 7.17까지 금융위원회에 대해 실시한 감사결과는 감사원이 내부절차를 거쳐 처리중에 있음

- 3-1. 2010년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예산안 설명자료

3-2. 금융위 출범 이후 발주한 연구용역 목록, 수주처,
발주금액

□ 2010년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예산안 설명자료 : 기재출

□ 금융위 출범 이후 발주한 연구용역 목록, 수주처, 발주금액
: 붙임참조

<붙임>

정책연구용역 발주현황(2008~현재)

□ 2008년 정책연구용역 목록

(단위 : 백만원)

과 제 명	용역기간	용역비	수행기관
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연구용역	08.7.4~08.10.3	30	한국금융연구원
외환시장 발전방향	08.7.11~08.8.29	19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미국 FinCEN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실태 연구	08.7.22~08.12.21	40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08.7.28~08.10.26	30	한국금융연구원
FTA, DDA 등 금융서비스분야 국제협상 법률적 검토 연구용역	08.8.1~08.12.24	40	법무법인(유) 태평양
단기금융시장 제도 개편에 따른 시장영향 분석	08.8월~08.9월 (2개월)	20	한국금융연구원
서브프라임사태이후 금융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개선 연구용역	08.8.6~08.11.4	46	(사)국제금융센터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 수준 제고를 위한 감독 검사 효율화 방안	08.8.13~08.12.12	40	언스트앤영 드바이저리(주)
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08.7.28~08.11.20	22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개편	08.10.31~08.12.20	29.5	(주)사이버이메 지네이션
비명시적규제 개혁 외부평가	08.11.27~08.12.26	25.1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금융중심지 선정에 관한 금융전문가 의견 조사	08.12.12~08.12.29	19	한국개발연구원

□ 2009년 정책연구용역 목록

(단위 : 백만원)

과 제 명	용역기간	용역비	수행기관
금융상품 판매제도 도입에 따른 불완전 판매 방지방안	09.4.13~	30	자본시장연구원
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방안	09.3.16~12.15	45	한국금융연구원
국내 자본시장-외환시장 연계성 증가의 파급 효과 분석	09.6.1~8.31	20.5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위기 이후(Post-Crisis) 대비 금융감독체제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09.6.10~	40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수도권 광역금융벨트 조성 방안	09.5.13 ~	30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위탁보증 제도 개선방안 연구	09.6.1~8.3	28.8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 등 금융부문별 노동력 특성 분석 및 수급 전망	09.4.21~8.28	30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금융위기의 원인분석 및 시사점분석	09.7.16~10.15	35	한국금융연구원
금융투자산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09.8.5~12.2	32	자본시장연구원
테러자금조달 방지 체제의 선진화-국제화 방안 연구	09.8.28~12.31	35	아주대 산학협력단
금융위기이후 한국의 자본시장시스템 설계 방향	09.9.16~11.15	20	자본시장연구원

4. 산하위원회 설치 현황

- 명칭, 설치이유, 법적근거, 주요활동사항, 구성원 인적사항
- '08~현재 회의개최 실적

A. 공자위

☐ 명칭 : 공적자금상환기금운용심의회

☐ 설치이유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법적근거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 10조

☐ 주요활동사항 :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등 기금 운용·관리 사항

☐ 구성원 인적사항

○ 금융위 부위원장(위원장) 포함 위원 8인(당연직 6인, 민간위촉 2인)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당연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
"	추경호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	김용환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	이광준	한국은행 부총재보
"	조인제	예금보험공사 이사
"	권경성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사
위촉	안수현	외국어대 법대 교수
"	이용모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 '08년~현재 회의개최 실적

일자	안 건
08.2.15	· 2007회계연도 공적자금상환기금결산
08.6.30	· 2009회계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운용계획
08.7.5	· 2009회계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운용계획
08.9.29	· 2008회계연도 공적자금상환기금운용계획 변경
09.2.13	· 2008회계연도 공적자금상환기금 결산 심의
09.3.17	· 2009회계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
09.6.23	· 2010회계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운용 계획

[참고 1]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10조(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한다.

B. 공정시장과

□ 감리위원회

- 설치이유 : 증선위 업무보조를 위한 전문심의기구
- 법적근거 :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23조, 제25조
- 주요활동사항 : 회계감리 대상 선정, 감리결과 조치, 이의신청, 직권재심 등에 관한 사전 심의
- 구성원 인적사항 : 당연직 4인, 위촉직 5인

성격	성 명	소속/직위
당연	김주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당연	홍영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당연	김호중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
당연	원정연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위탁감리위원장
위촉	박재환	중앙대학교 교수
위촉	전영순	중앙대학교 교수
위촉	박순철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
위촉	오승돈	한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위촉	궐석	

- 08~현재 회의개최 실적 : 08년 6회, 09년 현재 6회 개최

□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 설치이유 : 불공정거래 조사 및 공시심사 결과에 대한 조치안을 증선위에 상정하기 전에 사전심의하기 위한 증선위 자문기구
- 법적근거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1조, 제22조

- 주요활동사항 :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처리, 이의신청·직권재심 등에 관한 사전 심의
- 구성원 인적사항 : 당연직 4인, 위촉직 3인
- 08~현재 회의개최 실적 : 08년 12회, 09년 현재 7회 개최

□ 회계제도심의위원회

- 설치이유 : 증선위 업무보조를 위해 설치된 증선위 자문기구
- 법적근거 :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23조, 제24조
- 주요활동사항 : 회계처리기준 수정요구, 회계감사기준 제·개정 승인, 실무의견서 등 회계제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사전 심의
- 구성원 인적사항 : 당연직 4인, 위촉직 7인

성격	성 명	소속/직위
당연	김주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당연	홍영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당연	주영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당연	김호중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
위촉	윤경식	한영회계법인 본부장
위촉	이병우	대한생명보험 상무
위촉	최외홍	삼성벤처투자 사장
위촉	조현연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
위촉	백복현	서울대학교 교수
위촉	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
위촉	안영균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 08~현재 회의개최 실적 : 08년 4회, 09년 현재 2회 개최

□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 설치이유 : 공인회계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
- 법적근거 : 공인회계사법 제6조의2
- 주요활동사항 : 공인회계사의 시험과목등 시험에 관한 사항, 시험선발인원에 관한 사항, 기타 공인회계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사항 심의
- 구성원 인적사항 : 당연직 3인, 위촉직 4인

성격	성명	소속/직위
당연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당연	추경호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당연	김광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위촉	정기영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위촉	윤승준	한양여자대학 교수
위촉	이정치	일동제약(주) 대표이사
위촉	정덕주	서해대학 교수

- 08~현재 회의개최 실적 : 08년 1회, 09년 현재 1회 개최

□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

- 설치이유 :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의결
- 법적근거 : 공인회계사법 제48조
- 주요활동사항 : 기획재정부장관이 요구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의결

○ 구성원 인적사항 : 당연직 5인, 위촉직 2인

성격	성 명	소속/직위
당연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당연	박수원	감사원 재정·조세감사국장
당연	권수철	법제처 경제법제국장
당연	주영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당연	홍영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위촉	정기영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부회장
위촉	김문철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

○ 08~현재 회의개최 실적 : 08년 1회, 09년 현재 1회 개최

C. 국제협력과

☐ 명 칭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 위원회 현황

- (설치이유)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의 수립, 추진상황 점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
- (법적근거)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6조
- (주요활동) 금융중심지 3개년('08~'10) 기본계획 심의, 금융중심지 지정 심의 등
- (위원) 민간위원 10인, 당연직위원 15인(명단 별첨)
- (개최실적)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구성('08.4) 이후 총 5회 개최

[첨부]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위원 현황, '09.9.30 >

구분	성명	현 직위	주요경력
민간 위원 (10인)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사장	동원금융지주 사장
	김승유	하나금융그룹 회장	하나은행 이사회 의장
	민상기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한국금융학회 회장
	양호철	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증권 한국지점 대표	동서증권 영업총괄본부장
	윤영각	삼성KPMG그룹 대표	삼성컨설팅 대표
	이수창	삼성생명 대표이사 사장	삼성화재 대표이사
	전성빈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금감위 비상임위원
	정계성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R.클렙코스키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학장	미국 인디애나대 교수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	한미은행장
당연직 (정부 6인)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수출입은행장
	권도엽	국토해양부 차관	한국도로공사 사장
	유영학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조정실장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한국개발원(KDI) 국제정책대학원교수
	임채민	지식경제부 차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정책조정실장
	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	재경부 국제업무정책관
당연직 (유관 기관 9인)	김동수	수출입은행장	기획재정부 차관
	민유성	산업은행총재	우리금융지주 부회장
	신동규	은행연합회장	수출입은행장
	이상용	손해보험협회장	한국은행 감사
	이성태	한국은행총재	한국은행 부총재
	이우철	생명보험협회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이정환	한국거래소이사장	한국증권선물거래소 경영지원본부장
	진영욱	한국투자공사장	한화손해보험 부회장
	황건호	금융투자협회장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D. 자체규제심사위원회

☐ 명 칭 :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

☐ 설치이유 및 법적근거

○ 행정기관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 자체 규제심사를 거쳐 규제위 심사를 받아야 함(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 이에 따라 금융위 자체규제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중

*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 운영규정(금융위원회 훈령)

☐ 주요 활동사항

○ 금융위원회 자체 규제심사 시행계획 수립

○ 금융위원회 소관 규제의 자체심사 실시

○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위원회 개최 실적

○ 금융위원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21차례('08년 11차례, '09년 10차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개최

☐ 금융위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위원 현황

구 분	성 명	소 속	비 고
내 부 (2인)	권혁세	금융위 사무처장	공동위원장
	조인강	금융위 기획조정관	당연직
외 부 (7인)	박재하	금융연구원 부원장	공동위원장
	홍우선	KIS 채권평가 사장	증권
	이태열	보험개발원 연구조정실장	보험
	김성용	성대 법대 교수	법률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
	이갑재	삼일회계법인 전문	회계
	전병준	매일경제 금융부장	언론계

E. 자본시장과

- ☐ 명칭 : 시장효율화 위원회
- ☐ 설치이유 :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거래비용 절감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해 설치
- ☐ 법적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4조
- ☐ 주요활동 사항 : 자본시장법에 설립된 기관 등이 수수료 등을 변경 하거나 100억원 이상의 전산에 투자를 할 경우 이에 대해 심의
- ☐ 구성원 인적 사항 : 총 7명

소 속	성 명
서울대 경영학과	조 재 호
법무법인 태평양	서 동 우
삼정회계법인 파트너	서 지 희
성균관대 정보통신공학부	정 태 명
홍익대 경영학부	신 성 환
단국대 경영정보학	오 재 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김 명 직

☐ 회의 개최 실적

- (08년) 총 6회 개최 / (09년~현재) 총 1회 개최

5-1. 최근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변동 현황

□ 시행령 변동

순번	법령명	구분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공적자금상환기금법시행령	일부개정	2008.02.29	2008.02.29
2	농어가목돈아려저축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8.02.29	2008.02.29
3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령	일부개정	2008.02.29	2008.02.29
4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일부개정	2008.02.29	2008.02.29
5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02.29	2008.02.29
6	공사채등록법시행령	일부개정	2008.07.29	2009.02.04
7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07.29	2009.02.04
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07.29	2009.02.04
9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07.29	2009.02.04
10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일부개정	2008.07.29	2009.02.04
11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008.11.11	2008.12.22
12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12.17	2008.12.17
1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04.06	2009.05.07
14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09.04.21	2009.04.22
15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05.06	2009.05.07
16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05.06	2009.05.07
17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05.06	2009.05.07
18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9.05.06	2009.05.08
19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9.05.29	2009.06.01
2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9.05.29	2009.06.01
21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9.05.29	2009.06.01
22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05.29	2009.06.01
2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05.29	2009.06.01
24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	일부개정	2009.05.29	2009.06.01
25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05.29	2009.06.01
26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05.29	2009.06.01
2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9.05.29	2009.06.01
28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05.29	2009.06.01
29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9.05.29	2009.06.01
3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9.05.29	2009.06.01
31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제정	2009.05.29	2009.06.01
32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06.09	2009.06.09
33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06.30	2009.07.01
3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9.07.01	2009.07.01
35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07.27	2009.07.28
36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9.07.27	2009.07.31

순번	법령명	구분	공포일자	시행일자
37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07.27	2009.07.31
3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9.08.05	2009.08.07
39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08.05	2009.08.07
40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9.08.06	2009.08.07
41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9.08.13	2009.08.13

□ 시행규칙 변동

순번	법령명	구분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공사채등록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03.03	2008.03.03
2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03.03	2008.03.03
3	금융실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03.03	2008.03.03
4	금융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08.03.03	2008.03.03
5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03.03	2008.03.03
6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03.03	2008.03.03
7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03.03	2008.03.03
8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03.03	2008.03.03
9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건시행세칙	일부개정	2008.03.03	2008.03.03
10	한국산업은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03.03	2008.03.03
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03.03	2008.03.03
12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08.04	2009.02.04
1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08.04	2009.02.04
14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08.04	2009.02.04
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2008.08.04	2009.02.04
16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08.04	2009.02.04
17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9.03.31	2009.03.31
18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9.03.31	2009.03.31
19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9.08.24	2009.08.24

5-2. 소송현황

□ 최근 5년간 소송처리 현황

< 연도별 소송사건 처리 현황¹⁾ >

(단위 : 건)

구 분	합계	취하	각하	국가승소	일부패소	국가패소	패소율
합계 (2005~'09.8월)	67	8	2	50	2	5	10.4%
2005년	12	5	-	7	-	-	-
2006년	15	2	2	10	-	1	6.7%
2007년	10	-	-	7	1	2	30.0%
2008년	24	1	-	20	1	2	12.5%
2009.1~8월	6	-	-	6	-	-	-

주, 1) 종결사건 기준(최종확정 판결, 화해결정 수용은 일부 패소로 간주하여 처리)

<참고>

현재 진행 중인 소송 현황

제기 년도	사건명	사건내용	소송담당	진행 내역
2006	시정조치처분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00000가 제재 과징을 주장	금감원 (비용없음)	1심: 승 2심: 승 3심: 진행 중
2006	인가취소 및 해산통보 처분취소	자본잠식 등을 이유로 인가 취소된 0000의 1명이 자본잠식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취소요구	법무법인 세종	1심: 승 2심: 패 3심: 진행 중
2006	손해배상	000이 산업은행 등에 대한 국가의 감독부실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금감원 (비용없음)	1심: 승 2심: 승 3심: 진행 중
2007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00000 외 1명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관련 금융비주력자 판단자료 제공 거부의 취소를 요구	금감원 (비용없음)	1심: 일부 패 2심: 진행 중
2008	해임요구처분 취소	금감원 퇴직자인 000 외 1명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조치 처분의 취소요구	정부법무 공단	1심: 금융위 패 2심: 진행 중

제기 년도	사건명	사건내용	소송담당	진행 내역
2008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로 제재를 받은 00000가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취소 요구	금감원 (비용없음)	1심: 승 2심: 진행 중
2008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자산양수도 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금융위 제재를 받은 00000가 적법요건 결여를 이유로 과징금부과 취소 요구	"	1심: 진행 중
2008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0000가 자산양수도 신고 불이행 등으로 증선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자 계약이 양해각서에 불과하다며 취소 요구	"	1심: 진행 중
2008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000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하지 않고 투자자를 모집하여 금융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자 본인이 투자자 모집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소 제기	"	1심: 진행 중
2008	손해배상(기)	000이 국가의 '희망모아 유동화전문회사'에 부실감독 책임을 몰어 손해배상 요구	금감원 (비용없음)	1심: 진행 중
2009	감리결과 조치 취소	000이 회계 부실감사로 증선위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자 소 제기	"	1심: 승 2심: 진행 중
2009	계약이전결정 제외 취소	000는 00상호저축은행 예금자로 5천만원이상 예금자에 대해 계약이전을 제외하는 결정은 불법이라며 소 제기	"	1심: 승 2심: 진행 중
2009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000이 상장법인의 신고·공시의무 위반 등으로 증선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 제기	"	1심: 진행 중
2009	정직조치요구처분 취소	000는 00증권(주) 00지점 과장으로 불공정거래 주문수탁금지 및 일임매매거래 제한위반으로 정직 조치를 받자 소 제기	"	1심: 진행 중
2009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000는 최대주주 변동과 관련된 신고·공시 의무위반으로 금융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자 소 제기	"	1심: 진행 중

6. 2008 예산의 연도말 전용감 액수 관련

- 지출액, 전용감액(11월 - 12월)
- 전용감 사유 명세

☐ 별첨 참조

○ 2008.예산의 연도말 전용감 관련(11월-12월)

(단위 : 백만원)

일자	전용 감액			지출액	전용감 사유
	예산 항목	금액	사업내용		
12월 09일	210(운영비) 260(연구개발비)	146	정보화 지원사업	146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사업 추진에 따른 자산취득비 부족액에 충당
12월 12일	350(출연금)	250	역모기지론 활성화 출연	250	모기지론이자보전 사업 부족액에 충당
12월 22일	210(운영비) 220(여비) 260(연구개발비)	66	기본경비 및 국제금융협력사업, 금융위원회 행정혁신	66	임차청사 관리비 부족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부족액에 충당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액에 충당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신설과 운영비 부족액에 충당
12월 22일	240(사업추진비)	15	국제금융협력사업 및 금융위원회 행정혁신	15	정부조직개편 관련 업무량 증가에 따른 기관운영비 부족액에 충당
12월 28일	110(인건비)	34	인건비	34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일용직 인건비 (일용임금 및 기타직보수) 부족액에 충당

○ 2008 결산 전용 관련

(단위 : 백만원)

일자	전용 금액			전용감 사유 명세		
	예산 항목	금액	사업내용	예산 항목	금액	사업내용
12월 09일	210(운영비) 260(연구개발비)	146	정보화 지원사업	430(기타운영자산)	146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사업 추진에 따른 자산취득비 부족액에 충당
12월 12일	350(출연금)	250	역모기지론 활성화 출연	320(출연금)	250	모기지론이자보전 사업 부족액에 충당
12월 22일	210(운영비) 220(여비) 260(연구개발비)	66	기본경비 및 국제금융협력사업, 금융위원회 행정혁신	210(운영비)	66	임차청사 관리비 부족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부족액에 충당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액에 충당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신설과 운영비 부족액에 충당
12월 22일	240(사업추진비)	15	국제금융협력사업 및 금융위원회 행정혁신	240(업무추진비)	15	정부조직개편 관련 업무량 증가에 따른 업무추진비 부족액에 충당
12월 28일	110(인건비)	34	인건비	110(인건비)	34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일용임금 및 기타직보수) 부족액에 충당

7. 8. 2008년~현재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안건 및 보고안건

□ 불임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불임 1. 「'08년 ~ 현재 금융위원회 안건 목록」
2. 「'08년 ~ 현재 증권선물위원회 안건 목록」

2008년 금융위원회 안건 목록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08년	3월21일	제1차 임시	의결 안건	1	금융감독원 원장 임명 제청안
2008년	3월24일	제2차 임시	의결 안건	2	(전북)현대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안
2008년	3월28일	제1차	의결 안건	3	금융감독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증권선물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에르고 인터내셔널 아게의 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주) 대주주 승인안
				6	에이아이지 유나이티드 개런티 인슈어런스 아시아 리미티드 한국지점 보험업 허가안
				7	그린화재해상보험(주)의 (가칭)그린부산창업투자(주)에 대한 자회사 소유 승인안
				8	우리금융지주(주) 및 아비바 인터내셔널 홀딩스 리미티드의 LIG생명보험(주) 대주주 승인안
				9	우리금융지주(주)의 LIG생명보험(주) 자회사편입 승인안
				10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안
				11	2007회계연도 예금보험공사 결산승인안
				12	(가칭) 라자드코리아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13	(가칭) 엘라이언스벤처스타인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14	(가칭) 블랙록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15	오영수의 KIDB채권중개(주) 대주주 변경 승인안
				16	현대자동차(주) 등의 신흥증권(주) 대주주 변경 승인안
				17	밸류에프투유한회사의 리딩투자증권(주) 대주주 변경 승인안
				18	동양종합금융증권(주)에 대한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겸영인가안
				19	SK증권(주)에 대한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겸영인가안
				20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에 대한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겸영인가안
				21	유비에스증권리미티드 서울지점에 대한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겸영인가안
				22	노무라인터내셔널증권 서울지점에 대한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겸영인가안
				23	(서울)제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보고 및 조치안
				24	(부산)우리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보고 및 조치안
				25	(전남)홍익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보고 및 조치안
				26	(경북)참앤씨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보고 및 조치안

연도	월일	회차	안전 유형	번호	제 목
				27	국민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8	(사)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보고 안전	1	위탁업무처리결과 보고(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 개정)
				2	금융기관 검사결과 보고
				3	2007년도 하반기 중 금융회사의 업무위·수탁 현황보고
				4	경북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결과보고
2008년	4월11일	제2차	의결 안전	29	금융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0	한국산업은행 임원선임안 (현장배포)
				31	법인대리점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32	(주)러브벨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33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34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처리안
				35	(충남)대성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요구조치안
				36	휴면예금관리재단 정관 인가안
				37	(가칭)아이엠엠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38	(가칭)LS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39	(가칭)더커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40	예금보험공사정관 일부개정정관 승인안
			보고 안전	5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6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결과 보고
				7	금융기관 검사결과 보고
				8	(주)삼성카드 및 (주)삼성증권의 (주)가치네트 주식 초과보유 사후승인 신청건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
				9	선물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1	대우캐피탈(주)의 (주)기보캐피탈 주식 취득 승인안
				42	(주)두산캐피탈의 비엔지증권중개(주) 주식 취득 승인안
				43	(전북)한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보고 및 조치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08년	4월25일	제3차	의결 안건	44	(부산)양풍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보고 및 조치안
				45	국내은행 해외지점 등 신설에 대한 사전협의 및 자회사업종 인정안
				46	금감원,주택금융공사 '07회계연도 결산심의소위원회구성(안)
				47	증권예탁결제원 정관 일부변경 승인안
				48	하나대투증권(주) 고정역지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49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안
				50	예금보험공사 임원 연임임명(안)
2008년	5월9일	제4차	의결 안건	51	「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52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53	동부생명보험(주) 부문검사 결과 과태료 부과 조치안
				54	동양생명보험(주) 부문검사 결과 과태료 부과 조치안
				55	한국투자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56	동양종합금융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57	(가칭)SC제일투자증권(주)의 증권업 예비허가 및 SC제일은행의 (가칭)SC제일투자증권(주)에 대한 주식소유승인안
				58	(가칭)LIG투자증권(주)의 증권업 예비허가 및 LIG손해보험(주)의 (가칭)LIG투자증권(주)에 대한 자회사 소유승인안
				59	(가칭)스카이증권중개(주)의 증권업 예비허가 및 스카이투자자문(주)의 (가칭)스카이증권중개(주)에 대한 출자승인안
				60	(가칭)IBK투자증권(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61	(가칭)KTB투자증권(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62	(가칭)STX투자증권(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63	(가칭)토러스투자증권(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64	(가칭)한국씨티증권(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65	(가칭)KTIC투자증권(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66	(가칭)바로증권중개(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67	(가칭)외우증권중개(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68	(가칭)ING증권중개(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69	(가칭)리먼브러더스증권(주)의 증권업 예비허가 및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널증권 서울지점과의 영업양수도 예비인가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08년	5월23일	제5차		70	(가칭)흥국증권(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71	(가칭)BNP파리바증권(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72	금융감독원 정관 일부변경 승인안
				73	한국산업은행 정관 일부변경 승인안
				74	한국개인신용(주) 및 (주)디앤비코리아의 상호변경 허가안
			보고 안건	10	2008년도 1/4분기중 금융거래약관 등의 처리결과 보고
			의결 안건	75	(경기)분당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및 영업인가 취소 등 조치안
				76	밸류에프원유한회사의 (서울)영풍상호저축은행 주식 취득 승인안
				77	씨티크레딧서비스(주)의 신용정보업 영위 허가안
				51	「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52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78	키움증권(주)의 키움인베스트먼트(주) 주식 취득 승인안
				79	(가칭)에이아이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80	(가칭)현대스위스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81	마이애자산운용(주)의 허가조건 변경 승인안
				82	대한생명보험(주)의 신탁업 영위 및 겸영 인가안
				83	흥국생명보험(주)의 신탁업 영위 및 겸영 인가안
				84	2007회계연도 금융감독원 결산승인안
				85	2007회계연도 주택금융공사 결산승인안
				86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제정안
				87	하도버재보험(주) 한국지점의 보험업 허가안
				88	우리은행의 이의신청사항 심의안
				89	리먼브러더스뱅크하우스 서울지점의 결산일 변경 승인안
			보고 안건	11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2	2007년중 「금산법상」 초과소유주주에 대한 초과소유요건 심사결과
				13	2008년 1/4분기중 은행의 신용공여한도 초과 발생현황 보고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14	'08. 1/4분기중 종합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융위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2008년	5월26일	제3차 임시	의결 안건	90	금융감독원 부원장 임명안
2008년	6월16일	제6차	의결 안건	86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제정안
				90	영진약품공업(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
				91	(가칭)엠플러스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92	(가칭)에셋플러스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93	(가칭)라자드코리아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94	(가칭)아이엠엠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95	신한은행 및 신한생명의 (가칭)신한국민연금제2호사모투자전문회사 주 식소유 승인안
				96	교원나라자동차보험(주)의 화재보험 등 6개 보험종목에 대한 보험업 허 가안
				97	흥국생명보험(주)의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주) 대주주 승인안
				98	법인대리점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99	금호생명보험(주) 종합검사 결과 과태료 부과 조치안
				100	(가칭)강원랜드신용협동조합 설립 인가안
				101	(서울)HK상호저축은행의 (부산)동광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102	(서울)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03	(제주)으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요구 조치안
			보고 안건	1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16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정안
				1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예금보험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보유자산 매각절차 보고
				19	2008년도 제6차 증권선물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권한위임사항(회계관 련) 처리결과 보고
				104	중소기업은행 임원 임명안
				105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106	한국공인회계사회회칙 일부개정회칙 승인안
				107	(주)케이씨오에너지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08년	6월27일	제7차	의결 안건	108	선물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09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선물시장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10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선물시장수탁계약준칙 일부개정규정안
				111	증권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12	(주)두산캐피탈의 비엔지증권중개(주) 대주주변경 승인안
				113	엔에이치투자증권 수원지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14	(가칭)KB금융지주회사 설립 예비인가안
				115	하나금융지주의 코먼웰스비즈니스은행 자회사편입 이행기간 연장 승인 안
				116	(대전)한발신용협동조합과 (대전)동대전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가안
				117	(제주)늘푸른신용협동조합과 (제주)제광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가안
				118	삼성생명보험(주)의 미삼성라이프인베스트먼트(주)에 대한 자회사 소유 승 인안
				119	(주)한화건설 등 5개사의 제일화재해상보험(주) 대주주 승인안
			보고 안건	20	행정지도 존속기한 연장보고
				21	2008년도 1/4분기중 전자금융업 등록(등록말소) 및 전자금융거래 악관 처리 결과 보고
			의결 안건	120	금융감독원 부원장 임명안
				121	(전북)현대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결정 및 영업인가 취소 등 조 치안
				122	(전북)현대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
				123	(경남)경남자동차정비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
				124	(서울)면곡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
				125	(부산)부산택시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
				126	(주)뉴월드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27	(주)한국금융채널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28	동부화재해상보험(주)의 동부증권(주)에 대한 자회사 소유·승인안
				129	(가칭)메리츠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 (가칭)메리츠자산운용과 메리츠종합금융(주)과의 자산운용업 영업양수도 및 메리츠종합금융(주)
				130	(가칭)블랙록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131	(가칭)더커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08년	7월11일	제8차		132	(가칭)RG에너지자원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133	(가칭)GS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134	신영증권(주)의 신탁업 예비인가안
				135	유진투자증권(주)의 신탁업 예비인가안
				136	메리츠증권(주)의 신탁업 예비인가안
				137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38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39	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140	한국FP학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안
				141	한국자산관리공사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 안건	22	한국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25	금융투자업규정 제정안
				112	(주)두산캐피탈의 비엔지증권중개(주) 대주주변경 승인안
				142	(가칭)한국투자운용지주(주) 설립 예비인가안
				143	국내은행 국외점포 신설에 대한 사전협의 및 자회사업종 인정안
				144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과 아메리칸엑스프레스은행의 영업양수도 등에 대한 예비인가안
				145	은행업무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 일부지침 개정안
				146	한국주택금융공사 정관 일부변경 승인안
				147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48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49	(강원)설악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
				150	(서울)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
				151	「간접투자증권 판매업무담당 임직원 교육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기준안
				152	(가칭)얼라이언스벤처스타인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08년	7월25일	제9차	의결 안건	153	(가칭)에이아이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154	(가칭)엘에스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155	(가칭)현대스위스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156	(가칭)지에스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157	(가칭)알지에너지자원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158	신영증권(주)의 신탁업 인가안
				159	유진투자증권(주)의 신탁업 인가안
				160	메리츠증권(주)의 신탁업 인가안
				161	피닉스자산운용(주)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
				162	교보투자신탁운용(주)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
				163	금융투자업규정안
				164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의 증권업 및 선물업 허가안
				165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의 증권업 및 선물업 허가안
				166	케이티비투자증권(주)의 증권업 및 선물업 허가안과 케이티비캐피탈(주)에 대한 출자승인안
				167	비엔피파리바증권(주)의 증권업 및 선물업 허가안
				168	토러스투자증권(주)의 증권업 및 선물업 허가안
				169	엘아이지투자증권(주)의 증권업 및 선물업 허가안
				170	애플투자증권중개(주)의 증권업 및 선물업 허가안
				171	바로증권중개(주)의 증권업 허가안
				172	아이엔지증권중개(주)의 증권업 허가안
				173	하나대투증권(주)의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경영인가안
				174	엔에이치투자증권(주)의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경영인가안
				175	도이치증권(주)의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경영인가안
				176	제이피모간증권 서울지점의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경영인가안
				177	한화손해보험(주) 및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주)의 부동산권리보험에 대한 보험업 허가안
				178	(가칭) 사단법인 한국손해사정학회 설립 허가안

연도	월일	회차	안전 유형	번호	제 목
			보고 안전	2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7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 이행상황 보고
				28	08년 2/4분기중 종합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융위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29	2008년 상반기중 외국은행 사무소 폐쇄신고 처리상황 보고
				30	2008년도 2/4분기중 금융거래약관의 처리결과 보고
				31	2008년 상반기 신용협동조합 경영관리 관련 금융위원회 권한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32	2008년 상반기 간접투자자산운용부문 금융위원회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2008년	8월22일	제10차	의결 안전	179	신용보증기금 임원 임명(안)
				180	제주금융포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안
				181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안
				182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안
				183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안)
				184	국내법인기업금융센터(주)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85	재단법인 하나희망재단 설립 허가안
				186	(가칭)인천국제공항공사신용협동조합 설립 인가안
				187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주)의 신용조사업무 영위 허가안
			보고 안전	33	2008년 2/4분기중 은행의 신용공여한도 초과 관리현황 보고
				34	2008년도 2/4분기 중 전자금융업 등록(등록말소) 및 전자금융거래 약관 처리 결과 보고
				35	2008년도 상반기 보험부문 금융위원회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36	(경기)분당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결과 보고
				37	08.2/4분기중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위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3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40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41	중소기업은행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2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43	한국개발펀드법안
2008년	9월12일	제11차	의결 안건	188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189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190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191	(주)아이씨코퍼레이션의 분기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92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193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194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195	(주)현대미포조선의 씨제이투자증권(주) 및 씨제이자산운용(주) 대주주 변경 승인안
				196	재단법인 기은복지재단 청관 변경 인가안
				197	한화손해보험(주)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198	(전북)현대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등 조치안
			보고 안건	44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5	한국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6	증권선물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권한위임사항(회계관련) 처리결과 보고
2008년	9월16일	제4차 임시	의결 안건	199	리먼브러더스뱅크하우스 서울지점에 대한 영업의 일부정지 등 조치안
				200	리먼브러더스 인터내셔널증권 서울지점에 대한 영업의 일부정지 및 긴급 조치안
			의결 안건	201	(가칭)㈜KB금융지주회사 설립 인가안
				202	KB투자증권(주) 등 3개사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
				203	(가칭)한국투자운용지주(주) 설립 인가안
				204	한국투자신탁운용(주) 등 2개사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
				205	지앤에이케이비아이씨사모투자전문회사의 이트레이드증권(주) 대주주 변경 승인안
				206	새금융사회연구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안
				207	(주)아셀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08	(가칭)D.A.S. 범람비용보험(주)의 보험업 예비허가안
				209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연도	월일	회차	안전 유형	번호	제 목
2008년	9월12일	제12차		210	(전북)전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요구 조치안
				211	(대전)대전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안
				212	(충북)충부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안
				213	(가칭)에이앤에이신용정보(주)의 신용정보업 영위 예비허가 및 한국아이비금융(주)의 (가칭)에이앤에이신용정보(주) 주식취득 승인안
				214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과 아메리칸엑스프레스은행의 영업양수도 등에 대한 인가안
				215	신한은행 일부영업 양도 인가안
		보고 안전		4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4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50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51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52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53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54	행정형벌 합리화관련 금융위 소관 11개 법률 일괄 개정 추진
				55	2008년 상반기중 일반은행의 금융채 발행현황
				56	(전북)현대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결과보고
2008년	9월30일	제5차 임시 회의	의결 안전	216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217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보고 안전	57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매수주문 특례승인 보고
2008년	10월10일	제13차	의결 안전	218	중소기업은행 임원 임명안
				219	한미재무학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안
				220	NDF 매입초과포지션 한도위반 은행에 대한 조치안
				221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안
				222	아시아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23	글로벌신용정보(주)의 상호변경 허가안
				224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보고 안건	58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9	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
2008년	10월20일	제6차 임시	의결 안건	225	15개 국내은행의 대외채무 국가보증 신청에 대한 의견안
2008년	10월27일	제14차	의결 안건	226	유진투자증권(주) 대구지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27	네스테크(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안
				228	박순하의 증권거래법규 위반에 대한 조치안
				229	민응성의 증권거래법규 위반에 대한 조치안
				230	김태형의 증권거래법규 위반에 대한 조치안
				231	(경기)분당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
				232	(강원)도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종합 및 부문검사결과 조치안
				233	(전북)고려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안
			보고 안건	6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61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및 한국씨티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결과 보고
				62	2008년도 3/4분기중 금융거래약관의 처리결과 보고
				63	2008년도 3/4분기중 전자금융거래약관 처리결과 보고
				64	2008년도 3/4분기중 종합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융위 위탁업무 처리결 과 보고
				65	증권선물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권한위임사항(회계관련) 처리결과 보고
				66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정 보고
				67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4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 확정급여 자산한도, 최소적립요건 및 그 상호작용' 제정 보고
				234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35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36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37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38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39	한화손해보험(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40	(부산)양풍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08년	11월7일	제15차	의결 안건	241	(대전)대전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
				242	(서울)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의 (충북)중부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 인안
				243	(부산)부산상호저축은행, (부산)부산2상호저축은행 및 케이티비이천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대전)대전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244	(부산)부산상호저축은행 및 (부산)부산2상호저축은행의 (전북)고려상 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245	(주)한화건설, 한화엘앤씨(주), (주)한화갤러리아, 한화리조트(주), 한화테크엠 (주)의 (경기)새누리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246	(주)골든브릿지투자증권 등 112사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247	한국인프라자산운용(주)의 허가조건 변경 승인안
				248	(주)포이보스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 금 부과안
			보고 안건	68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69	증권선물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권한위임사항(회계관련) 처리결과 보고
2008년	11월21일	제16차	의결 안건	249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50	금융감독원 예산심의 소위원회 구성운영안
				251	사단법인 한국금융리스크관리전문가협회 정관 일부변경 승인안
				252	하나대투증권(주)와 하나IB증권(주)의 합병 인가안
				253	Deutsche Holdings (Malta) Ltd.의 도이치증권(주) 대주주 변경 승인안
				254	유진투자증권(주)의 우리담배판매(주) 출자 승인안
				255	교보증권(주)등 51개사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256	(부산)양풍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안
			보고 안건	70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7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72	(전북)한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조치 결과보고
				73	2008년도 3/4분기 중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위 위탁업무 처리 결과 보고
				74	2008년도 3/4분기 중 전자금융업 등록 및 등록말소 처리결과 보고
2008년	12월8일	제7차 임시	의결 안건	257	금융감독원 부원장 임명안
				258	우리은행 등 6개 은행의 동일인 및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초과 예외인 정안
				259	모간스탠리은행 서울지점 결산일 변경 승인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08년	12월12일	제17차	의결 안건	260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동일인 및 동일차주 등 신용공여한도 초과 예외인정안
				261	리먼브러더스뱅크하우스 서울지점에 대한 영업의 일부정지 등의 조치 연장안
				262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널증권서울지점에 대한 영업의 일부정지 및 긴급 조치 연장안
				263	글로벌파이낸스포럼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안
				264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안
				265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 제정안
				266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67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68	(부산)성의신용협동조합과 (부산)부산불교통불원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안
				269	(전남)영광신용협동조합과 (전남)함평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안
				270	(전북)전주파티마신용협동조합과 (전북)한울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안
				271	에스에이치자산운용(주)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
				272	신한비엔피파리바투자산신탁운용(주)와 에스에이치자산운용(주)의 합병인가안
				273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주)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
				274	(가칭)새한자산신탁(주)의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안
				275	(가칭)지이자산신탁(주)의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안
				276	보람투자자문(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보고 및 조치안
			보고 안건	75	증권선물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권한위임사항(회계관련) 처리결과 보고
				277	금융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78	증권선물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79	(주)골든브릿지의 금융지주회사 인가취득등의 기간 연장 승인안
				280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81	(전북)전북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안
				282	(경기)새누리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283	(전북)전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84	(전남)해남신용협동조합과 (전남)옥주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안

연도	월일	회사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08년	12월26일	제18차	의결 안건	285	예금보험공사 2009회계연도 예산 승인안
				286	한국주택금융공사 2009년도 업무계획 승인안
				287	한국주택금융공사 2009회계연도 예산 승인안
				288	신용보증기금 2009년도 업무계획 승인안
				289	기술신용보증기금 2009년도 업무계획 승인안
				290	한국산업은행 2009년도 업무계획 승인안
				291	중소기업은행 2009년도 업무계획 승인안
				292	한국산업은행 2009회계연도 예산 승인안
				293	중소기업은행 2009회계연도 인건비 예산안에 대한 승인안
				294	키움증권(주)의 키움인베스트먼트(주) 출자 승인안
				295	노무라인터내셔널증권 서울지점 등 27개사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296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97	(주)리더스라이프 보험대리점 부문검사 결과조치안
				298	(주)푸른신호등전주 보험대리점 부문검사 결과조치안
				299	(주)광장보험프라자 보험대리점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300	지승룡 등 2인의 증권거래법규 위반에 대한 조치안
				301	외화환산 회계처리 관련 기업회계기준 등 수정요구안
				302	장외파생상품 관련 기업회계기준 수정요구안
				303	금융감독원 2009회계연도 예산 승인안
			보고	76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제도 운영 방안
				77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개정 보고
				78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 개정 보고
				79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 '연결재무제표' 개정 보고
				80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개정 보고
				8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3호 '사업결합' 등 개정 보고
				8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등 개정 보고

연도	월일	회사	안전 유형	번호	제 목
			안전	83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원가' 관련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제1101호 등 개정 보고
				84	'금융자산의 분류변경'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9호 등 개정 보고
				85	'풋가능 금융상품과 청산시 발생하는 의무'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2호 등 개정 보고
				86	'가득조건과 취소'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2호 개정 보고
				87	'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5호 등 개정 보고
				88	(충북)현대스위스III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결과보고
				89	(대전)대전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결과 보고

2009년 금융위원회 안건 목록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09년	1월14일	제1차	의결 안건	1	은행업무중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2	씨티그룹에 대한 (주)한국씨티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3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4	비아이에스보험중개(주)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5	(가칭)아이엔지부동산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6	(가칭)아센다스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7	(가칭)제이피트러스트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8	(가칭)에이플러스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9	(가칭)삼천리맥쿼리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10	(가칭)현대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11	노무라 인터내셔널증권 및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널증권 서울지점의 영업양수도 인가안
				12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선물시장업무규정 전부개정규정안
				13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정관 일부변경 승인안
				14	증권에탁결제원 정관 일부변경 인가안
			보고 안건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KB투자증권(주)의 내부통제 운영계획 이행여부 점검결과 보고
				3	2008년도 4/4분기 중 전자금융거래약관 처리결과보고
				4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및 (주)한국씨티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08.6월말 기준 적격성 심사결과 보고
				5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15	금융중심지 대상지역 지정안
				16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7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18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9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금융기관자금 차입한도 증액신청 승인안
				20	한국증권업협회·선물협회·자산운용협회의 합병 및 금융투자협회 정관 승인안
				21	한국증권선물거래소 회원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09년	1월28일	제2차	의결 안건	22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23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24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25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26	자산유동화업무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7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8	주택저당채권유동화업무 인가지침 일부개정지침안
				29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0	케이알선물(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31	(주)경남은행 등 47개사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32	한맥선물(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33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34	흥국쌍용화재보험(주)의 자산운용업 폐지 인가안
				35	블리스자산운용(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보고 및 조치안
				36	비엔피파리바 은행 서울지점의 신탁업 폐지 인가안
				37	제이피모간 체이스 은행 서울지점의 신탁업 폐지 인가안
				38	칼리온 은행 서울지점의 신탁업 폐지 인가안
				39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40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중 개정규정 승인안
				41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공시규정중 개정규정 승인안
				42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정안
				43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44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분쟁조정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45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46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6	(전북)고려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결과보고
				7	2008년도 하반기 보험부문 금융위원회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보고 안건	8	2008년 하반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및 신탁업 부문 금융위원회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9	2008년 하반기(중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이전 및 사무소 폐쇄신고 처리상황 보고
				10	2008년도 4/4분기 중 금융거래약관의 처리결과 보고
				11	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증권 서울지점 등 45개 증권사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보고
2009년	2월18일	제3차	의결 안건	47	(가칭)㈜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회사 설립 예비인가안
				48	흥국생명보험(주)의 흥국쌍용화재보험(주)에 대한 자회사 소유 승인안
				49	에스신용정보㈜의 신용정보업 영위 허가안
				50	한국여신전문금융협회의 집중관리·활용대상정보 범위 변경 승인안
				51	현대커머셜(주)의 현대카드(주) 주식취득 승인안
				52	하나대투증권(주) 과점역 지점장 최호응의 이익신청사항 심의안
				53	교통은행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인가 정정안
			보고 안건	12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보고
				13	공인회계사 21인에 대한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 의결 결과 보고
				14	2008년도 금융감독원 감사결과 종합보고
				15	08. 4/4분기 중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위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16	2008년 하반기 신용협동조합 경영관리 관련 금융위원회 권한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2009년	3월4일	제4차	의결 안건	54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55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56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57	금융감독원 정관 일부변경 승인안
				58	(경기)토마토상호저축은행의 (부산)양풍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보고 안건	17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8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9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1	2008년중 일반은행의 금융채 발행현황
				22	신탁중앙회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실적 보고

연도	월일	회차	안전 유형	번호	제 목
				23	2008년도 행정지도 사후관리 현황 보고
2009년	3월18일	제5차	의결 안전	59	BNP파리바등의 (주)신한금융지주회사 주식취득 승인안
				60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61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승인안
				62	동양종합금융증권(주)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63	현대증권(주)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64	피델리티자산운용(주)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
				65	금융위원회 규정 제·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6	금융감독법규 위반여부에 대한 사전심사 청구제도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7	고려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68	미래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69	새한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70	세일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71	솔로몬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72	에스지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73	중앙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74	한국기업데이터(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75	한국기업평가(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76	정리금융기관(가칭:에쓰상호저축은행) 설립과 동 정리금융기관의 업무범위 및 사장선임 승인안
			보고 안전	24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2008년도 4/4분기중 전자금융업 등록(등록말소) 및 전자금융거래 약관 처리 결과 보고
				27	증권선물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권한위임사항(회계관련) 처리결과 보고
				28	위탁업무처리결과 보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및 기업회계기준 제70조의2 개정)
				29	위탁업무처리결과 보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30	위탁업무처리결과 보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9호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 개정)
				31	위탁업무처리결과 보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

연도	월일	회차	안전 유형	번호	제 목
				32	위탁업무처리결과 보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해석서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정)
				33	위탁업무처리결과 보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해석서 제2116호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2009년	4월1일	제6차	의결 안전	62	동양종합금융증권(주)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77	(전북)에쓰상호저축은행 영업인가안
				78	(전북)전북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결정 및 영업인가 취소 등 조치 안
				79	국민은행의 국외점포 신설에 대한 사전협의 및 자회사업종 인정안
				80	한국주택금융공사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81	15개 국내은행의 외화채무 국가채무보증 신청에 대한 의견안
				82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가채무보증 신청에 대한 의견안
				83	예금보험공사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보고 안전	84	한국산업은행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4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35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36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7	상호저축은행 과징금제도 운영방안 보고
				38	(강원)도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조치결과 보고
2009년	4월13일	제1차 임시	의결 안전	85	예금보험공사 임명안
			의결 안전	86	기술신용보증기금 임원 임명안
				87	(가칭)아시아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88	대한생명보험(주)의 한화투자신탁운용(주) 자회사 소유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안
				89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90	중소기업은행 정관 일부변경 승인안
				91	한국거래소 정관 일부변경 승인안
				92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널증권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안 및 영 업의 일부정지와 긴급조치 연장 보고
				93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 규정 승인안
				94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95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연도	월일	회차	안전 유형	번호	제 목
2009년	4월15일	제7차		96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97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98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99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0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서 식관련 규정 제정안
				101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호의 규 정에 의한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02	(전남)꿀벌신용협동조합과 목포약사 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안
			보고 안전	37	상호저축은행 과징금제도 운영방안 보고
				39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안
				4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1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2	(주)한국씨티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08.12월말 적격성 심사 결과 보고
				43	리먼브러더스 बैं크하우스 서울지점에 대한 영업의 일부 정지 등의 조치 연장 보고안
				44	(부산)양풍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추진결과 보고
2009년	4월29일	제1차 서면	의결 안전	10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제2 호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009년	5월6일	제8차	의결 안전	104	한국산업은행 임원 임명안
				105	신용보증기금 임원 임명안
				106	금융감독원에 대한 결산심의 소위원회 구성·운영안
				107	다스법률비용보험(주)의 보험업 허가안
				108	우리캐피탈(주)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
				109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10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 정관 승인안
				111	(주)인네트의 (구)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치안
				112	(주)서부트럭터미날의 애플증권중개(주) 대주주 변경승인 위반 관련 조치안
				113	현대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14	비엔피파리바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45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연도	월일	회차	안전 유형	번호	제 목
			보고 안전	46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안 주요 변경사항
				47	'09 회계연도 금감원 예산심사시 논의사항에 대한 보고
				48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7호 "금융상품 : 공시"에 대한 개정결과 보고
				49	KB자산운용(주)의 KTB투자증권(주) 대주주 변경승인 위반 관련 보고
				50	2009년도 1/4분기 중 금융거래약관의 처리결과 보고
2009년	5월20일	제9차	의결 안전	115	2008회계연도 금융감독원 결산승인안
				116	리먼브러더스뱅크하우스 서울지점에 대한 청산인 청구 승인안 및 영업의 일부정지 관련 보고
				117	(전북)김제신용협동조합과 (전북)수류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가안
				118	산은캐피탈(주)의 리더스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 승인안
				119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0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보고 안전	51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고
				5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보고
				53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고
				54	'09. 1/4분기중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위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2009년	6월3일	제10차	의결 안전	121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원 임명안
				122	실무금융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및 예산배정(안)
				123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24	(충남)한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25	(충북)청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26	삼성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27	굿모닝 신한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28	한국투자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29	대우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30	한양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31	한화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32	하이투자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연도	월일	회차	안전유형	번호	제 목
				133	우리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34	우리크레디트스위스자산운용(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35	템피스트투자자문(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36	(가칭)맥쿼리삼천리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137	한일시멘트(주)의 칸서스자산운용(주) 대주주변경승인 위반 관련 조치안
			보고 안전	55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56	2009년도 1/4분기중 전자금융업 등록(등록말소) 및 전자금융거래 약관 처리 결과 보고
2009년	6월17일	제11차	의결 안전	138	한국산업은행의 외화표시 중장기채무 차입계획 협의 승인안 및 외화표시 채무 상세 현황 보고
				139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40	은행업무중부수업무의범위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141	은행업인가지침 일부개정안
				142	(주)신한은행의 에스에이치앤씨생명보험(주) 대주주 변경 승인안
				143	(주)케이비금융지주의 케이비생명보험(주) 대주주 변경 승인안
				144	교보생명보험(주)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안
				145	(주)위브앤위너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46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주) 설립인가안 등
				147	(전북)부안신용협동조합과 (전북)새만금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가안
				148	(경남)창원제일신용협동조합과 경남자동차정비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가안
				149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50	(주)골든브릿지의 (전남)상업상호저축은행의 주식취득 승인안
				151	(제주)으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52	(전북)전북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등 조치안
				153	(충남)대성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요구 종료안
				154	현대증권(주)의 출자승인 및 (가칭)현대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155	(가칭)아이엔지부동산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137	한일시멘트(주)의 칸서스자산운용(주) 대주주변경승인 위반 관련 조치안
				57	칸서스자산운용(주) 임원의 대주주변경승인 의무 위반 여부 검토 보고

연도	월일	회차	안전 유형	번호	제 목
			보고 안전	58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결과,보고
				59	(전북)전북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결과보고
2009년	7월1일	제12차	의결 안전	156	아시아신용정보(주)에 대한 일부 업무정지 조치안
				157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58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과태료 부과등 조치안
				159	얼라이언스번스타인엘피에 대한 과태료 부과등 조치안
				160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161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62	기업구조조정조합등록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63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64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165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166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일부개정 승인안
				167	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기준 제정안
				168	(충북)현대스위스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보고 안전	60	금융회사 이자율 제한제도 운영방안
				61	(충북)하나로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조치 결과 보고
				62	2009년 1/4분기중 은행의 신용공여한도 초과 관리현황 보고
				169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70	보험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71	(가칭)노무라이화자산운용(주)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72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및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 정 승인안
				173	흥국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174	하나대투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75	대신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76	대우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77	현대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연도	월일	회차	안전 유형	번호	제 목
2009년	7월16일	제13차	의결 안전	178	굿모닝신한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79	한국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80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81	리딩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82	엘아이지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83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84	미래에셋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85	뉴앳지파이낸셜증권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86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87	(주)부은선물의 대주주 심사 배제 인정 및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88	(전남)녹동신용협동조합과 (전남)도화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가안
				189	(대구)광장신용협동조합과 평리천주교회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가안
				190	(주)케이티캐피탈의 뱅가드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 승인안
			보고 안전	6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고
				6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6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66	한국산업은행의 2/4분기 '외화표시 채무 상세 현황' 보고
				191	(제주)으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안
				192	(전북)전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안
				193	(전북)한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안
				194	(전남)보해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95	(제주)성산포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96	비씨카드(주)의 스마트페이(주)에 대한 출자승인안
				197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98	(주)하나은행의 신용카드부문 분할 및 하나카드(주)신용카드업 예비인가안
				199	신한은행의 해외 사무소 신설에 대한 사전협의
				200	아시아신용정보(주)에 대한 일부 업무정지 조치안

연도	월일	회차	안전 유형	번호	제 목
2009년	7월29일	제14차	의결 안전	201	일몰제 적용을 위한 금융위원회 규정 등 고시 일괄정비안
				202	국제신탁(주)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안
				203	(가칭)아센다스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204	키움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205	도이치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206	에스케이증권(주)의 글로벌 소프트웨어기업 육성 사모투자전문회사(가칭)에 대한 출자승인안
				207	부국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08	교보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09	대신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10	한국투자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11	한국정책금융공사 감독규정 제정안
				212	한국산업은행 정관 일부변경 승인안
			보고 안전	67	기업회계기준서 제104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제정결과 보고
				68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2117호 "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에 대한 제정결과 보고
				69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에 대한 제정결과 보고
				70	"내재파생상품"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2109호 등 개정결과 보고
				7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등에 대한 개정 결과 보고
				72	2009년 상반기중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이전 및 사무소 폐쇄 신고 처리상황 보고
				73	2009년도 2/4분기 금융거래약관의 처리 결과 보고
2009년	8월11일	제2차 임시	의결 안전	191	(제주)으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안
2009년	8월26일	제15차	의결 안전	213	(가칭)무궁화신탁의 부동산신탁업 인가안
				214	삼성생명보험(주) 자회사의 영위업무 추가 승인안
				215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16	미래에셋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217	하나대투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218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219	엘아이지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연도	월일	회차	안전 유형	번호	제 목
2009년	8월20일	제15차		220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221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22	아시아신용정보㈜의 신용정보업 허가취소안
			보고 안전	74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75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76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49-55 "분할·분할합병에 관한 회계처리" 개정 결과 보고
				77	2009년도 2/4분기중 전자금융업 등록(등록말소) 및 전자금융거래 약관 처리 결과 보고
2009년	9월9일	제16차	의결 안전	223	화인경영회계법인에 대한 업무정지 조치안
				224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225	현대스위스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226	외환선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27	에스케이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28	신용보증기금 정관 일부변경 승인안
				229	기술신용보증기금 정관 일부변경 승인안
				230	(전북)전북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31	에르고다움다이렉트자동차보험㈜의 상해보험 등 6개 보험종목에 대한 보험업 허가안
				232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33	하나은행의 국외 자회사 신설에 대한 사전협의 및 자회사 업종 인정안
				234	(주)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235	우리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236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원 임명안
				237	금융결제원 임원 선임 승인안
				238	(주)우리금융지주의 비엔비에트증권 손자회사 편입승인안
				239	우리아비바생명보험(주)의 금융투자업 겸영 인가안
				240	국제신탁㈜의 경영개선계획 승인안
				241	(서울)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및 에이치에스에이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기)에한울상호저축은행 주식 취득 승인안
				242	산은캐피탈㈜의 KDBC-JKL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승인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09년	9월23일	제17차	의결 안건	243	하나은행의 신용카드부문 분할 및 하나카드(주) 신용카드업 인,허가안
				244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전부개정규정안
				245	신용정보업인허가지침 전부개정안
				246	신한은행 등의 (가칭)코뎀코 주식소유 승인안 및 자회사 업종 인정안
				247	신한은행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안
				226	외환선물(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재상정 안건)
				248	한양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249	부국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250	케이티비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251	솔로몬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252	이트레이드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253	교보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254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업무규정 일부 개정규정승인안
			보고 안건	7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80	지도공문 등 비명시적 규제 정비방안
				81	2009회계연도 금융감독원 상반기 결산결과 보고

2008년 증권선물위원회 목록

일자	회사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1	한국석유공업(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	(주)유니온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	케이엠에이치(주) 등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안
			4	증권선물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가칭) 라자드코리아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6	(가칭) 엘라이언스벤처스타인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7	(가칭) 블랙록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8	오영수의 KIDB채권중개(주) 대주주 변경 승인안
			9	현대자동차(주) 등의 신흥증권(주) 대주주 변경 승인안
			10	밸류에프투유한회사의 리딩투자증권(주) 대주주 변경 승인안
			11	동양종합금융증권(주)에 대한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겸영인가안
			12	SK증권(주)에 대한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겸영인가안
			13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에 대한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겸영인가안
			14	유비에스증권리미티드 서울지점에 대한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겸영인가안
			15	노무라인터내셔널증권 서울지점에 대한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겸영인가안
			16	(주)하나투어 주식의 대량보유상황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안
			17	(주)에이블씨엔씨 주식의 대량보유상황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안
			18	(주)태원엔터테인먼트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안
			19	2007년 2/4분기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등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안
			20	2007년 4/4분기 임원·주요주주 소유주식보고서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심사결과 조치안
			21	페이퍼코리아(주)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2	동신건설(주)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3	(주)씨라택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4	시큐리티코리아(주)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5	(주)에당온라인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6	세가상사(주)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08년 3월 26일

제1차

의결
안건

27	(주)씨티엘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8	(주)모나미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9	(주)에너원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30	한성기업(주)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31	엠텍반도체(주)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32	(주)한솔교육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33	(주)메타바이오메드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34	우리산업(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5	(주)유아이에너지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6	(주)바이오매스코리아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7	(주)네티션닷컴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8	(주)청람디지털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9	(주)파인디지털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40	대한은박지공업(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41	(주)파로스이앤아이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42	오양수산(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43	현대자동차(주) 이사 김동기의 소유주식 보고의무위반 조치에 대한 이의 신청 처리안
44	(주)오엘케이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45	동화약품공업(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46	(주)에이치앤티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47	아이메카(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48	(주)티피씨메카트로닉스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49	(주)조이토토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50	(주)젠트로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51	에버렉스(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52	(주)엔빅스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53	선물거래법 제51조(해외선물거래)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54	현대상선(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55	(주)PW제네텍스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56	(주)선우에스앤티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57	(주)C&상선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58	(주)엠트론스토리지테크놀로지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59	오양수산(주) 전 대표이사 김명환의 주식처분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08년 4월 8일	제2차	보고 안건	1	위탁업무처리결과 보고(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 개정)
		의결 안건	60	(주)한신디앤피 및 (주)한텔의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실시안
			61	(가칭)아이엠엠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62	(가칭)LS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63	(가칭)더커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08년4월23일	제3차	의결 안건	64	(주)삼화네트웍스 감리조치 관련 삼덕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 이용모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안
			65	(주)미광콘택트렌즈 주식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66	동아G&L(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67	(주)에스티씨라이프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68	(주)에당엔터테인먼트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69	(주)다원텍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70	씨니전자(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71	해원에스티(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72	(주)케이디미디어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보고 안건	2	삼성전자(주) 등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조치보고
			3	2008년도 1/4분기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73	「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74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75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 규정(3개) 일부개정규정안
			76	(가칭)IBK투자증권(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77	(가칭)KTB투자증권(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78	(가칭)SC제일투자증권(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79	(가칭)STX투자증권(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08년5월7일	제4차	의결 안건	80	(가칭)토러스투자증권(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81	(가칭)한국씨티증권(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82	(가칭)KTIC투자증권(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83	(가칭)LIG투자증권(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84	(가칭)바로증권중개(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85	(가칭)와우증권중개(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86	(가칭)한맥증권중개(주)의 증권업 예비허가 및 한맥선물(주)의 (가칭)한맥증권중개(주)에 대한 출자승인안
			87	(가칭)ING증권중개(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88	(가칭)스카이증권중개(주)의 증권업 예비허가 및 스카이 투자자문(주)의 (가칭)스카이증권중개(주)에 대한 출자승인안
			89	(가칭)리먼브러더스증권(주)의 증권업 예비허가 및 리먼브러더스 인터내셔널증권 서울지점과의 영업양수도 예비인가안
			90	(가칭)흥국증권(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91	(가칭)BNP파리바증권(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08년5월21일	제5차	의결 안건	92	(주)코어세스 등 6사의 임원·주요주주소유주식보고서에 대한 단기매매 차익 심사결과 조치안
			93	(가칭)에이아이지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94	(가칭)현대스위스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95	마이애자산운용(주)의 허가조건 변경 승인안
			96	(주)에스씨에프 주식의 대량보유상황보고 의무위반 등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안
			97	성원건설(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98	(주)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99	(주)고려포리머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00	(주)신지소프트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01	(주)나리지*온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02	(주)팬택엔큐리텔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03	(주)케드콤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04	현대5032KOSPI200풋워런트 등 34개 종목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 치안
			105	엔디코프(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06	(주)BHK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07	대신벤처캐피탈(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08	(주)모헨즈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09	파라웰빙스(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08년6월11일	제6차		110	(주)소리바다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11	(주)디아만트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12	(주)플러스프로핏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13	2008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기업집단 등 선정안
			114	2007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면제 기업집단 인정안
		보고 안건	4	2007사업연도 중, 결합대상계열회사 변동보고
			115	(가칭)엠플러스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의결 안건	116	(가칭)에셋플러스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117	(가칭)라자드코리아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118	(가칭)아이엠엠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119	영진약품공업(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감리결과 조치안
			120	(주)흥익상호저축은행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121	(주)양풍(舊 파라다이스)상호저축은행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122	(주)현대상호저축은행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123	(주)전일상호저축은행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124	(주)도민상호저축은행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125	(주)하나로상호저축은행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126	(주)조이토토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감리결과 조치안
			127	오피스(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감리결과 조치안
			128	(주)셀런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감리결과 조치안
			129	(주)에이트픽스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감리결과 조치안
			130	(주)래미안관광개발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31	대성개발(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32	(주)지우아이앤디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33	(주)강원레저개발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34	한옥초자(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35	삼협종합건설(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36	용마산업(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37	강희건설(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38	대성글로벌네트웍(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39	(주)스마트시티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40	서도산업(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41	(주)세종아이앤디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42	(주)구미개발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43	경희강재(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보고 안전	5	2008년도 감리실시 및 선정계획 보고
				6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품질관리감리 처리결과 보고
				7	(주)학산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처리안 보고
				8	(주)이트로닉스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처리안 보고
			144	(주)씨앤중공업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45	현대피앤씨(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46	선물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47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선물시장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48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선물시장수탁계약준칙 일부개정규정안	
			149	증권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50	(주)두산캐피탈의 비엔지증권중개(주) 대주주변경 승인안	
			151	(주)엘로우엔터테인먼트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52	(주)휴니드테크놀로지스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53	(주)비앤지스틸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54	(주)와이지-원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55	대한은박지공업(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56	울트라건설(주) 주식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157	(주)오디코프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58	엠텍반도체(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08년6월25일	제7차	의결 안건	159	(주)쌍용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60	(주)코디너스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61	롯데손해보험(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62	(주)유아이에너지 주식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163	(주)만인에미디어 주식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164	(주)엠피오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65	(주)케이씨오에너지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66	(주)큐리어스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67	위디츠(주)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68	제이에스(주)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69	(주)나래원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70	(주)파로스이앤아이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71	(주)에코솔루션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72	(주)코스모스피엘씨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73	(주)케이디이컴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74	엔디코프(주)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08년7월9일	제8차	의결 안건	175	(가칭)메리츠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 (가칭)메리츠자산운용과 메리츠종합금융(주)과의 자산운용업 영업양수도 및 메리츠종합금융(주)의 자산운용업 영업폐지 인가안
			176	(가칭)블랙록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177	(가칭)더커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178	(가칭)RG에너지자원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179	(가칭)GS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보고 안건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보고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보고
			11	금융투자업규정 제정안 보고
			180	(주)코스모스피엘씨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81	아이메카(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08년7월23일

제9차

의결
안건

182	(주)레드캡투어 및 에스넷시스템(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183	한국통신데이터(주)의 분기보고서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45	현대피앤씨(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84	(주)에너지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85	(주)글로벌포스트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86	(주)브이에스에스티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87	동국실업(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88	(주)유성티에스아이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89	(주)에이로직스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90	S&T모터스(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91	2007년 하반기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등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안
192	「간접투자증권 판매업무담당 임직원 교육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193	(가칭)얼라이언스벤처스타인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194	(가칭)에이아이지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195	(가칭)엘에스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196	(가칭)현대스위스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197	(가칭)지에스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198	(가칭)알지에너지자원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199	피닉스자산운용(주)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
200	교보투자신탁운용(주)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
201	금융투자업규정안
202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의 증권업 및 선물업 허가안
203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의 증권업 및 선물업 허가안
204	케이티비투자증권(주)의 증권업·선물업 허가 및 (가칭)케이티비캐피탈(주)에 대한 출자승인안
205	비엔피파리바증권(주)의 증권업 및 선물업 허가안
206	토러스투자증권(주)의 증권업 및 선물업 허가안
207	엘아이지투자증권(주)의 증권업 및 선물업 허가안
208	애플투자증권중개(주)의 증권업 및 선물업 허가안

			209	바로증권중개(주)의 증권업 허가안
			210	아이엔지증권중개(주)의 증권업 허가안
08년8월20일	제10차		211	하나대투증권(주)의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경영인가안
			212	엔에이치투자증권(주)의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경영인가안
			213	도이치증권(주)의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경영인가안
			214	제이피모간증권 서울지점의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경영인가안
		보고 안건	12	2008년도 2/4분기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의결 안건	215	회계감사위탁감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
			216	회계감사 품질관리감리 업무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
			217	한국선재(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18	(주)배명금속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19	일진디스플레이(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20	(주)코어세스 주식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221	(주)세라온홀딩스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22	(주)바이오랜드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23	(주)청람디지털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24	(주)도움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25	(주)코디너스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26	(주)모빌탑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27	(주)해인아이앤씨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28	(주)에스피코프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29	(주)유성티에스아이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30	아이메카(주)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31	(주)소예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32	(주)넥사이언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33	(주)코리아토토바코컴퍼니 주식 매출행위에 대한 증권거래법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234	STX엔파코(주) 주식 매출행위에 대한 증권거래법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235	월드파워텍(주)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36	(주)비엔디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37	(주)케이에스피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38	(주)모코코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39	(주)필룩스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40	(주)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08년9월10일	제11차	보고 안건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고
			14	2007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접수내용
		의결 안건	241	(주)씨앤중공업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242	(주)분당상호저축은행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243	메디에스앤피(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감리결과 조치안
			244	(주)에이엠에스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감리결과 조치안
			245	(주)아이씨코퍼레이션의 분기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46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247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248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249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250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251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252	(주)현대미포조선의 씨제이투자증권(주) 및 씨제이자산운용(주) 대주주 변경 승인안
08년9월24일	제12차	의결 안건	253	(주)다우데이타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54	해외증권 발행 관련 83개사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55	대우6009 삼성전자 콜워런트 종목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56	2008년 상반기 임원·주요주주 소유주식보고서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심사결과 조치안
			257	롯데관광개발(주) 주식의 대량보유상황보고의무 위반 등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안
			258	우수씨엔에스(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59	(주)도움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60	태창기업(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61	(주)엠피씨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62	(주)한신디앤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63	(주)비엔디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64	(주)이테크건설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65	(주)신지소프트 주식에 대한 과징금 분납요청 처리안
			266	한국투자신탁운용(주) 등 2개사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
			267	KB투자증권(주) 등 3개사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
			268	지앤에이케이비아이씨사모투자전문회사의 이트레이드증권(주) 대주주 변경 승인안
08년9월30일	임시 제1차	의결 안건	269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의결 안건	270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보고 안건	15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매수주문 특례승인 보고
		의결	271	코스피200옵션 C0711 230.0 등 69개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72	(주)로엔케이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73	네스테크(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274	아시아신용정보(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275	(주)엘제이엘에너지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276	넷시큐어테크놀로지(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277	(주)레드캡투어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78	(주)코리아데이터시스템스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79	만호제강(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80	(주)제이콤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81	이화공영(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82	(주)테라리소스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83	(주)동국알앤에스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84	(주)스코포스디앤알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85	코스피200옵션 C0706 207.5 등 12개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86	(주)에이치원바이오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87	금호종합금융(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의결	288	우리파이낸셜(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08년10월22일	제13차	안건	289	(주)삼성수산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90	(주)에스피코프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91	부산산업(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92	(주)비엔알엔터프라이즈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93	(주)서울제약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94	(주)나우콤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95	(주)한국사이버결제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96	(주)엔블루와이드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97	(주)삼협글로벌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98	(주)사인시스템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99	한국오발(주)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300	(주)아이씨코리아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301	새한정보시스템(주)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302	시큐리티코리아(주)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303	(주)세라텍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304	(주)브이에스에스티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305	(주)한국하이네트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306	(주)엘제이엘에너지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보고 안건	16	2008년도 3/4분기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17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정 보고
			18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4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 확정급여 자산한도, 최소적립요건 및 그 상호작용' 제정 보고
08년11월5일	제14차	의결 안건	307	(주)골든브릿지투자증권 등 112사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308	한국인프라자산운용(주)의 허가조건 변경 승인안
			309	(주)스카이뉴팜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310	(주)포이보스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311	(주)일지테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312	안전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결과보고 및 처리안
			313	삼덕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결과보고 및 처리안

08년11월19일	제15차	의결 안건	314	우리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결과보고 및 처리안
			315	한울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
			316	(주)씨티엘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17	무한투자(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18	하나대투증권(주)와 하나HB증권(주)의 합병 인가안
			319	Deutsche Holdings (Malta) Ltd.의 도이치증권(주) 대주주 변경 승인안
			320	유진투자증권(주)의 우리담배판매(주) 출자 승인안
			321	교보증권(주)등 51개사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322	증권·선물초사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23	임원·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보고 및 단기매매차익반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24	(주)삼성중공업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25	(주)큐엔텍코리아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26	동일철강(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27	동양철관(주) 우선주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28	(주)대한은박지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29	(주)프로제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30	(주)대한전선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31	(주)옵티머스 임원·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보고 안건	19	브이케이(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보고
08년12월10일	제16차	의결 안건	332	(주)다휘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333	(주)원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334	(주)새누리상호저축은행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335	(주)파로스이앤아이의 분기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336	외부감사인의 'IFRS 도입용역' 관련 직무제한범위 운용방안
			337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널증권서울지점에 대한 영업의 일부정지 및 긴급 조치 연장안
			338	에스에이치자산운용(주)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
			339	신한비엔피파리바투자신탁운용(주)와 에스에이치자산운용(주)의 합병 인가 안
			340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주)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

08년12월24일	제17차	의결 안건	341	(주)큐로홀딩스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42	대동금속(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43	(주)엑사이엔씨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44	증권선물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45	키움증권(주)의 키움인베스트먼트(주) 출자 승인안
			346	노무라인터내셔널증권 서울지점 등 27개사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347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48	(주)나자인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49	(주)유라시아알엔티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50	(주)쓰리에이치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51	(주)지앤비씨더스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52	(주)쿨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53	(주)코아브리드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54	서울식품공업(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55	(주)SG&G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56	(주)비엔알엔터프라이즈 주식관련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357	에이치엠씨투자증권(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58	동성제약(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59	(주)케너텍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60	테스텍(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61	(주)에스티큐브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62	(주)이룸텍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63	(주)트루맥스의 공시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364	(주)사인시스템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처리안
			365	(주)비츠로테크 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366	(주)삼성수산 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367	2008년 상반기 대량보유상황보고 위반 등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안
			368	(주)봉주 등 4개사 주식의 대량보유상황보고 위반 등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안

			369	(주)스포츠서울21 주식의 단기매매차익 심사결과 조치안
			370	외화환산 회계처리 관련 기업회계기준 등 수정요구안
		보고 안건	20	「외부평가기관의 부실평가 등에 대한 제재기준」 보고
			21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개정 보고
			22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 개정 보고
			23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 '연결재무제표' 개정 보고
			24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 개정 보고
			2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3호 '사업결합' 등 개정 보고
			2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등 개정 보고
			27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원가'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1호 등 개정 보고
			28	'금융자산의 분류변경'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9호 등 개정 보고
			29	'뜻가능 금융상품과 청산시 발생하는 의무'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2호 등 개정 보고
			30	'가득조건과 취소'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2호 개정 보고
			31	'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5호 등 개정 보고

2009년 증권선물위원회 목록

일자	회사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09년1월7일	제1차	의결 안건	1	(가칭)아이엔지부동산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2	(가칭)아센다스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3	(가칭)제이피트러스트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4	(가칭)에이플러스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5	(가칭)삼천리맥쿼리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6	(가칭)현대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7	노무라인터내셔널증권 및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널증권 서울지점의 영업양수도 인가안
			8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선물시장업무규정 전부개정규정안
			9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정관 일부변경 승인안
			10	증권에탁결제원 정관 일부변경 인가안
		보고 안건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11	동국산업(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2	(주)남선알미늄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3	(주)케이에스리소스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4	디브이에스코리아(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5	롯데관광개발(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6	(주)씨티엘 주식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17	(주)에이치원바이오 주식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18	대한전선(주) 주식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19	(주)카라반케이디이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0	코스피200옵션 P0809 185.0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1	코스피200옵션 C0806 257.5 등 3개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2	삼성중공업(주) 주식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23	(주)대한은박지 주식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24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정안
			25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2009년1월21일	제2차	의결 안건	26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27	증권범죄조사 사무처리 규정 제정안
			28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29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분쟁조정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30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31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중 개정규정 승인안
			32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공시규정중 개정규정 승인안
			33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4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5	한국증권업협회·선물협회·자산운용협회의 합병 및 금융투자협회 정관 승인안
			36	한국증권선물거래소 회원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37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38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39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40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41	자산유동화업무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42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43	주택저당채권유동화업무 인가지침 일부개정지침안
			44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45	㈜경남은행 등 47개사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46	한맥선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47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48	흥국생명화재보험㈜의 자산운용업 폐지 인가안
			3	㈜에이스디지털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보고
			49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50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51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52	㈜대전상호저축은행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53	유진기업㈜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감리결과 조치안

2009년 2월 25일

제3차

의결
안건

54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결과보고 및 처리안
55	대주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결과보고 및 처리안
56	삼경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결과보고 및 처리안
57	대성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결과보고 및 처리안
58	(주)사이버엠비에이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59	(주)일광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60	(주)한맥기술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61	일진캐피탈(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62	아시아신용정보(주) 감리조치 관련 공인회계사 장동룡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안
63	(주)파로스이앤아이에 대한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신청 결정안
64	(주)뉴젠비아이티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65	(주)에스티앤아이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66	(주)온누리애어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67	(주)헤썬나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68	오펜스(주)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69	테스텍(주)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70	한국슈넬제약(주)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71	(주)펜타마이크로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72	한국개발금융(주)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73	(주)이노지디엔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74	(주)스포츠서울21 임원 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75	(주)쿠스코엘비이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76	(주)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77	한성엘컴텍(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78	(주)블루스톤디앤아이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79	(주)폴캠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80	미리넷(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81	(주)봉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82	대동금속(주) 주식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83	(주)퓨처인포넷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09년3월11일	제4차	보고 안건	4	(주)루멘디지털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보고
			5	2008년도 불공정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결과 보고
			6	한영, 신우, 서일경영, 중정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 개선권고사항의 이행점검 결과 보고
			7	대주기업(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처리안 보고
		의결 안건	84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승인안
			85	한화투자신탁운용(주)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
			86	피델리티자산운용(주)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
			87	(주)아이씨엠의 분기보고서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88	(주)엠트론스토리지테크놀로지의 반기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89	(주)S&T홀딩스 및 S&T중공업(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90	(주)승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보고 안건	8	2009년도 감리실시 및 선정계획 보고
			9	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 개선방안 보고
			10	위탁업무처리결과 보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및 기업회계기준 제70조의2 개정)
			11	위탁업무처리결과 보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12	위탁업무처리결과 보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9호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 개정)
			13	위탁업무처리결과 보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14	위탁업무처리결과 보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해석서 제2115호 '부동산건설탁정' 제정)
			15	위탁업무처리결과 보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해석서 제2116호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제정)
			91	(가칭)아시아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92	네스텍(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93	(주)한신디앤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94	유니모텍(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95	(주)에치엔에치글로벌리소스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96	엔토리노(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97	마이크로닉스(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98	(주)이노칩테크놀로지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99	(주)메카포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09년 4월8일	제5차	의결 안건	100	(주)국영지앤엠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01	(주)화성 등 4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02	(주)두림티앤씨 및 아이메카(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03	(주)디지털큐브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04	세방전지(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05	한국통신데이터(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06	롯데관광개발(주) 주식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107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108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109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110	한국거래소 정관 일부변경 승인안
			111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널증권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안 및 영업의 일부정지와 긴급조치 연장 보고
		보고 안건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7	코스피200 옵션 C0904 175.0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 보고
09년4월13일	제1차	서면 의결	110	한국거래소 정관 일부변경 승인안
09년5월4일	제6차	의결 안건	112	(주)인네트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13	(주)KCC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14	(주)쓰리소프트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15	남광토건(주), (주)알텍스, (주)은세텔레콤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과 조치안
			116	(주)보루네오가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17	(주)서부트렉터미날의 애플증권중개(주) 대주주 변경승인 위반 관련 조치 안
		보고 안건	18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7호 "금융상품 : 공시"에 대한 개정결과 보고
			19	KB자산운용(주)의 KTB투자증권(주) 대주주 변경승인 위반 관련 보고
09년5월13일	제7차	의결 안건	118	(주)미디어코프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119	(주)사라콤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안
			120	(주)휴니드테크놀러지스의 분기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21	(주)전북상호저축은행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122	(주)모라리소스의 분기보고서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23	동양메이저(주)의 연결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124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09년5월27일	제8차	의결 안건	125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126	(주)휴리프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27	(주)비엔알엔터프라이즈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28	(주)봉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29	(주)리노셀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30	(주)확인영어사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31	(주)사이버패스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32	(주)에듀언스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33	(주)삼에스코리아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34	유씨아이콜스(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35	(주)한텔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36	케이앤에스홀딩스(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37	(주)두림티앤씨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38	(주)한도하이테크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39	플래닛팔이(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40	(주)청람디지털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41	(주)아이비네트워킹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42	씨앤에이치캐피탈(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43	(주)뉴로테크파마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44	(주)케이앤에스홀딩스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45	넷시큐어테크놀로지(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46	(주)한텔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47	(주)자강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48	(주)케이앤컴퍼니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49	(주)유성티에스아이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50	(주)피엘에이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51	2009 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기업집단 등 선정안
			152	(가칭)맥쿼리삼천리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153	한일시멘트(주)의 칸서스자산운용(주) 대주주변경승인 위반 관련 조치안
			20	칸서스자산운용(주) 임원의 대주주변경승인 위반여부 검토보고

		보고 안건	21	2008 사업연도 중 결합대상계열회사 변동보고
			22	(주)세종나모여행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1차) 조치보고
			23	(주)세종나모여행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2차) 조치보고
09년6월10일	제9차	의결 안건	154	(주)현대스위스삼[舊 (주)중부]상호저축은행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결과 조치안
			155	(주)아이텍앤컴퍼니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감리 결과 조치안
			156	오리엔스금속(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157	현대증권(주)의 출자승인 및 (가칭)현대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 안
			158	(가칭)아이엔지부동산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보고 안건	20	칸서스자산운용(주) 임원의 대주주변경승인 위반여부 검토보고
			24	2007년 하반기 품질관리감리 실시결과 개선권고사항 이행여부 검토 보고
			25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품질관리감리 처리결과 보고
09년6월24일	제10차	의결 안건	159	기업구조조정조합등록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60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61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162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163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164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65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일부개정 승인안
			166	(주)씨모텍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감리결과 조치 안
			167	(주)상보의 분기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68	(주)아이씨코퍼레이션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69	대우전자부품(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70	(주)씨모텍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71	영창실업(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72	(주)룩손에너지홀딩스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73	오씨아이(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74	한국석유공업(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75	(주)제다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76	(주)세라온홀딩스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77	동양이엔피(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09년7월8일	제11차	의결 안건	178	(주)원드스카이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179	씨니전자(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 치안
			180	(주)비엠랜드개발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81	(주)씨앤에스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82	풍천산업(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83	(주)현태금속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84	농업회사법인오담생명환경(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 고 및 조치안
			185	(주)미주랜드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86	(주)잠뱅이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87	(주)완도어패럴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88	굿모닝신한증권(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처리안
			189	(가칭)노무라이화자산운용(주)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90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및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191	흥국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192	뉴엣지파이낸셜증권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93	하나대투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94	미래에셋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95	대신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96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97	대우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98	현대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99	굿모닝신한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200	한국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201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202	리딩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203	엘아이지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204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205	(주)부은선물의 대주주 심사 배제 인정 및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보고 안건	26	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현황에 대한 보고
			206	일몰제 적용을 위한 금융위원회 규정 등 고시 일괄정비안

09년7월22일

제12차

의결
안건

207	현대스위스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208	(가칭)아센다스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209	키움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210	도이치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211	에스케이증권(주)의 글로벌 소프트웨어기업 육성 사모투자전문회사 (가칭)에 대한 출자승인안
154	舊 (주)중부상호저축은행[(주)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의 감사보고 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재상정 안건)
212	(주)글든오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13	(주)에이엠에스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14	(주)위너스인프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15	(주)케이알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16	(주)뉴보텍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17	(주)지디코프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18	(주)네패스신소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19	굿모닝7379등 3개 ELW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20	(주)광명전기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21	(주)인네트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22	네스테크(주) 주식에 대한 이의신청 조치안
223	(주)대한은박지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24	(주)사라콤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25	영풍제지(주)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26	(주)시노팩스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27	(주)테라리소스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28	(주)비엔알엔터프라이즈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29	(주)야호커뮤니케이션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30	(주)에이치원바이오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31	(주)씨앤중공업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32	(주)트라이콤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33	(주)희훈디앤지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34	(주)엑스씨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35	(주)대유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09년 8월26일	제13차		236	(주)블루스톤디앤아이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37	(주)포넛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38	(주)아원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39	(주)정원엔시스템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40	(주)미디어코프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보고 안건	27	기업회계기준서 제104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제정 결과 보고
			28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2117호 "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에 대한 제정 결과 보고
			29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에 대한 제정 결과 보고
			30	"내재파생상품"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2109호 등 개정결과 보고
			3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등에 대한 개정 결과 보고
			32	2009년도 상반기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241	(주)케이디세코(舊 (주)신명비앤에프)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의결 안건	242	(가칭)(주)무궁화신탁의 부동산신탁업 인가안
			243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44	미래에셋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245	하나대투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246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247	엘아이지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248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09년 9월2일	제14차	보고 안건	33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49-55 "분할·분할합병에 관한 회계처리" 개정 결과 보고
		의결 안건	207	현대스위스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재상정 안건)
			249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250	(주)보흥 등 3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51	한라레벨(주) 등 4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52	(주)유진데이터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53	(주)해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54	(주)알에스넷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55	(주)사라콤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56	(주)씨씨에스 및 (주)디씨씨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57	(주)서광건설산업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09년9월16일	제15차		258	(주)프로비타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59	세신(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60	(주)베스트폴로우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61	(주)일경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41	(주)케이디세코(舊 (주)신명비엔에프)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재상정 안건)
		의결 안건	262	우리아비바생명보험(주)의 금융투자업 겸영 인가안
			263	한양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264	부국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265	케이티비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266	솔로몬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267	이트레이드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268	교보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269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업무규정 일부 개정규정승인안
		보고 안건	270	(주)희훈디앤지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결정안
			34	2008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접수내용
			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9-A. 2008~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채무액 월별 증감 추이

☐ 채무불이행 통계는 채무불이행자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채무액은 별도로 집계하지 않음

☐ 금융 채무 불이행자 통계('08~'09년 7월말)⇒ 출처: 은행연합회

(만 명)

	2008년											
	1말	2말	3말	4말	5말	6말	7말	8말	9말	10말	11말	12말
금융채무불이행자	256.0	254.7	252.9	249.8	248.3	245.6	244.1	241.8	240.2	238.2	235.1	227.1
신규등록	3.8	3.6	4.6	4.3	4.8	4.3	4.7	4.3	4.8	5.3	4.3	5.4
해제	6.0	5.0	6.4	7.4	6.3	6.9	6.2	6.7	6.3	7.3	7.4	13.4
순증감	△2.2	△1.4	△1.8	△3.1	△1.5	△2.6	△1.5	△2.3	△1.5	△2.0	△3.1	△8.0

	2009년											
	1말	2말	3말	4말	5말	6말	7말	8말	9말	10말	11말	12말
금융채무불이행자	224.0	221.2	220.5	217.0	214.2	210.7	209.0					
신규등록	4.5	4.9	6.0	6.0	4.7	4.3	5.0					
해제	7.6	7.7	6.7	9.5	7.5	7.7	6.7					
순증감	△3.1	△2.8	△0.7	△3.5	△2.8	△3.4	△1.7					

9-B. 금융채무불이행자 관련 가장 최근의 관련대책 보고서 사본

□ 정부는 신용회복기금을 통해 작년 12월부터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의 (3천만원 이하) 30% 이상 고금리대출을 20% 내외 금리대출로 전환해 주는 전환대출을 실시해 오고 있음

○ '09년 6월 1일부터 금융채무불이행자 중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12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자도 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여 시행중

10. 현재 국내 금융관련 자격증 현황(각 자격별 자격증
소유자, 매년 취득인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A. 공정시장과

☐ 공인회계사와 관련하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증명	등록자 (‘09.8.31. 현재)	매년(12.31. 기준) 등록인원
공인회계사	12,352명	· ‘08년: 11,940명 · ‘07년: 10,877명 · ‘06년: 10,055명 · ‘05년: 9,086명 · ‘04년: 7,879명

B. 금융정책과

☐ 한국 FPSB 국가공인 민간자격 시행 현황

자격명	시행 시작 년도	실시 횟수	접수 인원	응시 인원	합격 인원	합격률	시험 응시 전형료	비고
AFPK (재무 설계사)	2007	9	108,510	84,880	23,931	28.2%	전과목응시 : 5만원 모듈1 응시 : 3만원 모듈2 응시 : 3만원	07년 6월 공 인 후 연 4회 시행중

C. 은행과

☐ 현재 공인 민간자격 시행 현황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공인 민간자격 시행 현황

한국금융연수원 공인 민간자격 시행 현황

(담당자 : 한국금융연수원 배유나 계장 3700-1645)

자격명	시행 시작년도	실시횟수	접수인원	응시인원	합격인원	합격률	시험응시전형료	비고
신용분석사	2002	14	6,933	4,653	991	21.3%	전과목응시 : 5만원 1부 응시: 2만원 2부 응시: 3만원	- 동일시험 2회 접수시 응시전형 료 30% 감면, 3 회 이상 접수시 응시전형료 50% 감면적용
여신심사역	2002	9	322	257	121	47.1%	전과목응시 : 5만원 1부 응시: 2만원 2부 응시: 3만원	
국제금융역	2002	7	940	560	141	25.2%	전과목응시 : 5만원 1부 응시: 2만원 2부 응시: 3만원	
신용위험분석사 (CRA)	1차	7	3,457	1,967	920	46.8%	6만원	
	2차	7	1,170	861	123	14.3%	7만원	
자산관리사 (FP)	2002	16	49,030	31,250	7,375	23.6%	전과목응시 : 4만원 1부 응시: 2만원 2부 응시: 2만원	
계		60	61,852	39,548	9,671	24.5%		

* 신용위험분석사(CRA)자격은 1차시험 합격후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2차시험 합격자가 최종합격자임.

신용정보협회 공인 민간자격 시행 현황

(담당자 : 신용정보협회 기경민 국장 3775-2761)

자격명	시행 시작년도	실시횟수	접수인원	응시인원	합격인원	합격률	시험응시전형료	비고
신용관리사	2006	6	27,675	15,899	4,556	28.7%	06년 30000원, 07년 35000원, 08년 40000원	06년 공인후 연2회 시행중

D. 자본시장과

(단위 : 명)

자격시험 종류	보유자 ¹⁾	09.합격자 ²⁾	08.합격자	07.합격자
증권투자상담사	92,425	4,493	15,344	6,663
파생상품투자상담사	45,572	2,304	7,265	5,252
일임투자자산운용사	32,018	1,918	3,715	1,824
집합투자자산운용사	8,789	1,117	2,117	726
재무위험관리사	1,784	386	297	213
금융투자분석사	63	63	-	-
투자상담관리사	23	23	-	-
증권분석사 1차	387	-	55	61
증권분석사 2차	181	-	23	37
증권펀드투자상담사	174,078	15,819	42,771	6,253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59,457	59,457	-	-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70,265	70,265	-	-
합계	485,042	155,845	71,587	21,029

1) 09.7월말까지 누적

2) 09.1 ~ 7월까지

※ 자료제공 : 금융투자협회

11-A. 저신용자(7~10급) 금융지원 관련 대책회의,
대책보고서 사본

〈첨부 1〉 저신용자를 위한 전환대출(환승론) 확대 시행 보도자료

**11-B. 제도권 금융기관의 총대출 비중 중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비중**


- '07년~현재 매년 반기별 통계

- ☐ 현재 각 은행들은 대출자들에 대한 신용등급을 관리하고 있으나 전체 대출액 중 7등급이하의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비중을 따로 집계하고 있지는 않음

11-C. 가장 최근의 사금융이용 실태조사서 결과 및 향후 조사계획

☐ 사금융 실태조사 결과

〈첨부 2〉 사금융 실태조사 결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금융산업의 선진화
	5. 19(화) 조간부터 보도가능	•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기업금융과		
책 임 자	금융위 배준수 과장(2156-9850) KAMCO 권기선 부장(3420-5230) 문의전화 (국번없이) 1577-9449	담 당 자	금융위 주홍민 사무관(2156-9851) KAMCO 김태수 팀장(3420-5412)
배 포 일	2009. 5. 18(월)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총 3 매

제 목 : 低신용자를 위한 전환대출(환승론) 확대 시행

1. 추진 배경

□ 신용회복기금(자산관리공사)은 작년 12월부터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의 (3천만원 이하) 30% 이상 고금리대출을 20% 내외 금리대출로 전환해 주는 전환대출을 실시해 오고 있음

○ 그동안 신용회복기금의 신용보증(신용등급에 따라 50~90% 보증)을 통해 대부업체, 저축은행 및 캐피탈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하도록 지원

* 6개 은행 참여(가나다順) : 국민 · 기업 · 농협 · 신한 · 우리 · 하나 은행

○ '08.12~'09.5월, 총 5,600명에 대해 전환대출을 지원

□ 지난 5개월 시행 상황의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전환대출 확대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2. 확대 시행 추진 내용

① 보증비율 상향(50~90% → 100%)으로 금리 인하

- 평균 20% → 12%*

* 대출금리는 신용등급별로 차등적용(9.5~13.5%)

② 대상 채무 확대

- 30% 이상 금리대출 → 20% 이상 금리대출
- '08.9.2일 이전 약정 채무 → '08.12월말 이전 약정 채무

※ 단, 담보대출·할부금융대출·신용구매·현금서비스·리볼빙은 제외

③ 지원요건 완화

- 과거 연체기록 제한 완화*

* 최근 6개월 이내 25일 이상 연체자는 지원 不可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자 지원 不可로 완화

- 금융채무불이행자 중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12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자도 포함

④ 상환만기 연장

- 전환대출 만기를 현행 최장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대상 채무액 확대('09.2월, 1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이하)에 따른 채무상환부담을 완화

⑤ 이미 전환대출을 신청하여 종전 조건(금리 20% 내외, 보증 50~90% 등)에 따라 상환하고 있는 자에 대한 적용여부

○ 이번 확대 시행 추진내용과 동일하게 적용(금리 12%, 보증 100% 등)

3. 기대효과 등

□ 경제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층의 금리 부담이 9.5~13.5%로 완화됨으로써 서민생활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 금융채무불이행자 중 성실상환자도 새로이 지원함으로써 금융소외자에 대한 지원 폭을 넓힐 것으로 기대

□ 나아가, 전환하기 전 채권을 가진 금융회사는 회수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산을 조기회수함으로써 신규대출 등 영업수익 기반을 창출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

□ 신청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및 전국 9개 지사 방문

* 1천만원 이하는 인터넷으로도 신청가능

* 문의전화 : (국번없이) **1577-9449번**

※ 전환대출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신용회복기금”(<http://www.c2af.or.kr>) 또는

서민금융지원 포털사이트인

“새희망네트웍”(<http://www.hopen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사금융 실태조사 결과

< 목 차 >

I. 조사개요

II. 사금융 시장 실태조사 결과

1. 전체 사금융 시장 규모
2. 사금융 이용자의 연체 및 제도권 대출 이용 현황
3. 사금융 시장의 특성
4. 사금융 이용자의 특성

III. 정책 시사점

I. 조사 개요

1. 목 적

- 금융소외자의 사금융 이용 현황 및 상환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사금융 실태조사를 실시
 - 사금융시장에서의 공급자(등록 대부업체)와 수요자(대부 이용자) 측면에서 각각 조사
 - ➡ 지원 가능한 대상의 범위, 지원한도 등을 정하고, 지원 대상자 수, 필요 예산 등을 산정하기 위함

2. 경 과

① 등록 대부업자 실태조사 ('08.4월 : 1개월)

- 전체 등록업자 대상 : 전국 약 18,000개 등록 대부업자를 서면으로 조사
 - * 자료분석이 가능한 7,058개 대부업체의 자료를 기초로 분석
- 일부 현장조사 : 247개* 등록 대부업자를 방문하여 업무 담당자 및 임원 면접
 - * 대형업체 67개, 중소법인 80개, 개인업체 100개

② 사금융 이용자 실태조사 ('08.4월 : 1개월)

- 전국민 조사 : 1만명 전화조사 (한국갤럽, 미디어리서치)
- 사금융 이용자 조사 :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3,000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
- 기존 데이터 활용 : 한신평정, 한신정 CB에 등록된 약 3,500만명의 대출정보 분석

II. 사금융 시장 실태조사 결과

1. 전체 사금융 시장 규모

① (사금융 이용자) 전국민(20세이상 3,500만명)의 5.4%인 189만명이 현재 사금융을 이용

- 이중 49.9%는 등록 대부업체, 17.6%는 무등록 대부업체, 32.4%는 지인으로부터 차입

* 사금융 이용자중 128만명이 대부업체(등록+무등록)를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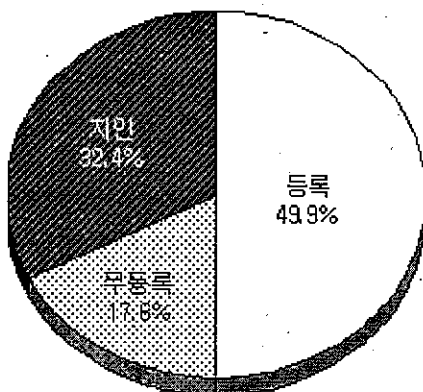
② (사금융 시장규모) 약 16.5조원(189만명×873만원*)으로 추정

* 1인당 평균 사금융 이용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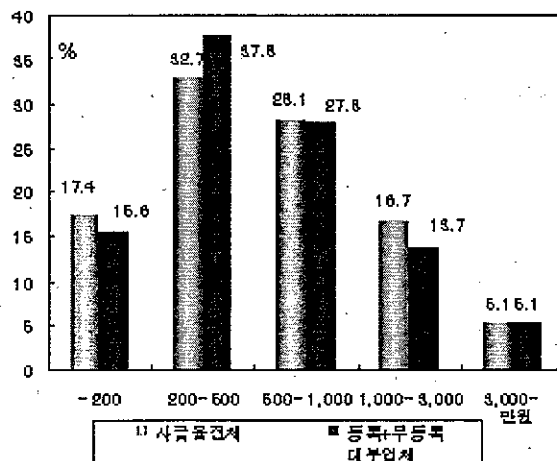
- 이중 지인을 통한 차입을 제외한 등록 및 무등록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규모는 총 10.0조원 (127.6만명×783.4만원*)

* 등록 및 무등록 대부업체 이용자의 평균 사금융 이용액

<사금융 이용 형태>



<사금융 대출 금액>



2. 사금융 이용자의 연체 및 제도권 대출 이용 현황

① (사금융 연체) 사금융 대출자중 연체자의 비율은 약 26.4%

* CB사에 등록된 대부업체 이용자의 연체율(23%)와 무등록 대부업체 연체율(대부업체 연체율의 1.55배=36%)의 평균

- 연체된 사금융 채무중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가 46.5%로 다수이나, 1년 이상 연체된 채무도 29.4%에 달함

② (제도권 대출 이용) 사금융 이용자중 57.4%가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을 이용

- 사금융 이용자의 평균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규모는 3천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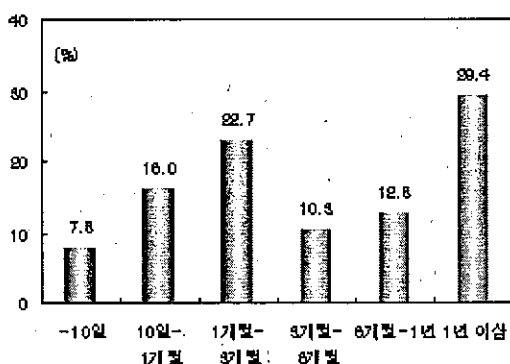
*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중 신용대출 이용자의 비율은 68.5%
(신용대출의 경우 1천만원 이하 대출자가 53.0%, 3천만원 이하가 84.7%, 5천만원 이하는 91.7%로 평균신용대출 금액은 1,900만원)

-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자중 13.7%가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을 연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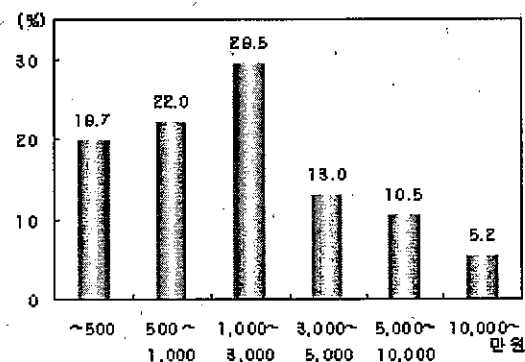
* 전체 국민의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 연체율(3개월 이상 연체)은 5.2%

- 이중 3개월 이하 연체자는 32.2%이고, 3개월~1년 연체는 29.2%, 1년이상 연체는 37.2%

<사금융 연체일수>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규모>



3. 사금융 시장의 특성

① (이자율) 사금융 대출의 이자율 평균은 연 72.2%

○ 연 30% 이하 대출이 17.8%, 연 30~49%가 33.9%, 연 49%이상 대출이 48.1%

* 등록 대부업체 이자율 평균이 연 68%인 반면, 무등록 대부업체는 이보다 높은 연 78%

** 대부업법상 이자한도 : 49% ('07.10.4일부터 시행)

*** 사금융 이자율이 법상 이자율보다 크게 높은 것은 사금융 이용자들이 법 개정후 이자가 낮아진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용자는 자신이 부담하는 금리를 높게 인식하기 때문(등록 대부업체 조사결과 신용대출 금리는 약 37~44%로 조사됨)

② (이용업체수) 사금융 이용자는 평균적으로 2곳에서 사금융을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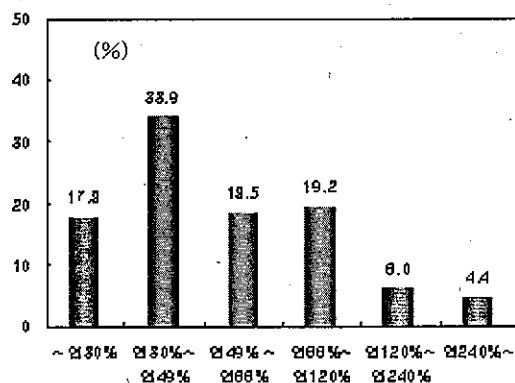
* 이용업체수 : 1군데(48.5%), 2군데(19.4%), 3군데(17.2%), 4군데(6.6%), 5군데 이상(5.1%)

③ (대출형태) 사금융 시장의 76.0%는 개인 신용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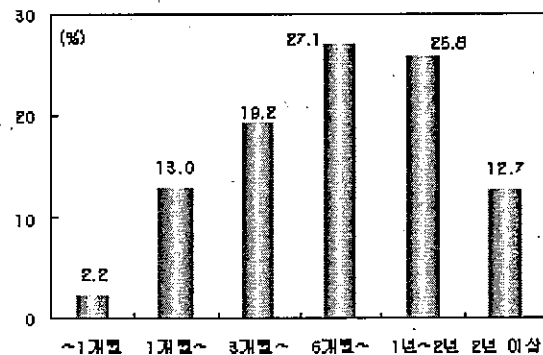
* 개인 담보대출은 15.4%, 타인신용보증 대출은 8.6%

④ (상환기간) 일반적인 사금융 상환기간은 3개월~1년(46.3%)이지만, 12.7%는 상환기간이 2년 이상이 소요되기도 함

<사금융 연 이자율>



<사금융 평균 상환기간>



4. 사금융 이용자의 특성

① (사금융 이용계기) 주로 가계 생활자금(47.4%)이나 사업(39.6%)을 위해 사금융을 이용

- 가계생활자금 용도로는 생활비 비중이 46.0%로 가장 높고, 교육비(24.5%), 병원비(14.9%) 순임

② (상환의지) 대다수 사금융 이용자들은 상환의지가 비교적 높고, 상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스스로 긍정적으로 평가

- 자력(73.6%) 또는 주변사람들의 도움(10.4%)으로 상환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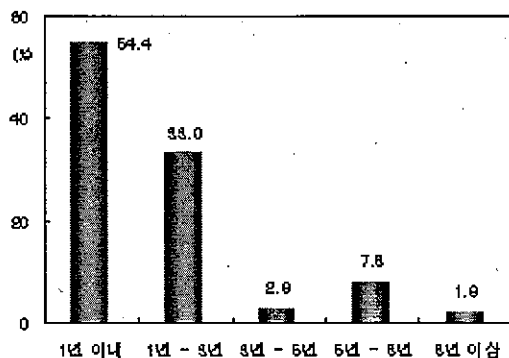
* 기타답변 :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음(6.2%), 추가대출로 상환(3.2%), 새로운 신용회복 대책 기다림(3.2%), 개인회생이나 파산 활용(1.8%), 현행 신용회복 기구 이용(1.5%)

- 사금융 연체자의 경우에는 36.5%만이 상환할 수 있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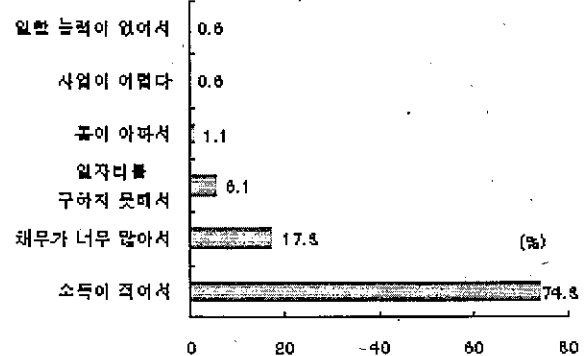
- 이들중 1년 이내에 상환 할 수 있다고 한 이용자는 54.4%

- 상환할 수 없는 이유로는 대체로 소득은 있지만 소득규모가 작거나 소득대비 채무가 많기 때문으로 나타남

<사금융 연체 대출금 상환시기>



<연체 대출금 미상환 이유>



③ (상환능력) 사금융 연체자의 경우 대출상환 가능금액은 월평균 5만원, 정상상환자는 약 62만원

* 연체자 가구 월평균 가구소득은 166만원, 정상 상환자 월평균 가구 소득은 223만원, 월평균 생활비는 161만원

- 연간 가구소득 대비 총채무액(제도권+등록+무등록)은 100% 미만인 69.8%이고, 100~120%가 5.2%, 120% 이상이 25%

- 사금융 이용자중 6.3%는 무직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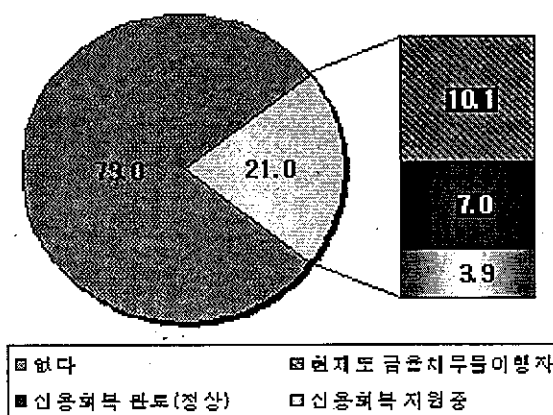
- 현재, 개인의 월평균 부채 상환액은 73만원으로 나타남

④ (금융채무불이행자) 사금융 이용자중 21%는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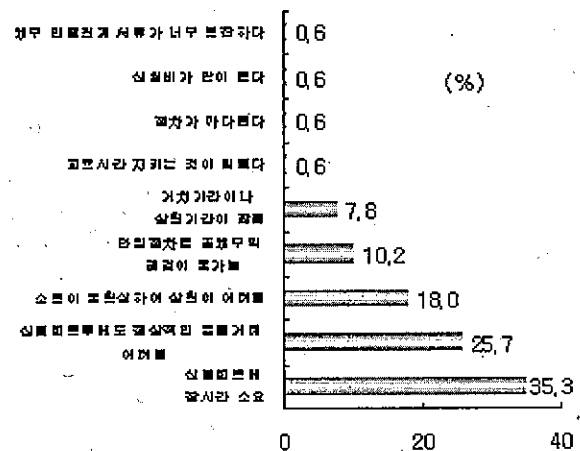
- 이중 현재도 금융채무불이행인 경우는 48.3%, 신용회복 지원 중은 18.4%, 신용회복을 완료하고 정상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는 33.1%로 나타남

- 신용회복 지원제도 이용과 관련한 불편 사항으로 '신용회복에 장시간 소요'(35.3%), '신용회복 이후에도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움(25.7%)' 등을 지적

<금융채무불이행자 현황>



<신용회복 지원제도 불편사항>



⑤ (기초수급자) 제도권 금융기관 또는 사금융을 통한 대출이 있는 자중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1.5%인 27만명

*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06년 현재 약 153만명으로 전국민의 3.2% 이지만 소득이 낮아 대출이 어려워 대출자중 비중이 낮음

○ 제도권 금융기관 및 사금융 대출을 연체중인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10.3만명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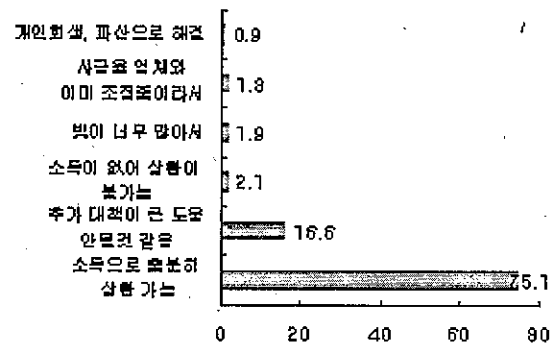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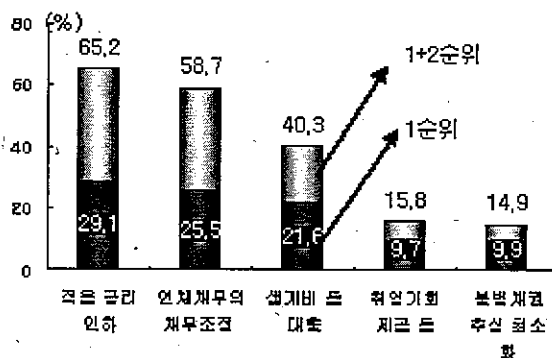
- 제도권 금융기관 및 사금융 대출 연체자(286만명)의 약 3.6%, 대출중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약 38%

⑥ (정부대책) 정부의 추가적인 신용회복 대책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61.6%)이 많은 반면, 추가대책 참여 의향은 다소 낮음 (46.2%)

○ 사금융 이용자들이 희망하는 추가 신용회복 대책은 '적용금리 인하', '연체채무의 채무조정(장기분할 상환)', '생계비 대출' 순으로 나타남

○ 추가 신용회복 대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는 '본인의 소득으로 충분히 상환 가능'하기 때문이 대부분 (75.1%)

<희망하는 추가 신용회복 대책> <신용회복 추가대책 비참여 이유>



○ 또한, 정부 자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23.5%가 참여의향을 밝힌 가운데, 창업관련 지원을 주로 희망

*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 37.3%,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금 대출 32.6%, 중소기업 취업지원 13.3%, 직업훈련 11.9%, 공공근로 4.7%

Ⅲ. 정책 시사점

1 금융소외자 지원 대상수 추정

전 국 민 4,700 만명	대출 있음 (1,774 만명)	제도권 대출만 있음 (1,646만명)	대부업체 대출 있음(128만명)	
			제도권 대출 있음 (71만명)	제도권 대출 없음 (57만명)
		정상상환 (1,339만명)	정상상환 (49만명)	정상상환 (42만명)
		금융채 무불이행 (240만명)	금융채 무불이행 (20만명) -둘다연체(17만명) -제도권만 연체(3만명)	대부업체 대출 연체 (15만명)
		신용회복중 (67만명)	대부업체 대출만 연체 (2만명)	
		대출없음 (2,926만명)		

➔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규모 및 재정투입 여부
및 방식 등은 6월중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

② 대부업체의 정책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 채무재조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신청 대상자의 모든 제도권·사금융 채권을 일괄하여 조정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① 대부업협회와 공동으로 채권매각 등 대부업체가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 노력
 - ② 대부업체로부터 일괄하여 채권을 매입함과 동시에 채무조정 대상자의 다른 사금융 채권도 조정할 수 있도록 개별 매입을 추진하며
 - ③ 불법대부업체의 참여등을 위해 신복위, 대부업 협회 등 민간기구의 채무조정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③ 매입대상 연체채권의 범위

-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 3개월 이상 연체인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로서 금융활동이 제한되므로
 - 금융채무불이행자를 채무조정 대상으로 고려
- (대부업체 대출) 대부업체 연체채권(3개월 이상 연체)중에서 사실상 채권가격이 충분히 낮게 형성되고, 대부업체들도 매각의사를 밝히고 있는 6개월 이상 연체 채권이 정책대상이 될 가능성이 큼
 - * 대부업체의 경우 6개월 이하의 연체채권은 추심을 통해 어느정도 상환받을 수 있어 매각의사가 없음

④ 사금융 이용자의 상환의지 및 상환능력

- 실태조사 결과 대체로 사금융 이용자들은 **상환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
 - 다만, 사금융 연체자의 경우 소득에 비해 채무규모가 커 채무 **상환이 어렵다**는 답변이 다수
- ➔ 연체 채무자에 대해서는 **소득규모에 맞는 상환이** 가능하도록 채무를 재조정하여 채무 상환 가능성을 높일 필요

⑤ 사금융 이용자들의 정책 희망사항

- 사금융 이용자들은 **적용금리 인하** 방안을 가장 선호
 - 현재 사금융시장에서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대출을 제도권 금융기관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조치가 필요
- 또한, 지원제도 시행시 혜택의 폭을 넓히고, 이용을 편리하게 하며,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

⑥ 채무외의 근로 및 창업지원 병행

- 현재 사금융 이용자중 **실직자의 비율은 약 6.3%**로 실질적인 자활지원과 도덕적 해이 최소화를 위해서는 이들의 상환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지원이 병행될 필요
 - 사금융 이용자들은 자활 지원과 관련하여 근로보다는 **창업 지원**을 희망
 - 지원제도 참가자중 희망자에 대해서는 창업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창업교육을 완수하고 의지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창업자금을 지원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12-A. 2008~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채무재조정 실적, 소액금융지원, 취업지원, 신용관리교육실적

□ 신용회복 상담

(단위 : 명)

구 분	'08년	'09.1~8월	누 계
내방상담	130,755	129,250	1,232,317
전화상담	292,909	284,655	1,685,155
인터넷상담	22,909	16,540	176,763
합 계	446,573	430,445	3,094,235

□ 채무조정 확정자(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모두 포함)

(단위 : 명)

구 분	'08년*	'09.1~8월**	누 계
확정자	68,360	56,611	773,155

* 국민연금을 활용한 신용회복지원 : 6,626건 포함(2008년 6월 2일 ~ 10월 31일)

** 사전채무조정(Pre-Workout) : 4,561건 포함(2009년 4월 13일 시행)

□ 확정자 중 채무재조정

(단위 : 명)

구 분	'08년	'09.1~8월	누 계
재조정 신청자	41,061	31,567	255,123

* 채무조정 확정자 중 개인적사정으로 다시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 신용관리교육

(단위 : 명)

구 분	대 상	'08년	'09.1~8월	누 계
이행교육	확정자	68,360	56,611	773,155
신용교육	중·고생	66,476	22,116	417,025
	일반인	202,711	153,128	836,890
합 계		337,547	231,855	2,027,070

□ 취업자

(단위 : 명)

구 분	'08년	'09.1~8월	누 계
구직등록	6,783	6,006	95,612
취업자	1,607	1,129	13,625

□ 소액금융지원실적

(단위 : 명, 천원)

구 분		'08년	'09.1~8월	누 계
상담		11,638	10,058	36,029
접 수		5,131	9,073	15,749
대출	인원수	4,488	8,655	14,328
	금 액	13,751	26,271	43,544

12-B. 신용회복위원회의 2009년, 2010년 사업계획서

☐ 2010년도 사업계획은 아직 미정

〈첨부 3〉 '09년 신용회복위원회 업무계획

〈첨 부 3〉

2009년 업무운영계획

2009. 3월



신용회복위원회

2009년 목표

신용관리전문기구로서의 성장기반 확립



<중점 추진 과제>

- | | |
|---|--------------------------|
| 1 | 신용회복지원 극대화를 위한 종합상담기능 강화 |
| 2 |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 |
| 3 | 이행관리업무 강화를 통한 중도탈락 최소화 |
| 4 | 신용관리교육 확산 및 취업지원 확대 |
| 5 |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경영기반 구축 |

□ 신용회복지원 극대화

- 2009년 중 과중채무자 85천명으로부터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접수하여 이 중 80천명에 대해 채무조정을 실시
- 신용회복지원 확정자 중 일시적 자금난에 처한 연체채무자에 대해 재조정을 지원하여 중도탈락을 사전 예방

2009년도 채무조정 목표

구 분	2008년	2009년 목표	증 감
신규	접수	85천명	7천명
	채무조정	80천명	10천명
재조정	접수	40천명	△1천명
	채무조정	35천명	△6천명

② 상담 네트워크 확충

- 지방 중소도시 거주자의 신용회복지원 확대를 위해 2009년 중 지방상담소 2곳 신설
 - 가급적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의 사무공간을 임차하여, 임차료 및 관리·유지비용을 최소화
- 노동부 산하 고용지원센터와의 업무 연계를 통해 고용지원센터내 신용회복지원상담창구 설치를 추진(1인 상담소 형태로 운영)
- 법률구조공단 및 지활센터 등 저소득층 지원기관과 연계를 통한 신용회복 상담 추진

③ 제도개선을 통한 지원 효율성 제고

- 무분별한 파산 신청에 따른 사회적비용 증가, 국가경쟁력 약화 등을 방지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의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사전상담제도의 도입을 관계기관 앞 적극 건의
- 법적구제제도 신청전 민간기구와의 사전 상담을 통해 채무자의 환경을 진단하고 최적의 신용회복 지원방안 안내
- 변제금 상환방식을 체증식, 체감식 등으로 다양화 하여 채무자가 자신의 변제능력에 적합한 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 대부업체의 협약가입 확대 추진

- 대부소비자금융협회 등을 통하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대부업체의 협약가입을 제도와 하는 방안 검토

○ 채무자의 부채현황, 가계지출구조 등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가칭 「신용상담보고서」 발급 제도 실시

※ 금융회사 및 법원 등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조성

○ 위원회 주관 「신용상담사」 자격제도를 시행하여 위원회 직원을 전문 신용상담사로 양성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전파

※ 공인자격제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

4 위원회 기능 및 역할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 정부의 금융소외계층 지원정책 및 위원회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

- 서민 이용도가 높고, 수송분담율이 제일 큰 지하철 매체를 중점 활용하고 지방 중소도시에는 버스 광고 집중 실시

- 라디오 광고, 중소기업체 및 영세사업체 대상 DM 발송

- 지방자치단체 전광판을 적극 활용하고, 회원기관이 채무자에게 발송하는 미납안내장에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안내하도록 협조 요청
- 사회복지관 및 자활센터 등을 통한 홍보 강화
- 신용회복지원제도와 관련한 **학술대회, 세미나** 등의 참여 및 오프니언 리더들과의 교류활동을 통해 위원회 제도의 효용성을 적극 홍보

2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

Ⅰ 소액금융지원 계획

- 2009년 중 7,800명에 대하여 총 240억원을 지원(1인당 평균 300만원)
- 서류 간소화 및 심사기간 단축

2009년도 소액금융지원계획

구 분		2008년	2009년 목표	증 감
지원	명	4,488명	7,800명	3,312명
	금액	138억원	240억원	102억원

2]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기금조달방안 마련

- 소액서민금융재단의 복지사업재원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지속 협의
 - 2009년 중 150억원 이상을 신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
- 지방자치단체와 업무 협약을 통해 지역내 저신용등급자 및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긴급금융을 지원하자는 지역서민금융지원제도 확대 추진
 - 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대상자 선정 및 대출실행은 위원회에서 전담
- 금융회사 및 일반기업체, 기타 사회단체 등의 사회공헌활동 기금이 금융채무불이행자를 위한 신용회복 지원 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지속 협의

3] 부실 예방을 통한 대손 최소화

- 서울보증보험 개인신용보험 가입한도를 현행 연간 200억원에서 24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여 부실에 따른 위험 부담 완화
- 대출전문 심사역을 자체 양성하여 신청인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 차단하고, 부실을 예방
 - 외부기관 연수 및 자체교육 등을 통해 대출전문 심사역 양성
- 대출심사시 과거통계를 기반으로 한 CSS(Credit scoring system)평점을 활용하여 부실 예방

3 이행관리업무 강화를 통한 중도탈락 최소화

1 상담센터 이행관리인력 확충

- 상담센터 응대율을 90%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인바운드 상담원을 증원하는 한편, 아웃바운드 상담원을 확충하여 변제금 납입 안내 업무를 한층 강화
- 인바운드 상담 도급업체를 복수로 운영하여 상호 경쟁을 통한 생산성 향상

2 효율적인 변제관리시스템 구축

- 미납자별 실효가능성을 고려한 차등화된 안내시스템(TM, DM 등) 구축
 - 신규미납발생자에 대하여 기존 음성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한 안내방식에서 전화상담원에 의한 안내 방식으로 전환
 - 유선상담을 통해 미납사유를 파악하고 장기미납으로 전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집중관리대상자로 분류하여 미납사유 해소시까지 정기적인 이행상담 실시
- 이행관리 인력에 대해서는 성과관리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달성도에 따라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여 하여 생산성을 극대화

- 성실변제자에 대한 우대제도(신용정보삭제, 소액금융지원,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지원 등)를 적극 안내하여 변제금 납입의지를 제고

3 변제금 예납율 증대 및 CMS자동이체 등록 지속 확대

- 변제금 예납율을 2008.10월말 83%수준에서 2009년말 90%이상으로 증대시키는 한편 CMS 자동이체율을 2008.10월말 46% 수준에서 2009년말 50% 이상으로 확대하여 성실변제를 유도

4

신용관리교육 확산 및 취업지원 확대

1 온·오프라인 신용관리교육 확대

- 전국 중·고교생, 금융소외계층 및 예비사회인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신용관리교육 확대
- 신용관리교육용 월간잡지를 제작하여 각급 학교, 공공도서관, 군부대, 공공기관 및 공공장소에 무료 배포
- 쌍방향 소통이 자유로우며, 다양한 콘텐츠 활용이 가능한 인터넷 포털을 제작

② 외부기관과 연계협력활동 강화

-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경제교육협의회 등 외부협력사업에 함께 참여하고, 실무협의회, 세미나 등을 통한 정보교류 활성화
- 경향신문사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에코에듀(Eco-Edu)」 프로젝트 지속 실시

③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

- 사내강사를 대상으로 강사양성 위탁연수 실시 및 워크숍 등을 통해 강사의 역량을 극대화
- 일반인, 군인,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신용관리교육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신용관리교육 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④ 취업지원 활성화

-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중소기업청 등의 사업과 연계하여 위원회 추천인력 공급 확대
- 지방자치단체, 지역고용지원센터, 지역상공회의소, 신용보증기금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으로 지방 거주 구직자의 취업지원을 활성화

① 조사연구 및 정부정책과의 공조활동 강화

- 신용회복기금과의 연계협력지원체제 구축
 - 신용회복기금의 협약가입 및 금융소외지종합지원네트워크를 통한 효율적 지원방안 마련
- 신용관리 및 신용회복지원제도와 관련된 법률 및 금융소외자 지원정책 등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해 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 모색
- 해외 선진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조사 연구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 마련

② 고객만족도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 신용회복지원 상담 및 신청자를 대상으로 상담 후 전화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상담 만족도 측정
- 상담센터 상담원을 대상으로 수시 전화 모니터링 실시하여 상담원의 CS수준을 제고

3 인제육성 및 바람직한 조직문화 형성

- 금융연수원, 한국생산성본부 등 외부교육기관 연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신용관리상담 및 심사관련 전문가 육성을 위한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지원
- 부서별 자체 직무연수 강화 및 부서간 연계교육 실시
- 위원회 미션 및 비전, 전략방향과 전략과제를 공유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직원연수 및 워크샵을 활성화

4 지부·상당소 책임운영체제 도입

- 업무운영계획에 근거한 부서별 업적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와 연계한 인사평가시스템 구축
- 업무수행실적 등을 고려한 근무평정 시스템 개편 및 성과보상 확대

12-C. 부실채권정리기금 잔여재산중 금융회사 잉여금의 법적 성격, 발생경위, 금융회사 배분현황, 배분당시 잉여금 총액

□ 금융회사 잉여금의 법적성격 및 발생경위

- 2007.12.21 개정된 자산관리공사법(부칙 제2조 제5항)에 의거 기금 잔여재산을 공적자금상환기금 및 금융회사의 출연비율(3.5조원 : 0.6조원 = 86% : 14%)에 따라 배분하되
- 재계산을 거쳐 잉여발생이 확실시 될 경우는 기금운용기한 종료(2012.11.22)전이라도 조기반환이 가능

▶ 자산관리공사법 부칙 제2조 제5항 ◀

제2조(기금의 운용기간등)⑤기금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운용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과 인수자산의 정리 등을 완료하여야 하며, 운용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잔여재산을.....출연비율 등을 감안한 처리기준에 따라 출연 등을 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한 결과 운용기간 종료일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된 잔여재산의 일부를 운용기간 종료 전에 반환할 수 있다.

□ 금융회사 배분현황

- 공적자금상환기금에는 2007년 및 2008년 각각 3조원씩 총 6조원을 반환하고, 2008년 금융회사에 9,814억원을 반환

(단위 : 억원)

구 분	출연금		잔여재산 조기반환		
	출연액	비율	07년	08년	계
공적자금상환기금	35,057	85.94%	30,000	30,000	60,000
금융회사	5,734	14.06%	-	9,814	9,814
계	40,791	100%	30,000	39,814	69,814

* 금융회사별 잉여금 반환내역은 불임. 참조

□ 배분당시 잉여금 총액

○ '07년 반환당시 잉여금 총액 : 3.2조원

* 공적자금상환기금 반환(3조원) : 공적자금상환재원으로 활용

○ '08년 반환당시 잉여금 총액 : 4.5조원

* 공적자금상환기금 반환(3조원) : 공적자금상환재원으로 활용

* 금융회사에 반환 (9,814억원) : 신용회복기금에 자체 출연

붙임

금융회사별 잉여금 반환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출연금액	출연비율	반환금액
예금보험공사	77,860,000	13.6%	133,265,555
정리금융공사	84,760,000	14.8%	145,075,628
경남은행	5,650,000	1.0%	9,670,568
광주은행	5,060,000	0.9%	8,660,721
국민은행	32,330,000	5.6%	55,336,185
기업은행	23,850,000	4.2%	40,821,776
농협중앙회	20,000,000	3.5%	34,232,098
대구은행	10,220,000	1.8%	17,492,602
부산은행	8,280,000	1.45%	14,172,088
산업은행	60,010,000	10.5%	102,713,408
수출입은행	10,000	0.05%	17,116
수협중앙회	4,180,000	0.7%	7,154,508
신한은행	59,330,000	10.3%	101,549,517
씨티은행	3,690,000	0.6%	6,315,822
하나은행	69,200,000	12.1%	118,443,057
외환은행	36,680,000	6.4%	62,781,666
우리은행	50,660,000	8.8%	86,709,903
전북은행	3,130,000	0.5%	5,357,323
제주은행	2,670,000	0.5%	4,569,985
금호종금	1,320,000	0.2%	2,259,318
동양종금	4,760,000	0.8%	8,147,240
메리츠종금	140,000	0.1%	239,625
우리투자증권	4,210,000	0.7%	7,205,857
서울보증보험	5,380,000	0.9%	9,208,434
합 계	573,380,000	100%	981,400,000

13-1. 생보사 상장위원회 위원 명세, 위원회 개최현황, 각 회의별 안건

□ 상장자문위원회는 06년부터 거의 1년에 걸쳐 공청회 및 세미나 등 다양한 의견청취 그리고 50여 차례에 걸친 내부회의를 통해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심층적 연구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상장자문위원회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산하에 설립된 위원회로, 금융위원회에는 회의록 등 관련 자료가 없음

※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회의 과정에서 개별 위원들 간에 제기되었던 구체적인 의견이 공개되는 것은 사적 보호차원에서 적절치 않다는 입장

<붙임> 상장자문위원회 구성 및 이력사항
(한국 증권선물거래소 제공)

<참고>

상장자문위원회 구성 및 이력사항

성명	전공 및 대상자유	직함	이력
이정한	법률	태평양 변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대 법학과 제27회 사시합격 태평양 변호사
한기정	법률	이화여대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대 법학과 이화여대 법학교수
정민근	회계	하나회계법인 부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대 경영학과 공인회계사 하나회계법인 부대표
박종수	회계	영화회계법인 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균관대 경영학 미국공인회계사 영화회계법인 상무이사
오창수	계리	한양대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세대 학사 美보험계리인회 회원 한양대 디지털경영학부 교수
안동현	재무	서울대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려대 경영학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나동민	보험	KDI 연구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어대 법학과 KDI 금융경제팀 연구위원
정세창	보험	홍익대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강대 경영학과 홍익대 상경학부 교수
정학봉	증권/자본시장	증권선물거래소 본부장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대 무역학과 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 시장본부장보

13-2. 생보사 상장과 관련한 주요 쟁점 정리

- 상장자문위원회는 생보사 상장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제출하였으며,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이를 기초로 유가증권상장규정을 개정

① 생보사의 성격 관련

- 국내 생보사는 「법률상·실질적인 운용상 주식회사」이며 계약자는 채권자

※ 과거 보험사 파산시 계약자가 보험금 삭감 등 경영리스크를 부담한 사례는 없었으며, 과거 은행, 손보사 등도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으나, 상호회사 논란이 없었습니다.

② 계약자 배당의 적정성 관련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계분석모형(Asset-Share방식)에 의거 분석한 결과, 그간 '충분한 배당'이 이루어졌음

- 세계적인 계리법인(틸링하스트)에 검증을 의뢰한 결과, 「자문위 모형의 가정·방법론 및 결론이 적정하며 국제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회신 받음

※ 상장자문위의 Asset-Share모형의 가정, 방법론 및 결론에 대해 공개(06.12월 보험학회 세미나)

③ 내부유보액의 성격 및 처리 관련

- 내부유보액(삼성 878억원, 교보 662억원)은 '계약자에 대한 부채'이며, 상장 전에 부채계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90년 재평가처리지침상 내부유보액은 자본전입이 불가능하고, 자기 자본 산정시 제외되며, 외국의 경우에도 계약자 몫의 미할당잉여금을 자본계정에 계상하나 자본으로 인정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④ 장기투자자산의 평가이익 배분

- 부동산 재평가이익 등은 미실현이익인 만큼 상장前에 이를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것은 회계기준 등에 위배되고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차원[※]에서 수용이 곤란하였음

※ 추후 부동산등 가격 하락시 계약자에게 되돌려 받는 것이 불가능

13-3. 상장요건 충족한 생보사 현황, 충족하지 못한 생보사 현황 및 이유

- 회사의 유가증권 상장요건은 ① 규모 요건, ② 분산 요건, ③경영성과 요건, ④안전성 및 건전성 요건으로 구성
 - 경영성과 요건 이외 다른 요건은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경영성과 요건은 매출액 및 이익 기준과 매출액 및 기준시가총액 기준으로 대별되는데
 - 매출액 및 이익 기준 적용시 2008사업년도말 기준으로 22개 생보사중 5개사*만 상장요건을 충족
 - * 신한, 우리아비바, 동양, 푸르덴셜, 라이나
 - 대부분의 생보사는 FY2008 기준으로 영업손실을 시현함으로써 상장요건을 미충족
 - 다만, 매출액 및 기준시가총액 기준 적용시 AIA생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보사가 상장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
 - * 해외 보험사 국내 지점으로 주식회사 요건 미충족

※ <붙임>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준

<참고>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준

상장요건		상장기준
규모 요건 (모두)	기업규모	- 다음 중 하나 충족 ① 자기자본 100억원 이상 ② 기준시가총액 200억원 이상 * 기준시가총액 = 공모가격×상장예정주식수
	상장주식수	- 100만주 이상
분산 요건 (모두)	소액주주 소유주식수	- 다음 중 하나 충족 ① 소액주주소유비율 25%이상 ② 공모주식수 25% 이상 ③ 자기자본 500억이상 법인은 10% 이상 공모하 고 자기자본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주식 발행
	소액주주수	- 1,000명 이상
	의무공모	- 상장예비심사 청구후 5% 이상 & 10억 이상 공모
	양도제한	- 발행주식에 대한 양도제한이 없을 것
경영 성과 요건 (택1)	매출액 및 이익 등	- 최근 매출액 300억원 이상 및 3년 평균 200억원 이상 & - 최근 사업년도 영업/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 실현 & - 다음 중 하나 충족 ① ROE : 최근 5% & 3년 합계10% ② 이익액 : 최근 25억원 & 3년 합계 50억원 ③ 대형법인 : {최근 ROE 3% or 이익액 50억원}& 영업현금흐름이 양(+)일 것 * ROE 및 이익액은 영업/경상/당기순이익 중 적은 금액 기준
	매출액 및 기준시가총액	- 최근 매출액 500억원 이상 & - 기준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매출액 및 기준시가총액 및 영업현금흐름	- 최근 매출액 700억원 이상 & - 기준시가총액 500억원 이상 - 최근 영업현금흐름 20억원 이상
	영업활동기간	- 설립후 3년 경과 & 계속적인 영업활동
안전성 및 건전성 요건	감사의견	- 최근 적정 & 그 이전 2년간 적정 또는 한정
	합병 등이 있는 경우	- 합병 등이 있는 경우 당해사업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정
	최대주주 변경 제한	- 상장예비심사청구일 이전 1년 동안 최대주주 의 변경이 없을 것
	매각제한 (보호예수)	- 최대주주 소유주식 & 상장예비심사청구일 이전 1년 이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양수한 주식 : 상장후 6개월 - 상장예비심사청구일 이전 1년 이내 제3자배정 신주 : 발행일로부터 1년

13-4. 현재 상장 추진중인 회사 및 진행 경과

- 동양생명은 국내 주간사* 및 해외주간사**를 선정하여 '09.6.4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였으며, '09.7.22.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여 10월 중으로 상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음

* 대우증권(대표주간사), 굿모닝신한증권, 한화증권(공동주간사)

** 모건스탠리, 크레딧스위스, 다이와증권

14. 금융소비자보호 전문 감독기관 설립 관련하여, 미국이 준비중인 ‘소비자금융보호감독청’ 과 유사한 독자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관 설립 필요성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 금융소비자 보호강화라는 정책 방향에는 적극 동의하며 앞으로 이 부분에 보다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필요
- ☐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강화는 체제·기구 뿐만 아니라 제도 및 인식·관행 등 다양한 문제가 얹혀 있는 사안인 만큼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

15-A. 재취업자 현황 : 성명, 퇴임당시 소속부서와
직위, 재취업 직장명·직책 명시

성명	직위(직급)	퇴직일자	재취업 직장명·직책
○○○	부위원장(차관급)	08.03.13	LS네트웍스 고문
○○○	금융정보분석원장(고위공무원)	08.03.28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	부이사관	09.03.26	한국자금중개 전무
○○○	서기관	09.05.15	신영증권 상무이사
○○○	부이사관	09.09.10	SK C&C 상무

15-B. 2006년 이후 금융위에 접수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 3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 사본, 첨부한 의견서 사본, 동조
2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통지서

☐ 별도 제출

15-C. 2006년 이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금융위의 취업승인요청서 사본, 이에 첨
부한 의견서 사본

☐ 해당사항 없음

16. < K-IFRS 관련 >

- ① 현재 채택중인 상장회사 수 및 비율
- ② 도입결정 경과
- ③ 도입결정시 참고한 영향분석 자료 및 관련 용역 등 참고자료
- ④ EU, 미국, 일본, 독일, 인도, 중국의 도입일정
- ⑤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점 분석

① 현재 채택중인 상장회사 수 및 비율('09.9월 현재)

- 정부는 '회계기준 단일화'라는 글로벌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한국의 회계 투명성 및 국제 신인도 제고를 위해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로드맵"을 발표('07.3)하였습니다.
- 로드맵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및 금융회사는 2011년부터 IFRS에 따라 회계 처리하여야 하며, IFRS를 일찍 적용하는 것을 희망하는 기업은 2009년부터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 2009년 6월말 현재 주권상장법인의 45%에 해당하는 700개 이상의 기업들이 IFRS 도입 준비 중이며, 13개 회사는 이미 실제로 IFRS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② 도입결정 경과

- 금융당국(당시 금감위, 재경부 및 금감원 등)은 회계기준 단일화라는 글로벌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한국의 회계 투명성 및 신인도 제고를 위해, 民官논의를 거쳐 「국제 회계기준(IFRS) 도입 로드맵」을 발표('07.3)하였습니다.

③ 도입결정시 참고한 영향분석 자료 및 관련 용역 등 참고자료

- IFRS에 대한 도입결정시 참고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목	연구기관	주책임자	발표시기
한국회계비전과 구현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회계연구원	황윤식	2003.08
회계투명성과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능동적 전략	"	서정우	2003.10
회계비전의 구현 및 회계기준 국제화 전략의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의 모색에 관한 연구	"	이명곤	2004.10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리나라 회계기준의 정립방향 : 국제회계기준의 전면수용과 대책	한국회계학회 및 한국회계연구원	정혜영	2005.05
국제회계기준의 수용방안 - 수용방안별 장단점을 중심으로	"	오준환	2005.05
회계기준의 다층화전략	한국회계연구원	윤승준	2005.09
국제회계기준 도입방안 및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회계학회	송인만	2006.04

④ EU, 미국, 일본, 독일, 인도, 중국의 도입일정

- 2009년 현재 전세계적으로 100여개국 이상이 IFRS를 이미 도입하고 있으며, 한국이 전면 도입하는 2011년에는 약 150개국 이상이 도입할 예정입니다.

* 2014~16년경 도입예정인 미국·일본을 제외하고, IFRS 도입결정을 하지 않은 나라는 다수의 아프리카, 중동, 북한 및 중남미 일부 국가 정도임

-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요국의 IFRS 도입일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 U	미 국 ^{*1}	독 일	일 본 ^{*1}	인 도	중 국
2005년 도입	2014~16년 도입 예정	2005년 도입	2015년경 도입 예정	2011년 도입 예정	2007년 도입 ^{*2}

*1 미국과 일본은 한국과 달리 이미 IFRS에 비견될 만큼의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어 이러한 나라들과 도입시기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

*2 Full Adoption이 아닌 핵심문단 중심으로 번역하고 자국의 회계기준 내용을 추가하는 일종의 Convergence 방식으로 도입(이런 이유로 중국이 IFRS를 도입했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견해도 있음)

⑤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점 분석

- IFRS가 K-GAAP과 구별되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主 재무제표(F/S)가 개별F/S에서 연결F/S로 변경
- 자산·부채 공정가치 평가대상이 현재보다 확대
- 규정중심(Rule basis)에서 원칙중심(Principle basis)로 변경

- IFRS 도입에 따라 기업들은 회계정책, 재무정보, 연결재무보고 체계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7-1. 실손형 보험 보장 한도 축소 결정 이전 논의 경과

- 06.10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 총리)는 실손의료보험이 법정본인부담금 보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

<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제시방안 >

【 급여 】	【 비급여(공보험 미보장) 】
건강보험(A)	보험사 영역(C)
법정본인부담금(→ 보험사 보장금지)	

-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권고이후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하여 약 3년간 관계부처(기재부, 금융위, 복지부)간 협의 진행
- 공보험 보장의 한계, 민영보험의 보완 필요성 등을 감안, 본인부담금 보장은 허용하되 전액보장은 제한하는 방향으로 논의 진행

- 08.5월 민영보험의 보장한도를 의료비(입원)의 80%로 설정 하는데 관계부처간 잠정 합의(당초 금융위 90%, 복지부 70% 주장)

-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09.6월 관계부처는 보장한도를 의료비(입원)의 90% 제한 최종 합의 ⇒ 민영보험이 공보험을 보완하되, 의료이용 과다로 인한 건보재정 및 보험사 재무건전성 악화 차단

* 국회 공청회, 설명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지적, 보험업계 의견 등을 고려하여 보장한도를 90%로 설정

< 관계부처간 합의 내용 >

【 급여 】	【 비급여(공보험 미보장) 】
건강보험(A)	(보험사 영역, C)
법정본인부담금(보험사 영역, B)	
보험가입자 자기부담금 (입원시 의료비의 10% 등)	

⇒ 손해보험업계는 90% 수준을 수용 가능하다는 의사를 표명한 적이 있으나, 최근 들어 100% 전액 보장상품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선회

17-2. 보장축소 결정의 기초가 된 연구자료, 용역 자료 일체

□ 별도제출

17-3. 가장 최근 실시한 중복가입률 조사치 또는 추정치

☐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음

18, 19. 서민금융정책 추진 현황 및 추진 실적 (금융소외자 지원방안 및 대출·보증 등 추진 실적)

□ 신용회복기금을 통한 서민지원

- 금융소외자 지원을 위해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금융회사 잔여재산 분배금(7천억원)을 재원으로 신용회복기금을 설립('08.9월) 하여 '08.12월부터 채무재조정 및 전환대출(환승론) 시행중
- (채무재조정) 금융회사의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연체이자 감면, 최장 8년의 장기분할상환 등을 통해 재기를 지원 (금융채무불이행자 기록 삭제)
- (전환대출) 신용등급 7~10등급인 저신용층의 20%이상 금리 대출을 신용회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12%(평균) 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이자상환 부담을 완화
- 채무재조정 및 전환대출(환승론) 지원실적('08.12~'09.8)

구분	채무재조정	환승론
건수	54,777 건	15,401 건
채권액	2,217억원	1,518억원

□ 소액서민금융재단을 통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 휴면예금을 활용하여 저소득층의 취업·창업 지원 등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08.3월 소액서민금융재단 설립
- '08년, 빈곤아동 2천명·저신용자 4천명 등 1만여명과, 서울시 24개 전통시장 등 13개 단체에 총 271억원 지원
- '09년, 그 규모를 60%이상 확대하여 440억원 지원

< 소액서민금융재단 현황 >

	출 연	지 출
'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704억원 - 은행 1,767억원 - 보험 917억원 - 저축은행 18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71억원 - 소액대출 241억원 - 소액보험 30억원
'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29억원 - 은행 894억원 - 보험 232억원 - 저축은행 3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40억원 - 소액대출 400억원 - 소액보험 40억원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신용회복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개인 워크아웃) : '02년 ~
 - 3개월이상 연체채무자에 대해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3,500여개)과 협의하여 채무를 조정(이자면제, 원금은 최장 8년 분할상환 등)

* '02~'08년 : 80만명('08년, 68,360명), '09년 상반기 49,606명

○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개인 프리워크아웃) : '09.4~

-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1~3개월 미만 연체자에 대해서도 1년간 한시적으로 채무조정을 확대 시행(이자 30%감면,원금은 최장 8년 분할 상환 등)

* '09.4.13~8월말, 6,908명이 신청하여 채무조정 심사중

□ 사금융 이용자 보호 강화

① 불법 고금리사채 피해 축소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

- 불법 대부업자에 의한 서민의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대부업의 관리·감독 및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강화('09.4월 시행)
- (상호·영업) 대부업자 상호에 '대부' 사용, 대부업자의 교육
- (대부계약) 대부계약서 작성시 중요사항의 자필기재, 5백만원 이상 대부시 변제능력 증빙서류 징구 등
- (이자제한 위반 제재) 무등록 대부업자가 이자제한법상 이자 한도(30%)를 넘는 이자를 받는 경우 형사처벌

② 불법 채권추심 피해 방지를 위한 공정채권추심법 제정

- 불법대부업자의 과도한 채권추심행위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09.8월 시행)
- (불법 추심행위* 제재) 위반시 형사처벌(5년이하의 징역)
- * 폭행, 협박 또는 공포감 유발, 채무자 등에게 허위 사실 등 고지,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등
- (선의의 채무자 보호) 채무자 요구시 채권자의 부채증명서 발급 의무

20. 휴면예금 관련

- 각 은행별 휴면예금 발생현황
- 각 은행별 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 현황
- 휴면예금관리재단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각 은행별 휴면예금 발생 현황

○ 첨부 참고 (자료출처: 은행연합회)

※ 현재 은행은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정 2007.8.3, 시행 2008.2.4)에 따라 휴면예금 발생분중 원권리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할 수 있음

<첨부 1>

은행권 휴면예금 발생현황

(단위 : 천건, 억원)

은행명	2006년		2007년		2008년	
	계좌수	금액	계좌수	금액	계좌수	금액
산업은행	12	4	14	4	24	3
농협중앙회	1,066	154	1,389	151	1,254	268
신한은행	940	240	550	120	689	102
우리은행	2,018	137	1,184	110	1,124	87
SC제일은행	1,276	98	295	52	557	76
하나은행	646	93	871	114	682	95
기업은행	658	65	768	78	706	69
국민은행	2,057	129	2,122	69	1,772	65
외환은행	638	70	538	76	528	72
한국씨티은행	555	58	190	28	283	25
수협중앙회	55	10	41	10	39	6
대구은행	101	31	75	29	95	11
부산은행	374	45	360	49	330	48
광주은행	235	13	-	-	114	5
제주은행	10	0.4	9	0.4	3	0.2
전북은행	84	12	78	10	73	11
경남은행	105	6	131	9	146	10
총 계	10,830	1,165.4	8,615	909.4	8,419	953.2

<첨부 2>

생명보험사 휴면보험금 발생현황

(단위 : 천건, 억원)

보 험 사 명	2006년		2007년		2008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한	84	874	64	1,826	57	447
알리안츠	85	136	48	167	23	129
삼성	200	1,718	176	3,447	146	1,729
흥국	53	197	51	247	41	92
교보	184	1,325	149	5,891	110	456
우리아비바	4	8	5	8	5	11
미래에셋	59	97	66	144	52	65
금호	30	39	39	47	43	55
동부	3	9	6	11	11	19
동양	12	64	91	249	125	82
메트라이프	11	35	12	46	15	33
푸르덴셜	15	19	13	22	13	35
신한	72	79	58	82	50	72
PCA	2	2	6	4	9	5
뉴욕	2	3	1	3	1	3
ING	25	93	26	97	33	75
SH&C	-	1	1	10	1	15
독십자	4	25	4	21	3	9
라이나	98	36	100	41	81	34
AIG	59	41	66	45	80	56
하나HSBC	2	1	4	2	5	3
KB	1	3	1	7	1	9
총 계	1,005	4,805	987	12,417	905	3,434

<첨부 3>

손해보험사 휴면보험금 발생현황

(단위 : 천건, 억원)

보험사명	2006년		2007년		2008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메리츠	8.9	35.4	24.4	71.0	47.2	45.4
한화	5.0	17.1	5.1	18.3	12.4	21.9
롯데	3.0	11.0	2.0	9.5	2.1	5.3
그린	1.8	6.2	1.6	6.0	2.0	5.4
흥국쌍용	9.6	14.6	7.3	12.4	17.2	16.0
제일	20.5	16.4	21.3	23.6	25.9	21.4
삼성	66.2	380	65.8	733	76.8	320.3
현대	18.2	60.5	13.7	31.1	38.0	44.5
LIG	17.9	71.3	22.9	93.0	29.8	88.7
동부	19.9	59.7	25.9	78.2	46.4	61.3
총 계	171.0	672.2	190.0	1,076.1	297.8	630.2

□ 각 은행별 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 현황(출처: 소액서민금융재단)

* 휴면예금 발생 분중 원권리자 지급금액을 제외하고 출연

순번	회사명	2009년 출연금액(A)	2008년 출연금액(B)	누계(A+B)
1	HSBC	75,509,335	110,254,621	185,763,956
2	부산	2,009,013,522	3,020,927,216	5,029,940,738
3	국민	26,371,304,767	35,849,472,082	62,220,776,849
4	우리	6,457,459,926	16,578,929,482	23,036,389,408
5	SC제일	7,433,680,085	9,630,202,251	17,063,882,336
6	씨티	2,332,410,134	4,032,037,981	6,364,448,115
7	경남	562,137,835	1,212,701,496	1,774,839,331
8	수협	413,191,485	2,158,085,265	2,571,276,750
9	신한	7,353,858,162	24,221,691,498	31,575,549,660
10	하나	3,886,910,228	20,226,555,836	24,113,466,064
11	대구	1,047,835,127	4,641,444,302	5,689,279,429
12	광주	520,207,831	529,679,224	1,049,887,055
13	기업	4,780,612,148	11,487,065,511	16,267,677,659
14	외환	5,308,699,028	12,911,442,216	18,220,141,244
15	산업	223,618,994	746,449,418	970,068,412
16	전북	479,124,619	2,000,103,276	2,479,227,895
17	제주	32,080,621	73,095,334	105,175,955
18	농협	20,117,771,966	27,213,094,334	47,330,866,300
계		89,405,425,813	176,643,231,343	266,048,657,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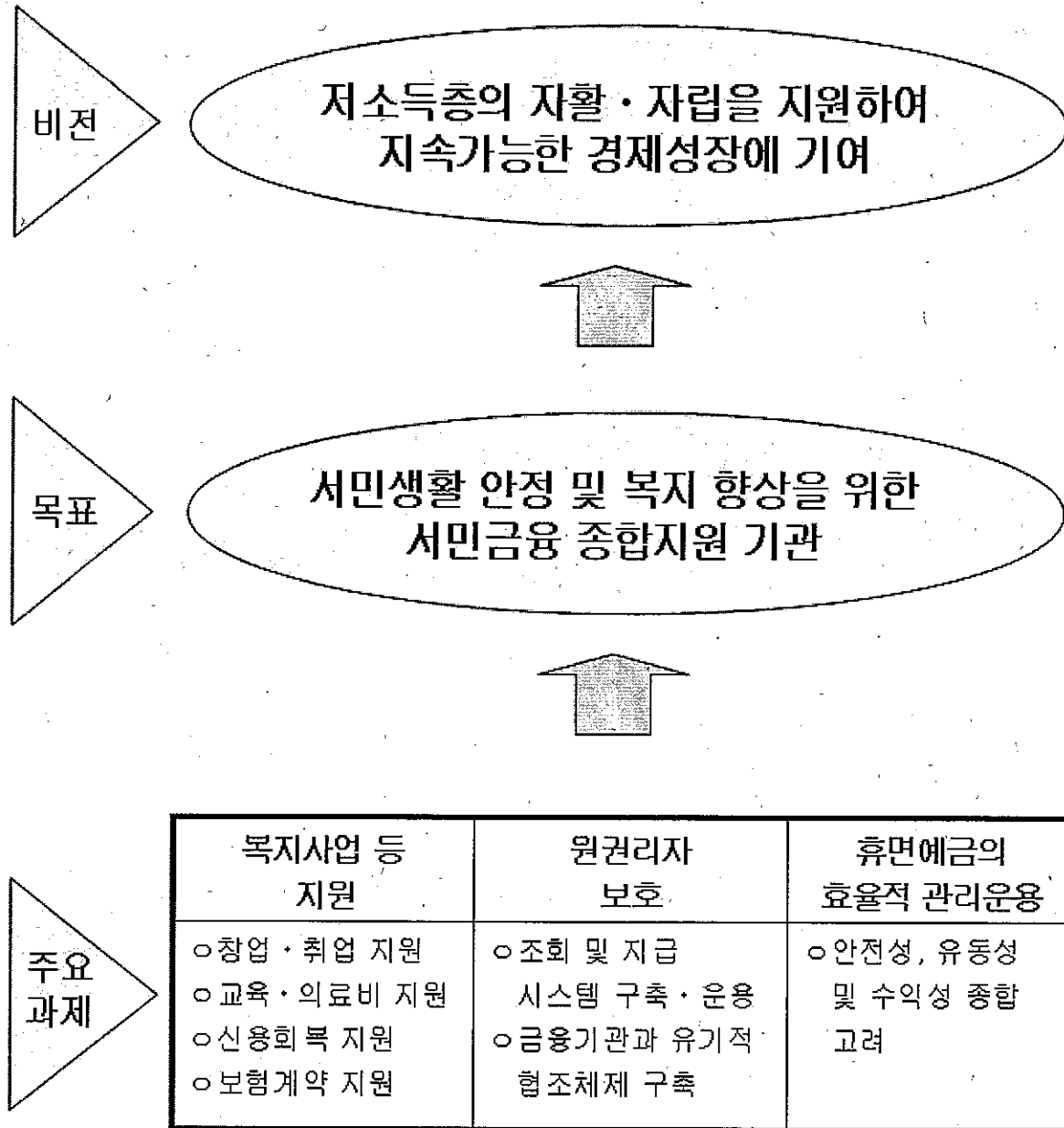
□ 휴면예금관리재단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08년 및 09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별도첨부

(별첨 1)

소액서민금융재단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1. 사업 목표 및 비전



공익성과 재정적 지속성을 기반

2. 사업추진 기본 방향

- (점진적·단계별 사업 추진) 출범초기, 안정·정착기, 사업 확대기 등 단계별로 사업의 내실화 도모
- (공익성과 지속가능성의 조화 도모) 복지사업 지원이라는 공익성과 원권리자 보호라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조화 도모
- (사업의 투명성 확보) 복지사업자 모집·선정·지원·관리·감독 등 전 과정을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

3. 사업추진 방법

- (점진적·단계별 사업 추진) 출범초기, 안정·정착기, 사업 확대기 등 단계별로 추진하여 사업의 내실화 도모
 - 출범초기: 복지사업자의 사업능력, 원권리자의 지급청구 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시범 수준으로 추진
 - 안정·정착기: 사업성과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본격적인 사업 활성화 추진
 - 사업 확대기: 지원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직접 사업 위주 추진

4. 복지사업자 지원 사업

소액서민금융재단 (휴면예금관리재단)				
사업 내용	창업·취업 지원자금 신용대출	교육·의료비 등 생활자금 신용대출	금융채무 불이행자 경제적 회생 지원	마이크로 인슈런스 * 저소득층 보험계약 체결·유지 지원
복지 사업자	대안금융기관 * 사회연대은행, 신나는 조합 등	서민금융기관 (대행창구로 활용)	금융채무 불이행자 지원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등	보험회사
수혜 대상	소득기준 :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230만원 미만 (취약계층) 신용기준 : 신용등급 7~10등급 (금융채무불이행자 포함)			

- 복지사업자는 지원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재정적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수혜대상은 소득수준(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취약계층”)과 신용등급(7~10등급의 저신용계층)을 기준으로 설정
 - * 개념상 저신용계층과 저소득층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양자의 규모가 공히 700만명 수준이라는 점 등에서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

가. 저소득층의 창업·취업 지원

□ 사업목적

- 자활능력과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의 창업·취업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자활·자립을 촉진

□ 운용방향

- 창업지원은 사회연대은행 등 NGO형 대안금융기관의 노하우 및 전문가 네트워크 등 인프라 활용
 - 교육 및 컨설팅서비스 등 철저한 사전·사후관리를 통해 성공적 창업을 극대화하고 원금 훼손을 최소화
- 취업지원은 실업극복국민재단 등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
 - 저소득층이 취업을 위해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중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생활자금지원과 연계)

□ 지원 방식

- 활동 중인 NGO형 대안금융기관의 객관적인 사업성과와 사업수행능력 등을 검토하여 선정·지원
 - 무자격자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 신청시 보건복지가족부(창업지원), 노동부(취업지원) 등 주무부처의 추천을 첨부하여 지원

□ 지원 규모

- 창업 지원 효과를 높이는데 충분한 수준으로 지원
- 다만, 복지사업자별 지원 수준은 개별 복지사업자가 신규 인력·조직의 확대 없이 운용 가능한 범위내로 한정
- 창업·취업자금 이외의 복지사업자 자체의 인건비·운영비 별도 무상지원은 배제

□ 지원 금리

- 재단은 복지사업자에게 무이자로 대출하고 복지사업자는 동 재원에 수수료(운영비) 수준의 이자를 부과하여 대출
- * 현재 복지사업자(NGO형 대안금융기관)의 창업자금 대출금리는 6% 이내 수준

나. 저소득층의 교육·의료비 등 생활안정자금 지원

□ 사업목적

- 교육, 의료, 기타 경제적 요인에 의한 저소득층의 긴급 자금 수요에 대응함으로써 불법 사금융 이용자 흡수

□ 운용방향

- 서민금융기관을 대행기관으로 활용하여 일정액 이하의 표준화된 소액신용대출상품을 공급
- 대행기관 및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 병행

□ 지원 방식

- 저소득층 대상 여신에 전문성을 지닌 서민금융기관을 재단의 지원 자금 대출창구로 활용 추진 계획임

다. 신용회복 중에 있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긴급생활자금 지원

□ 사업목적

- 신용회복 지원자의 예상치 못한 급전 수요에 대해 저리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재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회생을 촉진

□ 운용방향

- 신용회복 지원자의 병원비, 학자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1~5년에 걸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 지원 방식

- 신용회복위원회 등 채무재조정 기관의 소액신용대출 프로그램에 재원 지원
- 한정된 재원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자를 최우선 대상으로 선정·지원하도록 하고 재원 여력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대상자 확대

□ 지원 규모

-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수혜대상 확대를 위해 소액으로 한정
- 창업 지원은 실질적 창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결정하되 재원의 여력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지원 금리

- 재단은 신용회복지원 사업자에게 무이자로 대출
- 신용회복지원 사업자는 수용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낮게 책정

라. 저소득층 보험계약 체결·유지 지원

□ 사업목적

-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된 저소득층에 대해 보험계약의 체결 및 유지를 지원

□ 운용방향

- 보험회사가 재단의 수혜대상자 중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Microinsurance)을 개발하여 사업지원 신청 → 재단은 사업 타당성 심사 후 재원을 배분

* 장애인, 여성, 소년·소녀 가장, 신생아 등 개인 뿐만 아니라, 보육원, 장애인복지단체 등 법인·단체 포함

□ 지원규모

- 보험권 출연액(기부금 포함)의 이자 수준을 한도*로 보험회사별 출연실적과 연계하여 배분하고 휴면예금과 구분 계리

* 마이크로인슈어런스는 신용대출사업과 달리 자금의 회수가 전제되지 않은 무상 지원방식(가입자 보험료 대납 내지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 체결)이므로 원금보전을 위해서는 이자수익만으로 사업수행이 불가피

5. 원권리자 보호 사업

☐ 휴면예금 출연정보 조회의 신속·편의성 추구

☐ 휴면예금 지급의 원활화 중점

- 휴면예금 출연 정보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현행 휴면 계좌통합조회시스템을 서로 연계하여 출연되기 전·후의 휴면예금을 동시에 일괄 조회토록하여 편의성 제고
- 원권리자 지급요청 시 해당 금융기관(영업점)에서 철저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신속·정확하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원권리자 보호에 충실

※ 지급 절차

원권리자가 원 거래 금융기관에 휴면예금 지급 요청 → 금융기관이 원권리자 확인 후 재단에 통보 → 재단(주거래은행)이 원권리자 계좌로 휴면예금 상당액 이체

6. 정보화 사업

☐ 복지사업자 지원·감독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및 원권리자 보호 증진을 위한 정보화시스템 구축

- (1단계) 출범초기에는 기본적인 재단 관리업무 및 원권리자를 위한 지급업무 등에 필수적인 시스템만 구축하여 운용(2008년)
- (2단계) 복지사업자 및 수혜자의 정보수집을 위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재단과 복지사업자간의 네트워크 구축하여 중복지급에 대한 배제 등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임(2009년도 이후)

7. '08년도 소액서민금융재단 예산 내역

1. 수입 예산

(단위 : 천원)

관 항 목	'08년도 예산액	비 고
은행출연금	140,000,000	
보험출연금	60,000,000	
계	200,000,000	

2. 지출예산

가. 총괄표

(단위 : 천원)

관 항 목	'08년도 예산액	비 고
재단사업비	21,000,000	
(은행사업비)	(18,000,000)	
(보험사업비)	(3,000,000)	
재단운영비*	1,991,766	
(자산취득비)	89,000	
(인건비)	922,604	
(일반관리비)	885,316	
(예비비)	94,846	
계	22,991,766	

* 재단운영비는 은행출연금과 보험출연금의 수입예산액 비율에 따라 각각 총당
(은행 13.9억원, 보험 6.0억원)

(별첨 2)

소액서민금융재단 200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1. 2009년도 사업계획안

◇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대비 금융소외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복지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원권리자 보호 강화에도 충실

(1) 복지사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 2009년도 사업 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08년		'09년
	(계획)	실적	(계획)
소액금융	250	241	400
소액보험	30	30	40
합계	280	271	440

① 저소득층 창업·취업 지원

- 기존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수혜자 범위를 확대
- 창업·취업 분야의 신규 복지사업자를 발굴하여 지원

②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사회적 기업 지원

- 사업지원의 확대를 통한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
- 유망기업이 선정·지원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 개선·강화

③ 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 복지사업자가 수행하는 소액대출 프로그램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
- 소액금융 수혜 대상자의 범위 확대

④ 전통시장 영세상인을 위한 소액대출 지원

- 서울시 시범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지원 강화
-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전국 광역자치체로의 사업 확대 추진

⑤ 저소득층 보험계약 체결·유지 지원

- 지원금의 증액을 통한 소액보험 사업의 확대
- 사업규모 및 내용을 고려한 최적의 수혜자 그룹 선정
- 수혜자 선호도를 파악하여 보험 상품을 개선

(2) 원권리자 보호에 충실

- 소액금융사업비에 대해 적정규모*로 통제하여 원권리자에 대한 휴면예금의 안정적 지급을 도모

* 휴면예금 가용재원의 25% 이내로 사업규모를 제한

- 출연지급정보 등 관련 데이터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통합 업무지원 및 복지사업 지원 시스템 구축을 추진

II. 2009년도 예산안

-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긴축 편성
 - 급여 및 제수당은 동결(단, 직원 급여는 호봉승급수준(2%) 반영)
 - 일반관리비도 4% 수준 삭감 등

<수입 및 지출>

수입(백만원)		지출(백만원)	
기본재산 전입금	40,000	재단사업비	44,000
이자수입	7,597	공사운영비	40,000
은행출연금 이자수익	2,770	기금관리비용	4,000
보험출연금 이자수익	4,827	재단운영비	3,597
수익총계	47,597	비용총계	47,597

< 붙임 2 > 09년도 소액서민금융재단 예산 내역

1. 수입 예산

(단위 : 천원)

관	항	목	'09년도 예산액	비 고
기본재산 전입금	기본재산 전입금	은행출연금 전입금	40,000,000	소액금융사업비
이자수입	이자수입	은행출연금 이자수입	2,822,206	재단운영비
		보험출연금 이자수입	4,842,996	소액보험사업비 : 4,000,000 재단운영비: 842,996
계			47,665,202	

2. 지출예산

(단위 : 천원)

관 항 목	'09년도 예산액	'08년도 12개월 환산예산액 ('08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재단사업비	44,000,000	28,000,000	16,000,000	57.1
소액금융사업비	40,000,000	25,000,000	15,000,000	60.0
소액보험사업비	4,000,000	3,000,000	1,000,000	33.3
재단운영비*	3,665,202	3,997,815 (1,991,766**)	△332,613 (1,673,436)	△8.3 (84.0)
자산취득비	832,525	1,059,200 (89,000)	△226,675 (743,525)	△21.4 (835.4)
인건비	1,235,757	1,171,139 (874,904)	64,618 (360,853)	5.5 (41.2)
일반관리비	1,512,219	1,577,104 (933,016)	△64,885 (579,203)	△4.1 (62.1)
예비비	71,867	190,372 (94,846)	△118,505 (△22,979)	△62.2 (△24.2)
퇴직급여충당금	12,834	-	12,834	-
계	47,665,202	31,997,815 (29,991,766)	15,667,387 (17,673,436)	48.9 (58.9)

* '08년도 예산은 재단출범이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의 예산임.

** '08년 1월 ~4월까지 집행된 전산장비구입비 970,200천원과 전산업무개발비 242,000천원

포함

21(A) 금융위가 가장 최근 발표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적정화 방안

☐ 세부내용 별첨



금융위원회

보도 참고 자료

2009. 1. 22.(목) 조간부터 보도 가능



금융감독원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금융감독원 여신전문서비스실			
책 임 자	정완규 과장 (2156-9850) 조욱현 실장 (3786-8160)	담 당 자	마 순 사무관 (2156-9853) 김영기 팀 장 (3786-8162)	
배 포 일	2009. 1. 21.(수)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1~48) 공보실 (3771-5788~91)	총 2 매

제 목 : 재래시장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 신용카드사들은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재래시장 내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를 추진 중임

* '08.6말 기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재래시장(전통시장)은 1,550개이며 점포 수는 18만6천개, 이 중 신용카드가맹점은 약 8만6천개로 추정

○ 인하 수준은 현재 2.0~3.5% 수준의 수수료율을 대형가맹점 적용 수수료율을 감안하여 각 카드사별로 2.0~2.2% 내외로 결정할 예정이며 전산 실무작업 등을 거쳐 대부분 2월중 시행될 것으로 보임

□ 신용카드사들은 이번 재래시장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계기로 재래시장 내 신용카드 이용이 더욱 활성화됨으로써 재래시장의 매출 증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정부 및 감독당국은 앞으로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임

붙 임 : <참고>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추진 현황

<참 고>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추진 현황

① '07.8.30.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방안」 발표
(금감위, 기획재정부, 금감원 공동)

○ '07. 9월, 카드사들은 위 수수료체계 합리화 방안에
따라 수수료율 인하계획을 발표 ('07.11월부터 시행)

○ 금융당국은 '08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수수료
인하 실태를 직접 점검

② 카드사들의 일부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추가 인하('08.10월)

○ 2.4~3.3%의 수수료를 적용받는 중소가맹점 중
서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대상으로 수수료 인하

- 인하대상 : 카드사별 약 33만개~150만개(전체 가맹점 250
만개의 13%~60%)



금융위원회

보도 자료

배포즉시 보도가능

• 금융산업의
선진화

•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책임자	정완규 과장 (2156-9850)	담당자	마 순 사무관 (2156-9853)	
배포일	2009. 1. 22.(목)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총 1 매

제 목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개선 추진 계획

☐ 금일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 앞으로 2단계로 나누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개선을 추진
기로 하였음

☐ 1단계로 신용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소속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계획*(1.21. 보도자료 既배포)이 2월
중에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면밀히 점검

* 재래시장 소속 86,000여개 가맹점의 수수료를 현행 2.0~3.5%에서 2.0~
2.2% 내외로 인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을 28% 경감

☐ 2단계로 과도한 가맹점간 수수료를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2월중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

22. 공매도 관련

A. 05년 이후 매월별 공매도 평균액수, 내외국인 거래비중

B. 08년 이후 주식대차거래 중개 및 공매도 주문 수탁 영업의 적정성 점검여부 및 점검결과 조치사항

C. 공매도 재허용후 매월별 공매도 발생 상위 5종목

A. 월별 공매도 현황

< 2005년 이후 매월별 공매도 금액 및 외국인/내국인 비중 >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월	공매도	외인	내인	공매도	외인	내인	공매도	외인	내인	공매도	외인	내인	공매도	외인	내인
1	4,700	88.21	11.79	7,419	85.87	14.13	8,791	91.71	8.29	39,594	92.52	7.48	918	66.45	33.55
2	3,263	93.44	6.56	7,602	86.73	13.27	9,192	93.34	6.66	21,052	87.48	12.52	1,350	65.39	34.61
3	4,200	87.68	12.32	6,590	85.11	14.89	11,720	84.25	15.75	31,293	90.54	9.46	1,289	46.91	53.09
1/4	12,162	89.43	10.57	21,610	85.94	14.06	29,703	89.27	10.73	91,939	90.69	9.31	3,557	58.97	41.03
4	4,471	88.25	11.75	8,305	75.23	24.77	12,795	92.61	7.39	32,450	90.05	9.95	1,497	43.94	56.06
5	3,751	84.67	15.33	9,619	83.64	16.36	12,108	83.68	16.32	34,055	81.15	18.85	1,227	26.96	73.04
6	3,320	86.09	13.91	9,407	85.62	14.38	20,411	92.72	7.28	35,618	93.48	6.52	15,909	79.37	20.63
2/4	11,542	86.47	13.53	27,331	81.77	18.23	45,314	90.27	9.73	102,123	88.28	11.72	18,634	73.07	26.93
7	5,265	80.35	19.65	8,707	84.13	15.87	22,763	88.21	11.79	45,760	92.63	7.37	18,680	68.89	31.11
8	4,397	76.30	23.70	8,246	81.95	18.05	24,724	90.02	9.98	40,994	91.81	8.19	20,388	72.86	27.14
9	4,626	85.73	14.27	8,588	91.35	8.65	14,953	92.49	7.51	50,249	90.68	9.32	10,435	75.64	24.36
3/4	14,288	80.84	19.16	25,541	85.85	14.15	62,439	89.95	10.05	137,002	91.67	8.33	49,503	71.95	28.05
10	7,186	82.13	17.87	7,508	86.21	13.79	28,179	90.50	9.50	8,448	79.85	20.15			
11	6,007	88.80	11.20	9,444	86.85	13.15	31,001	87.69	12.31	1,222	44.62	55.38			
12	6,770	90.59	9.41	5,579	87.55	12.45	19,961	88.70	11.30	1,675	68.61	31.39			
4/4	19,963	87.00	13.00	22,531	86.81	13.19	79,140	88.95	11.05	11,345	74.39	25.61			

* 2009년 9월 11일 기준, 단위 억원

(작성기준 : 유가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주식에 대한 공매도 금액 합산)

B. '08년 이후 주식대차거래 중개 및 공매도 주문수탁 영업의
적정성 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검사대상	점검구분	검사기간	지적사항	조치일	조치내역
한국예탁결제원	현장검사	'08.12.4~12.19	대차거래담보관리 미흡	'09.3.23	개선요구
증권사(45개사)	서면검사	'08.8.26~9.19	공매도주문 확인 내부통제 부적절	'09.1.30	기관경고3 기관주의15 경영유의14 업무지도13

C. 공매도 재허용후 매월별 공매도 발생 상위 5종목

(단위 : 억원)

순위	'09년 6월		'09년 7월		'09년 8월		'09년 9월	
	종목명	금액	종목명	금액	종목명	금액	종목명	금액
1	현대모비스	1,140	삼성전자	3,219	삼성전자	3,297	현대차	1,525
2	삼성전자	982	POSCO	997	현대차	1,137	삼성전자	1,430
3	현대차	945	현대중공업	953	LG디스플레이	1,039	LG디스플레이	985
4	현대중공업	783	LG전자	921	현대제철	604	LG전자	685
5	LG전자	757	기아차	808	기아차	574	현대모비스	604

23. 증권거래법 위반 과징금 현황

- 2005년 과징금 부과 현황, 과징금 채납현황, 결
손처리한 채납과징금 현황

□ 2005년 증권거래법 위반 과징금 부과 현황

부과일	사업자 명	부과금	완납/채납
2005-02-07	마담포라	79,800,000	완납
2005-03-25	아토	149,100,000	"
2005-03-25	대아리드선	51,200,000	"
2005-03-25	세신	48,600,000	"
2005-03-25	성문전자	30,000,000	"
2005-03-25	아이콜스	24,000,000	"
2005-03-25	유니켄	24,000,000	"
2005-03-25	신일산업	24,000,000	"
2005-03-25	영창악기제조	18,000,000	"
2005-04-21	이스턴테크놀로지	169,000,000	"
2005-04-21	모나미	114,200,000	"
2005-04-21	포이보스	105,600,000	"
2005-04-21	제일창업투자	30,000,000	"
2005-04-21	영실업	12,000,000	"
2005-04-21	네스테크	12,000,000	"
2005-05-16	삼양옵틱스	95,500,000	"

부과일	사업자 명	부과금	완납/채납
2005-05-26	한국통신데이타	250,300,000	"
2005-05-26	대한바이오링크	69,200,000	"
2005-05-26	와이즈콘트롤	24,000,000	"
2005-05-26	베네데스하이텍	21,400,000	채납
2005-05-26	한성에코넷	18,000,000	완납
2005-05-26	현대멀티캡	18,000,000	채납
2005-05-26	신일건업	18,000,000	완납
2005-05-26	백금정보통신	12,000,000	"
2005-05-26	파세코	12,000,000	"
2005-05-26	한국캐피탈	6,000,000	"
2005-06-22	신광기업	68,300,000	채납
2005-06-22	대유디엠씨	24,600,000	완납
2005-08-25	(주)우영	110,100,000	"
2005-08-25	케이디씨정보통신(주)	56,700,000	"
2005-08-25	OOO	12,000,000	"
2005-08-25	OOO	12,000,000	"
2005-08-25	(주)아세아조인트	21,000,000	"
2005-08-25	아이메카(주)	18,000,000	"
2005-08-25	벽산건설(주)	6,000,000	"
2005-08-25	(주)시스네트	6,000,000	"
2005-08-25	(주)에이엠아이씨	6,000,000	"
2005-08-25	(주)천일고속	6,000,000	"

부과일	사업자 명	부과금	완납/채납
2005-09-09	OOO	30,000,000	"
2005-09-09	(주)제일엔테크	112,800,000	"
2005-09-30	(주)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	12,000,000	"
2005-09-30	대경기계기술(주)	14,500,000	"

○ 결손처리한 채납과징금은 없습니다.

24. 2007년 이후 과징금 부과현황

- 년도별 부과건수, 부과총액, 체납건수, 체납총액
- 부과일시, 당사자, 부과금액, 사건내용, 납부일시

□ 2007년 이후 부과한 과징금 현황

(단위:백만원)

	부과건수	부과총액	체납건수	체납총액	비고
2007년	54	10,683	12	3,826	
2008년	45	11,801	20	5,114	
2009년 8월말	52	4,406	17	1,640	

붙임 : 2007년 이후 과징금 부과 세부 현황 1부. 끝.

	부과일시	당사자	부과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납부일시	부과금 잔액	비고
1	2007-02-02	(주)에스엔이코프(주) (주)넷시스템터미널인트그룹	247,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4-08	2007-06-13	-	
2	2007-02-15	(주)류튼(주) (주)하이원력	254,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4-21	2007-04-20	-	
3	2007-02-15	(주)코스모씨엔티(신) 케이엔웨이브	252,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4-21	2007-04-25	-	
4	2007-02-15	(주)세교엔터택인먼트	245,7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4-21	2007-04-23	-	
5	2007-02-15	OOO	12,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4-21	2007-04-23	-	
6	2007-02-15	(주)티어스엠홀딩스(주) (주)시스템네트웍스	129,1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4-21	2007-06-12	-	
7	2007-03-16	키아블먼트파이낸스코리아(주)	50,000,000	어신전문금융업법 위반	2007-04-10	2007-03-27	-	
8	2007-03-19	(주)케이스트	24,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5-23	2007-05-23	-	
9	2007-03-19	(주)커드콤	5,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5-23	2007-05-07	-	
10	2007-03-30	(주)씨오텍	449,2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6-03	2007-06-04	-	
11	2007-04-02	알리안츠생명보험(주)	182,000,000	보험업법 위반	2007-06-06	2007-06-07	-	
12	2007-04-13	큐엑스(주)	250,3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6-17	2007-06-15	-	
13	2007-05-15	서울보증보험(주)	645,000,000	보험업법 위반	2007-07-19	2007-07-19	-	
14	2007-05-28	(주)솔빛텔레콤	174,3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8-01	2007-07-31	-	
15	2007-05-28	(주)조이토토	96,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8-01	2007-11-21	-	
16	2007-05-28	(주)큐엔텍코리아	23,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8-01	2007-08-01	-	
17	2007-05-28	(주)우리기술	23,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8-01	2007-08-01	-	
18	2007-06-22	롯데관광개발(주)	156,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8-26	2007-08-24	-	
19	2007-06-22	케이알선물(주)	72,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8-26	2007-08-23	-	
20	2007-06-22	오스형원플랜트(주)	148,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8-26	2007-08-27	-	
21	2007-08-27	(주)세안	359,9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0-31	2007-11-23	-	
22	2007-08-27	(주)상화네트웍스	20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0-31	2007-12-07	-	
23	2007-08-27	OOO	2,00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0-31		2,000,000,000	
24	2007-08-27	(주)니노엔텍	6,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0-31	2007-10-30	-	
25	2007-08-27	(주)모델라인이연티	5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0-31		50,000,000	
26	2007-08-27	(주)오리리소스	67,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0-31	2007-10-30	-	
27	2007-08-27	(주)티어스엠홀딩스(주) (주)시스템네트웍스	89,2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0-31	2008-01-09	-	
28	2007-08-27	한국창업투자(주)	12,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0-31	2007-10-25	-	
29	2007-08-27	교보생명보험(주)	249,000,000	보험업법 위반	2007-10-31	2007-10-30	-	
30	2007-09-11	(주)디유뱅크	244,7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1-15	2007-11-15	-	
31	2007-09-11	(주)솔트웍스	24,2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1-15	2007-11-15	-	
32	2007-09-11	한국기술산업(주)	141,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1-15	2007-12-14	-	
33	2007-09-11	OOO	26,7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1-15	2007-12-20	-	
34	2007-10-12	(주)코이크로스(주) (주)매커스	48,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2-15	2007-12-17	-	
35	2007-10-12	OOO	24,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2-15	2007-12-17	-	
36	2007-10-12	(주)유비스타	454,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2-15	2007-12-17	-	
37	2007-10-25	(주)엔터원	23,3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2-29	2007-12-27	-	
38	2007-10-25	(주)니노엔텍	48,9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2-29	2007-12-27	-	
39	2007-10-25	네티티씨아이(주) (주)엔컴이엔아이	324,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2-29	2008-07-29	-	
40	2007-10-25	OOO	16,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2-29		16,000,000	
41	2007-10-25	OOO	2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2-29		20,000,000	
42	2007-11-12	㈜엘제이엘에너지(주) (주)마스터테크	560,7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1-16		560,700,000	
43	2007-11-22	(주)케이스트	431,9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1-26	2008-01-28	-	
44	2007-11-22	OOO	15,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1-26	2008-01-25	-	
45	2007-11-22	㈜엘제이엘에너지(주) (주)마스터테크	18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1-26		180,000,000	
46	2007-11-22	OOO	3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1-26		30,000,000	
47	2007-12-24	케이엔웨이브(주)	145,1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2-27		145,100,000	
48	2007-12-24	시큐리티코리아(주)	152,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2-27		152,400,000	
49	2007-12-24	산양전기(주)	316,7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2-27		316,700,000	
50	2007-12-24	(주)상화네트웍스	144,9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2-27	2008-02-27	-	
51	2007-12-24	OOO	3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2-27		30,000,000	
52	2007-12-24	(주)한빛	325,3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2-27		325,300,000	
53	2007-12-24	성표식품(주)	2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2-27	2008-02-27	-	
54	2007-12-24	(주)한신디앤피	459,1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2-27	2008-07-09	-	
2007년 54건 부과			10,683,800,000		42건 납부	12건 미납	3,826,200,000	
1	2008-02-22	우리은행	2,992,000,000	은행법 위반	2008-04-27	2008-04-24	-	
2	2008-03-28	㈜모니미	9,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6-01	2008-05-23	-	
3	2008-03-28	케이퍼코리아㈜	8,1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6-01	2008-05-30	-	
4	2008-03-28	동신건설㈜	18,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6-01	2008-05-02	-	
5	2008-03-28	대한은행지공업㈜	441,7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6-01		441,700,000	
6	2008-03-28	OOO	16,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6-01		16,000,000	
7	2008-04-24	OOO	4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6-28		40,000,000	
8	2008-04-24	동아회관건설(주) (주)동아G&L	407,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6-28	2009-06-10	-	
9	2008-05-26	㈜신지소프트	61,9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7-25	2009-10-31	-	

	분과일시	당사자	부과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납부일시	부과금 잔액	비고
10	2008-06-13	㈜조아토토	318,7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8-12		318,700,000	
11	2008-06-13	조성삼(조아토토 대표이사)	2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8-12		20,000,000	
12	2008-06-13	모팩스㈜	13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8-12		130,000,000	
13	2008-06-13	㈜셀란	206,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8-12	2008-08-12	-	
14	2008-06-13	(주)네오솔리(구 ㈜에이트팩스)	48,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8-12	2008-08-12	-	
15	2008-06-17	영진약품공업㈜	994,1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8-18	2008-08-18	-	
16	2008-06-26	㈜이노블투(구.㈜영피오)	72,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8-25	2008-10-22	-	
17	2008-06-26	㈜서연증권	115,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8-25		115,500,000	
18	2008-06-26	㈜유리이스	102,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8-25	2008-08-25	-	
19	2008-06-26	㈜알에스넷(구.㈜위다츠)	81,9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8-25	2008-08-25	-	
20	2008-06-26	제이이스㈜	77,7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8-25	2008-08-25	-	
21	2008-06-26	㈜나래원	40,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8-25	2008-08-25	-	
22	2008-06-26	㈜파코스티엔아이	15,1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8-25	2008-08-25	-	
23	2008-06-30	㈜케이씨오에너지	820,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8-29		820,800,000	
24	2008-07-24	현대피엔씨㈜	98,3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9-29	2008-09-29	-	
25	2008-07-29	한국통신데이터㈜	49,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10-02		49,400,000	
26	2008-08-21	OOO	17,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10-27		17,500,000	
27	2008-08-21	OOO	10,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10-27	2008-10-23	-	
28	2008-09-17	메디에스앤피(주)(구.텍트론)	133,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11-21		133,800,000	
29	2008-09-17	(주)아이씨코퍼레이션	772,9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11-21		772,900,000	
30	2008-09-17	OOO	2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11-21		20,000,000	
31	2008-09-17	한화손해보험㈜	6,000,000	보험업법 위반	2008-11-21	2008-11-20	-	
32	2008-10-23	㈜연봉투와이드	3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12-29	2009-04-07	-	
33	2008-10-23	㈜사인시스템	48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6-29		480,000,000	
34	2008-10-23	㈜베라텍	16,2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12-29	2009-01-13	-	
35	2008-10-23	㈜로엔케이	61,9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12-29		61,900,000	
36	2008-10-27	㈜이플텍(구.마스터테크온, LIL에너지)	382,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12-31		382,800,000	
37	2008-10-27	넷스큐어테크놀로지㈜	103,2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3-12	2009-03-16	-	
38	2008-10-27	네스텍㈜	532,9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12-31	2008-12-31	-	
39	2008-11-07	㈜스카이뉴팜	254,2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1-13	2009-01-13	-	
40	2008-11-11	㈜포이보스	973,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1-15		973,400,000	
41	2008-11-12	청안회계법인	5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1-16		50,000,000	
42	2008-12-18	㈜파로스이엔아이	45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8-24	2009-08-24	-	
43	2008-12-18	OOO	5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2-23		50,000,000	
44	2008-12-26	㈜유리시아일엔티	49,3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3-04	2009-03-20	-	
45	2008-12-26	㈜트루텍스(구.타티씨아이)	22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3-04		220,000,000	
	2008년	45건 부과	11,801,100,000		25건 완납	2021.미납	5,114,400,000	
1	2009-02-27	㈜뉴전바아이티	78,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5-04		78,400,000	
2	2009-02-27	㈜에스타엔아이	24,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5-04	2009-05-08	-	
3	2009-02-27	㈜은누리에어	3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5-04		30,000,000	
4	2009-02-27	㈜해세나	40,2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5-04		40,200,000	
5	2009-02-27	오팩스㈜	3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5-04		30,000,000	
6	2009-02-27	텍스텍㈜	24,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5-04		24,500,000	
7	2009-02-27	한국슈넬제약㈜	18,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5-04	2009-05-04	-	
8	2009-02-27	㈜핀타미크로	12,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5-04		12,000,000	
9	2009-02-27	한국개발금융㈜	6,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5-04	2009-05-01	-	
10	2009-03-20	㈜이씨엔	121,2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5-25		121,200,000	
11	2009-04-10	네스텍 크㈜	355,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6-15	2009-06-15	-	
12	2009-04-10	OOO	2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6-15		20,000,000	
13	2009-04-10	OOO	16,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6-15	2009-06-12	-	
14	2009-05-06	㈜보르네오가구	4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7-10	2009-07-10	-	
15	2009-05-06	㈜인네트	598,2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7-10		598,200,000	
16	2009-05-27	세합회계법인	8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7-31	2009-07-31	-	
17	2009-05-27	㈜시라콤	310,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7-31		310,500,000	
18	2009-05-27	㈜유니드테크놀로지스	2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7-31	2009-07-21	-	
19	2009-05-27	㈜모라리소스	15,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7-31		15,800,000	
20	2009-05-28	㈜휴리프	50,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8-01		50,400,000	
21	2009-05-28	㈜비엔알엔터프라이즈	44,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8-01		44,000,000	
22	2009-05-28	㈜봉주	44,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8-01		44,000,000	
23	2009-05-28	㈜리노셀	41,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8-01	2009-07-31	-	
24	2009-05-28	㈜확인영여사	38,6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8-01	2009-07-31	-	
25	2009-05-28	㈜사이버저스	34,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8-01		34,000,000	
26	2009-05-28	㈜에듀언스	30,9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8-01	2009-08-19	-	
27	2009-05-28	㈜싱에스코리아	28,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8-01	2009-07-31	-	
28	2009-06-05	청주상호저축은행	4,000,000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2009-08-10	2009-08-10	-	

	부과일시	당사자	부과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납부일시	부과금 전액	비고
29	2009-06-05	한주상호저축은행	71,000,000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2009-08-10	2009-08-11	-	
30	2009-06-18	교보생명(株)	22,000,000	보험업법 위반	2009-08-24	2009-08-18	-	
31	2009-06-24	㈜아이텍엔컴퍼니	4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8-28	2009-08-28	-	
32	2009-06-25	㈜아이씨코퍼레이션	45,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8-31		45,500,000	
33	2009-06-25	대우전자부품(株)	141,2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8-31		141,200,000	
34	2009-07-08	㈜씨모텍	232,2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9-11		232,200,000	
35	2009-07-08	㈜상보	97,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9-11		97,000,000	
36	2009-07-17	동양이앤씨(株)	23,7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9-21		23,700,000	
37	2009-07-17	㈜원드스카이	147,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9-21		147,000,000	
38	2009-07-24	㈜대한온박지	34,2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9-28		34,200,000	
39	2009-07-24	㈜테라리소스	456,2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9-28		66,300,000	
40	2009-07-24	㈜비엔알엔터프라이즈	63,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9-28		456,200,000	
41	2009-07-24	㈜아호커뮤니케이션	66,3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9-28		63,800,000	
42	2009-07-24	㈜셀프랩(구.에이치원바이오)	217,800,00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위반	2009-09-28		217,800,000	
43	2009-07-24	㈜씨엔중공업	116,800,00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위반	2009-09-28		116,800,000	
44	2009-07-24	㈜트라이콤	79,700,00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위반	2009-09-28		79,700,000	
45	2009-07-24	㈜화콘디엔지	54,000,00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위반	2009-09-28		54,000,000	
46	2009-07-24	㈜엑스씨이	51,700,00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위반	2009-09-28		51,700,000	
47	2009-07-24	㈜대유	50,200,00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위반	2009-09-28		50,200,000	
48	2009-07-24	㈜블루스콘디엔아이	48,100,00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위반	2009-09-28		48,100,000	
49	2009-07-24	㈜포넷	24,400,00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위반	2009-09-28		24,400,000	
50	2009-07-24	㈜아원	20,000,00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위반	2009-09-28		20,000,000	
51	2009-07-24	㈜정원엔시스템	4,100,00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위반	2009-09-28		4,100,000	
52	2009-07-30	(전납)보해상호저축은행	144,000,000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2009-10-05		144,000,000	
2009년 8월 현재		52건 부과	4,406,400,000		16건 납부	36건 미납	3,571,100,000	
합계		151건 부과	26,891,100,000		63건 납부	68건 미납		

신 학 용 의 원

1.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 내역

1.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 내역

성명	직급	처분결과
○○○	서기관	견책
○○○	서기관	감봉2월
○○○	사무관	견책

2. 최근 3년간 발주용역보고서 상세목록(기간, 제목, 용역비, 연구자 등), 정책반영 결과

□ 붙임 참조

<붙임. 최근 3년간 발주용역보고서 상세 현황>

□ 2007년 발주용역보고서 현황

(단위 : 백만원)

과 제 명	용역기간	용역비	연구자	정책반영결과
기업 상장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 방안	07.7.24~07.10.8	22	엄경식 (한국증권연구원)	○ 상장제도와 퇴출제도 개선 및 이에 대한 규정개정 추진
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07.7.30~07.12.14	33.2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 2008년 FATF상호평가를 위한 권고사항 이행실태 보고서 작성과 상호평가 실사 전략수립에 활용
역외금융기관, 역외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 유형 및 대응방안	07.9.5~07.12.20	38	안형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자금세탁 혐의거레에 대한 상세분석 기법개발에 활용
펀드판매 경로 개선 방안 연구	07.9.6~07.12.20	21	신인석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령 제정시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 중개업 또는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회사는 펀드 판매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방안 연구	07.9.21~07.12.20	28.5	박찬호 (한국법제연구원)	○ 관련 법률의 체계분석을 통한 개정방향 제시 ○ 관련 법률 개정의 법률적 기초 제공 ○ 관련부처 협의 및 법제처 등 심의시 개정 근거 제공 등
주요 선진국의 금융인프라 관련 제도 현황 조사	07.10.1~07.12.24	23	박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해외 주요선진국 및 주요 국제금융기관의 금융인프라에 대한 제도, 연구 실적, 개선사례 등을 비교분석하여 국내 제도 개선 추진시 활용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대응한 자금세탁방지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07.10.5~07.12.20	28.5	강동원 (삼성KPMG Advisory)	○ 연구결과(증권업계의 지급결제제도 도입에 따른 자금세탁 위험성 증가)를 반영하여 관련분야 감독·검사 강화에 활용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07.10.5~07.12.20	33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산학협력단)	○ 강화된 고객확인제도 도입(07.12.21 법개정, 08.12.22일 시행)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

과 제 명	용역기간	용역비	연구자	정책변영결과
홍콩사례를 중심으로 한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전략 현황분석과 바람직한 해외진출 정책 마련	07.10.26~07.12.17	38	박재하 (한국금융연구원)	○ 외국 금융중심지로 진출 전략 등에 대한 분석으로 국내 금융 회사의 성공적 해외진출 정책에 반영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은행 지배구조 개선 방안	07.10.05~07.12.31	30	이병운 (한국금융연구원)	○ 은행법(08.03.14시행), 동법시행령(08.06.01시행) 개정시 활용
우리나라 회계관련 제도의 평가와 향후 개선 방안	07.10.19~08.3.4	45	노희진 (한국증권연구원)	○ 회계제도 선진화 T/F를 통해 기본방안 마련 ○ 관련법령 개정시 기초자료로 활용 ○ 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시 근거자료로 활용 등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07.11.7~07.12.7	10	위명숙 (케이티지엘에스㈜)	○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 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금융업계 및 학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금융규제 개혁 업무에 활용
뉴욕, 런던시 등의 금융클러스터 조성 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연구	07.11.05~07.12.20	33	한국회 (BHP코리아㈜)	○ 해외 금융중심지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한국의 금융중심지 모델 발굴, 금융중심지 정책 등에 활용
금융업 직무와 업무수행 역량분석	07.11.2~07.12.17	19	김병연 (한국금융연구원)	○ 각 업권별 직무의 특성과 각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기술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를 통하여 금융전문인력 정책방향 정립 등에 활용
금융허브 육성을 위한 금융관련 행정의 국제화 방안	07.11.19~07.12.28	29	이성제 (한국금융연구원)	○ 금융의 국제화 방안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금융인프라 선진화, 금융회사의 국제 경쟁력 제고 등 금융중심지 정책 방향 정립 등에 활용 ○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등 지원부서의 기능 정립에 활용
아시아 전자금융시장의 분석과 한국기업의 진출 전략	07.12.18~08.2.17	30	이종열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 각국 전자금융서비스 시장을 분석하여 전자금융서비스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 관련 정책 등에 반영
어음제도 개선방안	07.2.1~07.4.30	14.3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 어음제도 개선시 반영 - 당좌개설 요건강화(거래기간 및 수신평잔 상향조정) - 1천만원 이상 어음발행 등록제 도입 및 어음용지 관리강화

□ 2008년 발주용역보고서 현황

(단위 : 백만원)

과 제 명	용역기간	용역비	연구수행자	정책반영결과
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연구용역	08.7.4~08.10.3	30	정찬우 (한국금융연구원)	○ 신용카드 기맹점수수료공개선택제(09.1) 추진시 관련 연구내용 활용
외환시장 발전방향	08.7.11~08.8.29	19	윤덕룡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 최근 외환시장 변동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됨에 따라 외환시장 발전과정 및 현황, 문제점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여 이를 내부 보고하고 참고 자료로 활용
미국 FinCEN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실태 연구	08.7.22~08.12.21	40	이진국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금융기관 협의거래보고건수 급증에 따른 심사분석 시스템 개선에 반영 ○ FIU기능의 효율화를 위한 장기적인 발전방향 도출에 활용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08.7.28~08.10.26	30	구정환,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 4가지 분야에 대한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 -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개편 - 상품별·투자자별 특성에 맞는 투자자 보호체계 강화 - 파생거래로 인한 금융회사의 부실화 및 시스템 리스크 방지 - 파생상품 시장 감독기능 재정립
FTA, DDA 등 금융서비스분야 국제협상 법률적 검토 연구용역	08.8.1~08.12.24	40	정의종 (법무법인(유) 태평양)	○ 현재 진행중인 페루, GCC, 호주, 뉴질랜드 등과의 FTA 협상에 대비 협정문, 양허안/유보안 작성 및 DDA 등 양자·다자간 실제협상에 활용
단기금융시장 제도 개편에 따른 시장영향 분석	08.8월~08.9월 (2개월)	20	이규복,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을 내부 보고 ⇒ 향후 제도개편 추진시 정책 참고 자료로 활용
서브프라임사태이후 금융시장 조기경보 시스템 개선 연구용역	08.8.6~08.11.4	46	오창석 (사)국제금융센터)	○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을 내부 보고 ⇒ 최근 금융위기 이후 민감해진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및 리스크 요인을 선제 점검 하는 모형으로 활용하고 필요시 모니터링 과정 등에 반영

과 제 명	용역기간	용역비	연구수행자	정책반영결과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 수준 제고를 위한 감독검사 효율화 방안	08.13~08.12.12	40	정태수 (연스트앤영어드 바이저리(주))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제도 감독검사업무 개선방안」을 마련(09.1)
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척 필요성 및 기본방향	08.7.28~08.11.20	22	연강흠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 코스닥, 프리보드 제도개선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 ○ 비상장 기업에 대한 SPAC 제도 도입(09년 하반기) 및 영세기업에 대한 프리보드 펀드 조성(09.6월) 등 시장 개선 조치 지속 추진
홈페이지 개편	08.10.31~08.12.20	29.5	박철휘 (주)사이버이메지 네이션	○ 홈페이지 이용자 편의성 제고 및 그동안 나타난 미비점 개선 - 관계부처 개정된 정부지침 「전자정부 웹 표준지침」,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반영 - IT환경 변화에 따른 보안성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비명시적규제 개혁 외부평가	08.11.27~08.12.26	25.1	이관제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비명시적규제에 대해 외부평가를 실시하여 금융업계 종사자에 대해 규제정비 체감도 측정 및 의견 수렴을 통해 지속적 규제 개혁 추진에 반영
금융중심지 선정에 관한 금융전문가 의견 조사	08.12.12~08.12.29	19	이용수 (한국개발연구원)	○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하여 학계인사, 금융기관 종사자, 외국 금융인 등 전문가의 의견을 조사하여 금융중심지 선정 평가 작업 등에 활용

□ 2009년 발주용역보고서 현황

(단위 : 백만원)

과 제 명	용역기간	용역비	연구수행자	정책반영결과
자본시장 등 금융부문별 노동력 특성 분석 및 수급 전망	09.4.21~8.28	30	김대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금융인력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부문별 노동력 구성의 특성 및 인력 활용 등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

3. 최근 3년간 타 부처 등 파견자 명단

□ 최근 3년간 타 부처 등 파견자 명단

직 급	파견일	파견기관
고공단 1명, 4급 2명	08.04.07~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4급 1명, 5급 1명	08.04.21~	미래기획위원회
4급 1명	08.10.02~	국무총리실
4급 1명	08.04.18~	국가사이버안전센터
고공단 1명, 4급 1명 5급 2명	08.12.01~	기업재무개선지원단
4급 1명, 5급 2명	09.02.12~	G-20 기획단

4.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

□ 신용회복기금을 통한 서민지원

- 금융소외자 지원을 위해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금융회사 잔여재산 분배금(7천억원)을 재원으로 신용회복기금을 설립('08.9월) 하여 '08.12월부터 채무재조정 및 전환대출(환승론) 시행중
- (채무재조정) 금융회사의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연체이자 감면, 최장 8년의 장기분할상환 등을 통해 재기를 지원 (금융채무불이행자 기록 삭제)
- (전환대출) 신용등급 7~10등급인 저신용층의 20%이상 금리 대출을 신용회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12%(평균) 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이자상환 부담을 완화
- 채무재조정 및 전환대출(환승론) 지원실적('08.12~'09.8)

구분	채무재조정	환승론
건수	54,777 건	15,401 건
채권액	2,217억원	1,518억원

□ 소액서민금융재단을 통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 휴면예금을 활용하여 저소득층의 취업·창업 지원 등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08.3월 소액서민금융재단 설립
- '08년, 빈곤아동 2천명·저신용자 4천명 등 1만여명과, 서울시 24개 전통시장 등 13개 단체에 총 271억원 지원
- '09년, 그 규모를 60%이상 확대하여 440억원 지원

< 소액서민금융재단 현황 >

	출 연	지 출
'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704억 원 - 은 해 1,767억 원 - 보 영 917억 원 - 저 축 은 행 18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71억 원 - 소액대출 241억 원 - 소액보험 30억 원
'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29억 원 - 은 해 894억 원 - 보 영 232억 원 - 저 축 은 행 3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40억 원 - 소액대출 400억 원 - 소액보험 40억 원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신용회복 지원 확대

- 장기연체자의 증가와 이에 따른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하를 예방하고자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사전채무조정을 실시

<최근 3년간(~'09.8)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프로그램 신청 현황>

(단위 : 명)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신청현황	
연 도	신청자
2006년	85,826
2007년	63,706
2008년	79,144
2009년6월말	55,921
합 계	254,597

-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1~3개월 미만 연체자에 대해서도 1년간 한시적으로 채무조정을 확대 시행(이자 30%감면,원금은 최장 8년 분할 상환 등)



* '09.4.13~8월말, 6,908명이 신청하여 채무조정 심사중

☐ 서민의 자활지원을 위한 미소금융(마이크로 크레딧)사업 대폭 확대

※ 별첨 1 : 미소금융확대 방안 보도자료

별첨 2 : 미소금융확대 세부시행 방안

별첨 3 : 미소금융사업 Q&A

 금융위원회	<h1>보도자료</h1> <h2>9. 17(목) 17:00부터 보도가능</h2>	 소액서민금융재단 Microfinance Foundation (휴먼에듀관리재단)
---	--	---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기업금융과 소액서민금융재단 사무처			
책 임 자	금융위 배준수 과장(2156-9850) 소액서민금융재단 장훈기 처장(2084-7905) · 문의전화 (국번없이)1600-5500	담 당 자	금융위 주흥민·서재홍사무관(2156-9851~2) 소액서민금융재단 양창엽 팀장(2084-7960)	
배 포 일	2009. 9. 17(목)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총 8 매

제 목 : 서민의 자활지원을 위한 미소금융(마이크로 크레딧)사업 대폭 확대

- 향후 10년간 2조원 이상 지원(과거 10년간 지원 규모의 13배이상)
- 재정지원 없이 민간 기부 등을 중심으로 사업재원 조성·운영
- 「소액서민금융재단」을 「(가칭)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개편하여 미소금융사업을 총괄
- 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미소금융사업수행 법인을 전국 200~300여개로 확대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및 자원봉사자 위주 운영으로 『나눔과 봉사의 문화』 확산

□ 「제31차 비상경제대책회의」(9.17일)에서,
현재 소액서민금융재단을 중심으로 수행중인 '무담보·소액대출'(Microcredit)을 미소금융사업으로 대폭 확대하여,
서민의 원활한 자활을 지원할 수 있는 「미소(美少)금융* 확대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이를 금년 12월부터 시행기로 하였음

* 아름다운 소액대출(아름다울 美, 적을 少)로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

1. 추진 배경

□ 외환위기 이후 10여년간 양극화가 심화되어 중산층이 줄어들고 저소득층으로 전락한 서민층이 증가

○ 특히, 자활의지는 있으나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층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대출이 용이한 불법 사금융 등을 이용하게 되고 이에 따라 높은 이자부담과 불법 추심행위에 시달리는 사례가 많이 발생

* '09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등록대부업 대출 규모는 5.2조원

- 기존의 제도권 서민금융회사들도 2000년대 초반 소액신용대출 부실화 등으로 그 동안 PF대출 등 고위험·고수익위주의 영업에 치중한 결과 전통적 서민금융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그간 정부는 신용회복지원, 저금리 전환대출 등 다양한 서민금융대책*을 마련·시행해 왔으나, 경기침체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서민금융수요 충족에는 충분하지 못한 상황

* '09.8월 현재 서민금융 지원 현황

- 신용회복기금 : 채무재조정 50,327건, 전환대출(환승론) 14,561건

- 신용회복위원회 : 개인워크아웃('08년~) 120,410건, 개인프리워크아웃('09.4~) 4,561건

- 재래시장 및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2.0~3.5% → 2.0~2.2%)

□ 해외에서는 제도권 금융의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무담보 소액대출인 “마이크로 크레딧”이 민간에 의해 자생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국내에도 10여년전부터 도입되어 서민금융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나름대로 수행해 왔음

- 그간 일부 민간기부금과 재정을 재원으로 하는 “마이크로 크레딧”은 ‘08.3월 “마이크로 크레딧 뱅크(Microcredit Bank)” 역할을 하는 소액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을 계기로 그 규모가 확대**되는 등 새로운 轉機를 맞이하였음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08.3월)

** ‘00~’09년중 마이크로 크레딧 지원 규모(1,480억원)의 1/3이상(501억원)을 소액서민금융재단이 ‘08~’09년 2년간 공급

- 그러나, 정부와 민간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①규모 미흡*, ②전달체계의 비효율에 따른 중복 또는 과소 지원, ③적은 수의 수행기관 등에 따른 서민의 접근성 제약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08년 마이크로 크레딧 규모는 GDP의 0.005%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

- 이에 따라, 금번에 서민금융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면서 저소득층·저신용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대책을 강구하게 된 것임

2. 추진 내용

- ①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소액서민금융재단」을 (가칭)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개편하여 마이크로 크레딧의 중추적 기관으로 활용
- 미소금융중앙재단은 마이크로 크레딧 정책방향 결정, 사업의 가이드라인 설정, 미소금융 수행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컨설팅, 교육훈련, 지원정보의 통합관리 등 미소금융사업을 총괄하고,

- 동 재단은 지역별 미소금융수행 법인(미소금융 ○○지점) 및 동 법인의 지부 설립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200~300개의 전국적인 마이크로 크레딧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를 통해 미소금융사업을 수행
- 체계·금융권 등도 희망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미소금융재단을 설립·운영토록하고, 미소금융중앙재단에의 기부금을 동 재단에 배분
- 지역별 미소금융법인은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부터 대출재원 (초기에는 3~5억원) 및 일정수준의 운영비를 지원받아 직접 대출 및 회수, 자활컨설팅, 상담업무를 수행
- 동 법인은 지역내 사회공헌도가 높고 사회봉사 의지가 있는 대표자 1명, 직원 2~5명으로 구성
- 자원봉사 취지를 감안하여 대표자는 무보수·명예직, 경험 많은 금융회사 퇴직자 등 기간요원은 월100만원 이하, 청년 자원 봉사자는 최소한의 실비 지급
- 제 1단계로 전국에 20~30개 정도의 지역법인을 설립하고,
 - 제 2단계로 기 설립 지역법인의 지부 확대 및 신규법인 설립 등을 통해 200~300개 규모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확대
-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지역별 미소금융법인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실적이 우수한 법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하고, 저조한 법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축소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유지

② 재정지원 없이 향후 10년간 총 2조원이상(금년중 약 3천억원)의
기금을 조성

* 지난 10년간('00~'09) 마이크로 크레딧 지원규모(1,480억원)의 13배 이상

- 재계(전경련 소속회원기업) 기부금 약 1조원과 휴면예금* 출연금
(7천억원)을 포함한 금융권 기부금 1조원 이상으로 조성

* '09.9월 현재, 기 출연액 약 2천억원 외에 향후 10년간 매년 500억원
가량 출연될 것으로 예상

③ 청년·금융회사 퇴직자 등 자원봉사자 위주로 운영인력을
채용하여 마이크로 크레딧의 저변을 확대

- 전국 200~300개의 지역법인에 법인당 2~5명 수준의 자원
봉사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일정기간 봉사한 청년에 대해서는
취업시 추천서 발급 등을 통해 우대하고

-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의 핵심인력인
자활컨설팅 전문인력(RM)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나아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지역법인도 신설할 수 있도록 지원

④ 지원내용

- 영세사업자 운영자금 : 2년이상 영업자에 대해 원재료 구입,
시설 개·보수 자금 등 운영자금 지원
- 전통시장 상인대출 :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영세상인 운영
자금 지원
- 프랜차이즈 창업자금* : 시장에서 검증을 받아 성공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업체와 연계하여 창업시 권리금 등 창업자금 지원

*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처음 시도

- 일반 창업자금 : 본인의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거나 기존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임차보증금 지원
 - 공동대출 : 자활추진단체에 대해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
 - 사회적기업 지원자금 : 사회적육성기업법에 의해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해 운영자금을 지원
- * 「사회적육성기업법」 상의 요건을 갖춰 취약계층에 일자리나 사회서비스(교육, 예술·관광·운동, 간병·가사지원 등)를 제공하는 회사(노동부장관 인증)
- 대출한도는 지원내용에 따라 500만원~1억원 이내
 - 금리는 시장금리 이하로 적용(현시점 5% 수준)
 - 상환기간은 지원내용에 따라 1~5년 분할 상환
(단, 기존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자의 대출내용과 달리 거치기간은 무이자로 운영)

⑤ 재계·금융권 등이 설립한 미소금융재단 운영

- 재계·금융권 등이 미소금융중앙재단에 지정기부한 자금을 배정받아 재계 및 금융권이 직접 자율성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
 -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사업모델 개발, 표준운영방안 제시, 교육 훈련, 지원정보의 통합관리 등을 통해 재계·금융권 등이 설립한 미소금융재단의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 정부는 미소금융중앙재단을 세법상 특례기부단체로 지정하여 미소금융사업에 동참하는 재계·금융권 등에 대해 세제상 지원

3. 기대효과

- ① (저소득층의 자활지원) 자활의지가 있으나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층 및 영세사업자의 자활을 제도적으로 지원 가능
 - 지난 10년간 1,480억원(연평균 148억원)이 조성·공급되었으나, 향후 10년간 2조원 이상(연평균 2천억원 이상)이 조성·공급 되면 약 13배 이상 확대
 - 향후 10년간 약 20~25만 가구 이상의 저소득층들이 미소금융 사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
- ②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재계와 금융권이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자금을 기부하고, 직접 미소금융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이행
- ③ (나눔·봉사문화 확산) 미소금융지점 대표자, 금융회사 퇴직자·청년 자원봉사자 등이 미소금융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또한, 기부와 봉사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도 나눔과 봉사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 마련
- ④ (금융시스템의 보완·발전) 제도권 금융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고금리 사채 등 불법 사금융시장을 대체함으로써 서민·영세자영업자의 금융 이용기회를 부여하고 고금리 부담도 경감

4. 추진 일정

□ 사업 준비 ('09.9~11월)

- 소액서민금융재단을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개편(10월)
- 지역별 미소금융법인(미소금융지점) 설립준비 (9~11월)
-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 (10~11월)

□ (1단계 사업) 지역별 미소금융법인 설립 ('09.12~'10.5)

- 20~30개 수준의 지역별 미소금융법인 설립 추진
- 재계·금융권 미소금융재단도 준비를 마치는대로 설립 추진

□ (2단계 사업) 지역별 네트워크를 단계적으로 200~300개로 확대 추진 ('10.6월~)

* 문의전화 : (국번없이) **1600-5500** (종합안내센터)

※ 별첨 : 1. 미소금융 확대방안
2. 미소금융사업 Q&A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별첨 2〉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서민의 자활지원을 위한
미소금융 [美少金融 마이크로 크레딧] 확대방안**

2009. 9. 17

**금 융 위 원 회
소액서민금융재단**

I. 마이크로 크레딧의 의의

II. 우리나라 마이크로 크레딧 현황 및 문제점

III. 추진 방안

IV. 기대효과

IV. 추진 일정

〈참고1〉 서민금융 지원현황

〈참고2〉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 현황

1. 마이크로 크레딧의 의의

1. 마이크로 크레딧(Micro-Credit) 발전과정

◇ 마이크로 크레딧은 일반적으로 제도권 금융회사와 거래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무담보 대출'을 의미

□ 70년대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등 제도금융권이 발달되지 않은 저개발국에서 민간주도로 빈민에 대한 소자본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출발

□ 80년대 들어 방글라데시 Grameen Bank*, 인도네시아 국영 은행(BRI), 남미 ACCION(Action) 등의 성공사례가 알려지면서 전세계적으로 마이크로 크레딧이 확산

* 방글라데시어로 “마을”을 뜻하는 그라민뱅크는 '76년 Yunus교수 주도로 창업 자금 지원. 5명 단위의 여성그룹에게 평균 100달러를 무담보 대출하고 자금 상환에 연대책임 부과(회수율 98%) → '83년 은행으로 전환

□ 90년대부터 NGO가 운영하는 일부 마이크로 크레딧 기관이 예금을 받아 대출 재원을 확대하고자 은행 또는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전환

* 은행 전환 사례: BancoSol(볼리비아), Compartamos (멕시코), Mibanco(페루) 등

□ UN · WB · ADB 등 국제기구의 차관 · 무상원조가 마이크로 크레딧 확대에 큰 역할

○ UN은 '97년 Microcredit Summit Declaration을 채택

○ 특히, 국제기구가 중심이 되어 구성한 CGAP (Consultative Group to Assist the Poor)는 '95년부터 마이크로크레딧 발전을 위한 주요전략과 원칙을 확립하는 제도확산에 기여

2. 해외의 마이크로크레딧 유형

가. NGO형 (방글라데시 Grameen Bank, 남미 ACCION)

□(연혁) NGO들이 빈곤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금융사업을 시작한 데서 유래

□(운영) 대출재원은 기업 기부, 정부·국제기구 등의 지원에 의존하며, 대출시 통상 담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이자율은 시장금리 이상의 높은 수준

나. 조합형 (남미 FINCA Village Bank)

□(연혁) 각국별로 지역별 유대에 따라 전통적으로 계승되던 협동체를 전국단위로 조직화하면서 발전(우리나라의 신협)

* FINCA Village Bank의 경우, 1984년 볼리비아에서 시작된 이후 현재 남미·아프리카·아시아 등 23개국으로 확산

□(운영) 대출재원은 조합원 출자금·예금, 금융차입, 기업 기부에 의존하며, 조합원에게 소액(FINCA Village Bank의 경우 50달러)을 대출

다. 은행형 (인도네시아 국영은행 Bank Rakyat Indonesia)

□(연혁) '84년 기존 국영 농업 개발은행에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부(BRI unit desa)를 신설하여 농촌지역에 여·수신 제공(우리나라 농수협의 상호금융)

□(운영) 대출재원은 일반은행처럼 예금(약 75%)에 의존하며, 상환 실적에 따라 대출한도를 인상하고, 이자율은 시장금리 이상이며, 지역주민을 고용하여 대출고객을 모니터링

Ⅱ. 우리나라 마이크로 크레딧 현황 및 문제점

1. 현 황

◇ 30여개의 민간단체가 재정, 지자체 예산, 소액서민금융재단 자금, 민간 기부금을 지원받아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수행

※ 정부, 지자체, 소액서민금융재단은 직접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민간단체에 자금만 지원

□ (사업수행기관) 2000년부터 (사)신나는조합 등 민간단체가 민간 기부금으로 창업자금 지원을 시작

○ '05년 재정(복지부), '08년 소액서민금융재단의 지원으로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 규모가 확대

□ (재원① : 재정) '05년부터 복지부는 예산으로 민간기관에 자금을 무이자로 대출('05~'08년 연 20억원, '09년 330억원)

* 지원대상 기관은 '05년에 사회연대은행·신나는 조합 등 2개 단체였으나 '09년 19개 단체로 확대

□ (재원② : 지자체) '09.5월, 서울시가 복지부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마이크로 크레딧 기관에 자금대출 개시(60억원)

□ (재원③ : 소액서민금융재단) '08.3월 금융회사 휴면예금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소액서민금융재단 설립 이후 대폭 확대

○ 기존의 마이크로 크레딧 수행기관 외에, 지자체(전통시장 지원), 신용회복위원회(금융채무불이행자 지원), 보험회사(소액서민보험)를 통한 지원도 실시

* '08년 271억원, '09년 440억원 지원

2. 문제점

① 수요에 비해 지원규모가 미흡 ⇨ 재원 확충 · 다양화

- 경기침체 영향으로 인한 저소득계층의 실업증가로 자활금융 수요는 커진데 비해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움
- 제도권 금융을 보완해 줄 마이크로 크레딧 지원규모는 크지 않음
 - 우리나라(총 인구 및 GDP 대비 수혜자 및 지원액, '08년)
 - 총 인구대비 0.014%(6,800여명), GDP대비 0.005%(470억원)

② 전달체계의 효율성이 낮고 추진기반이 취약 ⇨ 민간 참여 확대

- 전달체계가 서로 연계되지 않아 중복지원의 소지가 크고, 재원조달 등에서 민간의 자발적 기반도 취약
- * (예) 서울 거주 9등급 저신용 자영업자는 복지부 · 서울시 · 소액 서민금융재단 지원 민간단체 등에 중복 신청 가능

③ 서민들의 접근성이 제한 ⇨ 접근성 제고

- 일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마이크로 크레딧이 지원되고 있으나 수행기관이 적어 수요자들의 접근이 제한적

◇ 글로벌 경제위기로 자활의지는 있으나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 · 영세자영업자 등은 제도권 금융이용이 제한되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私금융에까지 의존

◇ 그동안 정부 재정지원(지역신보 보증)을 확대하여 왔으나 보다 근본적으로 저신용 서민 · 영세 자영업자 등의 자활 지원을 위해 마이크로 크레딧 자금의 공급을 확대하고 제도화하는 대책 필요

Ⅲ. 추진 방안

【 기본 방향 】

- ①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소액서민금융재단」을 마이크로 크레딧의 중추적 기관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 개편
 - 총괄기능 : 마이크로 크레딧 정책방향 결정, 사업의 가이드라인 설정, 컨설팅, 교육, 정보의 통합관리 등
 - 자체 네트워크 구성·지원 기능 : 지역별로 미소금융을 직접 수행하는 법인인 미소금융○○지점 등을 공모하여 200~300개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수행
 - 재원 배분 기능 : 미소금융 수행법인에 대출 및 운영자금을 배분·지원
- ② 민간 기부 활성화를 통해 향후 10년간 총 2조원 이상 (금년중 약 3천억원)의 기금을 조성
 - 재계(전경련소속 회원기업 기부금) : 1조원 이상 (금년중 1천억원)
 - 금융권(휴면예금 및 기부금) : 1조원 이상 (금년중 2천억원)

※ 재계·금융권 등의 기부금은 재계·금융권 등이 직접 운영하는 미소금융재단에 배분
- ③ 청년 자원봉사자·금융회사 퇴직자 등을 운영인력으로 활용하여 민간 자원봉사 주도로 마이크로 크레딧의 저변을 확대
- ④ 미소금융중앙재단의 자체 네트워크를 통해 금년 12월부터 1단계 사업을 시작하고, 내년 6월부터 2단계 전국사업으로 확대
 - 재계·금융권의 미소금융사업은 준비후 내년 1월부터 추진

1. 소액서민금융재단을 미소금융의 중추적 기구로 확대·개편

- 기존의 소액서민금융재단을 마이크로 크레딧 전국 네트워크의 중추기구(미소금융중앙재단)로 확대·개편
 - 미소금융중앙재단은 마이크로 크레딧 정책방향 결정, 사업 가이드라인 설정, 컨설팅, 교육, 정보의 통합관리 등 총괄 기능 수행
 -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를 통해 재단의 자체적인 미소금융사업 수행을 확대
 - 재계·금융권의 기부금을 받아 이를 재계·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미소금융재단에 배분

2. 미소금융 수행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 구축

-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전국의 영세상인 및 서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 미소금융법인을 공개모집
 - 동 법인을 미소금융○○지점으로 설립하여 해당 지역의 미소금융사업을 수행
 - 지역내 사회공헌도가 높고 사회봉사 의지가 있는 대표자 1명과 금융회사 퇴직자·청년 등 자원봉사자 2~5명 등을 포함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
- 금년 12월부터 지역별로 미소금융의 업무를 시작하되, 2단계로 전국규모의 네트워크를 구성
 - (1단계: '09.12~'10.5) 20~30여개의 지역별 법인 설립을 추진
 - (2단계: '10.6~) 전국에 걸쳐 법인 설립 및 동 법인의 지부 확대 등을 통해 200~300개의 네트워크 구성

□ 미소금융지점은 자활자금지원 및 회수, 자활컨설팅 업무, 상담 등 마이크로 크레딧 업무를 수행

○ (대출) 서류심사, 현장실사 및 면접심사 등 체계적인 심사 절차를 거쳐 수요자 맞춤형 소액대출

- 대출재원은 초기 지점당 3~5억원에서 중장기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일정수준의 운영비를 지원

○ (자활 컨설팅)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속 전문가(RM) 등의 지원을 받아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 사업계획 및 입지선정, 마케팅, 재무 및 회계, 고객 서비스 등

○ (상담) ① 소액금융상담, 신용관리상담(부채클리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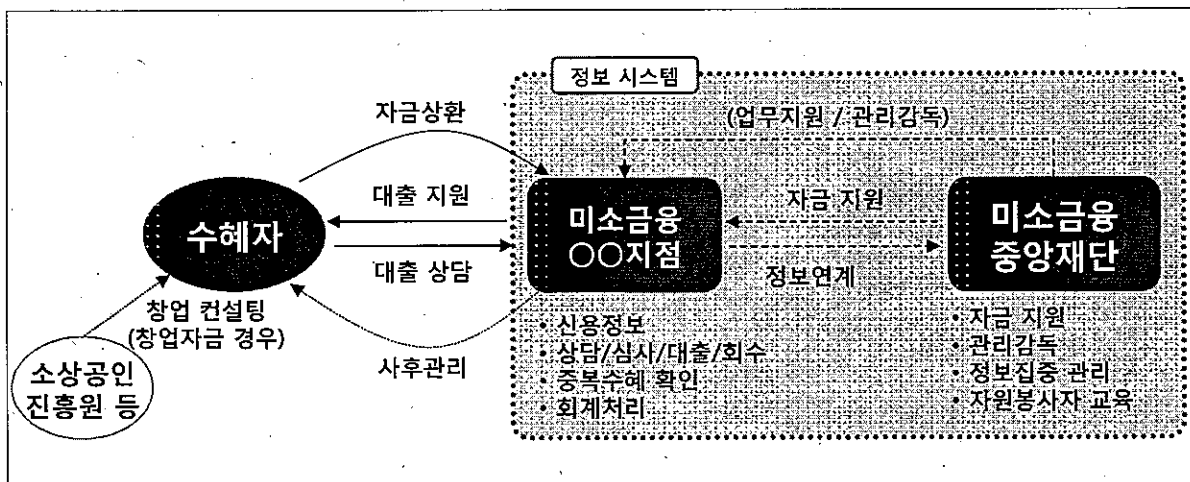
② 자활 컨설팅(소상공인지원센터 연계)

③ 신복위(채무재조정), 신복기금(전환대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구직)로의 연결·알선

□ 미소금융지점의 사무실은 서민들의 접근성이 높고 임차 비용이 들지 않는 사무공간을 활용

* (예시) 전통시장 상가, 마을회관, 공공기관·민간단체의 여유공간 활용(고용지원센터 44개, 소상공인지원센터 57개, 지방상의 7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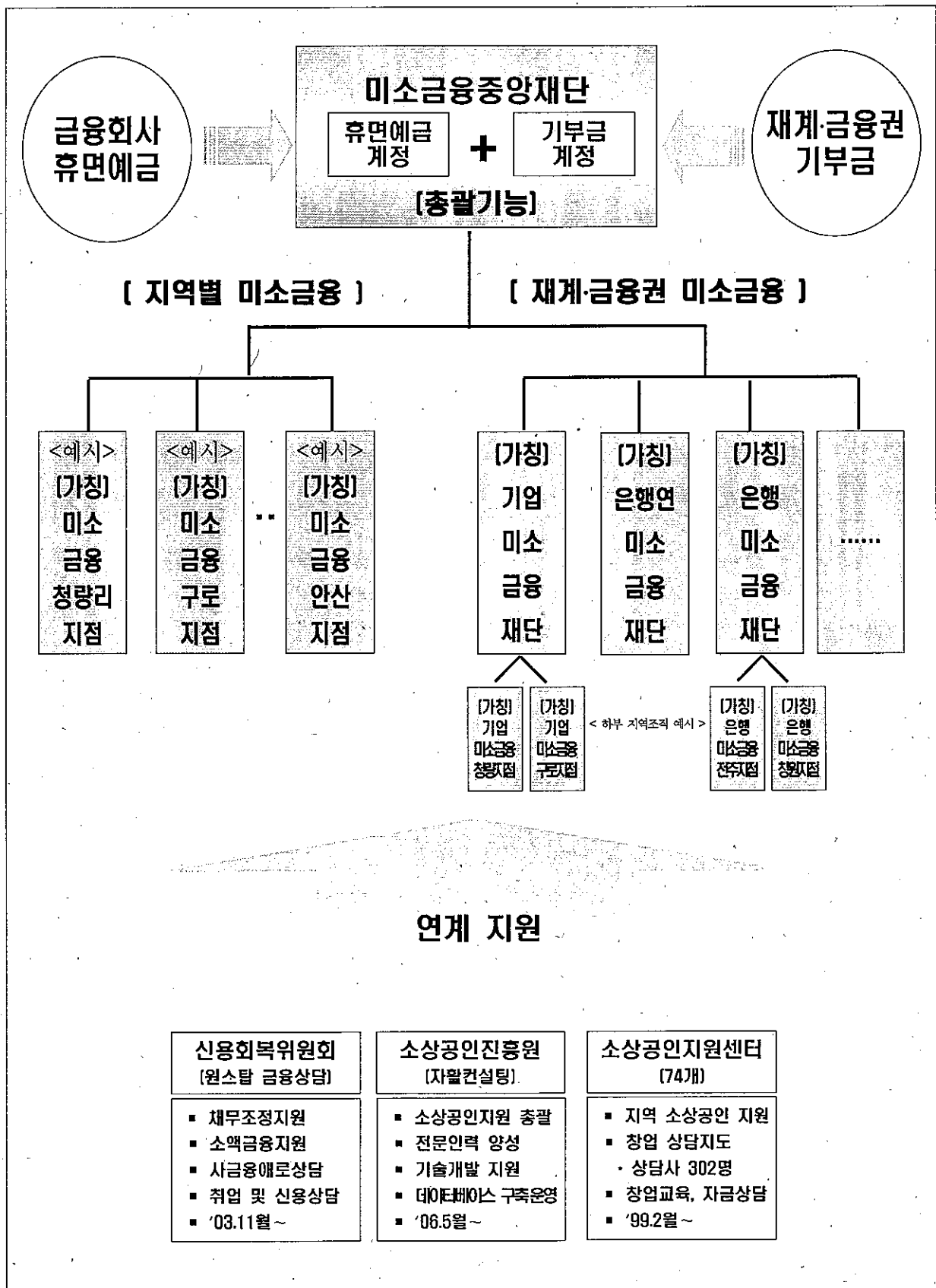
< 지역법인 업무절차 >



3. 재계·금융권의 자율적 미소금융사업 확산

- 재계·금융권 등이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이행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직접 설립·운영하는 재단을 미소금융중앙재단에 연계
 - 재계·금융권 등이 미소금융중앙재단에 지정기부한 자금은 재계·금융권 등이 설립한 개별 미소금융재단에 배분
 - 재계·금융권 등이 설립한 미소금융재단은 자율성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 운영
 -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사업모델 개발, 표준운영방안 제시, 정보제공, 교육훈련 등을 통해 개별 미소금융 사업을 지원하여 전체적인 미소금융사업간의 연계성을 강화
 - 재계·금융권 등 민간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미소금융중앙재단을 세법상 특례기부단체로 지정 추진

< 미소금융중앙재단 운영체계 >



4. 미소금융사업의 대상과 내용

가. 총괄

- ☐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중심이 되어 지원 대상·조건 및 지원 내용을 모델화하여 전체 미소금융사업 일관성을 제고
- ☐ 자활의지가 있으나 신용이 낮아, 제도권 금융회사 접근이 어려운 저신용층·영세자영업자·저소득층이 주요 지원 대상

< 지원내용(요약) >

	지원 내용	지원 조건
영세사업자 운영자금	영세사업자에 대해 원재료 구입, 시설 개·보수 자금 등 운영자금 지원	1천만원 이내 5년상환 시장금리 이하 (2~3% 낮은 금리)
전통시장 상인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영세상인 운영 자금 지원	상인당 5백만원 3년상환 시장금리 이하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검증을 받아 성공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업체를 연계하여 권리금 등 창업자금 지원	5천만원 이내 5년상환 시장금리이하
창업자금	창업을 하거나 기존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임차보증금 지원	5천만원 이내 5년상환 시장금리 이하
공동대출	자활추진단체에 대해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	1억원 이내 5년상환 시장금리 이하
사회적 기업	사회적육성기업법에 의해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에 대해 운영자금 등을 지원	1억원이내 5년상환 시장금리 이하

나. 사업별 세부지원내용

① 영세사업자 운영자금 : 영세사업자에 대한 원재료 구입·시설 개·보수 등 일시적으로 소요되는 운영자금을 지원

○ 지원조건 : 1천만원 이내, 5년분할상환, 시장금리보다 2~3% 낮은 금리(현시점 5%이하)

○ 소상공인진흥원 등의 경영진단 결과, 구조조정 및 취급 상품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필요자금을 지원

* 소상공인진흥원 :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혁신 교육, 컨설팅, 유망사업 안내 등의 지원서비스를 수행

② 전통시장 영세상인 대출 : 전통시장 상인회에 지원하여 상인회가 회원인 영세상인에게 운영자금 등을 대출

○ 지원조건 : 상인당 5백만원, 3년 분할상환, 시장금리보다 2~3% 낮은 금리

○ 현재 시행 또는 시행준비중인 서울시 및 6개 광역지자체를 포함하여 전국 16개 지자체로 확대

* (현재) 서울시 24개 시장(10억원) → (내년) 전국 약 200여개 시장(120억원)

③ 프랜차이즈 : 이미 시장에서 검증을 받아 성공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업체의 기술·브랜드 등을 창업희망자가 활용하여 창업시 권리금과 창업자금 등을 지원

○ 지원조건 : 일반적으로 소액(1천만원이내) 위주로 하되 최고 5천만원 이내, 5년분할상환(1년거치, 거치기간 무이자), 시장금리보다 2~3% 낮은 금리

○ 프랜차이즈 지원시 수혜자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되, 대출채원 보전을 위해 지역사업권 권리는 대출금 상환시까지 재단이 보유

④ 창업자금 : 본인의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고자 하거나 기존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증액이 필요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지원

- 지원조건 : 일반적으로 소액(1천만원이내) 위주로 하되 최고 5천만원 이내, 5년분할상환(1년거치, 거치기간 무이자), 시장금리보다 2~3% 낮은 금리
- 임차보증금 지원시 재단 명의로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대출금 회수 장치 마련

⑤ 공동대출 : 자활공동체 등 자활단체에 대해 수요 및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창업 및 운영자금을 지원

- 지원조건 : 1억원 이내, 5년 분할상환, 시장금리보다 2~3% 낮은 금리
- 대출재원 보전을 위해 지원단체 소속원 공동채무로 하거나 지원단체 대표가 연대보증

⑥ 사회적 기업 지원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인증된 사회적기업에 대해 운영자금 등을 지원

- 지원조건 : 1억원 이내, 5년 분할상환, 시장금리보다 2~3% 낮은 금리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을 지원

* 사회서비스 :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분야의 서비스로
①보육, ②예술·관광 및 운동 ③간병 및 가사지원 ④ 그밖에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인정하는 서비스

5. 자원봉사자의 적극 활용

□ 미소금융 지점별로 대표자가 주관하여 소요인력을 자체 모집

- 전국 300여개 지점의 소요인력(지점당 2~5명)을 선발시 금융회사 퇴직자, 청년 등 자원봉사자 위주로 모집
 - 금융회사 퇴직자 등 경험많은 자원봉사자는 기간요원으로 하여 월 100만원이하의 보수를 지급
 - 청년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실비 지급
- 대표자의 경우 무보수·명예직으로 하여 자원봉사 취지를 구현

□ 미소금융중앙재단이 기간요원 등 자원봉사자 교육 실시

- 금융관련 교육은 신용회복위원회, 자활지원 관련 교육은 소상공인진흥원과 연계하여 전문성 있는 위탁교육 실시

□ 일정기간 봉사한 청년에 대해서는 복지기관·금융회사 등 취업 희망시 우대

- 추천서 발급 : 복지기관, 금융회사 등 취업을 위한 서류 제출시 자원봉사 관련 추천서 발급
- 자활컨설팅 전문인력 교육지원 : 미소금융중앙재단의 전문교육 이수를 거쳐 미소금융지점에 전문인력(RM)으로 파견
- 우수한 자원봉사자가 향후 지역단체 설립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

6. 자원 조달

□ 향후 10년간 총 2조원이상의 기금 조성을 추진 (금년중 3천억원이상)

○ 재계(전경련소속 회원기업) 기부금 : 약 1조원 (금년중 약 1,000억원)

○ 금융권 기부금 : 약 1조원이상 (금년중 2,000억원이상)

· 금융회사 휴면예금 약 7천억원* (금년중 약 800억원) 출연

* '09년까지 누적출연 2,000억원 ('09년 800억원) + 향후 10년간 매년 약 500억원 규모 출연

· 은행 중심으로 2,500억원이상 (금년중 700억원이상) 출연

· 증권유관기관이 500억원(금년중 500억원) 출연

7. 자금 운용

□ 조달된 자금은 미소금융지점과 재계·금융권 재단의 미소금융 사업자금으로 활용

○ 휴면예금은 미소금융중앙재단 자체 지역사업에 사용

○ 재계·금융권의 기부금은 재계 및 금융권이 설립한 미소금융재단에게 다시 배분하여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에 자율적으로 직접 사용

□ 미소금융재단은 기존의 '휴면예금'과 '기부금'을 구분처리하여 자원운영의 투명성을 강화

IV. 기대 효과

- ①(저소득층의 자활지원) 자활의지가 있으나 신용이 낮아 제도권 금융회사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층·영세사업자·저신용층에 자활자금을 제도적으로 지원 가능
- 지난 10년간 1,480억원(연평균 148억원)이 조성·공급되었으나, 향후 10년간 2조원 이상(연평균 2천억원 이상)이 조성·공급되면 약 13배 이상 확대
 - 향후 10년간 기존 제도금융권 밖 약 20만~25만가구* 이상의 저소득층이 미소금융사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
- ②(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 재계와 금융권이 저소득층의 자활 지원을 위한 자금을 기부하고, 재계 및 금융권이 직접 미소금융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이행
- ③(나눔·봉사문화 확산) 지점 대표자, 금융회사 퇴직자·청년 자원봉사자 등이 미소금융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또한, 기부와 봉사문화의 확산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도 나눔과 봉사에 대한 인식 전환 계기 마련
- ④(금융시스템의 보완·발전) 제도권 금융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고금리 사채 등 비제도권 금융시장을 대체함으로써 서민·영세자영업자의 금융 이용기회를 부여하고 부담도 경감

V. 추진 일정

☐ 사업 준비 ('09.9~11월)

- 소액서민금융재단을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개편(10월)
- 지역별 미소금융법인(미소금융지점) 설립준비 (9~11월)
-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 (10~11월)

☐ (1단계 사업) 미소금융 지점 설립 ('09.12~'10.5)

- 20~30개 수준의 미소금융지점 설립 추진
- 재계·금융권 미소금융재단도 준비를 마치는대로 설립 추진

☐ (2단계 사업) 지역별 네트워크를 200~300개로 확대 추진 ('10.6월~)

〈참고1〉 서민금융 지원현황

1. 개 요

-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저소득층 및 저신용층 등 서민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시행중

- ◆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
- ◆ 대부업체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면서,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적발·조치

2. 주요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비영리사단법인)의 신용회복 지원
- 금융회사 채무를 연체한 서민들에 대해 이자감면, 만기연장 등 개인워크아웃 및 개인프리워크아웃을 지원
- * '08년~, 개인워크아웃 120,410명, 개인프리워크아웃 4,561명 등 총 124,971명
- 신용회복기금(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 및 전환대출
- 신용회복기금을 설립('08.9월)하여 신용이 낮은 서민들에게 연체채무의 만기연장 등 채무재조정과, 대부업체 고금리(20%이상)를 은행권 금리(12%)로 전환해주는 전환대출(환승론) 시행

< 신용회복기금 지원실적 >

구분	채무재조정	환승론
건수	50,327 건	14,561 건
채권액	1,880 억원	1,430 억원

□ 소액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재단)의 마이크로크레딧

- 소액서민금융재단을 설립('08.3월)하여 저소득층 및 저신용층 서민에 대해 무보증 소액대출을 지원
- '08년, 빈곤아동 2천명 · 저신용자 4천명 등 1만여명과, 서울시 24개 전통시장 등에 총 271억원 지원

□ 제도금융권을 활용한 대출 지원

-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저신용 근로자 생계보증 대출 (5천억원 규모), 자영업자(무점포 포함) 특례보증(3.95조원 규모)
 - * '09.8월말 현재, 근로자 대출 167억원 / 자영업자 대출 2.8조원
- 14개 시중은행, 저신용자 전용대출 상품 판매(희망홀씨대출)
 - * '09.8월말 현재, 5,362억원 대출(10만여명)
- 재래시장 및 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2.0~3.5% → 2.0~2.2%)

□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 대책」(4.28 국무회의 보고) 시행

- 검·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 집중단속, 사금융 피해상당자에 원스탑서비스 제공(금감원) 및 소송지원(법률구조공단) 등

〈참고2〉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 현황

□ 재원별 조성 및 지원실적

(‘00년~’09.7월, 단위 : 억원)

재 원 출 처	조성금액	지원실적
민 간 기 부 금	512	343
재정(복지부,희망키움뱅크)	410	80
휴 면 예 금(소액서민금융재단)	501	337
지 자 체(서울시,희망드림뱅크)	60	12
합 계	1,483	772

* 민간단체의 전체 조성 및 지원금액중 재정(복지부), 지자체, 휴면예금으로부터의 지원금액을 제외한 순수 기부금(추정액)

□ 사업수행기관(민간단체) 현황

(단위 : 억원)

기 관	개시 연도	용도	재 원	지원액(누계)
신나는 조합	2000	창업 자금 사회적 기업 지원	100	45
사회연대은행	2002		250	208
아름다운세상기금	2003		50	12
함께일하는재단	2008		20	15.6
열매나눔재단	2003		30	15.5
창원지역 사회복지은행	2003		8	4
신나는 은행	2005		0.4	0.2
해피월드복지재단	2007		6	5.6
하나희망재단	2008		300	16
소상공인진흥원	2009		60	14.7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09		10	2.9
민생경제정책연구소	2009		10	1
민생포럼	2009		10	0.5
전통시장상인회	2008	생활 운영 자금	100	8.4
신용회복위원회	2006		373	362
한미음금융(자산관리공사)	2008		155.3	60.2
총 계	-	-	1,482.7	771.6

〈별첨 3〉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미소금융사업 Q&A

2009. 9. 17

금 융 위 원 회

목 차

1. 미소금융사업의 내용은?
2. 미소금융사업의 추진 체계는?
3. 지역 미소금융법인 등의 설립시기 및 업무는?
4. 미소금융에서 취급하는 대출상품 내용은?
5. 자원봉사자는 어떻게 활용하나?
6. 미소금융사업의 기대효과는?

1. 미소금융사업의 내용은?

- 미소금융사업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곤란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Micro Credit)을 대폭 확대하여,
 - 금융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소외계층이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사업전반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 그간 우리나라의 마이크로 크레딧 활동을 보면,
 - 2000년 이후 약 10년간 30여개의 민간단체가 재정, 지자체 예산, 소액서민금융재단자금, 민간 기부금을 재원으로 수행해 왔으나,
 - 전체 사업규모가 크지 않고 민간 추진기반이 취약하여 전달체계의 효율성이 낮으며, 사업자의 수도 적어 서민들의 접근성이 제한되는 등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 이에 동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 200~300개의 미소금융법인을 설립하여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 재계·금융권 등의 기부금과 휴면예금 출연금을 재원으로 향후 10년간 총 2조원 이상의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 금융이용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자활의지가 있으나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층 및 영세사업자의 자활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미소금융사업의 추진 체계는?

□ 현재 금융회사가 출연한 휴면예금을 관리하는 소액서민금융재단을 (가칭)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개편하여,

* 소액서민금융재단은 「휴면예금관리재단법」에 의거 '08.3월 설립되었으며 휴면예금의 관리와 이를 통한 복지사업자 지원과 감독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임

○ 동 중앙재단이 앞으로 설립될 지역별 미소금융법인과 재계·금융권의 미소금융재단 등의 마이크로 크레딧 정책방향 및 사업 가이드라인 설정, 컨설팅, 교육, 정보의 통합관리 등 미소금융사업 전반에 걸쳐 총괄 기능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 지역별 미소금융법인은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전국의 영세상인 및 서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공개모집할 것이며,

○ 그 형태는 비영리사단법인(미소금융○○지점)으로 설립하여 중앙재단이 지원한 재원으로 해당 지역의 미소금융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 재계·금융권 등이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이행하기 위하여 직접 설립·운영하는 미소재단은 중앙재단으로부터 재원을 지원받아 자율성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 지역 미소금융법인 등의 설립시기 및 업무는?

- ☐ 지역 미소금융법인을 신설하는 작업은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 우선 '09.11월까지 지역 미소금융법인 모집 등 준비기간을 거쳐 '09.12부터 1단계로 20~30여개 정도의 지역별 법인을 설립하고,
 - 2단계로 '10.6월부터 전국에 걸쳐 지역 법인 설립 및 지부 확대 등을 통해 200~300개 수준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미소금융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 ☐ 지역별 미소금융지점의 주요업무는 자활자금지원 및 회수, 자활컨설팅 업무, 상담 등입니다.
 - 대출서류심사, 현장실사 및 면접심사 등 체계적인 심사절차를 거쳐 수요자 맞춤형 소액대출을 시행·관리하고,
 - 소상공인진흥원 소속 전문가(RM) 등의 지원을 받아 창업 및 경영컨설팅을 지원하며,
 - 소액금융상담, 신용관리상담 등의 상담업무와 채무재조정이 필요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연결시켜 주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 ☐ 참고로, 미소금융지점의 사무실은 서민들의 접근성이 높고 임차비용이 들지 않는 전통시장상가, 마을회관 등 여유사무공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4. 미소금융에서 취급하는 대출상품 내용은?

- ☐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지원 대상·조건 및 지원내용을 모델화하여 브랜드화한 대출상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 대출상품은 주로 자활의지가 있으나 신용이 낮아, 제도권 금융회사 접근이 어려운 저신용층·영세자영업자·저소득층을 위한 상품을 우선 제공할 예정입니다.

< 대출상품(요약) >

	지원 내용	지원 조건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검증을 받아 성공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업체를 연계하여 권리금 등 창업자금 지원	5천만원 이내 5년상환 시장금리 이하
창업자금	창업을 하거나 기존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임차보증금 지원	5천만원 이내 5년상환 시장금리 이하
운영자금	2년이상 영업자에 대해 원재료 구입, 시설 개보수 자금 등 운영자금 지원	1천만원 이내 5년상환 시장금리 이하
공동대출	자활추진단체에 대해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	3천만원~1억원 이내 3년상환 시장금리 이하
전통시장 상인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영세상인 운영 자금 지원	5백만원 1년상환 시장금리 이하
사회적 기업	사회적육성기업법에 의해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을 지원	6천만원~1억원이내 5년상환 시장금리 이하

5. 자원봉사자는 어떻게 활용하나?

- ☐ 미소금융 사업은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여 나눔·봉사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 ☐ 이를 위해 미소금융 지점별로 소요인력(지점당 2~5명) 선발시 금융회사 퇴직자, 청년 등 자원봉사자 위주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 대표자의 경우 무보수·명예직으로 하고, 금융회사 퇴직자 등 경험 많은 자원봉사자는 기간요원으로 양성하여 월 100만원이하의 보수를 지급하고, 청년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실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 ☐ 또한, 미소금융중앙재단은 기간요원 등 자원봉사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 금융관련 교육은 신용회복위원회, 자활지원 관련 교육은 소상공인진흥원과 연계하여 전문성 있는 위탁교육 실시할 예정입니다.
- ☐ 한편, 향후 일정기간 봉사한 청년에 대해서는 복지기관·금융회사 등 취업 희망시 우대하는 대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6. 미소금융사업의 기대효과는?

- ① (저소득층의 자활지원) 우선 자활의지가 있으나 신용이 낮아 제도권 금융회사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층·영세사업자·저신용층에 대해 자활자금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지원규모 면에서는 지난 10년간 1,480억원(연평균 148억원)이 공급되었으나, 향후 10년간 2조원 이상(연평균 2천억원 이상)이 공급되면 약 13배 이상 확대되는 효과가 있고,
 - 향후 10년간 기존 제도금융권 밖에 있는 약 20만~25만 가구* 이상의 저소득층이 미소금융사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②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 한편, 재계와 금융권이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자금을 기부하고, 직접 미소금융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이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③ (나눔·봉사문화 확산) 더불어 지점 대표자, 금융회사 퇴직자·청년 자원봉사자 등이 미소금융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 기부와 봉사문화의 확산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도 나눔과 봉사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 국내 금융 자격증 제도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A. 공정시장과

☐ 공인회계사와 관련하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증 명칭	취득 조건	취득 절차	시험 과목	최종 합격자수	주관 기관	실시 시기	관련법
공인 회계사	일정 학점 이수*	공인회계사 시험(1차, 2차) 합격 후 실무 수습(1년)	· 1차: 회계학, 경영학, 경제 원론, 상법, 세 법 개 론, 영어(토플 등 으로 대체) · 2차: 재무회계, 원가회계, 회계 감사, 세법, 재무관리	· '09년: 936명 · '08년: 1,040명 · '07년: 830명 · '06년: 1,007명 · '05년: 1,004명	금융위원회 (시험시행: 금융감독원)	매년 1회 (1차: 1월~3월 2차: 6월~7월)	공인 회계사법

*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 12학점, 경영학과목 : 9학점, 경제학과목 : 3학점

B. 금융정책과

□ 한국 FPSB 국가공인 민간자격 시행 현황

자격명	시행 시작 년도	실시 횟수	접수 인원	응시 인원	합격 인원	합격률	시험 응시 전형료	비고
AFPK (재무 설계사)	2007	9	108,510	84,880	23,931	28.2%	전과목응시 : 5만원 모듈1 응시 : 3만원 모듈2 응시 : 3만원	07년 6월 공 인 후 연 4회 시행중

C. 은행과

☐ 현재 공인 민간자격 시행 현황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공인 민간자격 시행 현황

한국금융연수원 공인 민간자격 시행 현황

(담당자 : 한국금융연수원 배유나 계장 3700-1645)

자격명	시행 시작년도	실시횟수	접수인원	응시인원	합격인원	합격률	시험응시전형료	비고
신용분석사	2002	14	6,933	4,653	991	21.3%	전과목응시 : 5만원 1부 응시: 2만원 2부 응시: 3만원	- 동일시험 2회 접수시 응시전형 료 30% 감면, 3 회 이상 접수시 응시전형료 50% 감면적용
여신심사역	2002	9	322	257	121	47.1%	전과목응시 : 5만원 1부 응시: 2만원 2부 응시: 3만원	
국제금융역	2002	7	940	560	141	25.2%	전과목응시 : 5만원 1부 응시: 2만원 2부 응시: 3만원	
신용위험분석사 (CRA)	1차	7	3,457	1,967	920	46.8%	6만원	
	2차	7	1,170	861	123	14.3%	7만원	
자산관리사 (FP)	2002	16	49,030	31,250	7,375	23.6%	전과목응시 : 4만원 1부 응시: 2만원 2부 응시: 2만원	
계		60	61,852	39,548	9,671	24.5%		

* 신용위험분석사(CRA)자격은 1차시험 합격후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2차시험 합격자가 최종합격자임.

신용정보협회 공인 민간자격 시행 현황

(담당자 : 신용정보협회 기경민 국장 3775-2761)

자격명	시행 시작년도	실시횟수	접수인원	응시인원	합격인원	합격률	시험응시전형료	비고
신용관리사	2006	6	27,675	15,899	4,556	28.7%	06년 30000원, 07년 35000원, 08년 40000원	06년 공인후 연2회 시행중

D. 자본시장과

(단위 : 명)

자격시험 종류	보유자 ¹⁾	합격자 ²⁾
증권투자상담사	92,425	4,493
파생상품투자상담사	46,572	2,304
일임투자자산운용사	32,018	1,918
집합투자자산운용사	8,789	1,117
재무위험관리사	1,784	386
금융투자분석사	63	63
투자상담관리사	23	23
증권분석사	181	-
증권펀드투자상담사	174,078	15,819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51,328	51,328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59,308	59,308
합계		136,759

1) 09.7월말까지 누적

2) 09.1 ~ 7월 까지

6. 최근 3년간 금융기관별 휴면예금, 휴면보험금 현황

□ 금융기관별 휴면예금, 휴면보험금 발생 현황

○ 첨부 참고 (자료출처: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 현재 은행 및 보험회사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정 2007.8.3, 시행 2008.2.4)에 따라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 발생분 중 원권리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할 수 있음

<첨부 1>

은행권 휴면예금 발생현황

(단위 : 천건, 억원)

은행명	2006년		2007년		2008년	
	계좌수	금액	계좌수	금액	계좌수	금액
산업은행	12	4	14	4	24	3
농협중앙회	1,066	154	1,389	151	1,254	268
신한은행	940	240	550	120	689	102
우리은행	2,018	137	1,184	110	1,124	87
SC제일은행	1,276	98	295	52	557	76
하나은행	646	93	871	114	682	95
기업은행	658	65	768	78	706	69
국민은행	2,057	129	2,122	69	1,772	65
외환은행	638	70	538	76	528	72
한국씨티은행	555	58	190	28	283	25
수협중앙회	55	10	41	10	39	6
대구은행	101	31	75	29	95	11
부산은행	374	45	360	49	330	48
광주은행	235	13	—	—	114	5
제주은행	10	0.4	9	0.4	3	0.2
전북은행	84	12	78	10	73	11
경남은행	105	6	131	9	146	10
총 계	10,830	1,165.4	8,615	909.4	8,419	953.2

<첨부 2>

생명보험사 휴면보험금 발생현황

(단위 : 천건, 억원)

보험사명	2006년		2007년		2008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한	84	874	64	1,826	57	447
알리안츠	85	136	48	167	23	129
삼성	200	1,718	176	3,447	146	1,729
흥국	53	197	51	247	41	92
교보	184	1,325	149	5,891	110	456
우리아비바	4	8	5	8	5	11
미래에셋	59	97	66	144	52	65
금호	30	39	39	47	43	55
동부	3	9	6	11	11	19
동양	12	64	91	249	125	82
메트라이프	11	35	12	46	15	33
푸르덴셜	15	19	13	22	13	35
신한	72	79	58	82	50	72
PCA	2	2	6	4	9	5
뉴욕	2	3	1	3	1	3
ING	25	93	26	97	33	75
SH&C	-	1	1	10	1	15
녹십자	4	25	4	21	3	9
라이나	98	36	100	41	81	34
AIG	59	41	66	45	80	56
하나HSBC	2	1	4	2	5	3
KB	1	3	1	7	1	9
총 계	1,005	4,805	987	12,417	905	3,434

<첨부 3>

손해보험사 휴면보험금 발생현황

(단위 : 천건, 억원)

보 험 사 명	2006년		2007년		2008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메리츠	8.9	35.4	24.4	71.0	47.2	45.4
한화	5.0	17.1	5.1	18.3	12.4	21.9
롯데	3.0	11.0	2.0	9.5	2.1	5.3
그린	1.8	6.2	1.6	6.0	2.0	5.4
흥국쌍용	9.6	14.6	7.3	12.4	17.2	16.0
제일	20.5	16.4	21.3	23.6	25.9	21.4
삼성	66.2	380	65.8	733	76.8	320.3
현대	18.2	60.5	13.7	31.1	38.0	44.5
LIG	17.9	71.3	22.9	93.0	29.8	88.7
동부	19.9	59.7	25.9	78.2	46.4	61.3
총 계	171.0	672.2	190.0	1,076.1	297.8	630.2

7. 최근 3년간 민원업무 처리 및 조치내용

□ 최근 3년간 민원업무 처리 현황 및 조치내용

- '07.1.1일부터 '08.2월말까지 舊 재정경제부(금융정책국)는 총 1,461건, 舊 금융감독위원회는 총 223건의 민원 접수·처리
- '08.3월 금융위원회 출범이후 '09.8월말까지 민원 접수·처리 건수는 총 5,798건

(2007.1.1 ~ 2009.8.31 접수기준)

		해결*	자체종결**	상담·안내	정책제안	합계
'07	재정부	37건	106건	1,143건	2건	1,288건
	금감위	18건	41건	133건	0건	192건
'08.1 ~ '08.2	재정부	0건	0건	172건	1건	173건
	금감위	7건	2건	22건	0건	31건
'08.3 ~ '08.12	금융위	548건	337건	1,872건	34건	2,791건
	금융위	443건	602건	1,953건	9건	3,007건
합계		1,053건	1,088건	5,295건	46건	7,482건

* 해결 : 민원요지충족, 절충안 합의, 기관간 조정사안, 법제도상 수용불가, 법제도상 수용근거 부재 및 상충, 수사·소송·사인간의 분쟁, 민원인 주장이 사실과 다름

** 자체종결 : 민원취하 / 착수전 해결, 민원인 불명, 민원요지 불명, 동일민원 기처리, 선정기원 및 단순의견 개진

8. 최근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변동 현황

□ 시행령 변동

순번	법령명	구분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공적자금상환기금법시행령	일부개정	2008.02.29	2008.02.29
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8.02.29	2008.02.29
3	당보부사채신탁법시행령	일부개정	2008.02.29	2008.02.29
4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일부개정	2008.02.29	2008.02.29
5	휴먼에프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02.29	2008.02.29
6	공사채등록법시행령	일부개정	2008.07.29	2009.02.04
7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07.29	2009.02.04
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07.29	2009.02.04
9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07.29	2009.02.04
10	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법시행령	일부개정	2008.07.29	2009.02.04
11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008.11.11	2008.12.22
12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12.17	2008.12.17
1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04.06	2009.05.07
14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09.04.21	2009.04.22
15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05.06	2009.05.07
16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05.06	2009.05.07
17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05.06	2009.05.07
18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9.05.06	2009.05.08
19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9.05.29	2009.06.01
2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9.05.29	2009.06.01
21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9.05.29	2009.06.01
22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05.29	2009.06.01
2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05.29	2009.06.01
24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	일부개정	2009.05.29	2009.06.01
25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05.29	2009.06.01
26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05.29	2009.06.01
2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9.05.29	2009.06.01
28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05.29	2009.06.01
29	자산유통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9.05.29	2009.06.01
3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9.05.29	2009.06.01
31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제정	2009.05.29	2009.06.01
32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06.09	2009.06.09
33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06.30	2009.07.01
3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9.07.01	2009.07.01
35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07.27	2009.07.28

순번	법령명	구분	공포일자	시행일자
36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9.07.27	2009.07.31
37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07.27	2009.07.31
3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9.08.05	2009.08.07
39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08.05	2009.08.07
40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9.08.06	2009.08.07
41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9.08.13	2009.08.13

□ 시행규칙 변동

순번	법령명	구분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공사채등록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03.03	2008.03.03
2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03.03	2008.03.03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03.03	2008.03.03
4	금융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08.03.03	2008.03.03
5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03.03	2008.03.03
6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03.03	2008.03.03
7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03.03	2008.03.03
8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03.03	2008.03.03
9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건시행세칙	일부개정	2008.03.03	2008.03.03
10	한국산업은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03.03	2008.03.03
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03.03	2008.03.03
12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08.04	2009.02.04
1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08.04	2009.02.04
14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08.04	2009.02.04
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2008.08.04	2009.02.04
16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08.04	2009.02.04
17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9.03.31	2009.03.31
18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9.03.31	2009.03.31
19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9.08.24	2009.08.24

9. 소송현황

□ 최근 5년간 소송처리 현황

< 연도별 소송사건 처리 현황¹⁾ >

(단위 : 건)

구 분	합계	취하	각하	국가승소	일부패소	국가패소	패소율
합계 (2005~'09.8월)	67	8	2	50	2	5	10.4%
2005년	12	5	-	7	-	-	-
2006년	15	2	2	10	-	1	6.7%
2007년	10	-	-	7	1	2	30.0%
2008년	24	1	-	20	1	2	12.5%
2009.1~8월	6	-	-	6	-	-	-

주) 1) 종결사건 기준(최종확정 판결, 화해결정 수용은 일부 패소로 간주하여 처리)

<참고>

현재 진행 중인 소송 현황

제기 년도	사건명	사건내용	소송담당	진행 내역
2006	시정조치처분취소	유기증권신고서 허위기재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00000가 제재 과징을 주장	금감원 (비용없음)	1심: 승 2심: 승 3심: 진행 중
2006	인가취소 및 해산통보 처분취소	자본잠식 등을 이유로 인가 취소된 0000의 1명이 자본잠식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취소요구	법무법인 세종	1심: 승 2심: 패 3심: 진행 중
2006	손해배상	000이 산업은행 등에 대한 국가의 감독부실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금감원 (비용없음)	1심: 승 2심: 승 3심: 진행 중
2007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00000 외 1명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관련 금융비주력자 판단자료 제공 거부의 취소를 요구	금감원 (비용없음)	1심: 일부 패 2심: 진행 중
2008	해임요구처분 취소	금감원 퇴직자인 000 외 1명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조치 처분의 취소요구	정부법무 공단	1심: 금융위 패 2심: 진행 중

재기 년도	사건명	사건내용	소송담당	진행 내역
2008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 기재로 제재를 받은 00000가 제량권 남용을 이유로 취소 요구	금감원 (비용없음)	1심: 승 2심: 진행 중
2008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자산양수도 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금융위 제재를 받은 00000가 적법요건 결여를 이유로 과징금부과 취소 요구	"	1심: 진행 중
2008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0000가 자산양수도 신고 불이행 등으로 증선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자 계약이 양해각서에 불과하다며 취소 요구	"	1심: 진행 중
2008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000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하지 않고 투자자를 모집하여 금융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자 본인이 투자자 모집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소 제기	"	1심: 진행 중
2008	손해배상(기)	000이 국가의 '희망모아 유동화전문회사'에 부실감독 책임을 몰어 손해배상 요구	금감원 (비용없음)	1심: 진행 중
2009	감리결과 조치 취소	000이 회계 부실감사로 증선위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자 소 제기	"	1심: 승 2심: 진행 중
2009	계약이전결정 제외 취소	000는 00상호저축은행 예금자로 5천만원이상 예금자에 대해 계약이전을 제외하는 결정은 불법이라며 소 제기	"	1심: 승 2심: 진행 중
2009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000이 상장법인의 신고·공시의무 위반 등으로 증선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 제기	"	1심: 진행 중
2009	정직조치요구처분 취소	000는 00증권(주) 00지점 과장으로 불공정거래 주문수탁금지 및 일임매매거래 제한위반으로 정직 조치를 받자 소 제기	"	1심: 진행 중
2009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000는 최대주주 변동과 관련된 신고·공시 의무위반으로 금융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자 소 제기	"	1심: 진행 중

10. 감사원, 자체감사결과보고서

□ 우리위원회 설립(08.3월) 이후 외부(감사원)감사결과는 '해당 사항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원이 09.5.28 ~ 7.17까지 금융위원회에 대해 실시한 감사결과는 감사원이 내부절차를 거쳐 처리중에 있음

□ 자체감사결과는 별도첨부(2008년)

* 2009년은 아직 미실시

2008년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

2008. 9.

감사담당관실

- 목 차 -

I. 감사개요

II. 감사실시 결과

1. 총 평

2. 부문별 감사결과

가. 청사이전관련 경비 등 예산집행 실태

나. 물품관리 실태

다. 비정규직 운영실태

라. 정책연구과제 운영실태

마. 감사원 처분요구 이행실태 (신용보증 제도)

3. 지적사항별 조치내역

4.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5. 감사결과 처리요령

◇ 청사 이전비용 집행, 외부기관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금융위원회 업무처리의 적정성 제고를 도모

- ☐ 감사실시 기간 : 2008.6.23(월)~6.27(금) (5일간)
 - ☐ 감사대상 기간 : '07.1. ~ '08.5. (단, 예산집행은 08.1~5.)
 - ☐ 감사대상 부서 : 혁신행정과, 기획재정담당관실, 산업금융과
 - ☐ 감사반 : 감사담당관실 전 직원 (과장, 5급3, 6급2)
 - ☐ 감사방법 : 표본감사, 서류감사
 - ☐ 감사대상업무 : 청사이전 비용 등 예산집행, 물품관리, 정책 연구용역, 보증제도
 - ① 조직개편으로 인한 청사이전 관련 제비용 집행 실태 (혁신행정과)
 - ② '07년 이후 물품 관리 현황 (혁신행정과)
 - ③ '07년 이후 비정규직 운영현황 (혁신행정과)
 - ④ '07년 결산국회 지적사항(정책연구과제) 처리실태 (기획재정, 혁신행정과)
 - ⑤ '07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보증제도) 처리실태 (산업금융과)
- * 조치 이행여부 점검에 한하고, 정책내용의 판단은 제외

1. 총 평

- 금번 감사는 구 재정경제부(금융정책국)과 구 금융감독위원회가 통폐합되어 새로이 출범한 우리 위원회가 업무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음
- 주요 감사대상 업무를 조직통폐합 과정에서 발생한 청사이전 경비 등 각종 예산집행실태와 물품관리 실태, 구 재경부 및 구 금감위에서 각각 채용하여 운영중에 있던 비정규직 공무원의 금융위 출범 후 통합운영 실태
- 또한, 결산국회에서 지적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의 적정성 여부, '07년 감사원의 중소기업 보증제도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실태 등으로 선정하였음
- 감사실시 전 감사대상 부서에 감사대상 업무 및 선정이유, 감사 착안사항을 사전 통보하여 자체적으로 점검·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했음
- 감사결과, 조직개편에 따른 신규업무 증가·담당자 변경 등으로 업무처리체계가 정착되지 않아 예산집행·차량 및 물품관리, 비정규직 급여, 연구용역 현황관리 등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었음
- 금번 감사를 계기로 관행적으로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거나 관리소홀·규정 미숙지 등에 따른 잘못된 업무처리를 바로 잡는 등 금융위 업무시스템이 조기 정착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

[부문별 총평]

① 청사이전 관련 경비 등 예산집행 실태

- 복잡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청사이전 및 사무실 재배치 업무를 큰 문제점 없이 수행했던 것으로 평가, 다만
 - 일반업무용 차량의 중형위주 임차·운영, 국외출장시 규정 미숙지로 인한 숙박비 초과 수령, 정부구매카드 사용자 실명 미서명 등의 사례가 있었음

② 물품관리 실태

- 재물조사의 부적정으로 물품관리대장과 실제 관리되고 있는 현물과 일치하지 않음

③ 비정규직 운영실태

- 금융위 본부와 FIU 근무자간의 보수체계가 상이하고 보수 수준도 일관성이 없는 등 문제점이 발견됨

④ 정책연구과제 운영실태

-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 등으로 용역결과물(보고서)의 관리 및 활용 등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음

⑤ 보증제도

- 산업금융과는 감사원의 처분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 및 조치 계획을 회신한바, 당초 감사기준으로 설정했던 조치 실시 여부 및 절차상 문제점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 없음

2. 부문별 감사결과

가. 청사 이전관련 경비 등 예산집행 실태

[I]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새로이 출범한 금융위원회는 조직규모와 기능면에서 구 금융감독위원회보다 확대되어 구 금감위사무실(금융감독원 건물내)을 계속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따라서, 금융위 사무실을 현재 청사(서초구 반포로)로 이전하게 되었는바, 사무실 이전 및 재배치 작업은 짧은 기간내에 신속하게 실시해야 하는 반면, 복잡하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였음
 - 이러한 상황에서의 예산집행은 오류발생 가능성이 있는바, 부적정한 예산집행이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청사 이전과정에서의 예산집행 실태」를 표본 감사대상으로 선정
 - 아울러, 평소 공무원들이 오류를 범하기 쉬운 국외출장 경비집행, 정부구매카드 사용 등에 대한 '08.1~5월 기간중 실태를 감사대상으로 선정함

[II]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금번 감사는 별도의 감사장을 설치하지 않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일반업무를 수행하면서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서,
 - 짧은 감사기간(5일)에 선정된 감사대상업무(청사이전 및 국외출장 경비 등)전반을 감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음

- 따라서, 청사이전과 관련된 경비의 경우 청사이전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여부, 관련업체 선정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으며
 - 업무용차량 운영의 경우 조직개편 후 신규추가 수량 및 차종 · 운영의 적정성 등을 감사했으며, 국외출장 경비 집행실태 및 정부구매카드 사용실태에 대해서도 감사
- 혁신행정과에서 비치하고 있는 관련서류(청사이전계획서, 계약서, 지출결의서, 차량운행일지, 지출관련 영수증 등)를 제출토록 하여 서류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했고,
 - 관련서류 점검 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지출관(지출관 보조 포함)의 설명을 듣는 방식을 취했으며, 필요한 통계는 별도 작성을 요구하기도 했음

〔Ⅲ〕 감사 결과

- 금융위 '08년 총예산은 1,037억31백만원으로서, 금융위 본부(160억78백만원), 금융정책사업비*(792억52백만원), FIU사업비(53억60만원), IBRD차관 원리금상환금(30억41백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 금융정책 사업비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669억4백만원), 역모기지론 출연(70억원), 금융전문대학출연(20억원), 모기지론 이차보전(16억39백만원), 금융시스템 시스템선진화(10억78백만원), 정책연구개발(6억3천만원)등으로 구성
 - 금번 청사이전 과정에서 지출한 경비는 총 14억25백만원으로서 주로 금융위 본부예산을 집행하였는바, 주요 지출내역은
 - 이사비용 및 사무실 재배치 공사 등 356백만원, 사무실 등 임차료 297백만원, 집기 등 구입비 133백만원, 통신시설 관련 경비 500백만원 등임

청사이전 관련 경비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경비 소요 부문	집행액	총집행액 대비비율	비 고
계	1,425	100	
이사비용	31	2.2	
사무실재배치공사 등	325	22.8	
사무실 임차료 등	297	20.8	사무실(281), 차량(16)
집기 등 구입비	133	9.3	책상, 의자, PC 등
통신시설 관련	500	35.1	전화시설, 전산실 이전, 전자회의시스템, 메신저 도입 등
기 타	139	9.8	인건비, 무인경비시스템 등

* 세부집행내역 : <별표 1>

- 감사결과, 청사이전 기본계획 수립·관련업체 선정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업무용 차량 운영, 국외출장비(숙박비), 정부구매카드 사용** 등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음

① 업무용 차량운영의 불합리

《지적사항》 (또는 우수사례)

- 신설된 금융위는 구 금감위보다 인원수가 대폭 증가하고 (80→155명, FIU제외), 업무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업무용차량 소요가 증가**
 - 금감원장을 겸직했던 구 금감위원장은 금감원의 차량을 사용했었으나, 금융위 출범에 따라 금감원장 직위가 분리되어 금융위원장 전용차량 소요가 신규로 발생하였음
 - 또한, 금융위는 소관법률은 많아서(45개) 관련부처 및 국회 등과의 잦은 업무협약이 발생하는데, 단독청사에 입주해 있는 관계로 차량소요가 증가

- 그러나, 구 금감위는 업무용차량을 2대(부위원장, 일반업무용)만 운영했고, 구 재경부(금융정책국)는 업무용 차량이 없었으므로 증가된 차량 소요에 비하여 운영차량 수는 적었음
- 이런 관계로 금융위는 조직개편 직후 업무용차량 6대를 신규로 추가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음

업무용차량 운영현황

(단위 : 대)

종 전(구 금감위)				변 경(금융위)			
대형	중형	소형	계	대형*	중형	소형	계
1		1	2	3	4	1	8

* 대형(3대)는 위원장 · 부위원장 · 외빈의전용

- 한편, 공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 제5조는 차종 및 차형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면서, 일반업무용차량에 대해서는 1,600cc 이하로 운영(동규정 별표1)토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금융위는 특수업무용(외빈의전 등)으로 중형차량 4대를 신규로 임차했으나 실제운영의 대부분을 일반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일반업무용차량은 1,600cc 이하로 운영토록 하고 있는 규정과 배치됨

《조치할 사항》

- (시정요구, 표창상신 등)

② 기타 예산집행의 불합리

〈지적사항〉 (또는 우수사례)

○ 공무 국외출장 경비지급 부적정

-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제16조④항은 국외 공무출장을 함에 있어서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예산집행 서류를 조사('08.1~5월분)한 결과, 한·캐나다 FTA 협상(3.25~29)을 위한 국외출장시 항공기에서 1박을 하는데 그 숙박비(\$95)를 지급하였고, 한·인도 CEPA협상(4.1~4)을 위한 국외출장시에도 항공기에서 1박을 하는데 숙박비(\$95)를 지급한 사실이 있었음

○ 정부구매카드 사용시 관련지침 이행 불철저

- 예산집행지침(기획재정부)은 정부구매카드 사용시 카드사용 영수증에 실명으로 서명하도록 하고 있고('08년부터 시행), 업무추진비 집행 시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예산집행 서류를 조사('08.1~5월분)한 결과,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면서 카드영수증에 실명서명을 한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 '소속부서명' 또는 '금융위' 등으로 서명을 하고 있었음
- 또한 업무추진비 집행 시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 대부분은 상대방의 지적사항을 기재하고 있었으나, 1.17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 관련 업무추진비를 집행(995,000원)함에 있어서는 주된 상대방 소속·성명 등 지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라고만 기재한 사실이 있었음

o 예산 지출과목의 부적정

- 일과 전·후 직무수행으로 인한 식사비용은 특근매식비(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함이 타당한데도 혁신행정과는 211일 아침 학습동아리(외 부강사 초빙 모닝클래스 : 김&장 정성구 변호사)를 마친 후 조찬비용(76,000원)과 5.13일 저녁 직원친절 교육 후 석식비용(73,000원)을 일반수용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

o 수당지급의 부적정

- 5급에서 4급으로 승진('07.10.24)하면서 대우수당 지급사유가 소멸한 공무원에 대하여 전산오류로 '07.12월부터 '08.5월까지 대우수당이 매월 지급(6회, 703,640원)된 사실이 발견되었음
- '07.12~'08.2월분은 구 재정경제부에서, '08.3~5월분은 금융위에서 지급

〈조치할 사항〉

- o (시정요구, 표창상신 등)

〈별표1〉

청사이전 관련 경비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세무 사업	예산과목	'08예산 현액 (A)	집행액(B)*		집행률 (B/A×100)(%)
계		2,693,330	1,424,557		52
기본경비	소계	2,137,330	1,091,779		51
	일반수용비	950,900	이사비용	31,359	15
			사무실 파티션 작업 등	78,000	
			전산실 이전 인건비 등	22,062	
			네트워크 공사 인건비 등	8,984	
			전자메일 라이선스 구입	2,200	
			소계	142,605	
	임차료	475,986	사무실 임차료	280,786	62.5
			차량 임차료(3~5월)	16,547	
			소계	297,333	
	시설장비유지비	211,823	통신시설 유지보수비 등	223,305	105
	시설비	339,325	사무실 이전 채배치 공사	246,699	87
			사무실 이전 전기공사	33,000	
			금융위회의실 음향설비	10,230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	5,868	
			소계	295,797	
	자산취득비	159,296	사무용 집기, pc 등 구입	132,739	83
정보화 지원사업	소계	556,000	332,778		60
	일반수용비	9,650	-	-	
	연구개발비	193,000	메신저시스템 신규 도입 등	55,800	29
	자산취득비	353,350	전산실 이전	195,938	78
			정책고객관리서버 도입	15,967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49,060	
			메신저시스템 신규 도입	16,013	
			소계	276,978	

*집행액은 청사이전과 관련된 비용만 기재

〈별표2〉

공용차량 운영 현황

(단위 : 천원)

차종 (차량번호)	기사	임대 (구입)일	임대료 (월)	연료	유류비(월)						용 도	월평균 주행 (km)
					1월	2월	3월	4월	5월	계		
에쿠스 35허7871		08.03.06	1,485	휘발유			843	776	778	2,397		2,324
체어맨 47허2026		08.04.04	1,058	휘발유			642	900	658	2,200		1,885
그랜저 35허7929		08.03.11	677	LPG			161	139	68	368		845
SM5 35허7972		08.03.19	580	LPG			116	195	200	511		1,062
SM5 35허7959		08.03.14	580	LPG			115	196	200	511		1,257
SM5 35허5560		08.03.14	580	LPG			10	194	230	434		1,112
SM5 35허7958		08.03.14	580	LPG			199	202	235	636		1,385
아반떼 01모7285		04.04.20	14,040	휘발유			192	163	277	632		1,013
계							2,278	2,765	2,646	7,698		

나. 물품 관리 실태

[1]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정부조직개편으로 새로이 출범한 금융위는 구 금감위보다 조직 규모가 확대되어 보유물품 수량 및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물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
 - 이에 따라 새로 보유·운용하게 되는 물품의 관리상태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감사대상으로 선정
- 감사 범위는 소수의 감사인력으로 물품관리 업무 전체를 조사하기에는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어
 - 물품의 재고관리, 관리기관 설치, 재물조사 등 물품관리법상의 기본 규정 준수 여부를 감사범위로 한정함

<2008년도 금융위원회 수시제물 조사 현황>

(‘08.5월 현재, 단위 : 원)

합계	관리대장계	실사계	활용대상	불용대상	
				사용가능품	사용불가능품
수량	1,482	1,482	1,218	193	71
금액	801,607,532	801,607,532	701,274,952	94,947,780	5,384,800

[II]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 '07년~'08년 물품수급계획서, 수시재물조사결과표, 물품관리대장을 제출받아 물품수급계획의 수립여부 및 내용, 정기재물조사의 실시 및 결과 등을 서면으로 먼저 감사하고
- ☐ 물품관리대장과 실제 물품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과를 방문하여 관리대장과 대조하며 실지 감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였음
- ☐ 실지감사는 재물조사표상 1,482개 물품을 전수조사 하기에는 시간과 감사인력 등의 여건이 충분치 않아
 - 식별이 용이하고 비교적 고가의 사무기기인 복사기와 노트북을 선별하여 시행하였음

[III] 감사 결과

- ☐ 서면감사 결과 물품수립 계획 및 정기 재물조사는 관련 규정에 의거, 연1회 수립·집행되었고
 - 조달청의 「정부조직 통폐합 기관의 재물조사 실시」 요청('08.4.28)에 따라 수시재물조사를 실시, 재물조사표가 조달청에 통보('08.5.22)된 사실을 확인하였음

《지적사항》 (또는 우수사례)

- ☐ 현재 금융위는 총 28대의 노트북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리대장에는 7대만 기재되어 있고

- 조직개편 이후 추가 구입한 노트북 19대와 구 재경부에서 이관된 노트북 5대 중 2대가 미기재 되어 있는 등 총 21대가 미기재 되어 있음

<물품관리대장 미기재 노트북 현황>

구 분	대 수	실지 관리과
금융위 회의용	19	의사운영정보팀
구 재경부 이관	1	시장분석과
	1	글로벌금융과
미기재 총계	21	

《조치할 사항》

- (시정요구, 표창상신 등)

다. 비정규직 운영 실태

[I]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 구 재경부(금융정책국, FIU)와 구 금융감독위원회는 비정규직을 각각 11명, 14명 등 총 25명을 운영해 오고 있었던 바,
 - 두 기관의 통폐합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처우는 없었는지, 두 기관의 비정규직 운영(근무조건, 급여, 4대보험 등)에 있어서의 차별적인 요소는 없는지,
 - 조직개편 직후 신규채용(8명)의 필요성·절차 등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점검 필요가 있었음

[II]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 비정규직 운영 기본계획 수립여부, 채용절차 및 방법, 예산 현황 및 보수체계 등을 감사대상으로 하면서,
 - 특히, 비정규직(총 31명) 중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무보조원(21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
- ☐ 감사방법은 근로계약서·관련 예산서 및 급여지급서·4대보험료 납부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 서류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했으며,
 - 관련서류 점검 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인사담당자의 설명을 듣는 방식을 취했으며, 필요한 통계는 별도 작성을 요구하기도 했음

【Ⅲ】 감사 결과

□ 비정규직 관련 서류를 점검한 결과, 금융위 본부는 비정규직 운영에 관한 기본지침인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07.9.27, 금감위 제정) 비정규직을 운영하고 있으나,

○ FIU는 본부와 달리 근로계약서에 따라 운영하고 있음

□ 현재 비정규직은 총 31명으로서, 속기사·YP·에디터·사무보조원·운전원 등으로 구성

○ 조직개편 이후 2명* 퇴직, 8명 신규채용으로 6명이 순증 되었음

* 1명은 금감원 취업, 1명은 건강상 이유로 퇴직

- 이는 조직규모 및 업무범위 확대로 사무보조원 2명, 공용차량 증설에 따른 운전원 4명 등 신규 추가소요가 발생한 것에 기인

구 분	인원 수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속기사	2	의사운영팀, 위원회 속기업무
YP	1	금융정책과, 규제개혁 업무
에디터	3	금융정책과, FIU(2명), 영문 교열
운전원	4	업무용차량 운전
사무보조원	21	각과 및 비서실, 사무보조
계	31명	

□ 비정규직 신규채용시 홈페이지에 모집공고 후 공개적으로 채용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는바, 신규채용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4대보험의 경우도 관련 법령에 따라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음

○ 다만, 금융위 본부와 FIU와의 보수체계 상이 및 보수수준의 불균형이 있었음

□ 본부와 FIU의 사무보조원의 보수체계를 비교해 보면

- 본부소속 비정규직의 보수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금융위 훈령)에 근거하여 근속연수별 연봉표에 근거한 기본연봉에 더하여, 정근수당·성과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비례하여 지급비율이 상향(월봉의 100%까지)되며, 성과급은 최대 80만원까지 지급

- FIU소속 비정규직의 보수는 근로계약서에 연봉을 명시하고 매년초 연봉 재계약을 하며, 정근수당과 성과급은 없음

* 구 재경부(금융정책국) 소속이었다가 금융위 본부로 소속이 바뀐 직원은 본부 보수체제로 운영

- 시간외수당 지급에 있어서도 본부는 시간외 근무를 월간 최대 15시간(시간당 8,092~8,680원* 최대 13만원)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 근로기준법에 의한 비정규직 시간당 보수 산출근거에 따름

- FIU는 월간 최대 20시간까지 시간외 근무를 인정 (시간당 5,000원, 최대 10만원)

□ 본부와 FIU 사무보조원의 보수수준을 비교해 보면

- 본부 신규직원('08년 채용)의 경우 연봉이 13.5백만원 수준에 이르는데 반하여, FIU의 '05년 채용자는 12.9백만원에 불과함

본부와 FIU 보수체계 및 수준 비교

(단위 : 만원)

구 분	보수 체계				연간보수 수준(채용연도별)				
	기본 연봉	정근 수당	성과 금	시간외 수당	'01	'04	'05	'06~7	'08
본 부	근무연수에 따라 상향 조정	근무연수에 따라 상향 조정 (월 봉 의 10~100%)	32~38	월 한도: 15시간 단가: 8,092~8,680원 최대지급: 월13만원	1,525	1,488	-	1,414	1,353
FIU		없음	없음	월 한도: 20시간 단가: 5,000원 최대지급: 월10만원	1,588	1,436	1,285	-	1,224

* 연간 보수수준은 시간외 수당, 성과금을 제외한 금액임

《지적사항》 (또는 우수사례)

- FIU가 소속기관이므로 독립성을 어느정도 보장한다 할지라도, FIU소속 비정규자의 근무환경·업무량·업무난이도·전문성 등이 본부 소속 비정규직과 특별한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현행과 같이 보수체계를 다르게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함

《조치할 사항》

- (시정요구, 표창상신 등)

<별표1>

비정규직[사무보조원] 연봉현황

(금액단위 : 천원)

연도	본 부				F I U		
	채용월	성 명	근무부서	연 봉*	채용월	성 명	연 봉
2001	7월		의사운영팀	15,248	5월		15,876
	11월		대 변 인 실	15,248	7월		15,876
2002	-		-	-	6월		15,876
2003	6월		중소서민과	14,998	-		-
	7월		혁신행정과	14,998			
	11월		구조개선과	14,998			
2004	12월		사무처장실	14,877	12월		14,364
	12월		금정국장, 서비스국장	14,877			
2005	-		-	-	5월		12,852
2006	7월		보 험 과	14,139	-		-
	11월		정책홍보팀	14,139			
	12월		공정시장과	14,139			
2007	3월		법무담당관	14,139	-		-
	4월		자산운용과	14,139			
2008	4월		위 원 장 실	13,530	7월		12,240
	4월		운전원	23,400			
	4월		운전원	23,400			
	4월		운전원	23,400			
	5월		증선위원실	13,530			
	5월		혁신행정과	13,530			
	5월		글로벌금융	13,530			
	5월		운전원	23,400			

* 본부 비정규직 연봉은 성과상여금이 미반영된 금액임

** 속기사 2명, 에디터:3명, YP 1명 등 6명은 제외함

<별표2>

2008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연봉표

□ 사무보조원

(단위 : 원)

본 부				FIU
근무기간	기본급	정근수당	연봉액	연봉액
1년미만	1,127,500	미지급	13,530,000	연봉계약서에 따름
1년~2년	1,168,500	58,425 × 2회	14,138,850	
2년이상	1,209,500	120,950 × 2회 ~	14,755,900~	

* 1) 정근수당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 지급기준 준용

근무년수	월봉금액의 해당 지급률(연2회)	근무년수	월봉금액의 해당 지급률(연2회)
1년미만	미지급	6년이상 7년미만	30%
1년이상 2년미만	5%	7년이상 8년미만	35%
2년이상 3년미만	10%	8년이상 9년미만	40%
3년이상 4년미만	15%	9년이상 10년미만	45%
4년이상 5년미만	20%	10년이상	50%
5년이상 6년미만	25%		

2)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연봉의 급여로 성과급(별표 6) 지급 가능

3) 시간외 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 48시간 이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2008년은 최대 월 15시간 지급)

라. 정책연구과제 운영 실태

[I]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 정책연구용역은 국회 예·결산 심사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 ☐ 금융위 발족에 따라 기존에 수행한 용역결과물을 적정하게 운영·관리하여 향후 유사정책 수립이나 용역과제 선정에 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 '07년 이후 정책연구용역(구 재경부와 구 금감위에서 수행)의 「관리현황 및 활용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

< 2007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정책연구용역 현황>

(백만원)

구 재경부 금융정책국		구 재경부 금융정보분석원		구 금감위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7	553	4	133	3	88	24	774

[II]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 정책연구용역의 내용적 충실성 보다는, 관리실태 및 활용실태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
- ☐ 감사방법은 먼저 정책연구용역 국회 지적사항에 대해 '07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및 정무위원회·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등을 통해 지적사항을 파악한 후 담당과를 방문하여 확인·점검하고

- 정책연구용역심의회의철, 연구용역관리현황, 연구용역결과물 관련철을 제출받아 그 관리·활용이 관련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서면 점검했으며
- 현황(리스트)에서 과제 누락 및 PRISM 미등록과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대면하여 확인했음

〔Ⅲ〕 감사 결과

- 용역과제선정은 정책연구용역심의회에서 과제의 중복여부, 계약방법 및 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 '07.6월 국회 결산 심사시 정무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당초 계획과 다른 용역사업은 문제가 있으므로 자체 '정책연구용역심의회'를 거쳐 차년도 용역과제를 선정하여 용역과제의 변경을 최소화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 담당과에서 '09년 예산 확정전에 자체 '정책연구용역심의회'를 거쳐 용역과제를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과제의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음
- 용역대금결제 부분을 점검한 결과 납기를 준수하고 있고, 하자 검수부분을 점검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정책연구용역예산의 이·불용을 점검한 결과 '07년 용역과제 24건중 2건만 이월되었으며, '08년 용역예정과제 약 20건도 이월 또는 불용 비율이 낮을 것으로 전망
- 다만, 조직개편에 따라 금융위가 신설된 관계 등으로 현황관리 및 PRISM 미등록 등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음

《지적사항》 (또는 우수사례)

- 정책연구용역 현황을 각 과로 부터 받아본 결과, 2개부서(△△△과, △△△과)가 '07년 수행과제 24과제 중 3과제를 리스트에서 누락했으며
- '08.6.24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PRISM)을 통해 등록 현황을 점검한 결과, 24과제 중 13과제만 등록되어 있고 △△△과, △△△과, △△△과, △△△과, △△△과 등에서 11과제를 등록하고 있지 않았음

《조치할 사항》

- (시정요구, 표창상신 등)

2007년도 금융위원회소관(재경부 및 금감위) 정책연구용역 현황

구	과 명	과	제	명	계약자	계약 방식	기간	계약금 (천원)	현황	특수 여부
구	금	영	정	책	어음제도 개선방안 연구	수의	07. 2. 9 - 5. 8	14,250	×	○
					금융산업 선진화에 대한 의견 조사	수의	07. 7.25 - 8.24	28,500		×
					소비자금융현황 및 제도화 방안	수의	07. 8. 3 - 11. 2	23,750		×
					금융법령·법규 영문화	수의	06.12.11 - 5.10	150,000		×
					금융시장 현황지표 산출과정 자동화프로그램 개발	수의	07. 6.26 - 8.25	19,000		×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방안 연구	수의	07. 9.21 - 12.20	28,500		○
					국민소득 2만불시대 금융의 역할	수의	07.10.19 - 12.18	28,500		×
					해외단기 금융시장 제도에 관한 연구	수의	07.10.12 - 12.11	28,500		×
					홍콩사례를 중심으로 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해외진출 전략 모색	경쟁	07.10.26 - 12.11	38,000		×
					해외사례분석을 통한 은행지배구조 개선방안	경쟁	07.10.29 - 12.13	28,500	×	○
					금융업의 직무와 업무수행 역량 분석	경쟁	07.11.2 - 12.17	19,000		×
					뉴욕 런던시 등의 금융클러스터 조성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연구	수의	07.11.5 - 12.20	33,000		○
					장외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	수의	07.11.15 - 12.20	25,000		×
					금융허브 육성을 위한 금융관련 행정의 국제화 방안 연구	수의	07.11.19 - 12.24	29,000		×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경쟁	07.11. 7 - 12. 7	7,800		○
					주요선진국의 금융인프라 관련 제도현황 연구	수의	07.10.25 - 12.14	21,800		○
					아시아 전자금융시장 분석과 한국 기업의 진출 전략	수의	07.12.20 - 08.2.19	30,000	×	×
					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경쟁	07. 7.30 - 12.14	33,200		○
					역외금융기관, 역외 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 유형 및 대응방안	경쟁	07. 9. 5 - 12.20	38,000		○
구	FIU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에 대응한 자금세탁 방지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경쟁	07.10. 5 - 12.20	28,500		○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경쟁	07.10. 5 - 12.20	33,000		○
금	감	위			우리나라 회계관련 제도의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	수의	07.10.19 - 08.3.4	45,000		○
					펀드판매망(채널) 선진화 방안	수의	07. 9. 7 - 12.20	21,000		○
계					기업상장제도의 국제적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수의	07. 7.24 - 10. 8	22,000		○
								773,800		

라. 감사원 처분요구 이행실태 (중소기업 신용보증 제도)

(Ⅰ)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 감사원 처분요구 이행실태는 향후 감사원의 기관감사, 특별감사* 등에서 주요 점검대상이 되므로 사전 자체감사의 필요성이 높은 영역임

* '07.3월 감사원은 「재정·금융분야 감사결과조치 이행실태」 감사실시

- ☐ '07년 이후 우리 위원회(舊 금감위, 재경부 금융정책국 포함)에 대한 감사원 감사 대상은 「중소기업 보증지원 실태」 등 5개 부문*

* 중소기업 보증지원 실태, 특정업무 경비집행, 문서보안 실태, 공무국외여행 경비집행, 금융법규 영문화사업 사후관리

- 이중 최근 5년간 감사원 처분요구가 가장 많았던(8건) 산업금융과 소관의 「중소기업 보증지원 실태」 부문에 대하여 표본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 부서에 전파하여 참고토록 함

(Ⅱ) 감사방향 및 방법

- ☐ 감사원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 내용보다는 조치여부 및 조치 절차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보완하도록 함

- 조치계획을 수립한 경우 동 계획대로 정책을 추진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지 여부를 점검

- ☐ 감사 방법으로는 우선 감사대상부서(산업금융과)로부터 조치 결과·계획 및 관련자료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검토하고,

-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담당자 면담 및 유관기관(신·기보 등)으로부터의 자료 수집 등을 통해 보완

(Ⅲ) 감사 결과

□ 산업금융과는 감사원의 6개 처분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1개사항) 및 조치 계획(5개 사항)을 회신

○ (조치 결과) 보증부 대출금의 용도와 유용(부동산 매입 등)
방지를 위한 신·기보 업무 지도·감독 강화 요구에 대하여

- 신·기보가 보증금을 회수토록 하고 금감원 등 지시로 은행이
보증부 대출금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음을 조치결과로 회신

○ (조치계획) '총 보증규모 적정관리' 등 5개 사항*에 대하여

* ①총 보증규모 적정관리 ②장기보증이용기업 보증축소 ③중복보증 해소
④기술평가보증제도 합리적 운용 ⑤보증연계투자 폐지 등 방안마련

- 신·기보 공동발주 용역결과를 참고하여 금년 중 정부
정책에 반영 예정임을 조치계획으로 회신

□ 이밖에도 조치결과 및 계획 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하였거나
추진예정임

○ 신·기보 보증부 약정서 개정(신·기보 사후관리 업무 감독강화),
보증업무 선진화방안에 대한 공개토론회 개최예정
(조치계획에 따른 정책수립 절차상 객관성 확보) 등

□ 따라서 당초 감사기준으로 설정했던 조치실시 여부 및 절차상
문제점 측면에서 지적사항은 발견되지 않음

3. 지적사항별 조치내역

일련 번호	지 적 내 용	조치구분
1	업무용 차량 운영의 불합리	시정
2	국외출장시 숙박비 과다 수령	현지조치
3	정부구매카드 실명서명 미이행 및 업무추진비 건당 50만원 초과집행시 상대방 인적사항 기재 불철저	현지조치
4	직원교육 전·후 식비 지출과목의 부적정	현지조치
5	대우수당 지급의 부적정	현지조치
6	재물조사 실시 불철저	시정
7	정책연구용역과제 관리 미흡	현지조치

4.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제14조에 따라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적의 조치토록 요구

11. 권익위로부터 지적받은 회의참석수당 등 세부
내역 및 명단

☐ 해당사항 없음

